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283-01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머 리 말

통계청에서는 새천년을 맞아 보다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 사회 모습을 27개 분야로 나누어 선술형으로 표현한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이들 분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책변화외에도 외국의 통계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삶의 질, 경제·사회구조 등의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함께 수록된 통계표와 통계도표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통계를 이용하거나 작성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 감수 및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12월

통 계 청 장 윤 영 대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I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3
-------	-------	---

II 인구

제 2 장	인구규모·구조	25
제 3 장	인구변동	45
제 4 장	가구·가족	62

III 국민생활

제 5 장	가계	77
제 6 장	물가	97
제 7 장	주거	110
제 8 장	교육	125
제 9 장	보건·복지	144
제10장	환경	163
제11장	문화·예술	180
제12장	정보화	204
제13장	범죄·재해	227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IV 경제일반

제14장	국민소득	245
제15장	대외경제	259
제16장	고용·임금	279
제17장	에너지·자원	300
제18장	연구개발	317
제19장	산업재해·분쟁	336
제20장	재정	349

V 산업 및 기업활동

제21장	산업활동 개관	365
제22장	농림어업	384
제23장	광공업	401
제24장	건설업	427
제25장	운수업	439
제26장	정보통신업	450
제27장	금융·보험업	474

여 백

통계표 차례

I. 자연환경

제1장 국토·기후

〈표 1-1〉 한반도의 위치	3
〈표 1-2〉 주요 대륙 및 국가의 국토면적	3
〈표 1-3〉 시·도 면적(1999)	4
〈표 1-4〉 국토의 변화	4
〈표 1-5〉 수계별 하천현황(1999)	5
〈표 1-6〉 다목적 댐 현황(1999)	6
〈표 1-7〉 행정구역의 변화	7
〈표 1-8〉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1999)	8
〈표 1-9〉 시·도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1999)	8
〈표 1-10〉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9
〈표 1-11〉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10
〈표 1-12〉 1999년 및 역대 기온 극값	11
〈표 1-13〉 주요국의 연평균 강수량	13
〈표 1-14〉 적설 극값	13
〈표 1-15〉 주요 도시의 적설량	13
〈표 1-16〉 재해요인별 피해규모(1999)	14
〈표 1-17〉 풍수피해	14
〈표 1-18〉 주요 지점별 강수량(1999)	15
〈표 1-19〉 중심 부근 최대풍속 태풍의 구분	16
〈표 1-20〉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1951~1998)	16
〈표 1-21〉 지진 규모별 연평균 발생 빈도	17
〈표 1-22〉 황사 발생 현황	19
〈표 1-23〉 주요 도시의 연간 일조시간	20

II. 인 구

제2장 인구규모·구조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28
〈표 2-2〉 목적별 해외이주 허가자수	29
〈표 2-3〉 연령계층별 성비	30
〈표 2-4〉 인구의 평균연령	32
〈표 2-5〉 인구의 연령구조와 부양비	33

〈표 2-6〉 학령인구	35
〈표 2-7〉 생산가능인구	36
〈표 2-8〉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37
〈표 2-9〉 교육수준구성비 및 평균교육년수	39
〈표 2-10〉 도시화 추이	41
〈표 2-11〉 시도별 인구분포.....	41
〈표 2-12〉 수도권 인구의 증가	43
〈표 2-13〉 시도별 인구의 연령계층별구성비	44
〈표 2-14〉 시도별 인구의 연령구조 지표	44
제3장 인구변동	
〈표 3-1〉 주요 출산력 지표	45
〈표 3-2〉 모의 연령별 출산율	47
〈표 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48
〈표 3-4〉 성·연령별 사망률	49
〈표 3-5〉 평균수명	50
〈표 3-6〉 여성사망률에 대한 남성사망률의 백분비	51
〈표 3-7〉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1999).....	53
〈표 3-8〉 주요 혼인력 지표	54
〈표 3-9〉 연령별 유배우율	54
〈표 3-10〉 혼인연령	56
〈표 3-11〉 주요 이혼력 지표	56
〈표 3-12〉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57
〈표 3-13〉 이동인구(5년전 거주지 기준)	58
〈표 3-14〉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58
〈표 3-15〉 시도별 순이동	59
〈표 3-16〉 수도권 전출입자의 이동방향	60
〈표 3-17〉 수도권 전입자의 전입지	61
제4장 가구·가족	
〈표 4-1〉 일반가구수와 평균 가구원수	63
〈표 4-2〉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64
〈표 4-3〉 일반가구의 세대구성	65
〈표 4-4〉 1인 가구의 특성별 구성(1995)	66
〈표 4-5〉 가족형태별 친족가구 구성	68
〈표 4-6〉 성 및 연령계층별 가구주의 비율	70
〈표 4-7〉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71
〈표 4-8〉 60세 이상 인구의 거주형태(1995)	72
〈표 4-9〉 성·혼인상태별 노인가구주 구성	73

Ⅲ. 국민생활

제5장 가계

〈표 5-1〉 소득원천별 가계소득의 변화	77
〈표 5-2〉 가구유형별 연간소득(1996)	78
〈표 5-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성비	80
〈표 5-4〉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1995년 가격기준)	80
〈표 5-5〉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분포	81
〈표 5-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구성(1999)	82
〈표 5-7〉 도시근로자가구의 맞벌이여부별 소득구성(1999)	83
〈표 5-8〉 도시가계의 지출비목별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액(1995년 가격기준)	85
〈표 5-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	86
〈표 5-10〉 도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순위의 변화(1970~1999)	87
〈표 5-1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1999)	88
〈표 5-12〉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구조(1999)	89
〈표 5-13〉 도시근로자가구의 맞벌이여부별 소비지출(1999)	90
〈표 5-14〉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연령별 소비지출(1999)	91
〈표 5-15〉 한국과 일본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추이 비교	92
〈표 5-16〉 가구특성별 저축 및 부채보유비율(1996)	93
〈표 5-17〉 가구형태별 저축 및 부채잔액(1996)	95
〈표 5-18〉 가구주 연령별 저축 및 부채잔액(1996)	96

제6장 물가

〈표 6-1〉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100
〈표 6-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변동추이	101
〈표 6-3〉 주요국의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101
〈표 6-4〉 소비자물가의 변동추이	102
〈표 6-5〉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별 변동추이	105
〈표 6-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변동추이	106
〈표 6-7〉 수출입물가지수의 변동추이	106
〈표 6-8〉 주요 물가지수 작성방법 비교(1995년 기준지수)	108
〈표 6-9〉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변동추이	109

제7장 주거

〈표 7-1〉 주택보급	111
〈표 7-2〉 주택형태별 가구분포	112
〈표 7-3〉 주택의 점유형태	112
〈표 7-4〉 거주지 선택이유	114
〈표 7-5-1〉 원하는 주택형태	114
〈표 7-5-2〉 가구원 규모별 원하는 주택규모(1997)	114

〈표 7-6〉 원하는 아파트 방향	114
〈표 7-7〉 주거비	115
〈표 7-8〉 도시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115
〈표 7-9〉 결혼 후 내집마련까지 소요기간 및 이사횟수	116
〈표 7-10〉 주택마련 자금조달 원천(1997)	117
〈표 7-11〉 주거공간의 변화	118
〈표 7-12〉 사용 방수	119
〈표 7-13〉 단칸방 사용가구	119
〈표 7-14〉 주택에 대한 불만요인	121
〈표 7-15〉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121
〈표 7-16〉 도시공원 면적	121
〈표 7-17〉 승용차 차고(1997)	122

제8장 교육

〈표 8-1〉 학교급별 학교수	126
〈표 8-2〉 학교급별 학생수	127
〈표 8-3〉 학급당 학생수	128
〈표 8-4〉 학교급별 취학률	129
〈표 8-5〉 학교급별 진학률	130
〈표 8-6〉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	130
〈표 8-7〉 교원 1인당 학생수	131
〈표 8-8〉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1998)	132
〈표 8-9〉 학교급별 교원수	132
〈표 8-10〉 공립교육기관의 학교급별 여성교원 비율(1996)	133
〈표 8-11〉 컴퓨터 1대당 학생수	134
〈표 8-12〉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134
〈표 8-13〉 학생 1인당 대지 면적	134
〈표 8-14〉 공교육비	135
〈표 8-15〉 주요국의 GDP대비 공교육비(1997)	136
〈표 8-1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6
〈표 8-17〉 주요국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1997)	137
〈표 8-18〉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	137
〈표 8-19〉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수	138
〈표 8-20〉 박사학위 취득자수	139
〈표 8-21〉 학력별 취업률	140
〈표 8-22〉 대학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 취업률(전문대학)	141
〈표 8-23〉 대학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 취업률(대학교)	141
〈표 8-24〉 연령별 학생의 신장	142
〈표 8-25〉 연령별 학생의 체중	142

제9장 보건·복지

〈표 9 - 1〉 급성전염병 발생 현황	145
〈표 9 - 2〉 만성질환 유병률(1998)	146
〈표 9 - 3〉 성인(20~59세)의 흡연율	147
〈표 9 - 4〉 성인(20~59세)의 음주율	148
〈표 9 - 5〉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149
〈표 9 - 6〉 의료 인력	151
〈표 9 - 7〉 의료기관종류별 병원수 및 병상수	152
〈표 9 - 8〉 의료기관별 2주간 외래이용률	153
〈표 9 - 9〉 병원이용현황	153
〈표 9-10〉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155
〈표 9-11〉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155
〈표 9-12〉 공적연금 가입자 및 적용률	156
〈표 9-13〉 의료보험 적용인구, 총부담액 및 총급여액	157
〈표 9-14〉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 수혜자수	158
〈표 9-15〉 보육 아동수 및 시설수	159
〈표 9-16〉 요보호 아동 발생 현황	160
〈표 9-17〉 요보호 아동 보호 내용	160
〈표 9-18〉 노인복지시설수 및 수용자	161

제10장 환경

〈표 10-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65
〈표 10-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	165
〈표 10-3〉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GDP대비, 1997)	166
〈표 10-4〉 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가스량(1998)	166
〈표 10-5〉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7
〈표 10-6〉 주요 도시의 연도별 강우중 산도	168
〈표 10-7〉 수계별 사업장수 및 폐수방류량(1998)	169
〈표 10-8〉 폐기물 발생량 추이	170
〈표 10-9〉 한국산 생물종의 현황	172
〈표 10-10〉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현황	173
〈표 10-11〉 내륙 습지면적	174
〈표 10-12〉 연안 습지면적(1998)	175
〈표 10-13〉 국립공원 현황	175
〈표 10-14〉 환경산업시장의 전망	176
〈표 10-15〉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	177
〈표 10-16〉 환경오염방지 지출의 대 GDP 비율(1994)	177
〈표 10-17〉 환경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	178
〈표 10-18〉 오염원인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178
〈표 10-19〉 연도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179

제11장 문화·예술

〈표 11-1〉 연도별 문화재 지정 수	181
〈표 11-2〉 문화·예술 시설공간 수	183
〈표 11-3〉 주요 미술 전시회 수.....	183
〈표 11-4〉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184
〈표 11-5〉 영화관람 추이.....	184
〈표 11-6〉 독서인구비율	185
〈표 11-7〉 신문 구독	185
〈표 11-8〉 도서관수, 장서수 및 이용자수	186
〈표 11-9〉 도서발행 실적.....	188
〈표 11-10〉 영화제작 편수.....	189
〈표 11-11〉 한국영화 수출실적	190
〈표 11-12〉 외국영화 수입추천 실적.....	190
〈표 11-13〉 음반 및 비디오 생산량 및 매출액.....	191
〈표 11-14〉 로얄티 지불액.....	192
〈표 11-15〉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194
〈표 11-16〉 자연공원의 수 및 면적	195
〈표 11-17〉 관광여행 경험률	196
〈표 11-18〉 관광여행 참가횟수	196
〈표 11-19〉 해외 관광여행자수(승무원 제외).....	196
〈표 11-20〉 외래관광객 추이	197
〈표 11-21〉 관광수지	198
〈표 11-22〉 도시공원 면적.....	199
〈표 11-23〉 공공체육시설수와 면적	200
〈표 11-24〉 종목별 직업팀 및 선수의 수	200
〈표 11-25〉 프로야구·축구의 게임수와 관중수.....	201
〈표 11-26〉 여가활용 방법.....	202
〈표 11-27〉 하루 평균 여가시간(1999.9)	202
〈표 11-28〉 매체별 행위자 비율 및 시간(1999.9).....	203

제12장 정보화

〈표 12-1〉 초고속 국가망 이용현황(2000.1)	205
〈표 12-2-1〉 정보화 인력양성 투자액	207
〈표 12-2-2〉 유형별 정보화 인력양성 예산	207
〈표 12-3〉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208
〈표 12-4〉 세계의 인터넷 기반	209
〈표 12-5〉 호스트, 도메인, IP주소 수	209
〈표 12-6〉 국내 ISP/WSP 업체수.....	210
〈표 12-7〉 주요 국가의 PC보급대수	211
〈표 12-8〉 가구당 PC보유율(1997).....	212

〈표 12-9〉 주요 국가의 인터넷 호스트 수	213
〈표 12-10〉 주요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수	213
〈표 12-11〉 주요 국가의 전화회선수.....	214
〈표 12-12〉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 가입자수	214
〈표 12-13〉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215
〈표 12-14〉 컴퓨터 이용 목적.....	216
〈표 12-15〉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217
〈표 12-16〉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이용률	218
〈표 12-17〉 컴퓨터통신 이용 이유(중복응답).....	219
〈표 12-18〉 인터넷 이용 이유(중복응답)	219
〈표 12-19〉 1일 평균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이용시간	219
〈표 12-20〉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견해(2000)	220
〈표 12-21〉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2000).....	221
〈표 12-22〉 인터넷 역기능 경험(2000)	221
〈표 12-23〉 인터넷 쇼핑물 사업체 현황(2000)	223
〈표 12-24〉 매출액 규모별 인터넷 쇼핑물 사업체 현황(2000.6).....	223
〈표 12-25〉 개설연도별 인터넷 쇼핑물 사업체수	224
〈표 12-26〉 시도별 인터넷 쇼핑물 사업체 현황(2000.6)	225
〈표 12-27〉 국내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	226

제13장 범죄·재해

〈표 13-1〉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228
〈표 13-2〉 공중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1997)	228
〈표 13-3〉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1997)	228
〈표 13-4〉 소송사건 현황.....	229
〈표 13-5〉 범죄 발생 및 검거	230
〈표 13-6〉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발생 및 검거	230
〈표 13-7〉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231
〈표 13-8〉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현황	232
〈표 13-9〉 여성범죄자 점유율	232
〈표 13-10〉 소년범죄자 비율	233
〈표 13-11〉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교도관 정원.....	234
〈표 13-12〉 경찰관, 경찰서, 파출소 및 순찰차량수.....	234
〈표 13-13〉 자연재해 사망자수 및 피해액	236
〈표 13-14〉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236
〈표 13-15〉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237
〈표 13-16〉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38
〈표 13-17〉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38
〈표 13-18〉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39
〈표 13-19〉 사고운전자의 연령별 분포(1999).....	239

〈표 13-20〉 사고운전자의 경력별 분포(1999)	239
〈표 13-21〉 주요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240
〈표 13-22〉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및 피해액	240
〈표 13-23〉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241

IV. 경제일반

제14장 국민소득

〈표 14-1〉 경제규모의 추이	247
〈표 14-2〉 주요 국가의 국민총소득	248
〈표 14-3〉 생산구조의 변화	251
〈표 14-4〉 지출구조의 변화	252
〈표 14-5〉 분배구조의 변화	253
〈표 14-6〉 저축률과 투자율	258

제15장 대외경제

〈표 15-1〉 국제수지표	261
〈표 15-2〉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264
〈표 15-3〉 수출입의 지역별 구조변화	265
〈표 15-4〉 10대 수출품목	267
〈표 15-5〉 10대 수입품목	268
〈표 15-6〉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	273
〈표 15-7〉 외국인 직접투자	275
〈표 15-8〉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276
〈표 15-9〉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276
〈표 15-10〉 해외직접투자	277
〈표 15-1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잔액(1999)	277
〈표 15-1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잔액현황(1999)	278

제16장 고용·임금

〈표 16-1〉 경제활동인구	280
〈표 16-2〉 산업별 취업자	283
〈표 16-3〉 직업별 취업자	284
〈표 16-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85
〈표 16-5〉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287
〈표 16-6〉 노동이동률	289
〈표 16-7〉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290
〈표 16-8〉 직종별 인력수요	291
〈표 16-9〉 직업안정 지표	292

〈표 16-10〉 임금상승률 추이	294
〈표 16-11〉 최저임금	295
〈표 16-12〉 월평균 근로시간	296
〈표 16-13〉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296
〈표 16-14〉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제조업).....	297
〈표 16-15〉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299
제17장 에너지·자원	
〈표 17-1〉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	301
〈표 17-2〉 주요 국가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302
〈표 17-3〉 에너지 부문별 국가순위	302
〈표 17-4〉 주요 국가의 에너지원단위 비교.....	303
〈표 17-5〉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304
〈표 17-6〉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306
〈표 17-7〉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307
〈표 17-8〉 에너지 수입의존도 추이	308
〈표 17-9〉 에너지 수입액.....	308
〈표 17-10〉 대체에너지 비중	309
〈표 17-11〉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310
〈표 17-12〉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310
〈표 17-13〉 LNG 수급실적	311
〈표 17-14〉 전력 최대수요 증가율	312
〈표 17-15〉 전력공급예비율	312
〈표 17-16〉 전원별 발전설비 구성	313
〈표 17-17〉 용수 수급계획.....	314
〈표 17-18〉 주요 국가의 급수량 비교(1997)	315
〈표 17-19〉 주요 국가의 물 값 비교(1997)	316
제18장 연구개발	
〈표 18-1〉 연구개발투자	320
〈표 18-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	321
〈표 18-3〉 유형별 연구개발투자비	323
〈표 18-4〉 주요국의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구성.....	323
〈표 18-5〉 주요국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	323
〈표 18-6〉 연구개발인력	325
〈표 18-7〉 연구원수의 국제비교	326
〈표 18-8〉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별 출원과 등록.....	328
〈표 18-9〉 주요국의 특허등록건수	329
〈표 18-10〉 주요국의 SCI 논문수	329
〈표 18-11〉 기술도입	332

〈표 18-12〉 업종별 기술도입액	333
〈표 18-13〉 한·미·일의 기술 무역액	333
〈표 18-14〉 과학기술의 전망	335
제19장 산업재해·분쟁	
〈표 19-1〉 산업재해발생 추이	339
〈표 19-2〉 재해자의 분류와 중대 재해율	341
〈표 19-3〉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수	343
〈표 19-4〉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344
〈표 19-5〉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추이	347
제20장 재정	
〈표 20-1〉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규모	350
〈표 20-2〉 통합재정 세출의 기능별 분류	351
〈표 20-3〉 인구노령화 전망	352
〈표 20-4〉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353
〈표 20-5〉 세목별 국세수입의 GDP에 대한 비율	354
〈표 20-6〉 직·간접세, 국세·지방세 비율 및 재정규모	356
〈표 20-7〉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357
〈표 20-8〉 국가채무	358
〈표 20-9〉 정부 소비 및 공공투자 비중	361

V. 산업 및 기업활동

제21장 산업활동 개관	
〈표 21-1〉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369
〈표 21-2〉 산업별 성장추이(1995년 불변가격 기준, 1970=100)	370
〈표 21-3〉 산업구조의 변화	371
〈표 21-4〉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72
〈표 21-5〉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비중(1999)	373
〈표 21-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74
〈표 21-7〉 산업별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1999)	375
〈표 21-8〉 주요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지수(1993=100)	376
제22장 농림어업	
〈표 22-1〉 농림어업의 위상	384
〈표 22-2〉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구성비	385
〈표 22-3〉 작물별 경지이용면적	386
〈표 22-4〉 전업 및 겸업농가 구성비	386

〈표 22-5〉 농가당 경지면적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387
〈표 22-6〉 농업법인 설립	388
〈표 22-7〉 농산물 생산	389
〈표 22-8〉 식량자급도	389
〈표 22-9〉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 및 자금지원액	390
〈표 22-10〉 ha당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391
〈표 22-11〉 축산물 생산	392
〈표 22-12〉 농가경제	393
〈표 22-13〉 산림면적, 임목축적	394
〈표 22-14〉 주요 임산물 생산액	395
〈표 22-15〉 원목수입	396
〈표 22-16〉 연령별 어업종사자 구성비	396
〈표 22-1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397
〈표 22-18〉 전업 및 겸업어가	397
〈표 22-19〉 어선세력	398
〈표 22-20〉 어선 톤급별 구성비	398
〈표 22-21〉 수산물 수급	399
〈표 22-22〉 어가경제	400

제23장 광공업

〈표 23-1〉 제조업 성장률	402
〈표 23-2〉 주요 국가의 제조업비중	402
〈표 23-3〉 주요 국가의 제조업 생산지수	403
〈표 23-4〉 기준연도에 따른 제조업 비중(GDP대비)	404
〈표 23-5〉 취업자의 광공업 비중	404
〈표 23-6〉 제조업 규모 변화	405
〈표 23-7〉 제조업의 구조변화	408
〈표 23-8〉 제조업의 산업별 성장률(명목 생산액 기준)	409
〈표 23-9〉 제조업의 산업별 구성비	410
〈표 23-10〉 출하액 점유율	411
〈표 23-11〉 상위 10대 산업과 출하액 점유율	412
〈표 23-12〉 조직형태별 제조업체 현황	415
〈표 23-13〉 제조업 특성별 생산지수의 변화	418
〈표 23-14〉 제조업 주요 산업별 생산지수	419
〈표 23-15〉 제조업제품 용도별 생산지수	421
〈표 23-16〉 수요 구분별 생산자출하지수	422

제24장 건설업

〈표 24-1〉 건설업 규모	427
〈표 24-2〉 건설업 성장률(1995년 가격 기준)	428

〈표 24-3〉 건설업 사업체수	429
〈표 24-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429
〈표 24-5〉 건설업 취업자수	430
〈표 24-6〉 조직형태별 건설업체 수(1999)	431
〈표 24-7〉 자본금 규모별 건설업체 수(1999)	431
〈표 24-8〉 종사자 규모별 총공사액	432
〈표 24-9〉 건축허가면적	433
〈표 24-10〉 부문별 건설투자	435
〈표 24-11〉 해외공사 수주실적	436

제25장 운수업

〈표 25-1〉 운수업의 규모 및 성장률	439
〈표 25-2〉 운수업 업종별 사업체수	440
〈표 25-3〉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구성비	441
〈표 25-4〉 운수업 업종별 종사자수	441
〈표 25-5〉 업종별 운수수입	442
〈표 25-6〉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수송인원)	443
〈표 25-7〉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인-거리)	444
〈표 25-8〉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분담률(수송톤수)	444
〈표 25-9〉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분담률(톤-거리)	444
〈표 25-10〉 자동차 등록대수	445
〈표 25-11〉 도로현황(1999)	446
〈표 25-12〉 도로연장 및 자동차 등록대수	446
〈표 25-13〉 철도영업키로 및 여객수	447
〈표 25-14〉 철도시설의 현대화 추이	447
〈표 25-15〉 항만 하역능력	448
〈표 25-16〉 항공기보유대수 및 운수수입	448

제26장 정보통신업

〈표 26-1〉 정보통신 사업체수	451
〈표 26-2〉 정보통신 사업체의 상시 종사자수	452
〈표 26-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453
〈표 26-4〉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455
〈표 26-5〉 세계의 기간통신 서비스 매출액	456
〈표 26-6〉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457
〈표 26-7〉 기간통신서비스 시장규모	458
〈표 26-8〉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459
〈표 26-9〉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액	460
〈표 26-10〉 부가통신 서비스	460
〈표 26-11〉 방송서비스 매출액	462

〈표 26-12〉 방송서비스 가입자	463
〈표 26-13〉 정보통신기기 내수액.....	464
〈표 26-14〉 정보통신기기 수출액.....	464
〈표 26-15〉 정보통신기기 수입액.....	464
〈표 26-16〉 주요 대상국별 정보기기 수출입(1999)	467
〈표 26-17〉 정보통신기기 5대 교역국(1998)	468
〈표 26-18〉 소프트웨어 수출액	470
〈표 26-19〉 소프트웨어 수입액	471

제27장 금융·보험업

〈표 27-1〉 금융기관별 총자산규모	475
〈표 27-2〉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금	486
〈표 27-3〉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7
〈표 27-4〉 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8
〈표 27-5〉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9
〈표 27-6〉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0
〈표 27-7〉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0
〈표 27-8〉 신용협동기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1
〈표 27-9〉 우체국 예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2
〈표 27-10〉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3
〈표 27-11〉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4
〈표 27-12〉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5
〈표 27-13〉 콜거래 규모	486
〈표 27-14〉 기업어음 발행 규모	487
〈표 27-15〉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규모	488
〈표 27-16〉 환매조건부채권 규모.....	489
〈표 27-17〉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490
〈표 27-18〉 표지어음 규모.....	490
〈표 27-19〉 주식발행 규모.....	491
〈표 27-20〉 주식유통시장 현황.....	492
〈표 27-21〉 코스닥시장 현황	492
〈표 27-22〉 국공채 및 금융채 발행 규모	493
〈표 27-23〉 회사채 발행 규모.....	493
〈표 27-24〉 채권거래 규모.....	494
〈표 27-25〉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규모	495
〈표 27-26〉 외국환은행의 파생외환상품 규모	496
〈표 27-27〉 화폐발행 규모.....	497
〈표 27-28〉 은행간 결제규모	500

그림 차례

I. 자연환경

제1장 국토·기후

[그림 1-1] 행정구역 체계(2000.2)	7
[그림 1-2]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1999)	8
[그림 1-3]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9
[그림 1-4]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1999)	11
[그림 1-5] 주요 도시의 적설량(1999)	13
[그림 1-6] 풍수피해	15
[그림 1-7]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1951~1998)	16
[그림 1-8]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20
[그림 1-9] 자외선지수와 피부위험정도	21

II. 국민생활

제2장 인구규모·구조

[그림 2-1]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27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32
[그림 2-3] 인구피라미드(2000.7.1기준)	34
[그림 2-4] 연령계층 및 혼인상태별 인구(1995)	38
[그림 2-5] 시도별 인구분포(2000)	41

제3장 인구변동

[그림 3-1] 모의 연령별 출산율	46
[그림 3-2]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47
[그림 3-3] 시도별 출생성비(1999)	48
[그림 3-4] 여성사망률에 대한 남성사망률의 백분비	51
[그림 3-5] 주요 사인의 성별 사망률(1999)	52
[그림 3-6] 40대의 주요 사망률(1999)	53
[그림 3-7] 초혼부부의 혼인연령	56
[그림 3-8] 수도권 전출·입	59
[그림 3-9] 서울·경기간 인구이동	61

제4장 가구·가족

[그림 4-1] 일반가구수와 평균 가구원수	63
[그림 4-2] 1인 가구의 특성별 구성(1995)	67
[그림 4-3] 핵가족·직계가족 구성비	68
[그림 4-4] 친족가구의 구성	69
[그림 4-5] 가족형태별 가구구성(1995)	69
[그림 4-6]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분포	70
[그림 4-7] 성 및 연령별 가구주율(1995)	74

Ⅲ. 국민생활

제5장 가계

[그림 5-1] 가구주 직업유형별 소득구성	79
[그림 5-2] 소득 5분위별 소득 구성비	83
[그림 5-3] 맞벌이, 비맞벌이가구의 가계소득(1999)	84
[그림 5-4] 실질소비지출액 변동지수	85
[그림 5-5]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86
[그림 5-6] 주요비목의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87
[그림 5-7]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87

제6장 물가

[그림 6-1] 생산자물가 상승률	100
[그림 6-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	100
[그림 6-3] 주요국의 생산자물가 변동 비교	101
[그림 6-4]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103
[그림 6-5]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 비교	104
[그림 6-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변동 비교	105
[그림 6-7] 수입물가와 수출물가의 변동추이	107
[그림 6-8]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변동추이	109

제7장 주거

[그림 7-1] 주택보급률	111
----------------------	-----

제8장 교육

[그림 8-1] 학교급별 학교수	126
[그림 8-2] 학교급별 학생수	127
[그림 8-3] 학급당 학생수	128

〔그림 8-4〕 학교급별 취학률.....	129
〔그림 8-5〕 학교급별 진학률.....	130
〔그림 8-6〕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	131
〔그림 8-7〕 교원 1인당 학생수	131
〔그림 8-8〕 학교급별 교원수.....	132
〔그림 8-9〕 컴퓨터 1대당 학생수	134
〔그림 8-10〕 공교육비	135
〔그림 8-1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6
〔그림 8-12〕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139
〔그림 8-13〕 학력별 취업률	140
 제9장 보건·복지	
〔그림 9-1〕 급성전염병 발생 현황	145
〔그림 9-2〕 암 사망률.....	150
〔그림 9-3〕 의료인력 및 병원수.....	150
〔그림 9-4〕 병원이용현황.....	153
〔그림 9-5〕 사회보장 예산	155
〔그림 9-6〕 의료보험 적용인구 및 1인당 의료보험부담액	157
〔그림 9-7〕 아동보육 및 보육아동수	159
〔그림 9-8〕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및 보호내용(1999)	160
〔그림 9-9〕 노인복지시설수 및 수용자	161
 제10장 환경	
〔그림 10-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65
〔그림 10-2〕 폐기물 처리실태(1998)	170
 제11장 문화·예술	
〔그림 11-1〕 문화재 지정수	181
〔그림 11-2〕 주요 미술 전시회 수	183
〔그림 11-3〕 도서관 이용자수.....	186
〔그림 11-4〕 도서발행실적.....	188
〔그림 11-5〕 음반 및 비디오 생산량.....	192
〔그림 11-6〕 해외 관광여행자수	197
〔그림 11-7〕 외래관광객	197
 제12장 정보화	
〔그림 12-1〕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 이용현황(2000.1).....	205
〔그림 12-2〕 호스트·도메인·IP주소 수	209

[그림 12-3] 주요 국가의 PC보급대수 212
 [그림 12-4] 국가별 인터넷 이용자수 213
 [그림 12-5] 주요 국가의 전화 회선수..... 214
 [그림 12-6]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 가입자수 215
 [그림 12-7] 컴퓨터 이용목적 216
 [그림 12-8]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217
 [그림 12-9] 인터넷 역기능 경험(2000)..... 221

제13장 범죄·재해

[그림 13-1] 공중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1997) 228
 [그림 13-2] 소송사건 수..... 229
 [그림 13-3] 범죄발생 및 검거 230
 [그림 13-4] 유형별 범죄발생(형법범) 232
 [그림 13-5]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추이 232
 [그림 13-6] 여성범죄자 점유율..... 233
 [그림 13-7] 소년범죄자 비율 234
 [그림 13-8] 자연재해 피해액 236
 [그림 13-9] 자동차사고 사망자수 237
 [그림 13-10]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1999)..... 237
 [그림 13-11]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38
 [그림 13-12]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및 피해액 240
 [그림 13-13]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1999) 241

IV. 경제일반

제14장 국민소득

[그림 14-1] 국민총소득과 1인당 GNI 247
 [그림 14-2] 주요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 248
 [그림 14-3] 주요 국가의 생산구조..... 251
 [그림 14-4] 주요 국가의 지출구조..... 252
 [그림 14-5] 주요 국가의 분배구조..... 254
 [그림 14-6] 경제성장률의 추이..... 255
 [그림 14-7]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255
 [그림 14-8]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256
 [그림 14-9]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257
 [그림 14-10] 주요 국가의 저축률 258

제15장 대외경제

[그림 15-1] 국제수지의 장기변화 261

[그림 15-2] 주요 국가의 경상수지..... 262

[그림 15-3] 주요 국가의 무역규모(1999) 264

[그림 15-4] 주요 지역별 무역비중 변화 266

[그림 15-5] 수출구조의 변화 266

[그림 15-6] 재화별 수입구조 변화..... 269

[그림 15-7] 환율제도의 변화와 대미환율의 장기변화(매매기준율) 270

[그림 15-8] 미국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화 271

[그림 15-9] 주요 국가의 외환보유액(금보유량 제외)..... 274

제16장 고용·임금

[그림 16-1] 경제활동참가율..... 281

[그림 16-2]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83

[그림 16-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85

[그림 16-4] 실업률 추이..... 286

[그림 16-5] 노동이동률(제조업) 289

[그림 16-6] 임금상승률(실질)..... 294

[그림 16-7] 근로시간 추이 297

[그림 16-8]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제조업) 298

제17장 에너지·자원

[그림 17-1]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 301

[그림 17-2] 1인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305

[그림 17-3] 에너지 수입액 308

[그림 17-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310

[그림 17-5] 수자원량 및 이용(1996) 314

[그림 17-6] 상수도 보급..... 315

제18장 연구개발

[그림 18-1] 연구개발투자 321

[그림 18-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의 정부부담률..... 322

[그림 18-3] 연구개발인력의 구성 325

[그림 18-4] 산업재산권 비중(등록기준)..... 327

[그림 18-5] 기술 수출입 추이 334

제19장 산업재해·분쟁

[그림 19-1]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339

[그림 19-2] 연도별 부상자 수 342
 [그림 19-3]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 344

제20장 재정

[그림 20-1]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규모 350
 [그림 20-2] 통합재정 세출의 기능별 분류 352
 [그림 20-3] 조세부담률 353
 [그림 20-4] GDP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규모 356
 [그림 20-5]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차 및 국가채무 357
 [그림 20-6] 정부소비 및 공공투자 비중 362

V. 산업 및 기업활동

제21장 산업활동 개관

[그림 21-1]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1998) 369
 [그림 21-2] 1970년대비 1999년 국내총생산 370
 [그림 21-3] 주요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비중(1999) 373
 [그림 21-4] 주요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1999) 375
 [그림 21-5] 1999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993=100) 377

제22장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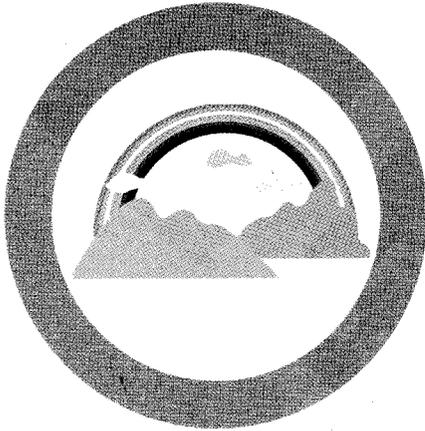
[그림 22-1]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구성비 385
 [그림 22-2] 농가당 경지면적 338
 [그림 22-3] 식량자급도 390
 [그림 22-4] 육류 생산 392
 [그림 22-5] 주요 임산물 생산 395
 [그림 22-6] 연령별 어업종사자 구성비 396
 [그림 22-7] 어가소득 구성 399

제23장 광공업

[그림 23-1] 주요 국가의 제조업비중 402
 [그림 23-2] 취업자의 광공업 비중 404
 [그림 23-3] 제조업 규모변화 405
 [그림 23-4] 광공업 종사자수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407
 [그림 23-5] 광공업 출하액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407
 [그림 23-6] 제조업의 구조 408
 [그림 23-7] 집중률 계층별 산업수 비중 413

〔그림 23-8〕 제조업 특성별 생산지수의 변화	418
제24장 건설업	
〔그림 24-1〕 건설업 규모.....	428
〔그림 24-2〕 건설업 성장률	428
〔그림 24-3〕 건설업 취업자수	430
〔그림 24-4〕 자본금 규모별 건설업체 구성(1999)	431
〔그림 24-5〕 종사자 규모별 총공사액 비중	432
〔그림 24-6〕 건설투자액	433
〔그림 24-7〕 부문별 건설투자 비중.....	435
〔그림 24-8〕 해외공사 수주실적.....	437
제25장 운수업	
〔그림 25-1〕 운수업의 성장률	440
〔그림 25-2〕 운수업 사업체수	440
〔그림 25-3〕 운수업 종사자수	442
〔그림 25-4〕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	443
〔그림 25-5〕 국내 화물수송분담률(수송톤수)	444
〔그림 25-6〕 자동차 등록대수	445
〔그림 25-7〕 도로현황(1999)	446
〔그림 25-8〕 항만하역능력	448
제26장 정보통신업	
〔그림 26-1〕 정보통신 사업체수.....	452
〔그림 26-2〕 정보통신사업체의 상시 종사자수	453
〔그림 26-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453
〔그림 26-4〕 세계의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456
〔그림 26-5〕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459
〔그림 26-6〕 부가통신망 서비스.....	461
〔그림 26-7〕 방송서비스 매출액.....	463
〔그림 26-8〕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465
〔그림 26-9〕 주요 대상국별 정보기기 수출입(1999)	467
〔그림 26-10〕 정보통신기기 5대 수출(1998)	468
제27장 금융·보험업	
〔그림 27-1〕 금융기관별 총자산 구성비	475
〔그림 27-2〕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7
〔그림 27-3〕 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8

[그림 27-4]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79
[그림 27-5]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0
[그림 27-6]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1
[그림 27-7] 신용협동기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2
[그림 27-8] 우체국 예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2
[그림 27-9]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3
[그림 27-10]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4
[그림 27-11]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485
[그림 27-12] 기업어음 발행액	487
[그림 27-13]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액	488
[그림 27-14] 코스닥시장 현황	492
[그림 27-15] 채권 순발행액	493
[그림 27-16] 화폐발행액	497



I. 자연환경

제1장 국토·기후

여 백

제 1 장 국토 · 기후

우리나라의 국토는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인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한다. 국토 면적은 약 9만9천km²이며, 전체 국토면적의 약 66%가 산이다. 지형적으로는 높은 산들이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서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이르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해안에 다다른다. 기후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심하여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은 반면, 우기에는 범람이 심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제약요인이 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국토이용을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 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본 다음 기후 변화의 특성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재해 문제를 언급한다.

제 1 절 국토

위치와 면적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 동북부에서 서남으로 뻗어 나온 약 1,000km의 반도와 그 부근에 산재하는 3,900여개의 섬 및 대륙붕으로 이루어 졌다. 위치를 경 · 위도로 보면 남쪽 끝은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으로 북위 33°06' 이고, 북쪽 끝은 함

북 온성군 유포면 북단으로 북위 43°01' 이며, 서쪽 끝은 평북 용천군 마안도 서단으로 동경 124°11' 이고, 동쪽 끝은 경북 울릉군 독도 동단인 동경 131°52' 로서 남북 약 10°, 동서 약 8°의 범위를 차지한다. 한반도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부와 맞닿았고, 서쪽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남쪽과 동쪽은 대한해협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마주한다.

한반도의 육지 총면적은 22만2천km²이고

〈표 1-1〉 한반도의 위치

	지 명	극 점
극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동경 131°52' 20"
극서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동경 124°11' 45"
극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단	북위 33°06' 40"
극북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북단	북위 43°01' 35"

자료 : 국립지리원 지도과

〈표 1-2〉 주요 대륙 및 국가의 국토면적

(단위 : 천km², %)

	전대륙	유럽	아 시 아		
			중국	일본	한국
면 적	133,870 (100.0)	22,988 (17.2)	9,598 (7.2)	378 (0.3)	99 (0.1)

자료 : www.fao.org, 2000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2000

이중 남한은 45%인 9만9천km²를 차지한다. 남한의 국토면적은 전 대륙 면적의 0.1%, 아시아대륙 면적의 0.22%이다.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거의 100배에 달한다.

〈표 1-3〉 시·도 면적(1999)

(단위 : km ² , %)			
지역	면적	지역	면적
전 국	99,434(100.0)		
서울특별시	606 (0.6)	강 원 도	16,563(16.7)
부산광역시	758 (0.8)	충청북도	7,433 (7.5)
대구광역시	886 (0.9)	충청남도	8,586 (8.6)
인천광역시	958 (1.0)	전라북도	8,049 (8.1)
광주광역시	501 (0.5)	전라남도	11,982(12.1)
대전광역시	540 (0.5)	경상북도	19,023(19.1)
울산광역시	1,056 (1.1)	경상남도	10,513(10.6)
경 기 도	10,135(10.2)	제 주 도	1,846 (1.9)

자료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2000

국토면적을 16개 시·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를 차지하여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0.5%로 가장 작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은 11.8.%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구는 전체의 45.3%, 사업체는 55.1%가 집중돼 교통난, 환경오염, 토지가격상승, 주택부족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표 1-4〉

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 이후 국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6년부터 1999년까지 53년 동안 약 5,135km²의 면적이 넓어졌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간척을 통한 국토의 확장에 역점을 두어온 결과다. 이와 더불어 도로포장률은 1946년 4.0%에서 1999년 74.7%로 70.7%포인트의 신장률을 보였다.

지형적 특성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66%는 산이며 지형 특성상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급경사로 동해안에 임박하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로 서해안에 이른다. 산지를 경사도로 나누어 보면, 15도 이하가 2.8%, 16~20도 8.4%, 21~25도 11%, 26~30도 15.3%, 31도 이상 62.5%의 분포다. 따라서 산지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전체 국토면적의 30% 내외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하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표 1-4〉 국토의 변화

	1946	1960	1981	1991	1995	1998	1999
국토면적(km ²)	94,299	98,431	99,016	99,300	99,268	99,408	99,434
도로포장률(%)	4.0	4.1	34.1	76.4	76.0	74.5	74.7

주 : 1995년 이후는 미북구지역 제외

자료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각 호

330여종이지만, 이중 이용되는 광물은 30여종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지하자원 중 무연탄과 철광석의 80% 이상과 금·은·중석의 60% 이상이 북한지방에 매장돼 남·북한간 천연자원의 지역분포 격차가 심하다. 남한에서 생산되는 주요 지하자원의 자급률을 보면, 무연탄은 80% 이상, 금·은·중석은 50% 이상, 고령토 90% 이상, 석회석 100% 등이다.

하천도 지형의 특성에 따라 서해와 남해 쪽으로 큰 하천이 완만히 흐르는데 비하여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길이가 짧은 급류가 많다. 강수량은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다.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커서 수력발전과 각종 용수공급에 불리하

므로 하천의 중·상류에 댐 건설로 인한 인공호수가 많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라 산업시설과 인구가 하천연변에 집중되는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하천개수가 부진하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도시 내 하천범람과 산사태 등의 피해는 해마다 발생돼 많은 이재민을 낸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표 1-5>에서 보듯이 총연장 중 개수가 필요한 부분이 3만6천여km에 이른다. 1925년 대홍수를 겪고 나서부터 시작한 하천 개수는 1999년에 2,477km를 개수하였으며, 1999년 말까지 전체 하천의 70.3%인 2만5천여km를 개수하였다.

한편 정부는 1960년 이후 각종 용수의

<표 1-5> 수계별 하천현황(1999)

(단위 : 개, km, %)

수 계 명	하 천 연 장		요개수연장	1999년까지 실적		장 래
	개 소 수	연 장		연 장	%	
합 계	3,896	30,217	36,252	25,489	70.3	10,763
한 강	710	7,159	6,934	5,070	73.1	1,865
낙동강	801	7,385	8,226	5,465	66.4	2,761
금 강	492	3,760	4,960	3,728	75.2	1,232
섬진강	284	2,074	2,386	1,353	56.7	1,034
영산강	170	1,436	2,082	1,438	69.1	644
안성천	103	606	1,098	999	91.0	99
삼교천	100	606	974	782	80.3	191
만경강	83	600	906	688	75.9	217
동진강	88	456	694	554	79.8	141
형산강	30	282	354	302	85.3	52
탐진강	37	233	338	263	77.8	75
태화강	61	326	521	267	51.2	254
기타 수계	937	5,293	6,780	4,581	67.6	2,199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0

안정적 공급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한 다목적 수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1960~1965년), 남강댐(1962~1970년), 소양강댐(1967~1973년), 안동댐(1971~1976년), 대청댐(1975~1981년), 충주댐(1978~1985년), 합천댐(1983~1989년), 주암댐(1983~1991년), 임하댐(1984~1991년), 부안댐(1991~1996년) 등 10개의 다목적 댐과 낙동강 하류의 낙동강 하구둑(1983~1987년)을 건설하였다. 이들 다목적 댐과 하구둑은 연간용수 공급 99억 m^3 , 발전 21억kwh, 홍수조절 18억 m^3 로 이·치수 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6〉 다목적 댐 현황(1999)

댐 명	사 업 효 과			
	총 저 수 량 (백만 m^3)	홍수조절 (백만 m^3)	용수공급 (백만 m^3 /년)	발 전 량 (백만kwh/년)
합 계	11,174	1,800	9,920	2,123
소양강댐	2,900	500	1,213	353
안 동 댐	1,248	110	926	89
남 강 댐	136	43	134	43
섬진강댐	466	32	350	174
대 청 댐	1,490	250	1,649	240
충 주 댐	2,750	616	3,380	844
합 천 댐	790	80	599	232
주 암 댐	707	80	489	51
(조절지포함)				
부 안 댐	42	9	35	-
임 하 댐	595	80	497	97
낙동강둑	50	-	648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행정구역과 국토이용

(1) 행정구역 체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계는 1946년 서울시와 9개 도(道)로 출발하였으며, 194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1963년 부산직할시가 추가되어 1특별시·1직할시·9개 도로 조정되었으며 1981년에는 인천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1특별시·3직할시·9개 도가 되었다. 그 후 1987년에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1989년에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1특별시·5광역시·9도가 되었다.

정부는 주민생활 편의와 합리적·능률적 행정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왔다. 특히 근래 도시화·산업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의 발달은 주민생활권에 큰 변화를 주었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1995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활권·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40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만들었고, 부산 등 3개 광역시의 경계를 조정했으며,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등 15개 읍을 승격하는 등 62개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간 경계조정을 하였다.

이후에도 1996년 6개 지역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했고, 1997년에는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등 소폭의 행정개편을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6광역시·9도·72시·91군·69자치구·196읍·1,229면·2,086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본격 도래하여 중앙집권적·관료적 사회에서 권한·책임의 하부 이양에 따른 분권적·자율적 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기초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역개발전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리라 본다. 아울러 주민을 존중하고 지역을 중심에 둔 지방행정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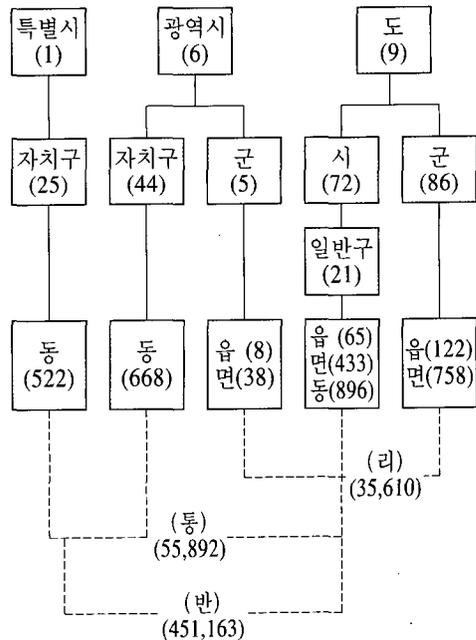
우 부족하다. 토지를 집약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토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행위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할 때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이용

<표 1-7> 행정구역의 변화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시·도	15	15	15	16	16	16
시	68	67	72	71	72	72
군	138	100	95	96	91	91
구	56	65	65	69	69	69
읍	177	192	193	192	195	196
면	1,256	1,236	1,230	1,229	1,230	1,229
동	2,297	2,324	2,358	2,320	2,091	2,086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0

[그림 1-1] 행정구역 체계(2000. 2)



(2) 국토이용

■ 용도별 토지이용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3/4정도가 산지이거나 내수면이기 때문에 토지자원이 매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하도록 한다.

용도지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지정면적의 48.4%인 5만1,176km²로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준농림지역 24.3%, 도시지역 14.9%, 자연환경보전지역 11.3%의 순이다. 준도시지역은 전체 지정면적의 1.0%에 불과하다. 이를 육지부와 해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육지부에는 농림지역이 육지부 전체면적의 51.3%로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 준농림지역 25.8%, 도시지역 14.8%, 자연환경보전지역 7.1%, 준도시지역 1.1%의 순이다. 해면

부에는 서·남해안의 해안·해양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2.9%로서 주류를 이룬다. 그 밖에 해안도시 및 공단 주변의 일부 도시지역과, 관광지 개발 또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한 준도시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표 1-9> 시·도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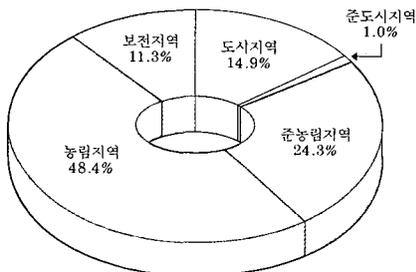
(단위 : km, 개소)

<표 1-8>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1999)

	계		육 지	해 면
	구상비	구상비		
합 계	105,651	100.0	99,774	5,877
도시지역	15,756	14.9	14,767	989
준도시지역	1,075	1.0	1,061	14
준농림지역	25,716	24.3	25,716	-
농림지역	51,176	48.4	51,176	-
자연환경보전지역	11,928	11.3	7,054	4,874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그림 1-2]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1999)



행정구역 면 적 ^a	육 지			해 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 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 소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국	99,775	99,774	7,054	543	5,877	4,874
서울	606	606	0	0	0	0
부산	753	753	0	0	231	53
대구	886	886	44	2	0	0
인천	958	958	0	0	328	0
광주	501	501	0	0	0	0
대전	540	540	7	1	0	0
울산	1,056	1,056	43	3	0	0
경기	10,191	10,190	274	33	0	0
강원	16,874	16,874	1,904	101	23	0
충북	7,433	7,433	790	29	0	0
충남	8,575	8,585	323	40	480	421
전북	8,048	8,048	718	28	100	9
전남	11,964	11,964	765	61	3,034	2,884
경북	19,032	19,023	1,133	140	102	0
경남	10,504	10,513	863	51	1,478	1,422
제주	1,846	1,846	191	54	102	85

주 : 1) 행정구역 면적은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미복구 토지도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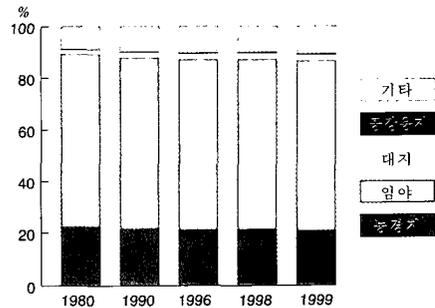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 보전지구 등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543곳에 육지부 7,054km²와 해면부 4,874km²를 지정함으로써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1.3%에 달한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1,904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지정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 등의 순이다. 지정 지역수를 보면 경상북도가 140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전라남도·제주도 등의 순이다. 해면부는 서남해안지역의 수산자원 보전지구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전라남도가 2,884km²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상남도·충청남도 순이다.

■ 지목별 국토이용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내용을 보면, 1999년말 현재 임야는 전체 면적의 65.6%인 6만5,205km², 농경지는 20.7%인 2만604km²,

대지 및 공장용지는 2.8%인 2,792km²다. 1970년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 공장용지와 대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는 1965년 1,205km²에서 1999년 2,302km²로 약 2배 증가하였고, 공장용지는 1980년 102km²에서 1999년 490km²로 약 5배 증가했다. 1965~1999년 기간 주요 지목인 농경지 및 임야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농경지는 2.2% 포인트, 임야는 1.6%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1-3]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표 1-10>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단위 : km², %)

	총면적	농경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1949	93,634	20,535(21.9)	-	-	-
1965	98,431	22,564(22.9)	66,136(67.2)	1,205(1.2)	-
1970	98,477	22,975(23.3)	66,115(67.1)	1,314(1.4)	-
1980	98,992	22,099(22.3)	66,129(66.8)	1,721(1.7)	102(0.1)
1990	99,274	21,484(21.6)	65,571(66.1)	1,937(2.0)	246(0.3)
1996	99,313	20,940(21.1)	65,396(65.8)	2,178(2.2)	413(0.4)
1998	99,408	21,209(21.3)	65,274(65.7)	2,265(2.3)	468(0.5)
1999	99,434	20,604(20.7)	65,205(65.6)	2,302(2.3)	490(0.5)

자료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각 호

제 2 절 기후

기후의 특성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대에 속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유라시아대륙의 태평양에 인접한 반도적 특징 때문에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섞였다. 따라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면서도 대륙에 비하여 강수량이 많다. 또한 장마와 태풍기의 우기가 있고 겨울에는 대설이 내리기도 한다. 장마에 의한 비는 주로 내륙에, 눈은 주로 영동·호남지역에 많이 내린다. 지역별로 여름부터 겨울까지 우기가 고르게 있으며, 연강수량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습윤한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일대는 계절풍이 많이 불어 한랭건조한 겨울과 온난다습한 여름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에는 시베리아고기압과 알류산열도 저기압으로 생성된 북서계절풍이 대륙의 찬 공기를 운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온은 유럽의 동일 위도 지역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어 이 고기압을 회전시키며 불어오는 남동계절풍이 해양으로부터 다습한 공기를 운반함으로써 유럽 각지의 기온보다 훨씬 높다.

아시아의 동부에는 강한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여름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풍에 의해 운반되고, 겨울

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북풍에 의해 운반되면서 전체적으로 적도 부근의 과잉열이 북으로 운반된다. 따라서 한반도는 기후의 남북성과 동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기온의 남북성은 여름에 중강진과 제주 사이에 약 3°C의 차이를 보이거나 겨울에는 약 26°C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절풍의 방향과 해류 등으로 인해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동해안·서해안에서 크게 달라, 우리나라의 기후는 남북성에 못지 않은 동서성을 지닌다.

기온의 변화

기온은 국제적으로 지표로부터 1.25~2.0m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1999년의 기온을 보면, 연중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12월 26일의 경북 춘양으로서 영하 20.2도 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지역은 8월 11일의 춘천(36.2도)이었다. 한편 역대로 보면 경기도 양평이 1981

〈표 1-11〉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단위 : °C)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1975	12.5	14.5	11.9	12.3	13.5	13.5
1980	10.8	13.3	10.5	11.0	12.3	12.5
1985	11.6	14.2	11.2	12.2	13.3	13.5
1990	12.8	15.5	12.3	13.4	14.5	14.6
1995	12.2	14.5	11.7	12.3	13.4	13.9
1998	13.8	15.8	13.1	13.6	15.0	14.9
1999	13.2	15.0	12.6	13.0	14.3	14.3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표 1-12〉 1999년 및 역대 기온 극값

(단위 : °C)

		1999년			역대		
		지점	값	나타난 날	지점	값	나타난 날
평 균	최 고	청 주	30.2	8.8	서 울	33.1	1994.7.24
	최 저	대관령	-15.1	1.9	양 평	-23.3	1981.1.4
최 고	최 고	춘 천	36.2	8.11	대 구	40.0	1942.8.1
	최 저	대관령	-10.9	1.9	대관령	-19.1	1986.1.5
최 저	최 고	수 원	28.0	7.27	광 주	29.8	1951.8.20
	최 저	춘 양	-20.2	12.26	양 평	-32.6	19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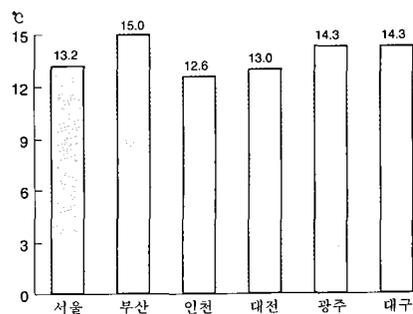
자료 : <http://www.kma.go.kr/climate>

년 1월 영하 32.6도를 기록하였으며, 최고는 1942년 8월 대구가 40도를 기록하였다. <표 1-12>에서 1975년 이후의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을 보면, 1998년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도 높았으며 그 해 부산지역은 15.8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지구상으로 1990년대는 가장 무더운 시기로 기록되며, 1999년은 1860년부터 1999년의 기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해로서 1961~1990년 기간의 평균기온에 비해 0.3도가 높았다. 가장 기온이 높은 연도는 1998년으로 평균기온보다 0.6도가 높았다. 비록 전 지구적으로 1999년의 지표면 온도 및 해수표면 온도가 1998년의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으나 북위 30도 이북과 남위 30도 이남의 고위도 지방에서의 기온은 1998년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지역의 육지-해양 온도를 결합한 1999년의 온도는 1998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연중 지속된 '라니냐'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는 이상기온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구온난화에서 찾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표면을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그 영향력의 크기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지구환경 논의의 중심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한반도에 적용해 본 결과 과거 75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의 증가는 1.1도로서 이중 지구온난화 효과는 0.7도로 분석됐다. 즉 지구온난

[그림 1-4]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1999)



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가 두배 증가할 경우 한반도 기온은 2.0~2.5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름철 강수량은 -25%~+30%까지 변화폭이 커져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남서·남부 해안지대 및 동해안 남부지대는 겨울이 없는 아열대성 기후권에 속하게 되며 중부지방은 현재의 남해안 도서지역과 유사한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의 상승으로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이 일어나면 현재의 생태계 작물은 생산력이 줄지만, 변화된 기후조건에 적응한 종이 널리 퍼지면 연중 작물의 생산력은 여름기간의 연장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설치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지난 1990년에 발간한 1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과거 100년간 0.3~0.6도가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995년에 발간한 2차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2100년에 1990년 대비 1~3.5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약 50cm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같은 기온 상승폭은 과거 1만년 동안의 기온상승보다 높은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지구기온의 상승은 강력한 폭풍, 홍수와 같은 극심한 이상 기후현상을 보다 빈번하게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즉, 지역별 기후현상의 변화는 산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말라리아 등 질병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외부여건 변화에 취약한 산악지역과 습지대의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사막화 증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의 면적 감소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자원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농산물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전세계 모든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지역의 경우 기온이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북대서양 수운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서유럽 기후를 온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프만의 해류 흐름이 변화하여 이 지역의 기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수량 및 적설량

강수량은 지면에 떨어진 강수의 양으로서 강수가 어떤 시간 내에 수평한 지표면 또는 지표의 수평 투영면에 낙하하여 증발되거나 유출되지 않고 고인 물의 깊이를 말한다. 눈·싸락눈 등 강수가 얼음인 경

〈표 1-13〉 주요국의 연평균 강수량

	면적 (천km ²)	연평균 강수량 (mm)	총강수량 (억m ³)	인구1인당 강수량 (m ³ /년/인)
미 국	9,373	760	71,235	29,485
영 국	244	1,064	2,569	4,624
프랑스	552	750	4,140	7,474
호 주	7,687	460	35,360	221,416
스위스	41	1,470	603	9,272
스웨덴	441	700	3,087	36,822
이탈리아	301	1,000	3,010	5,260
인 도	3,288	1,170	38,470	5,021
일 본	378	1,728	6,528	5,281
중 국	9,597	660	63,340	5,907
한 국	99	1,274	1,267	2,900
세계평균	135,793	973	1,321,266	26,800

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우에는 이것을 녹인 물의 깊이를 말한다. 비의 경우에는 강수량, 눈의 경우에는 적설량이라고 하며 단위는 mm로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74mm로서 세계 연평균 강수량 973mm의 1.3배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 1인당 연 총강수량은 2,900m³로 세계 평균 26,800m³의 11%에 불과하다. 연강수량은 대부분 6~9월에 집중되는데 하천바닥의 경사가 급하

〈표 1-14〉 적설 극값

	1999년			역대		
	지점	값	나타날날	지점	값	나타날날
신적설 (cm)	울릉도	33.6	12.25	울릉도	150.9	5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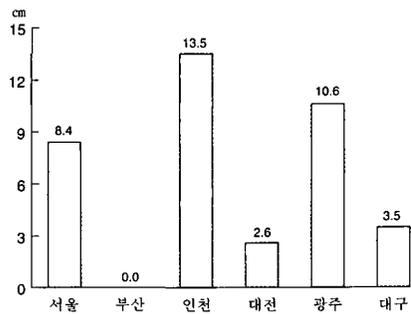
자료 : <http://www.kma.go.kr/climate>

〈표 1-15〉 주요도시의 적설량

	(단위 : cm)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1975	4.6	4.5	7.6	4.7	12.2	5.1
1980	15.0	4.4	7.4	13.4	20.5	4.2
1985	13.6	0.3	12.5	6.8	15.7	6.0
1990	14.2	0.6	16.2	12.8	8.1	5.8
1995	4.2	0	9.5	3.6	7.5	2.2
1998	14.5	0	14.4	16.5	8.2	14.0
1999	8.4	0	13.5	2.6	10.6	3.5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그림 1-5] 주요도시의 적설량(1999)



기 때문에 강수량의 대부분이 홍수로 유출되어 전체 수자원 총량 중 24%인 301억m³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1999년의 최대 적설량은 12월 25일 울릉도의 33.6cm이며, 이는 1955년 1월에 같은 지역이 기록한 150cm에 비하면 약 1/5에 해당한다. 또한 연도별 주요 도시의 적설량을 비교하면, 부산지역은 타도시에 비하여 적설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재해

1997,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엘니뇨

〈표 1-16〉 재해요인별 피해규모(1999)

(단위 : 명, 백만원)

	발생원인	인 명 피 해		재산피해액	재 해 지 역
		사망실종	이재민		
1.7~1.10	폭풍설	-	-	837	전라남북도
2.2~2.3	폭풍설	9	-	294	전라남도, 제주도
7.1~7.2	호우	3	101	13,165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7.23~8.4	호우,태풍	67	25,327	1,049,042	전국
9.10	호우	2	508	50,815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9.17~9.24	태풍	8	648	85,348	전국(충청북도 제외)
10.10~10.11	호우	-	-	6,061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12.18~12.21	폭풍설	-	72	13,911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2000

에 이어 라니냐가 지속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홍수·폭설·한파·고온·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인도에서는 고온으로 140여명이 사망하였고, 1,2월에는 유럽지역에 한파가 몰아쳐 20세기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양쯔강과 황하강 유역의 홍수로 700여명, 멕시코에서는 4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340여명이 사망하였다.

1999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기상재해

도 호우·폭풍설·태풍 등의 형태로 총 89명의 사망·실종자를 냈으며 재산피해액은 1조2,196억원으로 최근 10년동안 1998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손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7월 23일~8월 4일까지 이어진 호우와 태풍으로 통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적(특히, 경기북부와 남부)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를 강타한 대규모 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손실을 입힌 것은 1959년

〈표 1-17〉 풍수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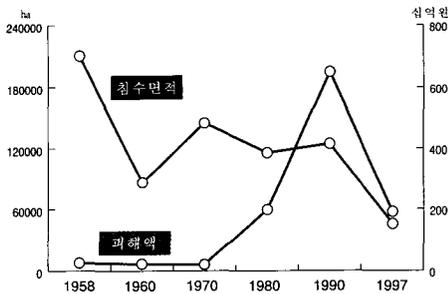
(단위 : 명, ha, 백만원)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피해액
1958	161	-	210,381	26,329
1960	81	-	86,558	22,518
1970	267	228,788	144,448	20,394
1980	279	53,860	115,762	198,070
1990	257	203,314	124,276	649,607
1997	38	6,296	45,773	190,914
1998	384	30,308	91,624	1,582,811
1999	89	26,656	75,948	1,219,681

자료 : 행정자치부, 『재해연보』, 2000

9월 15~17일 영동과 영·호남 지역을 덮친 태풍 '사라호'였다. 사라호는 사망자·실종자 849명의 인명피해와 662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냈다.

[그림 1-6] 풍수피해



(1) 집중호우

1999년은 라니냐 현상으로 세계적 기상 이변이 빈번했던 해다. 우리나라도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하루 강수량이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현상이 8월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1999년 연간합계 최대강수량 지역은 남해의 3,397mm이며 하루 합계 최다지역은 1981년 9월 장흥지역의 547mm이다. 1999년 집중호우의 원인은 7월 하순 후반에 우리나라의 북쪽에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상층의 찬공기와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의 온도차로 인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집중호우가 왔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의 총강수량은 남해안과 경기 북부지역에 800mm가 넘어 평년의 10배가 넘었다. 각 시기별로는 7월 27일~7월 30

<표 1-18> 주요 지점별 강수량(1999)

시 기	지 역	주요지점별강수량
7월 27일 ~30일	남부지방	거제 725.0mm
		통영 489.4mm
		남해 383.5mm
		마산 345.0mm
		부산 336.5mm
		고흥 283.0mm
7월 31일 ~8월4일	중북부지방 (7.3~8.3)	철원 806.0mm
		동두천 800.6mm
		강화 692.5mm
		인천 562.4mm
		서울 538.2mm
		춘천 505.4mm
	제주도, 남부지방 (8.1~8.4)	제주 296.1mm
		거제 219.0mm
		성산포 206.5mm
		부산 192.6mm
		마산 191.0mm
		통영 187.1mm

자료 : <http://www.kma.go.kr/climate>

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7월 31~8월 4일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기간동안 전반부에는 중북부지방, 후반부에는 제주 및 남부지방에 강수가 집중되었다.

(2) 태풍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바람을 말한다.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발생

〈표 1-19〉 중심 부근 최대풍속 태풍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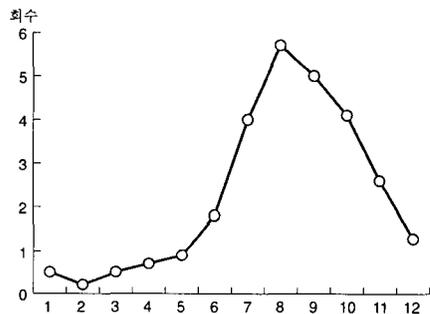
	17m/s미만 (34kts)미만	17-24m/s (34-47kts)	25-32m/s (48-63kts)	33m/s이상 (64kts)이상
세계 기상 기구	약한 열대 저기압 Tropical Depression (TD)	열대 폭풍 Tropical Storm (TS)	강한 열대 폭풍 Severe tropical Storm (STS)	태풍 Typhoon (TY)
한국 일본	약한 열대 저기압	태풍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구별한다.

태풍의 발생원인을 종합해 보면, 태풍발생의 온상이 되는 적도전선은 한대전선과는 다르게 양측의 기류 사이에 온도나 수증기 함유량의 차가 적다. 남양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고온 다습하여 대기는 조건부 불안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란운이 쉽게 발생하여 가끔 강한 스콜(Squall)을 동반한다. 이 스콜이 처음으로 공기의 작은 소용돌이가 되며, 이것이 수렴기류로 인하여 적도 부근에 모인다. 이 소용돌이가 북동 무역풍대의 동풍 중에 발생한 수평 파동 때문에 한곳으로 모이면 소용돌이가 커진다. 이것이 바로 태풍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적도전선에서 기

류의 수렴이 강해지면서 커져 마침내 태풍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태풍은 연평균 27건 불며, 지역적으로는 동경 130~145°, 북위 5~20°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계절적으로는 7~10월 4개월 간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계절에 따른 발생위치의 변화를 보면,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북위 10~20°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7~8월이 되면 북위 20~30° 부근으로 발생위치가 북상하며 10~12월이 저위도로 남하하게 된다.

〔그림 1-7〕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1951~1998)



(3) 지진

지진이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지구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변

〈표 1-20〉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1951~199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회수	0.5	0.2	0.5	0.7	0.9	1.8	4.0	5.7	5.0	4.1	2.6	1.3	27.3

자료 : <http://www.kma.go.kr/climate>

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암석권에 있는 판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지진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판을 움직이는 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침강지역에서 판이 암석권 밑의 상부맨틀에 비해 차고 무겁기 때문에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힘, 상부 맨틀 밑에서 판이 상승하여 분리되거나 좌우로 넓어지려는 힘, 지구내부의 열대류에 의해 상부맨틀이 판의 밑부분을 끌고 이동하는 힘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작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진다. 이 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인 진도를 조사해 보면 갈라진 땅속 바로 위의 지표, 즉 진앙에서 흔들림이 가장 세다.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약하게 되어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느끼지 못하게 된다. 흔들림이 가장 큰 장소 부근의 땅속에서 어떤 급격한 변동이 생겨 그것에 의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지역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종을 쳤을 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음파와 같은 원리다.

지진은 여러가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며 극적이어서 지질·지형학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온다. 역사상 지진에 의한 최대의 피해는 1556

년 중국 센시성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약 83만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규모의 인명피해는 태풍·화산 등 다른 종류의 재해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재해는 779년 경주에서 발생했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100,000회 이상 일어나고 건조물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도 10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지진이 인류의 관심을 끌어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극적 재해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연평균 20회 정도 발생하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은 연평균 9.2회다. 20세기에 한국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은 총 4회가 발생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1978년의 홍성 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피해가 있었다(1936년 쌍계사 5.1, 1978년 홍성 5.0, 1978년 속리산 5.2, 1980년 의주 5.3).

〈표 1-21〉 지진 규모별 연평균 발생 빈도

규모	한국	일본	전세계
3.0이상	9.2회/년	1,200회/년	100,000회/년
4.0이상	1.3회/년	400회/년	15,000회/년
5.0이상	0.2회/년	100회/년	3,000회/년
6.0이상	-	10회/년	100회/년

자료 : <http://www.metri.re.kr>

(4) 황사

황사는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흙먼지

가 하늘에 부유하거나,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다니다가 지면 가까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는 '노란 모래' 뜻의 황사란 용어보다 '아시아 먼지'로 알려져 있다. 사막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원하는 것은 '사하라 먼지'로 불린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고향은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지역,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안개처럼 뿌연 황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이 일어난다. 강한 바람과 함께 모래먼지가 갑자기 나타나 1km 밖을 볼 수 없게 한다. 모래 폭풍 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해 불과 2백m 앞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흑폭풍'이라 한다. 그러나 황사의 고향으로부터 수천km 떨어진 우리나라와 일본지역에서는 중국처럼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모래 폭풍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누런 먼지가 공중에 퍼져 마치 안개 낀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햇빛을 차단해 시야를 흐리지만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므로 안개와 구분된다. 또한 먼지는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은밀하게 쌓여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다. 황사 현상 전후로 비가 내리면 흙비가 돼 건물 유리창과 자동차에 먼지 자국을 남기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서기 300년 이후 확실한 황사 관측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들을 연대

별로 분류해 보면 10세기 후반에 그 이전보다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사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온다. 태종 11년에는 14일 동안이나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 9년 4월에는 흙비가 내린 데 대해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벼슬자리에 앉은 것에 대한 응보라고 해서 범상치 않은 일로 기록하고 있다. 숙종 7년 4월 7일에는 강원도와 평안도에 흙비가 내려 옷에 혼탁한 황톳물 자국이 남았다는 기록도 있다.

황사 알갱이의 크기는 발원지에 따라 다르다. 1~1천 μm 의 입자를 통칭해서 모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10 μm 의 크기의 입자를 먼지라 부른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약 1~10 μm 이므로 우리나라의 황사는 '황진'(누런 먼지)이라는 이름에 더 적합하다. 보통 지름이 20 μm 보다 큰 입자는 강풍에 의해 움직이다가 조금 상승한 후 부근에 떨어진다. 그러나 더 작은 입자는 쉽게 떠올라 대기 상층까지 올라간다. 모래 먼지가 잘 부유하는 조건은 ①강풍이 불 것 ②건조한 모래 먼지가 많을 것 ③대기가 불안정 할 정도로 강한 햇빛이 비칠 것 등이다. 강풍이 불면 모래알은 움직이거나 구르다가 조금씩 도약한다. 햇빛이 지표면을 강하게 가열한 상태이면 대류가 생겨 모래알이 부력을 받아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 이때 상공에 강한 바람이 불면 부유된 모래 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멀리 날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

라 근처까지 이동한 먼지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게 되면 지표면에 낙하하기 좋은 조건이 돼 황사 현상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황사는 약 1~5일 전에 황사 발원지에서 떠오른 것이다. 황사 발원지의 면적은 사막이 48만km², 황토고원 30만km²에 인근 모래땅까지 합하면 한반도 면적의 약 네 배나 된다. 이 황사 발원지는 가깝게는 만주(약 5백km 거리)에서부터 멀리는 타클라마칸 사막(약 5천km 거리)에 까지 분포하므로 어디에서 발원한 황사인지에 따라, 또한 상층바람의 속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도 달라진다. 발원지에서 배출되는 먼지량을 100%라 할 때 보통 30%가 발원지에 재

침전되고, 20%는 주변지역에 쌓이며, 50%는 장거리까지 날아가서 한국·일본·태평양 등에 침전된다. 1998년 4월의 경우는 미국까지도 날아간 것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황사 현상으로 기록되는 기간은 1년에 3~6일로 4월에 주로 관측된다. 중국의 사료에도 황사 현상은 봄에 많이 나타났으며, 1년 중 약 25%의 황사가 4월에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는 1년에 평균 5일 관측되며, 주로 일본의 서쪽 큐슈지방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국의 피해는 주로 황토먼지에 의한 것이다. 노약자와 호흡기·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민감해 황사가 발생하면 쉽게 이상이 생긴다.

〈표 1-22〉 황사 발생 현황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1998	횟수	3(13)	2(10)	3(14)	2(10)	2(11)	2(10)	2(7)
	기간	3.28-3.30	3.28-3.30	3.28-3.30	3.28-3.30	3.28-3.29	3.28-3.29	3.28-3.30
		4.14-4.22 4.28	4.16-4.22	4.14-4.22 4.27-4.28	4.15-4.21	4.14-4.22	4.14-4.21	4.18-4.21
1999	횟수	3(6)	1(3)	2(5)	2(5)	1(4)	2(5)	1(4)
	기간	1.25-1.28	1.25-1.27	1.25-1.28	1.25-1.28	1.25-1.28	1.25-1.28	1.25-1.28
		2.27 4.5		2.27	2.27		2.27	
2000	횟수	6(10)	3(6)	4(9)	5(8)	6(12)	6(11)	5(8)
	기간	3.7			3.19	3.23-3.24	3.23-3.24	3.19
		3.23-3.24	3.23-3.24	3.23-3.24	3.23-3.24	3.26-3.29	3.26-3.29	3.23-3.24
		3.27-3.28	3.28-3.29	3.27-3.29	3.27	4.7-4.8	4.7-4.8	3.27
		4.7-4.8	4.7-4.8	4.7-4.8	4.7-4.8	4.12	4.10	3.29
		4.23		4.26-4.27	4.26-4.27	4.23	4.12	4.7-4.8
4.26-4.27				4.26-4.27	4.26	4.12		

주 : ()내는 발생일수, 2000년 4월 기준
 자료 : 환경부, 『황사발생현황』, 2000

콧속과 기관지, 눈의 각막은 피부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라서 황사가 그대로 붙으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등 정밀 기계작업에 주의해야 하고, 항공기의 운항에도 영향을 미쳐 황사는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봄 손님이다. 기상청은 황사를 예보하기 위해 발원지의 황사 발생여부와 기상위성 영상자료의 수평분포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기류의 예상 진로 등을 파악하고 기압 배치 등을 토대로 황사의 진로와 강도를 예측한다. 황사의 발원지는 아시아 대륙의 중심이지만 그것이 확산되는 것은 북반구 전체이므로 황사의 지상 관측 외에 비행기와 선박, 기상 위성에 의한 다각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아시아 각국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 관측의 필요도 절실해 지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레이더를 이용해 황사의 연직 분포도 조사하고 있으며, 황사와 대기오염 물질의 관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1-8]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표를 비추는 시간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관측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 태양 빛에 의하여 감광지 상에 흔적이 남을 정도, 또는 유리공의 초점에 둔 청색의 종이면에 불탄 자국이 남을 정도 이상의 직사광 강도면 일조가 있다고 한다. 1988년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시간을 보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일조시간은 연 2,100시간을 상회한다. 이 중 부산의 일조시간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2,456시간 이었다. 이러한 일조시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종종 우리 인체에 해로운 태양 자외선을 증가시킨다.

<표 1-23> 주요 도시의 연간 일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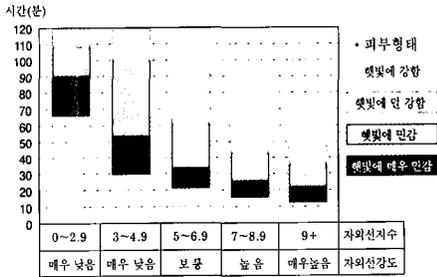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1975	2063	2257	2385	2244	1942	2130
1980	1916	2112	2276	2071	2098	2283
1985	2119	2471	2182	2198	2140	2266
1990	1863	2285	2057	1981	2096	2213
1995	2291	2566	2507	2422	2376	2533
1998	2081	2223	2327	2052	2115	2024
1999	2144	2456	2260	2245	2297	2154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오존층 파괴에 따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자외선의 증가는 중요한 환경적인 문제로 오존과 다른 대기 변화의 연관성을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즉, 태양 자외선의

[그림 1-9] 자외선지수와 피부위험정도

● 자외선 지수에 따른 피부 홍반 생성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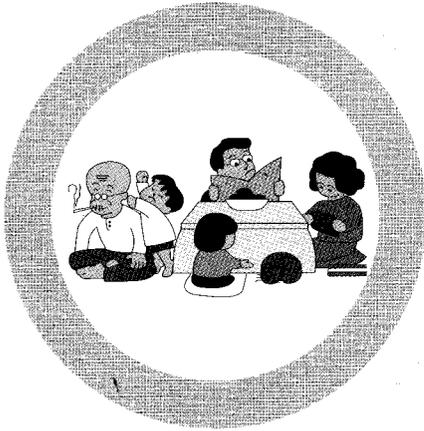


지표상 수준은 인체 건강 · 동물 · 해양 유기체 및 식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성층권 오존 감소와 더불어 태양 천정각과 구름의 형태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지표의 태양 자외선 노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지수에 대한 수치모델은, 오존량의 감소가 피부암 ·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치모델은 태양 노출의 인체유해 정도가 어떤지를 대중에게 알려준다. 이런

목적은 위하여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 자외선 지수다.

성층권 오존량과 구름은 지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기상청은 성층권 오존량과 일기 변화를 고려하여 자외선 지수 예보를 한다. 자외선 강도가 매우 낮음은 자외선 과다 노출에 따른 인체 피부 위험이 매우 낮다는 뜻이고, 강도가 매우 높음은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지수 예보 목적은 태양광선의 유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민에게 자외선 정보를 제공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며, 피부암, 백내장 등 예상되는 자외선과 관련된 국민 보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기상청 자외선 지수 예보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루 2회 발표하는데, 06시 발표는 당일, 18시 발표는 내일의 자외선 지수다.

여 백



II. 인구

제2장 인구규모·구조

제3장 인구변동

제4장 가구·가족

여 백

제 2 장 인구규모 · 구조

인구의 규모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를 의미한다.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를 사용한다. 인구의 규모는 출생과 사망, 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 크기의 변화를 자연증가, 이동까지를 고려한 크기의 변화를 인구성장 또는 인구증가라고 하며, 인구성장 은 인구의 증가와 감소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전체적인 인구규모의 변동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한 시점에서 여러 부분들 사이의 인구크기를 비교한 것을 인구구성 또는 인구구조라고 한다. 흔히 인구학적, 지역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구구조를 파악한다. 성, 연령, 혼인상태는 모든 인구학적 분석의 기초를 이룬다.

지역적 인구구조는 인구분포라고도 하는데, 주로 행정단위별로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볼 때 사용한다. 인구분포나 인구학적 구조를 통하여 주로 인구의 양적인 측면을 파악한다면,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해서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한다.

인구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인구총조사(population census)와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는 1925년(정부수립후는 1949년) 처음 실시

된 이후 5년 주기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16회가 실시되었다. 인구동태통계는 생명현상과 관련된 인구학적 사건에 관한 통계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신고를 기초로 작성하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근대적인 체계로 정비했다.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 및 기타 각종 자료원을 종합하여 추계인구를 작성한다. 추계인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구의 정태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구센서스와 함께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주된 자료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경험한다.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 상태에서,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이들의 감소 속도 차이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는 단계를 거쳐,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에 따라 인구성장이 안정상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인구변천 과정은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방이후 1960년까지, 1960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1980년 중반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인구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함께 알아본다.

제1절 인구성장

1945~196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44년 5월 당시 총인구는 2,59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한으로 나뉘면서 남한 인구는 약 1,614만명이 되었고, 1949년에는 2,019만명으로 늘어났다. 1945~1949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약 6%수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산된다. 해방 직후 일본, 만주 등지에 살고 있던 동포와 2차대전 때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북한에서 귀환민 또는 피난민이 남한으로 유입됨으로써 남한 인구는 짧은 기간에 급증했다. 귀환민들의 대부분이 과거 농촌 출신으로 남한으로 돌아온 뒤 출신 도의 도시 또는 서울 등 대도시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무렵 해외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도시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1944년에서 1949년까지 5년간 남한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은 13%에서 17%로 높아졌다.

1950~1953년 전쟁기간 중 사망자수, 이북으로 납치된 인구, 이북으로부터의 피난민을 합쳐 130만명의 인구가 전쟁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인명손실과 함께 한국전쟁 동안의 피난이동과 그 후의 귀환이동으로 거대한 인구가동이 이뤄

졌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는 북한의 고향과 가까운 남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였고, 1955~1960년 동안 피난민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이 지역 도시의 인구성장률을 높였다. 특히 서울은 55.2%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였으며, 총인구 증가의 25%를 차지했다. 피난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옴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수도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면서 출생률은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5년 5월 1일 기준 총조사 인구는 2,152만6천명이었으며, 1960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2,501만2천명으로 추계되었다. 1955~1960년 기간 중의 출생률은 높는데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여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약 3%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는 해외인구이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폐쇄인구의 특징을 보였다. 전쟁이 끝난 뒤 별거했던 부부의 결합과 전쟁 중에 연기했던 결혼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현상(baby boom)에 한국전쟁 때 들어온 의약품 및 의료기술이 보급돼 사망률이 급감하면서 높은 자연인구증가율을 나타냈다. 해방과 함께 남북분단으로 국토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반면 인구는 크게 늘어 ㎥당 인구밀도가 1925년 22명에서, 1944년 117명, 1949년에는 205명, 1960년에는 254명으로 급증했다.

1960 ~ 1980년대 중반

196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양상의 인구 변천기를 맞게 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계속 떨어졌으나 출생률의 감소폭이 사망률의 감소폭보다 더 커 자연인구증가율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1960년 43.0명에서 1985년 15.4명으로 낮아졌으며, 조사망률도 같은 기간 12.8명에서 5.8명으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60~1965년 2.79%에서, 1980~1985년 1.37%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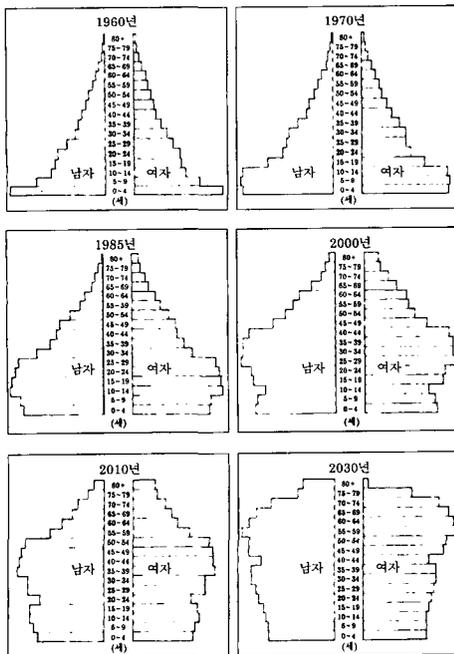
1960년대의 출생률 감소는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자 아이를 적게 낳으

려 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1962년에 최초로 시행한 출산억제라는 가족계획사업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인공유산이 한국전쟁 동안보다도 1960년대에 더욱 성행하였고, 여자의 혼인연령도 높아져 출산력을 감소시켰다.

1970년대부터는 산업시설 확충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 도시로의 이동, 자녀교육비의 증대, 여가활동 욕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였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피임하는 여성이 늘어나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갖는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대에는 3~4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들어 출산율은 더욱 빨리 낮아졌고, 이에 따라 자연인구증가율은 1960년 3%에서 1985년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인구가동이 인구규모 변동에 미친 영향은 미약하다. 1962년 해외이민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이민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379명으로 시작된 해외이민은 매년 증가하여 1976년 가장 많은 약 4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80년까지의 해외이민자수는 40만명을 웃돌았고, 1986년까지는 53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돼 가족 초청이 쉬워지자 미국으로의 이주는 활발해져 1976년, 1977년에는 3만명을 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이민 목적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국제이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추세에

[그림 2-1]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했다. 국제이동까지 감안한 인구성장률은 1960~1965년 2.79%에서 1970~1975년에는 1.82%, 1980~1985년 1.37%, 1985~1990년에는 0.99%로 감소했으며, 인구성장률이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증가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었다.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계인구 (천명) (7.1.기준)	조출생률 (천명당)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 증가율 (천명당)	연평균인구 성장률 (%)	인구 밀도 ²⁾ (명/㎢)
1960	25,012	43.0	12.8	30.2	2.79	254
1970	32,241	28.9	7.3	21.7	1.82	327
1980	38,124	20.6	6.4	14.2	1.37	385
1985	40,806	15.4	5.8	9.6	0.99	412
1990	42,869	16.3	5.5	10.8	1.02	432
1995	45,093	15.6	5.5	10.1	0.95	454
2000	47,275	14.8	5.7	9.1	0.77	475
2010	50,618	12.3	6.8	5.5	0.42	509
2020	52,358	10.9	8.5	2.4	0.13	527
2030	52,744	10.6	10.8	-0.2	0.01	530

주 : 1) 5년간의 연평균 수치임(예: 1960년의 경우 1960~1965년의 연평균 수치)

2) 인구밀도에서 2000년 이후는 1999년말 국토면적으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198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 대열에 끼었고, 경제적인 변화 못지 않게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었다.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을 가리키는 도시화율은 1985년 65.4%, 1990년에는 74.4%에 이르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교육까지 보

편화되었고, 가족구조는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되어 가고,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발전과 함께 198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더욱 낮아져,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이 1999년 13.2명으로 낮아졌다.

여자 한 명이 평생동안 갖는 평균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도 1985년 1.67명, 1998년은 1.47명, 1999년은 1.42명으로 계속 낮아졌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1989년에 채택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역시 사망률을 더욱 감소시켰다.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1999년에 5.2명으로 낮아졌다. 자연인구증가율은 1985년 1.0%에서 1987년 0.9%라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90년대에는 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이주 허가자 수는 1980년 3만3,358명으로 집계된 뒤 계속 줄어들다가 1998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해외이주 허가자 수는 12,655명으로 1998년보다 9.4% 줄었다. 취업목적 해외이주가 38.4%, 사업과 국제결혼을 위한 해외이주가 각각 18.5%, 8.8% 증가한데 비해 가족간 연고에 의한 해외이주 허가자수는 오히려 49.7% 감소하였다. 해외이주 허가자 중 41.6%가 취업을 위하여, 10명 중 2명 정도는 가족연고(26.4%) 및 사업(20.4%)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의 해외이민자수는 소득수준의 증가,

〈표 2-2〉 목적별 해외이주 허가자수

(단위 : 명, %)

	해외이주 허가자 ^{a)}	해외이주 허가자 ^{a)}			
		사업	취업	연고	국제결혼
1980	33,358	0.2	3.4	77.8	18.6
1985	27,793	1.8	14.2	66.2	17.8
1990	23,314	8.1	11.7	67.7	12.5
1995	15,917	15.7	41.3	35.8	7.2
1996	12,949	18.1	33.1	39.7	9.0
1997	12,484	18.2	26.3	46.9	8.6
1998	13,974	15.6	27.2	47.5	9.6
1999	12,655	20.4	41.6	26.4	11.6

주 : 1) 국제입양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외교통상부

연고 초청 및 국제결혼의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투자이주의 장려와 정부의 이민정책 등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0~1995년 동안은 국외로의 이민자수는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역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 유학생 및 해외취업자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귀국하는 해외유학 및 취업인구와 서로 따져보면 국외 순이동자는 국내 인구 현상에 영향을 줄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는다.

2000년 현재 인구밀도를 보면, 방글라데시(897명/km²), 대만(617명/km²)에 이어, 우리나라는 km²당 475명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 및 소규모 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3위이다. 세계의 인구밀도는 42명이고, 선진국 22명, 개도국 59명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선진국보다 22배나 혼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에는 인구밀도가

509명/km²로 더 높아지고, 세계 3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1960년에 2,501만2천명이던 한국의 인구는 2000년 4,727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전세계인구 60억6천만명의 0.77%로 세계 25위 수준이며, 2008년이면 1960년대 인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8년 만에 인구가 두 배가 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에도 0.9%의 인구성장률로 연간 약 40만명이 증가하고 있다. 2000~200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0.77%, 세계 1.2%, 유럽 -0.04%, 북미가 0.73%로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북미와 비슷하다. 2010~201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0.4%, 2028년에는 0%수준으로 낮아지고, 인구 규모가 5,277만 6천명에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자급도가 낮아지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수반되는 문제, 환경오염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때는 신규 노동력의 공급 부족,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늘어나 경제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출산이 노동인구로 연결되는데 적어도 몇 십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성·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성비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형태에 접근하게 되고, 출산력도 선진국처럼 낮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남녀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별 인구구조는 여자인구에 대한 남자인구의 백분비인 성비로 파악되고, 주로 출생시의 성비와 연령별 사망률에 따라 결정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 출생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전 연령층에 걸쳐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고, 특히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남녀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고연령층일수록 여자가 많다.

1960년의 남녀인구는 각각 1,255만명과 1,246만명으로 성비는 100.7이었다. 1970년에는 102.4를 기록하였으며, 1980년의 101.8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990년에는 101.3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01.7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높은 출생성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성비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소폭 상승한 뒤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으로써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여 2030년에는 100.9 수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5년간 출생시의 성비를 반영하는 0~4세 인구의 성비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생성비는 103~107로 전체 인구의 성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0~4세의 성비가 높아 1980년대 중반까지 108에 근접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남아의 출생이 더욱 많아져 1990~2000년은 111~115수준을 보였다.

출생성비는 100이상이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아 성비가 낮아져 주혼인 연령층에서 100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다가 연령이 많아질수

〈표 2-3〉 연령계층별 성비

	1960	1970	1980	1990	2000	2030
전 체	100.7	102.4	101.8	101.3	101.7	100.9
0~4	108.0	108.1	107.2	111.3	113.3	106.7
5~9	107.2	107.7	107.9	107.5	114.5	106.5
10~14	105.6	107.7	107.1	106.9	110.6	106.4
15~19	106.8	106.8	107.7	106.4	107.0	107.2
20~24	101.7	104.8	103.1	106.3	106.2	108.9
25~29	98.8	106.9	106.4	105.6	105.5	110.6
30~34	90.3	102.0	109.5	105.6	105.3	112.4
35~39	99.3	97.2	105.2	105.6	104.7	113.6
40~44	102.9	90.2	104.0	105.0	103.8	109.3
45~49	98.1	96.3	95.9	103.2	102.5	104.9
50~55	93.6	98.3	84.6	98.2	100.5	103.1
55~59	85.2	91.0	87.6	86.9	96.7	100.5
60~64	80.0	83.4	84.2	74.3	89.5	96.9
65~69	69.4	71.6	73.1	71.5	76.9	91.0
70~74	62.2	80.7	61.6	64.3	62.0	84.2
75~79	68.8	60.1	47.9	50.8	55.2	77.2
80+	55.4	50.3	33.6	35.8	39.0	6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록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50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결정적으로 성별 사망력의 차이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성비가 급격히 낮아진다. 2000년 현재 60~64세는 89.5, 70~74세는 62.0, 80세 이상은 39.0이다.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높은 출생성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등 유교문화권에서 새로운 인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낮은 출산력과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출생신고 자료에 따르면,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1980년 중반부터 심각해졌으며 1993년 115.3를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출생성비가 불균형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결혼연령에 이르면 배우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2010년께 주결혼 연령층인구(남자 26~30세, 여자 23~27세)의 성비는 123.4로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남자의 혼인연령은 급속히 상승하고, 미혼율이 높아지며, 알코올 중독, 자살, 성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망수준을 높이고 출생아 수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또한 불안정해 질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여성이 부족해지면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변화

해 결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여자가 연상인 혼인이 늘어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홀로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연령구조

인구피라미드는 인구의 연령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1960년대 초반 해도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저연령층일수록 인구가 많은 이른바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모형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였다.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가족계획사업의 도입으로 서서히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사망률 감소로 1980년대 이후 생산가능 연령층이 두터워지면서 1990년대 중반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의 안정인구형인 종형으로 변했다. 앞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이어지고 노령층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이 두터운 선진국형인 항아리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을 보면 1960년 23.1세에서 점차 높아져, 2000년 32.9세, 2030년에는 42.1세에 이를 전망이다. 2000년 현재 세계인구의 평균연령은 26.6세, 선진국은 37.5세, 개도국은 24.4세로 우리나라(32.9세)는 선진국보다 약간 젊은 편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연령은 31.7세, 여자는 34.1세로 여자가 남

자보다 2.3세 더 많다. 이러한 남녀의 평균 연령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더 높음에 따라 고령의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더 많고, 낮은 연령층에서는 남 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남성인구가 여성인 구보다 더 많은 탓이다.

〈표 2-4〉 인구의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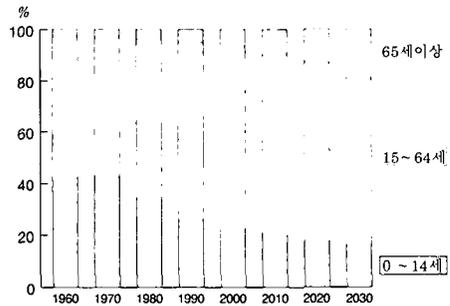
	(단위 : 세)			
	전 체	남 자	여 자	차 이
1960	23.1	22.3	23.9	1.6
1970	23.6	22.9	24.3	1.5
1980	26.0	25.1	26.9	1.8
1985	27.6	26.7	28.5	1.8
1990	29.5	28.5	30.6	2.1
1995	31.2	30.1	32.4	2.3
2000	32.9	31.7	34.1	2.3
2010	36.3	35.1	37.4	2.3
2020	39.5	38.5	40.6	2.1
2030	42.1	41.0	43.2	2.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연령계층별 구성을 보면, 총인구 중 15 세 미만의 유년인구는 1960년 42.3%를 차지하였으나, 1966년 43.9%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0년 현재 21.7% 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에는 16%로 전망된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연령인구는 1960년 54.8%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9년 71.4%로 정점에 이른 뒤 다시 감소해 2030년에 64.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960년 2.9%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 에는 7.1%, 2030년에는 19.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 구 비율이 이탈리아 18.2%, 일본 17.1%, 프랑스 15.9%와 비교하여 보면 아직은 우 리나라 인구가 비교적 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이와 같은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으로 15 ~64세 인구 100명에 대한 15세미만 인 구를 가리키는 유년부양비는 1960년 77.3 에서 2000년 30.4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5년에는 24.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0으로 증가했 으며 2030년에 28.8로 더 높아질 전망이 다. 우리나라의 2000년 현재 노년부양비 수준은 일본(25.1), 이탈리아(27.0), 프랑스 (24.3)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아직 은 노인부양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 노년부양비와 유년부양비를 합한 총 부양비는 1960년에 82.6이었으나, 2000년 에 40.4로 최저 수준을 보인 후 다시 증가 하여 2030년에 54.5로 전망된다. 총부양비 40.4는 생산연령층 100명이 약 40명의 비 생산연령층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표 2-5〉 인구의 연령구조와 부양비

	연령구성비(%)			총 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1960	42.3	54.8	2.9	82.6	77.3	5.3	6.9
1970	42.5	54.4	3.1	83.8	78.2	5.7	7.2
1980	34.0	62.2	3.8	60.7	54.6	5.1	11.2
1985	30.2	65.6	4.3	52.5	46.0	6.5	14.2
1990	25.6	69.3	5.1	44.3	36.9	7.4	20.0
1995	23.4	70.7	5.9	41.4	33.0	8.3	25.2
2000	21.7	71.2	7.1	40.4	30.4	10.0	32.9
2010	19.9	70.1	9.9	42.6	28.4	14.2	49.9
2020	17.2	69.6	13.2	43.7	24.7	18.9	76.5
2030	16.0	64.7	19.3	54.5	24.8	28.8	120.3

주: 1) 유년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3)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4)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다. 현재의 인구구조는 생산연령 인구층의 구성비가 가장 큰 시기로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0년 현재 0~14세의 유년인구는 21.7%로 일본(16.3%), 독일(16.0%), 프랑스(19.6%) 등에 비해서는 높고, 미국(22.0%), 캐나다(20.8%)와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년인구는 2010년경에 가면 2000년 현재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비율에 근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5~64세 생산가능 연령층 인구는 2000년 현재 71.2%로 일본(69.6%), 미국(64.5%), 캐나다(67.4%), 독일

(68.8%) 등 선진국 수준보다 높으며, 이 추세는 2010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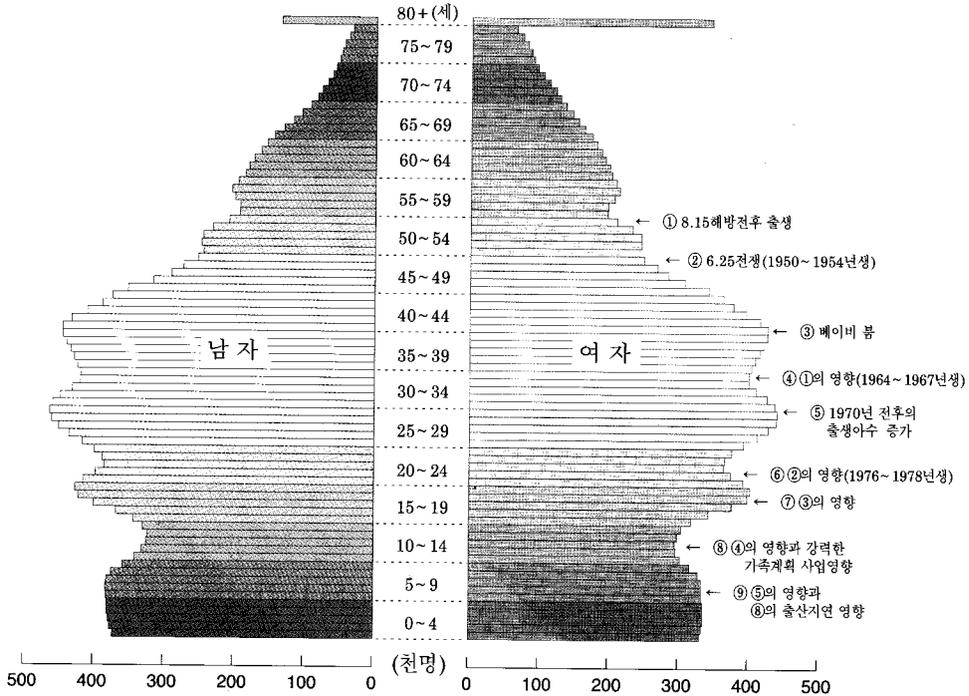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1% 수준으로 일본(17.1%), 프랑스(15.9%), 이탈리아(18.2%)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2020년 이후에 가서야 현재의 서구 선진국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6.9%이고, 선진국은 14.4%, 개도국은 5.1%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구성비는 세계 평균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15~64세의 생산가능 연령계층이 유년 및 노년을 부양해야 하는 총부양비는 2000년 현재 40.4로 미국(53.1), 캐나다(48.5), 프랑스(52.7), 독일(45.6)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20년대 후반에 가면 50%수준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

유년인구에 비교한 노년인구의 증가 정도를 말해주는 노령화지수는 15세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1960 6.9에서 2000년에는 32.9로 크게 높아졌으나 이탈리아(127.3), 일본(115.4), 프랑스(85.0) 등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76.5로 높아질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노인인구 구성

[그림 2-3] 인구피라미드 (2000.7.1기준)



비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을 감소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1%로 높아져 이미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 구성비가 2022년에는 14.3%로 노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이 7%(노령화사회)에서 14%(노령사회)에 도달하는데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프랑스 115년(1864년 7%→1979년 14%), 이탈리아 61년(1927년 7%→1988년 14%), 미국 71년(1942년 7%→2013년 14%) 등 선진국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변화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노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 24년(1970년 7%→1994년 14%) 소요된 점을 볼 때, 인구학적 변화가 일본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337만1천명, 2020년에는 689만9천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결국 평균수명의 증가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1960년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 비율이 남자 39.8%, 여자 60.2%에서 1995년에는 남자 37.1%, 여자 62.9%로 변화하였다.

선진국이 보여준 남녀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 및 남녀 수명 격차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향후 노인인구의 불균형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가 줄어들어 따라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성별 노인인구의 불균형은 노후의 고독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대다수 한국 노인들은 퇴직에 따른 수입 격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취업곤란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데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가 노인부양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대책, 건강관리, 노인인구의 재활용, 노인의 여가생활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전체 학령인구(6~21세)는 1960년 855만 2천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 1,440만1천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뒤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0년은 총인구의 24.0%인 1,133만 9천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교 대상 연령 인구(6~11세)는 1970년 총인구의 17.7%(571만 1천명)에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출생아 수 증가를 반영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다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대상 연령 인구(12~14세)는 1970년 총인구의 8.0%(257만 4천명)에서 계속 낮아져 2001년(186만 8천명)까지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약간 증가세를 보인 뒤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15~17세)는 3년의 시차를 두고 2004년(186만명)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1년 이후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18~21세)는 1980년 총인구의 9.5%로 최고를 보인 후 1998~2000년 사이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08~2014년 사이에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60년 57명에서 1995년

〈표 2-6〉 학령인구

(단위 : 천명, %)

	1960	1970	1980	1990	2000	2030
총인구	25,012 (100.0)	32,241 (100.0)	38,124 (100.0)	42,869 (100.0)	47,275 (100.0)	52,743 (100.0)
학령인구	8,552	12,604	14,401	13,361	11,339	9,256
(6~21세)	(34.2)	(39.1)	(37.8)	(31.2)	(24.0)	(17.5)
초등학교	3,629	5,711	5,499	4,786	4,081	3,369
(6~11세)	(14.5)	(17.7)	(14.4)	(11.2)	(8.6)	(6.4)
중학교	1,556	2,574	2,599	2,317	1,877	1,712
(12~14세)	(6.3)	(8.0)	(6.8)	(5.4)	(4.0)	(3.2)
고등학교	1,416	2,101	2,671	2,595	2,150	1,745
(15~17세)	(5.7)	(6.5)	(7.0)	(6.1)	(4.5)	(3.3)
대학교	1,941	2,218	3,632	3,663	3,231	2,430
(18~21세)	(7.8)	(6.9)	(9.5)	(8.5)	(6.8)	(4.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에는 36.4명으로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연령인구

196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아수의 영향을 받아 새로이 생산가능 연령인구에 진입하는 15~19세 인구는 1980년경에 정점을 이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인 생산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총인구의 71.4%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00년 71.2%, 2020년 69.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 인구는 199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25~49세 연령층 인구는 2000년 58.9%에서 2005년 59.5%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비교적 고령의 생산가능 연령인구(50~64세)는 2000년 18.4%, 2005년 20.5%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노동시장

에 진입하게 되는 15~19세의 젊은 생산연령인구를 비롯해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노동력인구의 상대적인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렇듯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른 자연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유년인구 구성비를 변화시키고, 유년인구 구성비의 감소는 신규 생산연령인구를 줄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남자 중심,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사회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력의 활용, 정년 연장 및 노인 노동력 활용, 노동력의 전문화, 수요와 공급의 조정,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양성 등 기존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특성별 인구구조

혼인상태별 인구

결혼 시기와 여성의 혼인상태는 출산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 혼인을 빨리 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많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의 혼인상태는 향후 인구규모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인이 사회적 규범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결혼관

〈표 2-7〉 생산가능인구

(단위 : 천명, %)

	1960	1970	1980	1990	2000	2030
생산가능인구 (15~64세)	13,698 (100.0)	17,540 (100.0)	23,717 (100.0)	29,701 (100.0)	33,671 (100.0)	34,130 (100.0)
15~24세	4,741 (34.6)	5,838 (33.3)	8,613 (36.3)	8,784 (29.6)	7,662 (22.7)	6,066 (17.8)
25~49세	6,964 (50.8)	9,179 (52.3)	11,812 (49.8)	16,184 (54.4)	19,822 (58.9)	16,628 (48.7)
50~64세	1,993 (14.6)	2,522 (14.4)	3,292 (13.9)	4,768 (16.0)	6,187 (18.4)	11,436 (33.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의 변화, 결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미혼인구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표 2-8>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단위 : %)

	남 자			여 자		
	1975	1985	1995	1975	1985	1995
15세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57.0	58.4	62.0	57.1	58.7	60.1
사별	1.9	1.6	1.8	13.8	12.4	13.0
이혼	0.3	0.5	1.0	0.7	0.7	1.2
미혼	40.7	39.6	35.9	28.5	28.1	25.7
15~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15.7	17.3	13.0	35.4	36.2	30.0
사별	0.1	0.0	0.0	0.2	0.1	0.1
이혼	0.1	0.1	0.1	0.2	0.2	0.1
미혼	84.1	82.6	86.9	64.2	63.5	69.8
30~39세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94.7	92.4	85.3	93.8	93.3	91.8
사별	0.5	0.4	0.3	3.4	2.3	1.5
이혼	0.6	0.9	1.2	1.4	1.4	1.7
미혼	4.2	6.4	13.1	1.4	3.1	5.0
40~49세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97.5	96.8	94.2	84.1	88.2	88.4
사별	1.5	1.2	1.2	14.4	9.7	7.3
이혼	0.7	1.1	2.5	1.3	1.5	2.8
미혼	0.4	0.8	2.1	0.2	0.6	1.5
50~59세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95.4	96.0	94.6	63.9	71.2	76.2
사별	4.0	3.0	3.2	35.4	27.7	21.6
이혼	0.5	0.6	1.6	0.6	0.9	1.7
미혼	0.2	0.4	0.6	0.2	0.2	0.5
60세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유배우	83.3	86.5	87.5	31.9	35.2	35.6
사별	16.3	13.0	11.7	67.7	64.3	63.6
이혼	0.3	0.3	0.5	0.2	0.3	0.5
미혼	0.1	0.2	0.2	0.1	0.1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로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가 달라지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의 모든 연령을 통합해서 볼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구성비는 1975~1995년 동안 남자는 57%에서 62%로, 여자는 57.1%에서 60.1%로 증가하였다. 미혼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남자 40.7%에서 35.9%로, 여자 28.5%에서 25.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산율의 저하로 15~29세 저연령층 인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자인구 중 미혼인구 비율이 매년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태어나며 결혼연령도 높고 또한 수명도 짧기 때문이다. 이혼인구 비중은 남자는 1975년 0.3%에서 1995년 1.0%로, 여자는 0.7%에서 1.2%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사별(死別)인구 비중은 큰 변화 없이 남자 2%미만, 여자 14%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상태별 인구비율은 1975년과 1995년 모두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의 순서를 보였다.

혼인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의 미혼인구 구성비가 1975년부터 1995년 사이 남자는 84.1%에서 86.9%로 2.8%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여자는 64.2%에서 69.8%로 5.6%포인트가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미혼인구 증가세가 남자보다 두드러졌다. 혼인이 거의 다 이뤄진 40대 연령층의 미혼인구 비율을 보면, 1975년에서 1995년 사이 남자는 0.4%에서 2.1%로, 여자는 0.2%에서 1.5%로 증가하

제적 지위향상으로 과거보다는 이혼이 쉽게 수용되면서 이혼인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남자보다 여자의 이혼인구 구성비가 큰데, 이혼한 뒤 남자가 여자보다 재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자는 남녀 전체 모든 연령을 통합해서 볼 경우 1975년 0.5%에서 1995년 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혼상태 남자는 0.3%에서 1.0%로 증가한 반면 이혼상태 여자는 0.7%에서 1.2%로 증가하였다. 이혼인구는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대다. 40대의 이혼율은 1975년 남자 0.7%, 여자 1.3%에서 1995년에 남자 2.5%, 여자 2.8%로 높아졌다.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 비율은 이혼, 사별, 미혼자의 증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자는 1975~1995년 동안 줄곧 30대에서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고, 남자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는 40대, 1995년에는 50대에서 94.6%로 가장 높다. 이는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높아졌으며,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재혼을 쉽게 하며, 사망률 감소로 인하여 최근 들어 배우자가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수준별 인구

국민의 교육수준은 국가 발전의 기본요소로 모든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교육수준 지표로

는 평균교육년수와 교육수준별 인구 비율이 있다. 평균교육년수는 국민의 총 교육년수를 만 6세 이상 인구에서 학령인구를 뺀 인구로 나눈 것으로, 평균교육년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녀 전체의 평균 교육년수는 1970년 5.74년에서 1995년 10.14년(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6.86년에서 11.09년으로 4.23년(1.6배)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4.72년에서 9.26년으로 4.54년(2.0배)이 증가하였다. 남녀 교육년수 차이는 1970년 2.14년에서 1995년 1.83년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 교육수준 구성비는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을 25세로 보고 교육단계별 줄

<표 2-9> 교육수준구성비 및 평균교육년수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교육수준	초·중·고	전체	73.4	65.5	55.3	43.4	33.4	27.6
		남자	61.2	53.1	42.8	31.9	23.3	18.6
		여자	84.7	77.1	67.0	54.1	43.0	36.2
	중·고	전체	11.5	14.8	18.1	20.5	19.0	15.7
		남자	15.1	17.7	19.8	20.5	17.6	14.5
		여자	8.2	12.1	16.5	20.5	20.3	16.9
대	고·대	전체	10.2	13.9	18.9	25.9	33.5	37.5
		남자	15.2	19.7	25.4	32.1	38.9	41.4
		여자	5.5	8.4	12.9	20.2	28.4	34.1
	대	전체	4.9	5.8	7.7	10.2	14.1	19.1
		남자	8.5	9.5	12.0	15.5	20.1	25.7
		여자	1.6	2.4	3.6	5.2	8.3	12.8
평균	전체	5.74	6.62	7.61	8.58	9.54	10.14	
	남자	6.86	7.61	8.67	9.66	10.55	11.09	
	여자	4.72	5.70	6.63	7.58	8.58	9.2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호 『한국의 사회지표』, 각 호

업자수를 2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백분비이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교육수준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인구는 1970년 73.4%에서 1995년 27.6%로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이상 졸업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1970년 4.9%에서 1995년 19.1%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10.2%에서 37.5%로 급증하였다. 1995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약 56.6%를 차지함으로써 고학력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의 교육수준이 여전히 여성보다 높고, 대졸 이상의 경우 여성 졸업자 비율이 남성 졸업자 비율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여성의 고학력 증가 속도가 남자보다 높다. 1970년부터 1995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남자는 15.2%에서 41.1%로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5.5%에서 34.1%로 늘어났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남자는 8.5%에서 25.7%로 증가했는데 여자는 1.6%에서 12.8%로 높아졌다. 앞으로 여성들의 대학졸업 구성비는 계속 높아지는데 비해 남성들의 대학졸업 구성비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2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의 최종 학력이 대학 졸업자인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미국이 24%(1994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 15.4%(1995년), 독일 13.0%(1994년)이며

OECD 평균은 12.0%(1994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가발전의 전략으로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4절 지역별 인구구조

도시화 및 시도별 인구분포

정부 수립후 처음 실시한 1949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949년의 도시지역 인구는 전국 인구의 17.2%이었다. 도시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60년 28.0%, 1970년 41.1%, 1995년에는 78.5%로 급증하였다. 또 행정구역상 도시의 수는 1960년 27개에서 73개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부(郡部)인구는 1949년에 전국 인구 중 82.8%였으며 본격적인 경제개발기를 앞둔 1960년에는 1,800만명으로 72.0%, 1970년에는 1,851만명 58.8%, 1995년에는 957만 2천명(전국 인구의 21.5%)으로 줄곧 감소하여 왔다.

도시인구의 자연증가, 인구가동, 시경계 확장, 시 승격 등의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

〈표 2-10〉 도시화 추이

(단위 : 천명, %)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동부(시부)	28.0	41.2	57.3	65.4	74.4	78.5	79.7 ^p
읍면부(군부)	72.0	58.8	42.7	34.6	25.6	21.5	20.3 ^p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호
『200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표 2-11〉 시도별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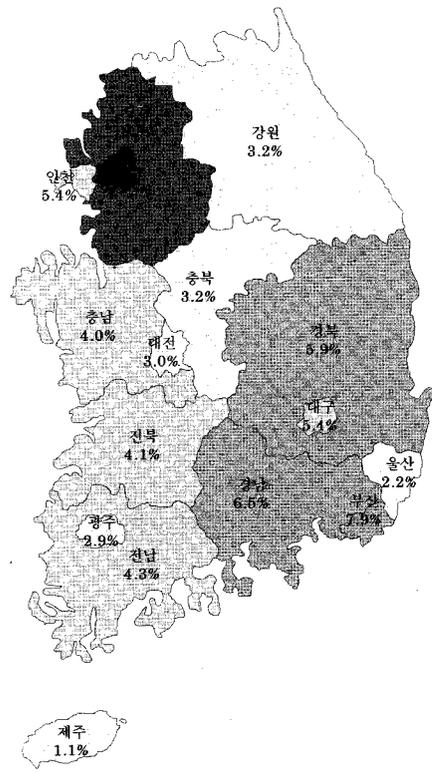
(단위 :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9.8	17.6	22.3	24.4	22.9	21.4
부산	4.7	6.0	8.4	8.7	8.5	7.9
대구	2.7*	3.4*	4.3*	5.1	5.5	5.4
인천	1.6*	2.0*	2.9*	4.2	5.2	5.4
광주	1.3*	1.6*	1.9*	2.6	2.8	2.9
대전	0.9*	1.3*	1.7*	2.4	2.9	3.0
울산	-	-	-	1.6	2.2	2.2
경기	9.4	8.7	10.3	14.2	17.1	19.5
강원	6.5	5.9	4.8	3.6	3.3	3.2
충북	5.5	4.7	3.8	3.2	3.1	3.2
충남	9.2	7.8	6.2	4.6	4.0	4.0
전북	9.6	7.7	6.1	4.8	4.3	4.1
전남	13.0	11.2	8.2	5.8	4.6	4.3
경북	12.7	11.1	9.0	6.6	6.0	5.9
경남	12.7*	9.9*	8.9*	6.9	6.5	6.5
제주	1.1	1.2	1.2	1.2	1.1	1.1
수도권	20.8	28.3	35.5	42.8	45.3	46.3
대도시	20.9	31.8	41.6	49.1	50.0	48.2

주 : *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호
『200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2000

農向都)현상이었다. 도시화는 국내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도시화의 진행은 인구 백만명 이상의 '거대도시' (metropolis), 인구 천만명 이상의 '초거대도시' (megapolis) 형성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도시화와 함께 대도시에 사는 사람 비율도 그만큼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백만명 이상의 대도시 즉,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인구비중이 1949년 전체인구의 13.7%이었으나, 이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광역시 승격, 시 경계 확장 등이 진행되면서 1995년에는 50.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2-5] 시도별 인구분포(2000)



도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요인은 1960~1970년대에 걸친 대규모 이농향도(離

16개 시도별 인구를 보면, 농촌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출산력 때문에 각 시도 인구의 절대수는 증가하였다. 이때에도 대도시에서 인구증가율이 더 높아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가 증가한 지역은 6개 대도시와 제주도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가동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로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북에서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경남은 인구의 절대수는 감소하지 않은 가운데 비중만 감소한 데 비해, 6개 대도시와 경기도는 전국인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들 지역 외에 서울, 부산, 제주 인구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인구는 증가하였다.

수도권 인구집중

인구가동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는 서울과 주변지역 위주로 일어났다. 1960년대는 서울의 성장, 1975년부터는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성장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1949년에는 서울에 전국 인구의 7.2%가 집중되었으나, 1960년에는 260만명으로 전국인구의 9.8%를, 1970년에는 550만명으로 17.6%를 차지하였다. 1970년 서울의 인구는 10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 1,014만7천명으로 1천만명이 넘는 초거대도시가 되었다. 서울인구는

1990년에 정점을 이룬 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인구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4.4%로 정점을 이루다가 1995년 22.9%, 2000년 21.4%로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즉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1960년 인천과 경기지역은 전국 인구의 11.0%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에 10.7%로 다소 감소하다가, 1980년에는 13.2%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22.3%로 증대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비율로 보자. 1960~1970년 서울은 전국 인구증가분의 47.8%를 흡수하였고, 늘어난 인구의 절반 정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1970년에도 이어졌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다소 떨어져 42.3%를 기록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는 그 비율이 32.9%로 낮아져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둔화되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1970년대부터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1980년대 전반기에는 서울과 유사한 41.4%를 흡수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는 서울보다 오히려 더 많이 흡수해 1985~1990년에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60.5%를 경기도가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93.4%를 기록해 신규로 늘어나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이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수도권 인구의 증가

(단위 : 천명, %)

	1960 ~70	1970 ~80	1980 ~85	1985 ~90	1990 ~95	1995 ~2000
전국 증가인구	6,445	6,002	3,012	2,963	1,198	1,516
서울	3,080	2,839	1,275	974	-381	-340
인천·경기도	605	1,580	1,247	1,793	1,984	1,498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3,685	4,419	2,522	2,767	1,603	1,158
서울/전국 (%)	47.8	47.3	42.3	32.9	-31.8	-22.4
인천·경기도/전국 (%)	9.4	26.3	41.4	60.5	165.7	98.8
수도권/전국 (%)	57.2	73.6	83.7	93.4	133.8	76.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호
『2000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2000

지역별 인구의 연령구조

도시와 농촌의 차별적인 인구성장으로 도시와 농촌 두 지역의 인구구조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의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도시와 농촌 모두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나 종 모양으로 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15세 이하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 모양의 변화가 도시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1970~1995년 사이 15세 미만 인구의 구성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1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시부와 군부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농촌에서는 65세 이후의 고연령층 인구의 구성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 인구연령 구성비를 보면, 0~14세 유년인구 구성비는 1970년 전국이

42.5%로 경기(42.9%)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지역의 유년인구 구성비가 7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인천(26.1%), 울산(27.9%), 경기(26.1%)지역의 유년인구 구성비는 타지역보다 훨씬 높았는데, 2020년에 이르면 출산력의 감소로 모든 지역에서 2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64세 생산가능연령 인구구성비는 1970년에 서울, 부산, 대구가 각각 59%이상으로 타지역보다 높았다. 그런데 1995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가 70%를 상회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이 타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 구성비가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970년과 1995년 모두 대도시와 경기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으며, 25년 동안 도지역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1970년 4.3%에서 1995년 10.6%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7.1%)에 비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됐다. 이 같은 추세가 반영돼 평균연령은 1970년에는 충청도와 경상도, 제주도만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1995년에는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연령이 전국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연령구조 변화로 인하여 0~14세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유년부양비는 출생아가 줄어든 탓에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970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지역은 서울(58.4)이었는데 1995년(29.0)에도 가장 낮다. 유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970년

〈표 2-13〉 시도별 인구의 연령계층별구성비

	연령계층별 구성비 (%)						평균연령	
	0~14세		15~64세		65세이상		(세)	
	1970	1995	1970	1995	1970	1995	1970	1995
전국	42.5	23.4	54.4	62.2	3.1	5.9	23.6	31.2
서울	36.3	21.6	62.1	74.2	1.7	4.2	23.3	30.7
부산	38.6	22.3	59.6	73.2	1.8	4.5	23.0	31.0
대구	38.4	23.3	59.5	72.2	2.1	4.5	23.1	30.3
인천	39.8	26.1	58.0	69.5	2.2	4.4	23.5	29.5
광주	40.7	25.1	56.7	70.3	2.6	4.6	22.7	29.3
대전	41.2	24.9	56.5	70.6	2.3	4.5	23.0	29.5
울산	40.2	27.9	56.4	68.8	3.5	3.3	24.2	28.0
경기	42.9	26.1	54.0	69.1	3.0	4.8	24.0	29.6
강원	45.5	22.2	51.8	69.8	2.7	8.0	23.1	33.2
충북	45.9	23.0	50.5	68.9	3.6	8.1	23.9	32.7
충남	45.9	21.5	50.3	68.5	3.8	9.9	24.0	34.5
전북	45.8	22.3	50.5	68.7	3.7	9.0	23.5	33.5
전남	46.8	22.1	48.9	67.3	4.3	10.6	23.6	35.0
경북	44.5	21.7	51.7	68.7	3.9	9.6	24.3	34.1
경남	43.8	23.9	52.2	68.7	4.0	7.4	24.2	32.1
제주	44.1	23.8	50.7	69.6	5.2	6.7	24.1	31.3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9

에 전남(95.6)이었는데, 1995년에는 전남이 32.8로 중간 수준, 울산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이 시도별로 유년부양비 격차가 줄었으며, 대도시간에도 인구의 연령구조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5~6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노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대도시와 경기를 제외한 9개 도의 노년부양비가 전국보다 높았다. 유년과 노년을 합한 총부양비는 1970년에는 대도시가, 1995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가 낮았다. 1995년 총부양비 수준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48.6), 충남(45.9), 전북(45.6), 경북(45.5)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화와 함께 젊은 연령층이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촌지역 인구의 평균연령이 높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의 재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령구조의 차이에 의한 부양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표 2-14〉 시도별 인구의 연령구조 지표

	(단위 : %)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70	1995	1970	1995	1970	1995	1970	1995
전국	83.9	41.3	78.2	33.0	5.7	8.3	7.3	25.2
서울	61.1	34.6	58.4	29.0	2.7	5.6	4.6	19.3
부산	67.8	36.7	64.8	30.5	3.0	6.2	4.6	20.3
대구	68.1	38.5	64.6	32.2	3.5	6.3	5.4	19.6
인천	72.4	43.9	68.7	37.5	3.7	6.4	5.4	17.1
광주	76.3	42.2	71.7	35.7	4.6	6.5	6.4	18.2
대전	76.9	41.6	72.9	35.2	4.0	6.4	5.5	18.2
울산	77.3	45.3	71.2	40.5	6.1	4.8	8.6	11.9
경기	85.0	44.7	79.4	37.8	5.6	6.9	7.1	18.3
강원	93.1	43.2	87.9	31.7	5.2	11.5	5.9	36.3
충북	98.1	45.1	90.9	33.3	7.2	11.8	7.9	35.4
충남	98.9	45.9	91.3	31.4	7.6	14.5	8.3	46.2
전북	98.1	45.6	90.8	32.4	7.3	13.2	8.0	40.7
전남	104.3	48.6	95.6	32.8	8.7	15.8	9.1	48.2
경북	93.5	45.5	86.0	31.6	7.5	13.9	8.7	44.0
경남	91.5	45.5	83.9	34.7	7.6	10.8	9.1	31.1
제주	97.1	43.8	86.9	34.2	10.2	9.6	11.7	28.1

주: 1) 유년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3)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4)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9

제 3 장 인구변동

인구는 항상 변동한다. 인구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인구변동의 결과 각 시점에서의 인구 규모, 구조, 분포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도, 경제활동 상태 등 그 질적인 속성도 변화하게 된다.

출생과 사망은 인구의 변동을 가져오는 자연적 요인이다. 그러나 출생과 사망수준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또 사회의 제반 구조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불과 30년도 안되는 기간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정책으로 고(高)출산율과 고(高)사망률 시대에서 저(低)출산율과 저(低)사망률 시대로의 인구변천을 경험하였다. 인구이동은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변동시키는 사회적 요인이다. 인구이동의 결과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인구변동 요인은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발생할 때마다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인구동태신고와 겹하고 있음)를 하는데, 이들 신고내용을 집계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는 전입신고를 기초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 통계를 통하여 출생, 사망, 혼인·이혼, 인구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출생

출산율

1960년대 초반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연평균 2~3%씩 증가하였다. 1962년에 시작한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과 경제·사회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1960년 여자 1인당 약 6명을 출산하던 고(高)출산 단계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1.6명만 출산하는 저(低)출산 단계로 바뀌었다. 신생아는 1970년에 연간 100만명이 넘게 태어났으나, 그 뒤 계속 감소하여 1987년에는 63만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뒤 다시 증가하였다가 1994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1〉 주요 출산력 지표

	출생아수 (천명)	조출생률 (인구천명당)	합계출산율 (여자1명당)
1970	1,006.6	31.2	4.53
1975	874.9	24.8	3.47
1980	865.4	22.7	2.83
1985	662.5	16.2	1.67
1990	658.6	15.4	1.59
1995	721.1	16.0	1.65
1996	695.8	15.3	1.58
1997	678.4	14.8	1.54
1998	643.0	13.8	1.47
1999	616.3	13.2	1.42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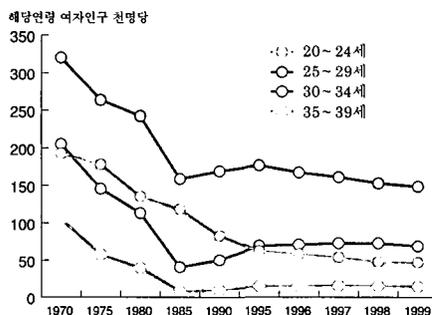
1999년에는 과거 30년 동안 가장 낮은 61만6천명이 태어났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가장 기본적인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970년에는 인구 1,000명당 31.2명이 태어나다가, 1987년은 15.1명으로 급감했다. 그 뒤 다시 높아지다가 1992년 16.9명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1999년에는 13.2명을 기록했다.

최근의 출산력 추세를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 수준에서 1970년 4.53명, 1983년에는 2.08명으로 계속 낮아져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1987년 1.55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뒤 다시 높아져 1992년에는 1.78명 수준을 보였다가 또 다시 낮아져 1999년에는 지금까지 최저 수준인 1.42명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42(1999년)는 일본 1.34(1999년), 스페인 1.15(1998년),

[그림 3-1] 모의 연령별 출산율



이탈리아 1.19(1998년)보다는 높지만, 호주 1.76(1998년), 프랑스 1.75(1998년), 스웨덴 1.51(1998년), 미국 2.06(1998년)보다 낮고 선진국 전체의 1.56(2000~2005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령층별로 볼 때 1970년 이후 20대 초반과 40대 후반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비해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출산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연령층에 따라 기점은 다소 다르지만), 대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약간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는 혼인연령의 상승과 함께 출산 기피, 첫 출산 연기, 출산터울 연장 등의 저출산 관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1990년대 들어서 둘 이상을 낳는 사람이 다소 늘어나고, 늦동이 출산이 늘어나는 등 출산행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늦동이 출산이나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1990년대 들어 다소 늘고있다 해도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수가 전체 출생아수에서

인구대체수준

합계출산율이 2.1수준일 때 이를 인구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라고 한다. 이는 한 여성이 평균 2.1명의 자녀(이 중 0.1명은 출산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자녀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준이 계속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구규모와 구조가 거의 그대로(안정상태) 유지된다.

〈표 3-2〉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 천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9.3	192.8	320.1	205.4	105.8	46.0	13.1
1975	14.2	177.6	262.8	145.6	57.9	20.7	5.0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1985	10.1	118.5	158.9	41.0	8.8	2.2	0.5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995	3.6	62.9	177.1	69.6	15.2	2.3	0.2
1996	3.3	58.8	167.6	71.1	15.5	2.4	0.2
1997	3.1	54.5	161.5	73.2	16.0	2.5	0.2
1998	2.9	48.0	153.4	73.2	15.8	2.5	0.2
1999	3.0	47.2	149.0	69.2	14.6	2.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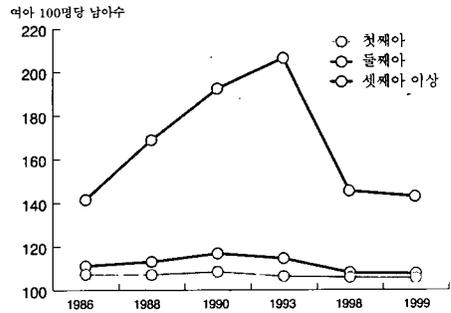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차지하는 구성비는 1%미만이다. 따라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다양해지고 연도에 따라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앞으로 증가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말띠, 용띠, 범띠와 같은 특정 해에는 여아 출산을 꺼리는 관습의 영향과 IMF 사태이후 경제침체에 따른 혼인 및 출산 연기, 밀레니엄 베이비 선호 등 일시적인 변화를 제외하고 출산력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생성비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가 몇 명 태어나는가를 가리키는 출생성비는 103~107일 때, 즉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는 103~107명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높은 편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출생성비가 계속

[그림 3-2]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높아져 1990년 116.5, 1993년 115.3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다소 굴곡을 보이면서 완화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109.6으로 나타났다.

출생성비가 연도별로 다소 굴곡을 보이는 이유는 전통적인 관념이 출산행위에 아직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해인 1990년에 출생성비가 116.5를 보인 점이나, 범띠해인 1986년에 111.7, 1998년에 110.2를, 용띠해인 1988년에 113.3을 보임으로써 말띠는 물론 범띠와 용띠 해에도 여아 출생을 기피하여 출생수 뿐만 아니라 출생성비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출산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성감별 및 낙태로 태아의 성을 선택해 출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모의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생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전국 평균이 1993, 1994년은 200을 상회하였는데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300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도 1993년을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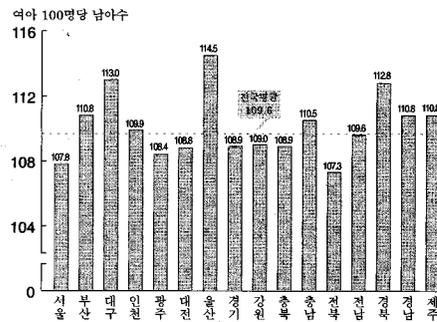
〈표 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86	1988	1990	1993	1998	1999
계	111.7	113.3	116.5	115.3	110.1	109.6
첫째아이	107.3	107.2	108.5	106.4	105.9	105.6
둘째아이	111.2	113.2	117.0	114.7	108.0	107.6
셋째아이 이상	141.7	168.9	192.7	206.6	145.6	143.1
서울	155.9	177.0	199.2	215.2	142.5	136.2
부산	172.2	218.9	259.5	313.7	178.6	184.4
대구	356.8	456.9	390.2	328.7	198.3	192.6
인천	129.5	138.3	163.6	189.5	137.0	129.5
광주	-	115.6	147.8	154.5	140.3	141.2
대전	-	-	294.7	263.4	143.7	139.0
울산	-	-	-	-	206.2	177.9
경기	119.6	142.7	164.6	207.9	142.5	136.1
강원	116.5	134.8	143.3	190.9	133.8	130.0
충북	135.8	151.8	174.1	195.5	138.5	143.5
충남	123.0	164.1	173.2	168.8	136.9	132.6
전북	112.5	124.6	132.5	132.1	120.1	126.0
전남	114.3	124.0	136.2	146.8	114.0	121.2
경북	192.5	246.1	294.1	292.1	176.5	169.0
경남	166.1	243.4	290.8	276.5	176.0	174.4
제주	120.3	115.5	153.1	136.4	127.7	136.3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으로 완화되다가 1998년에 145.6으로 다시 높아졌고, 1999년 143.1을 기록하고 있다. 영남권의 출생성비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으나, 지역간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은 완화되었다. 대구의 경우 1999년 셋째아이의 출생성비는 192.6으로 전국 평균보다 76%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986년 범띠해에는 356.8로 전국 평균보다 2.2배, 1990년 말띠해에는 390.2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음을 볼 때 지역간 출생성비 불균형이 상당히 호전되

[그림 3-3] 시도별 출생성비(1999)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산행위의 배경에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인 혈연주의와 직계주의가 있다. 따라서 출생성비의 차이는 직계주의의 확산 정도 및 불법 의료행위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한 1991년도 및 1994년도 출산력 조사에서 영남지역의 남아선호도가 강하고 실제로 태아의 성을 선택해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 불균형의 해소 방안으로 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가족법 개정, 고용 불평등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불법 의료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 등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면서 전보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의식이나 제도 개선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태아성감별과 관련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의료인들의 자체적인 윤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2절 사망

〈표 3-4〉 성·연령별 사망률

(단위 : 천명당)

사망률

사망수준의 감소는 사회, 경제 및 의료 기술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의 감소가 경제발전 이후에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사회 발전 이전에 사망률이 감소됐다. 이는 서구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보건 및 의료 기술이 전파됨에 따른 것이다. 연간 사망자수는 1970년 25만9천명에서, 1980년 27만8천명, 1990년에는 24만9천명, 1999년에는 24만7천명으로 다소 굴곡을 보이며 감소하였다. 인구 천 명당 사망자수를 가리키는 조사사망률은 1970년 8.0에서, 1980년 7.3, 1990년 5.8, 1999년에는 5.2로 계속 감소하였다.

	남 자			여 자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전체	9.2	6.6	5.8	6.8	5.0	4.7
0~4	4.7	3.7	1.3	4.5	3.2	1.1
5~9	2.6	0.7	0.3	2.3	0.5	0.2
10~14	2.1	0.6	0.2	1.7	0.4	0.2
15~19	3.5	1.2	0.7	2.5	0.5	0.3
20~24	4.2	1.5	0.9	3.5	0.7	0.4
25~29	3.8	1.9	1.1	3.7	0.8	0.5
30~34	4.0	2.5	1.4	3.3	1.0	0.6
35~39	5.5	3.7	2.3	4.1	1.4	0.9
40~44	9.1	5.4	3.8	5.3	2.0	1.2
45~49	14.9	9.0	5.7	7.0	3.4	1.9
50~54	22.4	12.3	8.2	10.0	4.7	2.8
55~59	33.1	17.1	12.8	14.2	6.9	4.4
60~64	47.5	26.7	19.9	20.4	11.1	7.5
65~69	72.9	40.8	29.8	31.9	18.5	13.2
70~74	95.5	64.4	49.1	49.1	33.0	24.9
75~79	225.2	97.0	78.7	179.2	55.9	46.7
80+	-	187.0	152.5	-	137.1	120.2

주 : 1970년은 80세 이상이 75~79세에 포함됨.
따라서 75~79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1999 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연령별로 볼 경우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낮아졌다. 사망률은 태어난 직후에 높다가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져 10~14세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그 이후 연령이 많아지면 다시 높아지는 형태로 연령별 사망률은 J자형을 나타낸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10~14세 연령층의 경우 1970년 남자 천 명당 2.1명이 사망하였으나, 1980년에는 1.2명, 1990년에는 0.6명, 1999년에는 0.2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연령층의 여자도 1970년 1.7명에서, 1980년에 1.1명, 1990년에는 0.4명, 1999년에는 0.2명으로 줄었다.

사망률이 높은 연령층 가운데 노령인구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65~69세 연령층의 경우 1970년 남자 72.9명, 여자 31.9명에서, 1999년 남자 29.8명, 여자 13.2명으로 감소하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연령층은 혼인 및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25~29세로, 해당 연령 인구 천명당 남자가 1970년 3.8명에서 1999년 1.1명으로 감소한데 비해 같은 연령층 여자는 3.7명에서 0.5명으로 감소하여 주출산 연령층

여성의 사망률 감소 정도가 같은 연령층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준다.

태아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확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가장 연약한 상태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확률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영아사망률은 사망수준 및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주요 보건지표로 활용된다. 영아란 출생한 뒤 1년 미만인 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아사망률은 1년 동안 1세 미만에 죽은 아이를 같은 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로 나눈 천분비이다. 1955~1960년 영아사망률은 100 수준으로 출생아 10명당 1명의 영아가 출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1960년대 이후 영아사망률은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출생아 1,000명당 약 42명 수준에서 1990년 초반에 10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평균수명

사망수준의 개선은 평균수명이라는 지표로 평가한다. 평균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은 각 연령별 사망확률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장차 몇 년이나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건강수준 및 발전을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55~196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자 51.1세, 여자 53.7세로 추정되었다. 1977년 사망신고 자료에 따르면 남자

60.75세, 여자 68.74세로 높아졌고 1997년에 남자 70.56세, 여자 78.12세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후반이후 20년 동안 여성은 9.38세 (13.6%)가 증가한데 비해 남성은 9.81세 (16.1%)가 증가하여 남성 전체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남녀 평균수명을 외국과 비교하면 1997년 남자의 평균수명 70.6세는 헝가리(66.4세), 터키(66.2세)보다는 높고, 멕시코(70.4세), 체코(70.5세)와 비슷하며, 일본(77.2세), 스웨덴(76.7세)보다는 6~7세 낮은 수준이다. 1997년 여자의 평균수명 78.1세는 체코(77.5세), 헝가리(75.1세), 멕시코(76.7세), 터키(70.8세)보다는 높고, 일본(83.8세), 프랑스(82.3세)보다는 4~5

〈표 3-5〉 평균수명

(단위 : 세)

	남 자	여 자	여자-남자
1971	58.99	66.07	7.08
1973	59.61	67.03	7.42
1975	60.19	67.91	7.72
1977	60.75	68.74	7.99
1979	61.28	69.51	8.23
1981	62.28	70.54	8.26
1983	63.21	71.47	8.26
1985	64.45	72.82	8.37
1987	65.78	74.04	8.26
1989	66.84	75.08	8.24
1991	67.74	75.92	8.18
1993	68.76	76.80	8.04
1995	69.57	77.41	7.84
1997	70.56	78.12	7.56

자료 : 통계청, 『1971~1997년 생명표』, 199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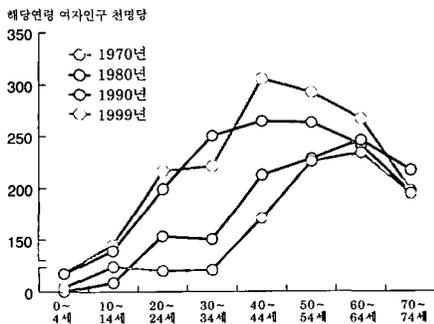
세 낮은 편이다. 선진국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선진국 전체 남자(72.0세)보다는 1.44세, 여자(79.3세)보다는 1.18세 낮다.

최근에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 남녀 평균수명의 격차는 1971년 7.08세에서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985년 8.37세 차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7년 현재 7.56세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에서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이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남녀 수명 차이(7.5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헝가리(9.3세), 폴란드(8.8세), 프랑스(8.4세) 다음으로 큰 것이다.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일본의 남녀 수명 차이 6.6세보다는 크고, 선진국 전체의 남녀 수명 차이 7.3세와 비슷하다.

성별 사망률

성별 사망률을 보면 몇몇 저개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그림 3-4] 여성사망률에 대한 남성사망률의 백분비



여성의 사망률보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남성사망률 대 여성사망률 성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에 비해 1995년에 25~39세 연령층에서 사망률 성비가 약 2배 가량 높아져, 남보다 여성의 사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주된 원인은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가임기 여성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25~29세의 경우 1970년 여성사망률을 100으로 볼 때 남성

<표 3-6> 여성사망률에 대한 남성사망률의 백분비

	1970	1980	1990	1999
전 체	134.5	135.1	133.3	124.3
0~4	104.0	100.1	117.3	117.6
5~9	114.1	106.6	128.4	114.4
10~14	124.2	108.8	139.2	145.2
15~19	139.2	136.6	225.7	205.9
20~24	120.1	153.5	199.2	216.1
25~29	102.3	142.3	220.8	231.3
30~34	120.9	150.5	250.3	220.7
35~39	133.6	180.0	265.7	247.6
40~44	171.1	212.1	264.5	305.4
45~49	211.0	220.2	264.5	301.8
50~54	225.0	227.6	263.1	292.2
55~59	232.9	247.3	248.9	289.0
60~64	233.3	245.9	240.8	266.8
65~69	228.1	227.5	220.8	225.3
70~74	194.5	216.5	195.4	197.0
75~79	125.7	205.3	173.3	168.4
80+	-	183.4	136.4	126.9

주 : 1) 수치는 (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 × 100임
 2) 1970년은 80세 이상이 75~79세에 포함됨. 따라서 75~79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의 사망률은 102.3이었으나, 1999년에는 231.3으로 높아졌다. 이는 1970년 남녀의 사망률은 1,000명당 각각 3.8명과 3.7명으로 엇비슷했는데 1999년에 남자는 1.1로 조금 낮아진데 비해 여자는 0.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1970년에는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사망률의 2배가 되는 연령층은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해당되었으나, 1990년 이후는 15세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2~3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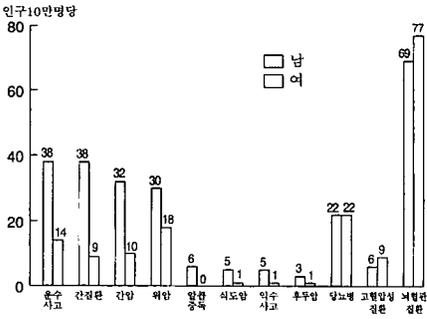
사망원인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사망률과 사망원인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의 종류와 사망원인도 변화하게 된다. 사망원인 순위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순환기계질환이 1위, 각종 암 2위, 각종 사고사 3위, 소화기계질환이 4위, 호흡기계질환이 5위로 나타나고 있다.

3대 사망원인인 순환기계질환, 각종 암,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비율은 1970년대 이후 다소 등락을 보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1985년 이후 이같은 3대 사망원인군의 비중은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의 전체 사망에서 5대 사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우선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사망원인을 보면, 순환기계질환이 1985년 31.8%에서 1999년 23.3%로, 소화기계질환은 9.0%에서 6.0%

[그림 3-5] 주요 사인의 성별 사망률(1999)



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종 암은 같은 기간 15.1%에서 21.9%로, 각종 사고사는 11.6%에서 12.1%로, 호흡기계질환은 4.6%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좀 더 세분하여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가 각각 1, 2, 3위로 1990년 이후 순위에 변함이 없다.

1999년 사망률의 경우 전체 인구 십만명당 뇌혈관질환이 72.9명, 심장질환이 39.1명, 운수사고가 26.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뇌혈관질환(69.3명), 심장질환(41.7명), 운수사고 (38.4명)의 순이며, 여자는 뇌혈관질환(76.7명), 심장질환(36.5명), 당뇨병(22.0명)의 순서이다.

남녀간 사망률 차이가 비교적 큰 점이 우리나라 사망유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특히 높은 사망원인은 알콜중독 등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8.4배(남자 5.6명, 여자 0.3명), 식도암 9.3배(남자 5.4명, 여자 0.6명), 후두암 5.6배(남자 2.7명, 여자 0.5명), 간질환 4.2배(남자 37.8명, 여자 9.0명), 익사 3.8배(남자 5.3명, 여자 1.4명), 입

술·구강·인두암 3.7배(남자 1.7명, 여자 0.5명), 간암 3.3배(남자 31.7명, 여자 9.5명) 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 또 폐암 2.9배, 호흡기결핵 2.8배, 운수사고 2.7배, 자살 2.4배 등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 이들 질환은 대부분 음주 및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남자의 음주, 흡연율이 여자보다 높다. 따라서 성별 사망률 차이는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운수사고, 40대는 간질환, 50대 이상은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 30대의 사망률은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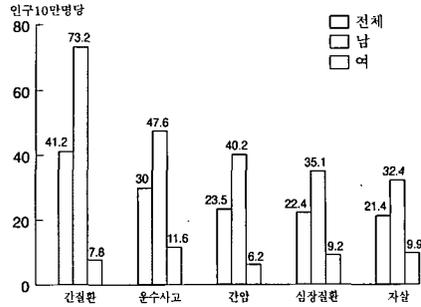
〈표 3-7〉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1999)

(단위 : 인구 십만명당)

	1 위	2 위	3 위
1~9세	운수사고 (9.3)	익수사고 (3.6)	선천성기형 (2.0)
10대	운수사고 (11.9)	자살 (5.0)	익수사고 (2.9)
20대	운수사고 (20.9)	자살 (13.1)	심장질환 (3.2)
30대	운수사고 (22.2)	자살 (17.4)	간질환 (10.0)
40대	간질환 (41.1)	운수사고 (30.0)	뇌혈관질환 (24.3)
50대	뇌혈관질환 (80.0)	간질환 (72.4)	간암 (63.8)
60대	뇌혈관질환 (265.2)	심장 질환 (131.1)	폐암 (124.4)
70세이상	뇌혈관질환 (1,098.8)	심장 질환 (501.2)	당뇨병 (274.3)

주 : ()의 수치는 인구십만명당 사망자수임
 자료 : 통계청, 『1999사망원인통계연보』, 2000

〔그림 3-6〕 40대의 주요 사망률(1999)



수사고(22.2명) 다음으로 자살(17.4), 간질환 (10.0) 순으로 많다. 40대는 간질환 (41.1) 다음에 교통사고(30.0), 뇌혈관질환(24.3) 순으로 높으며, 50대는 뇌혈관질환(80.0) 다음에 간질환(72.4), 간암(63.8) 순으로 많다.

제3절 혼인·이혼

혼인형태

호적에 신고되는 혼인건수는 연도별로 다소 등락을 보이는데 1970년 30만1천건, 1980년 40만4천건, 1990년 39만9천건, 1999년에는 36만2천건이다. 혼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가리키는 조혼인율이 사용된다. 1970년과 1990년은 인구 1,000당 9.3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나, 1999년에는 7.7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우리나라 조혼인율 7.7은 호주

5.8(1996년), 뉴질랜드 5.9(1996년), 캐나다 5.2(1996년), 스웨덴 3.8(199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서구에서는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어 혼인신고율 자체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비교는 곤란하다.

〈표 3-8〉 주요 혼인력 지표

	혼인 건수 (천건)	조혼 인율 (천명당)	혼인형태(%)			
			남초혼	남재혼	남초혼	남재혼
			여초혼	여초혼	여재혼	여재혼
1970	301	9.3	91.5	4.1	0.9	3.5
1975	285	8.1	92.6	3.6	0.8	3.0
1980	404	10.6	92.2	3.5	1.2	3.1
1985	375	9.3	90.6	3.7	1.7	4.0
1990	399	9.3	89.3	3.6	2.3	4.7
1995	399	8.7	86.4	3.6	3.6	6.5
1996	435	9.4	85.9	3.6	3.8	6.6
1997	389	8.4	85.3	3.4	4.0	7.3
1998	376	8.0	84.0	3.5	4.4	8.1
1999	363	7.7	82.5	3.5	4.7	9.3

주 : 1) 1990년이후는 혼인신고년도 기준이고, 그 이전은 혼인발생년도 기준임

2) 1996년은 동성동본 혼인신고 특례기간으로 신고건수가 많음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남녀가 결합하는 혼인은 남녀가 각각 초혼인가 재혼인가에 따라 혼인형태를 나누어볼 수 있다. 혼인신고에 따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전체 혼인의 주종을 이루나 1970년의 91.5%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 89.3%, 1999년에는 82.5%로 낮아졌다.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 역시 많아지면서 남녀 모두 재혼인 결합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5%

에서, 1990년 4.7%, 1999년 9.3%로 급증하였다. 남자는 재혼, 여자는 초혼인 결합은 1990년이래 3.4%~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자는 초혼, 여자는 재혼인 결합 형태는 1970년대 1%미만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2.3%, 1999년에는 4.7%까지 급증하여 다양한 혼인형태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우율

유배우율은 전체 인구 중 초혼이든 재혼이든 일정 시점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백분율을 가리킨다. 유배우율은 출산

〈표 3-9〉 연령별 유배우율

(단위 : %)

	남 자				
	1960	1970	1980	1990	1995
15-19	0.7	0.3	0.2	0.1	0.2
20-24	12.7	7.2	6.8	3.5	3.6
25-29	61.4	56.0	54.5	42.4	35.3
30-34	93.6	92.5	91.8	85.1	79.6
35-39	97.3	97.3	96.7	94.2	91.1
40-44	97.5	97.5	97.3	95.7	93.8
45-49	96.6	97.0	96.9	95.8	94.5
	여 자				
15-19	2.4	2.8	1.7	0.5	0.8
20-24	49.9	42.3	33.7	19.5	16.7
25-29	91.8	88.4	84.9	77.3	69.9
30-34	92.4	94.6	94.3	92.4	91.4
35-39	89.1	92.0	93.4	92.8	92.2
40-44	83.7	84.8	90.1	90.3	90.1
45-49	76.6	76.8	83.1	86.1	86.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수준을 비롯한 사회 제반 현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 유배우율은 크게 변화하였다. 남자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20대 연령층의 유배우율은 감소하였고, 35세 이후의 유배우율이 증가하였다.

유배우율의 향후 추이는 결혼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중 3명(73.5%)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42%)이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13.5%)보다 3배 많다. 이에 비해 동일 연령층 남자의 경우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22.0%)이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27.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가 차이를 보이고, 20대 남자보다는 20대 여자가 결혼을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실제 행위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향후 젊은층의 유배우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혼인연령

혼인은 자녀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을 규제하는 수단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살에 혼인

을 하느냐는 사회적으로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결혼시기는 사회경제 구조와 관습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조혼 풍조가 있었지만, 산업화는 결혼관과 결혼 관습에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날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남자는 군복무 의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만혼은 다시 출산이나 가족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족이 형성되어 부부 모두가 사망하기까지의 가족생활 주기는 혼인연령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단계별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혼인연령은 초혼인가 재혼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955년만해도 남자의 초혼 연령은 24.5세, 여자는 20.4세로 낮았으며, 남녀의 초혼연령 차이는 4.1세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학교교육을 많이 받음에 따라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혼인신고 자료에 의한 평균 초혼연령은 1970년 남자 26.7세, 여자 22.6세에서 1985년 남자 27.0, 여자 24.1세로, 1999년에는 남자는 29.1세, 여자는 26.3세로 높아졌다. 따라서 남녀간 초혼연령의 차이도 1970년 4.1세에서 1985년 2.9세, 1999년은 2.8세

로 줄어들었다. 평균 초혼연령이 지난 30년 동안 남자는 2.4세, 여자는 3.7세 높아져 여자의 혼인연령이 더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기회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남녀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은 물론 남녀의 결합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초혼부부 중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초혼이 1990년 17.9%에서 1999년에는

22.5%로 계속 늘어났다. 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등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평균 재혼연령 역시 1990년 남자 38.9세, 여자 34.0세에서 1999년 남자 42.2세, 여자 37.5세로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재혼연령의 차이는 1990년 4.9세에서 1999년 4.7세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혼

호적신고된 이혼건수는 1970년 1만2천건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 4만6천건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11만8천건으로 2.6배로 늘어났다. 이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가리키는 조이혼율이 널리 쓰인다.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서 1990년 1.1, 1999년에는

〈표 3-11〉 주요 이혼력 지표

	이혼건수 (천 건)	조 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자	여자	남·여
1970	11.6	0.4	35.8	31.0	4.8
1975	16.2	0.5	36.3	31.4	4.9
1980	23.0	0.6	36.5	31.9	4.6
1985	38.4	0.9	36.1	31.8	4.3
1990	45.7	1.1	36.8	32.7	4.1
1995	68.3	1.5	38.4	34.6	3.8
1996	79.9	1.7	38.6	34.8	3.8
1997	91.2	2.0	39.1	35.3	3.8
1998	116.7	2.5	39.8	36.1	3.7
1999	118.0	2.5	40.0	36.4	3.6

주 : 1990년 이후는 이혼신고년도 기준이고, 그 이전은 이혼발생년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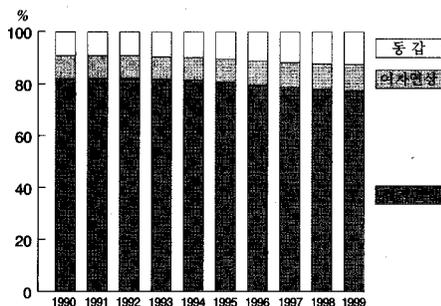
〈표 3-10〉 혼인연령

(단위 : 세)

	평균초혼연령			평균재혼연령		
	남자	여자	남·여	남자	여자	남·여
1970	26.7	22.6	4.1	39.0	33.7	5.3
1975	26.8	22.8	4.0	39.9	34.7	5.2
1980	26.4	23.2	3.2	38.9	33.9	5.0
1985	27.0	24.1	2.9	39.5	34.7	4.8
1990	27.8	24.8	3.0	38.9	34.0	4.9
1995	28.4	25.4	3.0	40.4	35.6	4.8
1996	28.4	25.5	2.9	40.2	35.5	4.7
1997	28.6	25.7	2.9	40.5	36.0	4.5
1998	28.9	26.1	2.8	41.6	36.9	4.7
1999	29.1	26.3	2.8	42.2	37.5	4.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호

[그림 3-7] 초혼부부의 혼인연령



〈표 3-12〉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동거기간 구성비(%)					평균동거 기간(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1970	40.9	28.5	15.8	7.2	7.6	8.3
1975	39.2	31.8	15.4	7.2	6.4	8.1
1980	42.4	28.2	16.8	7.2	5.4	7.9
1985	46.3	28.2	14.2	6.9	4.7	7.6
1990	40.3	29.4	18.3	8.0	3.9	7.7
1995	33.7	25.6	21.0	13.2	6.5	9.1
1996	33.3	25.1	20.7	13.8	7.1	9.2
1997	32.5	24.8	20.0	15.1	7.7	9.4
1998	31.5	24.0	19.5	15.6	9.3	9.8
1999	31.4	23.5	19.2	15.7	10.2	9.9

주 : 1990년이후는 이혼신고년도 기준이고, 그 이전은 이혼발생년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1999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2.5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수준은 호주의 2.9(1996년)보다는 낮고, 캐나다의 2.4(1996년)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혼신고 자료에 의한 평균 이혼연령은 1970년 남자 35.8세, 여자 31.0세에서, 1999년에는 남자 40.0세, 여자 36.4세로 높아졌다. 남녀 이혼연령 차이는 1970년 4.8세, 1999년에는 3.6세로 감소하는 추세다. 남녀의 이혼연령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남녀의 혼인연령 차가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중년 이후 여성의 이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중년층 이후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평균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70년 이래 지금까지 5년 미만 동거 후 이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1970년 40.9%에서 1990년

40.3%, 1999년은 31.4%로 감소하였다. 5~10년 동거 후 이혼하는 부부도 1970년 28.5%, 1990년 29.4%에서 1999년 23.5%로 줄어들었다. 반면 10년 이상 동거 후 이혼하는 부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5~20년 미만 동거 후 이혼하는 사람은 1970년 7.2%에서 1999년 15.7%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20년 이상 동거 후 이혼하는 사람도 1990년 3.9%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10.2%를 기록했다.

모든 이혼 부부들의 평균동거기간은 1970년 8.3년에서 1990년 7.7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9.9년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하기까지 부부가 동거한 평균 기간 9.9년은 호주 11.0년(1996년), 뉴질랜드 12.9년(1996년), 싱가포르 11.9년(1997년)과 비교하여 짧은 편이다.

제4절 인구이동

총이동인구

사람들의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인구이동으로 파악한다. 이는 이동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인 국내이동과 영토를 벗어나서 이동하는 국제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이동은 어떤 지역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동일 읍·면·동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읍·면·동은 다르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시·군·구는 다르나 동일 시·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는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에서는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출생지 등이 조사 당시 현재거주지의 시·군·구와 다른 경우를 이동자로 파악하고 있다. 즉,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을 이동자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서는 국민들이 주민등록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하는 전입신고 중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을 이동자로 집계하고 있다.

인구총조사 결과에서 5년 전에 비하여 거주지의 시·군·구가 달라진 이동자를 보면 1970년 439만4천명에서 1995년 1,018만3천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 중 시·도를 달리하는 이동의 비중은 1965~1970년 55.9%에서 다소 감소하여 1975~1980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다시 늘어나 1985년부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동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백분비인 이동율을 볼 때 총 이동율은 1965~1970년 15.8%에서 1990~1995년 24.1%로 증가하였다.

총 이동인구를 도시, 농촌으로 나누어 이동의 방향을 보면, 1960년대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도시

〈표 3-13〉 이동인구(5년전 거주지 기준)

(단위 : 천명, %)

기 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기타
1965~70	4,394(100.0)	43.7	55.9	0.5
1970~75	5,209(100.0)	45.3	54.5	0.2
1975~80	7,568(100.0)	50.7	49.2	0.2
1980~85	8,402(100.0)	43.5	56.2	0.3
1985~90	9,871(100.0)	44.4	55.1	0.6
1990~95	10,183(100.0)	43.2	55.9	0.9

주 : 시·군·구를 달리하는 이동자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의 확대로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65~1970년의 인구 이동 방향을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의 41.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1.6%로 줄었다. 이에 비해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1965~1970년 전

〈표 3-14〉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단위 : 천명, %)

기 간	계	농촌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농촌	농촌 →농촌
1965~70	4,395 (100)	41.6	34.9	8.8	14.8
1970~75	5,151 (100)	34.1	44.2	10.8	10.9
1975~80	7,618 (100)	33.1	50.6	8.9	7.3
1980~85	8,366 (100)	29.0	54.8	10.6	5.6
1985~90	9,816 (100)	23.7	65.0	7.6	3.7
1990~95	10,087 (100)	11.6	76.5	9.7	2.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체 이동의 34.9%를 차지하였다가 1990~1995년에는 76.5%로 크게 늘었다.

시도간 인구이동

1960년대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도시 및 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의 국내 이동이 본격화했다. 197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 및 인구분산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도시화 및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됐다. 시도별로 보면 1970년대에 대도시와 경기도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를, 나머지 지역은 전출초과를 경험했다. 1980년대에 서울과 부산의 순이동량(전입-전출)은 다소 감소하면서, 서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출초과를 경험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경기도는 여전히 전입초과 현상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도(道)지역은 전출초과가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최근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로 살펴보자. 1990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순이동 상황을 보면 서울 및 부산은 계속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전출초과를 보여 왔고, 대구는 1995년부터, 울산은 1998년부터 지속적인 전출초과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인천·광주(1995년제외)·대전은 지속적인 전입초과를 보여왔다.

9개 도(道)지역에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속적인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제

주는 1998년에 이어 약간의 전입초과가 발생하였다. 1995년부터 전입초과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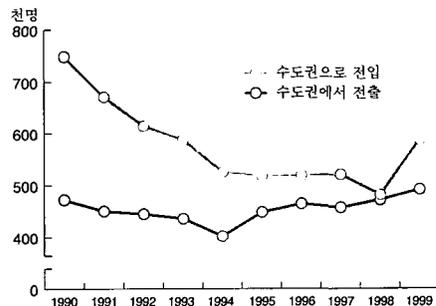
<표 3-15> 시도별 순이동

(단위 : 천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서울	-91	-322	-211	-178	-134	-81
부산	-36	-55	-47	-44	-41	-33
대구	-1	-3	-22	-15	-12	-7
인천	117	19	12	27	21	2
광주	28	-4	0	7	3	3
대전	33	18	15	10	12	10
울산	-	-	-	4	-6	-2
경기	251	373	253	214	122	174
강원	-48	-9	-8	-1	9	-4
충북	-18	4	6	5	6	-1
충남	-54	2	12	14	9	-3
전북	-53	-10	-14	-15	-2	-10
전남	-100	-19	-20	-22	1	-24
경북	-50	-5	6	-6	1	-13
경남	18	14	20	1	9	-9
제주	3	-1	-1	-1	3	0
수도권	276	69	54	62	9	95
7대 도시권	50	-348	-253	-189	-157	-109

주 : 1) 주민등록에 의한 자료임
 2) 순이동 = 전입자 - 전출자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각 호

[그림 3-8] 수도권 전출·입



던 충북·충남지역과 1990년 이후 꾸준히 전입초과 지역인 경남이 1999년 전출초과로 돌아섰고, 전북은 1990년 이후 계속 타 시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전출초과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이동

1990년 이후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수도권 전입초과 추세가 1990년 27만6천명에서 1998년 9천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둔화되다가, 1999년에 9만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IMF관리체제에서 1998년에 전입이 줄었으나, 1999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전입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그전 거주지(전출지)를 보면 1990~1995년에는 전남이, 1996~1998년에는 충남이 가장 많았다. 1999년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남이 7만5천명(12.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남 73천명(12.4%), 강원 65천명(11.1%), 전북 62천명(10.7%) 순이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1990년(47만2천명)에서 1994년(40만1천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은 49만명이 전출하였다.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의 전입지는 1990년 이후 충남, 전남북, 강원 지역이 가

장 많다. 1999년 수도권 전출자의 전입지는 충남이 7만명(14.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 6만1천명(12.4%), 전남 5만8천명(11.9%), 전북 5만1천명(10.4%) 순이다. 충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1990년 이후 수도권 전출자가 가장 많이 전입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사람들의 수도권내의 전입지를 살펴보자. 바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1990년 42만8천명(57.2%)에서 1999년 28만명(47.9%)으로 감소하였다.

〈표 3-16〉 수도권 전출입자의 이동방향

(단위 : %)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의 전출지			수도권에서 전출한 사람의 전입지		
	1990	1995	1999	1990	1995	199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산	7.7	9.1	8.8	7.9	7.2	7.0
대구	4.3	5.1	5.2	4.4	4.9	4.5
광주	4.5	5.3	5.4	5.6	5.5	5.3
대전	3.7	5.8	6.6	6.8	8.3	7.7
울산	-	-	2.2	-	-	2.0
강원	11.5	11.3	11.1	10.8	11.8	12.4
충북	8.1	7.6	7.8	9.2	9.4	8.9
충남	13.5	12.5	12.4	13.1	14.4	14.3
전북	12.8	11.2	10.7	10.9	10.2	10.4
전남	15.9	12.8	12.8	12.0	10.0	11.9
경북	8.9	8.4	8.1	8.0	7.7	7.3
경남	7.8	9.0	7.0	9.0	8.5	5.9
제주	1.3	1.9	2.2	2.1	2.0	2.4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각 호

〈표 3-17〉 수도권 전입자의 전입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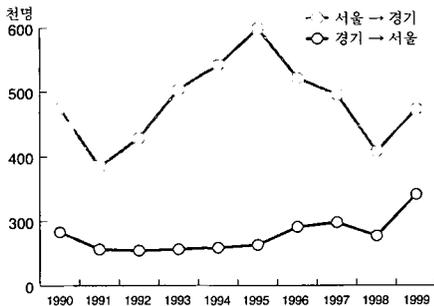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수도권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57.2	49.8	49.3	48.2	48.2	47.9
인천	9.9	9.8	9.5	9.8	9.6	9.4
경기	32.9	40.4	41.2	42.0	42.2	42.7

주 : 수도권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자임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각 호

다. 이에 비해 경기도에로의 전입은 1999년 25만명으로 전체 수도권 전입자 중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1990년 32.7%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천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수도권 전입자 중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중 서울-경기간의 인구이동을 보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전출자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전입자보다 더 많은 전출초과 현상을 계속 보여왔다. 서울의 전출초과 규모는 1990년 19만1천명에서 1995년 33만6천명을 기록했는데, 그 뒤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 13만1천명으로 줄었다.

[그림 3-9] 서울·경기간 인구이동



서울에서 경기로 전출한 사람들의 전입지는 주로 경기도의 도시지역이다. 5개 신도시(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로의 전출은 1996년부터 줄어오다가 1999년에는 성남, 부천, 안양지역 전입자가 1998년보다 증가하였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시는 1996년 이후 서울로부터 전입초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서울 전출자의 경기도내 주요 전입지는 고양시 (6만8천명), 성남시 (5만2천명), 남양주시 (3만5천명) 순이며, 1998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1964년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1년),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1977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4년) 등을 통하여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억제 및 이전 유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억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주요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전보다 정도는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대도시의 과밀문제 즉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농촌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 낙후된 지역의 집중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제 4 장 가구·가족

가구와 가족은 다르다. 가구는 단순한 거주 단위인데 비해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개념이다. 가족이 반드시 가구가 되고, 가구가 반드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은 가구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므로, 가구 자료를 통해 가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가족에 관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

가족의 변화 모습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가구규모, 가구구성, 핵가족, 가구주의 특성 등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구의 변화를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제1절 가구 규모

가구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본다. 가구 중에서 가구원이 모두 혈연, 결혼, 입양으로 맺어져 있을 때, 친족가구(family household) 즉, 가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의 분류 및 정의가 센서스마다 다소 다르지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

하면서 일반가구(ordinary household)는 혈연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에 비해 집단 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숙사, 고아원 등에서 생활하는 집단시설 가구와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모여서 생활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혈연가구라는 용어 대신에 친족가구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집단가구수는 1960~1975년에 다소 증가했지만, 197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1995년 현재 1만6천여 가구로 총가구의 0.12%를 차지한다. 외국인가구는 기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1995년 현재 1만7천여 가구로 총가구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 불과하다.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여기에서는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므로 한국인의 일반가구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징은 출산력 저하, 결혼의 연기 또는 회피,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의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가구 분화 현상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는 가구수 증가

<표 4-1> 일반가구수와 평균 가구원수

(단위 : 천가구, 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일반가구수	4,361	5,576	7,969	11,355	12,958
평균가구원수	5.56	5.24	4.55	3.71	3.34
연평균가구증가율	-	3.35	3.37	3.70	2.82
연평균인구성장률	-	1.82	1.37	1.02	0.95

주 : 연평균 가구증가율과 인구성장률은 직전 5년간 연평균 변화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장래인구추계』, 199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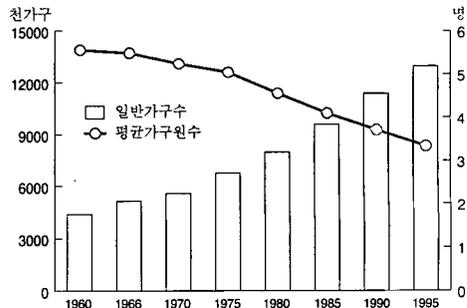
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수는 1960년 436만 가구에서 1995년 1,296만 가구로 약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5.56명에서 3.34명으로 적어졌고, 가구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거주자 비중이 커지면서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현재 일반가구수는 1,295만3천가구로 1990년보다 160만3천가구(14.1%)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洞)부가 1,003만2천가구로 1990년보다 157만가구(18.5%) 증가한데 비해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부에서는 292만6천가구로 1990년에 비해 3만4천가구(1.2%) 늘어남으로써 도시지역에서 가구의 증가 및 분화가 두드러졌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규모별 가구분포를 보면 6인 이상

[그림 4-1] 일반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



의 대가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2%에서 1995년 12.7%로 급증한데 비해 6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40.7%에서 5.5%로 급감했다. 1975년까지만 해도 5인 가구가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규모였으나, 1980년부터는 4인 가구가 가장 많다. 총 가구 중 4인 가구의 비율이 1975년 16.1%에서 1995년 31.7%로 계속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5인 가구는 18.3%에서 12.9%로 계속 감소하였다.

1995년 현재 4인 가구가 31.7%로 가장 많고, 3인 가구 20.3%, 2인 가구 16.9%, 5인 가구 12.9%, 1인 가구 12.7% 순이다. 8가구 중 한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고, 2가구 중 1가구는 3인 이하가 사는 집이며, 18가구 중 1가구만이 6인 이상 함께 사는 가구에 불과해 가구원 규모가 작아지는 소가족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도시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때,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6

인 이상 가구는 줄곧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인 동(洞)부에서는 1975년까지만 해도 5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1980년부터는 4인가구가 가장 많다. 농촌지역인 읍면부에서는 1980년까지 5인 가구가 주류를 이뤘다가 1985년 이후에는 4인가구가 가장 많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도시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 농촌이 뒤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도시지역(동부)에서는 1975년 4.5%에서 1995년 11.8%로 증가한데 비해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같은 기간 3.9%에서 15.6%로 증가하여 도시보다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인 가구 역시 동(洞)부에서는 9.1%에서 14.5%로 증가했는데 읍면부에서는 7.6%에서 24.9%로 증가함으로써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도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빠른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소

가구화 또는 소가족화 현상은 출산력 저하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 자녀의 취업 및 취학을 위한 분가에 기인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1975년 5.0명에서 1995년 3.3명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동(洞)부보다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부에서 더 빠른 속도로 줄었다. 1975년 동부 4.8명, 읍면부 5.3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95년 각각 3.4명, 3.1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의 평균 가구원수가 빨리 줄어든 것은 출산력이 낮아져 자녀를 적게 낳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농촌가구의 가구원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젊은층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에서의 젊은층 1인 가구와 농촌에서의 노인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도 되었다.

우리나라의 1995년 평균 가구원수 3.3명은 싱가포르 4.0명(1997년)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캐나다 2.6명(1996년), 호주 2.6명(1996년)보다는 많다. 평균 가구원수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 천가구, %)

	전 국		동 부		읍면부	
	1975	1995	1975	1995	1975	1995
일반	6,648	12,958	3,331	10,032	3,317	2,926
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1인	4.2	12.7	4.5	11.8	3.9	15.6
2인	3.8	16.9	9.1	14.5	7.6	24.9
3인	12.3	20.3	13.5	20.8	11.0	18.7
4인	16.1	31.7	17.9	34.5	14.4	22.3
5인	18.3	12.9	19.5	13.2	17.1	11.6
6인이상	40.7	5.5	35.5	5.2	45.8	6.9
평균가구원수	5.0	3.3	4.8	3.4	5.3	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제2절 가구구성

세대구성

가구의 세대 구성은 일반 가구에 대하여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서 구분된다. 1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동일세

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이고, 2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3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이다.

1세대가구는 주로 『부부』이며, 2세대가구는 『부부와 자녀』, 『편부(모)와 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편부모』, 『부부, 자녀, 부부의 형제자녀』, 『부부와 손자녀』 등이다. 3세대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등이다.

1960년 이후 일반 가구의 세대수별 구성을 보자. 1세대 가구는 1960년 22만6천 가구로 일반가구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약 7배가 증가한 164만여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2.7%를 차지하였다. 2세대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64%에서 1970년 70%까지 높아졌다. 1970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해 1995년 63.3%를 기록했다. 과거나 현재나 전국적으로 2세대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1960년 28.5%에서 계속 줄어들어 1995년 10.0%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친족(혈연)가구는 1985년 1.7%에서 1995년 1.4%로 감소했다. 이와

〈표 4-3〉 일반가구의 세대구성

(단위 : 천가구, %)

	일 반 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 상	비혈연	1 인 가 구
1960	4,371	5.2	64.0	28.5	-	2.3
1966	4,901	5.7	67.3	26.7	0.8	2.4
1970	5,576	6.8	70.0	23.2	-	4.8 ^{b)}
1975	6,648	6.7	68.9	20.1	1.5	4.2
1980	7,969	8.3	68.5	17.0	1.5	4.8
1985	9,571	9.6	67.0	14.8	1.7	6.9
1990	11,355	10.7	66.3	12.5	1.5	9.0
1995	12,958	12.7	63.3	10.0	1.4	12.7

주 : 1) 비혈연가구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는 달리 1인 가구는 1960년 10만가구 (2.3%)에서 1995년 164만2천가구 (12.7%)로 거의 16배나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1990년 이후의 세대수별 가구 변화 추이를 보자. 1990~1995년 사이 3세대 이상 가구수는 8.9% 감소하였지만, 나머지 형태의 가구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1인 가구는 60.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1세대 가구가 34.4%, 2세대가구가 8.9% 증가했다. 이는 가구의 구성이 갈수록 소규모화하고 단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5년의 세대수별 가구 구성을 보면 전국에 일반가구 중 2세대 가구가 63.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가 각각 12.7%, 3세대 이상 가구 10.0%, 비친족 가구 1.4% 순이다. 1세대 가구는 주로 부부가족으로 이뤄지며 3세대이상 가구는

결혼한 자녀가족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대부분인데 전체 가구 중 10%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동부)의 경우 2세대 가구의 비율이 67.0%로 가장 높고, 1인 가구(11.8%), 1세대 가구(10.6%), 3세대이상 가구(9.2%), 비친족 가구(1.5%)의 순을 보였다.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50.6%로 도시(동부)에 비해 낮은데 비해 1세대 가구(19.8%), 1인 가구(15.6%) 및 3세대 이상 가구(12.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가구구성의 차이는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노인 부부끼리 또는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960년 10만가구에서 1995년 164만2천가구로 35년 동안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에서 12.7%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 12.7%(1995년)은 싱가포르 6.2%(1997년)보다는 높고, 프랑스 30%(1997년), 영국 27%(1995년), 일본 25.5%(1995년), 캐나다 24.2%(1996년), 호주 22.1%(1996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1990~1995년 사이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62만가구가 증가하여, 5년 동안 총가구수의 증가량에서 1인 가구의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 기

〈표 4-4〉 1인 가구의 특성별 구성(1995)

(단위 : 천가구, %)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체		1,642 (100)	1,186 (100)	457 (100)
성별	남자	43.3	48.5	29.7
	여자	56.7	51.5	70.3
연령	35세미만	42.1	52.8	13.9
	35-59세	28.8	29.0	27.9
	60세이상	29.2	18.2	58.2
혼인 상태	미혼	46.2	58.0	15.7
	유배우	12.1	11.8	12.9
	사별	35.5	22.9	68.2
	이혼	6.2	7.3	3.2
교육 수준	초등이하	37.3	23.8	72.6
	중고등	42.6	51.5	19.7
	초대전문	4.6	5.7	1.6
	대학이상	15.5	19.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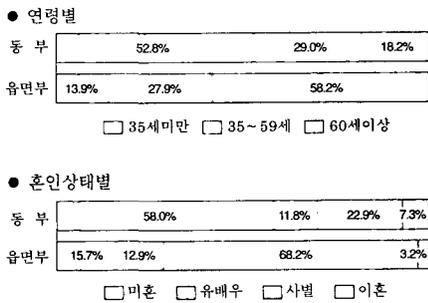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간에 도시지역에서의 1인 가구의 증가율이 63.8%, 농촌지역에서는 53.4%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연령층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74.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상태가 85.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 졸업자가 159.2%나 되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5년 1인 가구 중 남자는 71만가구(43.4%), 여자는 93만가구(56.7%)로 혼자서 사는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보다 22만명이나 더 많다. 지역별로는 72.2%인 118만6천가구가 도시지역(동부)에 위치해 있

다. 1인 가구를 특성별로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지역(동부)에서는 남자가 48.5%로 남녀가 비슷한데 농촌지역(읍면부)에는 여자가 70.3%로 주를 이룬다. 연령별로 도시지역에서는 35세미만이 52.0%로 가장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 58.2%로 노인이 가장 많다. 혼인상태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미혼자가 58.0%로 가장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사별자가 68.2%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도시지역에서 중학교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이 76.3%인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72.6%로 가장 많다.

[그림 4-2] 1인 가구의 특성별 구성(1995)



이는 도시의 1인 가구에는 비교적 젊은, 미혼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많고, 농촌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별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많음을 뜻한다.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간 1인 가구 증가 이유가 크게 다름을 시사한다. 농촌의 경우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노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남은 사람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에서는 젊은이가 교육, 이혼, 직장이동 등으로 1인 가구를 새로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절 가족형태별 가구

핵가족

우리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직계가족 형태가 제도화되어 있다. 장남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차남 이하의 자녀들은 핵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옮겨다니기 보다는 자녀들만 빠져나가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부모들은 농촌에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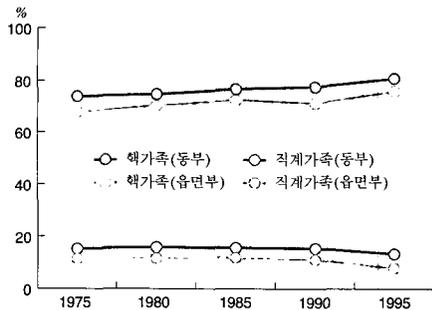
핵가족 · 직계가족 · 확대가족 중에서도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를 가족 핵 (family nucleus)이라 하며, 한 가구에 하나의 가족 핵만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핵가족 (nuclear family)이라고 한다.

『부부와 양(편)친』으로 구성된 가족과, 『부부와 양(편)친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직계가족이라고 일컫는다. 핵가족이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성원이나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경우에 기타 확대가족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을 포함한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고, 핵가족이 점차 늘고 있다. 1995년 친족가족 중 핵가족의 비중은 79.8%이다. 우리나라의 핵가족 비율은 일본 79.3% (1995년)과 비슷하고, 싱가포르 84.5% (1997년)보다는 적은 편이다.

1970년대 이후 핵가족 변화를 살펴 보자. 친족가구 중 핵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은 1975년 70.5%에서 1995년 79.8%로 증가하였다. 도시지역(동부)에서는 1975년 73.8%에서 1995년 80.9%로,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같은 기간 67.6%에서 75.9%로 각각 핵가족 비율이 높아졌다. 1990~1995년 사이 최근 변화를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19.4%, 농촌지역에서는 1%가 증가함으로써 도시에서 핵가족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4-3] 핵가족·직계가족 구성비



한편 친족가구 중 직계가족 비율은 1975년 14.7%에서 1995년 9.1%로 감소하였다. 도시(동부)에서는 11.4%에서 7.8%로, 농촌(읍면부)에서는 15.2%에서 13.3%로 줄어들었다. 1990~1995년 사이의 직

<표 4-5> 가족형태별 친족가구 구성

(단위 : %)

	전 국		동 부		읍 면 부	
	1975	1995	1975	1995	1975	1995
친족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핵가족	5.0	12.6	5.2	9.6	4.8	23.1
부부와 미혼자녀	55.6	58.6	57.7	62.4	53.5	45.2
편부(모)와 미혼자녀	10.1	8.6	10.9	8.9	9.3	7.6
직계가족	14.7	9.1	11.4	7.8	15.2	13.3
기타확대가족	17.9	11.2	18.8	11.3	17.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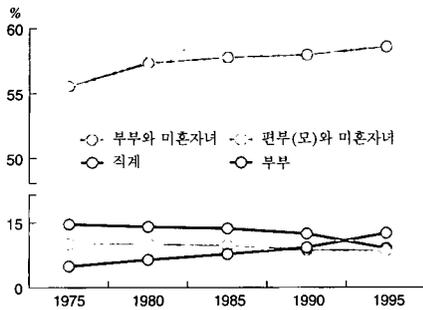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계가족수의 변화를 보면 도시(동부)에서는 5.3% 증가한데 비해 농촌(읍면부)에서는 18.4%가 감소하였다. 직계가족이 농촌지역(읍면부)에서 빠르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직계가족 비율은 도시 7.8%, 농촌 13.3%를 차지하였다. 이는 곧 농촌지역에서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형태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가족을 가족형태별로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보자. 1975년 이후 줄곧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이 가장 많다. 친족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55.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58.6%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동부)에서 같은 기간 57.7%에서 62.4%로 늘어난데 비해 농촌지역(읍면부)

에서는 53.5%에서 45.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절대수 및 전체 친족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다.

[그림 4-4] 친족가구의 구성



친족가구 중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1975년 10.1%에서 1995년 8.6%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도시(동부)에서는 10.9%에서 8.9%로 감소하였고, 농촌(읍면부)에서도 9.3%에서 7.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구에 부부가 다 같이 살든, 편부모만 있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도시지역(동부)에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 즉, 「부부와 자녀」, 「편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앞으로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가족 중 부부가족을 살펴보자. 1995년 현재 친족가구 8가구 중 1가구는 부부가구이다. 즉 1995년 친족가구(1113만3천) 중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중은 12.6%로 1975년 5.0%에서 계속 높아진 것이다. 도시지역(동부)에서는 1975년 5.2%에서

1995년 9.6%로 약간 높아진데 비해 같은 기간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4.8%에서 23.1%로 크게 증가했다. 즉 농촌지역에서 부부가족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친족가구 중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12.6%)은 일본 23.4%(1995년), 호주 33.2%(1996년), 뉴질랜드 37.3%(1996년), 영국 28%(1995년)보다 적은 편이다.

[그림 4-5] 가족형태별 가구구성(1995)

(단위: %)

동부	11.3	7.8	8.9	62.4	9.6
읍면부	10.8	13.3	7.6	45.2	23.1

- 부부
- 편부(모)와 미혼자녀
- 부부미혼자녀
- 직계
- 기타

제4절 가구주

여성 가구주

가구주란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전통과 성별 역할이 뚜렷한 관습과 규범 때문에 부부 가운데 남자가 가구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이 향상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의 특성은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사회변화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기

도 한다.

먼저 가주주의 성별 분포를 보자. 남녀 모두를 합한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975년 12.8%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16.6%를 차지하였다. 즉 1995년에 6가구 중 한 가구의 가구주가 여성인 셈이다. 여성 가구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으므로 여성 가구주끼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기보다는 전체 가구주 중 남녀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연령별 여성 가구주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4-6〉 성 및 연령계층별 가구주의 비율

(단위 : %)

	1975		1985		199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87.2	12.8	84.3	15.7	83.3	16.6
15~24	3.2	1.3	2.9	2.3	1.9	1.7
25~29	9.0	0.7	10.5	1.1	7.2	1.1
30~34	14.0	0.8	13.9	1	13.3	1.0
35~39	15.3	1.3	12.6	1.2	14.6	1.4
40~44	12.5	1.7	11	1.4	11.4	1.4
45~49	9.4	1.9	10.4	1.7	9.3	1.5
50~54	8.4	1.7	8.2	1.8	7.7	1.6
55~59	6.4	1.3	5.6	1.7	6.9	1.7
60+	9.0	2.1	9.2	3.5	11.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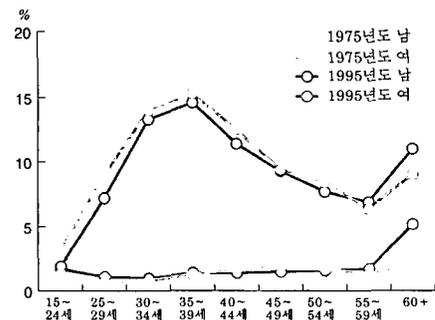
주 : 남녀 전체 가구원중 가구주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전체 가구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30대 남자이다. 1975년에는 29%, 1985년 27%, 1995년에는 28%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40대 남자로 1975년,

1985년, 1995년 모두 약 22%를 차지한다. 여자의 경우 가주주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인데 전체가구 중 비중은 1975년 2.1%, 1985년 3.5%, 1995년 5.2%로 전체 가구주 중 차지하는 위치는 아직도 적은 편이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남녀 모두 높아져 왔고,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빠른 증가를 보였다. 성별로 볼 때 60세 이상 남자는 1975년 전체가구주의 9%에서 1995년 11%로 소폭 증가한데 비해 같은 연령층 여성은 1975년 2.1%에서 1995년 5.2%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수명이 더 많이 연장됨에 따라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사는 여성 노인 가구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4-6]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남녀 가구주 사이에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보자. 남자는 15세에서 59세 사이에서 30대를 기준으로 봉우리가 형성되며 그 앞의 연령층에서 가파르고, 뒤의 연령층은 완만한 산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남자

는 혼인과 함께 가구주가 되고, 나이가 들어 사망함으로써 가구주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15~24세에서 가구주가 많다가 감소했다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다소 늘어나고, 고연령층에서 많아지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20대 후반을 전후해 굴곡이 형성된다. 20대 전반기는 여자의 지역이동이 가장 심한 시기이고, 20대 후반은 여자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혼·미혼 가구주

이혼 상태의 남자 가구주는 1980년까지도 0.3~0.4%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1.2%로 급증하였다. 여자 이혼가구주 비중도 1985년 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7.1%를 기록했다. 남자보다 여자 이혼가구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여자는 이혼해도 남자보다 재혼을 덜 하기 때문이다. 즉 여자는 이혼한 뒤 단독으로 또는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여 가구주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자 가구주가 사별인 경우는 1960년 3%에서 점차 낮아져 1995년에는 1.9%로 나타났다. 사별한 여자 가구주는 1960년 64.8%에서 다소 굴곡을 보이며 낮아지다가 약간 높아져 1995년에는 56.1%를 기록했다. 남자의 경우 사별 가구주 구성비가 여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자는 대부분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또 사별을 하더라도 사별한 여자보다 재혼을 더 많이 한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비중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1960년 27.9%에서 1995년에 15.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남자 유배우 가구주 비율은 1960년 92.5%에서 1995년 89.9%로 약간 낮아졌다. 남녀 모두 유배우 가구주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미혼 가구주의 증가가 일차적인 원인이다. 남자 미혼가구주 구성비는 1960년 4.1%에서 1995년에 7%로 1.7배 증가하였다. 여자는 같은 기간 2.5%에서 21.1%로 무려 8.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 가구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4-7〉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단위 : %)

	남 자				여 자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60	92.5	3.0	0.4	4.1	27.9	64.8	4.8	2.5
1966	93.7	2.4	0.3	3.6	33.6	59.9	3.9	2.6
1970	94.0	1.8	0.3	3.9	27.3	61.6	5.6	5.5
1975	93.1	1.9	0.3	4.7	24.5	59.4	4.3	11.8
1980	92.9	2.0	0.4	4.7	22.3	58.1	3.9	15.7
1985	92.3	1.6	0.5	5.6	22.7	52.3	4.3	20.7
1990	91.2	2.0	0.8	6.0	17.7	56.3	5.6	20.4
1995	89.9	1.9	1.2	7.0	15.7	56.1	7.1	21.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남자가 가구주를 맡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현상이며, 집을 떠난 젊은 미혼여성, 이혼한 여성, 남편과 사별한 노인 여성의 경우 등이 가구주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미혼 및 이혼 가구는 증가하고 유배우가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출산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거의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전후 베이비붐 세대, 1970~1980년대의 급격한 출산력 감소시기 등의 영향이 반영돼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유배우 가구주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띠 것이다.

노인가구주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주의 변화를 보자. 전체 가구주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1.1%에서 1995년 16.3%(210만9천가구)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1995년 전체 남자가구주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2%이고, 여자의 비율은 31.6%이다.

1995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11.7%(48만명)로 남자 노인의 4.3%, 여자 노인의 10.6%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동부)에서는 남자 노인 3.6%, 여자 노인 12.3%가 혼자 살며, 농촌지역

(읍면부)에서는 남자 노인 5.3%, 여자 노인 22.6%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 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노인인구 중 노인부부만 사는 비율은 남자 노인의 36.0%, 여자 노인의 17.0%이다. 지역별로 볼 때 도시지역(동부)에서는 남자노인의 27.5%, 여자노인의 12.3%가 배우자와 둘이서 지내며,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남자 노인의 47.5%, 여자 노인의 23.7%가 배우자와 둘이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혼자서 살거나 부

〈표 4-8〉 60세 이상 인구의 거주형태(1995)

(단위 : %)

	부부가구주 노인인구비율			1인가구주 노인인구비율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60+)	36.0	27.5	47.5	4.3	3.6	5.3
60~64	31.0	22.8	43.9	3.4	3.0	4.1
65~69	40.4	32.0	51.8	4.3	3.7	5.1
70~74	42.3	33.4	52.9	5.2	4.4	6.1
75~79	38.7	30.0	48.2	5.7	4.6	6.9
80~84	30.5	23.3	38.0	5.8	4.6	7.1
85+	20.8	16.1	25.7	5.5	4.5	6.5
여자(60+)	17.0	12.3	23.7	16.6	12.3	22.6
60~64	25.2	18.8	34.9	13.2	10.7	17.0
65~69	20.3	14.6	28.5	18.9	14.5	25.3
70~74	13.0	8.8	19.3	20.7	14.8	29.2
75~79	7.1	4.5	10.8	18.5	12.4	27.1
80~84	3.1	1.9	4.7	14.1	9.2	20.7
85+	0.8	0.5	1.2	8.8	5.8	12.4

자료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부만 사는 경우는 남녀 모두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노인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특성을 보자.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유배우)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자는 사별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부부가 모두 살아있을 때에는 통상 남자가 가구주였다가 남편과 사별한 뒤 여자가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5년 60세 이상 남자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배우 91.8%, 사별 7.6%, 이혼 0.5%, 미혼 0.1%의 순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여자 가구주는 사별 94.3%, 유배우 4.1%, 이혼 1.3%, 미혼 0.4%의 순이다. 혼인상태별 구성이 남녀 모두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간 큰 차이가 없다. 즉, 도시, 농촌 상관없이 남자노인은 유배우가 가장 많고, 여자는 사별이 가장 많다.

1975~199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유배우 비중은 1975년 90.8%에서 1995년 91.8%로 늘어났다. 남자가 부인과 사별한 경우는 1975년 9.0%에서 1995년 7.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혼은 0.2%에서 0.5%로, 미혼은 0.0%에서 0.1%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 모습은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 노인의 경우 유배우는 1975년 9.4%에서 1995년 4.1%로 감소했고 남편과 사별의 경우는 1975년 89.9%에서 1995

년 94.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혼은 0.6%에서 1.3%로, 미혼은 0.1%에서 0.4%로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에 상관없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5~1995년 사이 유배우 남자 노인과 사별한 여자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살아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가구주가 되고, 여자가 홀로 될 경우에는 여자노인이 가구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9> 성·혼인상태별 노인가구주 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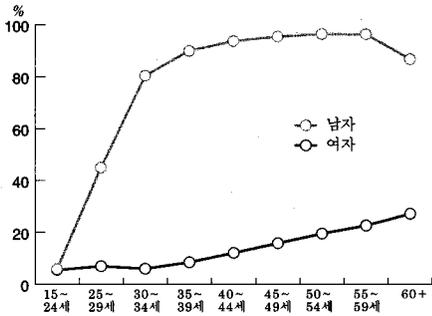
	전 국		동 부		읍 면 부	
	1975	1995	1975	1995	1975	1995
남자노인	100	100	100	100	100	100
유 배 우	90.8	91.8	89.8	91.9	91.2	91.8
사 별	9.0	7.6	10.0	7.4	8.6	7.6
이 혼	0.2	0.5	0.2	0.6	0.1	0.5
미 혼	0.0	0.1	0.1	0.1	0.0	0.1
여자노인	100	100	100	100	100	100
유 배 우	9.4	4.1	11.0	5.3	7.9	4.1
사 별	89.9	94.3	88.2	92.2	91.4	94.3
이 혼	0.6	1.3	0.7	1.9	0.5	1.3
미 혼	0.1	0.4	0.1	0.5	0.1	0.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호

가구주율

가구주율은 인구의 가구 구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지표이다. 가구주율은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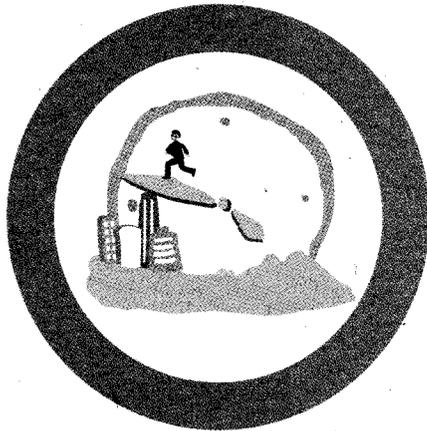
[그림 4-7] 성 및 연령별 가구주율(1995)



의 수를 그 가구주가 속해 있는 특성별 인구로 나눈 백분비이다. 가구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1995년의 가구주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63.6%인데 비해 여자는 7.8%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30대 후반부터 90% 이상의 가구주율을 보이다가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구주율이 떨어진다. 이와 달리 여자는 40대까지는 20% 미만의 낮은 가구주율을 보이다가 50대 후반 22.7%, 60세 이상에서는 비교적 높은 가구주율을 보인다.



Ⅲ. 국민생활

제 5장 가계

제 6장 물가

제 7장 주거

제 8장 교육

제 9장 보건·복지

제10장 환경

제11장 문화·예술

제12장 정보화

제13장 범죄·재해

여 백

제 5 장 가 계

가계는 기업, 정부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가정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경제(私經濟)이다. 가계는 보유자산과 근로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해 경제적 행위를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 이러한 자원은 가구원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지출에 활용되며, 또한 소비지출을 하고 남은 잉여자원을 가지고 저축 또는 투자함으로써 자산을 축적한다.

국가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행태도 상당히 변했다. 소득규모의 확대라는 양적인 변화와 함께 소득구조가 다변화되었다. 소비지출 또한 양적, 구조적 측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식료품, 광열수도비와 같은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

는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개인교통, 통신비, 외식비 등에 대한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경제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제1절 가계소득

소득규모의 변화

소득은 가계가 경제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적자원의 하나이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분석은 가계경제 상태를 이

〈표 5-1〉 소득원천별 가계소득의 변화

(단위 : 천원, %, %p)

	1991			1996			증 감		
	근로자	근로자외		근로자	근로자외		(1996-1991)	근로자	근로자외
연간소득	14,432	13,962	15,395	25,769	24,556	27,787	11,337	10,594	12,392
실질연간소득 ¹⁾	17,839	17,258	19,030	24,565	23,409	26,489	6,726	6,151	7,459
연간소득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근로소득	64.0	90.8	14.3	59.4	89.7	14.9	-4.6	-1.1	0.6
사업소득	28.8	4.4	74.3	30.7	3.9	70.0	1.9	-0.5	-4.3
부업소득	0.2	0.2	0.3	0.5	0.6	0.5	0.3	0.4	0.2
재산소득	3.7	2.9	5.2	4.9	3.3	7.3	1.2	0.4	2.1
이전소득	3.2	1.7	5.9	4.4	2.5	7.3	1.2	0.8	1.4

주 : 1) 1995년 가격으로 평가
 자료 : 통계청, 『1991·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해당 가계의 현재시점에서의 소비지출의 기본적 자원이 되며,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은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자주 이용돼 왔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다양한 출처별 분석은 가계소득이 안정적인지를 따져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가계소득에 대한 자료는 가구주가 월급, 수당 등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져 왔다. 가구주가 사업자, 자유업자, 무직자인 경우 등을 포함하는 비근로자가구는 특성상 소득자료의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소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991년과 1996년의 실질소득수준(1995년 가격기준)을 비교해 보면, 1,783만9천원에서 2,456만5천원으로 672만6천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소득수치는 1997년 이후에 겪은 경제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1991년과 1996년 모두 근로자가구보다 근로자외가구가 다소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계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1991년 90.8%에서 1996년 89.7%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역시 그들 집단의 주

〈표 5-2〉 가구유형별 연간소득(1996)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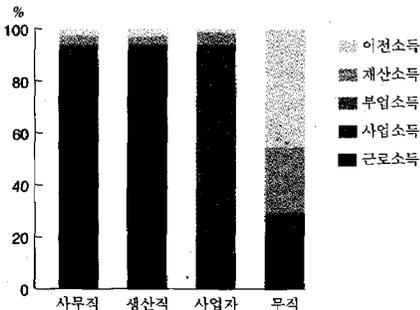
	근로자			근로자외		
		사무직	생산직		사업자	무직
연간소득	24,556.3	29,772.3	20,974.2	27,787.2	31,209.6	16,324.0
· 근로소득	22,030.9	26,790.1	18,762.5	4,149.0	4,265.2	3,759.9
· 사업소득	950.3	1,050.8	881.3	19,461.9	24,996.7	923.0
· 부업소득	136.7	155.4	123.8	127.4	123.3	141.0
· 재산소득	820.2	1,165.9	582.8	2,029.7	1,406.6	4,116.8
· 이전소득	618.4	610.1	624.2	2,019.2	417.8	7,383.2
연간소득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근로소득	89.7	90.0	89.5	14.9	13.7	23.0
· 사업소득	3.9	3.5	4.2	70.0	80.1	5.7
· 부업소득	0.6	0.5	0.6	0.5	0.4	0.9
· 재산소득	3.3	3.9	2.8	7.3	4.5	25.2
· 이전소득	2.5	2.0	3.0	7.3	1.3	45.2

자료 :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7

된 소득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 74.3%에서 70.0%로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두 집단 모두에서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소득 출처가 점차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근로자와가구의 가계소득 중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서 7.3%로 되었다. 이는 근로자와가구의 축적된 자산규모가 점차 증가한데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득원천의 다변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가계의 소득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표 5-2>는 가구유형에 따른 연간소득의 규모 및 출처별 구성비를 나타낸다. 평균 소득수준은 사업자가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 생산직, 무직가구의 순서였다. 사업자가가구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3,121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무직가구의 연간소득은 1,632만원이었다. 주소득원의 비중을 보면 근로자가가구의 근로소득비중은 89.7%였고, 사업자가가구의 사업소득은 80.1%였다.

[그림 5-1] 가구주 직업유형별 소득구성



가구주가 실업인 상태이거나 은퇴한 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무직가구의 경우 소득의 구성형태는 다른 집단과 사뭇 다르다. 이들 소득의 45.2%가 사회 부조와 친지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이전소득이고, 재산소득 또한 가계소득의 1/4 수준인 2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조 변화

<표 5-3>은 도시근로자가가의 1970년 이후 소득수준 및 소득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 월평균 실질소득(1995년 가격으로 평가)은 31만7천원이었는데 1997년에는 6.6배에 해당하는 208만7천원(1995년 가격으로 평가)으로 많아졌다. 1998년은 경제난으로 가구소득도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18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199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내역도 변화하였다. 가구주 근로소득의 비중이 1999년 69.2%로서 1970년의 79.3%보다 10.1%포인트나 낮아진 대신 배우자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은 증가하였다. 소득 구성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배우자소득이다. 가계소득에서 배우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0%에서 계속 높아져 1997년에 9.3%에 이르렀다. 1998년에는 8.8%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져 우선적으로 맞벌이 주부들이 일자리를 잃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기었던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실질소

<표 5-4>는 가계경제에 변화가 많은 시

득의 변화상황을 보여준다. 1998년의 소득

<표 5-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성비

(단위 : 천원, %)

	월평균 소득 (천원)	경 상 소 득	근 로 소 득				사 업 및 부 업 소 득	재 산 소 득	이 전 소 득	비 경 상 소 득	실질소득 (천 원)
			가 구 주	배 우 자	기 타 가 구 원						
1970	28.2	90.7	86.3	79.3	-	7.0 ¹⁾	1.2	3.2	-	9.3 ²⁾	316.6
1975	65.5	97.7	91.5	83.6	-	7.8 ¹⁾	0.7	3.7	1.9	2.3	360.1
1980	234.1	97.4	90.2	81.0	-	9.1 ¹⁾	0.9	3.3	3.1	2.6	580.9
1985	423.8	97.1	89.4	80.3	4.0	5.2	2.4	2.6	2.7	2.9	746.1
1990	943.3	94.1	85.8	73.3	6.1	6.5	2.6	2.7	3.0	5.9	1,274.7
1995	1,911.1	94.1	85.9	69.1	9.1	7.7	3.3	2.2	2.6	5.9	1,911.1
1996	2,152.7	93.7	85.4	68.6	8.9	7.8	3.4	2.4	2.5	6.3	2,052.1
1997	2,287.3	93.6	84.8	67.5	9.3	8.0	3.5	2.3	3.0	6.4	2,087.0
1998	2,133.1	93.5	85.1	70.0	8.8	6.3	3.7	2.0	2.7	6.5	1,810.8
1999	2,224.7	93.4	84.2	69.2	8.4	6.7	4.0	2.1	3.1	6.6	1,872.7

주 : 1) 1980년 이전 배우자소득은 기타가구원 소득에 포함

2) 1970년 이전소득은 비경상소득에 포함

3) 실질소득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표 5-4>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1995년 가격 기준)

(단위 : 천원, %)

	1997년		1998년			1999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증 감 률	금 액	구 성 비	증 감 률
소 득	2,087.0	100.0	1,810.8	100.0	-13.2	1,872.7	100.0	3.4
• 경상소득	1,953.1	93.6	1,693.0	93.5	-13.3	1,748.2	93.4	3.3
근로소득	1,769.0	84.8	1,541.2	85.1	-12.9	1,577.0	84.2	2.3
가구주	1,407.9	67.5	1,268.4	70.0	-9.9	1,295.9	69.2	2.2
배우자	194.9	9.3	159.1	8.8	-18.4	156.4	8.4	-1.7
기타가구원	166.3	8.0	113.7	6.3	-31.6	124.5	6.7	9.5
사업및부업소득	72.0	3.5	66.1	3.7	-8.2	75.3	4.0	13.9
재산소득	48.9	2.3	36.7	2.0	-24.9	38.7	2.1	5.3
이전소득	63.2	3.0	49.0	2.7	-22.5	57.3	3.1	17.0
• 비경상소득	133.9	6.4	117.8	6.5	-12.0	124.5	6.6	5.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수준은 1997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타 가구원 소득과 재산소득, 이 전소득에서 1년 사이 20%이상, 배우자소득 또한 18.4%씩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9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7만3천원이었으며, 이 중 69.2%인 129만6천원이 가구주가 벌어들인 소득이었고, 배우자에 의한 소득은 15만6천원으로 가구주소득의 12.1% 수준이었다. 이들 근로자가구의 평균 재산소득은 3만9천원이었으며, 이전소득은 5만7천원이었다.

소득계층별 소득구조

<표 5-5>는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추이를 나타낸다. 1985년 소득1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7.8%로 5분위 소득점유율 40.0%

의 5분의 1에 불과하였다. 수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를 통해 볼 때 1985년 이후 소득불균형 현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 상태가 다소 나빠졌다. 1999년의 지니계수는 0.32로 15년전인 1985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은 소득계층이 어떤 이유로 형성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9년 가계소득 5분위 계층에 따른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소득 5분위 집단의 월평균소득이 447만5천원으로 소득 1분위 집단 81만6천원의 5.5배에 이른다. 가계소득수준의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188만

<표 5-5>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분포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배 율 (V/I)	지 니 계 수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1985	7.8	12.9	16.8	22.5	40.0	5.12	0.31
1990	8.4	13.2	17.2	22.5	38.8	4.64	0.29
1991	8.5	13.4	17.4	22.6	38.0	4.46	0.29
1992	8.5	13.6	17.5	22.8	37.6	4.42	0.28
1993	8.6	13.6	17.5	22.8	37.4	4.35	0.28
1994	8.5	13.5	17.5	22.9	37.6	4.42	0.28
1995	8.5	13.5	17.5	23.0	37.5	4.42	0.28
1996	8.2	13.3	17.5	23.1	37.9	4.63	0.29
1997	8.3	13.6	17.7	23.2	37.2	4.49	0.28
1998	7.4	12.8	17.1	22.9	39.8	5.41	0.32
1999	7.3	12.6	16.9	22.9	40.2	5.49	0.32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표 5-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구성(1999)

(단위 : 천원, 배, %, %P)

	평 균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V/I 또는 V-I
	소 득 액(천원)						(V/I)
월평균소득	2,224.7	815.6	1,404.1	1,885.1	2,542.0	4,475.0	5.5
경상소득	2,076.9	786.4	1,362.3	1,828.6	2,455.4	3,950.1	5.0
근로소득	1,873.3	712.5	1,272.5	1,697.5	2,241.6	3,441.4	4.8
가구주	1,539.5	650.4	113.3	1,398.5	1,817.7	2,696.5	4.1
배우자	185.8	40.0	72.4	144.9	231.1	440.7	11.0
가구원	148.0	22.1	66.5	154.2	192.7	304.1	13.8
사업및부업소득	89.5	22.7	36.1	61.2	119.2	208.1	9.2
재산소득	46.0	11.2	14.0	20.4	45.2	138.8	12.4
이전소득	68.1	40.1	39.7	49.4	49.4	161.8	4.0
비경상소득	147.9	29.2	41.8	56.6	86.6	524.9	18.0
	구 성 비(%)						(V-I)
월평균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93.4	96.4	97.0	97.0	96.6	88.3	-8.2
근로소득	84.2	87.4	90.6	90.0	88.2	76.9	-10.5
가구주	69.2	79.7	80.7	74.2	71.5	60.3	-19.5
배우자	8.4	4.9	5.2	7.7	9.1	9.8	4.9
가구원	6.7	2.7	4.7	8.2	7.6	6.8	4.1
사업및부업소득	4.0	2.8	2.6	3.2	4.7	4.7	1.9
재산소득	2.1	1.4	1.0	1.1	1.8	3.1	1.7
이전소득	3.1	4.9	2.8	2.6	1.9	3.6	-1.3
비경상소득	6.6	3.6	3.0	3.0	3.4	11.7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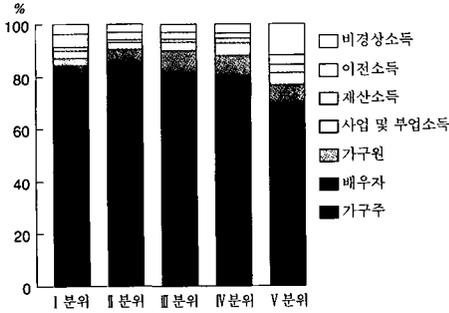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5천원으로 전체 평균값인 222만5천원에 는 못 미쳤다.

소득원천별 구성비도 소득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가구주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 소득의 비중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 고소득 계층 일수록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소득출처가 소득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 계층의 집단은 현재 많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이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 는 축적된 자산에 따른 재산소득을 보다

[그림 5-2] 소득 5분위별 소득 구성비



많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빈층인 1분위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에서 가구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9.7%로 2분위 가계 다음으로 높았으며, 배우자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5개의 소득계층 중 가장 낮다. 배우자 소득의 경우 1분위 가계의 배우자는 월평균 4만 원을 벌어들인데 비해 5분위의 배우자는 평균 44만1천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커

다란 격차를 보였다. 대신 1분위 가구들의 사회부조와 같은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율은 4.9%로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구조

<표 5-7>은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1999년도 소득구조를 비교한 표이다.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73만5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보다 55만5천원이 많다. 맞벌이가구의 가구주소득은 155만8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가구주소득 176만6천원에 비해 적다. 또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에서도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소득은 65만7천원으로 맞벌이가계 소득의 24.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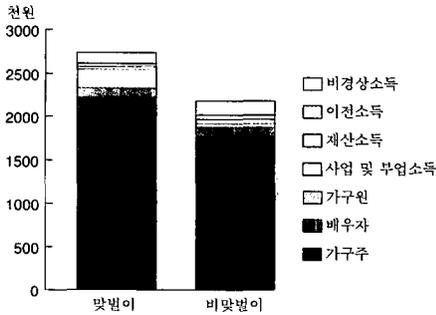
<표 5-7> 도시근로자가구의 맞벌이어부별 소득구성(1999)

(단위 : 천원, %)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맞벌이-비맞벌이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월평균 소득	2,735.3	100.0	2,180.1	100.0	555.2	-
○ 경상소득	2,611.1	95.5	2,017.3	92.5	593.8	3.0
- 근로소득	2,326.1	85.0	1,875.1	86.0	451.0	-1.0
가구주	1,557.8	57.0	1,766.4	81.0	-208.6	-24.0
배우자	657.2	24.0	2.5	0.1	654.7	23.9
가구원	111.1	4.1	106.2	4.9	4.9	-0.8
- 사업및부업소득	215.1	7.9	39.7	1.8	175.4	6.1
- 재산소득	35.1	1.3	52.2	2.4	-17.0	-1.1
- 이전소득	34.7	1.3	50.3	2.3	-15.6	-1.0
○ 비경상소득	124.3	4.5	162.9	7.5	-38.6	-3.0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그림 5-3] 맞벌이, 비맞벌이가구의 가계소득(1999)



제2절 가계소비 지출

소비는 가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계는 가능한 한 가족들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정된 구매력 내에서 소비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지출의 행태는 가계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나아가 가계의 실제적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 지표이기도 하다.

소비지출규모의 변화

<표 5-8>은 도시가계의 소비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1995년 가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1970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 실질 총소비지출은 29만2천원에서 124만5천원으로 4.3배 증가하였다. 모든 비목에서 실질소비지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지출비목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개인교통비로 17년 동안 지출

규모가 227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에 자동차 구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외식비 지출로 1970년에 월평균 2,600원(1995년 가격)을 지출했던 것이 1999년에는 12만3천원을 씀으로써 50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러한 개인교통과 외식비 지출의 급증은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추구하려는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식과 개인교통비 지출은 19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함으로써 앞으로도 당분간 경제적인 여건이 형성되는 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밖에 교육비 지출도 30년동안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34명에서 1999년 3.59명으로 줄어듦) 상당히 큰 폭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료품, 피복 및 신발, 주거비 등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비목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지출 관계가 그러하듯 가계의 가처분소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소비성향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1998년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당시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평균소비성향은 가장 낮은 수치인 68.5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9년에는 소비가 다시 활성화돼 평균소비성향이 74.9로 회

<표 5-8> 도시가계의 지출비목별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액(1995년 가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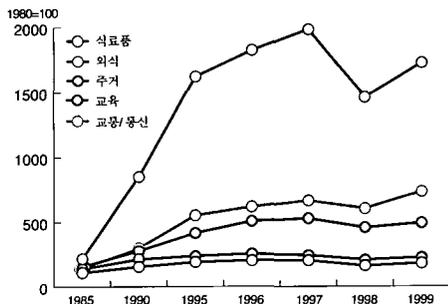
(단위 : 천원, 배)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99/70
총소비지출	292.0	444.8	558.1	926.6	1,265.9	1,360.2	1,359.0	1,117.3	1,244.9	4.3
식료품	136.2	192.3	209.3	296.7	367.1	390.4	390.1	310.6	346.9	2.5
• 외식	2.6	7.1	15.6	60.6	115.7	130.2	141.4	104.2	123.2	47.7
주거	17.3	20.2	27.9	43.1	48.3	51.5	49.3	42.3	45.6	2.6
광열수도	13.7	34.6	42.0	41.6	52.3	57.4	62.0	63.1	64.1	4.7
가구집기	4.9	19.3	26.8	52.8	59.1	60.1	57.8	45.1	467.2	94.5
피복신발	33.8	43.7	42.9	77.2	97.5	100.0	89.2	59.3	67.5	2.0
보건의료	10.3	27.8	30.6	48.5	59.4	62.5	60.8	49.8	56.5	5.5
교육	22.2	28.0	43.5	77.9	117.0	142.3	148.2	128.5	138.2	6.2
교양오락	6.2	8.2	18.6	41.1	66.8	72.2	70.3	49.7	60.5	9.8
교통통신	16.2	25.9	35.9	77.8	143.0	159.7	171.7	156.1	189.5	11.7
• 개인교통	-	0.5 ¹⁾	2.5	33.6	79.3	90.0	95.7	83.0	101.3	226.6 ²⁾
기타소비지출	31.1	44.9	80.6	169.8	245.4	264.2	259.7	212.9	229.3	7.4
• 잡비	7.6	22.6	60.9	131.2	189.3	203.6	199.1	163.2	173.1	22.7

주 : 1) 1982년 자료임 2) 1982년 대비 배율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복됐다. 이러한 추세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단순히 가계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향후 경기전망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4] 실질소비지출액 변동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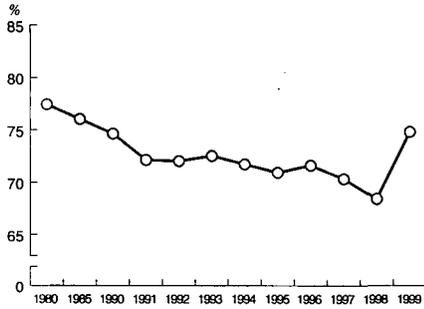
소비지출 구조변화

지난 30년동안 가계 소비지출액의 변동 폭은 지출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곧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달라짐을 뜻한다. 가계의 지출구성비는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는 물론 가계의 생활행태까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970년에서 1999년 기간중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식료품비와 피복 및 신발구입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외식비, 교육비, 개인교통비 등은 커졌다.

외식비 지출비중은 1970년 0.9%에서 1999년에 9.9%로 무려 9.0%포인트나 높

[그림 5-5]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아졌다. 특히 경제위기 직전인 1997에는 10.4%까지 올랐었으며, 이후 1998년에 9.3%로 급격히 줄었다가 복귀하는 모습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 1998년 1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여전히 높음을 입증했다. 교육비의 비중은 1970년에 7.6%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꾸준히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통신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교통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2년에 0.1%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 1999년에 8.1%를 기록했다. 통신비 역시 최근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는 지출비목이다. 전화비로 대변되던 통신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총소비지출에서 2% 정도였는데 인터넷통신, 이동전화의 보급 확대와 함께 지출이 급증해 1999년에는 소비지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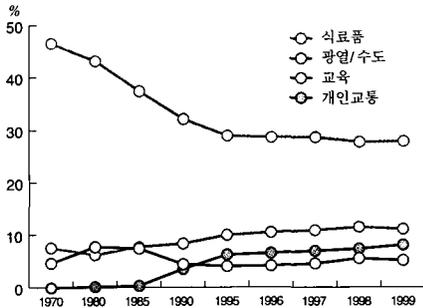
〈표 5-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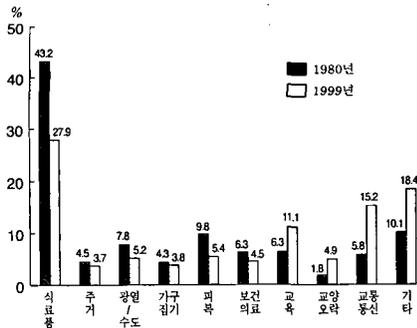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1999일본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6.6	43.2	37.5	32.2	29.0	28.7	28.7	27.8	27.9	22.5
외식	0.9	1.6	2.8	6.5	9.1	9.6	10.4	9.3	9.9	4.2
주거	5.9	4.5	5.0	4.7	3.8	3.8	3.6	3.8	3.7	6.5
광열수도	4.7	7.8	7.5	4.5	4.1	4.2	4.6	5.6	5.2	6.0
가구집기	1.7	4.3	4.7	5.6	4.7	4.4	4.3	4.0	3.8	3.5
피복신발	11.6	9.8	7.6	8.2	7.7	7.4	6.6	5.3	5.4	5.4
보건의료	3.5	6.3	5.5	5.1	4.7	4.6	4.5	4.5	4.5	3.1
교육	7.6	6.3	7.8	8.4	10.0	10.5	10.9	11.5	11.1	11.7
교양오락	2.1	1.8	3.5	4.7	5.3	5.3	5.2	4.5	4.9	5.1
교통통신	5.5	5.8	6.5	8.5	11.3	11.7	12.6	14.0	15.2	10.2
개인교통	-	-	0.4	3.6	6.3	6.6	7.0	7.4	8.1	-
기타소비지출	10.7	10.1	14.4	18.2	19.4	19.4	19.1	19.1	18.4	25.8
잡비	2.6	5.1	10.8	14.1	15.0	15.0	14.6	14.6	13.9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그림 5-6] 주요비목의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그림 5-7]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3.9%를 차지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므로 관련 지출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대 지출비목 중 교통통신비 비목은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9>에서는 일본 근로자 가계의 1999년 비목별 구성비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소위 엔젤지수라고 부르는 식료품비의 구성비가 27.9%로 일본의 22.5%보다 높다. 이러한 격차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외식비 지출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가계의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일본의 4.2%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교육비 지출은 양국 모두 11%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가계가 4.3%, 일본가계가 1.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

<표 5-10> 도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순위의 변화(1970~1999)

(단위 : %)

순 위	1970	1980	1990	1999
1	식료품(46.6)	식료품(43.2)	식료품(32.0)	식료품(27.9)
2	피복 및 신발(11.6)	기타소비지출(10.1)	기타소비지출(18.3)	기타소비지출(18.4)
3	기타소비지출(10.7)	피복 및 신발(9.8)	교통통신(8.4)	교통통신(15.2)
4	교육(7.6)	광열·수도(7.8)	교육(8.4)	교육(11.1)
5	주거(5.9)	보건의료(6.3)	피복 및 신발(8.3)	피복 및 신발(5.4)
6	교통통신(5.5)	교육(6.3)	가구집기·가사용품(5.7)	광열·수도(5.2)
7	광열수도(4.7)	교통통신(5.8)	보건의료(5.2)	교양오락(4.9)
8	보건의료(3.5)	주거(4.5)	주거(4.7)	보건의료(4.5)
9	교양오락(2.1)	가구집기·가사용품(4.3)	광열·수도(4.5)	가구집기·가사용품(3.8)
10	가구집기·가사용품(1.7)	교양오락(1.8)	교양오락(4.4)	주거(3.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표 5-1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1999)

(단위 : 천원, %)

	근로자			근로자외			
		사무직	생산직		자영자	무직	
총소비지출액	1,473.5	1,739.8	1,266.2	1,485.6	1,632.9	1,178.1	
구 성 비	식료품	27.7	26.1	29.4	28.0	28.1	27.8
	외식	10.4	10.5	10.3	9.3	10.1	6.9
	주거	3.3	3.0	3.5	4.2	3.9	4.9
	광열·수도	4.9	4.5	5.4	5.5	5.2	6.1
	가구집기·가사용품	3.7	4.1	3.3	3.8	4.1	3.2
	피복 및 신발	5.6	5.9	5.2	5.3	5.4	4.9
	보건 의료	4.5	3.9	5.0	4.6	4.0	6.5
	교육	10.7	11.7	9.5	11.7	12.1	10.5
	교양오락	4.9	5.5	4.3	4.8	4.8	4.8
	교통통신	16.1	16.7	15.4	14.2	14.7	12.6
	·개인교통	8.9	10.2	7.5	7.2	7.9	5.1
	기타소비지출	18.8	18.6	19.0	18.0	17.7	18.8
	·잡비	14.3	14.5	14.0	13.4	13.2	14.2
가처분소득	1,967.7	2,363.6	1,659.6				
평균소비성향	74.9	73.6	76.3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나라의 교통통신비 지출은 15.2%로 일본의 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은 1970, 1980, 1990, 1999년 각 연도에서 10대 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식료품비 지출은 계속 가장 많았으나, 그 지출구성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970년에 두 번째로 구성비가 높았던 피복 및 신발은 199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내려앉았으며 대신 교통통신비가 3위로 부상했다. 교통통신비는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위의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교육비 지출은 1990년 이후 네 번

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에 2.6%의 구성비로 10대 비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던 교양오락비는 1997년에는 여섯 번째, 1999년에는 일곱 번째 순위로 올라섰다.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소비지출 구조는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살펴보면 비근로자가구의 총소비 지출이 다소 많다. 1999년 가구주가 사무직인 가구는 월평균 174만원을 지출함으

로써 여러 집단 가운데 가장 지출규모가 크다. 사무직 가구는 개인교통비, 피복신발비 등 품위 유지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외식비, 교양오락비 등 다양한 여가관련 지출비목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교육비의 비중이 12.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9년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4.9로, 월평균 49만4천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소비지출이 많으나, 이들

은 가처분소득이 많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다소 낮다.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구조

가계 소비지출 구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5분위별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최하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총액은 83만9천원으로 5분위의 237만9천원의 35.3%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비 중 외식과 교통통신 등의 비목이

<표 5-12>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구조(1999)

(단위 : 천원, 배, %, %p)

가 구 유 형	I 분 위	II 분 위	III 분 위	IV 분 위	V 분 위	V/ I (증가율)	V-I (구성비)
총소비지출	838.9(100.0)	1,126.8(100.0)	1,357.4(100.0)	1,664.8(100.0)	2,378.8(100.0)	2.8	-
식료품	269.1 (32.1)	345.6 (30.7)	403.2 (29.7)	459.2 (27.6)	564.4 (23.7)	2.1	-8.4
• 외 식	79.8 (9.5)	117.7 (10.4)	148.2 (10.9)	180.7 (10.9)	240.3 (10.1)	3.0	0.6
주 거	44.1 (5.3)	38.7 (3.4)	44.1 (3.2)	44.0 (2.6)	70.1 (2.9)	1.6	-2.4
광 열·수 도	58.8 (7.0)	66.5 (5.9)	69.1 (5.1)	76.5 (4.6)	90.7 (3.8)	1.5	-3.2
가구집기·가사용품	24.4 (2.9)	34.7 (3.1)	48.2 (3.6)	58.8 (3.5)	105.7 (4.4)	4.3	1.5
피복 및 신발	40.8 (4.9)	56.9 (5.1)	79.2 (5.8)	93.9 (5.6)	139.1 (5.8)	3.4	0.9
보 건 의 료	46.6 (5.6)	54.5 (4.8)	62.7 (4.6)	69.2 (4.2)	95.6 (4.0)	2.1	-1.6
교육	67.5 (8.0)	112.3 (10.0)	132.0 (9.7)	185.3 (11.1)	287.5 (12.1)	4.3	4.1
교양오락	36.5 (4.4)	52.6 (4.7)	62.6 (4.6)	86.0 (5.2)	122.9 (5.2)	3.4	0.8
교통통신	123.5 (14.7)	179.7 (15.9)	218.7 (16.1)	277.9 (16.7)	383.2 (16.1)	3.1	1.4
• 개인교통	46.1 (5.5)	89.4 (7.9)	113.8 (8.4)	164.4 (9.9)	242.8 (10.2)	5.3	4.7
기타소비지출	127.7 (15.2)	185.3 (16.4)	237.6 (17.5)	314.2 (18.9)	519.5 (21.8)	4.1	6.6
• 잡비	85.6 (10.2)	129.6 (11.5)	173.0 (12.7)	241.1 (14.5)	423.9 (17.8)	5.0	7.6
가처분소득	726.7	1,275.7	1,689.2	2,247.6	3,897.7		
평균소비성향	115.4	88.3	80.4	74.1	61.0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계층도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비 중 개인교통비의 비중은 차이가 크다. 집안살림을 하는데 전형적인 선택재로 일컬어지는 외식비 지출의 경우 최빈층의 지출 구성비가 9.5%로 5분위의 10.1%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외식비 지출이 일반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5분위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6%가 외식비 지출비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별로 가계경제수지를 따져 보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은 115.4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점차 낮아져서 최고 소득수준의 집단인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61.0을 보임으로써 이들은 월평균 151만9천원의 흑자를 내면서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

근로자가구를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소비지출을 살펴보자. 총소비지출규모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

〈표 5-13〉 도시근로자가구의 맞벌이여부별 소비지출(1999)

(단위 : 천원, %, %p)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맞벌이-비맞벌이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소비지출	1,611.2	100.0	1,509.7	100.0	101.5	-
식료품	437.3	27.1	421.0	27.9	16.3	-0.8
· 외 식	177.5	11.0	149.7	9.9	27.7	1.1
주 거	49.9	3.1	46.1	3.1	3.8	0.0
광열 · 수도	74.2	4.6	73.9	4.9	0.4	-0.3
가구집기·가사용품	59.7	3.7	56.4	3.7	3.3	0.0
피복 및 신발	93.2	5.8	79.9	5.3	13.2	0.5
보건의료	65.0	4.0	69.0	4.6	-4.1	-0.6
교 육	183.2	11.4	161.4	10.7	21.8	0.7
교양오락	72.0	4.5	79.2	5.2	-7.2	-0.7
교통통신	272.8	16.9	242.0	16.0	30.8	0.9
· 개인교통	156.8	9.7	144.8	9.6	12.0	0.1
기타소비지출	303.9	18.9	280.7	18.6	23.1	0.3
· 잡 비	232.7	14.4	215.2	14.3	17.5	0.1
가처분소득	2,425.4		1,905.9		519.5	
평균소비성향	66.4		79.2		-12.8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다 10만2천원 더 많았다. 지출비목 대부분에서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데 예외적인 비목은 보건의료와 교양오락비였다. 두 비목은 모두 소비행위를 위해서는 금전적 자원 뿐만 아니라 시간자원이 함께 필요한 비목이며,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이 두 부분에 대한 지출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지출구성비를 보면 이 두 지출비목과 식료품 지출에서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대신 맞벌이가구는 외식비, 교통통신비 등 주부취업과 관련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맞벌이는 가계경제수지를 호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42만5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190만6천원보다 많은데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맞벌이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66.4이고 비맞벌이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9.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구가 만들어지면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자녀들을 출가시

<표 5-14>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연령별 소비지출(1999)

(단위 : 천원, %)

	24세이하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세이상	
소비지출액	1,032.1	1,178.5	1,357.6	1,430.9	1,597.9	1,743.2	1,720.2	1,486.2	
구 성 비	식료품	28.7	29.6	27.8	28.6	26.8	25.8	26.8	28.8
	• 외식	12.2	12.9	10.7	10.2	9.5	9.5	10.6	10.4
	주거	8.0	3.4	3.0	2.9	3.8	2.9	2.5	3.9
	광열·수도	5.2	5.0	4.8	4.9	4.9	4.7	4.9	5.3
	가구집기가사용품	2.4	4.0	4.9	3.9	3.1	2.9	3.0	3.9
	피복 및 신발	8.0	6.5	5.9	5.2	5.3	5.1	5.9	5.2
	보건의료	5.6	4.9	5.0	4.1	3.9	3.7	4.9	5.2
	교육	5.2	3.4	6.2	11.2	16.0	17.9	10.8	5.8
	교양오락	5.0	5.2	5.1	5.7	5.0	4.3	4.2	3.8
	교통통신	14.9	18.3	17.1	17.2	14.9	15.3	16.2	13.0
	• 개인교통	3.5	9.4	10.3	11.0	8.6	8.2	8.0	5.2
	기타소비지출	16.9	19.7	20.1	16.3	16.2	17.4	20.9	25.2
	• 잡비	10.8	13.8	15.0	12.2	12.3	13.5	16.6	20.5
가처분소득	1,481.9	1,660.3	1,838.2	1,933.6	2,161.6	2,164.9	2,247.8	1,927.1	
평균소비성향	69.6	71.0	73.9	74.0	73.9	80.5	76.5	77.1	

자료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키고, 그리고 노후를 맞는 생활주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가 현재 어떤 생활주기에 있는지는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므로 자녀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는 가정생활 주기는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및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정생활 주기를 살피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분석이다.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5~49세의 시기에 가장 크다. 이 시기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가 40~44세인 시기도 교육비 지출비중이 16.0%로 버금가는 수치다. 55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비중이 줄어드는데 비해 경조

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소비지출의 1/4이 넘는 25.2%가 기타 소비지출에 사용되고 있다.

가계의 생활주기는 가구주 연령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가계의 생활주기가 달라짐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의 패턴이 달라지며, 노후대비 등을 포함한 장래를 위한 자산축적의 필요성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평균소비성향도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높아졌다. 40대에서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이때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지출 규모도 크게 나타났다. 이때를 최고점으로 그 뒤의 흑자액은 감소한다.

한·일 가계 경제수지 비교

〈표 5-15〉 한국과 일본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추이 비교

	한 국				일 본			
	1인당GNI (US\$)	가처분소득 (천원)	총소비지출 (천원)	소 비 성 향	1인당GNI (US\$)	가처분소득 (천엔)	총소비지출 (천엔)	소 비 성 향
1980	1,598	224.5	174.0	77.5	9,143	374.0	291.5	77.9
1985	2,229	397.2	302.2	76.1	11,322	399.7	309.6	77.5
1990	5,886	870.2	650.0	74.7	24,436	440.5	331.6	75.3
1995	10,823	1,732.5	1,230.6	71.0	41,413	482.2	349.7	72.5
1996	11,380	1,945.2	1,395.4	71.7	36,954	488.5	351.8	72.0
1997	10,307	2,064.2	1,453.7	70.4	33,831	497.0	357.6	72.0
1998	6,742	1,894.7	1,297.9	68.5	30,760	495.9	353.6	71.3
1999	8,581	1,967.7	1,473.5	74.9	32,230	483.9	346.2	71.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호
일본총무청 통계국, 『가계조사연보』, 각 호

<표 5-15>는 우리나라와 일본 근로자 가계의 소비성향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가계소득이 월등히 많지만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995년을 기점으로 1만달러대에 진입했으며, 일본은 10년전인 1985년에 11,322달러를 기록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은 71.0으로 1985년 일본의 77.5에 비해 낮았다.

일본은 1인당 GNI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 꾸준히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3절 가계저축과 부채

가계 경제행위의 주요부분 중 하나가 저축과 부채이다. 가계저축은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하고 난 후의 잉여분으로 이는 곧 가계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가계자산은 다시 새로운 소득의 창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축보유액과

<표 5-16> 가구특성별 저축 및 부채보유비율(1996)

(단위 : %)

		저축보유				부채보유			
		가구비율	은행권	보험권	기타금융	가구비율	은행권	보험권	기타금융
평 균		98.2	95.6	64.5	51.5	66.5	34.8	6.3	51.4
가 구 특 성	근로자	98.9	96.6	66.8	52.6	70.0	37.6	6.2	54.1
	사무직	99.6	98.3	75.2	58.5	77.5	47.8	6.7	58.7
	생산직	98.4	95.4	61.1	48.5	64.8	30.6	5.8	51.0
	근로자외	97.1	94.0	60.7	49.7	60.7	30.3	6.5	46.9
	사업자	98.5	95.4	68.7	52.8	66.2	33.0	7.8	52.2
	무직	92.2	89.2	34.0	39.2	42.4	21.0	2.1	29.4
소 득 분 위	1분위	93.2	88.7	37.6	30.3	47.9	19.4	3.5	36.2
	2분위	98.7	95.9	60.5	43.8	64.1	29.1	5.0	51.7
	3분위	99.5	96.7	71.1	53.5	72.2	38.6	7.5	55.7
	4분위	99.8	98.0	73.3	60.9	73.6	43.0	7.7	55.3
	5분위	99.9	98.7	80.2	68.9	74.6	44.1	7.8	58.1
연 령 별	30세미만	98.2	95.5	59.6	39.9	63.5	25.4	3.6	53.8
	30대	99.0	96.8	75.1	54.9	74.6	41.1	8.4	58.3
	40대	98.5	96.3	67.3	53.4	67.2	36.4	7.1	51.3
	50대	98.8	95.5	58.0	55.1	61.6	31.8	4.7	46.8
	60대이상	93.1	89.3	32.0	40.1	44.9	23.5	2.0	29.4

자료 :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1997

부채보유액은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와 관련된다. 저축보유액과 부채보유액에 관한 자료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결과가 유일하다. 따라서 1996년 자료를 토대로 제한적이거나 가계의 금융자산 실태를 가늠해 본다.

저축 및 부채 보유비율

<표 5-16>는 가구특성별로 저축 및 부채의 보유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저축보유 가구비율은 98.2%로 대부분의 가구가 어떠한 형태로든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대한 저축보유비율이 95.6%로 가장 높고, 보험권이 64.5%, 기타금융기관이 51.5%였다. 사무직 가구, 고소득수준 집단, 30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저축을 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66.5%가 어떠한 형태로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나은 편인 은행권 부채의 경우 사무직의 이용이 다른 가구집단보다 활발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행권 부채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분별 저축 및 부채잔액

1996년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가계의 평균 저축보유액은 1,832만4천원

이었다. 저축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권 저축의 비중이 49.6%로 가장 높다. 1980년에 조사된 국민은행의 『가계 금융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가계의 저축보유액에서 은행권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였던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가계의 저축보유액 중 은행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 저축의 비중이 33.9%였으며, 보험권 저축은 16.5%였다. 근로자가구보다 근로자외가구의 저축보유액 규모가 컸으며, 퇴직자를 포함하는 무직자 가계의 평균저축 보유액이 2,224만5천원으로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한편 도시가계의 평균 부채잔액은 716만3천원이었다. 근로자가구 중에서는 사무직의 부채잔액이 생산직 근로자가구의 2배 수준이다. 근로자외 가구에서는 노인 가구가 많은 무직 가구의 부채잔액이 380만6천원으로 저축규모는 크고 부채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잔액의 55.6%가 은행권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소득이 안정적인 사무직의 경우 은행권 부채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부채잔액 대비 저축보유액은 사무직이 가장 낮은 2.25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무직이 직업이 안정적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부채 활용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생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는

<표 5-17> 가구형태별 저축 및 부채잔액(1996)

(단위 : 천원, %)

	평 균	근로자		근로자외			
		사무직	생산자	사업자	무 직		
연 간 소 득	25,769.0	24,556.3	29,772.3	20,974.2	27,787.2	31,209.6	16,324.0
순저축보유액	11,160.4	9,513.8	12,148.0	7,704.9	13,900.4	12,545.6	18,438.3
저축보유액	18,323.7	16,479.6	21,859.2	12,785.3	21,392.5	21,138.1	22,2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행 권	49.6	50.3	47.5	53.6	48.7	49.5	46.0
보 험 권	16.5	16.7	15.2	18.4	16.2	18.9	7.8
기 타 금 융	33.9	33.0	37.3	28.0	35.1	31.6	46.2
부 채 잔 액	7,163.3	6,965.8	9,711.2	5,080.4	7,492.1	8,592.5	3,80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행 권	55.6	57.8	62.6	51.5	52.2	50.3	66.6
보 험 권	6.1	6.0	6.1	6.0	6.3	6.6	3.5
기 타 금 융	38.3	36.1	31.3	42.5	41.5	43.1	30.0
순저축보유액/연간소득	0.43	0.39	0.41	0.37	0.50	0.40	1.13
저축보유액/연간소득	0.71	0.67	0.73	0.61	0.77	0.68	1.36
저축보유액/부채잔액	2.56	2.37	2.25	2.52	2.86	2.46	5.84

자료 :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1997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저축 및 부채

<표 5-18>은 가구주 연령별로 저축 및 부채잔액을 살펴본 자료이다. 금융자산의 규모는 가계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 라이프 싸이클과 함께 변화한다. 저축보유액은 50대에서 가장 높다. 이들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2,324만7천원으로 30대미만 가구의 평균저축액(1,041만1천원)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러나, 30대 가구의 저축패턴은 보험권 이용비율이 20.5%로 다

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타 금융권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잔액 규모는 30대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잔액은 847만원으로 이 시기에 주택마련 관련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유동성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대비 저축보유액이 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는 부채잔액이 많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높아 부채잔액 대비 저축보유액의

〈표 5-18〉 가구주 연령별 저축 및 부채잔액(1996)

(단위 : 천원. %)

연 간 소 득	연 령 별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연 간 소 득	20,026.7	25,673.0	27,918.4	29,400.5	20,278.2
순저축보유액	5,996.1	8,984.4	12,486.9	16,237.8	13,208.8
저축보유액	10,410.7	17,454.3	19,922.3	23,246.5	18,265.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행 권	59.2	47.9	49.2	46.8	56.4
보 험 권	15.4	20.5	16.8	13.7	7.2
기 타 금 융	25.4	31.6	34.0	39.5	36.4
부 채 잔 액	4,414.6	8,469.9	7,435.4	7,008.7	5,056.2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행 권	51.0	56.1	56.1	52.6	63.6
보 험 권	5.1	7.0	7.1	4.0	3.0
기 타 금 융	43.9	36.9	36.8	43.5	33.5
순저축보유액/연간소득	0.30	0.35	0.45	0.55	0.65
저축보유액/연간소득	0.52	0.68	0.71	0.79	0.90
저축보유액/부채잔액	2.36	2.06	2.68	3.32	3.61

자료 :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1997

비율이 2.06으로 30대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의 가구는 3.61로 부채부담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제 6 장 물 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상품을 얻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이때 우리가 지불하는 개별 상품의 화폐적 가치를 가격이라 하며, 이러한 개별 가격수준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을 물가라 한다.

이러한 물가는 수급상황, 일기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및 경제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화폐가치는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다.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일반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물가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물가지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시점의 물가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995년을 기준시점으로 본다면 1995년의 물가지수는 100으로 표현한다. 1995년 이후의 물가수준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1995년의 가격과 비교한 개별상품의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가격지수를 평균함으로써 전체의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물가지수를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망라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가격을 종합하여 지수를 작성한다.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목적과 상품의 유통단계에 따라 물가지수의 종류가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각각의 물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월 작성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의 제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최종소비단계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을 이용하여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 지수, 신선식품지수 등의 보조지표를 만든다. 이들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보다 더 실제 가계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체감물가수준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농가 판매가격지수와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와 같이 작성한 물가지수는 우리의 몸을 재는 체온계에 비유된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체온을 재서 열이 있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처럼 물가가 변하면 생산, 소비, 투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물가와 화폐가치

물가가 오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물가가 내리면 화폐가치는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1965년에 10,000원의 화폐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65년부터 2000년까지 약 24.2배 상승)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2000년에는 413원의 가치밖에는 안 된다. 따라서 화폐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현재가치로 바꾸려면 역(逆)으로 환산하면 되는데 1965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은 2000년에는 약 24만 2천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절 생산자물가

생산자물가 추이

생산자물가는 경제개발계획 시행 초기인 196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개발 초기의 막대한 재정투융자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1960년에는 10.7%, 1964년에는 34.7% 상승하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공업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또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외환사정이 나아지면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해짐으로써 상승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8.0% 상승하였다. 당시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에는 제1,2차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오름세 때문에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8.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원유, 고철, 소맥, 원목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1971~1975년까지 5년간 연평균 18.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976년부터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농산물의 작황부진으로 1979~1980년 2년에 걸쳐 65.2% 상승하는 급등세로 반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이 기간동안 연평균 3.3% 상승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농

산물의 작황이 호조를 보인데 이어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져 1982년부터 한자리 숫자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안정세가 정착되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지수작성에 쓰이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 가격인 생산자 판매가격 즉, 공장도가격이다.

지수작성 품목은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상품은 국내총거래액(모집단 거래액)의 1/10,000이상, 서비스는 1/2,000이상 거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종류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또한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949개 품목(상품 874개, 서비스 75개)이다.

생산자물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근간으로 기본분류별 지수를 작성한다. 상품과 서비스로 크게 대별하고, 상품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공산물,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서비스는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리스 및 임대, 광고, 전문서비스, 기타서비스로 나누

고 있다.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작성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준시점과 멀어질수록 조사품목이나 가중치의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바꾸어 주는 것을 지수개편이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3저 현상에 따른 호황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제품 수급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농수산물 가격이 채소류 작황 호조와 육류의 공급 확대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석유관련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공산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특히 1986년 중에는 생산자물가가 1.4% 하락하였으며, 이후 1989년까지 3%이내의 안정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에는 4.2%의 상승에 그쳤다.

1991년에는 작황이 부진했던 농림수산물이 크게 올라 다소 높은 4.8%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1994년까지는 3%이내의 전반적인 안정추세를 보였다. 1995년에는 공산품가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4.7% 상승하였다.

〈표 6-1〉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지 수	4.8	2.1	1.5	2.7	4.7	3.2	3.9	12.2	-2.1	2.0
• 상 품	4.8	2.1	1.5	2.7	4.7	2.2	3.2	13.6	-2.1	2.2
-농림수산물	11.9	3.4	1.8	12.1	3.8	1.6	1.9	3.9	10.1	-2.6
-광산품	5.3	0.9	-0.1	1.5	0.0	0.9	1.5	7.3	1.1	2.2
-공산품	4.0	1.8	1.6	1.5	4.9	2.2	3.4	14.5	-3.3	2.4
-전력·수도·가스	1.4	6.9	1.4	0.5	3.5	2.4	4.8	14.0	0.5	8.5
• 서 비 스	-	-	-	-	-	6.8	5.4	8.2	-2.1	1.5

(연평균상승률,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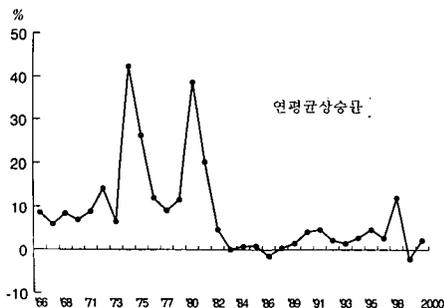
1995년 기준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처음으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1994년까지는 상품만의 가격변동을 나타내지만 1995년 이후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낸다. 1996~1997년에는 서비스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농림수산물 가격의 안정으로 전체 상승률이 3%대에 머무르며 안정 추세를 보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과 전력·수도·가스요금 상승하여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2자리 상승률(12.2%)을 기록하였다.

이 후 환율이 안정되면서 그 동안 크게 올랐던 공산품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999년에는 2.1% 하락하였으며, 2000년에도 2.0%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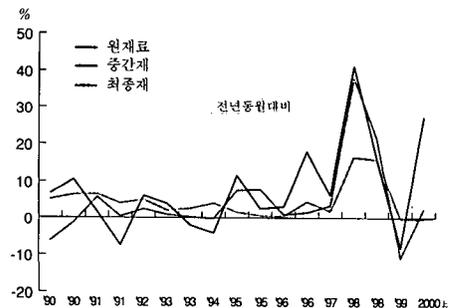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를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등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수를 작성한 것이다.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를 통하

[그림 6-1] 생산자물가 상승률



[그림 6-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



〈표 6-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변동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상
총지수	4.4	2.4	1.4	2.7	5.2	2.0	5.0	19.8	-5.8	3.6
- 원재료	3.5	2.7	1.9	1.1	7.4	7.5	10.7	20.7	-7.6	26.6
- 중간재	3.9	1.5	0.7	1.5	7.6	0.9	5.5	24.2	-9.2	4.2
- 최종재	5.3	3.4	2.2	4.3	2.0	2.4	3.4	14.4	-0.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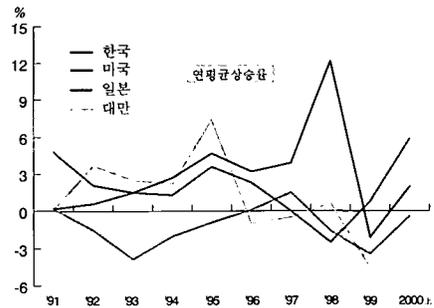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여 물가의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원가가 높아져 최종재 가격도 오르게 되므로 원재료와 중간재 지수는 앞으로의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낸다. 최종재 지수는 자본재와 소비재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재화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연도별로 변동추세를 보자. 원재료지수는 1991년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다소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급등으로 1998년에는

〔그림 6-3〕 주요국의 생산자물가 변동 비교



〈표 6-3〉 주요국의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상
한 국	4.8	2.1	1.5	2.7	4.7	3.2	3.9	12.2	-2.1	2.0
미 국	0.2	0.6	1.5	1.3	3.6	2.3	0.0	-2.5	0.8	5.9
일 본	0.2	-1.5	-3.8	-2.0	-0.9	0.1	1.5	-1.6	-3.4	-0.4
영 국	5.4	3.1	4.0	2.5	4.0	2.6	1.0	0.5	1.2	2.5
프랑스	-1.3	-1.6	-2.8	1.1	6.1	-2.7	-0.6	-0.9	-1.5	-
독 일	2.1	1.5	0.2	0.6	1.7	-0.4	1.1	-0.4	-1.0	2.4
캐나다	-1.0	0.5	3.6	6.1	7.4	0.4	0.9	-0.1	1.6	5.6
대 만	0.1	3.7	2.5	2.2	7.4	-1.0	-0.5	0.6	-4.5	-
멕시코	20.5	13.4	8.9	6.8	39.1	36.4	18.5	13.9	14.7	-
호 주	1.5	1.5	2.0	0.8	4.2	0.3	1.2	0.6	1.5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20.7%에 이르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 환율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1999년에는 오히려 7.6%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 상반기에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원재료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26.6% 상승하여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최종재의 물가변동은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여 물가상승이 두드러졌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생산자물가 비교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는 1990년대 들어 1998년까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추세에 접어 들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의 경우 1999년까지는 매우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상반기에

는 다소 높은 5.9% 상승하여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2절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추이

1960년대 초반의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경제개발 초기에 막대한 재정투입자와 외자도입 확대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농작물 흉작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의 급등으로 1962년부터 1964년 사이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18.9%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정부가 성장 위주에서 안정성장위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꿈에 따라 1965년부터 1969년까지는 연평균 11.2% 상승하여 1960년대 초반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

〈표 6-4〉 소비자물가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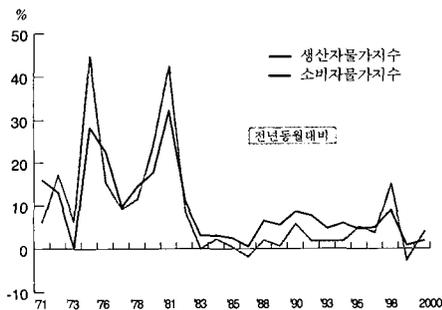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지수	9.3	6.2	4.9	6.2	4.5	4.9	4.5	7.5	0.8	2.3
• 상품	7.6	4.2	3.0	6.2	2.7	3.6	4.2	9.7	2.3	1.7
- 농축수산물	13.1	4.0	1.6	12.4	2.8	1.8	3.8	6.1	7.2	2.0
- 공산품	4.8	4.2	3.8	3.1	2.7	4.3	4.3	11.2	0.5	1.6
(석유류)	13.0	7.9	6.6	1.6	2.8	15.0	23.0	33.4	1.2	11.0
• 서비스	12.0	9.0	7.1	6.5	6.7	6.3	4.7	5.2	-0.8	2.9
- 집세	11.7	7.6	5.8	3.9	3.8	3.6	3.2	0.6	-4.1	-0.5
- 공공요금	7.1	8.5	7.4	7.0	7.9	6.7	5.1	9.5	2.2	7.1
- 개인서비스	16.5	10.5	7.8	7.8	7.9	7.6	5.3	5.3	-1.0	2.0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연보 및 월보』, 각 호

1970년대 초반에는 그 동안의 소득증가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식료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수출확대 목적의 환율인상 등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그림 6-4]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1973년에 3.5% 상승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는 1974년 23.9%, 1975년 25.5% 상승하였다.

1976년부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데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전반적인 물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안정추세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다시 급등세로 반전되었다.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함으로써 1979년에는 18.1% 상승한데 이어 1980년에는 28.8% 급등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평균적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도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지수작성에 사용하는 가격은 간접세를 포함한 소비자 구입가격이다.

199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조사 대상품목은 1995년 가계소비지출총액(월평균 130만원)의 1/10,000 이상인 품목으로서 같은 종류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조사규격이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 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509개 품목을 선정했다. 품목별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인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는 각각의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전체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000분비)이다. 주요 품목의 가중치는 전세 92.5, 월세 35.0, 쌀 27.6, 휘발유 22.8 등과 같다.

소비자물가의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6개 도시로서 이들 도시내의 12,000개 상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은 기준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작성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을 이용한다.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의 품목과 가중치를 바꾸는 지수 개편 작업을 5년 주기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6.3%라는 1960년대 이후 유래 없는 안정세를 보였다. 1981년에 석유파동의 여파로 21.3%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의 전반적인 작황 호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임금인하 등으로 비용상승 요인이 완화되어 1982년부터 연평균 상승률이 4~7%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1987년 하반기부터는 연이은 고도성장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1988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기대 심리가 확산되는 경향까지 보여 연평균 7.1%까지 상승하였다.

1980년대 후반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1991년 연평균 9.3% 상승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계속되었다. 이는 경기호황에 따른 초과수요 압력, 부동산경기 과열, 개인서비스요금 자율화 및 걸프사태 등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시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1993년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과 서비스요금 상승이 두드러져 6.2%의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에 비중이 실리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소비자물가는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2% 상승하는데 그쳐 1990년 들어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1월말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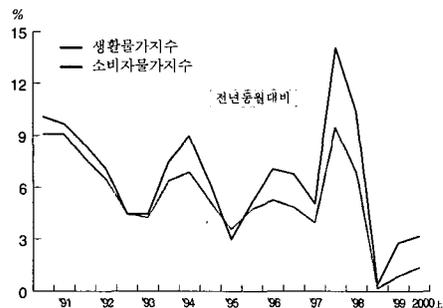
급등으로 12월부터 소비자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6.8% 상승이라는 단기적 급등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8년 연평균상승률은 7.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하향 안정세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1998년 3월부터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1999년에는 농축수산물이 7.2%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자물가는 0.8% 상승에 그치는 등 이러한 물가안정세가 2000년(2.3%상승)에도 계속 이어졌다.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총지수외에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 등 9대 비목별로 세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50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변동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통계청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보다

[그림 6-5]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 비교



〈표 6-5〉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별 변동 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소비자물가지수	9.3	6.2	4.9	6.2	4.5	4.9	4.5	7.5	0.8	2.3
생활물가지수	10.5	6.4	5.0	8.0	4.6	6.0	6.0	11.1	2.4	3.6
월1회이상 구입품목	13.4	6.8	3.8	10.0	3.4	5.3	7.7	12.9	4.4	3.7
신선식품지수	19.1	6.1	0.5	23.9	0.3	-3.2	8.3	8.3	8.6	-1.9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연보 및 월보』, 각 호

가깝게 측정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를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언론기관 및 물가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물가통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년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509개 품목 중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 등 154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의 가격으로 작성하는 지수이다.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 외에도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작성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감에 보다 가까운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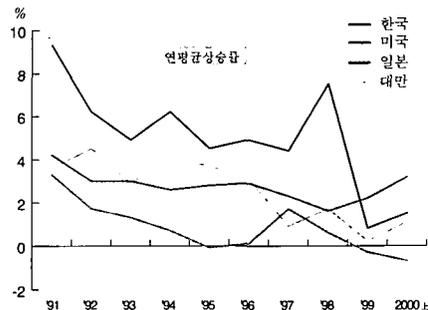
신선식품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생선류, 야채류, 과일류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만을 별도로 집계한 지수이다. 구입빈도별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입빈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

격변동에 예민하기 때문에, 월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지수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등과 함께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비교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까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환율이 안정되고 가격경쟁이 심해져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3%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3.2% 상승하여

[그림 6-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변동 비교



〈표 6-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변동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상
한 국	9.3	6.2	4.9	6.2	4.5	4.9	4.4	7.5	0.8	1.5
미 국	4.2	3.0	3.0	2.6	2.8	2.9	2.3	1.6	2.2	3.2
일 본	3.3	1.7	1.3	0.7	-0.1	0.1	1.7	0.6	-0.3	-0.7
영 국	5.9	3.7	1.6	2.5	3.4	2.4	3.1	3.4	1.6	2.7
프 랑스	3.2	2.4	2.1	1.7	1.8	2.0	1.2	0.7	0.5	1.5
독 일	1.7	5.1	4.4	2.8	1.7	1.4	1.9	0.9	0.6	1.7
카 나다	5.6	1.5	1.8	0.2	2.2	1.6	1.6	1.0	1.7	2.6
대 만	3.6	4.5	2.9	4.1	3.7	3.1	0.9	1.7	0.2	1.1
멕 시코	22.7	15.5	9.8	7.0	35.0	34.4	20.6	15.9	16.6	10.0
호 주	3.2	1.0	1.8	1.9	4.6	2.6	0.3	0.9	1.5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절 수출·입 물가지수

우리나라의 수출·입물가(원화기준)는 1,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수입물가는 원유가 상승등으로 1972년부터 크게 상승하여 1974

년에는 전년에 비해 41.3%나 급등했다. 이러한 여파는 1975년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1978년까지는 안정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1980년에는 전년에 비해 무려 59.1% 상승하였다.

수출물가도 1970년대에는 수입물가 추이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큰 상승폭을 보였던 1970년대와는 달리 국내의 여건의 호조로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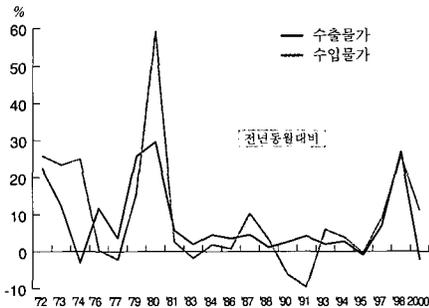
〈표 6-7〉 수출입물가지수의 변동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입물가	0.0	1.5	3.5	4.0	5.7	0.7	9.5	28.2	-12.1	7.6
수출물가	3.8	2.7	2.5	2.8	1.3	-4.2	6.6	31.3	-18.9	-1.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6-7] 수입물가와 수출물가의 변동추이



1990년대 들어서도 안정추세가 이어지면서 대체적으로 5%이내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여 1997~1998년 2년간에 걸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8년의 경우 수입 및 수출물가의 연평균상승률은 각각 28.2%, 31.3%로 2차 석유파동기였던 1980년(수입 및 수출물가는 각각 59.1%, 30.3%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환율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입 및 수출물가는 1999년에 각각 12.1%, 18.9% 하락하였다. 2000년 수출물가는 1.0%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수입물가는 원유, 나프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라 7.6% 상승하였다.

제4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근원적 인플레이션

근원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 core inflation)이란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인 외부 충격(석유파동, 이상기후, 제도변화 등)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장기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근원적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체 물가변동에서 일시적인 공급 충격(식료품, 에너지 가격의 급변)을 제거하고 산출하는 방법, 둘째는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 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 등이다.

실무적으로는 측정의 편의상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를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소비자물가 대상품목 중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가격변동분을 근원적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석유류의 상승률이 기타 다른 품목의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표 6-8〉 주요 물가지수 작성방법 비교(1995년 기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작성목적	일반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측정	국내생산자가 생산·출하는 상품과 서비스가격 변동측정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측정
대상품목	509개	949개	수출 220, 수입 223개
품 목 선정기준	1995년 도시가계조사의 소비지출총액의 1/10,000이상인 품목	1995년 국내 총거래액의 상품은 1/10,000, 서비스는 1/2,000이상인 품목	1995년 수출입액의 1/2,000이상인 품목
개편주기	5년	5년	5년
조사가격	소비자구입가격	생산자판매가격	수출입계약가격(수출은 FOB, 수입은 CIF)
지수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이용범위	임금·연금 결정, 화폐의 구매력 측정, 디플레이터, 경기동향분석	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 편성 및 심의, 자산재평가, 시장동향분석 등	수출입물가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측정
보조지표	- 생활물가지수 - 신선식품지수 - 구입빈도별지수	-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농가 교역조건 산출 등을 통한 농촌경제 동향분석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조사대상 품목은 품목별 현금 수입·지출액이 농가의 현금 판매총액과 지출총액 중에서 1/10,000이상의 거래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69개, 농가구입지수는 306개 품목이다.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추이

농가판매가격은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반에 높은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실과 채소류가 급등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해 57.1%나 상승하였다. 이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농가판매가격은 1968년부터 1981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 연평균 21.2%의 높은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곡물, 채소·과실, 축산물 모두 연평균 20%이상씩 올랐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추세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채소류

〈표 6-9〉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변동추이

(연평균상승률,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상
○ 농가판매가격지수	10.2	4.1	0.2	8.3	9.1	5.2	-2.9	-0.3	6.5	5.3
-곡물	4.8	3.7	4.6	3.7	9.5	13.9	1.2	6.2	5.7	6.1
-채소·과실	12.5	3.8	-0.3	21.7	10.3	1.0	-0.6	1.3	-4.0	-3.1
-축산물	15.2	4.4	-6.9	3.2	9.5	0.4	-10.7	-10.1	22.3	13.4
-기타	13.1	6.8	10.8	2.7	-1.5	6.1	2.2	-2.0	-2.5	2.7
○ 농가구입가격지수	11.9	6.9	0.8	3.9	5.9	4.3	2.3	10.6	2.7	6.3
-가계용품	10.4	8.4	5.7	6.1	5.9	6.4	4.6	6.7	1.4	3.6
-농업용품	12.0	3.9	-7.6	0.8	6.5	1.4	-1.4	18.7	3.3	7.0
-농촌 임료금	20.1	11.1	4.1	2.0	4.3	5.8	4.2	-2.2	10.7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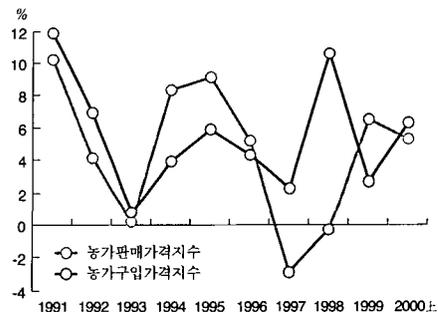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일보』

작황이 좋고 육류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 들어 1990년과 1991년에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하고 축산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겨 10%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채소·과실의 작황이 좋지 않았던 1994~1995년에는 8~9%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구입가격은 1960년대 초반 이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1962년부터 1982년까지 21년 동안 연평균 17.9%의 큰 폭 상승을 나타냈다. 특히 농촌임료금(賃料金)은 연평균 22.5%씩 상승하여 농가구입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농업용품 17.8%, 가계용품 16.8%씩 상승하였다.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던 농가구입물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농업노동임금이 크게 올라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까지 전반적인 안정추세를 보였

다. 다만, 1998년에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비료, 농약 등 농업용품이 크게 올라 농가구입물가도 10.6% 상승하였다.

[그림 6-8]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변동추이



제 7 장 주 거

주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삶' 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거의 문제는 인간생활의 중심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즉,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리적·정서적 충족과 생존, 적응, 편안함에 대한 최저수준을 만족시키는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주택이다. 주택의 크기나 부대시설은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평균 주거면적, 사용방수의 변화 등의 주거 관련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삶과 사회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비용 등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반대로 주거환경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현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이해는 사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거형태와 주거공간의 활용 등은 가족구성과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모습도 달라지고 주거환경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소득 증가, 취업주부의 증가, 단독 가구의 증가, 가족규모의 감소나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형태와 주거면적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주거환경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주거의 질은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주거면적과 주택 부대시설, 주거환경 등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주택의 공급

주택공급

주택은 인간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건설기간의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주택의 이 같은 특징은 개인의 수요를 제약하고 시장의 균형적 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주택이 가지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시장 기능에만 일임할 경우 계층간 서비스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국토개발정책이나 주택정책, 또는 신도시건설 정책,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개입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성과 국민의 필요성에 따라 주택의 공급과 점유형태 및 주택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1999년 한 해 동안 40만5천호의 주택이 새로 건설돼, 주택보급률은 93.3%, 주택투

<표 7-1> 주택보급

(단위 : 천호, %)

	주택수	주택 보급률	건설 호수			주택 투자율 ¹⁾
			공공	민간	민간	
1980	5,450	71.2	212	106	105	5.5
1990	7,357	72.4	750	269	481	8.8
1995	9,570	86.0	619	228	391	7.4
1998	10,867	92.4	306	131	175	6.2
1999	11,181	93.3	405	151	253	4.5 ²⁾

주 : 1) 실질GDP에 대한 실질 주택투자액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자율은 4.5%를 나타냈다. 연간 신축되는 주택수는 1980년대까지는 연간 15만~45만호 내외였으나 1990년 75만호를 정점으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반에는 1989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일산·분당 등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수가 크게 늘었다. 그 이후 1997년까지 매년 60만호 정도의 주택이 신축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주택건설은 급격히 위축돼 1998년의 신축 주택 규모는 30만 6천호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

다. 공공주택보다 민간건설 주택부문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10만호 정도가 더 신축되었다.

한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택투자액의 비율인 주택투자율도 1991년 8.9%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4.5% 수준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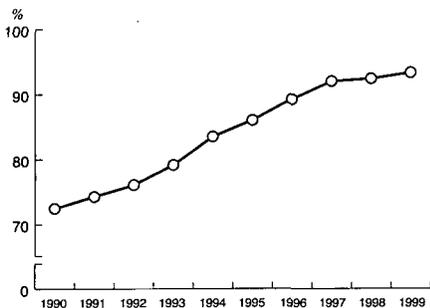
주택형태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970년 전체 가구의 0.7%인 4만2천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1995년에는 26.9%인 347만8천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여 8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1995년 현재 전체 가구의 31.9%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 양식이 도입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아파트는 도시지역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98년에 새로 건설된 주택의 86.8%(26만6천호)가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에 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40여년 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계속 높아져 2010년경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할 전망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기본 수요가 충족되기 시작했

[그림 7-1] 주택보급률



〈표 7-2〉 주택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 천가구,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0	5,506	95.0	42	0.7	211	3.6	34	0.6
1975	6,165	91.9	96	1.4	295	4.4	146	2.2
1980	7,107	89.7	391	4.9	204	2.3	224	2.8
1985	7,838	82.2	863	9.0	442	4.6	393	4.1
1990	8,506	75.3	1,678	14.8	728	6.4	388	3.4
1995	7,716	59.8	3,478	26.9	1,139	8.8	576	4.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호

지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경향에 따라 복지 및 분배적 측면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주택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기소유의 주택에 사는지 아니면 임차주택에 사는지를 나타

내는데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주택점유형태별 가구분포의 변화 추세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5년 현재 자기가 소유하는 집에 사는 가구는 53.3%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은 46.3%로 농촌지역의 77.5%에 비해 낮다. 자가 거주 비율은 1975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5년에 1990년 대비 3.4%포인트 증

〈표 7-3〉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

	자 가			전 세			월 세 ¹⁾			무상 및 기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1975	63.6	44.8	82.5	17.5	31.1	3.7	15.7	21.9	9.3	3.3	2.1	4.5
1980	58.7	43.0	80.8	23.9	35.6	7.5	15.4	19.9	9.1	1.9	1.4	2.6
1985	53.7	41.4	77.5	23.1	31.2	7.1	19.7	24.5	10.4	3.6	2.9	4.9
1990	49.9	40.5	77.4	27.8	34.6	7.9	19.1	22.5	9.4	3.2	2.4	5.3
1995	53.3	46.3	77.5	29.7	35.3	10.5	14.5	16.6	7.1	2.5	1.9	4.8

주 : 1) 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호

가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5대 신도시 건설 등의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지역의 1995년 자가 거주비율은 1990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 사글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198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자기집이나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거주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도시가구의 35.3%는 전세 형태로 살고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주택의 수요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주관적 기대도 주거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거지와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경제적 상황과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연환경이나 교통 및 근린시설의 편리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인 <표 7-4>의 거주지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거주지와 주택을 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주택비를 포함한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다. 1997년 30.4%로 10년 전보다 그 비중이 5.7%포인트 증가했다.

1987년의 경우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점이 직장 및 사업(29.3%)이었지만 1997년에는 22.6%로 감소하고 경제적 이유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는 자가용의 보급 증대에 따라 직장에 가까운지 여부의 중요성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 및 근린시설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3.4%, 2.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주택을 단지 재산의 일부로 즉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시기를 넘어 생활을 영위하는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산된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적 여유와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단순히 기능적인 충족 차원을 넘어 좀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개성에 맞는 거주공간을 원하는 쪽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한 현 시점에서는 양적인 공급 측면보다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주택형태와 주택규모도 변화하고 있다. <표 7-5-1>의 원하는 주택형태와 <표 7-5-2>의 주택규모 및 방수에 관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7년 아파트 선호도는 10년 전에 비해 16.9%포인트 증가한 35.2%로 나타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32.5평이고, 원하는 방 수는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2000년 최저 주

〈표 7-4〉 거주지 선택이유

(단위 : %)

	경제적 이유	직장 사업	교통,근 린시설	자연 환경	자녀 교육등	옛날부 터거주	기타
1987	24.7	29.3	8.7	2.5	6.8	23.8	4.1
1997	30.4	22.6	12.1	4.6	8.1	19.6	2.6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표 7-5-1〉 원하는 주택형태

(단위 :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1987	79.3	18.3	1.9	0.5
1997	61.4	35.2	2.1	1.4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표 7-5-2〉 가구원 규모별 원하는 주택규모(1997)

	1인	2인	3인	4인
원하는주택규모(평)	24.0	27.8	30.6	32.5
원하는 방수(개)	3.0	3.4	3.6	3.8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거기준 11.2평의 3배 정도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남쪽이나 동남쪽으로 향한 집을 선호해 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다소의 제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남향 선호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최근 실시된 일련의 조사결과를 <표 7-6>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남향이거나 동남향이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992년 75.5%에서 1996년 59.4%로 줄었다. 반면, 전망이 좋다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같은 기간에 24.5%에서 40.6%로 늘어 주택의 방향에 대한 고정관념도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표 7-6〉 원하는 아파트 방향

(단위 : %)

	반드시 남향 또는 동남향이어서 한다	전망이 좋다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1992	75.5	24.5
1996	59.4	40.6

자료 : 공동주택연구회, 『도시 집합 주택의 계획』, 1997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호하는 주택과 거주지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규모나 형식적인 기준보다 개인의 선호도와 환경에 대한 배려가 좀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규모의 감소, 집 밖에서 머무는 시간의 증가, 1인 가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 주거비용의 양극화, 승용차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사정의 악화 및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공간 개념의 변화 등에 따라 향후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과 거주지는 다양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화, 개성화, 환경 친화적 경향, 주택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개인 사생활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우리의 주거환경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주거비용

주거비용

<표 7-7>은 가구의 주거비 지출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의 주거비 지출액이 농촌지역보다 크며, 가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도시지역이 더 높다. 도시가계의 경우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까지는 8~10% 수준에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1년 10.3%를 고비로 낮아지고 있다. 1999년은 지난 25년이래 가장 낮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가계의 경우 1989년 9.0%를 고비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은 6.1%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7-8>은 주택거래가격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1998년에는 1990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1993년 이후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지는 현상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8년 이전까지 계속 상승한 반면, 단독 주택의 매매가격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단독 주택의 가격은 감소하고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가격은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상승하였으며 증가폭은 아파트가 가장 컸고, 1997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1998년 전세가격은 일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표 7-7> 주거비¹⁾

(단위 : 원. %)

	도시 가구		농 가		B/A
	연 간	주거비	연 간	주거비	
	주거비(A)	비 율	주거비(B)	비 율	
1980	191,292	8.9	143,895	6.7	75.2
1985	370,992	9.8	358,612	7.6	96.1
1990	842,628	10.2	644,921	7.8	75.7
1995	1,289,016	8.5	1,187,231	8.0	90.2
1998	1,235,184	7.8	974,391	5.9	78.9
1999	1,316,676	7.4	1,037,675	6.1	78.8

주 : 1) (주거비+가구집기·가사용품)임
단. 농가는 문화용품도 포함
자료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 지표』

<표 7-8> 도시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1995.12월 = 100)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계	단독	연립	아파트	계	단독	연립	아파트
1993	100.3	101.4	100.3	98.3	92.3	94.8	90.8	89.5
1994	100.2	100.7	100.2	99.3	96.5	97.4	95.8	95.5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01.5	99.8	100.5	103.5	106.5	103.2	105.4	110.2
1997	103.5	99.2	101.1	108.4	107.4	103.1	106.1	112.0
1998	90.7	88.1	89.2	93.7	87.6	86.0	86.7	89.4
1999	93.8	86.8	87.5	101.7	102.3	89.0	100.0	113.3

주 : 매년 12월 지수임
자료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각 호

주택마련시기

우리 국민 대부분은 주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해 독립된 가정을 꾸밀 때 자기 주택을 갖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아직까지는 공공서비스나 공공복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이 아니라 상품으로 매매되는 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는 한정적인데 비해 비농업적 토지를 이용한 결과물인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컸던 나라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형성하여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을 결혼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결혼한 후 몇 년만에 주택을 마련하며,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이사를 평균 몇 번이나 하며, 자기 집을 처음 장만할 때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표 7-9>에서 살펴보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을 한 뒤,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평균 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7년(8년 5개월)에 비하면 내 집을 장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길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주택을 장만하기까지 이사를 다닌 횟수는 3.6회로 5년 전보다 이사횟수도 늘었다.

1997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28.6세, 여자 25.7세인 것을 감안하면 남자는 40세, 여자는 37세 정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년 전인 1987년에는 남자 나이 35세 전후에 최초로 내 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하는 시점이 연령 기준으로 5세 정도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기간의 확대와 경제활동참가 기회의 증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도 한 요인이겠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증가한 점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7-9> 결혼 후 내집마련까지 소요기간 및 이사횟수

	1987	1992	1997
평균 소요기간	8년 5개월	9년 1개월	10년 11개월
평균 이사횟수	-	3.4회	3.6회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표 7-10>의 주택자금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할 때 소요되는 주택구입 경비는 주로 본인의 저축을 통하여 많이 조달했으며, 융자를 이용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마련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났다. 결혼하기 전에 내 집 장만을 한 경우는 상속에 의한 주택구입비 조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결혼 후 주택을 장만한 경우는 저축이나 은행융자 등 자신의 노력으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장만한 사람 네 명 중 세 명은 스스로 주택구입비를 준비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보조 받는 형태로 주택을 장만하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 결혼 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상속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주택 구입까지 부모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독특한 현상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7-10〉 주택마련 자금조달 원천(1997)

(단위 : %)

	저 축	용 자	상 속	부모, 친척, 보조	기 타
전 체	43.0	11.8	21.8	14.4	9.0
결혼전	18.0	5.2	53.6	19.3	3.9
결혼후	47.2	12.9	16.5	13.6	9.8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제4절 주거환경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우리사회에서도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도시 과밀화에 따른 주거문제, 환경문제, 교통 및 근린시설 확충 문제 등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아래 주거환경의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단순한 삶

의 물적 토대로서의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에 관한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주거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서비스 분배에 대한 시장기능을 살리고 개인의 후생복지와 가족의 안녕,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 즉,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주택 문제에 접근해 본다.

주거의 질은 주거면적 및 사용 가능한 방수 등으로 표현되는 생활공간, 주택 부대시설, 그리고 주거환경 등 크게 세 가지 관심영역으로 구분해 살필 수 있다. 주택 면적이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질을 평가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주택의 외적 환경, 즉 주차장 확보 여부나 근린시설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 등에서는 주거의 질을 살펴볼 때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과밀 지표, 상수도 및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의 수준 등을 적어도 고려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국가의 주택 사정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뿐으로, 국민의 거주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미흡한 감이 있다.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지표의 범위도 주택이라는 재화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까지 넣어야 한다. 주거환경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제, 사회, 물리적 조건들을 포함한 유형·무형의 외부적 조건이다. 좁은 의미로는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와 관

런된 여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안전, 편리, 사회, 쾌적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구당 사용 평수와 방수를 통하여 사회성을 살펴보겠다. 사회성은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밀도에 의한 주거의 질 저하 등을 살펴 보겠다. 또한 주택부대시설을 통해 쾌적성과 편리성을 조명해 보고, 주차장 확보 여부 및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실태를 살펴 안전성과 심리적 편안함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다. 또한 녹지 및 공지의 확보 수준도 주거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함께 살펴 보겠다.

주거 공간

(1) 주거면적

<표 7-11>에서 주거공간의 변화를 보면, 주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현재 1인당 주거면적은 17.2㎡로, 1975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58.6㎡(17.8평)에 달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인구 1인당 토지사용량은 대체적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지가 압력으로 인한 주거지의 고

밀도 개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하지만, 토지 가격의 상승과 한정된 공급량으로 공동주택 형태가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의 고층화와 고밀도화를 통해 이러한 주거면적 증가분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밀도가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지 개발에서 지가 압력의 극복은 앞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7-11> 주거공간의 변화

(단위 :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최저 주거기준안) ^{a)}
1인당 주거면적	8.2	10.1	11.3	13.8	17.2	-
가구당 주거면적	41.4	45.8	46.4	51.0	58.6	37
주택당 주거면적	57.9	68.4	72.6	81.5	87.1	-

주 : 1) 건설교통부 발표 4인가족 기준의 2000년 최저 주거기준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호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2) 사용하는 방의 수

가구당 사용하는 방의 수는 1990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방 한 개당 사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1995년 가구당 사용방수는 3.1개이다. 평균 가구원이 3.3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1인당 방 하나씩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사용 방수를 평균적으로만 볼 경우, 방 한칸 없는 노숙자나, 단칸방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간과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서울에서 단칸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31.5%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25.8%의 가구가 단칸방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후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1995년에는 서울이 14.5%, 전국적으로는 12.3%로 절반이하로 크게 줄었다.

최근 가구유형의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가 1인 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젊은 미혼인

구의 학업·직장으로 인한 단독이동, 초혼 연령 상승, 교육수준 향상, 여성 취업기회 증가 등으로 미혼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장년층의 이혼·별거·사별로 인한 단독 가구도 늘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도 늘고 있다. 실제로 단독가구는 1990년 전체가구의 9.0%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12.7%로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이 미혼·장년·노년의 1인 단독가구가 크게 늘었음에도 단칸방 거주 가구의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주거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단칸방에 사는 가구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이며 나머지 세 가구는 2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단칸방에 사는 가구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평균 사용 방수가 증가하고, 방 1개당 사용 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

〈표 7-12〉 사용 방 수

(단위 : 개, 명)

	1975	1980	1985	1990	1995
가구당 사용방수	2.2	2.2	2.2	2.5	3.1
1방당 사용인구	2.3	2.1	1.9	1.5	1.1

주 : 방에는 침실, 거실, 식당 등의 공간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각 호

〈표 7-13〉 단칸방 사용가구

(단위 : 가구, %)

			총가구수	단칸방 사용가구			
				1인 거주가구		2인 이상 거주가구	
					구성비		구성비
전 국	1990	11,354,540	2,924,613	703,770	24.1	2,220,843	75.9
	1995	12,958,181	1,589,752	787,984	49.6	801,768	50.4
서 울	1990	2,814,845	885,750	205,281	23.2	680,469	76.8
	1995	2,965,794	431,461	216,265	50.1	215,196	49.9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호

거빈곤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경우 전국 가구의 6.2%, 서울 지역은 7.3%가 단칸방에 2인이상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에 사는 경우, 기본 편익시설의 미비, 주거과밀에 따른 심리적 긴장감,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등 삶의 질이 열악할 수 있으므로 거주환경의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199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인 단독가구는 평균 3개의 방을, 5인 가구는 4개의 방을, 식구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4.2개의 방을 원하는 등 가족의 구성원수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너 개의 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 면적과 주택 만족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불만의 원인은 10년 전과 비교해 차이가 많다. 특히 주택이 좁고 일조나 통풍이 나쁘다는 등 주로 고층화되는 아파트형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화로 시설이 확충·개선되는 난방시설·상하수도 등 주택부대시설은 불만이 많이 줄고 있다.

주거환경과 삶의 질

최근 가치관의 변화, 소득의 향상, 기술의 발달 등 사회 문화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더구나 21세기에는

도시화의 성숙, 소득과 소비 유형의 선진화, 노동시간 단축 및 여가생활의 증가 등 생활 여건도 빠르게 변화해 거주환경도 이에 부응해 유연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주거지역에 대한 불만 사유를 살펴보고,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하는 가치나 환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1)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1997년 현재 28.7%의 국민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해 만족을 표시해 5년전인 1992년의 25.6%보다 근소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비중이 여전히 28.6%나 돼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에 버금간다는 점이다.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15>에서처럼 5년 전과 비교해 차이가 많다. 특히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이 두 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1997년에 불만이 가장 많은 사항은 거주지역의 주변환경으로 네 명 중 한 명 정도는 주변환경의 안정성이나 쾌적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대규모로 개발 공급된 대단위 공동주택 거주지의 경우, 간선도로를 따라 도심 업무기능 등이 이전되면서 고급주거지가 발달하고, 도시 외곽 지역에

는 소형아파트 중심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한편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거주지역 개발 및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가 형성되거나 저소득층 중심의 거주지와

고급 거주지가 병존하게 됐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거주지 바로 건너편에 상가와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의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사례도 잦았다.

<표 7-14> 주택에 대한 불만요인

(단위 : %)

	주택	일조	주택	난방및	상하수	기타
	규모	통풍	노후	부대시	시설	
	협소	불량		설미흡	미흡	
1987	29.6	4.4	25.9	31.9	6.6	1.6
1997	33.8	8.6	25.5	20.2	3.7	8.2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표 7-15>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성 비		불 만 요 인					
	만족	불만	주변	교통	공해	편의	주차	기타
1992	25.6	32.3	12.1	24.8	26.2	23.5	-	13.4
1997	28.7	28.6	22.5	22.2	9.8	16.2	15.0	14.3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그 다음은 교통사정에 대한 불만은 꼽는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건립과 자가용 보급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도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 거주지를 형성할 때 가장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은 주거지역에 적합한 주변환경의 확충과 주차시설을 포함한 기본 편의시설의 확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공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비중이 5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이는 공해를 포함한 자연환경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관심이 상대적으로 준 때문으로 보인다.

(2) 주거환경의 쾌적성

주거환경이 쾌적한지에 따라 거주지에

<표 7-16> 도시공원 면적

(단위 : m²)

	총면적 (천 m ²)	1인당면적	자연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1990	713.8	22.1	15.2	6.0	0.2	0.7	-	
1995	720.1	19.9	12.8	8.4	0.3	0.6	0.1	
1996	792.6	21.0	13.0	8.6	0.3	0.6	0.1	
1997	920.6	22.5	12.9	8.4	0.4	0.6	0.2	
1998	969.6	23.5	13.7	8.5	0.4	0.7	0.2	
1999	981.0	23.6	13.8	8.6	0.4	0.7	0.2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며, 이는 거주자의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쾌적성이란 안전성·편리성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함께 좀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요소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가장 기본적 조건의 하나는 거주지역 근처에 녹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음·공해를 차단하는 일이다. 이밖에 일조와 통풍의 확보, 심미적 만족감 등 주택 외적인 경관미도 쾌적함과 관련이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주민의식이 성숙할수록 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많지 않지만, 먼저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변화를 통하여 녹지 확보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 22.1㎡에서 1999년 23.6㎡로 늘어났다. 이는 주로 근린공원의 면적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즉, 1990년에 비해 면적이 증가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1인당 6.0㎡에서 8.6㎡로 2.6㎡나 늘었으며, 그밖에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자연공원의 면적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따라서 최근의 녹지 공간 조성은 거주지 중심으로 주변 근린공원을 늘려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린공원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며, 주거환경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거환경 내에서 자연친화적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도로의 차 소음·매연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노력할 때 쾌적성은 높아질 것이다.

(3) 주차 공간

단독주택의 승용차 차고지 확보나 공동주택의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는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편리성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령, 공동주택 거주지 내에 지상주차장을 만들면 기능적으로 편리해 지긴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성과 경관을 고려한 쾌적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표 7-17〉 승용차 차고(1997)

(단위 : %)

	승용차		승용차 사용합					
	사용안함	사용합	자기주차장	주차장	도로상	공휴지	집앞도로변	기타
전체	54.6	45.4	46.9	7.1	4.2	7.2	33.3	1.2
단독주택	64.0	36.0	20.8	8.8	5.9	11.4	51.6	1.5
아파트	28.2	71.8	94.9	2.2	0.4	0.5	1.4	0.6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이고 질적인 면도 주거환경 조성 때 고려해야 한다.

1997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승용차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45.4%이며 2000년엔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파트 거주 가구는 1997년 71.8%, 보증부 월세가구도 32.5%가 승용차를 사용하며, 30대 가구주 가운데 60.7%가 승용차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를 결정하는 주요 연령층이 30대 가구주임을 감안할 때 승용차 차고지 확보 및 주차장의 기능 및 질적 수준은 중요한 주거환경으로 이미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야간에 '자기주차장'을 이용하는 가구는 46.9%로 주차장을 확보해 편리하게 쓰는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94.9%가 아파트단지내의 주차장을 이용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단독주택은 자기주차장 비율이 20.8%에 불과하고 주로 '집앞 도로변'(51.6%)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승용차 차고지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선결 문제다. 승용차 사용자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내의 안전성을 봐서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지역인 경우는 되도록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지상부분은 녹지로 조성하거나 보행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쾌적함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주거지역 내의 자동차도로는 차량속도를 줄이

도록 곡선·문턱 처리를 하는 것도 주거지역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중전엔 주거의 문제를 주로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양적 측면에서 접근해 왔으나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2000년대에는 복지의 한 측면으로서 주택의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주택보급률의 확대와 신도시 개발 및 국토의 균형적 개발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리를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 결과, 한국의 주거환경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도시화와 산업화,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주거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주택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이 두드러진다.

1997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0년대에 시작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주택의 양적인 공급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상하수도, 화장실, 난방시설 등이 거의 모든 주택에 보급돼 기본적 주택 부대시설의 확충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과 주거환경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 분배적 기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 때가 됐다. 특히 한정된 토

지를 이용한 상품인 주택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배의 불균형과 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는 분석과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에서도 주택이 더 이상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나 공공복지의 대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물적 토대로 간주돼야 한다. 또한 도시적 삶의 형태가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공간 및 도시의 일반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과 공동거주지역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화상회의·통신유통 등의 확대는 만남이나 쇼핑 등의 일상 교통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도심 입지를 선호했던 기존의 업무기능도 통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대도시 외곽으로 옮겨질 수 있다. 통신기기의 보급 및 발전으로 재택근무의 확산도 예상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주거문화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여 이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8 장 교 육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교육 발전의 두 축은 양적 팽창과 질적 내실화로 볼 수 있다. 정부수립 후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인하여 교육기회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1970년대 초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기 전까지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주로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1985년 헌법상에 9년제 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의 부담때문에 사실상 6년제 무상 의무교육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의무교육을 강제하기도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완전취학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에서 소요되는 교육재정을 전담하지도 않고, 취학을 법으로 강제하기도 전에 보통교육이 완성되었고 뒤이어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팽창 과정은 산업화 전략의 변화에 상응하는 양상을 나타내 각 산업화 시기별로 요구되는 인력의 유형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초등교육이 매우 빠르게 팽창하였으며,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단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기본교육 기회 확대는 인구증가의

억제에도 기여해 경제성장의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1970년대 중등교육의 팽창과 직업·기술 교육의 강화는 산업화에 필요한 숙련기능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고등교육의 확대로 대졸 인력이 쏟아져 나오으로써 기술·지식·정보 집약적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 생산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학생·교원에 대한 변화양상과 교육여건의 변화, 그리고 교육결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1절 학교, 학생, 교원

학교수

인구나 경제여건의 변화,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에 따라 학교수는 변동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는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유치원의 경우 1965년에 423개였던 것이 2000년에는 8,494개로 약 20배 이상 늘었다. 특히 1980년에서 1985년까지 5년 사이에 7배나 증가하였다. 초등학교는 1965년 5,125개이던 것이 1985년 6,519개로 1,394개가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 1,252개가 감소하여 2000년 현재

5,267개다. 중학교는 1965년 1,208개에서 2000년 2,731개로 2.3배 늘었다. 고등학교는 1965년 701개교에서 2000년에는 1,957개교로 2.8배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문대학은 3.3배로, 4년제 대학교는 2.5배 증가하였다.

각급학교(특수학교, 기타학교, 공민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교 등은 제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교, 대학의 지방 캠퍼스와 대학원도 제외)의 전체 숫자

는 1965년 7,575개였으나, 2000년에는 1만8,768개로 지난 35년간 1만1,193개, 2.5배가 됐다. 전체 학교 중 유치원이 45%를, 초등학교는 28%를 차지한다. 중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15%, 고등학교는 10%, 전문대학과 대학은 각각 1%의 비율이다.

학교수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 및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고등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늠케 한다.

〈표 8-1〉 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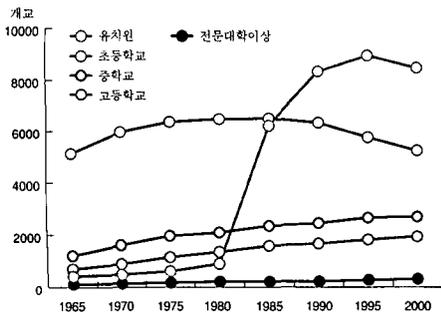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965	423	5,125	1,208	701	48	70
1970	484	5,961	1,608	889	65	71
1975	611	6,367	1,967	1,152	101	72
1980	901	6,487	2,100	1,353	128	85
1985	6,242	6,519	2,371	1,602	120	100
1990	8,354	6,335	2,474	1,683	117	107
1995	8,960	5,772	2,683	1,830	145	131
2000	8,494	5,267	2,731	1,957	158	161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학생수

학생수에 관한 통계는 학교 교육의 규모와 교육기회를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학생수의 변화는 취학 적령인구의 증감과 학생 수용능력 그리고 교육기대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 변화는 취학 적령인구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단계에서는 취학 적령인구보다는 교육정책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림 8-1] 학교급별 학교수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에 627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2000년에는 1,108만명으로 480만명이 증가하여 1.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각 학교 급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생 수는 1965년에 2만명이 채 안되었으나 2000년에는 54만명으로 2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1980년부터 1985년까지 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초

등학교의 경우 1965년 494만명이던 학생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중학교는 1965년에 75만명이던 학생수가 1975년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203만명이 되었으며,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현재 186만명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1985년 이후 학생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207만명이 재학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는 훨씬 많이 증가하였는데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1965년에 2만 3천명에서 2000년에는 1965년의 40배에 가까운 91만명으로, 대학은 1965년 11만명에서 1985년에는 93만명으로, 2000년엔 1965년의 16배에 해당하는 167만명으로 늘었다.

각급학교별 학생수의 구성비를 보면 1965년은 유치원생 수가 0.3%, 초등학생 78.8%, 중학생 12%, 고등학생 6.8%, 대학생 1.7%였으나 2000년에는 유치원생 4.9%, 초등학생 36.3%, 중학생 16.8%, 고등학생 18.7%, 대학생 15%로 나타났다. 1965년에는 초등학생이 압도적이었으나, 2000년에는 초등학생수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유치원의 원아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및 대학은 학생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학교급별 학생수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수 증가는 국가 의무교육의 실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원아수의 증가는 취학 적령 원아수의 증가보다는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즉,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초등·중학교 교육에서 유치원 교육으로 조기교육의 열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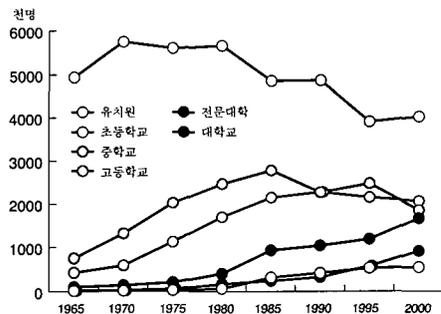
〈표 8-2〉 학교급별 학생수

(단위 : 천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965	19.6	4,941.3	751.3	426.5	23.2	105.6
1970	22.3	5,749.3	1,318.8	590.4	33.5	146.4
1975	32.0	5,599.1	2,026.8	1,123.0	62.9	209.0
1980	66.4	5,658.0	2,472.0	1,696.8	165.1	403.0
1985	314.7	4,856.8	2,782.2	2,152.8	242.1	931.9
1990	414.5	4,868.5	2,275.8	2,283.8	323.8	1,040.2
1995	529.3	3,905.2	2,481.8	2,157.9	569.8	1,187.7
2000	545.3	4,020.0	1,860.5	2,071.5	913.3	1,665.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2] 학교급별 학생수



크게 기여하면서 입학정원의 확대와 졸업 정원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다. 즉 이는 학급수 대비 학생수의 비율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밀도를 나타낸다. 2000년 현재 초등학교는 35.8명, 중학교 38명, 일

반계고등학교 44.1명, 실업계고등학교 40.3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을 197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58%, 중학교 61%, 일반계 고등학교 73%, 실업계 고등학교는 7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교실 밀도가 점점 낮아졌다는 것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교사와 학생간 좀 더 상호작용할 여건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취학률

취학률은 취학 적령(만 4~21세) 인구 가운데 유치원(만 4~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만 18~21세)에 재학 중인 학생비율을 나타낸다. 유치원 취학률을 보면 1970년에 1.3% 이던 것이 1985년에는 18.9%이고 1995년에는 39.9%, 그리고 2000년에는 38.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때문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취학률을 보면 1970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에 달하였으나 중학교 51%, 고등학교 28%, 그리고 대학은 8.4%에 불과하였다. 1970년대 들어 중학교 무시협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중등교육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실업계 고교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1960년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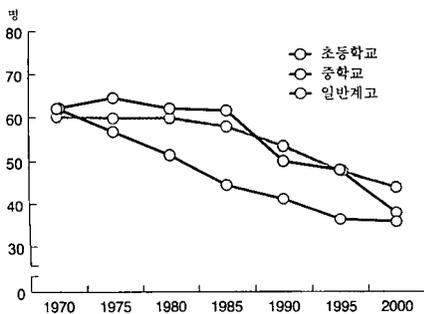
〈표 8-3〉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1970	62.1	62.1	60.1	56.1
1975	56.7	64.5	59.8	57.0
1980	51.5	62.1	59.9	59.6
1985	44.7	61.7	58.0	55.5
1990	41.4	50.2	53.6	51.5
1995	36.4	48.2	48.0	47.9
2000	35.8	38.0	44.1	40.3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3]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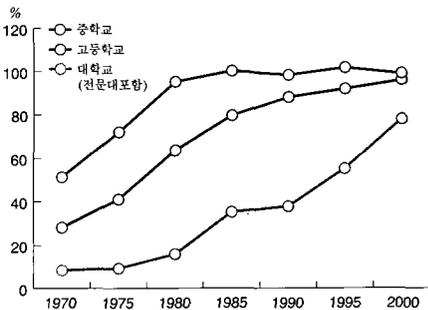
〈표 8-4〉 학교급별 취학률

(단위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포함)
1970	1.3	100.7	51.2	28.1	8.4
1975	1.7	105.0	71.9	41.0	9.3
1980	4.1	102.9	95.1	63.5	15.9
1985	18.9	99.9	100.1	79.5	35.1
1990	31.6	101.7	98.2	88.0	37.7
1995	39.9	100.1	101.6	91.8	55.1
2000	38.1	97.6	98.8	95.8	77.8

주 : 취학률 = 학교급별재학생수/학교급별 취학 적령인구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4] 학교급별 취학률



부의 강력한 정원통제 정책에 따라 고등교육 팽창이 억제되었으며, 1970년대에도 산업 수요상 필요한 분야만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대학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정책이 바뀌면서 고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하여 2000년에 77.8%의 높은 취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 팽창의 양상은 초등학교부터 차례차례 그 위 단계 학교

급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교육이 거의 완전한 취학 상태에 도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중등교육이 팽창하였으며, 중등교육 이수자들이 배출되면서 고등교육이 팽창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교육의 팽창이 억제된 가운데 초등교육이 팽창하였고, 초등교육이 보편화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중등교육이 팽창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진학률

진학률은 졸업생 중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진학률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쟁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99.9%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99.5%이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68% 정도다. 1970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이 66.1%이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70.1%, 그리고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26.9%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가장 큰 변화(77.2→95.8%)를 보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도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가장 큰 변화(74.7→84.5%)를 보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가 가장 큰 변화(33.2→51.4%)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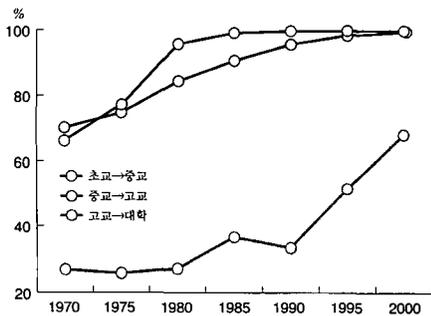
〈표 8-5〉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초교→중교	중교→고교	고교→대학
1970	66.1	70.1	26.9
1975	77.2	74.7	25.8
1980	95.8	84.5	27.2
1985	99.2	90.7	36.4
1990	99.8	95.7	33.2
1995	99.9	98.5	51.4
2000	99.9	99.5	68.0

주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 100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5] 학교급별 진학률



진학률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수준에서 대학교육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은 높은 교육열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고등 전문인력 수요에 따른 것이다.

전공분야별 대학생수

대학에서는 학문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학과 또는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과들을 개설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사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등전문 인력들은 이공계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많은 분야는 자연계열(43.8%)이며, 다음으로 사회계가 26.7%를 차지한다. 그리고 의약계가 3.7%, 예·체능계 8.3%이며, 사범계가 4.0%를 차지한다. 인문계의 학생비율은 1970년 12.1%에서 2000년 13.5%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 역시 1970년 24.4%에서 2000년 26.7%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자연계도 마찬가지이다. 40.5%였던 1970년에 비해 2000년 43.8%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약계의 경우,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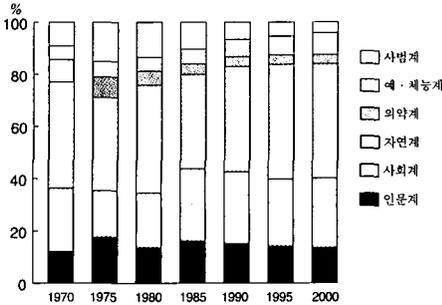
〈표 8-6〉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

(단위 :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 능계	사범계
1970	12.1	24.4	40.5	8.8	5.3	8.9
1975	17.5	17.9	35.6	8.0	6.0	14.9
1980	13.5	21.1	41.2	5.5	5.4	13.3
1985	16.1	27.7	36.1	4.2	5.7	10.2
1990	15.0	27.6	40.4	3.9	6.6	6.5
1995	14.0	25.8	44.0	3.8	7.1	5.3
2000	13.5	26.7	43.8	3.7	8.3	4.0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6]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



에 8.8%이었으나 2000년 3.7%로 크게 줄었다. 사범계는 1970년 8.9%이던 학생 비율이 1975년에는 14.9%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 4.0%로 1970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예·체능계는 1970년 5.3%이던 학생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다 2000년 8.3%로 증가했다.

교사 대 학생의 비율

교육은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교원 수 대비 학생수 비율은 교사의 수업부담,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여건 지표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현재 유치원의 경우 19.5명이며,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20.1명, 고등학교 19.9명, 전문대학 78.0명, 대학은 39.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1970년과 비교하면, 유치원은 1.4배, 전문대학은 3.8배, 대학은 2.1배로 늘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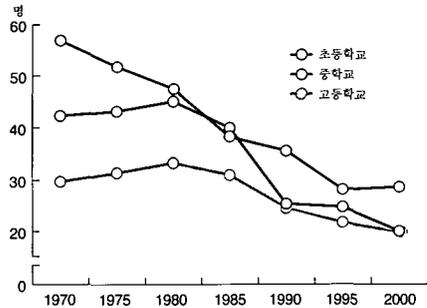
<표 8-7>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1970	13.4	56.9	42.3	29.7	20.5	18.8
1975	14.9	51.8	43.2	31.4	22.9	20.7
1980	19.9	47.5	45.1	33.3	30.1	27.9
1985	33.9	38.3	40.0	31.0	37.8	35.8
1990	22.4	35.6	25.4	24.6	43.9	31.2
1995	20.7	28.2	24.8	21.8	54.9	26.3
2000	19.5	28.7	20.1	19.9	78.0	39.7

주 : 교원 1인당 학생수 = $\frac{\text{학생수}}{\text{교원수}}$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7] 교원 1인당 학생수



50%, 중학교는 52%, 고등학교는 33% 감소하였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OECD 국가 평균은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17.1명, 중학교 14.9명, 고등학교 15.1명, 대학교 14.8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1998)

(단위 : 명)

	유치원	초교	중교	고교	전문대	대학
OECD평균	15.5	17.1	14.9	15.1	12.5	14.8
오스트리아	18.6	12.7	9.3	9.7	...	15.7
캐나다	16.2	21.0	21.0	23.1
체코	15.9	19.2	18.1	13.0	11.4	14.3
독일	23.2	21.6	16.3	13.6	13.6	12.2
그리스	15.9	13.6	11.4	11.6	21.9	28.5
헝가리	12.1	11.0	11.1	10.5	...	11.8
일본	19.3	21.4	17.3	14.4	9.5	13.1
한국	23.6	31.0	22.5	23.1
뉴질랜드	5.6	24.7	25.9	16.8	12.4	16.6
스페인	18.3	16.0	-	-	10.2	17.9
스웨덴	...	13.4	13.2	17.0	-	9.0
스위스	18.7	16.3	12.1	17.6
영국	21.5	22.0	16.7	16.7	-	-
미국	18	16.5	17.1	14.7	12.5	15.2
아르헨티나	...	24.8	19.0	17.4
브라질	...	27.3	35.2	36.3
말레이시아	...	21.6	19.7	20.4
태국	...	20.9	24.3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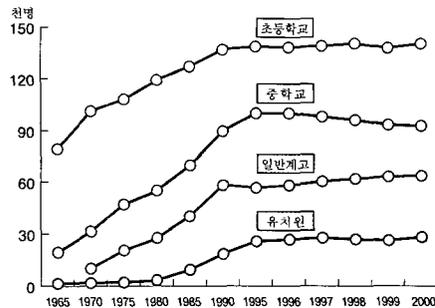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교육지표』, 2000

교원수

학교 교육의 주요 주체의 하나는 교원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막중하다. 학교 급별 교원 수는 교육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교원 수의 변화는 학생 적령 인구의 변동,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여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급별로 교원 수를 보면, 2000년 현재 유치원에 2만8천명, 초등학교에 14만명, 중학교에 9만3천명, 일반계고등학교에는 6만3천명, 실업계고등학교에 4만1천명의 교원이 있다. 이는 학생의 수에 비례하여 교원의 수도 증가한 결과로서, 유치원은 1970년에 비하여 16.8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림 8-8] 학교급별 교원수



<표 8-9> 학교급별 교원수

(단위 :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1965	1,402	79,125	19,255	-	-
1970	1,660	101,095	31,207	9,845	10,009
1975	2,153	108,126	46,917	20,415	15,340
1980	3,339	119,064	54,858	27,480	23,468
1985	9,281	126,785	69,553	40,040	29,506
1990	18,511	136,800	89,719	58,074	34,609
1995	25,576	138,369	99,931	56,411	42,656
1996	26,621	137,912	99,928	57,803	43,788
1997	27,586	138,670	97,931	60,110	44,294
1998	26,721	140,121	96,016	61,680	44,265
1999	26,164	137,577	93,244	62,944	42,360
2000	28,012	140,000	92,589	63,374	40,977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초등학교는 1.4배, 중학교는 3배, 일반계고등학교는 6.4배, 실업계고등학교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교원의 증가는 교원에게 할당되는 학생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는 학생들에게 좋

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 교원 비율

우리나라 공립교육기관의 교원들 중 여성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치원 100%, 초등학교 61%, 중학교 58%, 일반계 고등학교 28%, 실업계 고등학교 25%이다.

미국의 경우 유치원 94%, 초등학교 86%, 중학교 60%, 일반계 고등학교 51%가 여성교원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유치원 95%, 초등학교 75%, 중학교 57%, 일반계 고등학교 50%, 실업계 고등학교 42%가 여성교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OECD 국가들도 초등·중학교에는 여성교원이 많으며, 고등학교는 25~70%대의 비율로 여성교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표 8-10〉 공립교육기관의 학교급별 여성교원 비율(1996)

(단위 : %)

	유치원	초 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등 학 교	실업계 고 등 학 교
OECD평균	95	75	57	50	42
호 주	98	83	61	55	46
벨 기 에	-	80	52	-	-
캐 나 다	67	67	67	67	...
체 코	100	93	76	63	50
덴 마 크	92	62	62	46	40
핀 란 드	96	68	68	63	54
프 랑 스	-	77	56	-	-
독 일	97	81	56	36	36
그 리 스	100	55	61	5	45
헝 가 리	100	94	76	68	51
아일랜드	-	79
이탈리아	100	93	72	57	-
일 본	89	60	39	27	28
한 국	100	61	58	28	25
네덜란드	-	74	33	-	42
뉴질랜드	94	79	-	55	...
노르웨이	95	64	-	48	...
스 웨 덴	...	83	58	51	43
스 위 스	98	69	37	37	...
터 키	100	43	41	41	38
영 국	-	90	-	57	...
미 국	94	86	60	51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98 OECD 교육지표』, 1998

제2절 교육 환경

컴퓨터 한대 당 학생수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정보화는 개별 학교와 교육계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정보화의 기초가 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정부는 교육분야의 정보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정보 개발 및 보급, 정보기술 활용 교육, 교육행정 정보화, 그리

고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교육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보급이 기본이 된다. 컴퓨터 보급을 보면, 컴퓨터 한 대당 학생수가 2000년에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0.2명, 고등학교 6.2명이다. 1991년에 초등학교가 54.8명이었고, 중학교 65.7명, 고등학교 51.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표 8-11> 컴퓨터 1대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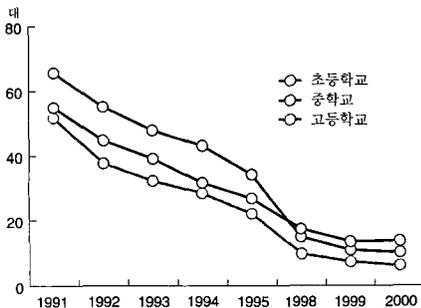
(단위 : 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1	54.8	65.7	51.6
1992	44.8	55.1	37.8
1993	39.3	47.9	32.5
1994	31.8	43.1	28.6
1995	27.0	34.4	22.2
1998	17.3	14.8	9.7
1999	13.4	10.8	7.3
2000	13.7	10.2	6.2

주 :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행정용, 교원용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9] 컴퓨터 1대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건물·대지·체육장 면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 현황을 보기 위해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을 보자.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한명이 차지하는 건물 면적이 6.0㎡이고, 중학교의 경우 6.7㎡이며, 고등학교는 8.3㎡, 대학의 경우는 8.1㎡이다. 1970년에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2.2㎡, 고등학교 3.7㎡, 대학의 경우는 14.3㎡이었다. 초·중등학교는 1970년에 비해 학생 1인당 면적이 크게 늘은

<표 8-12>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1970	1.5	2.2	3.7	14.3
1975	2.0	2.2	3.4	12.3
1980	2.1	2.0	2.6	11.5
1985	2.9	2.6	4.0	8.3
1990	3.3	3.6	4.4	10.5
1995	4.7	4.1	5.7	12.2
2000	6.0	6.7	8.3	8.1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표 8-13> 학생 1인당 대지 면적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1970	4.0	7.7	10.5	161.3
1975	5.3	4.9	9.6	92.9
1980	5.7	4.9	11.0	84.1
1985	6.9	4.8	9.2	54.5
1990	7.3	6.3	10.4	56.4
1995	9.2	6.5	12.3	57.5
2000	8.7	9.5	15.7	30.7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반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1970년에 비해 줄었다.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이 늘어난 것은 시설증축을 꾸준히 해 온 데다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를 감당할 건물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대지면적, 체육장 면적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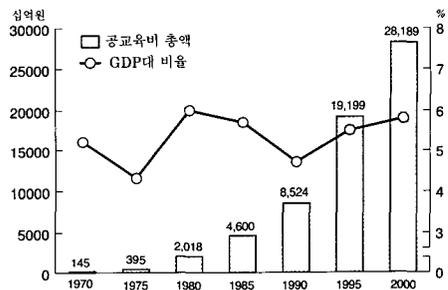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예산 중 공교육비의 비율을 보면 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경제 성장으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1970년 당시 1,455억원이었던 공교육비 총액이 2000년 28조1,886억원으로 30년 동안 194배로 커졌다.

한편, 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1970년 당시 5.2%였으며, 2000년엔 5.8%다. 초·중등 교육비가 0.4%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등교육비는 0.9%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엔 경제성장도 한 몫 했지만,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때문이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을 보면, 미국은 5.2%(1997년), 일본은 3.6%(1997년), 프랑스 5.8%(1997년)이며 OECD의 평균은 4.8%로 우리나라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그림 8-10] 공교육비



<표 8-14> 공교육비

(단위 : 백만원, %)

	총 계		초·중등교육비		고등교육비	
	공교육비총액	GDP대비	공교육비총액	GDP대비	공교육비총액	GDP대비
1970	145,465	5.2	117,829	4.3	27,636	1.0
1975	394,830	4.3	312,125	3.4	82,705	0.9
1980	2,018,062	6.0	1,482,905	4.4	535,157	1.6
1985	4,599,950	5.7	3,236,998	4.0	1,362,952	1.7
1990	8,523,807	4.7	6,145,394	3.4	2,378,413	1.3
1995	19,198,908	5.5	12,777,163	3.6	6,421,745	1.8
2000	28,188,506	5.8	18,785,325	3.9	9,403,181	1.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각 호

〈표 8-15〉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1997)

	(단위 : %)		
	총 계	초·중등 교육비	고 등 교육비
한 국	4.4	3.4	0.5
일 본	3.6	2.8	0.5
미 국	5.2	3.5	1.4
프랑스	5.8	4.1	1.0
OECD	4.8	3.4	1.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교육지표』, 2000

의 GDP 대비 초·중등 교육비는 3.4%, 고등 교육비는 0.5%인데, 일본의 경우는 초·중등 교육비가 2.8%, 고등교육비가 0.5%, 미국은 초·중등 교육비가 3.5%, 고등교육비가 1.4%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체 공교육비를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공교육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00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만3천원이고 중학교는 262만9천원, 고등학교는 280만1천원, 대학교는 367만2천원으로, 197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른 교육 투자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자. 1997년 프랑스의 유치원생들은 3,462달러를, 초등학생은 3,621달러를, 중학생은 6,087달러를, 고등학생은 7,167달러를, 전문대학생들은 7,683달러를, 대학생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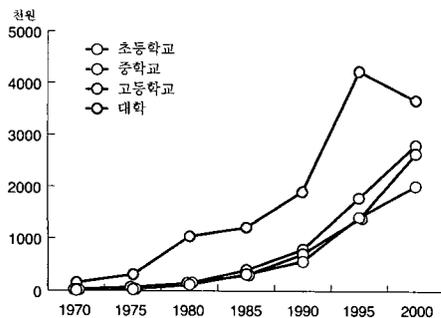
7,040달러를 지출했다. 일본의 유치원생들은 3,096달러를, 초등학생은 5,202달러를, 중학생은 5,512달러를, 고등학생은 6,314달러를, 전문대학생들은 7,750달러를, 대학생들은 10,623달러를 지출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치원생들은 1,676달러를, 초등학생은 3,308달러를, 중학생은 3,374달러를, 고등학생들은 3,652달러를, 전문대학생들은 4,346달러를, 대학생들은 8,512달러를 지출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유치원생들의 경우 3,788달러, 초등학생 3,769달러, 중학생 4,175

〈표 8-1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 천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1970	12	25	32	157
1975	27	40	73	313
1980	119	157	150	1,036
1985	319	300	398	1,210
1990	566	699	787	1,906
1995	1,412	1,380	1,785	4,227
2000	2,013	2,629	2,801	3,67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그림 8-1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 8-17〉 주요국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1997)

(단위 : 달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OECD평균	3,788	3,769	4,175	5,312	6,765	8,252
호 주	...	3,633	5,012	6,443	7,852	12,024
오스트리아	4,867	6,258	7,215	9,462	-	-
캐나다	3,492	14,872	14,783
핀란드	6,340	4,639	4,613	5,463	6,902	7,192
프랑스	3,462	3,621	6,087	7,167	7,683	7,040
헝가리	2,106	2,035	1,933	2,259	...	5,430
이탈리아	4,462	5,073	6,716	5,983	5,206	5,981
일본	3,096	5,202	5,512	6,314	7,750	10,623
한국	1,676	3,308	3,374	3,652	4,346	8,512
멕시코	979	935	1,443	2,320	-	4,519
스페인	2,520	3,180	3,295	5,335	4,301	5,217
스위스	2,451	6,237	7,393	10,833	14,825	16,560
영국	5,312	3,206	-	-	-	-
미국	6,158	5,718	-	-	-	-
칠레	1,929	2,115	2,220	2,337	4,616	9,820
말레이시아	332	820	-	-	6,237	9,129

주 : 공·사립 교육기관의 평균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교육지표』, 2000

달러, 고등학생 5,312달러, 전문대학생 6,765달러를, 대학생 8,252달러다. 이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대학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스위스로 1만6,560달러이며, 그 다음은 캐나다로 1만4,783달러이다. 그리고 전 교육 과정의 평균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스위스로 9,717달러였다.

학교 급별 학생 당 연간 납입금액

학생 당 연간 납입금액은 1년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다. 1999년 중학생들은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연간 40만3천원을 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공립학교에서는 80만2천원을, 사립학교에서는 81만8천원을, 실업계 고등학

〈표 8-18〉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

(단위 : 천원)

	중 학교		일 반 계 고등학교		실 업 계 고등학교		전 문 대 학		대 학			
									인 문 계		자 연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1975	46	46	64	68	61	68	-	-	138	245	153	298
1980	97	97	155	170	142	170	234	490	262	587	285	640
1985	155	155	263	290	239	290	528	718	761	1,073	872	1,098
1990	223	223	406	441	370	432	667	1,043	902	1,354	1,248	1,791
1995	342	342	661	673	609	596	1,678	2,662	1,659	2,754	1,945	3,366
1998	388	428	739	754	680	698	2,032	3,662	2,345	2,945	2,751	4,534
1999	403	403	802	818	738	757	2,032	3,662	2,375	2,948	2,787	4,53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99 교육통계편람』, 1999

교의 국·공립학교에서는 73만8천원, 사립학교에서는 75만7천원을 납입했다. 그에 비해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의 국·공립학교는 203만2천원을, 사립학교는 366만2천원을, 대학의 인문계열 국·공립학교는 237만5천원을, 사립학교는 294만8천원을, 자연계열의 국·공립학교는 278만7천원, 사립학교는 453만9천원을 냈다.

중학생의 연간 납입금액은 1975년에서 1999년까지 24년 동안 8.8배로 늘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가장 크게 늘었으며 지난 24년간 국·공립은 12.6배, 사립은 12.1배 인상됐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은 12.1배, 사립은 11.1배로 늘었다.

고등교육기관 역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대학의 경우 지난 24년간 인문계열 중 국·공립은 17.3배, 사

립은 12배로, 자연계열 중 국·공립은 18.2배, 사립은 15.2배로 늘었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및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중 고등교육 인력 현황은 한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구 10만명당 7,115명이다. 교육대학 등 각종 대학은 197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지만, 전문대학은 18배, 대학은 7.8배, 대학원은 23배로 늘었고 방송대학은 1975년의 12.5배, 산업대학은 1985년 이후 7배가 됐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는 국가의 교육입국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서 따른 것이다.

〈표 8-19〉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단위 : 명)

	총인구 (천명)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 학	대학원	방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전체고등 교육기관
1970	32,241	104	38	454	21	0	0	8	625
1975	35,281	156	24	592	39	61	0	8	881
1980	38,124	433	25	1,057	89	84	0	11	1,698
1985	40,806	593	45	2,284	167	375	50	43	3,557
1990	42,869	755	37	2,426	203	347	121	56	3,946
1995	45,093	1,264	44	2,634	252	699	268	38	5,198
2000	47,275	1,932	44	3,523	485	762	361	8	7,115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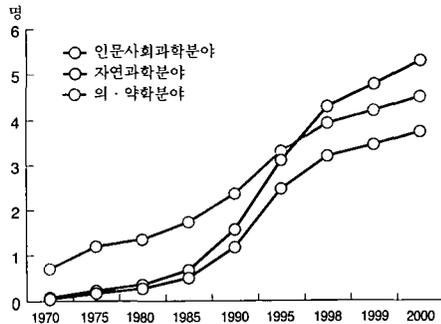
〈표 8-20〉 박사학위 취득자수

(단위 : 명)

	인문사회분야		자연과학분야		의약학분야	
	학위취득자	인구 1만명당 취득자수	학위취득자	인구 1만명당 취득자수	학위취득자	인구 1만명당 취득자수
1970	160	0.05	259	0.08	2,227	0.71
1975	580	0.17	813	0.23	4,155	1.20
1980	1,053	0.28	1,354	0.36	5,076	1.36
1985	2,043	0.51	2,730	0.68	7,044	1.74
1990	5,101	1.18	6,826	1.57	10,283	2.37
1995	11,031	2.48	13,892	3.12	14,804	3.32
1999	16,235	3.46	22,396	4.78	19,726	4.21
2000	17,751	3.75	25,033	5.30	21,324	4.51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편람』, 2000

[그림 8-12]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박사학위 취득자수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이 의·약학 분야였으나 1980~1990년대 들어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취득자는 오히려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의·약학 분야보다 많았다. 박사학위 취득자를 인구 1만명

당 비율로 보면 2000년에 인구 1만명당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3.75명, 자연과학 분야는 5.30명, 의·약학 분야는 4.51명이다.

취업률

교육 외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 사회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효과의 외적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취업률이다. 취업률은 당해 연도 졸업자들 중에서 취업 희망자 가운데 취업한 비율이다.

고등학교 중 일반계의 경우 취업률은 1970년 17%이던 것이 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15.7%가 됐다. 1980년 이후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1995년 26.4%로 늘었으나 2000년엔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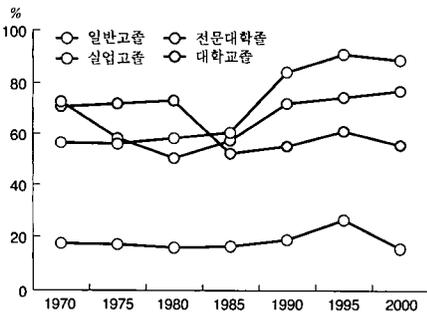
〈표 8-21〉 학력별 취업률

(단위 : %)

	일반고졸		실업고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7.3	17.9	56.4	55.2	72.6	78.4	70.6	50.5
1975	16.9	18.7	56.1	53.5	58.3	35.6	71.8	55.4
1980	15.7	21.3	58.2	62.8	50.3	50.6	73.0	55.2
1985	16.2	24.2	60.4	65.6	57.2	49.9	52.1	31.7
1990	18.7	27.1	84.0	86.7	71.8	68.2	55.0	39.7
1995	26.4	28.5	90.9	91.1	74.2	70.9	60.9	50.0
2000	15.4	16.8	88.6	89.3	76.7	78.2	55.4	53.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 지표』, 각 호

[그림 8-13] 학력별 취업률



다시 15.4%로 줄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 목적보다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학보다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70년 56.4%이던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 90.9%에 달했다가, 2000년 현재 88.6%로 약간 감소했다.

고등교육 이수자들 중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 72.6%이던 것이 1980년 50.3%까지 줄다가 다시 증가 추

세로 돌아 2000년 현재 76.7%이다. 반면, 4년제 대학은 전체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70.6%이던 1970년에 비해 2000년 현재 55.4%로 15%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졸업 후의 취업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 내외의 인문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인문계 고교가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인문계 고교 졸업자보다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더 선호한다는 뜻도 된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의 낮은 취업률은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전문대학

우리나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전공한 계열에 따라 직장을 구한다. 동일계 취업률은 사범계, 의약계, 예체능계가 상위 수준인 반면 인문계가 가장 낮다. 2000년의 경우 인문계는 53.4%, 사회계열은 72.0%, 자연계의 졸업자들은 72.1%가 동일계열에 취업했다. 의약계와 사범계는 계열의 특수성 때문에 각각 92.1%, 93.3%에 달한다. 예체능계는 75.2%가 동일계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과 비교하면 전 부문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인문계의 경우는 29.3%

〈표 8-22〉 대학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 취업률(전문대학)

(단위 :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70	24.14	25.93	55.80	61.21	69.62	65.93	66.67	77.78	68.91	65.32	-	-
1975	-	-	83.33	89.68	81.06	68.15	75.95	74.07	69.74	73.53	-	-
1980	-	-	32.89	44.44	96.15	92.74	97.78	100.00	47.17	46.15	-	-
1985	39.71	37.88	72.76	72.22	77.53	57.99	92.47	94.74	68.85	68.31	86.74	86.74
1990	63.52	65.85	74.70	74.06	79.83	71.22	92.53	94.18	79.98	80.22	94.74	91.51
1995	65.20	66.51	74.25	75.16	77.47	66.98	89.66	92.37	76.54	75.67	92.04	92.09
2000	53.41	54.10	71.99	72.61	72.07	66.48	92.05	93.57	75.22	75.38	93.30	93.43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표 8-23〉 대학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 취업률(대학교)

(단위 :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계	여자										
1970	73.74	70.26	64.48	50.96	75.05	69.11	88.88	92.70	77.81	85.40	87.98	82.90
1975	70.58	72.86	74.09	71.34	75.92	66.09	91.90	95.04	84.92	84.14	91.22	90.38
1980	68.68	70.87	72.52	74.40	77.67	70.32	93.97	95.43	79.18	80.17	88.11	91.23
1985	56.77	53.66	72.29	60.61	78.38	64.81	98.15	98.15	75.30	75.99	81.92	83.87
1990	53.25	49.68	71.05	57.26	75.46	60.80	96.83	95.62	80.00	84.56	75.23	77.74
1995	48.92	45.65	65.60	58.56	73.98	59.73	96.93	96.71	78.28	80.74	62.14	64.41
2000	43.36	43.90	59.19	56.53	69.94	60.66	96.91	96.56	80.52	84.15	75.53	78.30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포인트가 높아져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 대학

대학의 취업률은 전문대학과 상반된 현상을 보여준다. 우선, 동일계 취업률 수준이 의약계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전문대에 미치지 못한다. 인문계의 경우 동일계열 취업률이 43.4%로 전문대

와 비교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고, 사회계열도 59.2%로 전문대학보다 12%포인트 정도 낮다.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 계열은 전문대학과에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사범계열은 동일계열 취업자가 75.5%로 전문대학과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또 30년 전인 1970년에 비해 취업률이 감소한 계열이 많다. 인문계를

보면, 1970년 73.7%이던 취업률이 43.4%로 줄었고, 사회계는 64.5%에서 59.2%로, 자연계는 75.1%에서 69.9%로 감소했다.

학생의 체격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의 변화

는 어떠할까.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은 교육시설 계획을 입안하는데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장과 체중이 점차 커져 왔다. 1970년대 6세 아동의 신장은 112.9cm, 체중은 19.3kg이었던데 비해, 2000년 120.1cm, 23.2kg으로 신장은 약 7cm, 체중은 약 4kg 성장했다. 여학생들

〈표 8-24〉 연령별 학생의 신장

(단위 : cm)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세		8세		10세		11세		12세		14세		15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0	117.9	115.4	121.9	119.9	130.3	129.6	134.4	133.2	143.7	144.2	152.0	151.0	160.8	153.4	165.9	156.5
1975	118.3	117.8	120.8	121.9	132.5	132.2	136.8	137.6	143.4	145.2	153.9	153.4	161.6	154.9	166.8	156.8
1980	120.0	119.6	125.1	124.5	134.4	134.8	139.3	140.3	144.2	146.5	156.8	153.8	162.2	155.7	167.4	157.2
1985	122.1	120.9	126.9	125.9	136.6	136.8	141.4	143.2	147.4	149.7	160.2	155.5	164.8	156.7	169.1	157.7
1990	123.8	122.7	128.8	128.1	138.6	139.3	144.1	145.8	150.1	159.9	162.5	156.6	166.8	157.6	170.1	158.6
1995	125.2	123.9	130.7	129.3	140.6	141.4	146.3	147.9	152.6	153.2	165.3	158.2	168.8	158.9	171.5	159.8
2000	125.7	124.3	131.0	129.8	141.6	142.4	147.5	149.1	154.3	153.9	166.6	158.7	170.3	159.6	172.7	160.6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표 8-25〉 연령별 학생의 체중

(단위 : kg)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세		8세		10세		11세		12세		14세		15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0	21.4	20.6	22.7	22.4	27.1	26.5	29.6	29.2	36.7	37.5	43.7	43.8	51.1	48.7	56.6	52.2
1975	21.1	20.3	23.1	22.4	27.9	27.8	31.0	31.2	35.0	36.9	43.9	45.0	51.1	49.0	57.5	52.1
1980	22.2	21.4	24.5	23.7	29.3	29.4	32.3	32.9	35.6	38.1	45.9	46.3	51.9	49.4	58.5	52.5
1985	22.8	21.9	25.2	24.3	30.8	30.5	33.9	34.8	37.9	40.0	48.7	47.8	53.9	50.2	59.8	52.9
1990	24.2	23.5	27.0	26.3	33.7	33.2	37.3	37.9	41.7	42.6	51.9	49.6	56.3	51.5	61.3	53.5
1995	25.7	24.6	28.9	27.7	35.5	35.3	39.7	40.5	44.6	45.4	54.8	51.9	59.1	52.8	63.4	54.4
2000	26.1	24.9	29.3	28.0	36.5	36.1	41.0	41.2	46.5	45.7	56.6	52.0	60.1	53.4	64.6	54.5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호

의 경우 신장은 7cm, 체중은 3kg 늘었다. 여학생들의 성장 시점도 빨라졌다. 과거 12~13세 때 남학생에 비해 신장이 1~2cm 더 컸으나, 현재에는 10~11세로 1~2년 성장 시기가 빨라졌다. 남학생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14~15세 때에 체격이 급성장하던 과거와 달리, 중학교에 입학한 12세부터 졸업하는 14세까지 빨리 자란다.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영양분 섭취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 9 장 보건·복지

사회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의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건강을 단순한 신체의 물리적 상태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정신적 안녕까지도 포함시키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로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이 유지·회복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통계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보고통계 또는 조사통계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병, 보건의식 행태, 사망원인,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국민의 건강

급성 전염병

1960년만해도 보건 수준이 낙후돼 보건 문제의 가장 큰 과제가 전염병 관리였다. 1960년의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제1종 전염병이 5,134건, 제2종 전염병이 3만74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43.6건의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당시 널리 퍼졌던 제1종 법정 전염병은 장티푸스(2,789)가 대표적이었고, 제2종 전염병은 홍역(16,028), 백일해(8,711) 등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70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함께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면서 시·군·구마다 보건소가 설치돼 출산율 조절은 물론 전염병의 관리도 용이해졌다. 1980년에 들어서 법정 전염병의 발생률도 인구 10만명당 23.5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느 나라든지 소득수준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전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1995년에는 법정 전염병이 모두 1,654건 발생하여, 인구 10만명당 3.7명의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러나 그 뒤 전염병 발생건수 및 발생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1만1,363건의 전염병이 발생,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4.5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다소 개선되어 1만304건이 발생, 발생률은 22명을 보였다.

최근의 전염병 발병률 증가와 더불어 새

〈표 9-1〉 급성전염병 발생 현황

(단위 : 건, 인구 십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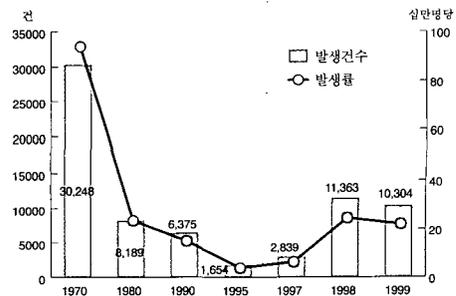
	1960	1970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제1종 전염병	5,134	5,866	461	262	13	495	295	1,297	2,106
장티푸스	2,789	4,222	201	232	370	475	265	380	308
세균성이질	-	-	57	491	23	9	11	905	1,781
제2종 전염병	30,743	24,382	7,728	6,113	1,163	1,233	2,544	10,066	8,198
홍역	16,028	3,625	5,097	3,415	71	65	2	4	88
유행성이하선염	-	-	866	2,092	430	254	238	4,461	2,626
말라리아	-	-	-	6	107	356	1,724	3,932	3,621
쯔쯔가무시증	-	-	-	238	274	263	277	1,140	1,342
계	35,877	30,248	8,189	6,375	1,654	1,728	2,839	11,363	10,304
발생률 (십만명당)	143.6	93.8	23.5	14.9	3.7	3.8	6.2	24.5	22.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로운 전염병들이 등장하고 있어 여전히 전염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1999년 현재 제1종 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이 있다. 제2종 전염병에는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성홍열,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아메바성이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쯔쯔가무시증이 있다. 대다수의 전염병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제2종 전염병 중 홍역은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1999년 88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말라리아는 1990년 6건에서 1999년 3,621건으로 급증했다. 쯔쯔가무시증 역시 1990년 238건에서 1999년 1,342건으로 증가하였다. 유행성이하선염은 1990년 2,092건에서 1995년은 430건으로 대폭 감

소하였다가 1998년에는 4,461건, 1999년 2,626건이 발생하였다.

[그림 9-1] 급성전염병 발생 현황



만성질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사망을 줄이고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한 상

태에서의 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89년부터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 100명 중 56명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만성질환자율)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4.0%, 여자 58.0%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0~9세에서 35.1%, 10대 39.6%, 20대 44.1%, 30대 58.3%, 50대 78.2%, 60대 87.3%, 70세 이상에서 87.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보면 충치가 1위, 피부병 2위, 관절염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8세까지는 충치, 피부병, 축농증의 순을 보였다. 19~44세는 피부병, 충치, 위염·소화성궤양 순이고, 45~64세는 피부병, 관절염, 충치 순이다. 만성질환 비율(유병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관절염이 34.2%로 1위, 요통·좌골통 23.1%, 고혈압 19.4% 순이다.

만성질환은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만족도와 관련되며, 활동에 제한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199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시설 및 병원 입원자 제외) 중 1.9%가 직업, 학업, 가사 등 주요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에 제한을 받은

〈표 9-2〉 만성질환 유병률(1998)

(단위 : %)

	1위	2위	3위
전 체	충치 (15.8)	피부병 (15.4)	관절염 (7.4)
0~6세	충치 (15.7)	피부병 (5.3)	축농증 (2.0)
7~18세	충치 (24.4)	피부병 (6.3)	축농증 (3.9)
19~44세	피부병 (20.0)	충치 (15.5)	위염·소화 성궤양(6.3)
45~64세	피부병 (21.1)	관절염 (18.5)	충치 (15.0)
65세이상	관절염 (34.2)	요통·좌골통 (23.1)	고혈압 (19.4)

자료 : 보건복지부, 『1998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12

인구의 비율은 여자(2.1%)가 남자(1.7%)보다 높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4.4%가 주요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주원인은 질병이 56.2%로 가장 많았고, 고령 17.3%, 장애 17%, 사고로 인한 손상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일(반나절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했던 경우로 조퇴, 결석·결근, 입원 등임)은 인구 1인당 연간 8.7일로, 1995년의 6.5일보다 2일 이상 많아졌다. 아파서 반나절 이상 누워있는 날수를 가리키는 침상와병일(寢床臥病日)은 1998년 5.1일로 1995년 3.9일보다 2일 이상 늘어났다. 활동제한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길었고, 주로 만성질환 때문이었다. 특히 중풍, 심장병 등의 순환기계 질환과

암, 관절염 등의 경우에 활동제한일이 길게 나타났다.

활동제한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병, 장애로 인한 입원·결근·조퇴 등에서 발생한 소득기회의 손실액은 1998년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약 1.7%인 7조 6,2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14만 6천원의 생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①3개월 이상 있는 질환, ②발병기간과 관련 없이 질병형태가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요하는 질환으로 그 질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이나 치료여부에 관계없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단, 임신후유증은 기간과 관련 없이 만성질환에서 제외하고 급성으로 분류).

보건의식행태

보건복지부는 1998년에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등 건강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와 '좋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2.6%(남자 46.7%, 여자 38.9%)였다. 이를 영국 75%(1997년), 이탈리아 62%(1995년), 독일 46%(1995년), 스

웨덴 77%(1995년)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은 자기 건강에 대하여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998년 남자 67.6%, 여자 6.7%가 '매일 흡연' 또는 '가끔흡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하루 평균 17.5개피를 태웠다. 남자는 18개피, 여자는 12.7개피였다. 1989년 이후의 흡연율 추이를 보면, 20~59세 인구의 흡연율(인구 100명당 흡연자수)은 1989년 36.1%에서 1998년 36.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볼 때 여자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자 성인의 매일 흡연율 64.1%(1998년)는 15세 이상 흡연율인 미국의 25.3%(1998년), 일본 57.5%(1996년), 영국 30%(1996년), 독일 35.6%(1995년)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여성의 매일 흡연율 5.9%는 미국 20.9%(1998년), 일본 14.2%(1996년), 영국 27%(1996년), 독일 21.5%(1995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표 9-3〉 성인(20~59세)의 흡연율

(단위 : %)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전 체	36.1	34.0	35.5	36.2
남 자	70.5	69.0	67.7	67.6
여 자	4.2	3.4	5.1	6.7

자료 : 보건복지부, 『1998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12

1989년 이후 20~59세 성인의 음주율(인구 100명당 현재 음주자수) 추이를 보

면 1989년 45.8%에서 1998년에는 52.1%로 증가하였다. 건강상 문제가 되는 고도 음주율(인구 100명당 한 달 동안 21일 이상 음주자수)은 1989년 6.8%에서 1998년 6.0%로 다소 감소하였다. 1998년의 경우 남자의 11.2%, 여자 1.3%가 한 달에 21일 이상 음주하는 고도 음주자로 나타났다.

〈표 9-4〉 성인(20~59세)의 음주율

(단위 : %)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전 체	45.8	46.8	35.5	52.1
남 자	79.8	74.9	56.8	72.4
여 자	23.2	22.2	15.3	32.7

자료 : 보건복지부, 『1998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12

연령별로는 20대의 음주율이 가장 높아서 1998년 현재 83.0%가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 79.0%, 40대 69.6%로 성인의 음주율은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20대, 30대, 40대 음주율이 각각 89.8%, 89.9%, 85.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각각 77.2%, 68.3%, 53.3%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사회·경제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 보건 의식 향상 등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3세에서 1997년 74.39세로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의 중요한 지표인 영아 사망률은 한 살 미만 사망자수를 해당연도 출생아수로 나눈 것으로, 1971년에

는 출생아 천 명당 42명이 사망하던 수준에서 1993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다.

사망률의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구조 역시 선진국형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운수사고는 1990년 이후 줄곧 1,2,3위를 유지함으로써 대표적인 주요 사망원인이다. 1999년 현재 한국 남녀 전체를 합쳐 뇌혈관질환(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사망률이 인구 십만 명당 72.9명으로 가장 높고, 심장질환 39.1명, 운수사고(교통사고) 26.3명, 간 질환 23.5명, 위암 24.0명의 순이다.

1990년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구체적인 사망원인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등)은 1990년 10.4명에서 1999년 18.5명으로 77.9%가 증가한데 비해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1999년 남자 21.3명, 여자 15.6명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순환기계질환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암사망률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암 종류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장·직장 및 항문암(대장

〈표 9-5〉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 인구 십만명당, %)

사망원인	1990년			1999년			증감률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모든 사망	549.1	628.0	469.1	522.7	579.1	465.8	-4.8	-7.8	-0.7
감염성질환 (호흡기결핵)	15.7	21.1	10.0	11.7	15.7	7.7	-25.5	-25.6	-23.0
신생물 (식도암)	11.0	16.0	5.7	6.7	9.9	3.5	-39.1	-38.1	-38.6
(위암)	110.6	136.9	83.2	116.6	148.5	84.5	5.4	8.5	1.6
(대장암)	3.3	5.7	0.8	3.0	5.4	0.6	-9.1	-5.3	-25.0
(간암)	31.5	39.1	23.6	24.0	30.3	17.6	-23.8	-22.5	-25.4
(후두암)	4.5	4.4	4.5	7.9	8.5	7.2	75.6	93.2	60.0
(폐암)	24.1	35.4	12.0	20.7	31.7	9.5	-14.1	-10.5	-20.8
(자궁암)	1.6	2.6	0.5	1.6	2.7	0.5	0.0	3.8	0.0
순환기계질환 (허혈성심장질환)	14.4	20.8	7.7	22.1	32.8	11.3	53.5	57.7	46.8
(뇌혈관질환)	7.8	-	7.8	5.6	-	5.6	-28.2	-	-28.2
(심장질환) ¹⁾	163.9	165.8	163.9	122.0	119.8	124.1	-25.6	-27.7	-24.3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10.4	11.3	9.6	18.5	21.3	15.6	77.9	88.5	62.5
외인사 (운수사고)	75.6	75.0	77.3	72.9	69.3	76.7	-3.6	-7.6	-0.8
(자살)	47.4	48.7	46.5	39.1	41.7	36.5	-17.5	-14.4	-21.5
	44.5	65.1	22.4	31.6	46.5	16.7	-29.0	-28.6	-25.4
	33.8	53.1	13.0	23.5	37.8	9.0	-30.5	-28.8	-30.8
	84.8	121.3	45.7	63.5	90.9	35.8	-25.1	-25.1	-21.7
	39.7	57.9	20.3	26.3	38.4	14.0	-33.8	-33.7	-31.0
	9.8	13.2	6.3	16.1	22.7	9.6	64.3	72.0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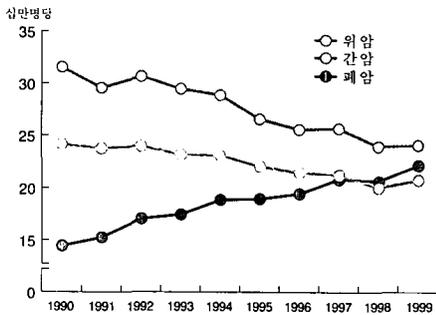
주 :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호

암)은 1990년 4.5명에서 1999년 7.9명으로 75.6%가 증가했다. 기관지 및 폐암도 1990년 14.4명에서 1999년 22.1명으로 53.5%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위암과 자궁암 사망률은 조기진단 등을 통해 감소하고 있다. 위암은 1990년 31.5명에서 1999년 24.0명으로 23.8%가 감소하였고, 자궁암 역시 여성인구 십 만 명당 1990년 7.8명에서 1999년 5.6명으로 28.2%가 감

소하였다.

암사망률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위암사망률 30.3명은 일본 53.6명(1998년), 포르투갈 35.9명(1995년) 다음으로 높다. 남자의 간암사망률 31.7명 역시 일본 38.4명(1998년) 다음으로 높다. 이에 비해 여성의 유방암(4.8명)과 자궁암(5.6명)은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9-2] 암 사망률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십만명당 1990년 84.8명에서 1999년 63.5명으로 감소하였다. 사고 종류를 살펴보면 운수사고, 화재사고, 익수사고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0년 39.7명에서 1999년 26.3명으로 33.8% 감소했다. 이는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사고발생시 응급체계가 빨라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사망으로 연결되는 치사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1999년 현재 남자 3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남자는 포르투갈(1995년 남자 42.1명) 다음으로 가장 높다. 여자 사망률은 14.0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1999년 자살(16.1명)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난으로 급증했던 1998년(19.9명)에 비해서는 19.1% 감소했지만, 1990년 9.8명에 비해서는 64.3%나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남녀 모두 헝가리, 핀란드, 일본보다는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 수준이다. 남자는 22.7명으로 헝가리 50.6명(1995년), 핀란드 43.4명(1995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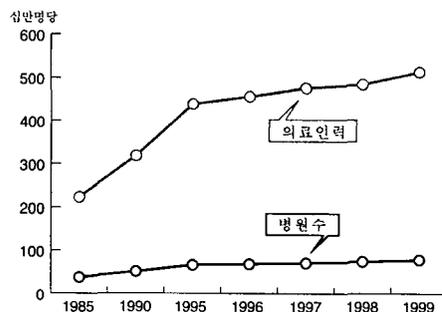
36.5명(1998년) 등보다 낮다. 여자는 9.6명으로 헝가리 16.7명(1995년), 일본 14.7명(1998년), 핀란드 11.8명(1995년)보다 낮다.

제2절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보건의료인력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루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이 늘어나고 국민의 의료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를 살펴보자. 1981년에서 1999년 사이 인구 10만명당 상급 의사는 36.9명에서 107.6명으로, 치과의사는 6.8명에서 28.2명으로, 한의사는 6.4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간호사는 31.1명에서 126.1명으로, 약사는

[그림 9-3] 의료인력 및 병원수



〈표 9-6〉 의료 인력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연 도	계	상 근 의 사	비상근 의 사	치 과 의 사	한 의 사	조 산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의 료 기 사	의 무 기록 사	약 사
1981	155.9	36.9	2.8	6.8	6.4	1.8	31.1	57.5	10.2	-	2.6
1985	222.5	48.5	1.9	9.4	7.2	3.4	44.6	85.0	18.8	-	3.7
1990	318.2	66.3	2.2	14.9	10.8	3.4	74.9	99.4	40.3	1.6	4.6
1995	438.1	88.8	4.1	22.6	14.8	3.0	102.9	133.8	59.6	2.8	6.0
1996	455.8	95.9	1.4	23.7	15.5	2.9	108.0	133.6	62.5	3.2	6.3
1997	476.0	101.0	1.9	24.9	16.0	2.9	111.9	141.0	66.5	3.4	6.5
1998	484.4	102.1	3.2	26.0	16.6	2.7	116.2	140.3	67.3	3.2	6.7
1999	513.3	107.6	1.3	28.2	17.0	3.0	126.1	145.4	74.5	3.5	6.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2.6명에서 6.7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의료기사는 10.2명에서 74.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조산사는 1985년 인구 십만명당 3.4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3명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의료인력의 증가와 다양화 및 선진화로 의료환경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나 국제비교는 나라별로 통계자료 작성기준이 달라 쉽지 않다.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수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가 109명(1995년)인데 비해 미국은 189명(1979년), 일본은 132명(1981년)이며, OECD 회원국이 132명에서 189명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선진국의 국민소득 만불시대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인력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현재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1.2명으로, 독일 3.4명, 프랑스 3.0, 캐나다 2.1명, 포르투갈 3.1명, 멕시코 1.3명보다도 적다. 단순히 숫자로 따져도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OECD 회원국보다 적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등 의료인력의 질적인 관리 측면에 관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의료시설 및 병상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병상은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십만명당 의료기관수는 1980년 30.9개소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1990년에 50.6개소, 1999년에는 78.6개소로 199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의 변화를 보자. 인구 십만명당 양방 병·의원은 23.5개소에서 62.9개로 2.7배 증가했다. 한방병원도 6.1개소에서 14.9개소로 약 2.4배 증가하여 양방과 한방 병의원 증가 속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 병의원 중에서도 종합병원은 1980년 0.2개소에서 1999년 0.6개소로 증가함으로써 병원의 대형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종합병원에 이어 치과 병의원은 1980년 5.3개소에서 1999년 21.7개소로 4.1배가 증가해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이 병원수 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산원은 인구 십만명당 1980년 1.3개소에서 1999년 0.3개소로 감소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과 병원이용 관행이 선진화됐음을 보여준다.

〈표 9-7〉 의료기관종류별 병원수 및 병상수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총합	병원수					병상수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1980	30.9	0.2	18.0	5.3	6.1	1.3	170.6
1985	37.1	0.4	21.3	7.3	6.8	1.2	244.9
1990	50.6	0.5	26.9	12.3	10.0	0.8	313.0
1995	66.0	0.6	33.3	18.4	13.3	0.4	435.2
1996	68.4	0.6	34.5	19.3	13.7	0.4	458.0
1997	71.1	0.6	36.1	20.1	14.0	0.3	479.3
1998	74.5	0.5	37.8	20.9	14.4	0.3	509.1
1999	78.6	0.6	40.6	21.7	14.9	0.3	552.7

주 : 병상수는 특수병원(결핵, 나병, 정신병원)도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병상이란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침대를 뜻한다. 병상수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는 1980년 170.6개에서 1999년에는 552.7개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병상수가 1990년에 313.0개에서 1995년에는 435.2개로 증가하여 1990년대 초반에 병상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병의원 증가와 마찬가지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게 된 의료 수요에 부응한 결과이다.

의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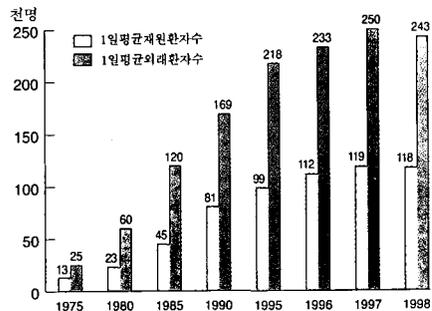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의료이용 실태를 3년 주기로 전국 표본 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률은 그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과 약국,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30.6%가 조사기간인 2주 동안(1998년 11~12월중) 외래 의료(약국 포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병·의원(종합병원 포함) 이용이 15.6%로 가장 높았고, 약국 14.8%, 치과병·의원 1.6% 순이었다.

외래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은 살펴보면 96.0%가 질병 치료였고, 건강검진을 포함한 질병 예방은 4.0%에 그쳤다. 치료 중심의 의료이용 양상은 1995년 조사의 92.4%보다도 심화되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5.8분이었다. 의료

기관별로는 3차기관이 52.7분으로 가장 길었고, 종합병원 32.0분, 한방 병 · 의원 28.7분, 병원 23.9분, 보건소 17.8분, 의원 16.1분, 치과병 · 의원 15.5분, 약국 10.1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보건의료 이용 정도는 환자수로 파악할 수 있다. 입원환자는 연인원(延人員, number of bed-days)으로 1998년 4,316만5천명이며, 1975년 470만9천명보다 9.2

[그림 9-4] 병원이용현황



배 증가하였다. 외래환자도 1975년 906만 명에서 1998년 8,852만명으로 9.8배 늘어났다. 1998년 1일 평균 재원 환자수는 11만8천명으로 1975년(1만3천명)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는 1975년 15일이었으나, 1990년이래 13일로 동일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43), 네덜란드(32)보다는 짧고, 체코 (12), 프랑스 (11)와 비슷하며, 멕시코(4), 터어키(6)보다는 긴 편이다.

병상이용률(bed utilization rate)은 1일 평균 재원 환자수를 병상수로 나눈 백분비이다. 1990년 80.6%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1998년 65.8%로 나타났는데, 병상수 증가에 따라 의료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의료이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1999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종합병원에 대한 불만은 '약간불만'과 '매우불만'을 포함하여 48.7%나 된다.

<표 9-8> 의료기관별 2주간 외래이용률

(단위 : %)

	1989	1992	1995	1998
병 · 의원 ¹⁾	8.2	12.5	12.5	15.6
약국	10.4	10.6	9.7	14.8
한방병 · 의원	1.0	1.3	1.2	1.3
치과병 · 의원	0.3	0.6	1.6	1.6
보건(지)소	0.4	0.7	0.9	1.5

주 : 1) 3차진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자료 : 보건복지부, 『1998국민건강 · 영양조사』, 1999. 12

<표 9-9> 병원이용현황

(단위 : 천명, 일, %)

	1일평균 외래환자	1일평균 재원환자	평균 입원일수	병 상 이 용 률
1975	25	13	15	64.5
1980	60	23	11	60.7
1985	120	45	12	60.3
1990	169	81	13	80.6
1995	218	99	13	65.5
1996	233	112	13	69.6
1997	250	119	13	70.2
1998	243	118	13	65.8

주 : 1) 평균입원일수 = 입원환자 연인원 / 입원환자 실인원
 2) 병상이용률 = 1일평균재원환자수 / 병상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병의원에 대한 불만은 30.3%로 병의원보다는 종합병원에 대해 이용상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병의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 요인을 보면 '비용과다'가 45.0%로 가장 많고,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가 39.9%, '치료미흡' 36.4%, '불친절' 26.3%, '진료시간 짧다'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리적인 진료 예약제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친절한 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도시·농촌 상관없이 '비용과다', '진료 대기시간 길다', '치료미흡' 순으로 요약된다. 다만 의료시설의 '지역편제'와 '시설미비'에 대한 불만 정도가 도시·농촌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의료시설의 지역편제에 대한 불만이 도시지역(동부)에서는 6.0%인 반면 농촌지역(읍면부)에서는 19.2%로 훨씬 높다. '시설미비'에 대한 불만도 도시지역에서는 9.8%인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17.4%로 훨씬 높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를 이룸으로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의료자원이 주로 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의료자원의 대량공급 및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형평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3절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보장비

사회보장비는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게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예산은 8조 740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32.3%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 증가율(6.0%)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의 3.2%에서 2000년에는 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예산 중 공공부조에 사용하는 비율은 1995년 19.6%에서 1999년 31.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9.8%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1990년 15.1%에서 1998년 36.3%까지 늘어났다가 2000년 31.8%로 줄어들었다.

사회보장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사회보장비

OECD가 규정한 사회보장비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OECD는 총비용에 있어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과 개인적인 계약이나 이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다르다. OECD의 기준이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장비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OECD 기준에 따라 지출규모 등을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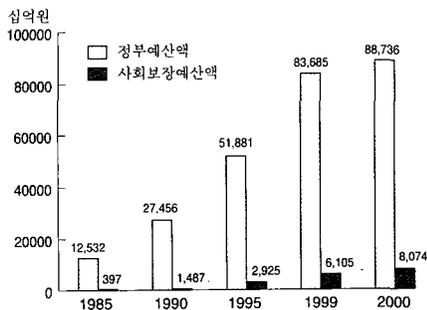
〈표 9-10〉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단위 : 십억원, %)

연도	정부 예산	사회 보장 비중	사회 보장 예산		공공 부조 비중		사회 복지 서비스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1985	12,532	3.2	397	148	37.3	75	18.9	
1990	27,456	5.4	1,487	386	26.0	225	15.1	
1995	51,881	5.6	2,925	574	19.6	623	21.3	
1996	58,823	6.0	3,529	713	20.2	839	23.8	
1997	67,579	6.2	4,207	927	22.0	1,014	24.1	
1998	75,583	6.1	4,576	1,121	24.5	1,662	36.3	
1999	83,685	7.3	6,105	1,945	31.9	1,888	30.9	
2000	88,736	9.1	8,074	2,409	29.8	2,566	31.8	

주 : 1) 일반회계기준 예산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재정경제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호

[그림 9-5] 사회보장 예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약 8조원(GDP 대비 4.60%), 1995년 20조원(GDP 대비 5.32%), 1997년 30조 9,182억 원(GDP 대비 6.82%)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20.8%씩 증가해왔다. 1990~1997년 사이 노령·장애·유족급여는 GDP 대비 0.87%에서 1.23%로 증가했으며, 노인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출은 0.06%에서 0.16%로, 가족복지 서비스가 0.03%에서 0.09%로 3배가량 많아졌다. 노령·장애·유족급여는 0.87%에서 1.23%로, 실업급여

〈표 9-11〉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단위 : %)

	1990	1995	1996	1997
노령·장애·유족	0.87	1.16	1.14	1.23(18.0)
산업재해	0.20	0.23	0.24	0.26(3.7)
질병급여	-	-	-	-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0.06	0.11	0.13	0.16(2.4)
가족현금	0.00	0.00	-	0.02(0.3)
가족복지서비스	0.03	0.07	0.08	0.09(1.3)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0.06	0.07	0.08	0.12(1.8)
실업급여·퇴직수당	1.01	1.51	1.48	2.26(33.1)
보건부문공공지출	2.18	2.05	2.33	2.52(37.0)
주거급여	-	-	-	-
기타급여	0.19	0.12	0.14	0.16(2.4)
사회보장비 총지출	4.60	5.32	5.62	6.82(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추계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보장비추계 : 1990~1997』, 1999

는 1.01%에서 2.26%로 2배이상 증가한 지출 부문이다.

기능 측면에서 1997년 사회보장 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자. 보건부문 공공지출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33.1%, 노령 현금급여 14.0%,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3.7%의 순이며, 가족 현금급여는 0.3%로 가장 낮다. 실업급여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법정 퇴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실업급여의 백분율은 0.3%(GDP 대비 0.017%)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질병, 법정퇴직(실업), 노령급여가 80%이상을 차지한다.

GDP에 대한 사회보장비 총지출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자. 1995년 우리나라는 5.3%로 미국의 16.3%, 일본의 14.1%,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30%를 넘어 우리의 6배 이상이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인 연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 5.3%, 미국은 1978년 13.6%, 일본이 1981년 10.4%, 서독이 1980년 25.7%로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2~5배 높다.

공공연금 및 의료보험

공공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주요 보험이다. 공공연금보험은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1973년) 순으로 형성되었고, 그 뒤 국민연금(1988년)과 농어민연금(1995년)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실시한 이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군지역에, 1999년 4

〈표 9-12〉 공적연금 가입자 및 적용률

(단위 : 천명, %)

	공적 연금 가입 자	국민 연금		공 무 원 연금		사 립 · 교 직 원		공적 연금 적용 률
		수 혜 율	수 혜 율	수 혜 율	수 혜 율			
1980	738	-	-	648	0.3	89	-	5.6
1985	821	-	-	697	1.3	124	0.2	5.6
1988	5,341	4,433	0.1	769	2.4	141	0.6	31.9
1989	5,481	4,521	1.3	810	2.6	150	0.7	31.4
1990	5,649	4,652	5.5	843	3.0	154	0.9	31.4
1995	8,396	7,257	12.1	958	5.9	181	2.2	41.3
1997	8,542	7,357	13.4	982	7.4	203	2.7	40.7
1998	7,738	6,580	19.3	952	9.4	206	3.1	38.8
1999	11,871	10,749	11.7	914	14.1	208	5.1	58.7

주 : 1) 공적연금적용률 = 공적연금가입자 / 18세이상취업자수 × 100

2) 수혜율 = 수혜자/가입자 × 100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호

원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월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공공연금 가입자는 1999년에 1,187만1천명으로 1998년보다 53.4%(413만3천명)

증가하였다. 18세이상 취업자 중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공적연금 적용률도 1999년 58.7%로 1998년보다 19.9%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 즉 부담대비 수급자 비율은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19.3%에서 1999년 11.7%로 낮아졌다. 공무원연금 수혜비율은 1998년 9.4%에서 1999년 14.1%로 증가했다. 사립교직원의 경우도 1998년 3.1%에서 1999년 5.1%로 증가했다.

의료보장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래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77년 당시만 해도 의료보장이 적용되는 인구는 전 국민의 8.8%(3,202천명)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

[그림 9-6] 의료보험 적용인구 및 1인당 의료보험부담액



료보험 실시 이후 크게 늘어 의료보험 적용인구는 1999년 4천4백75만1천명이 되었고, 163만7천명(총인구의 3.5%)에게는 의료보호가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도 대다수 OECD 국가와 같이 의료비의 공적부담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의료보험 총부담액은 1990년 1조 8,835억원에서 1999년 6조 3,056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1999년의 1인당 연간 부담액은 1998년 대비 19.5% 증가한 14만1천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간 의료보험 총급여비는 1998년 6조 7,217억원에서 1999년 7조 7,880억원으로 15.9% 늘어났다. 1999년 1인당 급여비 또한 1998년 대비 15.2% 증가한 17만4천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의료 수가(酬價) 인상과 환자의 진료건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9-13> 의료보험 적용인구, 총부담액 및 총급여액

(단위 : 천명, 백만원)

	의료보험 ¹⁾ 적용인구	의료보험 ²⁾		의료보험	
		총부담액 (백만원)	1인당 (천원)	총급여비 (백만원)	1인당 (천원)
1985	17,525	59,783	34	599,112	34
1990	39,990	1,883,528	47	1,928,450	48
1994	42,802	3,187,442	74	3,200,932	75
1995	43,702	3,600,700	82	4,014,348	92
1996	44,375	4,175,375	94	5,064,035	114
1997	44,842	4,878,728	109	5,808,510	130
1998	44,472	5,254,985	118	6,721,670	151
1999	44,751	6,305,553	141	7,787,950	174

주 : 1) 연평균 의료보험적용인구임

2) 국고부담 보험료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 호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복지기본법을 근간으로 1961년 제정한 생활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어 생활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한다. 생활보호 대상자수

〈표 9-14〉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 수혜자수

(단위 : 천명, %)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수	총인 대비	대상별구성비			수혜자	총인 대비
			거택 보호	자활 보호	시설 보호 ¹⁾		
1980	1,829	4.8	15.4	82.0	2.6	2,142	5.6
1985	2,273	5.6	12.4	84.8	2.8	3,259	8.0
1990	2,256	5.3	15.0	81.3	3.6	4,246	9.9
1995	1,755	3.9	17.5	78.1	4.4	1,990	4.4
1996	1,506	3.3	19.6	75.3	5.0	1,740	3.8
1997	1,414	3.1	21.0	73.6	5.4	1,642	3.6
1998	1,175	2.5	25.6	67.9	6.5	1,323	2.8
1999	1,175	2.5	28.1	65.2	6.7	1,637	3.5

주 : 1) 국·공립시설은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는 1985년 총인구의 5.6%에 해당되는 227만3천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총인구의 2.5%인 117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은 자활보호 대상자로 1985년 생활보호대상자의 84.8%를 차지했는데 1999년 65.2%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거택보호자는 1985년 12.4%에서 1999년 28.1%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설보호 대상자는

1985년 2.8%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9년에 6.7%를 기록했다.

1978년에 제정된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보장받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이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성병감염자 등)과 2종(자활보호 대상자)이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생활보호사업 예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사업으로 의료보호의 본인부담 형태는 1종은 전액무료, 2종은 전액 또는 일부 무료가 있다. 1980년 당시 의료보호사업 수혜 대상자는 전 국민의 5.6%인 214만2천명이었으나, 1998년 132만3천명으로 전 국민의 2.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1994년 의료부조 대상자의 폐지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또 국민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IMF 체제하의 경제난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로 1999년에는 전 국민의 3.5%(163만7천명)로 증가하였다.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우리 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조기교육 필요성 등으로 보육의

수요가 늘어났다.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탁아사업이 보호와 교육을 겸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아동보육시설 수는 매년 늘어나 1999년 1만8천768개소로 1998년에 비해 1년 동안 1,163개소(6.6%)가 증가하였다. 시설주체별로 보면 직장시설이 12.5%, 그 다음으로 민간시설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만 해도 가정이 전체 시설 중 78.2%로 압도적이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99년 35.7%를 기록했다. 국공립 시설도 18.8%에서 6.9%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민간시설은 2%에서 56.3%로 급증하여 1999년 현재 최고 비중을 차지했고, 직장시설은 1990년 이후 꾸준히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9년 보육아동수는 64만1천명으로 1998년 대비 15.1%의 증가를 보여 같은 기간 보육시설 증가폭(6.6%)을 상회하고 있다.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어 가고, 취업여성이 증가하며, 하위 소득층일 수록 부인 소득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취업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저렴한 자녀양육 보육시설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1995년 이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는 증가하여 IMF 체제 하인 1998년에 9,292명으로 늘어났다가 1999년에는 7,693명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 요보호 아동 발생 유형별로는 미혼모 아동이 3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출아 38.8%, 기아 18.6%, 미아 2.8%의 순이다. 요보호 아동이 생기는 것은 연도별로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기아와 미아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가출아동과 미혼모 아동은 증가하고 있다. 가출아동과 미혼모 아동은 가정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발생상황에 맞는 보호를 위한 아동상담 사업이 필요하다.

요보호 아동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가 살펴보자. 전체 요보호 아동 중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1990년 이후 55~65%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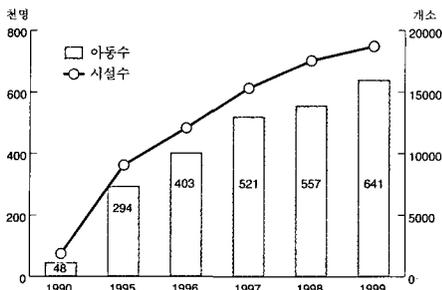
〈표 9-15〉 보육 아동수 및 시설수

(단위 : 천명, 개소, %)

	아동수	시설수	시설구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1990	48	1,919	18.8	2.0	1.0	78.2
1995	294	9,085	11.3	45.4	1.0	42.3
1996	403	12,098	8.9	49.9	1.0	40.2
1997	521	15,375	7.5	53.2	1.0	38.3
1998	557	17,605	7.1	54.7	1.0	37.2
1999	641	18,768	6.9	56.3	1.1	35.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그림 9-7] 아동보육 및 보육아동수



〈표 9-16〉 요보호 아동 발생 현황

(단위 : 명. %)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아동	기타 가출아
1990	5,721	32.2	41.4	6.3	20.1
1995	4,576	26.8	28.1	3.3	41.8
1996	4,951	25.8	27.9	3.8	42.6
1997	6,734	20.4	27.2	5.1	47.3
1998	9,292	17.8	44.3	3.0	34.9
1999	7,693	18.6	39.8	2.8	38.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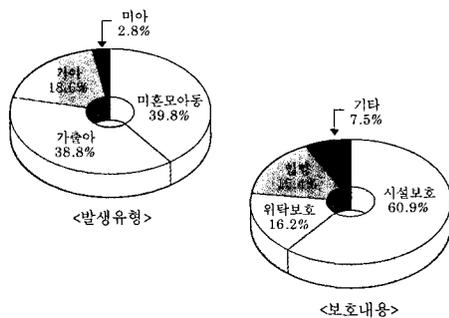
〈표 9-17〉 요보호 아동 보호 내용

(단위 : 명. %)

	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소년 소녀 가장, 기타
1990	5,721	65.3	19.8	14.9	-
1995	4,576	61.6	11.0	10.3	7.0
1996	4,951	63.8	14.7	9.7	11.8
1997	6,734	58.2	18.0	13.3	10.5
1998	9,292	55.0	25.3	13.8	5.9
1999	7,693	60.9	16.2	15.4	7.5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그림 9-8〕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및 보호내용(1999)



준이다. 1999년 요보호 아동 7,693명 중 60.9%인 4,683명은 시설에, 1,249명(16.2%)은 위탁보호, 1,181명(15.4%)은 입양조치 되어 있다.

아동복지는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단위 보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아동 가정보호 제도로는 국내 입양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입양되는 아동수는 1995년 1,025명에서 1999년에 1,726명으로 증가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1995년 2,180명(총입양아의 68%)에서, 1999년 2,409명(58.2%)으로 다소 굴곡을 보이며 늘어났다. 해외 입양아수가 다소 늘어났지만 전체 입양아 중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혈연에 의한 가계계승 관습과 입양 부모 입장에서의 입양으로부터 아동 입장에서의 입양으로 입양에 대한 태도가 다소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사업의 경우 1999년말 현재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손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7,924가구, 가구원은 12,427명이다. 전체 요보호 아동수는 감소하는 반면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1990년 6,696가구에서 점차 늘어나 1997년에 9,544가구로 가장 많다가 1998년 8,407가구, 1999년 7,924가구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소년소녀가장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99년 1.6명이며, 가구원의 40.2%(4,992

명)는 고등학생, 32.6%(4,046명)는 중학생, 19.0%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의 반 이상이 중학생 이하 어린 아이이다.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제도는 1961년에 제정한 생활보호법을 통하여 무의탁 노인을 시설보호나 거택보호를 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 후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자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로부터 노인을 분리하여 노인복지제도를 확립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 생업지원, 노인 공동작업 제도가 있다. 노인들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제도와 건강진단 제도가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시설, 노인여가 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식당, 경로우대 제도, 노인 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다.

노인복지 시설수는 1980년 48개에서 1995년 146개, 1999년 229개로 늘어났다. 복지시설 재소자 역시 같은 기간 1980년 3,158명에서 1999년 1만2천751명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에는 무료 양로시설만 있었으나 1990년부터 무료 요양시설이 등장하였고, 1995년이후에 유료시설이 선보였다.

1999년 현재 209개 노인 복지시설 중 43%는 무료 양로시설이고, 41.0%는 무료 노인요양시설이며, 16.2%가 유료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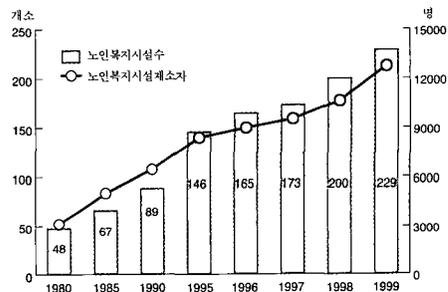
<표 9-18> 노인복지시설수 및 수용자

(단위 : 개소, 명, %)

	노인복지시설수			노인복지시설재소자			총재소율
	무료 양로	무료 요양	유료	무료 양로	무료 요양	유료	
1980	48	-	-	3,158	-	-	0.2
1985	67	-	-	5,059	-	-	0.3
1990	71	18	-	4,962	1,477	-	0.3
1995	84	41	21	4,806	2,784	806	0.3
1996	87	50	28	4,628	3,401	967	0.3
1997	85	57	31	4,526	3,902	1,111	0.3
1998	86	77	37	4,544	4,849	1,253	0.3
1999	92	94	43	4,779	6,206	1,766	0.4

주: 1) 노인복지시설재소자는 연말 현재 재소자수임
 2) 총재소율 = 노인복지시설재소자수 / 65세 이상인구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호

[그림 9-9] 노인복지시설수 및 수용자



무료든 유료든 노인들의 모든 시설 입소율이 1999년 현재 0.4%로 선진국의 2~7%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규범 상 시설 입소에 대한 욕구가 적고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각 부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수준과 질적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

여성복지서비스

정부에서는 여성복지를 요보호 여성과 일반여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요보호 여성을 위해서는 상담, 시설보호, 재가보호사업 등이, 일반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회관 운영, 여성단체 지원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피임의 홍보 및 보급, 불임 시술자의 사후 관리,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등이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에는 여성복지와 성폭력 상담이 있다. 여성복지 상담은 저소득편모,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요보호 여성 발생 방지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은 1995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복지 상담서비스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비해 성폭력 피해상담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 여성 시설과 관련하여 1995년 윤락행위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자와 가출 청소년, 미혼모 등을 함께 수용 보호해 오던 직업보호 시설은 그 대상

에 따라 선도 보호시설과 미혼모 시설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편모와 그 가정을 위한 모자보호 시설과 모자자립 시설이 있으며, 윤락여성을 위한 선도보호시설,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시설, 배우자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여성을 위한 모자 일시 보호 시설 등이 있다.

여성선도 시설은 1980년 24개에서 1998년 11개소로, 수용인원도 같은 기간 6,518명에서 954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는 달리 모자보호 수용시설은 같은 기간 33개에서 37개소로 약간 증가하였다. 모자보호 시설에 수용된 여성의 수는 1980년 716명에서 1998년 913명으로 증가하였다. 부양자녀와 노령부양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10 장 환 경

정부는 1996년에 국가·국민·기업 등 각 행동주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환경보전 노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환경비전21」을 수립하였다. 「환경비전21」의 주요내용은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세계화하고 일류화하는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①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②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③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④국민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며 ⑤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원칙은 이미 1980년대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내세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했다.

이 장에서는 OECD의 개념을 반영해 이미 각국에서 공식 통계체계로 활용중인 P·S·R(Pressure-State-Response)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상태를 설명한다. P·S·R 체계는 압력지표·상태지표·반응지표로 구성된다. 압력지표는 대기오

염·수질오염·폐기물 등 인간에 의해 환경이 오염 내지 훼손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지표는 지역의 녹지·수자원·생물종 등의 자연상태 그 자체를 반영한다. 반응지표는 환경오염을 감소 내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다. P·S·R 체계의 장점은 환경상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 오염원인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상태를 압력통계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

각종 오염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기치 아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이를 위한 가치관 변화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성립한다고 천명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rundtland Commission)’에서 환경정책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들을 상호 조화시킬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본 뒤, 중요한 환경보전 과제로 등장하는 생물종·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을 상대 지표로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문제를 예방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산업·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리의 측면을 반응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환경오염

대기오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종류는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증가한다. 어떠한 물질을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한 나라의 오염감소기술, 측정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총 52개 물질을 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다양하다. 황사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자연적 발생원이라 한다. 그러나 오

대기오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대기오염의 의미는 "대기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상태"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매연·먼지·가스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연소·합성·분해 때 또는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체물질인 가스상 물질과 물질의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때 발생하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인 입자상물질로 크게 나누고 있다.

늘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적 발생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배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다. 이 자료는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 대기오

염축정망의 설계, 각종 대기관리 정책시행 효과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 10-1>의 연도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면, 자동차의 증가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정 연료·저황유 등 공해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 공급이 늘고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석유나 석탄같은 화석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이 고온 연소되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한편 1998년 이후 총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기오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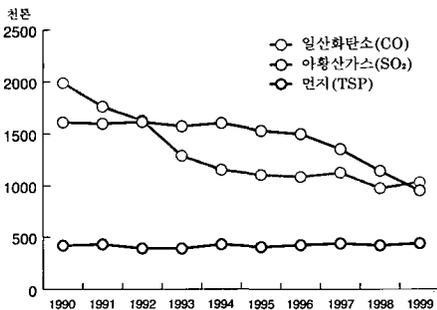
<표 10-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천톤)

	합계	아황산가스 (SO ₂)	질소산화물 (NOx)	먼지 (TSP)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1990	5,169	1,611	926	420	1,991	221
1991	4,867	1,598	878	431	1,760	200
1992	4,867	1,614	1,067	392	1,630	164
1993	4,585	1,572	1,187	390	1,291	145
1994	4,526	1,603	1,192	429	1,156	146
1995	6,144	1,532	1,153	406	1,109	150
1996	4,425	1,500	1,258	424	1,089	154
1997	4,364	1,356	1,278	439	1,129	162
1998	3,768	1,146	1,084	420	977	141
1999	3,710	951	1,136	440	1,036	147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호

[그림 10-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99년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남이 46만2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

<표 10-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

(단위 : 천톤)

	합계	먼지 (TSP)	아황산가스 (SO ₂)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합계	3,710	440	951	1,036	147	1,136
서울	325	10	11	189	25	90
부산	312	13	128	81	13	77
대구	116	6	13	54	7	36
인천	168	7	46	57	8	50
광주	52	2	2	29	4	15
대전	58	2	6	30	4	16
울산	251	14	151	28	5	53
경기	459	22	70	188	28	151
강원	221	54	53	42	5	67
충북	134	15	32	36	4	47
충남	291	97	59	48	6	81
전북	111	7	19	45	6	34
전남	462	63	159	57	10	173
경북	407	55	123	67	9	153
경남	309	71	73	71	10	84
제주	31	1	4	14	2	10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음으로 경기·경북·서울 순이었다. 제주가 3만1천톤으로 가장 적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전라남도과 달리 전체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염물질별 지역분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과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자. GDP 1,000달러당 오염물질배출량은 주요 선진국가 중에서 미국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프랑스·독일 등은 낮다. 특히 미국은 일산화탄소의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높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는 우리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자동차와 대기오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유나 가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 등이 주로 나온다.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연·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이 주로 나온다. 1998년 말 전체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55만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1.2%를 점유했다. 자동차 오염물질이 대기오염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탄화수소가 86.5%, 일산화탄소 90.5%, 질소산화물 42.9%, 먼지 17.4% 등이다. 아황산가스는 0.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기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수

<표 10-3>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GDP대비, 1997)

(단위 : kg/GDP 천달러)

	미 국	프랑스	독 일	멕시코	한 국
아황산가스	2.6	0.9	1.0	3.9	2.9
질소산화물	3.0	1.5	1.2	2.8	2.5
일산화탄소	10.0	7.5	4.3	4.4	2.1

자료 :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1999

<표 10-4> 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가스량(1998)

(단위 : 천톤/년)

	계	CO	HC	NOx	먼지	SO ₂
대기중오염물질 배출량	3,768	977	141	1,084	420	1,146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비율 %)	1,552 (41.2)	884 (90.5)	122 (86.5)	465 (42.9)	73 (17.4)	8 (0.7)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립하지 않으면 날로 증가하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도심통행이 빈번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내버스의 공해를 줄이는 일은 현재의 우리나라 엔진기술 수준으로는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여건 속에서 정부에서는 저공해 연료자동차 중 실현가능성이 큰 천연가스 자동차의 개발을 1991년 시작했다. 시내버스 및 승용차에 탑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여 1998년 7월부터 인천, 경기도 안산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7대도시와 수원시 등 8개 도시에 약 5천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대형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자동차 공해의 약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과 오존

오존은 주로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 등이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농도가 높을 경우 가시거리 장애 등 간접 피해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하다. 오존은 단기간이라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오존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대도시의 오존오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오존 원인물질이나 오존은 기류를 따라 이동하므로 고농도의 오존이 나타나면 얼마나 머물지 예측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오존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도(오존)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오존오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1995년 7월부터, 인천지역은 1996년부터, 부산·대구 등 4대 광역시 및 경기도(수원 등 7개시)는 1997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오존경보발령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시민 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오존예보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표 10-5〉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 (ppm)	0.18(ppm)	0.37(ppm)	0.50(ppm)
영 향	호흡기가뻐, 기침	가벼운 운동중 호흡 곤란	호흡 곤란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산성비

우리나라 주요도시에 내리는 비의 산성

도 변화를 보면, 부산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pH값이 5.6 이하의 경우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며, 부산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pH 5.6 이하를 나타냈다. <표 10-6>에서는 1998년 강우 산성도가 전 도시에서 갑자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평가방식이 다소 변하여 1997년까지의 강우산도보다 과대평가된 면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유사한 수치로 나타난다.

<표 10-6> 주요 도시의 연도별 강우중 산도
(단위 : pH)

	'86	'88	'90	'93	'95	'97	'98	'99
서울	5.3	5.7	5.0	5.4	5.7	5.3	4.9	5.0
부산	5.2	5.2	5.2	5.3	5.2	5.2	4.7	4.8
대구	5.4	5.6	5.7	5.5	5.7	5.8	5.4	5.6
인천	5.5	6.0	5.9	5.8	5.9	5.6	4.6	4.6
광주	6.1	5.7	5.5	5.8	6.2	5.9	4.8	5.2
대전	5.4	5.7	5.4	5.5	5.9	6.2	4.7	5.0
울산	5.2	5.1	5.6	5.6	5.1	5.7	4.8	5.0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강우 중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이나 도시의 강우 중 산도가 높아진 원인을 규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저황유와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저공해차의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산성비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중·일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내 인접국가와 정부차원의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성비

산성비란 대기 중에 방출된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 빗물에 녹아 산성화된 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은 중성(pH 7.0)이며, 대기 중의 비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산도(pH)가 5.6 정도이다. 산성비란 산도가 5.6 이하인 비를 말한다. 산성비는 석탄·석유 등 에너지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이 주요 원인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은 빗물에 녹아 황산과 질산 등으로 변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산성비는 산림을 파괴하고 하천·호수 등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며, 토양을 산성화시켜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성비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건물·교량 등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산성비 문제는 일찍이 유럽에서 1960년대들어 광범위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산성비로 황폐화된 숲'의 경우는 1970년대 산성비 원인물질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산성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수질오염

수질환경정책의 목표는 첫째, 상수원을 깨끗이 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 상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하천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하천과 물은 생활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수질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는 우리 사회에 수질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대형 사고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잡하던 관리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1993년 수립하였다.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인 산업폐수는 주로 제조시설에서 배출된다. 1998년의 주요 수계에 대한 폐수배출업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8천여곳의 폐수배출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된 양은 하루 261만4천 m³였다.

수계별 폐수방류량을 보면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순이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폐수방류량과 유기물질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에 폐수 다량 배출업종인 섬유·화학 등 업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강수계의 폐수방류량이 많은 이유는 전체 배출 사업장의 28.3%에 해당하는 10,558곳이 한강수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해·서해 등 해

역권에는 주요 산업단지가 입지해 폐수 방류량과 유기물질부하량이 많은 편이다. 공업용수 또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취수원이 하천임을 감안하면 한강·낙동강 권역 등 오염원이 밀집됐고 오염 부하량이 큰 수계에 대해 적극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 10-7> 수계별 사업장수 및 폐수방류량(1998)

(단위 : 개소, 천m³/일)

수 계	사업장수	폐수방류량
계	37,621	2,614
한 강	10,558	384
낙 동 강	5,690	491
금 강	3,137	196
영 산 강	1,381	65
기 타	5,649	348
동 해	1,045	545
서 해	4,810	321
남 해	5,351	275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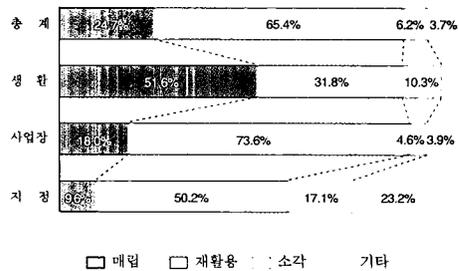
폐기물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 즉 경제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시스템으로 배출하지 않고 경제시스템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이용·재활용·에너지 회수·소각, 매립의 순으로 정했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1993년을 전환점으로 다시 점증하는 추세다. 생활쓰레기는 1995년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0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 1일

[그림 10-2] 폐기물 처리실태(1998)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 개선책도 요망된다.< 환경백서, 1998 >

<표 10-8>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천톤/일)

	'94	'95	'96	'97	'98	'99	
계	147.1	148.1	180.5	195.3	190.3	219.2	
생활폐기물	58.2	47.8	49.9	47.9	44.6	45.6	
사업장 폐기물	소계	88.9	100.3	130.6	147.4	145.7	173.6
	일반	85.2	95.8	125.4	141.3	140.4	166.1
	지정	3.7	4.5	5.2	6.1	5.3	7.5

주 : 1) 1994년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에 따라 오톨류, 폐석고류 등 지정(특정)폐기물중 80% 이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전환

2) 1996년 사업장 폐기물중 일반폐기물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건설폐기물 관리강화에 따라 신고량이 늘어난 때문임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1.3kg이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1995년 1월)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처리구조를 보면 매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정책에 힘입어 매립처리율이 56.2%로 줄어드는 한편 재활용률이 34.9%로 높아지는 등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59.3%에 이르는데도 소각처리율이 8.9%에 불과하다는 것은 좁은 국토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시급히 개선할 과제다.

제2절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은 대기·물·토양 등의 무기 환경과 동물·식물 등의 생명체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능면에서 끊임없이 상호 물질순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상호 분리하면 전체 자연환경이 일단 파괴되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이 된다 하

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해 인구밀도가 높고 자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일수록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다. 최근 소득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욕구는 단순한 환경오염의 제거로부터 자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경관의 보호 등의 자연환경 보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다.

생물종의 보전

생물다양성 감소란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산성비,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문제로 지구상의 생물종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상에는 약 1억종의 생물이 서식하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종 감소를 막고 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2000년 2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 10월 가입국이 됐다.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70만종이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50년 이내에 지구상 생물종의 약 1/4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한다.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의 증가에 있다. 목재, 야생동·식물, 농산물 등을 좋아하는 성향이나 삼림·바다에서의 과도한 채취 활동이 종 보유량을 고갈시켜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생물종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이 늘어나 대기·강·호수·해양 등으로 방출된다는 점이다. 생물종의 감소는 그 생물종의 존재 유무 뿐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능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생물종은 인간에게 새로운 식량·의약품·에너지 형태로 다양한 혜택을 주며 환경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종과 유전인자가 보전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은 18,032종이고 식물은 8,271분류군이다. 척추동물의 경우 1,443종이며 어류가 905종, 양서류·파충류 41종, 조류 417종, 포유동물 80종, 곤충 11,853종 등이다. 그 외에 균류가 1,625종, 원생생물이 736종, 원핵생물이 1,167종이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은 약 175만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미확인된 것까지 포함하면 1천만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삼림개발과 남획 등 생태계의 훼손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감소되는 종수는 매일 30~40종에

〈표 10-9〉 한국산 생물종의 현황

	분류군	종수
척추동물	포유류 ¹⁾	80
	어류	905
	양서류·파충류	41
	조류 ¹⁾	417
	계	1,443
무척추동물1	해면동물	204
	편형동물	123
	구두동물	1
	대형동물	145
	성구동물	9
	환형동물	380
	절지동물	1,028
	극피동물	107
	자포동물	224
	윤형동물	159
	내항동물	1
	완족동물	9
	연체동물	997
	완보동물	49
	모악동물	39
미색동물	89	
	계	3,564
무척추동물2	곤충	11,853
	거미	1,172
	소계	13,025
고등식물	단자엽식물	842
	쌍자엽식물	2,815
	양치·나자식물	314
	선태류	691
	소계	4,662
하등식물	규조류	1,512
	편모조류	316
	담수녹조류	1,064
	윤조류	27
	해조류	690
	소계	3,609
	균류	관류(지의류 포함)
원생생물		736
원핵생물	미생물	1,167
총계		29,831

주 : 1) 조류·포유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시종수, 1998

자료 : 한국동문분류학회, 「한국동물명집」, 1997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국내생물종문헌조사연구」, 1996

〈표 10-10〉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현황

지 역	지 정 사 유	지 정 면 적(km ²)	지정일자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34.21	1989. 3.10
지리산	극상원시림	20.20	1989.12.29
대암산	고층습원	1.06	1989.12.29
창녕우포늪	국내최대규모의자연늪	8.54	1997. 7.26
울산무제치늪	고층습원	0.18	1998.12.31
광양백운산	희귀식물자생지	9.74	1993. 4.26
대덕산금대봉	생물종이 풍부하고다양	4.20	1993. 4.26
조종천상류	희귀곤충상 및 자연림지역	21.84	1993. 9. 1
거제시	고란초집단서식지	0.002	1992.10.2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 보전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는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조건은 ①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②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③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 보전지역은 낙

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의 극상 원시림, 강원도 대암산의 고층습원, 광양 백운산 희귀식물 자생지, 태백시 대덕산 금대봉의 생물종·풍부지역,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 희귀곤충 및 자연림 지역, 거제 고란초 집단자생지역, 창녕우포늪 등 총 면적이 약 100km²(해면 34km² 포함)에 이른다.

습지보전

습지(wetlands)란 영구적으로 습한 곳과 건조한 환경 사이의 이행대 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바뀌는 생태적 천이단계의 중간 지역을 말한다. 습지는 크게 해안의 갯벌, 강어귀의 삼각주, 육상의 늪으로 구분된다.

습지는 각종 어패류,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다. 오염물질 정화, 홍수 조절 등 환경적으로나 사

습지

습지는 ①단순히 물을 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생산력이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②오랜 과정 물의 흐름과 고임을 통해 다양한 생물을 부양함으로써 완벽한 생산과 소비를 갖춘 생태계를 형성한다. ③오염물질의 소멸처로서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며,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고, 오염물질을 생물자원으로 바꾸는 곳이다. 을숙도나 새만금 같은 곳은 경관이 좋아 사람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있는 자연자산이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미비하여 그동안 매립 등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Ramsar)협약에 가입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암산 용늪 및 창녕 우포늪을 협약 등록 습지로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 및 내륙에 다수 분포하는 가치있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1999년 2월에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의 종류는 내륙습지(늪)·하구·사구호·염습지·갯벌 등이다. 주요 내륙의 습지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491㎢ 중 중부권(충남북·경북·전북)이 전체의 50.9%인 250㎢을 차지한다. 북부권(경기·강원)은 128㎢(26.1%), 남부권(전남·경남)은 113㎢(23.0%) 등이다.

〈표 10-11〉 내륙 습지면적

(단위 : ㎢)

총면적	북부권 (경기, 강원)	중부권 (충남북, 경북, 전북)	남부권 (전남, 경남)
491 (100.0)	128 (26.1)	250 (50.9)	113 (23.0)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9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한 환경대로 만·염하구·해변·갯벌·산호초·해안절벽 등 다양한 모습을 띤다. 물리적 환경의 경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이질적인 생태계 사이에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태적 통합 장소가 된다. 특히 연안은 간척·매립·해상공항·해양관광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연안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 등은 시화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오염부하 및 환경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안은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안은 통상 바다와 육지와는 다른 「제3의 공간」으로 유형을 분류하며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연안

(coastal zone)의 일정 범위에 특별권역을 설정하여 계획적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전남이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한다.

〈표 10-12〉 연안 습지면적(1998)

(단위 : km²)

총면적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393	838.5	304.2	113.6	1,054.1	82.6

자료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갯벌』, 1999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하게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다.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분류된다. 19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1곳(총면적 7,528.830km²)으로 전 국토의

〈표 10-13〉 국립공원 현황

지정순위	공원명	위 치	면적(km ²)	지정일자	비 고
계			6,473.113		육지 3,824.57km ² , 해면 2,648.543km ² (전국토의 6.5%)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440.5	1967. 12. 29	
2	경 주	경 북	138.2	1968. 12. 31	경북도 위탁관리
3	계 룡 산	충 남	61.1	1968. 12. 31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510.3	1968. 12. 31	해상 344.8km ² (오동도 전남도 위탁관리)
5	설 약 산	강 원	373.0	1970. 3. 24	
6	속 리 산	충북, 경북	283.4	1970. 3. 24	
7	한 라 산	제 주	149.0	1970. 3. 24	제주도 위탁관리
8	내 장 산	전남·북	76.0	1971. 11. 17	
9	가 야 산	경남·북	80.2	1972. 10. 13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219.0	1975. 2. 1	
11	오 대 산	강 원	298.5	1975. 2. 1	
12	주 왕 산	경 북	105.6	1976. 3. 30	
13	태안해안	충 남	329.0	1978. 10. 20	해상 290.3km ²
14	다도해해상	전 남	2,344.9	1981. 12. 23	해상 2,004.5km ²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78.5	1983. 4. 2	
16	치 약 산	강 원	182.1	1984. 12. 31	
17	월 약 산	충북, 경북	284.5	1984. 12. 3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320.5	1987. 12. 14	
19	변산반도	전 북	157.0	1988. 6. 11	해상 9.0km ²
20	월 출 산	전 남	41.9	1988. 6. 11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7.5%를 차지한다. 육지 면적 4,814.956km²(전국토의 4.8%)와 해면 면적 2,713.874 km²(전국토의 2.7%)로 구성되며 이 중 국립공원이 20곳, 도립공원이 22곳, 군립공원이 29곳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풍경 지역에 지정된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지리산·경주 등 4곳, 1970년대에 설악산·속리산 등 9곳, 1980년대에 다도해 해상 등 7곳이 지정되었다. 1998년말 현재 20곳에 걸쳐 총면적이 약 6,500km²로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육지 면적은 3,825km²(국토의 3.8%), 해면면적은 2,649km²(국토의 2.7%)이다. 해면이 포함된 공원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3. 환경관리

환경산업과 오염방지지출

환경기술은 환경산업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새 천년에는 정보·관광·환경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더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가 점차 강화되면서 향후 10~15년간 세계환경시장이 급성장하여 1996년 4,530억 달러에 불과하던 환경시장이 2005년에는 6,6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세계 환경시장의 80% 이상은 OECD 국가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 선진국의 주요기술개발 분야는 사후처리보다는 청정기술 등 사전오염 예방기술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나 앞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시장도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표 10 -14〉 환경산업시장의 전망

(단위 : 억달러)

	1996	2000	2005
전세계	4,530	5,430	6,610
일본	771	817	1,141
아시아	189	364	908
한국	47	62	86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9

1998년 중 우리나라의 환경시장 지출 총규모는 약 7조3천억원으로 전년 8조4천억원보다 13.7% 줄었으며, GDP대비 비율도 1.62%로 전년보다 0.2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른 것이다. 오염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및 수질 개선비용 지출은 전년대비 각각 21.2%, 19.1% 감소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환경산업에 대한 오염방지 지출규모를 GDP 대비로 살펴볼 때

〈표 10- 15〉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

(단위 : 십억원, %)

		1996년		1997년		199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환경오염방지지출 (GDP대비 비율)		7,239 (1.73)	14.8	8,421 (1.86)	16.3	7,264 (1.62)	-13.7
지출 주체별	정 부	3,367	15.0	4,327	28.5	4,033	-6.8
	기 업	3,329	12.2	3,522	5.8	2,883	-18.1
	가 계	543	32.0	572	5.2	348	-39.1
오 염 매체별	대 기	1,071	12.0	1,401	30.8	1,103	-21.2
	수 질	3,608	17.3	4,260	18.1	3,445	-19.1
	폐 기 물	2,274	19.1	2,499	9.9	2,505	0.3
	기 타	286	0.1	261	-8.7	211	-19.4

자료 :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 1999

1994년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이 1.6%, 프랑스 1.4%, 캐나다 1.1%이었으며 한국의 환경산업도 선진국과 유사한 1.5%이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GDP 대비 지출규모가 적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환경산업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기업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환경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환경산업의 규모와 투자비중이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조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나 1970년대 초부터 산업구조 면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에너지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자재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역시 질적·양적 측면에서 현저히 증가했다. 오늘날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환경권 침해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를 미치게 된 것이다.

〈표 10-16〉 환경오염방지 지출의
대 GDP 비율(1994)

(단위 : %)

	캐나다	미 국	프랑스	독 일	한 국
비율	1.1	1.6	1.4	1.6	1.5

자료 :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1999

환경분쟁은 전문적인 조사·분석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행위와 피해사실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분담이 명확치 않다. 환경피해의 치유나 구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가해자에게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체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 이후 1999년까지 환경분쟁 조정건수는 총 331건 접수되었으며 280건이 종결처리되었다. 조정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이후의 조정사건을 오염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331건의 분쟁조정사건 중 소음·진동분야가 76%인 253건으로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대기분야 41건 12%, 수질분야 28건 8%, 해양분야 9건 3% 등이다. 특히 1999년 신청사건의 경우는 소음·진동분야가 87%를 차지했다. 도심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표 10-17〉 환경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
(단위 : 건수)

	계	'91~'93	'94	'95	'96	'97	'98	'99
접수	331	48	14	29	49	47	62	82
처리	280	34	19	34	35	40	49	79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호

계 대부분이다.

〈표 10-18〉 오염원인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단위 : 건수)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계(%)	331 (100)	253 (76)	41 (12)	28 (9)	9 (3)
1991~93	48	22	10	8	8
1994	14	10	2	2	-
1995	29	18	3	7	1
1996	49	40	7	2	-
1997	47	36	9	2	-
1998	62	56	4	2	-
1999	82	71	6	5	-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 및 사업승인기관이 개발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는 데 환경적 요소를 고려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 부정적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연하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 2월

〈표 10-19〉 연도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단위 : 건수)

	계	'86 이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2,032 (726)	53	69	73	120	212	210	127 (20)	149 (98)	115 (74)	161 (110)	151 (99)	151 (106)	155 (110)	154 (104)

주 : ()내는 환경관리청 협의실적임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0

부터 시행됐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평가대상 사업으로 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미흡하여 80년대 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수 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평가협의 실적도 증가했다. 최근 4년간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적이 150~160건으로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환경관리청에서 협의한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70%를 차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관

리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평가대행자·사업승인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제 11 장 문화·예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먹고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를 지나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와 예술, 여가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관습,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을 두루 표현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문화라는 표현은 예술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여가' (leisure)다. 여가는 일하거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보내는 시간 이외에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는 여러 활동들을 뜻하지만 근래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꾸리는 중요한 계기로 여가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화와 예술, 여가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특히 최근 영화·대중음악·방송 등 문화산업이 일반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관광도 넓은 의미의 여가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관광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국민 경제적 비중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살펴본다.

제1절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재란 한 민족이 이룩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칭한다. 역사상·학술·예술적으로 또는 관상할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 자연 지리적 조건, 일상생활 자료 그리고 모든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 문화재에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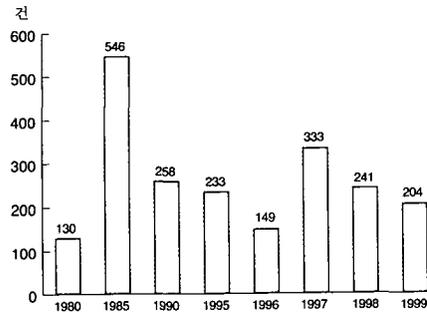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자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

으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1-1>은 연도별 문화재 지정수를 보여준다. 문화재의 지정은 새로운 문화적 유산이 많이 발굴되면 크게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추이가 반드시 어떤 경향을 띠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보전에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1980, 1990년대에 해마다 150~300개 정도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왔다. 1997년에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333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다. 1999년에는 보물 6개 등 국가지정문화재 24개, 시도지정문화재 125개, 문화재자료 55개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현재 총 문화재 수는

[그림 11-1] 문화재 지정수



7,786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가장 큰 비중은 보물로 총 1,284개이다.

유엔 산하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문화·예술 시설

문화예술 시설이란 공연·전시·지역문화복지·문화보급전수 시설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기반 시설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시설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화예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하면 문화체험의 기회는 제한된다. 하지만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접할 수 없다.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은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고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공연시설에는 종합공연

<표 11-1> 연도별 문화재 지정 수

(단위 : 건)

연도	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자료	국보	보물	중요 무형 문화재	기타		
1980	130	43	1	24	10	8	87	-
1985	546	60	8	43	4	5	195	291
1990	258	56	6	36	3	11	142	60
1995	233	27	4	21	-	2	150	56
1996	149	31	2	11	11	7	86	32
1997	333	62	14	30	-	18	194	77
1998	241	43	-	18	-	25	146	52
1999	204	24	1	6	-	17	125	55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연보』, 각 호

문화재의 분류

유형문화재에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우리 조상들이 만든 여러 인공 조형물들이 포함된다. 무형문화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유산들로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를 비롯해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경승지로서 예술적으로나 관람하는데 가치가 큰 것,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이다. 식물의 자생지, 광물이나 동굴 등 자연적인 자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속자료란 주민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쓰이는 의복·기구·가옥 등이다.

장·일반공연장·소공연장·영화관이 포함되며, 전시시설로는 미술관·박물관·전시실·화랑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이 가까이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문화복지시설로는 시·군(구)민회관·문화의 집·복지회관·청소년 시설이 있고, 문화보급전수시설로는 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을 들 수 있다. 이 중 시·군(구)민회관과 복지회관·청소년 시설은 문화예술 행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들 시설을 통한 문화예술 행사나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추 역할을 하는 문화원과 국악원·전수회관 등도 이 같은 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공연 및 전시시설 구분

공연시설에는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소 공연장·영화관이 포함된다. 영화관은 전문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나머지 세 가지는 영화 이외의 공연이나 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공연장은 수용 가능한 관람객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종합공연장은 공연예술과 전시·행사·강연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하는 객석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시설이다. 일반공연장은 연극·무용·연주 등 순수공연예술만을 주로 공연하는 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모 시설, 소 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을 하는 객석규모 300석 미만의 시설이다.

전시시설은 예술장르 및 규모에 따라 각각 미술관·박물관·전시실·화랑 등으로 구분된다.

<표 11-2>에 수록된 문화예술 시설은 국·공립, 민간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예술 시설은 공연시설이 가장 많아 1,036개이며, 박물관 207개, 미술관 46개이다.

<표 11-2> 문화·예술 시설공간 수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미술관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1994	978	50	66	114	748	382	34	
1995	1,015	44	89	133	749	157	277	
1996	1,012	47	106	147	712	172	298	
1997	889	47	115	165	562	215	33	
1998	883	50	116	155	562	222	39	
1999	1,036	59	193	185	599	207	46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공간 현황』, 각 호

영화관은 1994년에는 748개였으나, 1990년대 중·후반에 지속적으로 줄어 1999년에는 599개로 줄어들었다. 영화관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TV와 VTR의 보급으로 지방 중소 극장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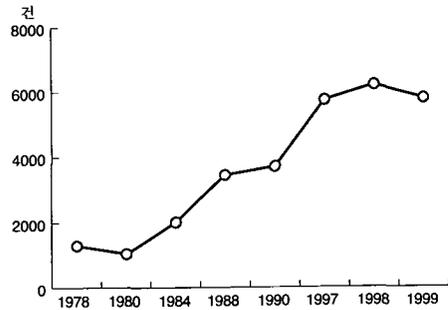
특히 VTR의 보급은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90년대에 많이 생긴 비디오 상영관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했다. 그러나 영화관 숫자의 감소가 영화 스크린의 감소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근래 하나의 영화관에서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복합영화관, 즉 멀티플렉스(Multi-Flex) 영

<표 11-3> 주요 미술 전시회 수

	1978	1980	1984	1988	1990	1997	1998	1999
회수	1,299	1,046	2,014	3,446	3,707	5,745	6,203	5,794

자료 :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

[그림 11-2] 주요 미술 전시회 수



화관이 많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시설이 전반적으로 확충되었다 해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향유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문화시설 이용

국민들이 얼마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지는 우선 입장률 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입장률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해당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표 11-4>는 공연장 및 전시장·체육시설의 입장률을 보여준다.

〈표 11-4〉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단위 : %)

	입장률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1984	-	42.6	8.7	9.0	-	40.4	22.0	17.7	10.4	-
1989	-	36.8	7.1	7.9	1.4	34.4	16.3	12.4	7.8	-
1992	41.6	35.6	7.8	8.8	1.4	32.2	17.6	13.7	8.3	-
남	43.1	36.7	6.3	7.2	0.8	33.8	17.6	14.1	7.6	-
여	40.2	34.6	9.2	10.3	2.0	30.7	17.7	13.3	9.0	-
1996	44.4	33.5	11.2	8.8	1.2	27.2	16.0	10.8	9.2	17.0
남	47.5	32.8	9.5	7.2	0.7	27.3	15.2	10.7	8.0	24.1
여	41.4	34.1	12.8	10.2	1.7	27.1	16.8	10.8	10.3	10.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1984년에서 1996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은 점차 줄어들었다. 1992년에 비하여 1996년에 전체 입장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체육시설 입장률이 1996년 조사 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과 1996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공연장 입장률은 42.6%에서 33.5%, 전시장 입장률은 22.0%에서 16.0%로 감소하였다. 공연장 입장률 감소는 주로 영화관 입장률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입장률이 40.4%에서 27.2%로 13.2%포인트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음악 공연장 입장률은 8.7%에서 11.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연 분야 중 가장 높은 입장률을 보여주는 것은 영화이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연극·무용 순이다. 전시장 입장률의 감소는 주로 박물관 이용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 비하여 미술관 입장률은 10.4%에서

9.2%로 1.2%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 박물관 입장률은 17.7%에서 10.8%로 6.9%포인트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5〉 영화관람 추이

	총인구 (천명)	영화관 입장자수 (명)	국민1인당 평균영화 관람횟수
1970	32,241	166,349,541	5.3
1975	35,281	75,597,977	2.2
1980	38,124	53,770,415	1.4
1985	40,806	48,098,262	1.2
1990	42,869	53,459,280	1.2
1991	43,296	52,196,654	1.2
1992	43,748	47,110,475	1.1
1993	44,195	48,230,788	1.1
1994	44,642	48,353,326	1.1
1995	45,093	45,130,424	1.0
1996	45,545	42,268,260	0.9
1997	45,991	47,523,655	1.0
1998	46,430	50,170,654	1.1
1999	46,858	54,721,308	1.2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과거에는 박물관 단체관람 등이 많았지만 갈수록 이러한 형태의 박물관 관람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다른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1996년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입장률이 남성보다 약간씩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47.5%, 여성이 41.4%로 남성이 더 높다. 이는 남성의 체육시설 입장률(24.1%)이 여성(10.3%)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앞서 입장률 조사를 통해 본 영화관 이용의 감소는 <표 11-5>의 연도별 영화관 관객 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우선, 1970년대에 영화관의 관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에 국민 1인당 연간 5.3회 영화를 봤지만 1980년대에는 1.2~1.4회, 1990년대에는 1.0~1.1회, 1996년에는 0.9회로 계속 줄어들었다. 1975년부터 컬러TV가 생산되고, 1982년부터 VTR이 생산되었다는 점

에 비추어 영화 관객 수 감소는 극장에 가지 않아도 다른 매체에서 영화나 그에 상응하는 오락물을 접할 수 있게 된 결과다. 1997년 이후 영화 관객 수가 약간의 증가 추세로(1인당 1.0~1.1회) 돌아섰다. 여기에는 외국의 대작 영화 수입과 함께 좋은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제작·상영되고 장르도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 향수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독서인구 비율이다. 독서인구비율이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표 11-6>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서인구비율은 1984년 56.1%에서 1992년 64.1%까지 증가하였다가 1996년 63.5%로 정체되었다. 그러나 평균 독서 권수는 1984년 6.9권에서 1996년 16.1권으로 꾸준히 늘었다. 1996년 현재 남성은

<표 11-6> 독서인구비율

(단위 : %, 권)

	독서인구비율	
		평균권수
1984	56.1	6.9
1989	61.3	9.5
1992	64.1	14.3
남	68.0	17.2
여	60.4	11.5
1996	63.5	16.1
남	66.6	19.0
여	60.5	13.4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11-7> 신문 구독

(단위 : %)

신문구독인구 비율	
1985	62.2
1990	66.6
1993	70.5
남	82.6
여	59.0
1996	72.2
남	83.1
여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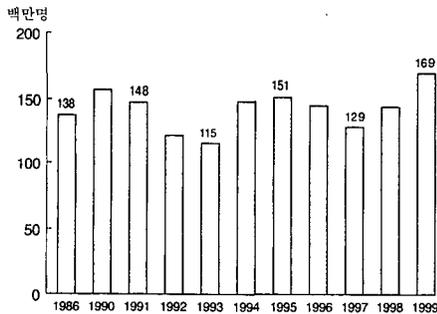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11-8〉 도서관수, 장서수 및 이용자수

	도서관수 (개)	열람석수		장서수		연간이용자수 (천명)	예산액 (백만원)
		(석)	인구만명당	(천권)	인구만명당		
1975	4,296	343,578	97.4	21,262	6,026.5	9,561	3,583
1981	3,719	455,180	117.5	28,567	7,377.3	-	22,190
1986	5,437	660,575	160.3	44,785	10,866.5	138,007	53,354
1990	7,364	924,409	215.6	68,917	16,076.2	156,387	114,496
1991	7,672	943,072	217.8	65,284	15,032.3	147,562	134,603
1992	10,106	937,092	214.2	78,566	17,958.8	121,508	162,707
1993	10,145	961,120	217.5	84,700	19,165.1	115,149	226,463
1994	7,694	880,695	197.3	76,387	17,111.0	148,278	258,524
1995	7,758	913,315	202.5	81,909	18,164.5	151,325	286,524
1996	8,785	971,602	213.3	95,839	21,042.7	145,328	376,135
1997	9,291	993,315	216.0	99,011	21,528.3	128,735	454,182
1998	9,361	1,018,575	219.4	107,524	23,158.4	144,548	409,228
1999	10,037	1,223,813	261.2	130,444	27,837.9	168,789	484,520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각 호

[그림 11-3] 도서관 이용자수



66.6%, 여성은 60.5%가 독서인구로 조사 되었으며, 남성은 연간 평균 19.0권, 여성은 13.4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구독인구는 1985년 62.2%에서 1996년 72.2%로 증가하였다. 1996년 남성의 83.1%, 여성의 61.9%가 신문을 구

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인구 비율은 최근에 증가하지 않으나 독서 권수·신문구독 인구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독서를 통하여 정보나 지식을 얻고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서에 대한 또 한 가지 지표가 도서관 이용 현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문화예술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서관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접하는 등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이용된다. 근래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거나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1999년 현재 총 10,037개이며, 인구 1만명당 열람석 수

는 261.2석, 인구 1만명당 장서 수는 약 2만8천권이다. 지난 2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도서관과 열람석 수는 1994년에 한 차례 큰 폭으로 감소(약 24% 감소)한 바 있으나, 그 후로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5년 인구 1만명당 도서관 열람석 수는 97.4석이었으므로, 1999년까지 약 세 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의 장서 수는 1975년에 비해 약 6.1배로, 인구 1만명당 장서 수는 1975년(6,026권)보다 약 4.5배로 증가하였다.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는 1999년 1억6천8백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 증가하였다. 1975년의 9백56만명에 비하면 약 18배 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실태는 공연 · 전시장 입장률, 영화 관객 수, 독서인구, 신문구독인구, 도서관 이용자 수 등에서 각기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인쇄매체 이용은 증가 추세인 반면, 공연장 및 전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보다는 개인적인 문화향수경향이 늘고 있다고 하겠다.

제2절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를 생산, 유통시키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의 출판과 음반 · 비디오 · 영화 · 방송 · 게임 · 공예 · 전시 및 공연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문화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동차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크다는 사실 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문화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비단 문화산업이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일상적 문화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시급하다.

출판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의 기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을 기록하고 유통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책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의 기록,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식의 유통 경로다. 이런 점에서 출판산업의 육성은 우리사회 전체의 지식을 좀 더 풍부하게 한다.

출판산업 통계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로 작성한다. <표 11-9>의 연도별 도서 발행 실적을 보면, 199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도서는 총 25,910종, 약 7천6백만권으로 나타났다. 발행 도서의 종류나 발행부수는 1980년대 말 이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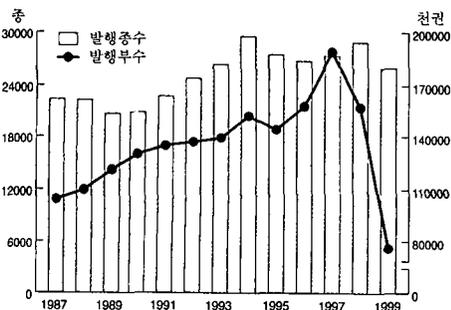
〈표 11-9〉 도서발행 실적

(단위 : 종, 천권)

	발행종수	발행부수
1987	22,425	104,335
1988	22,336	109,747
1989	20,745	120,876
1990	20,903	129,611
1991	22,770	134,616
1992	24,783	136,752
1993	26,304	139,222
1994	29,564	152,326
1995	27,407	144,184
1996	26,664	158,137
1997	27,313	188,707
1998	28,838	157,510
1999	25,910	75,841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각 호

[그림 11-4] 도서발행실적



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도서 가치는 1987년 22,425종에서 1998년 28,838종까지 늘었고, 발행부수도 1987년 1억434만권에서 1998년 1억5,751만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도서 종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혹은 정체에 머물러 있다. 발행부수도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7년보다 약 16%나 감소했고 1999년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출판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문제점은 전반적 업계의 부진뿐만 아니라, 책의 종류가 너무 편중된다는 점이다. 초등·중·고등학교의 참고서나 어린이용 교재가 발행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순수과학이나 철학·예술·역사 등 인문학 분야의 책 출판은 취약한 편이다. 1999년의 경우 출판된 도서가 학습참고서·아동·문학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세 분야의 부수 합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철학·예술·역사서적은 각각 2백만부 수준에 머물렀고, 순수과학은 1백만부에도 못 미쳤다. 물론 이 통계가 초판 기준인 경우가 많아 재판 이상의 발행부수가 상당부분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기초 지식이나 학문 분야가 아닌 현실·실제적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판산업의 부진은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 되면 출판산업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하지만 책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정보전달 매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책읽기 생활화가 출판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영화산업

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대상의 하나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역사도 100여 년에 이른다. 우리나라 영화로 최초 제작된 것은 1919년의 '의리적 구투'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아리랑'·'춘향전' 등이 일제시대 제작된 우리 영화의 대표작들이다. 우리나라 영화는 TV가 본격 보급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오락거리 중의 하나였다. 특별한 오락이 없던 시절에 영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상상의 날개를 제공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활발한 제작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TV가 본격 보급되고, 외국 영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국산 영화는 긴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면이 많았으나, 최근 그 같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영화를 단순한 오락거리에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국산 영화들은 외국 영화에 못지 않은 재미를 주면서 흥행에도 성공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대작 영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영화의 규모나 흥행은 미진한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영화제작 및 수출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표 11-10>은 영화 제작 편수를 보여주

고 있다. 전체 제작편수는 1970년대 초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559편, 1996년 631편에 이르렀다. 그러나 극영화 제작편수는 1990년 111편에서 1995년 64편, 1999년 49편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다. 반면 광고영화는 1990년 303편에서 1996년 563편에 이르기까지 거의 감소한 해 없이(1992년 제외) 증가하여 6년간 1.9배로 늘었다.

이처럼 극영화 제작이 부진한 것은 1980년대 말 외국 영화사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배급할 수 있게 영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 영화가 많이 수입된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영화산업에도

<표 11-10> 영화제작 편수

(단위 : 편)

	계	극영화	문화영화	광고영화
1970	1,018	209	119	690
1975	256	94	52	119
1980	257	91	57	129
1985	250	80	34	146
1990	435	111	21	303
1991	447	121	21	305
1992	376	96	33	247
1993	407	63	19	325
1994	523	65	41	417
1995	559	64	13	482
1996	631	65	3	563
1997	...	59
1998	...	43
1999	...	49

주 : 1997년 4월 영화진흥법 개정시 문화영화, 광고영화에 대한 「신고제」 폐지로 1997년 이후 통계 작성 안함
 자료 :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금융 자본 등 새로운 영화제작 자본이 진출하고 영화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영화기획사 신인감독이 등장해 한국영화의 흥행도 다소 나아졌다. 1999년에 개봉된 '쉬리' 같은 경우 한국형 블록버스터(대작영화)로서 당시까지 한국영화 사상 최다관객 동원 등의 기록을 남기면서 국산 영화의 관객점유율을 40% 가까이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자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을 40%에 육박한 나라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물다. 프랑스 같이 자국 영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한편 우리나라 영화의 수출 실적을 보면, 다양한 제작 경향에 힘입어 다소 늘어

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추세가 없이 기복이 심하지만 1990년대 들어 매해 10편 이상을 수출해왔다. 1990년대 초반 10편대이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20~30편대, 1999년에는 75편까지 늘었다. 편당 평균 가격은 낮게는 1996년 상반기의 6,379달러에서 높게는 1990년의 12만1,487달러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 해에 수출된 작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수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9년 한 해 동안 수출한 영화는 총 75편으로, 편당 수출액은 평균 79,590달러, 총 수출액은 596만9천달러였다. 영화 수출액은 수입보다 상당히 적다.

〈표 11-11〉 한국영화 수출실적

	편수	편당평균 가격(달러)	수출액(달러)
1980	16	18,188	291,000
1985	2	10,000	20,000
1990	13	121,487	1,579,326
1991	17	27,814	472,850
1992	14	13,993	195,900
1993	14	12,417	173,838
1994	14	44,348	620,879
1995	15	13,911	208,679
1996	48	60,617	1,694,100
1997	36	13,666	492,000
1998	33	21,628	713,750
1999	75	79,590	5,969,219

주 : 1996년 영화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라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료는 비공식 집계임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표 11-12〉 외국영화 수입추천 실적

	극영화	문화 영화	계	사용외화(달러)
1980	36	5	41	7,488,196
1985	27	3	30	5,879,784
1990	301	8	309	27,100,859
1991	304	5	309	31,993,580
1992	351	9	360	41,418,432
1993	410	10	420	60,228,496
1994	373	8	381	57,034,475
1995	367	11	378	67,862,529
1996	461	22	483	85,660,997
1997	415	16	431	69,270,274
1998	278	18	296	35,109,580
1999	333	15	348	26,664,64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외국영화 수입은 외국 영화사의 직접 배급이 허용된 1980년대 말 이후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한 몫 했다. <표 11-12>에서 보듯이 1990년 309편(수입추천기준), 약 2천7백만달러에서 1993년 420편, 약 6천만달러로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다가 그 후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1999년 수입추천 영화는 총 348편이며, 영화 수입에 사용된 외화는 총 2,700만달러 가량이다.

우리나라의 영화 수입·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1999년 수출액이 수입액의 약 2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가 국내에서는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외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 대작영화가 지배하는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한 단계 비약을 위해서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서도 성공할 수 있는 영화의 발굴이 절실하다.

음반 및 비디오

음반 및 비디오산업 역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큰 부분이다. 우리나라 음반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에서도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다. 『1998 한국 음반·비디오 연감』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은 세계음반 시장 38억달러의 0.9%인 3억3천4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18위 수준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다.

내수기반도 비교적 탄탄해 국내 판매된 음반 중 국내 가요가 76%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음악을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1990년대 이후 10대 청소년위주로 형성돼 음반산업의 편중성

<표 11-13> 음반 및 비디오 생산량 및 매출액

(단위 : 천개, 백만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 계	생산량	124,657	158,613	173,441	204,928	216,702	299,275	229,962
	매출액	-	-	-	244,778	270,606	320,456	218,253
비디오	생산량	15,722	17,289	23,933	20,842	28,869	63,014	29,162
	매출액	92,367	99,182	133,788	106,888	120,245	124,094	51,353
음 반	생산량	108,935	141,324	149,508	184,086	187,833	236,262	200,800
	매출액	-	-	-	137,890	150,361	195,362	166,900

주 : 국내 제작사 출고가 기준
 자료 :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영상진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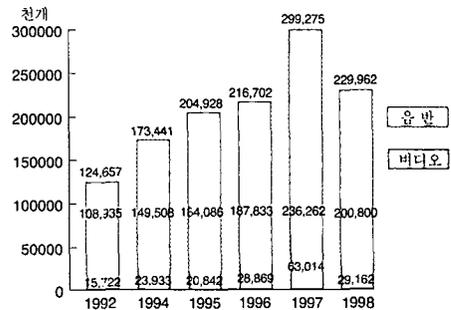
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대만 등 아시아권으로 대중가수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음반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많이 높아졌다.

음반 판매량의 시기별 변화를 <표 11-13>에서 살펴보면, 1992년 이래 음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1995년 이후 두드러졌으며 1998년은 2억80만개로 1997년(2억3,626만개)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2년 1억894만개에 비해 6년 동안 1.8배 늘었다. 이는 공식 생산량만 집계한 것으로 불법복제 음반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다.

비디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비디오는 영화나 방송물이 일단 극장이나 TV 등을 통해 1차 소비된 이후, 다시 한번 소비되는 2차 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 외에 비디오 전용으로만 제작된 비디오용 영화나 다큐멘터리, 아동용 교육비디오 등도 비디오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우리나라의 비디오 산업은 우선 내용면에서 외국, 특히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통 및 소비 측면에서는 대여점을 통한 소비와 지역의 비디오 상영점을 통한 소비가 주종이다.

우선 비디오 생산량을 보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볼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확산, 소규모 비디오 대여점의 증가 등으로 크게 늘었다. 비디오 생산량은 1992년 약 1천6백만개에서 1997년에는 6천3백만개로 4배 가량으로 늘었다. 외국의 비

[그림 11-5] 음반 및 비디오 생산량



디오 시장 중에는 외국에서는 셀스루 (Sell-through) 비디오라는 판매용 비디오 시장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 보는 대여용 시장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를 사서 감상하기 보다는 대여점에서 빌려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에 미치는 외국 음반 및 비디오 회사의 영향력을 보자. 이는 이들 회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1-14>를 보면 비디오 부문의 로열티 지급액은 1992년 400억원, 1994년 486억원으로

<표 11-14> 로열티 지불액

(단위 : 백만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49,110	47,879	63,562	58,735	61,398	68,210
비디오	40,004	35,433	48,620	41,235	40,583	38,760
음 반	9,106	12,446	14,942	17,500	20,815	25,323
새영상물	-	-	-	-	-	4,127

주 : 국내 제작사 지불액+직배사 지불액

자료 : 문화관광부

점차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1995년 412억원, 1997년 388억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음반 부문의 지속적 성장과 비교하여 볼 때 비디오 부문은 상대적으로 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반은 1992년 91억원에서 1997년 253억원으로 약 2.8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로열티 지급액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 국경이 점차 허물어져 가는 점과, 외국 대형 음반사의 국내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산업

방송산업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자주, 많이 접하는 문화매체의 하나다. 방송은 크게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으로 구분하며, 방송물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지상파(혹은 공중파)·위성·케이블 방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TV와 라디오 모두 무선으로 방송신호를 보내고 TV수상기나 라디오가 그 신호를 받아 재생하는 지상파(공중파)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다. 공영방송인 KBS와 중앙방송인 MBC·SBS, 그리고 경인방송 등 지역방송이 있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을 이용하는 종합유선 방송인 케이블 TV가 도입됐으며, 위성방송 또한 아리랑 TV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는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 방송도 새로운 매체로 등장했다. 특히 최근 방송의 제작·유통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방송의 디지털화이다. 최근 회자하는 디지털 고품질 TV,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 케이블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제작 및 전송 기술의 도입은 방송의 제작·수용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시청자들은 과거처럼 방송을 보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 바로 물어보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화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기호에 맞는 방송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방송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의 향후 경쟁력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방송 사업체 수는 1998년 말 기준으로 라디오 방송이 16개, TV 방송이 12개다. TV는 중앙 4개사와 8개의 지역 민방이 있다. 케이블TV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가 29개이며, 시청자들에게 유선 케이블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77개 정도이다. 우리나라 방송물의 국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1-15>에

〈표 11-15〉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단위 : 천달러, %)

		지상파방송사		케이블 TV		합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계	42,103		6,190		47,933	
수출	1994	5,690	-	-	-	5,690	-
	1995	5,470	-3.8	66	-	5,536	-3.0
	1996	5,384	-1.5	612	827.2	8,318	8.3
	1997	6,967	29.4	1,351	120.7	5,996	38.7
	1998	7,756	11.3	2,261	67.4	10,017	20.4
	1999	10,836	39.7	1,900	-16.0	12,736	27.1
	계	154,543		97,735		250,278	
수입	1994	19,861	-	10,649	-	30,510	-
	1995	26,043	31.1	16,775	57.5	42,818	40.3
	1996	34,267	31.5	29,637	76.6	63,905	49.3
	1997	38,893	13.5	18,385	-37.9	57,278	-10.4
	1998	15,386	-60.4	11,650	-36.6	27,036	-52.8
	1999	20,094	30.6	8,639	-25.8	28,732	6.2

자료 : 문화관광부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케이블TV 부문의 약진이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부문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수출액은 1996년 9.3배, 1997년 1.2배, 1998년 67% 등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나, 1999년 들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출은 1994~1996년 사이에는 연간 550만달러 수준이다가 1997년 약 700만 달러, 1999년에는 1,0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방송 프로

그램 수입은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1,986만달러에서 1997년 3,899만달러로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1998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9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케이블TV의 방송 프로그램 수입은 1994~1996년까지 급증(1,065만달러→2,964만달러)하다가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케이블TV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문의 수입이 1997년경부터 정체됐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방송물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물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송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절 관광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다. 관광을 국내 관광과 해외 관광으로 구분할 때 과거에는 국내 관광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해외여행이나 관광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동남아로의 신흥여행, 대학생의 배낭여행 등이 일반화되면서 더 이상 해외

여행이 일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해외관광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즉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단순히 여행 경비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 관광객과의 만남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국내 관광

우리 국민들의 관광지로 애용되는 곳은 상당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공원 제도는 1967년 자연·환경 보호 및 그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일차적

인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이지만,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을 돕자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공원은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 각 도에서 지정한 도립공원, 군에서 지정한 군립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1999년 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1곳으로 전 국토의 7.5%(육지면적 4.8%, 해면 면적 2.7%)를 차지한다. 이 중 국립공원이 20곳, 도립공원이 22곳, 군립공원이 29곳이다. <표 11-16>에서 보듯이, 1999년 말 자연공원의 총면적은 7,528.8 km로 1987년(7,219.1km)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11년 동안 10곳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국립공원 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고, 군립·도립공원만 5곳 생겼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 실태를 파악하

관광여행

관광여행이란, 관광 또는 레크레이션 목적의 여행을 말한다. 자연경관 및 명소 구경을 위한 여행, 등산·낚시·골프 등의 스포츠 여행, 친척·친구집에 놀러가는 여행, 온천휴양 여행, 오락이나 유흥을 위한 여행, 학생들의 수학 여행 및 단합대회, 교회나 단체 등의 수련회, 가족여행, 신혼여행, 효도관광, 산업시찰, 바캉스 등을 포함한다. 숙박 관광여행과 당일관광여행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1-16> 자연공원의 수 및 면적

(단위 : 개, km)

	개소수			면적		
	계	국립공원	기타	계	국립공원	기타
1987	61	18	43	7,219.1	6,274.2	944.9
1990	66	20	46	7,441.4	6,473.1	968.3
1991	66	20	46	7,441.4	6,473.1	968.3
1992	66	20	46	7,441.4	6,473.1	968.3
1993	67	20	47	7,445.1	6,473.1	972.0
1994	67	20	47	7,445.1	6,473.1	972.0
1995	67	20	47	7,443.0	6,473.1	969.9
1996	68	20	48	7,449.5	6,473.1	976.4
1997	69	20	49	7,511.4	6,473.1	1,038.3
1998	71	20	51	7,528.8	6,473.1	1,055.7
1999	71	20	51	7,528.8	6,473.1	1,055.7

자료 : 환경부, 『한국통계연감』, 각 호

〈표 11-17〉 관광여행 경험률

(단위 : %)

	관광여행 총 경험률	숙박관광여행 경험률	당일관광여행 경험률
1997	87.9	59.6	78.4
1999	91.8	63.7	77.4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99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00

〈표 11-18〉 관광여행 참가횟수

(단위 : 회)

	관광여행 총 참가횟수	숙박관광여행 참가횟수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
1997	6.99	1.30	5.68
1999	5.09	1.35	3.74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99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00

기 위하여 관광여행 경험률 및 관광여행 참가횟수를 살펴보자.

1999년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여행 총 경험률은 91.8%였다. 숙박 관광여행 경험률은 63.7%, 당일관광여행 경험률은 77.4%였다. 1997년에 비해 관광여행 총 경험률과 숙박관광여행 경험률이 증가해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외환위기가 점차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당일관광여행 경험률은 변동이 적는데 비해, 숙박관광여행 경험률이 상승한 것이 이러한 경제회복 심리를 반영한다. 1999년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여행 총 참가횟수는 5.09회였으며, 숙박관광여행 참가횟수는 1.35회,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는 3.74회로 나타났다. 1997년에 비해 관광여행 총 참가횟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즉, 여행 경험률은 높아졌지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참가횟수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숙박관광여행 참가횟수는 증가해 서민층에 경제위기의 여파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반영했다.

해외여행 · 관광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현황을 제시한 <표 11-19>를 보면, 1999년 현재 전체 출국자수는 약 427만명으로 1986년 약

〈표 11-19〉 해외 관광여행자수(승무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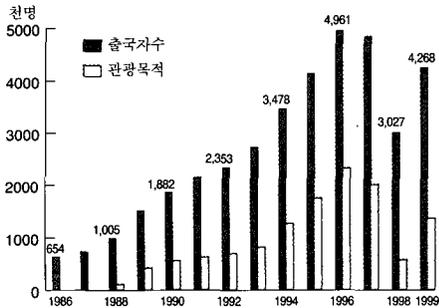
(단위 : 명, %)

	출국자수		
	관광목적	구 성 비	
1986	654,159	3,101	0.5
1987	749,919	12,871	1.7
1988	1,005,320	133,851	13.3
1989	1,529,048	448,727	29.4
1990	1,882,400	590,486	31.4
1991	2,165,725	651,897	30.1
1992	2,353,889	724,146	30.8
1993	2,741,500	846,520	30.9
1994	3,478,199	1,294,511	37.2
1995	4,155,799	1,770,773	42.6
1996	4,960,735	2,347,166	47.3
1997	4,858,135	2,032,537	41.9
1998	3,026,715	602,661	19.9
1999	4,268,102	1,387,277	32.5

주 : 1995년 이후의 관광목적 출국자수는 관광 및 시찰의 합계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호

[그림 11-6] 해외 관광여행자수



65만명의 6.5배에 이른다. 이 중 관광목적 출국자 수는 1988년 해외여행 자율화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 1996년 무렵까지 계속 늘었다. 이처럼 해외 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 접촉 기회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새로운 여가 활용 기회를 찾게 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목적의 출국자수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급감했으나 1999년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의 관광목적 출국자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체 출국자 중 32.5%를 차지했다.

1999년 출국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1.5%, 여자 38.5%다. 이러한 격차는 1986년 70.7%, 29.3%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중이 낮으며 여성이 여전히 주변적 노동력으로 남아 업무상 해외 출장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석

된다.

관광산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의 숫자와 수입액이다. 우선 외래관광객 추이를 <표 11-20>에서 살펴보자. 관광객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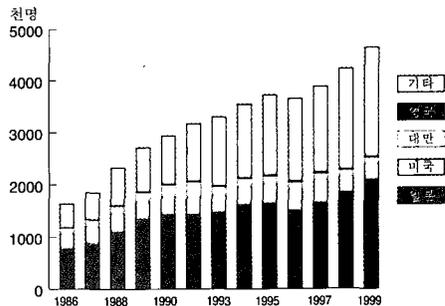
<표 11-20> 외래관광객 추이

(단위 : 천명)

	외 래					
	관광객	일본	미국	대만	영국	기타
1986	1,660	791	285	95	23	466
1987	1,875	894	326	110	25	520
1988	2,340	1,124	347	124	33	712
1989	2,728	1,380	317	157	34	840
1990	2,959	1,461	325	211	36	926
1991	3,196	1,455	316	281	36	1,108
1992	3,231	1,399	334	296	36	1,166
1993	3,331	1,492	325	145	36	1,333
1994	3,580	1,644	333	138	40	1,425
1995	3,753	1,667	359	130	47	1,550
1996	3,684	1,527	399	115	51	1,592
1997	3,908	1,676	424	104	59	1,645
1998	4,250	1,877	293	100	42	1,938
1999	4,660	2,112	300	102	46	2,1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호

[그림 11-7] 외래관광객



〈표 11-21〉 관광수지

(단위 : 백만달러, %)

	관광 수입		관광 지출		관광 수지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1986	1,547.5	97.3	613.0	1.2	934.5
1987	2,299.2	48.6	704.2	14.9	1,595.0
1988	3,265.2	42.0	1,353.9	92.3	1,911.3
1989	3,556.3	8.9	2,601.5	92.2	954.8
1990	3,558.7	0.1	3,165.6	21.7	393.1
1991	3,426.4	-3.7	3,784.3	19.5	-357.9
1992	3,271.5	-4.5	3,794.4	0.3	-522.9
1993	3,474.6	6.2	3,258.9	-14.1	215.7
1994	3,806.1	9.5	4,088.1	25.4	-282.0
1995	5,586.5	46.8	5,902.7	44.4	-316.2
1996	5,430.2	-2.8	6,962.8	18.0	-1,532.6
1997	5,116.0	-5.8	6,261.5	-10.0	-1,145.5
1998	6,865.4	34.2	2,640.3	-57.8	4,225.1
1999	6,801.9	-0.9	3,975.4	50.6	2,826.5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호

는 1986년 약 166만명에서 1999년 약 466만명으로 약 2.8배로 늘었다. 이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보인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약 211만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관광객이 약 30만명으로 나타났다. 일본·미국인 관광객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그 비중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다른 국가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동남아로부터의 관광객이 최근 늘어난 것이 한몫 했다. 관광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관광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 <표 11-21>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광수입은 1986년에 15억5천만 달러였으나, 1999년에는 68억달러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관광수입이 많이 증가한 때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된 1980년대 후반으로, 이 시기에는 전년 대비 50% 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적극적인 관광 객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쓸 곳이 마땅찮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관광지출은 1980년대 말부터 비교적 꾸준히 늘었다. 1993년 경기침체 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1996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관광지출은 1986년 약 6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약 69억6천만달러로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크게 늘고 씀씀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광지출이 관광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광수지는 1990년대 들어 악화됐다. 관광수지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흑자였으며, 특히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는 약 1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해외 관광수입은 정체된 반면 관광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해 1996년에는 15억달러가 넘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관광지출

이 10% 가량 줄어 관광수지 적자도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관광지출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하면서 4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기도 했으며 1999년은 전년에 이어 약 28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다.

제4절 체육 · 여가

사회체육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그 기반 시설인 도시공원의 수와 면적을 살펴보자.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돕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하는 구역이다.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은 우리나라 공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면서 도시계획 때 공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도시공원은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공원, 근린 거주자를 위한 근린공원, 도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자연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한 묘지공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공원 등이

다. 체육공원은 1994년부터 도시공원 개념에 포함되었다.

<표 11-22>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현재 도시공원 총면적은 981.1㎢로, 1985년 568.5㎢보다 72.6% 증가하였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자연공원 면적이 12.2㎡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근린공원 7.6㎡, 묘지공원 0.6㎡, 어린이공원 0.3㎡ 순이다. 도시공원 면적이 증가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도시화와 단독주택지역의 아파트 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공원 등이 많이 들어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1-23>은 1993년에서 1999년까지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간이운동장은 1,439개에서 3,553개, 축구장은 48개에서 53개, 수영장은 65개에서 87개, 육상경기장은 124개에서 176개로 대체로 크게 늘지는 못했다. 야구장은 22

<표 11-22> 도시공원 면적

	총면적 (㎢)	1인당 면적 (㎡)				
		도시자연 공원	근린 공원	어린이 공원	묘지 공원	
1985	568.5	21.4	15.6	5.1	0.1	0.6
1990	713.8	22.1	15.2	6.0	0.2	0.7
1993	642.5	18.6	11.3	6.3	0.3	0.7
1995	720.1	22.3	12.8	8.4	0.3	0.6
1998	969.9	20.2	11.5	7.7	0.3	0.6
1999	981.1	20.9	12.2	7.6	0.3	0.6

주 : 1) '94년부터 체육공원이 포함됨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호

개에서 2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 운동장의 수는 2.5배(2,114개) 늘었으나 면적은 8,901km²에서 17,972km²로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운동장 수의 증가

〈표 11-23〉 공공체육시설수와 면적

(단위 : 개소, km²)

	간이 운동장		축 구 장		수 영 장		육상 경기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3	1,439	8,901	48	838	65	579	124	5,625
1994	1,881	10,388	52	943	71	577	143	7,536
1995	2,188	11,760	51	916	72	579	149	8,151
1996	2,500	12,147	46	817	77	664	153	8,904
1997	2,769	16,048	46	756	80	699	159	10,065
1998	3,167	17,341	49	874	82	761	173	12,160
1999	3,553	17,972	53	954	87	831	176	12,321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각 호

율과 면적의 증가율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 운동장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이 운동장이 많이 생긴 것은 도시공원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고 사회체육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프로 스포츠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는 야구·축구·농구·씨름·복싱·골프 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를 관람하는 게 국민들의 여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는 1980년대에 본격화해, 1990년대 들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많은 선수가 뛰는 종

목은 골프로 1998년 현재 2,214명의 프로 골퍼가 있다.

〈표 11-24〉를 보면 개인 종목인 복싱과 골프·볼링을 제외한 야구·축구·농구·씨름의 직업팀 수는 1999년 현재 총 38개다. 야구와 축구의 경우 선수 수가 꾸준히 늘다가 1999년 다소 주춤해졌다. 씨름 종목은 1995년 이후 퇴조해 1999년 현재 4개팀, 선수 47명에 불과하다. 1996년에 시작된 프로농구는 1996년 8개팀 107명의 선수로 출발하였다. 1998년에는 여자 프로농구가 창설되어 1999년 현재 16개팀 221명의 선수가 활동한다.

안정기에 접어든 프로야구와 축구도 각각 1982, 1983년에 창설된 후, 경제적 상황과 국민들의 성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표 11-24〉 종목별 직업팀 및 선수의 수

(단위 : 개, 명)

	야 구		축 구		농 구		씨 림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1987	7	256	5	138	-	-	4	52
1990	8	470	6	216	-	-	5	65
1991	7	557	6	210	-	-	5	66
1992	8	552	6	208	-	-	6	63
1993	8	548	6	195	-	-	6	72
1994	8	553	7	225	-	-	6	81
1995	8	474	8	280	-	-	8	104
1996	8	476	9	315	8	107	8	104
1997	8	496	10	350	10	152	8	104
1998	8	462	10	331	15	220	4	47
1999	8	452	10	396	16	221	4	47

자료 :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표 11-25>를 보면 프로야구는 1982년 240게임으로 시작해 1991년 504게임까지 늘어 이후 이 게임 수를 유지하다가 1998년에 528게임으로 늘었다. 게임 수 증가는 팀 수가 많아진 데 기인한다. 1982년 6개 구단으로 시작하여 1986년, 1991년에 한 팀씩 추가돼 게임수도 따라서 늘었다. 관중을 늘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게임 수를 늘려나간 측면도 있을 것이다. 프로야구 관중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약 540만6천명으로 처음

<표 11-25> 프로야구·축구의 게임수와 관중수

	프로야구			프로축구		
	게임수	관중수 (천명)	게임당 평균(명)	게임수	관중수 (천명)	게임당 평균(명)
1982	240	1,439	5,996	-	-	-
1983	300	2,256	7,520	40	420	10,500
1984	300	1,665	5,550	112	533	4,759
1985	330	1,688	5,115	84	228	2,714
1986	378	2,141	5,664	100	113	1,120
1987	378	2,020	5,344	80	259	3,238
1988	378	1,932	5,111	60	227	3,783
1989	420	2,884	6,867	120	495	4,125
1990	420	3,189	7,593	90	379	4,211
1991	504	3,825	7,589	120	1,242	10,350
1992	504	3,912	7,762	90	1,284	14,267
1993	504	4,437	8,804	90	829	9,211
1994	504	4,194	8,321	126	763	6,056
1995	504	5,406	10,726	140	1,250	8,929
1996	504	4,498	8,925	180	1,911	10,617
1997	504	3,903	7,744	179	1,205	6,732
1998	504	2,639	5,236	184	2,117	11,508
1999	528	3,221	6,100	193	2,753	14,264

자료 :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으로 5백만명을 돌파하였고 한 게임당 관중 수 역시 10,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다소 침체되어 계속 줄었으나 1999년에는 6,100명으로 1998년(5,236명) 보다 다소 증가했다.

한편, 프로축구는 1983년 40게임으로 시작하였으며 야구에 비해 게임수의 변화가 많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100게임대를 유지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179~184게임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게임 수를 확보했다. 관중 수는 야구보다 부진하고 기복도 심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100만명 전후의 관중을 유지했다. 1998~1999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하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여가 활용

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활용 실태를 알아보자. 여가 활용은 기반 시설, 미디어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한다. <표 11-26>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여가 활용방법 조사결과다. 1984년에서 1993년까지 여가활용방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수면 및 가사 잡일이었으나, 1996년 조사에서는 TV시청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면 및 가사잡일(29.5%), 스포츠 및 여행(11.4%) 순이었다. TV시청, 수면 및 가사잡일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감상

<표 11-26> 여가활동 방법

(단위 : %)

	감상· 관람	TV 시청	창작적 취미 오락	잡기· 승부 놀이	스포츠· 여행	수면· 가사 잡일	기타
1984	29.1	-	5.1	6.1	11.1	44.4	4.2
1990	5.3	24.5	5.8	5.7	12.3	44.0	2.4
1993	4.9	24.4	3.7	4.0	14.0	45.4	3.5
남	4.7	23.8	4.0	7.4	20.0	37.2	2.9
여	5.2	25.0	3.4	0.8	8.4	53.2	4.1
1996	8.0	41.2	3.2	3.4	11.4	29.5	3.4
남	7.6	39.6	3.1	6.2	16.7	24.0	2.9
여	8.4	42.8	3.3	0.7	6.4	34.6	3.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및 관람, 창작적 취미·오락을 더 많이 즐겼다. 남녀의 여가활동 방법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잡기 및 승부놀이, 스포츠 및 여행분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1999년 중에 처음 실시한 생활시간활용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 시간을 얼마나 누리는지 살펴본다. <표 11-27>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10세 이상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하루의 21%인 5시간이다.

이 중 TV시청(2시간 5분)이나 신문 읽기(7분) 등 대중매체 이용에 2시간23분, 교제활동에 53분, 취미생활에 52분, 기타 여가생활을 하는데 5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는 여가시간이 6시간39분으로 길어지는데, 그 가운데 3시간16분을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TV를 2시간56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은 남자 5시간21분, 여자 4시간55분으로 여자의 여가 시간이 26분 적다. 일요일에는 남자의 여가시간이 7시간4분, 여자의 여가시간은 5시간43분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1시간21분으로 커진다.

<표 11-28>은 여가 시간 중 매체 이용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비율 및 그 이용 시간을 보여준다. 10세 이상 국민 중 하루에 10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비율은 평일 90%, 토요일 92%, 일요일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TV 시청시간은 평일 2시간47분, 토요일 3시간8분, 일요일 3시간54분으로 일요일의 경우 하루 24시간의 1/6(16.3%)을 TV시청에 할애했다. 성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과 토요일에 각각 19분, 20분씩 더 많이 시청하고, 일요일에는 남성이 11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표 11-27> 하루 평균 여가시간(1999.9)

(단위 : 시간 : 분)

	여가				
	시간	대중매체	교제	취미	기타
10세 이상	5:00	2:23	0:53	0:52	0:52
남자	5:15	2:29	0:48	1:04	0:54
여자	4:48	2:18	0:57	0:40	0:53
성인	5:08	2:27	0:56	0:48	0:57
남자	5:21	2:35	0:52	0:59	0:55
여자	4:55	2:20	1:00	0:38	0:57

자료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0

〈표 11-28〉 매체별 행위자 비율 및 시간(1999.9)

(단위 : %, 시간 :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시 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시 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시 간
TV	90.3	2:47	91.6	3:08	95.0	3:54
남자	89.5	2:37	90.3	2:58	94.5	4:00
여자	91.0	2:56	92.9	3:18	95.5	3:49
신문	20.4	0:38	20.5	0:37	14.9	0:40
여자	12.7	0:34	12.4	0:34	7.1	0:35
남자	28.3	0:39	28.6	0:38	22.7	0:41
컴퓨터	9.4	1:26	11.4	1:48	12.6	2:06
남자	13.8	1:33	16.9	2:00	18.5	2:19
여자	5.1	1:07	6.0	1:17	6.8	1:30
관람및 취미	69.5	1:37	70.5	1:53	70.4	2:08
남자	78.1	1:45	79.9	2:07	80.1	2:28
여자	61.0	1:27	61.3	1:36	60.7	1:42

자료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0

읽었다. 평일에는 남성의 28%가 평균 39분 읽고, 일요일에는 23%가 41분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상 국민 중 하루에 10분 이상 신문을 읽은 사람의 비율은 평일 20.4%, 토요일 20.5%, 일요일 14.9%로 이들이 신문 읽는데 쓴 시간은 하루 평균 37~40분이었다.

1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여가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을 보면 평일 8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16분으로 나타나 주말에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평일 9.4%, 일요일 12.6%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26분, 일요일 2시간6분이다.

10세 이상 국민의 관람 및 취미 활동 평균시간은 평일 1시간7분, 토요일 1시간 20분, 일요일 1시간30분이며 관람 및 취미활동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2 장 정보화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실 세계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의미하는 정보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져 왔다. 과거에도 인류가 외부 세계에 대해 축적한 지식은 문자나 그림으로 기록해 후세에 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인류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가 전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다른 여러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 최근의 정보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보의 수집·가공·처리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그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정보화 확산에 중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컴퓨터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대형 컴퓨터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개발한 인터넷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이동통신기·가전제품과도 연결되면서 정보화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의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

보화가 이루어지는 기반 설비의 현황 등을 정보화 기반이라는 절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보화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정보화라는 절에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정보화라는 절에서 살펴본다.

최근 정보화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정보화에 대한 통계가 많이 작성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간에서 작성하는 정보화에 관련된 통계의 경우 통계 작성 당시 특수한 분야의 필요에 맞춰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다른 분야의 통계와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보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통계 자료가 계속 쌓여 가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절 정보화 기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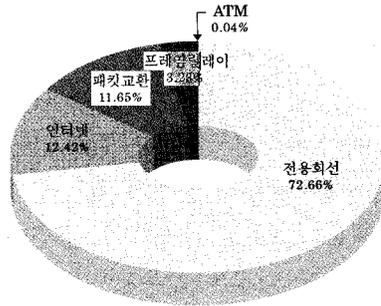
(1) 초고속국가망

공공기관·연구소·학교 등의 정보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초고속 국가망이란 바로 이러한 기관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공공재원으로 이뤄지며, 이를 기관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초고속 공중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 응용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초고속 국가망은 또한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을 광케이블 중심의 초고속 교환망으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별로 총 8,114억원의 공공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1월 말 현재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총 23,622

[그림 12-1]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 이용현황 (2000년 1월 말 현재)



개로서 14,540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002개의 교육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되고 있는 회선 수는 38,597회선이며 이 중 정보전송용량이 큰 전용회선이 28,043개로 전체 회선수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송 용량이 큰 전용회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용회선이 2,226회선인 반면, 인터넷 회선은 3,900회선으로 인터넷 회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보다 일상적인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1> 초고속 국가망 이용현황(2000. 1)

(단위 : 기관, 회선, %)

	계	구성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기관	
기관수	23,622	-	14,540	6,002	226	680	2,174
회선수	38,597	100.00	28,583	6,201	383	702	2,728
전용회선	28,043	72.66	23,202	2,226	287	641	1,687
패킷교환	4,497	11.65	4,246	28	6	5	212
프레임 릴레이	1,248	3.23	567	47	5	-	629
인터넷	4,793	12.42	552	3,900	85	56	200
ATM	16	0.04	16	-	-	-	-

주: 1) ATM 회선은 접속회선 기준이며, 예비서비스 이용 회선 수입

자료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0

(2) 초고속공중망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가정에서는 데이터 통신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통신망이 주로 전화

선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 통신망은 광케이블이나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특징이다. 광케이블이나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초고속 통신망의 경우 최고 10Mbps의 정보전송용량을 갖고 있어 전화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월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 최근 수요가 많아진 멀티미디어 정보 같은 대용량 정보전송에 적합한 까닭에 갈수록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과 함께 초고속 공중망 구축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가정 등 민간부문에서 초고속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과 달리 초고속 공중망 구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고속·대용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망이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 상황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0년 2월 현재 1,300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2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약 70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6%에 불과하다. 초고속통신망의 종류별로 볼 때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 가입자는 26만명, ISDN(종합정보통신망) 가입자는

22만명,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21만명, 위성 인터넷 이용자는 9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한국통신·데이콤·하나로통신 등 민간사업자들이 초고속 통신망을 계속 확충하고, 가입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도시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함께 정보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 읍·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ADSL)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0년 말까지 186개 읍·면 지역에 공급을 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가 350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전화선을 이용하는 인구의 약 82%에 달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의 이용이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보화 지원

정부의 정보화 지원 사업에는 이미 언급한 초고속 통신망에 관련한 지원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정보통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전시관 건립 등 여러 분야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는 현재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화 인력 양성과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 살펴본다.

(1) 정보화 인력 양성

1993년 이래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지속적인 인력 양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은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신생 산업인 까닭에 그에 맞춰 원활한 인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직·간접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 1993~1996년에는 연간 35~65억원 정도의 투자를 했으며, 특히 1997년부터는 투자액을 대폭 증액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총 투자액은 약 3천억원이며,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에 가까운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다.

<표 12-2-1> 정보화 인력 양성 투자액

(단위 : 억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투자액	35	45	40	65	594	1,160	956	795

주 : 1999년까지는 집행액, 2000년은 예산액임
 자료 : 정보통신부, 『2000년 정보통신 인력 양성 계획(안)』, 1999.12

인력 양성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초기술인력 양성(6개 사업), 고급 전문인력 양성(5개 사업), 산업인력 교육(5개 사업), 잠재인력 양성(7개 사업)의 네 개 부문과 기타 두 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예산과 2000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기초기술 인력 양성 부문에는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으며 산업인력 양성·잠재인력 양

성부문은 다소 삭감한 반면 고급 전문인력 양성부문은 대폭 증액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고급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2-2-2> 유형별 정보화 인력 양성 예산
 (단위 : 억원)

	1999	2000
기초기술인력 양성	379	350
고급전문인력양성	137	204
산업인력 교육	272	123
잠재인력 양성	167	95
기타	1	23
총계(24개 사업)	956	795

자료 : 정보통신부, 『2000년 정보통신 인력 양성 계획(안)』, 1999.12

(2)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활용해 정보통신분야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9천 3백여개로 이 중 3천여개가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이다. 1999년 말에는 벤처기업 5천여개 중 정보통신 분야가 1천여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창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활발한 벤처 창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영역 확대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실적은 <표 12-3>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9년 한 해 동안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투자는 당초 지원규모 1조 4,695억원의 76% 정도인 약 1조1,222억원이었다.

<표 12-3>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1999				2000(예정)
	지원규모 (백만원)	과제수 (개)	업체수 (기관수)	지원금 (백만원)	지원규모 (백만원)
융자	635,000	1,098	1,015	308,808	560,000
출연	834,541	253	74	813,353	673,485
일반계정	704,160	332	282	575,765	533,485
연구개발 계정	765,381	1,017	807	546,396	700,000
계	1,469,541	1,349	1,089	1,122,161	1,233,485

주 : 지원규모는 계획이며, 지원금은 실적임
 자료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0

2000년에는 1999년의 집행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다소 줄인 약 1조 2,33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원 분야별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화 시설투자 비용 융자 등을 위해 설정된 융자사업이 5,600억원으로 전체의 45.4%로 예정돼 있으며, 정보화 촉진·연구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출연사업이 6,7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들 기업의 경제적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기반

(1) 호스트 및 IP

인터넷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자정보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기술이 발전하고 1990년대 들어 월드와이드웹(WWW)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표 12-4>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발달의 가속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인터넷에 연결한 컴퓨터로서, IP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호스트(host)의 숫자는 1994년 1월 222만개였으나, 그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1997년 7월에는 약 2천만개, 1999년 7월에는 약 5천6백만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이들 호스트에게 부여되어 있는 주소인 도메인의 숫자도 1994년 1월의 3만개에서 1999년 7월에는 1천7백만개로 약 577배나 증가하여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표 12-4> 세계의 인터넷 기반

(단위 : 천개)

	1994.1	1995.1	1996.1	1997.7	1998.7	1999.7
호스트	2,217	4,852	9,472	19,540	36,739	56,218
도메인	30	71	240	1,301	13,063	17,299

자료 : Network Wizard (<http://www.nw.com>)

데 우리나라의 도메인 수와 호스트 수, IP 주소 보유 현황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고유 기호인 .kr을 도메인 주소에 포함시키고 있는 도메인 수는 1999년 12월 현재 20만여개로 1년전의 26,166개에 비하여 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93년의 61개에서 시작해 매년 2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99년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6월 30일 개인들에게도 도메인 주소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1999년 7월부터는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6개월 동안 등록된 도메인 수만 15만개에 달했다. 1993년부터 1999년 6월 말까지 등록된 도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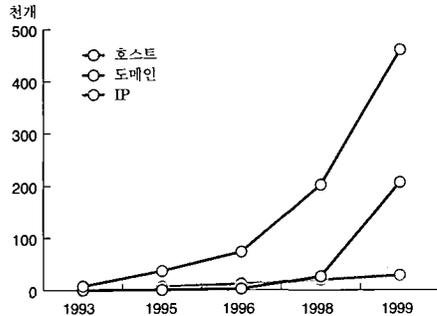
<표 12-5> 호스트, 도메인, IP주소 수

(단위 : 개, %)

	호스트		도메인		IP	
	개	증가율	개	증가율	개	증가율
1993	7,650	-	61	-	-	-
1995	36,644	121.3	579	201.6	6,817	-
1996	73,189	99.7	2,664	360.1	11,937	75.1
1998	202,510	54.6	26,166	225.3	19,613	22.4
1999	460,974	127.6	207,023	691.2	28,342	44.5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림 12-2] 호스트 · 도메인 · IP주소 수



수가 약 5만5천개였음을 감안할 때, 불과 6개월 동안에 과거 7년 가량 등록된 도메인의 약 3배에 달하는 도메인수 증가를 보여준 것이다. 호스트도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1993년 우리나라의 호스트는 7,650개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 1만개를 넘어서고, 1997년에 다시 10만개를 넘어섰으며 1999년 현재 약 46만개의 호스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의 고유 식별 번호인 IP 주소도 이와 유사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IP주소는 인터넷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유 식별 번호다. 현재는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로서 32비트 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IP주소는 국내 IP주소 할당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국제 IP 관리기구인 APNIC로부터 추가 할당을 받아 오고 있으며, 국내 보유 IP주소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IP주소 할당 서비스가 시작된 1993년부터 누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IP주소는 B클래스와 C클

래스가 있는데, B클래스는 48개로 1995년 이후로 추가 할당을 하지 않고 있으며 C클래스는 지속적으로 추가 할당을 하고 있다. 1999년 한 해 동안 IP주소는 1998년 말의 19,613개에 비하여 44.5% 증가해 1999년 12월 현재 28,342개의 IP주소를 갖고 있다.

(2) ISP/WSP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인터넷은 컴퓨터간의 상호 접속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에 직접 접속되는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다.

ISP에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러한 통신망을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ISP도 빠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표 12-6>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12월 말 기준 54개의 ISP

<표 12-6> 국내 ISP/WSP 업체수

(단위 : 개)

	1998		1999	
	ISP	WSP	ISP	WSP
1월	23	153	26	560
2월	22	159	26	638
3월	22	180	26	695
4월	23	205	26	768
5월	22	215	29	820
6월	22	228	31	870
7월	22	240	34	910
8월	23	312	35	936
9월	25	370	39	963
10월	25	450	47	979
11월	25	486	51	1,012
12월	25	509	54	1,027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말 25개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WSP(Web hosting Service Provider : 웹 호스팅 제공업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버와 대용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전용선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이 이 같은 장비를 모두 갖추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어렵다. WSP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서버·전용선·시스템을 관리해 준다.

우리나라의 WSP는 전자상거래의 확산,

개인홈페이지의 확대 등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 1998년 말 509여개에 그쳤던 것이 1999년 3월 말 695개, 6월 870개로 늘어나는 등 6개월만에 400개 가까이 증가했다. WSP에 가입한 사람도 역시 199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WSP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고가의 서버와 전용선·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 6월 인터넷 개인 도메인(.pe.kr)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등도 활성화되면 이러한 인터넷 접속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생활정보화

생활정보화란 개인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생활의 편익과 정보 획득 등의 이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항목이다. 이 절에서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보급률, 그리고 이들의 사용 정도를 통해 생활정보화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은 생활 정보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PC)를 각 가정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표 12-7>은 인구 100명당 PC 보급 대수를 주요국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PC 보급대수는 1999년 현재 18.2대로, 1990년 100명당 3.7대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1999년 현재 미국 51.1대, 캐나다 36.1대, 영국 30.6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에는 미국의 1/7 수준, 영국과 캐나다의 1/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표 12-8>은 1997년의 가구당 PC 보유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PC를 보유한 가구는 29%였는데, 여기서 1대만 보유한 가구 비율이 28%, 2대 이상 보유 가구 비율이 1.0%였다. 가구당 평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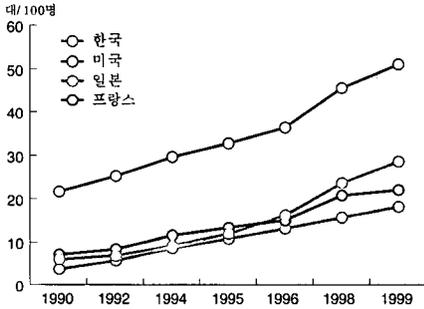
<표 12-7> 주요국가의 PC보급대수

(단위 : 대/인구100명)

	1990	1992	1994	1995	1996	1998	1999
미 국	21.7	25.3	29.7	32.8	36.4	45.6	51.1
영 국	10.8	14.5	17.0	20.2	21.6	26.3	30.6
일 본	6.0	6.9	9.2	12.0	16.2	23.7	28.7
캐나다	10.7	14.6	19.5	21.6	24.4	33.1	36.1
프랑스	7.1	8.4	11.6	13.4	15.1	20.8	22.1
한 국	3.7	5.7	8.6	10.8	13.2	15.7	18.2

자료 : ITU, Yearbook of statistics, 1999

[그림 12-3] 주요 국가의 PC보급대수



유 대수는 0.3대로 나타났다. PC 보유율을 거주지와 학력별로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도시와 농촌 거주자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2-8> 가구당 PC보유율(1997)

(단위 : %)

	계	가구당 평균보유대수		가구당 평균보유대수
		1대	2대 이상	
전국	29.0	28.0	1.0	0.30
시부	33.0	31.8	1.2	0.34
군부	14.1	13.9	0.2	0.14
초졸이하	13.1	12.9	0.2	0.13
중졸	25.1	24.8	0.3	0.25
고졸	28.3	27.7	0.6	0.29
대졸이상	51.5	48.4	3.1	0.55

자료 : 통계청, 『1997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시 지역의 경우에는 PC 보유율이 33%에 달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14.1%에 불과하다. 가구주의 교육 정도별로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가구주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51.5%에 달하는 반

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구주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에서는 2대 이상의 PC를 보유한 경우도 3.1%나 되어 거주 지역과 학력에 따라 PC보유율이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즉 정보화 격차의 문제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PC 보유현황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값싼 PC의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터넷 보급

사람들이 PC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다양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중 인터넷 사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를 지닌다. <표 12-9>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1999년 현재 192.5대로 가장 높고, 캐나다 54.8대, 영국 29.6대, 일본 20.8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8대로 미국의 1/20,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호스

트 수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시설의 척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같이 우리나라의 호스트 보급이 낮은 것은 앞으로 정보화 확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2-9> 주요국가의 인터넷 호스트 수

(단위 : 대/인구천명)

	1990	1992	1994	1995	1996	1998	1999
미 국	-	3.7	12.2	23.0	38.1	112.1	192.5
영 국	0.0	0.9	3.9	7.5	12.2	24.6	29.6
일 본	-	0.2	0.8	2.1	5.8	13.3	20.8
캐나다	-	1.9	6.4	12.6	20.1	37.0	54.8
프랑스	0.1	0.4	1.4	2.6	4.1	8.6	20.9
한 국	-	0.1	0.4	0.7	1.4	4.0	9.8

자료 : 한국전산원, 『한국 인터넷 백서』, 2000

다음으로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표 12-10>에서 살펴보면 1999년 현재 미국은 398.2명으로 가장 높고, 캐나다 360.8명, 영국 212.8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231.8명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144.7명, 프랑스의 96.1명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까지도 이들 나라들보다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가 적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미니텔(Minitel)과 같은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 증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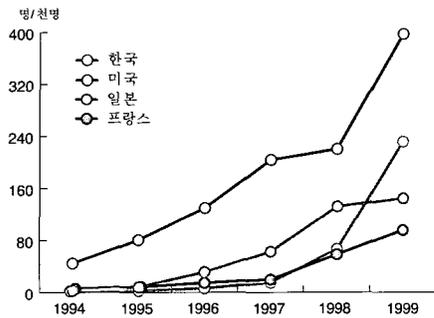
<표 12-10> 주요국가의 인터넷 이용자수

(단위 : 명/인구천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미 국	44.7	81.2	130.1	204.1	220.5	398.2
영 국	15.5	33.8	56.3	98.7	135.7	212.8
일 본	3.0	8.5	31.4	63.1	132.3	144.7
캐나다	25.2	48.9	78.9	142.8	248.0	360.8
프랑스	5.9	8.8	14.8	20.1	58.6	96.1
한 국	1.8	2.8	6.5	15.2	66.8	231.8

자료 : 한국전산원, 『한국 인터넷 백서』, 2000

[그림 12-4] 국가별 인터넷 이용자수



빠른 정보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유·무선 전화 보급

컴퓨터 이외에 유·무선 전화의 보급 또한 정보화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유·무선 전화가 과거에는 단순한 음성통화 기능만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전화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 확대되고 있고, 이동 전화의 경우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동 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으

며 앞으로 IMT-200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동전화를 통해 동영상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동전화는 단순한 전화통화 수단이 아니라 개인 정보 단말기의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표 12-11>은 국가별 인구 100명당 전화 회선수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명당 전화 회선수는 1990년의 31.0회선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44.4회선으로 늘어났으며, 1998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 등에 따라 43.3회선으로 다소 줄었다. 1999년에는 45.1회선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편 1998년 현재 나라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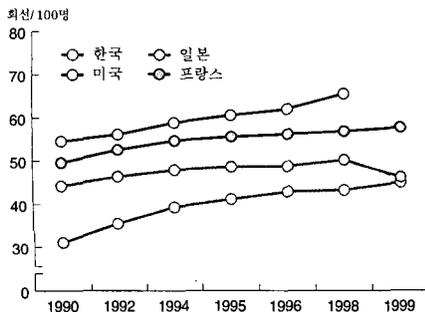
<표 12-11> 주요국가의 전화 회선수

(단위 : 회선/인구100명)

	1990	1992	1994	1995	1996	1998	1999
미 국	54.5	56.1	58.9	60.7	62.2	65.7	...
영 국	44.1	45.7	48.6	50.2	52.2	55.7	...
일 본	44.1	46.3	47.9	48.7	48.9	50.3	46.3
캐나다	56.5	57.8	59.0	59.3	60.2	63.5	...
프랑스	49.5	52.5	54.7	55.7	56.4	57.0	57.9
한 국	31.0	35.4	39.3	41.2	43.0	43.3	45.1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그림 12-5] 주요 국가의 전화 회선수



는 미국이 65.7회선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63.5회선, 프랑스 57.0회선, 영국 55.7회선, 일본 50.3회선이었다.

인구 100명당 전화 회선수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자도 정보화 확산의 중요한 지표다. 지형이 험준하거나 인구가 드물어 유선전화용 전화선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전화를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998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여주는 국가는 북유럽의 핀란드로 100명 중 57.1명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단순히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동전화 보급이 정보화의 중요한 지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는 1998년 30.2명, 1999년 50.0명으로 대단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급률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1999년 현재 미국 31.2명, 일본 44.9명, 영국 40.8명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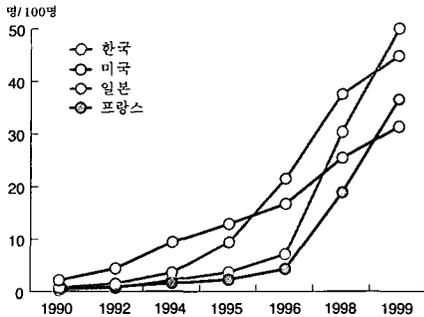
<표 12-12> 주요국가의 이동전화 가입자수

(단위 : 명/인구100명)

	1990	1992	1994	1995	1996	1998	1999
미 국	2.1	4.3	9.3	12.8	16.6	25.4	31.2
영 국	1.9	2.6	6.8	9.8	12.1	25.2	40.8
일 본	0.7	1.4	3.5	9.3	21.4	37.4	44.9
캐나다	2.2	3.7	6.4	8.7	11.4	17.6	23.0
프랑스	0.5	0.8	1.5	2.2	4.2	18.8	36.4
한 국	0.2	0.6	2.1	3.6	7.0	30.2	50.0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그림 12-6]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 가입자수



이 크게 확대된 계기는 1997년부터 PCS 보급이 본격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상에 가까운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동전화 가입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동전화 단말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 부정적인 면도 야기하였지만, 국민들의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동전화의 데이터 전송용량이 계속 커지면서 무선 인터넷 단말기로서의 용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을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기기 활용

같은 컴퓨터나 통신 수단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기를 똑같은 정도

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컴퓨터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각각의 기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상이한 경우, 활용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능력은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13>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주요 소프트웨어의 사용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워드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초보 이상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93.7%나 되지만, 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용할 줄 모

<표 12-13>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단위 : %)

	전체	이용률	초보수준	보통수준	숙련수준
워드프로세서	100.0	6.3	40.1	37.5	16.1
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	100.0	34.0	38.9	20.6	6.5
유틸리티	100.0	28.9	41.4	20.6	9.0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34.0%, 28.9%에 이른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워드프로세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 컴퓨터가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컴퓨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컴퓨터의 사용 목적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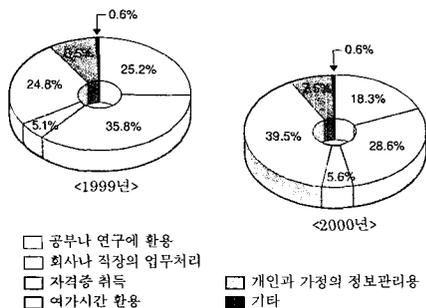
〈표 12-14〉 컴퓨터 이용 목적

(단위 : %)

	1999	2000
전체	100.0	100.0
공부나 연구에 활용	25.2	18.3
회사나 직장의 업무처리	35.8	28.6
자격증 취득	5.1	5.6
여가시간 활용	24.8	39.5
개인과 가정의 정보관리용	8.5	7.5
기타	0.6	0.6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그림 12-7〕 컴퓨터 이용목적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는 <표 12-14>에 나타나 있다. 컴퓨터 이용 목적은 여가시간 활용(39.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사나 직장의 업무 처리(28.6%), 공부나 연구에 활용(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관리(7.5%)나 자격증 취득(5.6%)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컴퓨터를 업무나 연구 활동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전체의 46.9%나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보다 공식적인 사회 활동에 활용되는 비중이 아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갈수록 향상되고, 이를 이용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컴퓨터가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리라고 예상한다.

다음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12-15>에서 볼 수 있다. 컴퓨터 이용자 전체의 하루평균 이용 시간은 191.7분(3시간 12분) 정도였으며 1~2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가 2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3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가 18.5%였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이용자 중 약 25%가 1시간 이하의 짧은 이용시간을 보이는 한편, 3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약 36%에 이르고 있어 컴퓨터 이용시간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234.9분(3시간 55분)이며, 50대 이상과 10대가 각각 144분과 147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0대의 경우는 역시 컴퓨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이용시간이 20대의 60%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50대 이상 연령층도 나름대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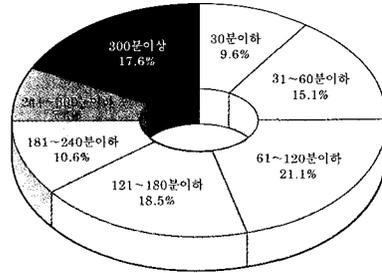
<표 12-15>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단위 : %)

	30분 이하	31 ~ 60분	61 ~ 120분	121 ~ 180분	181 ~ 240분	241 ~ 300분	300분 이상	평균 사용 시간 (분)
계	9.6	15.1	21.1	18.5	10.6	7.4	17.6	191.7
남	9.0	12.7	19.7	18.6	12.0	9.4	18.7	201.6
여	10.6	18.5	23.1	18.4	8.7	4.5	16.1	177.6
10대	8.4	11.9	28.4	25.5	11.5	6.2	8.1	147.0
20대	7.1	10.8	16.8	19.5	11.2	8.3	26.3	234.9
30대	9.4	21.4	21.4	12.3	8.9	7.4	19.1	192.7
40대	17.8	17.8	18.4	12.6	10.3	7.5	15.5	183.4
50대 이상	19.2	30.8	11.5	13.5	11.5	7.7	5.8	144.0
농림어업	33.3	25.0	25.0	8.3	0.0	8.3	0.0	88.2
자영업	18.4	18.0	18.8	10.9	7.5	7.1	19.2	194.8
블루컬러	12.8	22.7	21.2	13.8	9.4	7.4	12.8	166.3
화이트컬러	2.1	8.3	12.7	16.0	13.9	11.8	35.2	287.1
주부	16.9	38.7	28.2	12.1	2.4	0.8	0.8	87.4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그림 12-8]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직업별로는 화이트컬러가 287.1분(4시간 47분)으로 가장 높고, 주부 및 농·임·어업직이 각각 87.4분, 88.2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농림어업직의 이용시간은 화이트컬러 이용시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부는 농림어업직보다도 이용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연령대별로 살펴 본 경우보다 더 편차가 큰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정보화 격차보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보화 격차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표 12-16>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즉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통신보다는 인터넷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 최근의 인터넷 붐에 따라 기존의 PC 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VAN)가 인터넷 서비스 위주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모두 남자의 이용률이 여자보다

<표 12-16>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컴퓨터통신 이용률 (인터넷 제외)	인터넷 이용률
계	30.9	37.1
남	37.3	45.1
여	24.4	28.8
중고생	59.5	72.7
대학(원)생	74.2	91.9
중졸 이하	1.3	1.9
고졸	19.1	21.8
대졸 이상	51.7	62.4
농/임/어업	7.3	7.3
자영업	15.6	18.7
블루컬러	24.3	27.8
화이트컬러	53.0	64.0
주부	10.2	11.0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활용시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성, 특히 주부의 정보화가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이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이른다. 한편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모두 1%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고졸의 경우에도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의 학력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information haves and have-nots)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따라서 정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육을 적게 받고,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의 격차가 정보화 과정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별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이용률이 모두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부의 경우에는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이트컬러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보화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표 12-17>과 <표 12-18>는 사람들이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목적은 중복해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의 이용 목적으로는 여가시간 활용이 전체의 5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취미관련 정보취득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업무 목적은 15.3%, 학업은 23.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전체의 51.8%가 여가시간 활용을 응답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취미관련 정보취득이 45.9%를 차지하고, 업무 18.3%, 학업 26.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표 12-14>의 컴퓨터 이용목적과는 달리,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모

<표 12-17> 컴퓨터통신 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 %)

	계	남	여
아는 사람들과의 의견/메시지 교환	33.9	31.0	29.2
여가시간 활용	54.7	54.0	53.5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	8.6	8.9	9.2
일상생활/취미관련 정보취득	47.2	44.1	42.1
업무상 의견/메시지/문서 교환	14.7	18.4	20.8
업무/사업/투자/취업 정보 취득	10.8	15.3	18.1
학업/연구 정보 취득	26.1	23.6	22.0
예약/홈뱅킹 등 거래서비스 이용	2.5	3.6	4.2
게임을 하기 위해	0.0	0.2	0.4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표 12-18> 인터넷 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 %)

	계	남	여
아는 사람들과의 의견/메시지 교환	30.6	25.2	21.8
여가시간 활용	52.9	51.8	51.1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	10.1	8.9	8.2
일상생활/취미관련 정보취득	45.9	45.9	47.6
업무상 의견/메시지/문서 교환	13.4	18.0	20.8
업무/사업/투자/취업 정보 취득	13.6	18.3	21.1
학업/연구 정보 취득	30.6	26.9	24.6
예약/홈뱅킹 등 거래서비스 이용	1.6	2.1	2.3
채팅하기 위해	0.0	0.2	0.3
문화교육정보취득	0.2	0.1	0.0
게임을 하기 위해	0.2	0.4	0.4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두 전반적으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자, 여자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14>와 <표 12-17>, <표 12-18>

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컴퓨터를 업무나 교육을 위해 주로 이용하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업무나 교육보다 여가 활용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보통신서비스가 상당히 친밀하게 들어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생활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2-19>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은 컴퓨터 통신이 76분, 인터넷 이용이 약 100분 정도다. <표 12-16>과 마찬가지로 최근 컴퓨터 통신보다는 인터넷이 보다 중요한 정보통신서비스로 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남녀별로는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컴퓨터 통신은 10분 정도, 인터넷은 15분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 12-19> 1일평균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이용시간

(단위 : 분)

	이용시간
컴퓨터통신	76.1
남	80.1
여	69.6
인 터 넷	99.5
남	104.8
여	90.88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정보화의 진행과정에서 연령이나 직업, 교육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차이는 차이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가 소득이나 사회적 위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이 같은 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보화의 영향과 역기능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그 편리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또한 정보화는 경제발전·민주화 등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다.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에서는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표 12-20>과 같다. 정보화에 의해 경제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70% 이상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풍토,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에 대해서도 50~60%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격차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30% 가까이 되고, 계층간 격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40%에 이르고 있다.

<표 12-20>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견해(2000)

(단위 : %)

	긍정	보통	부정
경제발전	71.3	19.8	8.9
삶의 질 향상	70.1	19.5	10.4
지역 격차 해소	42.2	29.4	28.3
계층간 격차 해소	31.1	26.6	40.3
민주주의 발전	51.5	28.2	20.3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풍토	68.6	18.8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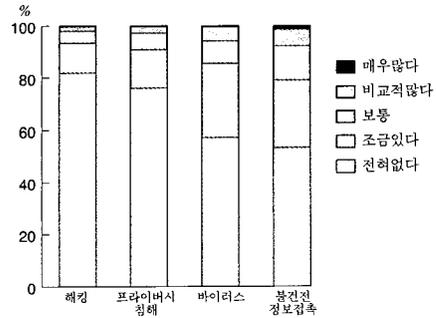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현실문제 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에 정보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사생활 침해·지적재산권 침해·해킹·시스템 고장에 따른 사회적 혼란, 폭력·외설물, 가치관 혼란, 대인간 접촉기회 감소에 따른 비인간화 현상, 지역/계층간 불균등한 정보소유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8가지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도 조사했다. 대체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사생활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커에 의한 정보 파괴, 불법적인 폭력·외설물 유통의 경우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부작용의 실제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2000년에는 연초부터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를 비롯, 아마존닷컴·CNN 등 유명 인터넷 사이트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수 시간 동안 작동불능 상태가 된 적이 있으며, 해킹 기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의 역기능

[그림 12-9] 인터넷 역기능 경험(2000)



<표 12-21>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2000)

(단위 : %)

	줄어들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사생활침해	6.8	14.0	79.1
지적재산권 침해	8.2	17.2	74.5
컴퓨터바이러스/해커	8.0	14.8	77.2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혼란	8.3	19.6	71.9
폭력물/외설물유통	6.8	14.6	78.6
가치관 혼란	7.6	20.9	71.5
비인간화 현상	7.5	18.7	73.8
사회적 갈등	10.4	23.5	66.2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표 12-22> 인터넷 역기능 경험(2000)

(단위 : %)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보통	비교적 많다	매우 많다
해킹	81.8	11.5	4.6	1.8	0.3
프라이버시침해	76.0	14.7	6.4	2.6	0.3
바이러스	57.1	28.3	8.6	5.5	0.4
불건전정보접촉	53.2	25.7	13.1	6.5	1.4
채팅시불쾌감	49.6	24.6	12.9	9.1	3.9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표 12-22>에서 볼 수 있다.

해킹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0%를 넘어,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대학 및 일반기업에 해킹 침해 사고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해킹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7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15%라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단순히 컴퓨터 사용자가 축적한 정보를 파괴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

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달 수십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대단히 빨라지고, 그 영향 또한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되면서 그 심각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피해 경험자 비율은 42.9%였다.

불건전한 정보에의 접촉 경험은 46.8%인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접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팅에서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사결과 50%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채팅시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한 명 이상은 비교적 많이(9.1%) 또는 매우 많이(3.9%) 경험하였다고 응답해 건전한 채팅문화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산업정보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특히, 최근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없이는 기업간의 경쟁은 물론 국가간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보화 수준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만하

다. 산업정보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다. 전자상거래의 보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확보에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산업정보화의 여러 측면 중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전자상거래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활동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1996년 말 데이콤, 인터넷파크, 롯데백화점 등이 종합 쇼핑몰 형태의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전산원이 1999년 1월과 5월에 인터넷 쇼핑몰을 수행한 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8년 10월에 파악한 조사대상 업체는 357개였으나 1999년 1월 조사 시점에서는 226개의 사이트만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99년 5월에는 다시 수가 증가하여 568개의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10월에는 850개 업체가 확인되었다.

통계청도 2000년 8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인터넷 상의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즉 B2C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별매출액 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표 12-23>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2000년 4월 1,444개, 5월 1,631개, 6월 1,707개였으며, 이중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4월 1,066개, 5월 1,144개, 6월 1,128개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체의 월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000년 4월 1,102억원, 5월 1,249억원, 6월 1,412억원으로, 소매업 월간 매출액 10조3천억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 쇼핑몰이 최근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이버 쇼핑몰은 그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 쇼핑몰에서도 규모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 12-24>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구성을 보면 매출액 1억원이상 사업체의 수는 전체 사업체의 10.1%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총매출액의 92.9%를 점하고 있다. 반면 매출액 1백만원 미만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1/4을 넘는데 비해, 매출액은 0.1%(1억1,300만원)로 극히 적게 나타나 대규모 사업체로의 매출액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멀리 있는 대형 매장을 가기보다는 근처에

<표 12-23>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 현황(2000)

(단위 : 개, 백만원)

	4월	5월	6월
조사업체 수	1,444	1,631	1,707
실적업체 수	1,066	1,144	1,128
상품 서비스 매출액	110,163	124,882	141,16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있는 상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혹은 가장 좋은 조건의 사이버 쇼핑몰을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매출의 편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중소 쇼핑몰이 특색있는 상품이나 소비자에 대한 색다른 혜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개설연도를 살펴보면, <표 12-25>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에 개설한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49.0%, 837개)하고 있고, 2000년(1~6월)

<표 12-24> 매출액 규모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 현황(2000.6)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매출액	
	수 ¹⁾	구성비		구성비
계	1,128	100.0	141,160	100.0
1백만원미만	300	26.6	113	0.1
1백~1억원미만	714	63.3	9,846	7.0
1억원이상	114	10.1	131,201	92.9

주 : 1) 무실적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개설 업체가 35.7%(61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1999년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0년 중에도 6개월간의 개설업체가 610개로 1999년 한 해 동안의 개설업체 837개의 72.9%에 이른다는 사실은 2000년 중에도 왕성하게 사이버 쇼핑물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리라는 점 또한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사이버 쇼핑물이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일부 상품만 취급하는 전문몰과 대부분의 상품을 갖춰놓고 판매하는 종합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성비를 보면 전문몰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온라인 쇼핑에서의 특성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의 지역적 제한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색갖추기 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특정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할인혜택을 제

공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이버 쇼핑물이 주로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는지는 상품군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액의 46.0%를 차지하고 있고, 가전·전자·통신기기 매출액이 24.2%, 서적·음반·문구 매출액이 8.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이버 쇼핑물들이 소비자들에게 구입 물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전문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30.6%로 나타났다. 지불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온라인 입금이 35.4%, 기타 3.2%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점, 즉 배송과 결제 문제의 원활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제품을 현장에서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 원하는 지점까지 누군가가 제품을 전달해 줘야 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파손이나 변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 결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의 누출 가능성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이버 쇼핑물의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표 12-26>에서 시도별로 소비자대상

<표 12-25> 개설연도별 인터넷 쇼핑물 사업체수

(단위 : 개, %)

계	1996년 이전	1997	1998	1999	2000 1~6
1,707 (100.0)	21 (1.3)	58 (3.4)	181 (10.6)	837 (49.0)	610 (35.7)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수에서도 서울이 1,166개(68.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150개(8.8%), 부산 102개(6.0%)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서울이 1,37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가 22억원(1.6%)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26〉 시도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 현황(2000.6)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수		매출액	
		구성비		구성비
계	1,707	100.0	141,160	100.0
서울	1,166	68.3	137,115	97.1
부산	102	6.0	218	0.2
대구	38	2.2	270	0.2
광주	32	1.9	324	0.2
인천	51	3.0	310	0.2
대전	35	2.1	120	0.1
울산	12	0.7	30	0.0
경기	150	8.8	2,221	1.6
강원	10	0.6	40	0.0
충남	15	0.9	51	0.0
충북	7	0.4	55	0.0
전북	24	1.4	7	0.0
전남	13	0.7	57	0.1
경북	17	1.0	62	0.1
경남	26	1.5	275	0.2
제주	9	0.5	5	0.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물론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체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과 판매의 특성상 전자상거래 활동이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 되면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이나 지역 특산품도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도로는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나 조달과 같은 기업간 거래에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의 기업간 거래도 전화나 팩스 등에 이미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기업간 거래의 관행이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매의 경우, 구매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기업도 구매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관계가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폭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시도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형태로 시작되었다. EDI는 기업간에 주고받는 거래 관련 문서들을 일정한 양식으로 통일시킨 후, 부가통신망(VAN)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우리나라도 EDI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했는데, 기업 운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었다. 1998년의 EDI를 통한 거래가 약 590억원에 이르고, 1999년에는 1조원 가까이 추정되었으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표 12-27〉 국내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억원, 개)

	EDI서비스매출액	EDI이용업체수
1996	140	11,564
1997	216	13,592
1998	590	19,000
1999	9,450	26,000
2000(예상)	16,060	35,500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최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EDI와 유사하지만, 인터넷 등 보다 발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존의 EDI는 부가통신망을 이용하고, EDI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만 이용하는 다소 폐쇄적인 구조였던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다른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라는 특징을 갖는다.

기업과 정부 모두 이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갖는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통계적 차원에서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새로이 등장한 분야이고, 이에 대한 통계적 측정기준도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계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성보고서에서는 어디까지를 기업간 전자상거래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 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기관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에 따른 통계는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계속 활성화되면 이 분야의 대한 통계도 충실히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3 장 범죄 · 재해

우리사회의 범죄와 재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범죄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범죄는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사이버 범죄나 마약 복용 등과 같이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이 오늘날에는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기도 하고, 미성년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전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범죄는 공간적으로도 사회적 상대성을 지닌다. 즉,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범망에 걸리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고 범죄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제한속도 위반이나 성희롱과 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사회적 허용 범위가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여 범죄로 규정하는 구속력이 약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뒤 주요 범죄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알아본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전통적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건수와 추이, 여성 또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범죄의 방지 측면에서 교도시설 및 제도에 관한 실태도 알아본다. 또한,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해와 자연 재해에 관해서 그 피해 규모와 변화 추세를 살펴본다. 범죄 통계는 연도별, 국가별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통계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의 현황과 비교하겠다.

제1절 법과 안전에 대한 인식

준법의식

준법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시작한 사회통계조사는 원래 9개 부문을 3~5년 주기로 실시했다. 1995년 조사체계를 개편하면서 13개 부문으로 세분하고 조사주기도 4~5년으로 변경하였다. 1988년부터 안전 부문의 준법의식을 측정하였고 최근 자료는 1997년치다. 이후에는 4년 주기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은 1988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과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으로 나타났다. 199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57.8%는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4.3%에 불과했다. 이는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준법 수

준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방증이다.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3%에 불과한 반면, 타인의 준법 정도를 평가할 때는 10명 중 3명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3-1>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

	자기평가			타인평가		
	지킨다	보통이다	안지킨다	지킨다	보통이다	안지킨다
1988	59.3	37.1	3.6	29.4	46.0	24.7
1991	57.9	38.3	3.8	26.4	45.4	28.2
1997	57.8	38.9	3.3	24.3	48.3	27.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공중질서를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차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 정도인 반면, 교통질서나 거리환경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2명 중 1명은 우리 국민이 길거리에 담배꽂초를 함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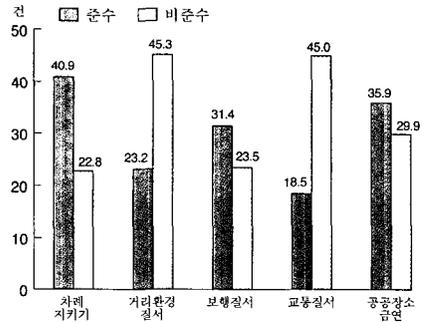
<표 13-2> 공중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1997)

(단위 : %)

	차례지키기		거리환경질서		보행질서		교통질서	
	준수	비준수	준수	비준수	준수	비준수	준수	비준수
전체	40.9	22.8	23.2	45.3	31.4	23.5	18.5	45.0
남	40.7	23.3	22.5	45.2	31.4	24.3	18.5	44.4
여	41.0	22.3	23.9	45.3	31.4	22.6	18.5	45.4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그림 13-1] 공중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1997)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 기본적인 공중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안전의식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1997년에는 경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교통 분야에 대한 불안감도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국가안보와 식품위생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특히 야간 보행 때 불안함을 느끼는 비

<표 13-3>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1997)

(단위 : %)

	경제	환경	건축	교통	치안	안보	야간 보행	범죄피해 두려움
	전체	84.2	65.1	64.7	63.8	50.2	42.4	48.9
남	85.1	66.5	64.9	64.8	48.8	41.8	35.5	47.0
여	83.4	63.7	64.4	62.9	51.5	42.9	60.9	66.8

자료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율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여성 10명 중 6명이 늦은 시간에 길을 걸어 다닐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범죄 현황

소송사건 추이

한국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이 헌법에 보장되었고, 1949년 법원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근대적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법원의 종류는 상고심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 항소심으로 고등법원, 제1심으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을 두고 있어 3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공개의 원칙이 보장되고,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제도를 갖췄다. 민사·형사사건 중 합의사건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하고, 행정소송은 1심 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3심제를 한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이다. 이러한 사법제도 아래, 1999년 한 해동안에 처리된 형사사건은 239만5천건으로 1980년의 146만1천건의 약 1.6배로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형사 공판사건의 구속 비율은

전체 사건의 39.7%였다. 민사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며 1999년 346만8천건으로 1980년에 비해 약 5.6배로 증가하였다. 인구 1만명당 소송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1999년 1,287건으로서 10명당 1.3건 정도의 소송이 빚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선거사건을 포함한 행정소송 및 소년범죄 관련 소송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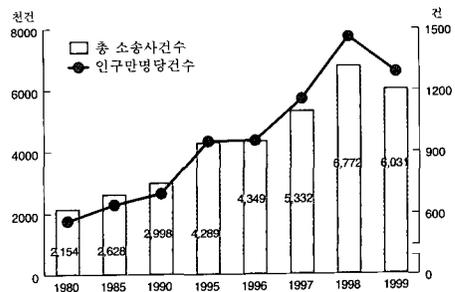
<표 13-4> 소송사건 현황

(단위 : 천건, 건)

	계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인구1만명당						
1980	2,154	565	1,461	622	49	4	17
1985	2,628	644	1,089	1,426	85	8	21
1990	2,998	699	1,559	1,318	88	10	24
1995	4,289	951	2,177	1,988	77	12	36
1996	4,349	955	2,003	2,206	87	14	39
1997	5,332	1,159	2,553	2,617	96	17	49
1998	6,772	1,459	2,634	3,975	105	17	41
1999	6,031	1,287	2,395	3,468	106	17	43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호

[그림 13-2] 소송사건 수



범죄 발생 및 검거

1999년 한 해동안 총 173만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1998년보다 1.9% 감소하였으나, 1970년 33만건에 비하면 5.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 1천명당 범죄건수는 같은 기간 중 1건에서 3.7건으로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75년까지는 거의 제자리걸음 하다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범죄발생 건수의 증가는 특별법에 의한 범죄건수가 1980년 이후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검거 건수를 보면 1970년 29만여건에서 1999년 165만여건으로 5.7배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늘어 1999년 208만여명에 달했다. 교통범죄를 제외하면 1999년의 범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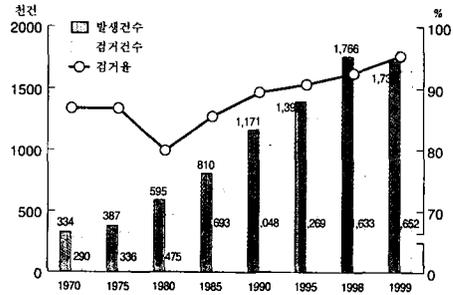
<표 13-5> 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인구 1천명당 발생건수
1970	333,537	289,637	86.8	415,504	1.0
1975	387,207	335,944	86.8	462,908	1.1
1976	504,630	450,059	89.2	609,177	1.4
1980	595,277	475,353	79.9	697,629	1.6
1985	810,416	693,270	85.5	885,765	2.0
1990	1,171,380	1,047,760	89.4	1,326,775	2.7
1995	1,399,085	1,269,375	90.7	1,599,930	3.1
1996	1,494,846	1,358,982	90.9	1,681,321	3.3
1997	1,588,613	1,452,097	91.4	1,802,720	3.5
1998	1,765,887	1,632,678	92.5	2,010,814	3.8
1999	1,732,522	1,651,896	95.3	2,081,797	3.7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호

[그림 13-3] 범죄 발생 및 검거



생건수는 110만건, 검거율은 93.0%로 전체 범죄에 대한 검거율(95.3%)보다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검거건수는 1999년 103만여건으로 1985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1985년 1.5건에서 1999년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13-6>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인구 1천명당 발생건수
1985	611,592	496,654	81.2	680,277	1.5
1990	683,474	572,826	83.8	827,993	1.6
1995	903,718	777,845	86.1	1,080,074	2.0
1998	1,081,669	957,946	88.6	1,310,947	2.3
1999	1,104,946	1,027,390	93.0	1,431,882	2.3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 호

범죄유형

범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범죄유형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형법범이 1999년

26.7%를, 특별법범이 73.3%를 차지해 특별법범의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1980년에 비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형법범 가운데서 재산범죄의 비중은 69.1%로 1980년의 50.7%보다 18.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과실범죄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범죄는 1980년 674건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 1999년에는 전년대비 8.8배인 11,568건이나 되었다. 한편 전체 형법범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에 들어 점차 줄다가,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커진 12.8%였다. 한편 특별법범이 총 범죄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73.3%에 달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국민의 활동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 보유대수가 늘면서 교통 관련 범죄가 크게 는 것도 한몫 했다.

형법범 중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강도·강간·성폭력·방화 등이다. 이들 5대 주요 범죄 이외에 상해·공갈·협박·약취·감금 등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5대 강력범죄만 살펴보겠다. 1999년 5대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69년의 4배 이상으로 증가한 13,213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간·강도·방화·살인의 순으로 증가했다. 살인의 발생건수는 1969년과 비교하면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며 매년 700~800건이었으며 1999년에는 전년 대비 1.86% 증가한 984건에 달했다. 살인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교통사고 때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살인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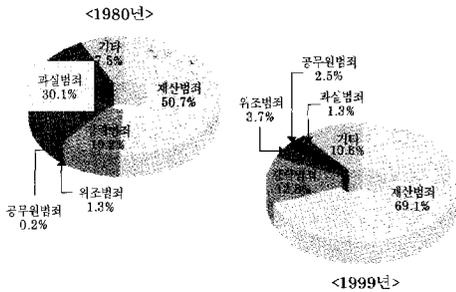
〈표 13-7〉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단위 : 건)

	합계	형법범	형법범						특별법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기타	
1980	595,277 (100.0)	305,162 (51.3)	154,575 (50.7)	31,218 (10.2)	3,843 (1.3)	674 (0.2)	91,814 (30.1)	23,038 (7.5)	290,115 (48.7)
1990	1,171,380 (100.0)	240,145 (20.5)	158,413 (66.0)	39,252 (16.3)	5,845 (2.4)	493 (0.2)	7,668 (3.2)	28,474 (11.9)	931,235 (79.5)
1998	1,765,887 (100.0)	452,260 (25.6)	338,943 (74.9)	49,975 (11.0)	13,537 (3.0)	1,322 (0.3)	6,119 (1.4)	42,364 (9.4)	1,313,627 (74.4)
1999	1,732,522 (100.0)	462,253 (26.7)	319,627 (69.1)	59,367 (12.8)	16,873 (3.7)	11,568 (2.5)	6,022 (1.3)	48,796 (10.6)	1,270,269 (73.3)

주 :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호

[그림 13-4] 유형별 범죄발생(형법범)



력범죄로 다루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 정도 뿐만 아니라 살인의 피해를 영원히 원상 회복할 수 없고 피해 가족·친지들에 대한 심리적·물적 피해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강도는 지난 30여년간 6~7배로, 강간은 약 5배로 증가했다. 강력범죄는 국민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가치안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중대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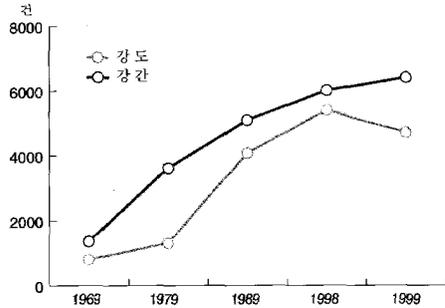
<표 13-8> 주요 강력범죄¹⁾의 발생현황

(단위 : 건)

	합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1969	2,974	570	805	1,369	230
1979	5,755	458	1,315	3,621	361
1989	10,412	578	4,085	5,102	647
1998	15,416	966	5,407	6,016	1,157
1999	13,213	984	4,712	6,410	1,107

주 : 1)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등은 제외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 호

[그림 13-5]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추이



여성 범죄

1999년 현재 전체 범죄자 6.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다. 총 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 비율은 1990년대부터 계속 증가 추세로 1999년 15.8%였다. 이는 1998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형법범 범죄자에 대한 여성범죄자 비율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다가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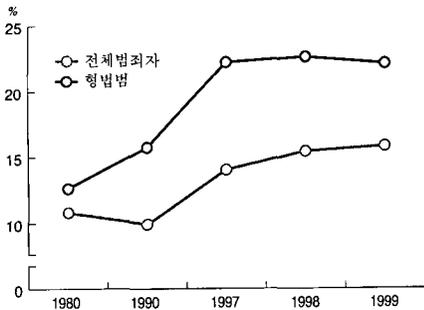
<표 13-9> 여성범죄자 점유율

(단위 : %)

연도	전체여성범죄자 ¹⁾							
	여성 형법범 범죄자 ²⁾							
	재산 범 ³⁾	강력 범 ³⁾	풍속 범 ³⁾	위조 범 ³⁾	과실 범 ³⁾	공무 원범 ³⁾		
1980	10.8	12.6	16.5	12.8	17.6	15.6	3.2	3.8
1990	9.9	15.7	13.4	12.2	29.9	15.7	8.4	4.2
1997	14.0	22.2	23.3	14.6	24.9	20.0	9.6	2.9
1998	15.4	22.6	24.0	15.1	24.4	20.6	9.6	3.4
1999	15.8	22.1	23.7	16.2	22.9	21.3	11.0	4.4

주 : 1)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임
 2) 전체 형법범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임
 3) 여성 형법범 범죄자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호

[그림 13-6] 여성범죄자 점유율



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22.1%였다. 범죄유형별로 재산범과 풍속범의 여성범죄자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범죄의 여성 비중은 4.4%로 가장 낮았다.

소년 범죄

소년범죄자의 수를 보면 1999년 현재 범죄자 16명 가운데 1명은 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는 소년법에 의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전체 소년범죄자 수는 10만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5년을 고비로 증가하였다. 다만 1999년에는 형법범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6.3%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급감하였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자 가운데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1년 강간 사건 5건당 1건 정도가 청소년에 의해서 발생되었던데 비해 1999년에는 10건 중 1건 이하가 소년법에 의한 것이었다. 살인·폭행·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도 10% 미만의 낮은 비중이다. 반면 강도와 절도의 경우 여전히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커 전체 범죄의 절반 정도가 소년범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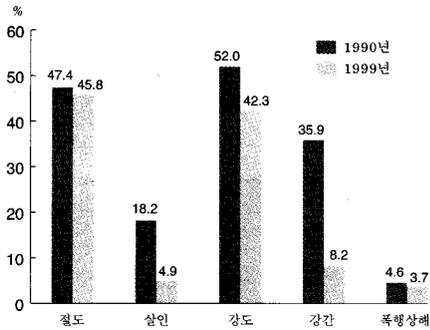
<표 13-10> 소년범죄자 비율

(단위 : 명, %)

	1991		1998		1999	
	전체범죄자	소년범비율 ¹⁾	전체범죄자	소년범비율 ¹⁾	전체범죄자	소년범비율 ¹⁾
형법범	308,906	10.6	633,017	8.1	685,993	6.3
절도	46,185	49.3	71,706	53.0	66,386	45.8
살인	764	12.2	1,014	5.3	1,080	4.9
강도	4,673	47.9	8,100	45.0	6,610	42.3
강간	5,536	21.0	5,674	9.1	6,277	8.2
폭행, 상해	33,189	4.1	47,635	4.2	63,595	3.7
특별법범	1,231,954	5.7	1,563,548	6.2	1,620,831	6.2

주 : 1) 전체 범죄자중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군인은 제외) 범죄자의 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호

[그림 13-7] 소년범죄자 비율



교정 활동

범죄를 예방하고 교도해야 할 인력의 총원은 범죄발생 건수의 증가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지난 10여년간 경찰관, 교도관,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을 범죄발생 건수와 비교해 보면, 1989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9년 범죄발생지수가 161인데 비해 경찰관 지수는 128, 판사는 151, 교도관의 경우는 122에 머물러 교정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도관의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 교도관 정원은 10년 전보다 2,239

<표 13-11>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교도관 정원

(단위 : 명)

	경찰공무원		검 사		판 사		교도관	
	정원	지수	정원	지수	정원	지수	정원	지수
1989	70,551	100	747	100	1,087	100	10,006	100
1998	96,286	136	1,214	163	1,447	133	10,956	109
1999	90,623	128	1,207	162	1,644	151	12,245	122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대검찰청, 『검찰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무부 교정국

명 증가하였으나 교도관 1인당 관리 인원이 5.6명이나 된다. 1989년 5.1명이었던데 비해 교도관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늘어나 근무상태가 열악해졌다.

1999년 현재 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수는 517명으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에 소폭 감소한 뒤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순찰차량의 보급은 1997년부터 파출소당 1대 정도의 차량을 확보할 정도가 됐다. 한편 파출소는 1993년 이후 3,400여곳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3,200여곳으로 줄었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자의 기동력·수법도 좋아졌으며 사이버 범죄, 마약 사범 등 범죄의 종류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표 13-12> 경찰관, 경찰서, 파출소 및 순찰차량수

(단위 : 명, 곳, 대)

	경찰관수		경찰서수	파출소수	순찰차량수	
	경찰관 1인당 인구	파출소당순찰차량수				
1991	84,931	510	218	3,369	1,347	0.4
1992	89,092	491	220	3,399	1,926	0.6
1993	90,108	490	220	3,399	2,228	0.7
1994	90,558	493	222	3,414	2,283	0.7
1995	90,639	498	223	3,414	2,298	0.7
1996	87,419	521	223	3,422	2,474	0.7
1997	89,629	513	224	3,422	3,613	1.1
1998	90,515	513	225	3,219	3,643	1.1
1999	90,623	517	229	3,226	3,644	1.1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호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제3절 재해

재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활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재산이 외부적 힘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를 재해라 하고, 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따라서 재해는 돌발적인 외부 힘에 의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재해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먼저 발생 원인으로 재해를 분류하면,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천재)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해(인재)로 나눌 수 있다. 인위 재해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공해 피해 등이 있다. 사람의 부주의·고의나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재해는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화재, 전기 화재, 방사선 누출사고, 산업재해 등이 있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른 재해들은 기술과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는 부득이한 부작용이다. 핵

발전소, 화학공장의 가동, 농약의 개발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 등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연재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교통사고와 화재 등과 같은 인위 재해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전체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자연재해·교통사고·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총 117,581명이다. 그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아 94.3%를 차지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4.5%다. 한편 자연재해 사망자는 10년간 총 1,424명이며 재산피해액은 11조5,875억원의 절반이상인 52.7%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작지만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연 재해

최근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경우 호우로 인한 것이 46%로 가장 크고 태풍 27%, 폭풍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피해는 호우 피해가 59%로 가장 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8%였다. 반면 폭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금액 중 6%로 발생빈도가 높는데 비해 재산피해는 덜했다.

최근 10년간(1990~1999)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인명피해 142명, 이재민 37,184명, 농경지 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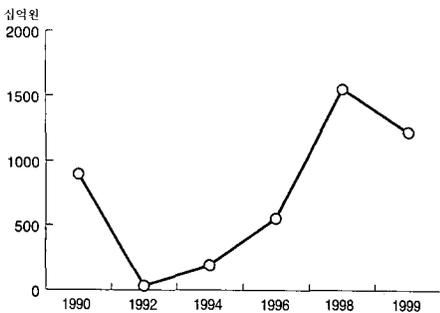
〈표 13-13〉 자연재해 사망자수 및 피해액

(단위 : 명, 십억원)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사망자	257	40	72	77	384	89
피해액	894	31	189	551	1,550	1,220

주 : 피해액은 1999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자료 :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상황통계』, 각 호

[그림 13-8] 자연재해 피해액



41,340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6조원을 조금 상회했다. 연평균 6천억원씩 손실을 입은 셈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1,424명이었다. 1998년 한 해 인명피해가 가장 커서 384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주로 그 해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원인이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970년대 330명에서 1980년대 285명, 1990년대 142명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방재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인구 1백만 명당 자연재해 사망 또는 실종자수가 일본은 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명으로 3.5배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

교통사고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급격하게 늘었다. 1988년 이후 매년 20만여 건 이상의 인적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1만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30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자동차 사고 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4만~5만명이 장애자가 됨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연간 11조1천억원(1997년)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1997년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돌입하여 인구 4.4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할 정도가 됐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1천9백만 명을 육박하여 2.5명당 1명이 운전할 정도로 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커져 1999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사고건수는 27만6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7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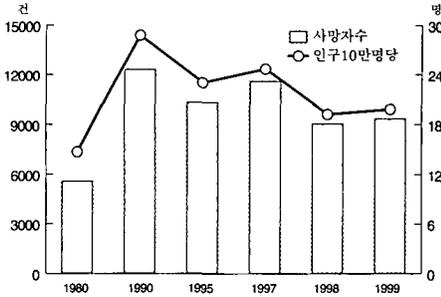
〈표 13-14〉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단위 : 건, 명)

	발생건수	사망자수	인구10	자동차	1일	부상자수
			만명당	1만대당		
1980	120,182	5,608	14.7	106	15.3	111,641
1990	255,303	12,325	28.8	36	33.8	324,229
1995	248,865	10,323	23.0	12	28.3	331,747
1997	246,452	11,603	24.7	11	31.8	343,159
1998	239,721	9,057	19.2	9	24.8	340,564
1999	275,938	9,353	19.8	8	25.6	402,967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호

[그림 13-9] 자동차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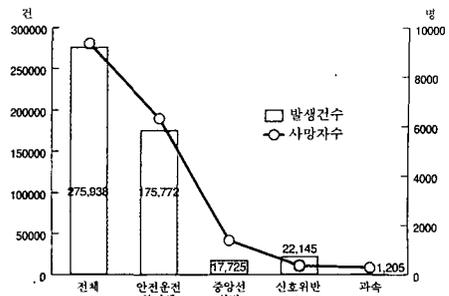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353명으로 하루 26명 꼴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8년에는 자동차사고 발생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근 10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운전문화의 향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1999년에는 사고건수가 전년 대비 15%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부상자 수도 늘어

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1999년의 교통사고를 법규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것이 전체 사고의 63.7%, 전체 사망자의 67.7%로 가장 많았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건수와 사망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 한편 과속은 전체 교통사고의 0.4%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비율은 3.0%를 차지하여 사고가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비교해

[그림 13-10]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1999)



<표 13-15>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단위 : 건, 명)

	전 체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 속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1990	255,303	12,325	162,744	6,960	12,380	1,498	7,024	191	2,484	459
1992	257,194	11,640	157,123	6,501	13,943	1,550	9,469	203	2,238	519
1994	266,107	10,087	148,561	5,006	17,806	1,594	13,556	257	1,917	426
1996	265,052	12,653	168,133	7,828	22,488	2,387	18,061	382	2,282	578
1997	246,452	11,603	158,959	7,410	19,377	2,036	16,790	334	1,948	512
1998	239,721	9,057	154,927	5,973	16,605	1,495	17,536	305	1,398	348
1999	275,938	9,353	175,772	6,333	17,725	1,387	22,145	363	1,205	28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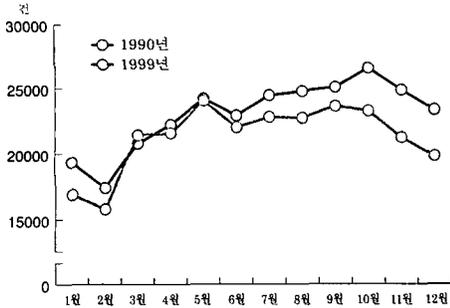
〈표 13-16〉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명)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0	255,303 (12,325)	16,881 (872)	15,785 (788)	21,448 (1,005)	21,572 (1,030)	24,043 (1,068)	22,027 (989)	22,819 (1,031)	22,751 (1,091)	23,623 (1,190)	23,271 (1,200)	21,254 (1,068)	19,829 (993)
1999	275,938 (9,353)	19,332 (691)	17,384 (608)	20,802 (695)	22,230 (721)	24,203 (796)	22,916 (717)	24,461 (797)	24,776 (880)	25,075 (840)	26,554 (870)	24,862 (873)	23,343 (865)

주 : ()내는 사망자수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호

[그림 13-11]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호위반에 의한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교통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시점을 월별로 살펴보면, 5월과 10월에 교통사고가 많

았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가을에 사고가 많고 겨울철에 다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계절은 10월과 1월이었다. 특히 1월은 사고발생건수에 비해 사망자가 많았다. 1999년의 변화를 보면 봄·가을 여행철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의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하루 중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999년의 경우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12.4%), 그 다음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교통사고가 퇴근 무렵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수도

〈표 13-17〉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명)

	전체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990	255,303 (12,325)	13,598 (957)	5,627 (499)	3,978 (436)	12,170 (718)	22,488 (795)	25,087 (940)	25,814 (908)	29,969 (1,143)	34,224 (1,144)	33,647 (1,833)	27,018 (1,636)	21,684 (1,316)
1999	275,928 (9,353)	17,123 (774)	11,560 (655)	9,463 (688)	16,235 (748)	23,939 (591)	23,568 (494)	24,818 (521)	29,436 (691)	32,247 (817)	34,273 (1,343)	28,751 (1,131)	24,525 (900)

주 : ()내는 사망자수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호

퇴근 무렵에 많아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았다. 1990년과의 차이점은 사고가 새벽에 많이 증가한 점이다. 특히 1999년의 이 시간대의 사망자수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새벽시간보다 적어 규정속도 운행과 같은 교통법규 준수상태가 낮보다는 밤에 취약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토요일(15.8%)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일요일

(13.7%) 사고가 가장 적었다.

1999년의 사고운전자를 연령·경력별로 살펴보면, 36세 이상 40세 이하 운전자가 44,788명(전체 사고운전자의 16.2%), 26세 이상 30세이하의 운전자가 4만4,758명(16.2%), 31세이상 35세가 4만3,543명(15.8%)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운전자 세명중 한 명(32.4%)은 26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이 연령층이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 운전자의 사고도 1만2,384건으로 4.5%나 차지하고 있다. 사고운전자의 특성을 운전경력별로 살펴보면 5년미만의 경력자가 전체 사고운전자의 39.5%, 5년이상 10년미만 경력자가 26.8%, 10년이상은 26.4%를 차지하여 운전 경력이 많아질수록 사고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이와 대비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운전경력 5년 미만인 경우를 세

〈표 13-18〉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997	33,921	34,485	34,140	35,675	33,996	35,450	38,785
1998	32,270	33,903	33,424	33,524	34,590	34,519	37,491
1999	37,844	38,976	37,686	38,770	38,521	40,641	43,500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호

〈표 13-19〉 사고운전자의 연령별 분포(1999)

(단위 : 명. %)

전체	20세미만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275,398	12,384	29,868	44,758	43,543	44,788	61,245	25,892	13,460
(100.0)	(4.5)	(10.8)	(16.2)	(15.8)	(16.2)	(22.2)	(9.4)	(4.9)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0

〈표 13-20〉 사고운전자의 경력별 분포(1999)

(단위 : 명. %)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6년미만	10년이상	무면허
275,938	20,833	18,580	18,706	19,413	31,619	73,842	72,776	20,119
(100.0)	7.5	6.7	6.8	7.0	11.5	26.8	26.4	7.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0

분하여 보면, 오히려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전체 사고운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져서 4년이상 5년미만 경력자가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면허 운전자의 비중도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9명으로, 미국(15.8명)·일본(7.7명)·중국(6.1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13-21〉 주요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 명/10만명)

한국 (97)	미국 (96)	일본 (97)	영국 (96)	중국 (96)	스웨덴 (96)	호주 (96)	싱가폴 (95)	남아공 (95)
24.9	15.8	7.7	6.4	6.1	6.1	10.8	7.5	24.7

주 : ()는 해당연도임

자료 : OECD, P.R.I.(Prevention routiere interationale)

화재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에 편리한 액체 및 기체연료가 대량 보급되고 가전제품의 사용도 늘면서 화재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화재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더욱이 최근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초고층 건물과 대형공장이 증가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커지는 추세다. 또한 오늘날 화재는 특정 시간이나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제한된 토지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따라 도시에 건축물이 밀집하고, 고층화·심층화하고 있다. 이

러한 환경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의 밀폐구조와 가연성 내장재 때문에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대량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환경을 반영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285명, 재산피해는 1조원을 상회한다. 화재 사망자는 다소의 증감이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액도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한해 평균 529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1,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2000년 상반기 중 발생한 화재는 1만 8,883건으로 298명이 사망하고 92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는 1999년 상반기에 비해

〈표 13-22〉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및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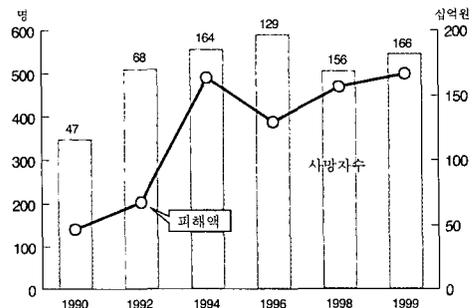
(단위 : 명, 십억원)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사망자수	348	510	555	589	505	545
피해액	47	68	164	129	156	166

주 : 피해액은 1999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자료 :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상황통계』, 각 호

[그림 13-12]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및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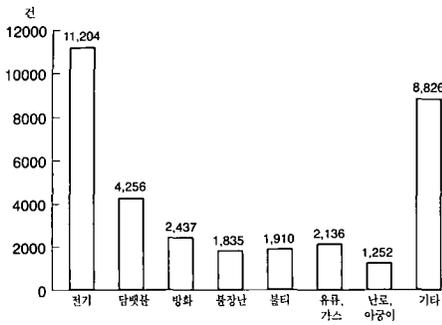


〈표 13-23〉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합 계	전 기	담뱃불	방 화	불장난	불 티	유류,가스	난로,아궁이	기 타
1997	29,472	10,075	3,626	2,655	1,566	1,757	1,377	778	7,638
1998	32,664	10,897	3,856	3,056	1,938	1,668	2,302	855	8,092
1999	33,856	11,204	4,256	2,437	1,835	1,910	2,136	1,252	8,826

자료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각 호

[그림 13-13]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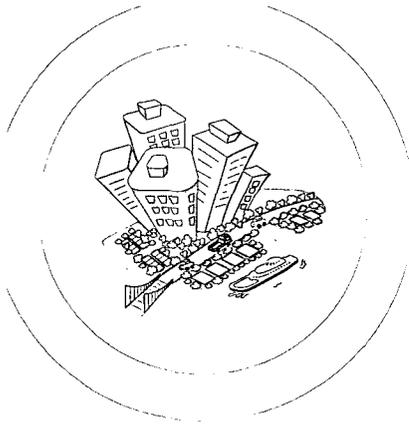
44명 증가한 것이다.

화재 원인도 변화했다. 1945~1965년에

는 성냥이나 양초, 등잔불에 쓰이는 기름 등의 취급 부주의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1966~1980년에는 유류 사용 증가로 인하여 유류 화재가 늘었다. 1980년 이후에는 가전제품이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화재가 증가했다. 특히 1985년 이후에는 방화건수도 늘어 1990년대에는 세 번째 화재원인이 됐다.

1999년의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전기화재가 33.1%로 가장 많고,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12.6%, 방화에 의한 화재가 7.2% 등의 순서였다.

여 백



IV. 경제일반

제14장 국민소득

제15장 대외경제

제16장 고용·임금

제17장 에너지·자원

제18장 연구개발

제19장 산업재해·분쟁

제20장 재정

여 백

제 14 장 국민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으로 생산활동에 참가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생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에서 파악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상호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제규모를 측정하면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 이 생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산과 소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GDP: gross domestic products)과 국민총소득(國民總所得, GNI: gross national income)을 들 수 있다.

국내총생산은 일정한 기간동안(보통 1년) 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총소득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

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총생산물을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대가로서 얻어지는 소득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범위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장소, 즉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존재하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생산한 최종 생산물, 즉 부가가치의 합계로 측정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측정하는 중심지표로 사용된다. 그리고 국민총소득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아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와 외국의 생산활동에 참가시켜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의 합계로서 소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자본이동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해외투자가 발생함으로써 생산 측면에서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는 측면도 함께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생산요소의 이동이 많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지표와 소득지표를 구분하지 않고 GNP(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s)를 주 지표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기술이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요소소득의 수급규모가 커

저 GNP와 GDP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국내 경기동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생산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꾸고 GNP는 소득지표로만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GNP는 물량변화를 반영하는 생산지표와 소득변화를 나타내는 소득지표가 혼합되어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또한 교역조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 소득 총량지표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UN,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국민계정체계를 개정(93 SNA) 하면서 새로운 소득지표인 실질 GNI(실질 국민총소득, real gross national income)를 만들게 되었다. 실질 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존의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국가간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경제의 개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는 경제교류의 국제화,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활발한 시대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나

라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며, 그 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국민소득지표를 통하여 살펴보자.

제1절 경제규모와 생활수준

경제규모

<표 14-1>에서 보듯 국민소득통계가 처음 작성된 1953년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479억원,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473억원이었다. 이것이 1975년에는 각각 10조1천억원과 10조2천억원으로 커져 27년 동안 각각 20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1999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478조원을 넘었고, GDP는 484조원에 이르고 있어 1953년에 비해서는 약 1만배 정도, 1975년에 비해서도 47배에 이를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한편,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간의 차이인 국외순수취요소소득(國外純受取要素所得)은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플러스를 나타내 외국에서 우리나라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외국에 지출하는 소득보다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출되는 소득이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

반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외국

인 근로자들의 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특히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표 14-1〉 경제규모의 추이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국외순취 요소소득 (GNI -GDP)
	총액 (억원)	1인당 (만원)	총액 (억원)	1인당 (만원)	
1953	479	0.2	473	0.2	-6
1960	2,449	1.0	2,431	1.0	18
1965	8,057	2.8	7,981	2.8	76
1970	27,517	9	27,252	9	265
1975	101,039	29	102,281	29	-1,242
1980	370,322	97	377,885	99	-7,563
1985	791,704	194	813,123	199	-21,419
1990	1,786,283	417	1,787,968	417	-1,685
1995	3,763,164	835	3,773,498	837	-10,334
1996	4,171,084	916	4,184,790	919	-13,706
1997	4,508,533	980	4,532,764	985	-24,231
1998	4,378,714	943	4,443,665	957	-64,951
1999	4,782,509	1,021	4,837,778	1,032	-55,269
1975/53	211 배	121 배	216 배	124 배	
1999/75	47 배	35 배	47 배	35 배	
1999/53	10,228 배	4,356 배	9,984 배	4,253 배	

주 : 1970년 이전은 1975년을 기준한 계열이고,
1970년 부터는 1995년을 기준한 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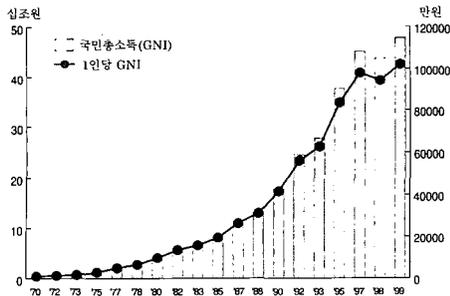
1인당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은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이나 소득규모를 알아보는 데는 그다지 바람직한 지표가 못된다. 따라서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일반적으로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는 1인당 국민총소득(per capita GNI)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의 평균적인 생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도 국내 거주자 및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보조적인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도 지난 47년 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크게 증가했다. 1953년에 2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1975년에는 29만원, 그리고 1999년에는 1,021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을 비

[그림 14-1] 국민총소득과 1인당 GNI



교하여 그 나라의 상대적인 경제규모의 확대 속도와 생활수준의 향상 속도를 파악한다.

국민소득을 국제비교하려면 우선 국가마다 자국 화폐기준으로 측정한 국민소득을 국제통화인 미국달러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표 14-2>와 [그림 14-2]는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미국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은 1970년에 80억달러로 대만보다 컸지만 미국의 1/127, 일본의 1/2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는 909억달러로 미국의 1/45, 일본의 1/1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3,130억달러로 미국의 1/27, 일본의 1/12수준까지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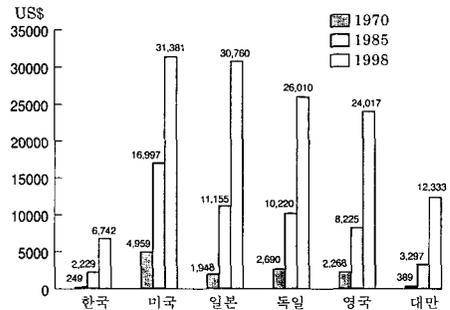
<표 14-2> 주요국가의 국민총소득

국민소득	국가	1970	1985	1998
국민총소득 (억달러)	미국	10,168	40,536	84,905
	일본	2,033	13,480	38,870
	독일	1,633	6,231	21,333
	영국	1,257	4,662	14,218
	대만	57	631	2,686
	한국	80	909	3,130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미국	4,959	16,997	31,381
	일본	1,948	11,155	30,760
	독일	2,690	10,220	26,010
	영국	2,268	8,225	24,017
	대만	389	3,297	12,333
	한국	249	2,229	6,742

주 : 각국의 국민총소득은 자국 통화 기준을 연평균 대비 환율로, 그리고 1인당소득은 달러표시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9

[그림 14-2] 주요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9

1인당 국민소득도 1970년에 249달러에서 1998년에는 6,742달러로 증가하여 미국의 1/20, 일본의 1/8 수준에서 각각 1/5수준으로 그 격차를 좁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술 혁신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10년 뒤인 2010년에는 국민총소득이 1조1천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애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증가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즉, 경제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크지만 1인당 소득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규모나 생활수준은 대만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가치를 통일하기 위하여 사용한 각국 화폐의 미국달러 대비 환율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환율은 대부분 각국의 화폐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시장율은 각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인 교환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적 성과보다는 투기적인 요인이 감안된 자본거래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국의 화폐로 표시한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시장환율이 변하면 미국달러표시 국민소득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예가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 835만원에서 1998년에는 943만원으로 원화표시로는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 1만달러를 넘어선 수준에서 1998년에는 환율의 급등으로 6,700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부족으로 인하여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취약해졌다는 점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컸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생산·지출·분배구조

국민소득의 3가지 측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은 크게 생산, 분배, 지출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쌀을 비롯한 곡식,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재화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저장, 수송,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서비스의 생산활동도 포함된다.

생산이 이뤄지려면 사람의 노동력 그리고 공장건물이나 기계장비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본이 이용된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 개별 생산요소들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제공된다. 즉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불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는 이윤 등의 형태로 각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기여한 부분만큼 시장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불 받는다. 이러한 것을 분배활동이라 한다. 지출은 분배된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활동은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러면 국민총소득을 이러한 국민경제의 순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들 중 누군가에 의해서 구입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출하는 총금액은 결국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인 국민총소득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측면에서 측정된 생산국민소득(生産國民所得)이 지출측면에서 파악한 지출국민소득(支出國民所得)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각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경영 등은 투입의 대가로 각각의 소득을 얻는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며, 이들의 합계는 결국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치와 같다. 또한 개별 생산요소들을 제공한 생산의 주체들은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분배측면에서 측정된 분배국민소득(分配國民所得)도 생산이나 지출측면에서 파악된 국민소득과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경제활동의 생산, 분배, 지출의 과정에서 파악된 국민소득이 같아지는 것을 국민소득 삼면등가(三面等價)의 원칙(原則)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세 가지 국민소득의 구성요인과 이들의 장기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자.

생산구조

우리나라의 생산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부문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

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10개의 산업, 정부 서비스 생산자, 그리고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이란 간단히 말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그리고 정부서비스 생산자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거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행정, 국방 등의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래의 주체로서 주로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생산활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는 사립학교, 사립대학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종교단체나 장학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같이 가계를 상대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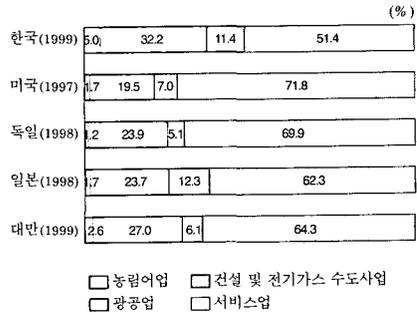
이러한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구성비를 보통 생산구조라고 부르며, 생산국민소득은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197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생산구조는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1970년에 각각 27.1%와 1.5%에서 1999

년에는 5.0%와 0.4%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970년 21.2%와 43.5%에서 1999년에 31.8%와 51.4%로 급성장했다. 건설업과 전기·수도·가스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6.7%에서 11.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2010년에 가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2.6%, 제조업의 비중은 27.7%로 낮아지는데 비해 건설업 및 전기·수도·가스업은 15.4%로 상승하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49.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높다. 미국은 1997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광공업의 비중이 19.5%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그림 14-3] 주요국가의 생산구조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2000
 OECD, National Accounts, 1999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00

71.9%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독일, 일본의 경우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69.9%와 62.9%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지출구조

경제주체들의 최종 소비지출을 기초로 파악하는 지출국민소득은 민간 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고증감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금액이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와 민간 비영리 단체가 국민에게 공공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비용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수입간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총고정자본형

〈표 14-3〉 생산구조의 변화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전기·수도·가스사업	서비스업
1970	27.1	1.5	21.2	6.7	43.5
1975	25.0	1.6	25.9	6.0	41.5
1980	14.8	1.5	28.2	10.1	45.4
1985	12.6	1.3	29.2	10.5	46.4
1990	8.5	0.8	28.8	13.5	48.4
1995	6.2	0.4	29.4	13.4	50.6
1999	5.0	0.4	31.8	11.4	51.4
2010 (전망)	2.6	0.1	27.7	15.4	49.9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KDI, 『미래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0

성은 기업이 장래에도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설비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장신축, 기계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재고 증감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부분을 말하며, 자라고 있는 농산물이나 임산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액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여행에서 지출한 숙박료나 교통비는 수출에 포함되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여행시 구입한 기념품 등은 수입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출항목들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및 총고정자본형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수출의 비중은 1970년에 13.8%에서 1999년에는 42.1%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급속한 수출의 확대는 우리의 고도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며, 이른바 우리의 경제성장을 수출주도형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수입의 비중도 23.9%에서 35.3%로 높아져서 수출입의 비중이 37.7%에서 77.4%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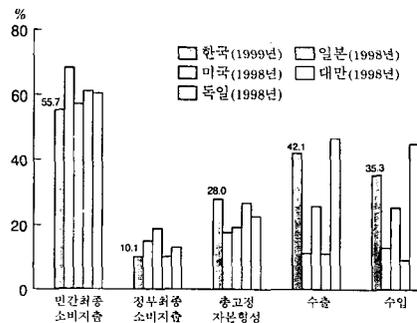
〈표 14-4〉 지출구조의 변화

(단위 : %)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재고 증 감	재화와 서비스 의 수출	재화와 서비스 의 수입
1970	74.7	9.1	25.5	-0.1	13.8	23.9
1975	69.1	10.9	26.8	1.9	27.2	35.7
1980	63.4	11.7	32.4	-0.4	32.7	40.6
1985	57.5	10.3	28.8	1.2	32.9	32.1
1990	52.3	10.5	37.3	0.4	29.1	30.3
1995	54.7	9.7	36.7	0.5	30.2	31.7
1999	55.7	10.1	28.0	-1.1	42.1	35.3
2010 (전망)	58.8	9.4	31.7	0.0	26.8	26.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KDI, 『미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2000

[그림 14-4] 주요국가의 지출구조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2000

다른 나라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민간 최종소비의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으나 수출입의 비중은 일본과 더불어 20% 정도로 낮은 편이다. 독일은 정부 최종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출입의 비중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

해 높다. 대만의 경우는 수출입의 비중이 90%를 넘어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배구조

생산에 투입한 개별 생산요소들에게 지불하는 소득을 통하여 파악하는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그리고 간접세와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피용자보수는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로 주는 임금을 말하는데 고용주가 피용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와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한다. 영업잉여는 기업경영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생산주체의 투입구조상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정부 및 민간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의 부가가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정자본감소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보조금은 산업진흥 혹은 제품가격의 인하 등 정책적 목적으로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9년 현재 피용자보수가 43.1%, 영업잉여가 30.3%, 고정자본소모가 13.6% 및 나머지 13.0%는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에 비해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영업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데 비해 근로자의 몫과 정부의 조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능력의 유지를 위한 고정자본소모는 그 분배율이 거의 2배정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피용자보수의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영업잉여와 간접세의 분배율이 낮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노동보다 풍부하므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농업이나 도소매업에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 소득의 대부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진국에서는 농업이나 도소매업도 기업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이들 부

〈표 14-5〉 분배구조의 변화

(단위 : %)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 보조금
1970	34.1	49.6	6.9	9.5
1975	32.4	50.4	7.4	9.8
1980	39.7	40.1	8.0	12.2
1985	40.6	38.0	9.8	11.6
1990	45.9	32.2	10.6	11.4
1995	47.7	30.2	10.8	11.4
1999	43.1	30.3	13.6	13.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문에서도 피용자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14-5] 주요국가의 분배구조

	(%)			
한국(1999년)	13.0	13.6	30.3	43.1
미국(1997년)	7.6	10.4	22.8	59.9
독일(1997년)	10.9	13.0	23.5	52.7
일본(1997년)	7.4	16.1	20.2	56.0
영국(1997년)	13.5	10.2	22.0	54.4

간접세-보조금 영업이익
 고정자본소득 피용자보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OECD, National Accounts, 1999

제3절 경제성장률

국민소득통계는 대부분 해당시점에서의 가격인 경상가격(經常價格, current price)과 특정시점에서의 가격인 불변가격(不變價格, constant price) 두 가지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통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것에는 「명목(名目, nominal)」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실질(實質, real)」이라는 단어를 앞에 부쳐서 부른다. 국내총생산을 예로 들면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은 명목 국내총생산(名目國內總生産 nominal GDP)으로, 그리고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은 실질국내총생산(實質國內總生産, real GDP)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

기한다.

이러한 두 가지 통계는 나름대로 사용목적에 있다. 우선 명목국내총생산은 국민경제의 구조변동이나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혹은 기여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때에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불변가격에 의한 실질 국내총생산은 특정연도의 가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동이 제거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의 변동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한 통계자료가 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규모, 기업의 수나 규모가 증가하며 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시간적 변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경제성장률(成長率, growth rat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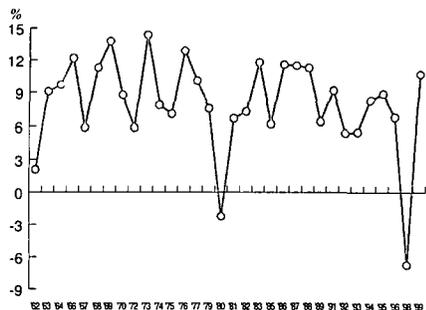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의 절대적 변화보다는 상대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명목가치 보다는 실질가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 \text{전년도 실질 국내총생산}}{\text{전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times 100$$

국내총생산이 5%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5%만큼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자. [그림 14-6]에서 보듯 1962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 경제는 1980년과 1998년 두 해에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약40년간 평균 8%대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4-6] 경제성장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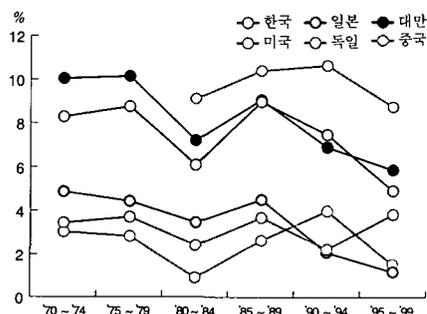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을 추진한 1960년대에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유가(油價)쇼크에도 불구하고 9%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 이

후 1980년대에는 8%대로, 1990년대에는 6%대로 점차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4-7] 주요국가의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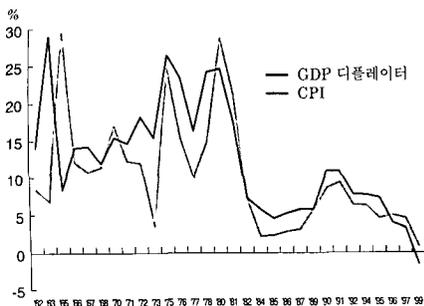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과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경제발전의 후기단계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림 14-7]에서 보듯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연평균 2~4%대의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중간 단계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위치해 있다.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국내총생산과

명목국내총생산간의 비율로 구한다. 묵시적인 환가지수(默示的 換價指數, implicit defl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더불어 물가수준의 일반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이러한 두 지수의 실제 변화를 [그림 14-8]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대체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CPI 상승률을 다소 웃돌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1960년대 초반에는 30%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중반이후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두 번에 걸친 유가(油價)파동으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랐고 1980년대부터는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는 환율이 급등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가 1999년부터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8]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제4절 저축률과 투자율

저축과 투자

저축은 소득 가운데 일부를 미래의 지출을 위하여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이다. 이러한 저축은 국민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축한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투자란 무엇인가? 경제분석에서 투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물리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물리적 자본(物理的 資本, physical capital)이란 생산활동을 촉진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생산돼 다른 생산활동을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나 공장 및 컴퓨터 등의 상품을 말한다. 기업의 물리적 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 자체가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또 이것은 다시 생산의 증가를 통하여 소득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생산활동의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축이다. 저

축의 증가 없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의 증가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축은 경제성장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축률과 투자율의 관계

국민소득통계에 있어서 저축은 크게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나뉜다. 투자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로 구분한다. 그러면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총투자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저축으로 조달된다. 저축은 국내총투자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축으로 국내총투자를 충당하고도 남는 부분은 외국에 빌려줄 수 있지만, 반대로 모자라게 되면 외국에서 빌려와야 한다. 이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우리나라의 저축이 외국에 투자된 부분이므로 국외투자(國外投資)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저축과 일치하게 되며, 이를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國民總處分可能所得, GNDI :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축률이라고 하는데, 이들 지표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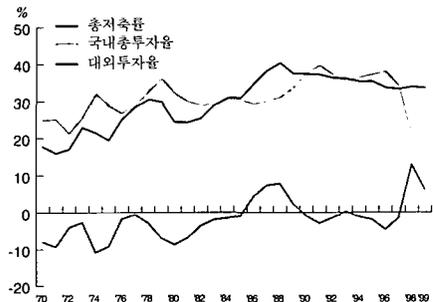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총저축률} &= \text{총투자율} \\ \text{총투자율} &= \text{국내총투자율} + \text{국외투자율} \end{aligned}$$

여기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순소득(國民純所得, NNI : net national income),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및 간접세를 합하고 보조금을 공제한 것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에서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클레임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은 뺀 것이다.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저축액은 약 160조원으로 이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346만원을 저축한 셈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80조원으로 나눌 경우 총저축률은 33.7%가 된다. 총저축율의 장기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4-9]과 <표 14-6>에서 보듯 1970년 17.8%에서 1988년에 40.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총저축률의 상승에는 정부부

[그림 14-9]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표 14-6〉 저축률과 투자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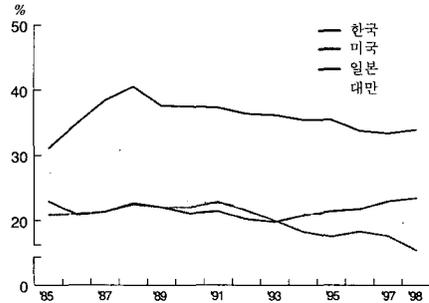
	총저축률		국내총 투자율	대 외 투자율
	민간	정부		
1970	17.8	11.1	24.9	-7.9
1975	19.5	16.7	28.9	-9.1
1980	24.4	19.1	32.2	-8.6
1985	31.1	25.0	30.5	-0.8
1988	40.5	32.8	31.2	7.9
1990	37.5	29.2	37.6	-0.8
1995	35.5	25.8	37.3	-1.8
1999	33.7	24.2	27.0	6.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크게 기여했다.

국내총투자율의 경우는 1970년에 24.9%에서 1991년에 39.8%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하락하여 1999년 현재에는 27% 수준에 있다. 국외투자의 경우에는 소위 3저시대라 일컫는 1986~1989년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에만 플러스를 보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줄곧 마이너스로 국내의 투자수요를 모두 국내 저축으로 대지 못하고 일부를 외국자본으로 충당해 왔다.

[그림 14-10] 주요국가의 저축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2000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만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와 비슷했으나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져서 1998년 현재에는 20%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20%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였으나 1993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계속 높아져서 1998년에 23%를 웃돈 반면 일본은 계속 낮아져서 1998년에 15%수준까지 떨어졌다.

제 15 장 대외경제

국제무역이란 국가끼리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갈수록 우리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경제생활이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제거래가 없는 고립된 폐쇄경제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며,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과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국제적 교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초기의 국제거래는 주로 석유, 석탄 등과 같은 원료와 다른 재화의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중간재 등 재화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술 및 산업의 발달과 함께 경제발전이 거듭되면서 국가간 거래는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인 인력, 자본, 기술과 아울러 통신, 금융 등의 서비스, 그리고 상표, 저작, 특허 등의 지적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확대되어온 이유는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물을 특화하여 그것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조건이 나쁜 산업의 생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상호 교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국제무역을 통해 각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뜻이며, 반드시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제무역의 결과 적자를 보는 수도 있으므로 각 나라에선 가능한 한 흑자를 보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거래에 대해 크게 2개 유형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나는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과의 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통계이다.

제1절 국제수지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 중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재화와 서비스 및 자본 등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거래의 내용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통계표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면 가정의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어느 정도를 썼는가, 그리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그 과부족을 어떻게 조달하거나 운용하였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및 준비자산증감 세가지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계정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양(+)이면 흑자라 하고 음(-)이면 적자라 하며, 보통 무역수지라고도 부른다. 서비스수지에는 외국과 서비스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외화의 수입과 지분이 계상된다. 소득수지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거나 우리의 해외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임금소득, 그리고 우리의 외국투자와 외국의 국내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경상이전수지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 있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 받는 돈이 계상된다. 즉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다.

자본계정은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얻어오는 거래를 기록하는데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그리고 기타투자의 3부분으로 나뉜다. 직접투자에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기록하고, 증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재화 거래를 나타내며, 기타투자는 직접투자과 증권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및 차입, 재화를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기타 자본수지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고 파는 거래와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갖고 가는 해외이주비 등이 기록된다.

경상수지나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 즉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과부족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준비자산증감항목이다.

국제수지의 장기변화

한 나라의 국제수지는 그 당시의 국내경
기나 해외경제 사정에 따라 흑자 또는 적
자를 불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경제이론에서는 보통 국제수
지는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국제수
지는 경상수지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경
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것을 말할 수
도 있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즉 실물
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보통 국제수

지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가 흑
자 또는 적자를 나타내기는 하겠지만, 장
기적으로는 가능하면 균형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장기 변화를 [그림
15-1]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왔는데 이른바 3저
시기인 1986년에서 1989년까지 대규모 흑
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후 1993년에
약간의 흑자를 나타냈고 외환위기로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급등한 1998
년과 1999년에 다시 대폭적인 흑자를 달
성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적자를 보였던 준비
자산은 1985년과 1990년에 자본수지의 흑
자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경상수지에서 나타난 적자보
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커 70억4천만달러
의 준비자산이 감소한데 비해 1999년에
경상수지가 244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기
록하고 자본수지도 20억4천만달러의 흑자
를 기록함으로써 외화가 국내로 많이 들
어와 한국은행은 229억8천만달러의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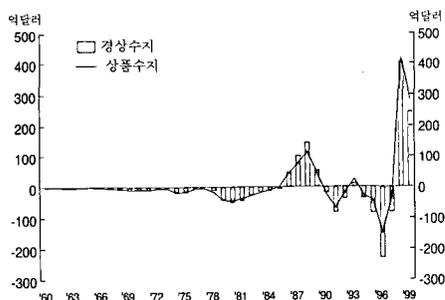
<표 15-1> 국제수지표

(단위 :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9
경상수지	-53.1	-8.0	-20.0	-85.1	244.8
상품수지	-46.1	-0.2	-24.5	-44.4	283.7
수출	172.5	266.3	636.6	1246.3	1451.6
수입	218.6	266.5	661.1	1290.8	1167.9
서비스수지	-7.2	4.6	-6.1	-29.8	-6.5
수입	25.7	38.2	96.4	228.3	265.3
지급	32.9	33.6	102.5	258.1	271.8
소득수지	-5.1	-20.9	-0.9	-13.0	-51.6
수입	21.5	19.1	28.9	34.9	32.4
지급	26.6	39.9	29.8	47.9	84.0
경상이전수지	5.4	8.5	11.5	2.2	19.2
수입	7.2	10.0	24.5	41.0	64.2
지급	1.8	1.4	13.0	38.9	45.1
자본수지	65.2	16.3	25.6	167.9	20.4
투자수지	65.2	17.3	29.0	172.7	24.3
기타자본수지	0.0	-0.9	-3.3	-4.9	-3.9
준비자산증감	-8.4	0.4	11.9	-70.4	-229.8
오차 및 누락	-3.7	-8.8	-17.5	-12.3	-35.3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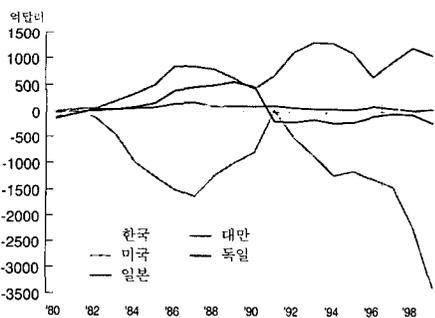
[그림 15-1] 국제수지의 장기변화



준비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변화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그림 15-2]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상수지 규모는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며, 독일이나 대만과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1980년 이후 경상수지의 변화를 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1991년 통일 이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나 미국은 경상수지의 장기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대만이나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균형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림 15-2] 주요국가의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호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00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0.7

제2절 무역

무역통계

앞에서 살펴 본 국제수지표는 재화와 서비스, 소득이전 및 자본의 이동까지 외국과의 다양한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어떠한 품목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며, 어떤 나라와 거래하는지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무역통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무역통계는 외국과의 여러 가지 국제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통계이다. 세관을 통과한 재화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통계(通關統計)라고도 한다. 이러한 무역통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유엔의 『국제상품무역통계 : 개념과 정의(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 Concepts and Definitions)』에 의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수출과 수입을 신고하고 수리한 실적을 기초로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무역통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국가별, 수출입의 형태별, 품목별, 재원별, 용도별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시장현황을 파악하거나

외국의 수출입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유용한 정보로 쓰인다.

통관기준과 국제수지 기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통계는 관세청의 통관기준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기준 두 가지로 작성되므로 그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관기준은 재화가 우리나라의 관세선(關稅線)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계이며, 국제수지 기준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만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계이다. 물론 국제수지의 수출입통계가 통관기준 통계를 기초로 작성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통계 계상의 시기

통관기준은 관세선을 통과할 때 계상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평가하는 가격

통관기준은 수출은 본선인도(本船引渡, FOB, Free On Board) 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작성하나, 국제수지는 수출입을 모두 본선인도 가격으로 작성한다.

○포함범위

통관기준은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나 국제수지는 결제기준이므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환(無換)수출입, 차관수입 등은 제외된다.

무역규모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해왔다. 1960년에서 1999년 사이 세계무역은 수출이 약46배, 수입이 약48배 증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47배 정도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무역규모는 1960년 3억8천만달러에서 20년이 지난 1980년에 약 100배인 398억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2천6백억달러를 초과하여 40년간 약 700배라는 놀라운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출의 경우는 1960년에 3천3백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99년에는 1천4백36억달러를 초과하여 40년동안 무려 4,354배나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는 같은 기간 3억4천4백만달러에서 1천1백97억달러로 약 348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무역규모 비중도 1960년 0.1%수준에서 1999년에는 2.2%로 높아졌다.

주요 국가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은 미국으로 1999년 현재 수출 6,905억달러, 수입 1조484억달러로 1

〈표 15-2〉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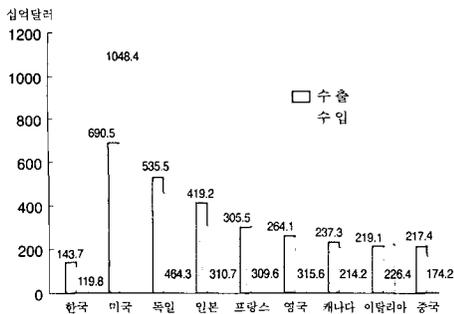
	세계(10억달러)			한국(백만달러)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60	122	130	252	33	344	377
1965	176	185	361	175	463	638
1970	298	314	612	835	1,984	2,819
1975	843	867	1,710	5,081	7,274	12,355
1980	1,807	1,899	3,706	17,505	22,292	39,797
1985	1,858	1,965	3,823	30,283	31,136	61,419
1990	3,354	3,494	6,848	65,016	69,844	134,860
1995	5,024	5,097	10,121	125,058	135,119	260,177
1996	5,236	5,329	10,565	129,715	150,339	280,054
1997	5,572	5,678	11,250	136,164	144,616	280,780
1998	5,494	5,654	11,148	132,313	93,282	225,595
1999	5,599	6,273	11,872	143,685	119,752	263,437
1999/60(배)	45.9	48.3	47.1	4,354.1	348.1	698.8
1999/80(배)	3.1	3.3	3.2	8.2	5.4	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 호

조7,389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기록해 세계 무역의 14.6%를 차지했다. 다음은 독일로 무역규모가 약1조달러에 이르며, 그 뒤로 일본(7,300억달러), 프랑스 (6,152억달러), 영국(5,796억달러)의 순이다.

1978년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99년 현재 세계 12위 수준이다.

[그림 15-3] 주요국가의 무역규모(1999)



수출입 구조

수출입 구조 변화는 보통 무역 대상국별로 거래규모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주로 거래되는 재화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파악하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세계 지역별 수출입은 <표 15-3>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거

〈표 15-3〉 수출입의 지역별 구조변화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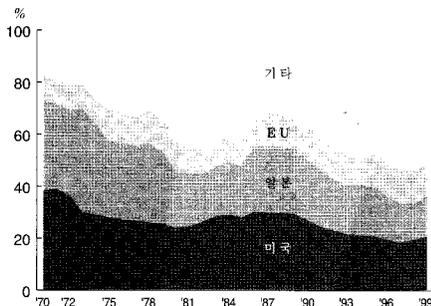
		1970	1980	1990	1999
수출	아시아	309 (37.0)	5,617 (32.1)	24,639 (37.9)	65,833 (45.8)
	-일본	236 (28.3)	3,039 (17.4)	12,638 (19.4)	15,862 (11.0)
	중 동	7 (0.8)	2,540 (14.5)	2,619 (4.0)	6,398 (4.5)
	유럽	76 (9.1)	3,131 (17.9)	12,034 (18.5)	26,091 (18.2)
	-EU	66 (7.9)	2,710 (15.5)	8,876 (13.7)	20,241 (14.1)
	북 미	415 (49.7)	4,950 (28.3)	21,091 (32.4)	31,113 (21.7)
	-미국	395 (47.3)	4,607 (26.3)	19,360 (29.8)	29,475 (20.5)
	중남미	4 (0.5)	492 (2.8)	2,104 (3.2)	8,644 (6.0)
	아프리카	17 (2.0)	416 (2.4)	915 (1.4)	2,347 (1.6)
	대양주	7 (0.8)	282 (1.6)	1,214 (1.9)	3,061 (2.1)
수출계		835 (100.0)	17,505 (100.0)	65,016 (100.0)	143,685 (100.0)
수입	아시아	1,016 (51.2)	7,852 (35.2)	28,515 (40.8)	50,439 (42.1)
	-일본	813 (41.0)	5,858 (26.3)	18,574 (26.6)	24,142 (20.2)
	중 동	113 (5.7)	5,762 (25.8)	6,188 (8.9)	14,696 (12.3)
	유럽	218 (11.0)	1,905 (8.5)	10,512 (15.1)	16,579 (13.8)
	-EU	209 (10.5)	1,614 (7.2)	8,421 (12.1)	12,629 (10.5)
	북 미	608 (30.6)	5,269 (23.6)	18,408 (26.4)	26,715 (22.3)
	-미국	585 (29.5)	4,890 (21.9)	16,942 (24.3)	24,922 (20.8)
	중남미	7 (0.4)	369 (1.7)	1,726 (2.5)	2,865 (2.4)
	아프리카	6 (0.3)	97 (0.4)	363 (0.5)	2,944 (2.5)
	대양주	17 (0.9)	781 (3.5)	3,201 (4.6)	5,486 (4.6)
수입계		1,984 (100.0)	22,292 (100.0)	69,844 (100.0)	119,752 (100.0)
무역수지	아시아	-707	-2,235	-3,876	15,394
	-일본	-577	-2,819	-5,936	-8,280
	중 동	-106	-3,222	-3,569	-8,298
	유럽	-142	1,226	1,522	9,512
	-EU	-143	1,096	455	7,612
	북 미	-193	-319	2,683	4,398
	-미국	-190	-283	2,418	4,553
	중남미	-3	123	378	5,779
	아프리카	11	319	552	-597
	대양주	-10	-499	-1,987	-2,425
계		-1,149	-4,787	-4,828	23,9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 호

의 대부분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수출입 모두에서 70%를 초과했는데, 1980~1990년 사이 50%내외 수준, 1999년 현재에는 3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미국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에 국교를 맺은 중국과의 무역이 눈부시게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일본, 중동 및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대양주를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는 주로 제조업의 부품 및 소재 등을 중심으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중동과의 적자는 석유수입에 따른 것이며, 대양주국가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는 광산물, 농산물을 중심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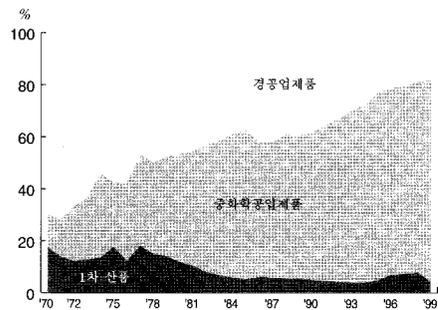
[그림 15-4] 주요 지역별 무역비중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 호

다음은 수출과 수입 상품의 장기 구조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수출구조는 크게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등으로 구성된 1차산품과 섬유류, 가발, 신발, 인형, 목제품, 타이어 등의 경공업제품 및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등의 중화학공업제품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되돌아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1970년대 경공업 제품 위주의 구조에서 1980년 초반에는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공업 제품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화학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15-5]에서 보듯 1차산품의 경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 18% 수준이었는데 1980년에 12% 수준으로, 그리고 1999년에는 4%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경공업 제품의 비중도 1970년에 70% 수준에서 1999년 현재 18% 수준까지 낮아졌다. 대신 중화학공업 제품

[그림 15-5] 수출구조의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 호

〈표 15-4〉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

1970			1980		
1	섬유류	341 (40.9)	1	의류	2,788 (15.9)
2	합판	92 (11.0)	2	철강판	717 (4.1)
3	가발	90 (10.8)	3	선박	610 (3.5)
4	철광석	49 (5.9)	4	인조장섬유직물	564 (3.2)
5	전자제품	29 (3.5)	5	음향기기	494 (2.8)
6	과자제품	20 (2.3)	6	타이어, 튜브	477 (2.7)
7	신발	17 (2.1)	7	목재류	477 (2.7)
8	연초 및 동제품	14 (1.6)	8	기타잡제품	449 (2.6)
9	철강제품	13 (1.6)	9	반도체	434 (2.5)
10	금속제품	12 (1.5)	10	영상기기	416 (2.4)
10대 상품 계		678 (81.1)	10대 상품 계		7,426 (42.4)
총수출		835(100.0)	총수출		17,505(100.0)
1990			1999		
1	의류	7,600 (11.7)	1	반도체	18,852 (13.1)
2	반도체	4,538 (7.0)	2	자동차	11,169 (7.8)
3	가죽신발	3,021 (4.6)	3	컴퓨터	10,306 (7.2)
4	선박	2,799 (4.3)	4	선박	7,489 (5.2)
5	영상기기	2,637 (4.1)	5	석유화학제품	7,017 (4.9)
6	철강판	2,446 (3.8)	6	무선통신기기	5,452 (3.8)
7	인조장섬유직물	2,343 (3.6)	7	의류	4,547 (3.2)
8	자동차	2,128 (3.3)	8	철강판	4,138 (2.9)
9	컴퓨터	1,984 (3.1)	9	인조장섬유직물	3,589 (2.5)
10	기능부품	1,912 (2.9)	10	전자관및부분품	3,094 (2.2)
10대 상품 계		31,408 (48.3)	10대 상품 계		75,653 (52.7)
총수출		65,016(100.0)	총수출		143,685(100.0)

주 : MTI(산업자원부무역코드) 3단위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1999
 한국무역협회, KOTIS

은 1970년에 13% 수준에서 1999년에는 77%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1970년에는 섬유, 합판, 가발 등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1980년에는 의류, 철강판,

선박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떠올랐다.

1990년에는 의류, 반도체, 가죽신발, 선박 등의 비중이 커졌으며 1999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표 15-5〉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

1970			1980		
1	일반기계	306 (15.4)	1	원유	5,633 (25.3)
2	곡물	245 (12.3)	2	곡류, 곡분	1,239 (5.6)
3	운반용기기	151 (7.6)	3	기타기계	941 (4.2)
4	전기기기	133 (6.7)	4	천연식물성원료	926 (4.2)
5	석유	133 (6.7)	5	목재류	898 (4.0)
6	섬유사	128 (6.5)	6	석유화학제품	880 (3.9)
7	목재	125 (6.3)	7	기호식품	674 (3.0)
8	섬유직물	120 (6.0)	8	철강판	544 (2.4)
9	철 및 강철	90 (4.5)	9	기타유류제품	451 (2.0)
10	금속광	50 (2.5)	10	선박	450 (2.0)
10대상품 계		1,481 (74.6)	10대상품 계		12,636 (56.7)
총수입		1,984(100.0)	총수입		22,292(100.0)
1990			1999		
1	원유	6,386 (9.1)	1	반도체	16,130 (13.5)
2	기타기계	5,234 (7.5)	2	원유	14,783 (12.3)
3	반도체	4,093 (5.9)	3	기타기계	4,506 (3.8)
4	석유화학제품	3,315 (4.7)	4	컴퓨터	3,892 (3.3)
5	축산물	1,971 (2.8)	5	귀금속	3,592 (3.0)
6	선재, 봉강(철근포함)	1,658 (2.4)	6	석유화학제품	3,520 (2.9)
7	곡류, 곡분	1,646 (2.4)	7	기타유기화학품	2,599 (2.2)
8	기타유기화학품	1,613 (2.3)	8	기타철강제품	2,169 (1.8)
9	목재류	1,594 (2.3)	9	LNG	1,973 (1.6)
10	천연식물성원료	1,508 (2.2)	10	석탄및코크스	1,966 (1.6)
10대상품 계		29,018 (41.5)	10대상품 계		55,130 (46.0)
총수입		69,844(100.0)	총수입		119,752(100.0)

주 : MTI(산업자원부무역코드) 3단위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1999
 한국무역협회, KOTIS

한편 수입의 경우는 원목, 원유, 광산물 등의 원자재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통신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본재 및 곡물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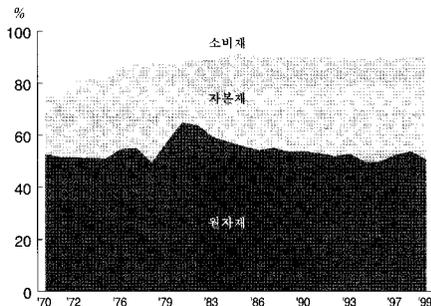
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입이 매우 많다. 원자재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0년에 53% 수준에서 1980년을 전후하여 원유가격의 급등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그 뒤에는

다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로 1999년 현재 51% 수준이다. 자본재의 경우 그 비중이 1970년에 23% 수준에서 1980년을 전후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그 뒤 계속 늘어나 1999년에는 40% 수준까지 높아졌다.

소비재의 비중은 1970년 24%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 9%대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연도별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1970년에는 기계류와 곡물, 석유, 섬유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80년에는 유가(油價)파동시기라서 원유의 수입이 총수입의 25%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곡물 및 곡분, 기타 기계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1990년에도 원유와 기타 기계의 비중이 높았으며, 반도체, 석유화학제품도 주요 수입품목으로 등장했다. 1999년에는 반도체, 원유, 기타 기계, 컴퓨터 귀금속 등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6] 재화별 수입 구조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 호

제3절 외환

환율의 의미와 결정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돈 즉, 통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돈은 원화이며, 미국의 돈은 달러화, 일본의 돈은 엔화 등으로 불리운다. 국가간 교역을 하려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 교환되는 두 통화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 한다.

환율은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환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해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단위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통 평가절하라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자국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를 평가절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율이 미국달러에 대해 기존의 1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이는 달러화에 대하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평가절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원화환율

우리나라는 [그림 15-7]에서 보듯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크게 5번에 걸쳐 환율제도를 변경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우선 1945년 10월부터 1달러당 0.015원(당시 15원(圓))의 고정환율을 결정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오다가 1964년 5월부터는 1달러당 255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바꾸었다.

이 기간에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바꾸는데 적용하는 고정환율과 민간외환의 환금에 적용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소위 복수환율제도와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단일통합환율제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단계적으로 상승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에도 미국달러 환율은 1969년 11월, 1971년 6월, 1974년 12월 및 1980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환율이 올랐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의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하지 못하고 고정됐다.

따라서 1980년 1월에 현실적인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대미환율을 484원에서 580원으로 인상하였고, 2월부터는 복수통화바스켓방식에 따라 환율이 실질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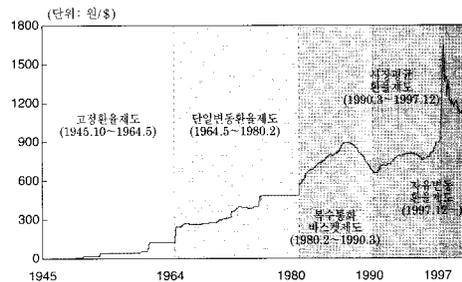
미국달러환율은 1980년 1월 580원에서

복수통화바스켓 방식

복수통화바스켓방식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바스켓에 의해 산출한 미국달러환율과 우리나라와 무역거래

가 많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 독자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한 대미환율을 결합한 뒤,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통화들에 대한 환율결정에 기준이 되는 집중기준율(集中基準率)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5-7] 환율제도의 변화와 대미환율의 장기변화(매매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인터넷 경제통계DB』

1985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져 892원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일방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1989년 4월 666원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복수통화바스켓방식에 따른 환율의 결정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의 무역가중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의 환율이 달러화나 엔화의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1990년 3월부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하는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간 거래환율의 일일변동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했다. 이러한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된 동안 미국달러환율은 외국인 주식투자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1995년 중 760원대를 기록하는 등 다소 하락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 들어 대기업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되고,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환율상승의 압력이 계속되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97년 12월을 전후해서는 140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으며, 급기야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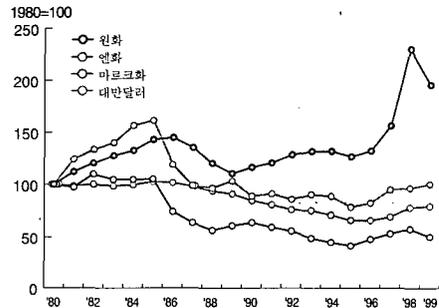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외환시장의 수급변화를 실제 환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부터 일일변동폭을 없애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동하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우리의 환율은 계속 낮아져 2000년 8월 1,100원 수준을 보였다가 11월부터 다시 올라 2000년 말 현재 1,200원 수준이다.

주요국의 환율변화

국가별 환율의 비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특정시점에서 달러당 각국 통화가 얼마인가 하는 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하는 변동폭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림 15-8]은 주요국의 대미달러환율을 1980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986년까지는

[그림 15-8] 미국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화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0

계속 상승했는데 그 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7년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1998년에는 1980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980년대 초반에는 미미한 상승을 하였으나 1985년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만 달러화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 폭이 일본엔화의 절반수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마르크화는 1980년대 초반에는 원화환율 이상으로 상승을 거듭하였으나 1986년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로 돌아섰으며, 1990년부터는 1980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원화가치는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보유액과 대외채권·채무

국제간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 또는 흑자를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 부족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서 국내경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에 자본을 빌려주는 자본거래에 의하여 국가간의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상수지의 적자가 장기간 지속된다던가 혹은 외국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갚지는 않고 빌리기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져서 더 이상 국제간 경제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거래상의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화자산이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에서도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와 통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국가의 대외적 신용이라는 단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수도 없이 접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수지표, 외환수급통계, 외채통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하여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능력이나 대외적인 채권 및 채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로는 외환보유액, 총외채 및 순외채 등을 들 수 있다.

외환보유액과 외채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외환시장의 개입이나 국제수지의 일시적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동향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데 적정한 규모의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대외채무에 대한 결제능력, 즉 국제유동성(國際流動性, international liquidity)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금(gold), IMF 특별인출권(SDR)과 포지션(reserve position in the IMF) 및 외환을 포함한다.

총외채는 한나라가 다른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인 대외채무(對外債務)로서 그 나라 정부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모든 채무를 말

한다. 외국으로부터 빌린 상업차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외자산은 외국으로부터 받을 자산으로서 해외에서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해외투자, 해외차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것을 순외채라고 한다. 총외채가 늘어나도 대외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순외채는 줄어들게 되므로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는 총외채보다는 순외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금, SDR 및 IMF포지션의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외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70년에 6억달러 수준에서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로

1990년에는 148억달러, 1999년에는 741억달러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외환보유액은 1970년에 국민총소득의 7.6%를 차지하였으나 1987년 2.7%까지 낮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는 5% 내지 6%대를 유지하였던 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4.3%로 떨어졌다가 그 뒤 수출증대와 수입감소에 따른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1999년 18.4%까지 높아졌다.

총외채는 소위 3저 시대인 1987~198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해 확대되어 왔으며, 대외자산도 큰 폭의 증대를 지속해 왔다. 순외채의 규모가 1970년 16억달러 수준에서 1985년에 355억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1987~1989년 기간동안의 경상수지 흑자로 상당한 규모의 외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표 15-6〉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

(단위 : 억달러, %)

	외환 보유액					총외채	대외 자산	순외채	외환보유액 국민총소득	순외채 국민총소득
	금	SDR	IMF 포지션	외환						
1970	6.1	0.0	0.1	0.1	5.8	22.5	6.8	15.7	7.6	19.6
1975	7.9	0.0	0.0	0.0	7.8	84.4	16.9	67.5	3.8	32.3
1980	29.6	0.3	0.1	0.0	29.1	271.7	75.4	196.3	4.9	32.2
1985	29.0	0.3	0.4	0.0	28.3	467.6	112.2	355.4	3.2	39.1
1990	148.2	0.3	0.1	3.2	144.6	317.0	253.3	63.7	5.9	2.5
1995	327.1	0.3	1.0	6.5	319.3	1,274.9	919.4	355.5	6.7	7.3
1996	340.7	0.4	1.2	6.8	332.4	1,634.9	1,097.2	537.7	6.6	10.4
1997	204.0	0.4	0.6	6.0	197.1	1,592.4	1,051.8	540.6	4.3	11.4
1998	520.4	0.7	0.1	0.0	519.6	1,487.1	1,285.3	201.8	16.6	6.4
1999	740.5	0.7	0.0	2.9	737.0	1,364.5	1,457.4	-92.9	18.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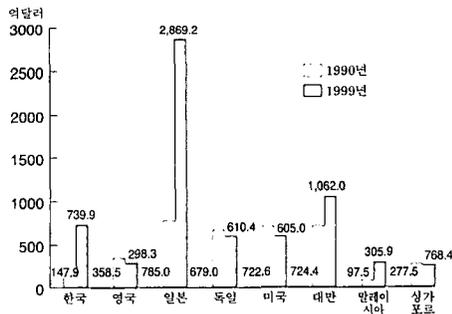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호

외화차입이 늘어나면서 1997년에 순외채가 541억달러까지 불어났고 급기야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대외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자산이 총외채를 초과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림 15-9]와 같이 199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보다도 적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일본과 대만보다는 적지만 미국, 독일, 영국 등을 능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불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를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후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있다.

[그림 15-9] 주요국가의 외환보유액
(금보유량 제외)



제4절 해외직접투자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

외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해외 직접투자는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투자하거나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기존의 외국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경을 초월해서 기업활동을 펼치는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이다.

해외 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기술, 판매기술, 경영기술 등 경영자원 전체가 이전하므로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적인 경영기법의 이전에 의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투자하는 것(FDI outflow)과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로 투자하는 것(FDI inflow)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해외 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 후자를 외국인 직접투자(FDI)라고 부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

자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기 차관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즉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계는 관련 법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주무관청의 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나 승인 혹은 허락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담당하는 관련부처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동향을 살펴 보자.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99년 현재까지 신고기준으로는 490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320억달러가 유입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차관 위주로 추진됐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그 실적도 미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투

〈표 15-7〉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억달러)		GNI에 대한 비율 (%)
	신고기준	도착기준	
1981	1.5	1.5	0.22
1985	5.3	2.4	0.26
1990	8.0	9.0	0.35
1995	19.5	13.6	0.28
1996	32.0	23.1	0.45
1997	69.7	30.9	0.65
1998	88.5	52.2	1.67
1999	155.4	104.8	2.61
1962~80	17.1	13.3	-
1981~90	61.6	45.4	-
1991~99	411.7	261.6	-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각 호

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진전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주지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으로부터 투자가 많이 유입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유럽지역으로부터의 투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대략 50%에 육박할 정도이다. 특히 네덜란

〈표 15-8〉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달러, %)

	1962~81		1982~90		1991~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제협력기구	0.3	1.9	0.7	1.7	1.1	0.4
미주지역	4.5	30.2	13.5	30.8	66.8	25.5
미국	3.8	25.5	13.0	29.7	56.3	21.5
아주지역	8.5	57.2	22.4	51.1	69.8	26.7
일본	8.1	55.1	20.6	47.0	29.7	11.4
홍콩	0.3	2.0	1.4	3.1	2.9	1.1
싱가포르	0.0	0.0	0.3	0.7	7.6	2.9
말레이시아	0.0	0.0	0.0	0.0	28.3	10.8
유럽지역	1.3	8.7	7.0	16.0	123.5	47.2
독일	0.3	2.0	1.9	4.3	21.7	8.3
영국	0.3	2.0	1.1	2.4	9.0	3.4
프랑스	0.2	1.1	0.8	1.8	15.3	5.9
네덜란드	0.3	1.9	1.2	2.6	56.5	21.6
중동지역	0.3	2.0	0.1	0.3	0.3	0.1
기타지역	0.0	0.0	0.0	0.0	0.0	0.0
계	14.8	100.0	43.9	100.0	261.6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각 호

드의 비중이 22% 수준으로 증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주지역의 비중은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일본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에도 5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 화학, 전자 전기, 기계 및 운송기계 등 중화학공업에서 전체 외국인 투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금융 보험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9〉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달러, %)

	1962~81		1982~90		1991~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0.1	0.9	0.2	0.4	2.9	1.1
제조업	10.5	71.2	27.7	63.1	151.0	57.7
식료품	0.4	2.6	2.0	4.5	15.9	6.1
섬류·의류	1.1	7.4	0.6	1.4	2.4	0.9
제지·목재	0.1	0.4	0.4	0.9	11.2	4.3
석유·화학	4.2	28.6	5.4	12.3	38.0	14.5
기계	0.8	5.2	2.8	6.4	16.9	6.5
전기·전자	2.0	13.2	7.7	17.5	36.5	13.9
운송기계	0.6	3.9	5.6	12.8	14.2	5.4
기타제조업	1.4	9.8	3.2	7.3	16.0	6.1
서비스업	4.1	27.9	16.0	36.5	107.6	41.1
도소매업	0.0	0.0	0.2	0.5	17.3	6.6
무역업	0.0	0.0	0.6	1.3	10.4	4.0
금융·보험	1.1	7.6	4.6	10.5	40.8	15.6
기타서비스업	3.0	20.2	10.6	24.2	39.1	14.9
계	14.8	100.0	43.9	100.0	261.6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각 호

해외 직접투자

해외 직접투자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신고,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를 통해서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196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는 1999년 현재까지 총신고 기준으로 13,049건에 496억원, 총투자기

준으로는 10,287건에 258억달러가 실행되었다. 1999년 현재 잔액으로 9,414건에 224억달러의 규모가 남아있다. 이러한 규모 중 대부분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총투자의 금액을 기준해서 볼 때 1990년대의 투자규모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1999년 말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최근 상당한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이 건수면에서는 6,618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금액면에서는 약 100억달러로 전체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10〉 해외직접투자

(단위 : 건, 억달러)

	총신고		총투자		투자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1	64	1.1	49	0.3	315	1.5
1985	43	2.2	38	1.1	433	4.6
1990	515	16.1	341	9.6	1,227	23.0
1995	1,569	49.5	1,309	30.7	5,355	102.3
1996	1,809	62.9	1,452	42.5	6,727	138.3
1997	1,600	58.3	1,299	32.3	7,935	168.2
1998	702	51.3	583	38.9	8,455	202.9
1999	1,220	44.3	1,023	25.5	9,414	224.4
1968~80	400	2.5	352	1.5	315	1.5
1981~90	1,591	43.6	1,160	27.4	1,227	23.0
1991~99	1,1058	349.7	8,775	228.9	9,414	224.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각 호

그 다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으로 건수에서는 전체의 16% 정도지만 금액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상당수 실행되고 있다.

〈표 15-1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잔액 (1999년 말)

	건수		금액	
	건	비중	억달러	비중
아시아	6,618	70.3	99.8	44.5
중국	4,188	44.5	41.4	18.4
인도네시아	354	3.8	13.9	6.2
홍콩	304	3.2	8.6	3.8
북미	1,529	16.2	66.7	29.7
미국	1,450	15.4	63.4	28.3
유럽	485	5.2	33.3	14.8
영국	76	0.8	8.2	3.7
독일	94	1.0	4.7	2.1
중남미	328	3.5	11.7	5.2
대양주	327	3.5	6.2	2.8
아프리카	86	0.9	4.6	2.1
중동	41	0.4	2.0	0.9
계	9,414	100.0	224.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연보』, 2000

해외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1차산업인 임업, 수산업 및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에서는 3%, 금액으로는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건수에서는 66%, 금액면에서는 52% 정도이며, 서비스업은 각각 31%와 42%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절반 이상이 제조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조립의 비중이 매우 높고, 섬유 의복과 1차금속에도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역업이 규모면에서 전체의

〈표 15-1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잔액현황
(1999년말)

	건수		금액	
	건	비중	억달러	비중
임수관광업	283	3.0	15.0	6.7
제조업	6,238	66.3	115.6	51.5
음식료품	399	4.2	4.7	2.1
섬유·의복	1,329	14.1	12.7	5.6
신발·가죽	467	5.0	3.8	1.7
목재·가구	241	2.6	1.9	0.8
종이·인쇄	119	1.3	1.8	0.8
석유화학	497	5.3	9.2	4.1
비금속광물	210	2.2	3.6	1.6
1차금속	217	2.3	10.0	4.4
기계장비	302	3.2	4.8	2.1
조립금속	1,159	12.3	52.3	23.3
기타제조	1,298	13.8	10.9	4.8
건설업	209	2.2	5.0	2.2
운수·보관업	212	2.3	2.4	1.1
무역업	1,208	12.8	54.8	24.4
기타	1,264	13.4	31.6	14.1
계	9,414	100.0	224.4	100.0

24%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2000

제 16 장 고용·임금

‘근로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끼리 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을 쓰기 원하는 기업에게는 사람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고용과 실업에 관련된 통계들이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취업통계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규모를 알려주는 실업통계,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에 관한 노동이동 통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몇 시간을 일하고 또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임금 및 노동시간 통계, 일자리를 갖고 일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능률적으

로 일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통계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들 분야와 관련된 통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왔다. 이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이나 외국 사례 등에 맞춰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관련된 통계들이 다양하게 작성되어 왔다. 고용과 실업에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에서, 노동이동과 임금 및 노동시간 등에 관련된 통계는 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제1절 고용과 실업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적으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과 실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이는 전 세계의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표 16-1〉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¹⁾			실업률 ²⁾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0	24,463	11,804	12,659	14,431	9,019	5,412	13,683	8,461	5,222	748	558	190	59.0	76.4	42.8	5.2	6.2	3.5
1985	27,553	13,295	14,258	15,592	9,617	5,975	14,970	9,137	5,833	622	480	141	56.6	72.3	41.9	4.0	5.0	2.4
1990	30,887	14,907	15,980	18,539	11,030	7,509	18,085	10,709	7,376	454	321	133	60.0	74.0	47.0	2.4	2.9	1.8
1991	31,538	15,233	16,306	19,115	11,405	7,710	18,677	11,116	7,561	438	289	149	60.6	74.9	47.3	2.3	2.5	1.9
1992	32,023	15,452	16,571	19,499	11,669	7,830	19,033	11,363	7,669	466	306	161	60.9	75.5	47.3	2.4	2.6	2.1
1993	32,528	15,698	16,830	19,879	11,931	7,949	19,328	11,554	7,774	551	376	175	61.1	76.0	47.2	2.8	3.2	2.2
1994	33,056	15,956	17,099	20,396	12,198	8,198	19,905	11,863	8,043	490	335	155	61.7	76.4	47.9	2.4	2.7	1.9
1995	33,664	16,280	17,384	20,853	12,456	8,397	20,432	12,176	8,256	420	280	140	61.9	76.5	48.3	2.0	2.2	1.7
1996	34,285	16,611	17,674	21,243	12,636	8,607	20,817	12,345	8,472	426	291	135	62.0	76.1	48.7	2.0	2.3	1.6
1997	34,842	16,887	17,955	21,662	12,772	8,891	21,106	12,420	8,686	556	352	204	62.2	75.6	49.5	2.6	2.8	2.3
1998	35,362	17,150	18,212	21,456	12,893	8,562	19,994	11,910	8,084	1,461	983	478	60.7	75.2	47.0	6.8	7.6	5.6
1999	35,765	17,331	18,434	21,634	12,889	8,745	20,281	11,978	8,303	1,353	911	442	60.5	74.4	47.4	6.3	7.1	5.1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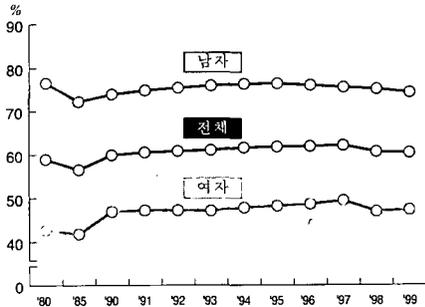
있다. 고용과 실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이다. 이는 한 나라가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노동력의 규모를 나타낸다.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만 15세 또는 만 16세 이상인구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이다. 이는 한 사회가 실제 생산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로 구분된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경제

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동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16-1>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추이를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에 2,163만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1,289만명, 여성이 87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남자가 74.4%, 여자가 47.4%로 남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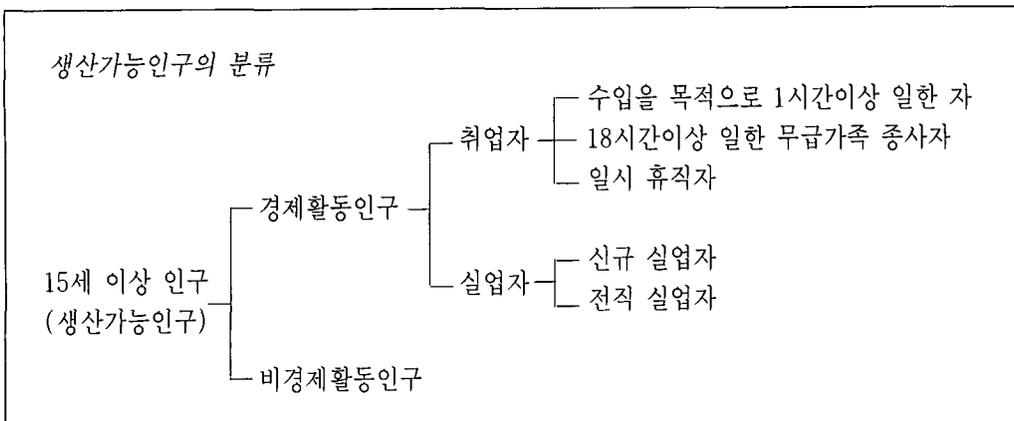
[그림 16-1] 경제활동참가율



27%포인트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는데, 이것도 그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회전통 때문에 여자의 경제·사회생활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었다. 이런 영향을 받아 196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1973년 41.5%로 처음 40%대를 넘어섰고, 1987년에는 45%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5%로

높아져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노동력으로 인식되던 여성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으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과 1999년에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주로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995년 61.9%, 1996년 62.0%, 1997년 62.2%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1998년 60.7%로 떨어졌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75.6%에서 1998년 75.2%로 0.4% 포인트가 낮아진 반면, 여자의 경우 1997년 49.5%에서 47.0%로 무려 2.5% 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여성이 주변적 노동력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것을 반영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가 그렇다. 스웨덴의 경우 1998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79.0%인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3.9% 이르고 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동안 70%대 이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최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995년 76.5%를 기록한 뒤, 1996년 76.1%, 1997년 75.6%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

취업자 추이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 같은 취업자 분류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다. 특히 일주일에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취업자로 볼 수 있는냐는 점이 많이 거론된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으로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한 이유를 살펴보자. 국제노동기구의 취업자 정의는 취업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취업자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는 것은 조사대상기간이 보통 일주일이고, 근로시간의 최소시간이 한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지, 한

시간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봐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자의적으로 시간을 달리 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통계작성이 곤란해지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승계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업에 의존해 오던 경제구조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 온 것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 16-2>에서 보듯 1980년대 초반 해도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체의 30%를 웃돌았으나, 1983년에 29.7%로 떨어진 뒤 6년이 지난 1989년부터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1999년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1.6%다. 광공업 취업자는 1980년 22.5%에서 1985년 24.4%, 1990년 27.6%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1999년에는 19.9%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80년 43.5%였던 것이 1999년에는 68.6%로 높아졌다.

이같은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는 곧

〈표 16- 2〉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1980	13,683	4,654	3,079	2,955	5,951	843	2,625	995	1,489
1985	14,970	3,733	3,659	3,504	7,578	911	3,377	1,305	1,984
1990	18,085	3,237	4,990	4,911	9,858	1,346	3,935	1,938	2,639
1991	18,677	3,057	5,092	5,026	10,528	1,556	4,103	2,080	2,790
1992	19,033	2,998	4,923	4,860	11,111	1,663	4,433	1,641	3,374
1993	19,328	2,849	4,730	4,677	11,750	1,689	4,852	1,714	3,496
1994	19,905	2,731	4,754	4,714	12,420	1,781	5,207	1,763	3,671
1995	20,432	2,534	4,824	4,797	13,074	1,905	5,378	1,859	3,933
1996	20,817	2,429	4,715	4,692	13,673	1,971	5,643	1,927	4,132
1997	21,106	2,385	4,508	4,482	14,213	2,004	5,805	2,000	4,404
1998	19,994	2,480	3,919	3,898	13,595	1,578	5,571	1,992	4,453
1999	20,281	2,349	4,026	4,006	13,906	1,476	5,724	1,986	4,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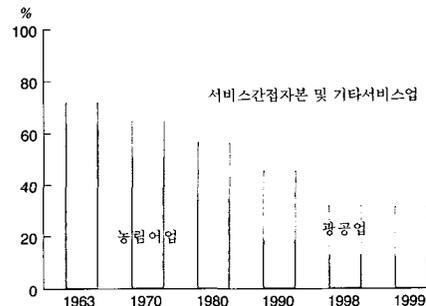
주 : 도소매음식숙박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가사서비스업+국제 및 기타의국기관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바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제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광공업의 종사자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의 소프트화, 즉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광공업 분야의 종사자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업 부문의 종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광공업 종사자는 1994년 0.5%, 1995년 1.5%의 증가율을 보

였다가 1996년 (-2.3%), 1997년 (-4.4%)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급기야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까지 받아 마이너스 13.1%라는 기록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그림 16-2]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표 16-3〉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차,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1993	524	2,379	2,419	4,041	2,561	2,813	2,466	2,215
1994	531	2,538	2,436	4,298	2,578	2,728	2,562	2,234
1995	524	2,813	2,520	4,485	2,382	3,227	2,187	2,296
1996	547	2,982	2,568	4,688	2,319	3,230	2,179	2,305
1997	526	3,161	2,572	4,868	2,273	3,160	2,184	2,362
1998	511	3,224	2,418	4,736	2,364	2,540	2,093	2,108
1999	480	3,383	2,219	4,819	2,217	2,600	2,116	2,446

주 : 1) 직종분류의 변경으로 1993년 이전과 이후는 시계열이 단절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1994년 5.7%, 1995년 5.3%, 1996년 4.6%, 1997년 3.9%로 꾸준히 늘어 왔다. 1999년에는 광공업이 전년도 급격한 위축에 대한 반작용으로 2.7%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율 2.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앞으로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행될수록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 취업자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 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 16-3>에서 1999년 현재 가장 비율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로 전체의 23.8%에 이른다. 이 직종의 비율은 199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밖에 1993~1999년 사이에 꾸준히 근로자가 늘어난 직종은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12.3%→16.7%)이다. 계속해서 비율이 감소한 대표적인 직종은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로 1993년 13.3%에서 1999년 10.9%로 줄어들었다. 이 또한 농업·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 즉 육체 노동 중심에서 지적 노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도 여기에 반영된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와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지적 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취업자 추이를 보여주는 <표 16-4>에서는 1995년까지 비임금근로자는 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1980년

47.2%였던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5년 54.1%, 1990년 60.5%로 높아져 왔으며, 1996년에는 62.8%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농민의 비중이 큰 농림어업의 상대적 위축,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임금근로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들어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 추세가 바뀌었다. 1996년 62.8%에서 1997년 62.7%, 1998년 61.0%로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기업들이 감량경영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이탈된 근로자들이 자영업업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들면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1999년 사이 줄어든 임금근로자

〈표 16-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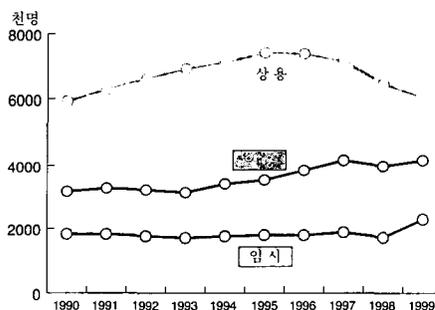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980	7,220	4,651	2,569	6,464	5,164	1,300
1985	6,866	4,679	2,187	8,104	6,714	1,390
1990	7,135	5,068	2,067	10,950	5,938	3,171
1991	7,272	5,236	2,036	11,405	6,294	3,275
1992	7,414	5,421	1,993	11,618	6,617	3,223
1993	7,534	5,451	2,084	11,794	6,929	3,139
1994	7,580	5,542	2,037	12,325	7,131	3,421
1995	7,649	5,694	1,955	12,784	7,429	3,545
1996	7,752	5,811	1,941	13,065	7,401	3,860
1997	7,880	5,981	1,899	13,226	7,151	4,182
1998	7,804	5,776	2,028	12,191	6,457	3,998
1999	7,759	5,841	1,918	12,522	6,050	4,1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중에서도 상용 근로자, 즉 기업과 장기적인 임금근로관계를 맺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기업과 단기적인 임금·근로관계를 맺고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오히려 3%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용 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 근로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한 직장에 들어가면 계속 그 직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으면 그 곳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계약직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6-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실업자의 추이

다음은 실업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자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많고 실업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 실업은 실업자 개인의 생활고라는 측면 외에도 귀중한 노동자원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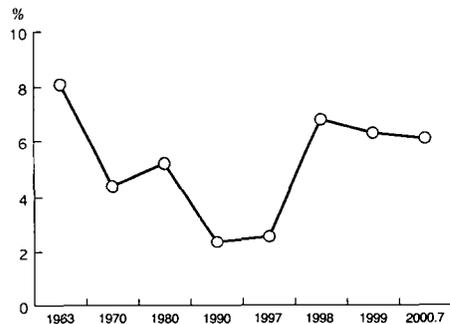
실업의 통계적 정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조사기간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실업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 역시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업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실업자 숫자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많이 활용된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이는 한 사회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가운데 얼마나 활용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실업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즉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실업 문제는 점차 개선되었다. 1963년 8.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1968년 5.0%를 기록한 뒤, 4%대를 유지해 왔으며,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3~4% 정도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업부문에 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유휴노동력이 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인력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실업률은 2%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1988년 실업률이 2.5%를 기록한 이후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다.

[그림 16-4] 실업률 추이



이처럼 2%대의 실업률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고용', 즉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대의 실업률이 10여년 지속한 것은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등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 일부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 상황도 큰 변화를 겪었다.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

〈표 16-5〉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80	748(5.2)	159(13.3)	203(10.3)	107(5.8)	136(3.8)	95(2.9)	45(2.5)	4(0.6)
1985	622(4.0)	79(11.1)	180(9.6)	130(5.2)	116(2.8)	80(2.3)	34(1.6)	3(0.3)
1990	454(2.4)	59(9.2)	126(6.3)	105(3.9)	83(1.6)	48(1.2)	30(1.1)	5(0.4)
1991	438(2.3)	59(9.2)	143(6.8)	92(3.4)	68(1.3)	46(1.2)	25(0.8)	4(0.3)
1992	466(2.4)	61(10.3)	149(7.0)	103(3.9)	80(1.4)	44(1.1)	25(0.8)	5(0.3)
1993	551(2.8)	57(11.1)	186(8.5)	123(4.5)	107(1.8)	48(1.2)	27(0.9)	5(0.3)
1994	490(2.4)	45(9.4)	151(6.8)	116(4.2)	97(1.6)	51(1.3)	23(0.8)	5(0.3)
1995	420(2.0)	36(8.1)	130(5.9)	86(3.0)	84(1.3)	49(1.1)	28(0.9)	7(0.4)
1996	426(2.0)	32(7.5)	126(5.9)	97(3.4)	86(1.4)	51(1.1)	27(0.9)	7(0.4)
1997	556(2.6)	42(9.9)	149(7.2)	122(4.1)	114(1.9)	73(1.5)	40(1.3)	15(0.7)
1998	1,461(6.8)	86(20.9)	258(14.8)	268(9.3)	359(5.7)	281(5.5)	162(5.2)	47(2.4)
1999	1,353(6.3)	85(19.7)	216(12.8)	236(8.5)	328(5.3)	276(5.2)	162(5.2)	49(2.4)

주 : ()안은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행되면서 실업률과 실업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7년 10월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43만1천명과 2.1%였는데 1997년 11월 57만3천명과 2.8%, 1997년 12월 65만7천명과 3.1%, 1998년 1월 93만3천명과 4.5%로 급속하게 높아졌다. 1998년 2월에는 실업자가 123만2천명으로 100만명 대를 넘어섰고, 실업률도 5.9%를 기록했다. 그 뒤에도 실업자와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1999년 2월에는 실업자 178만1천명, 실업률 8.6%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실업자와 실업률이 각각 200만명, 9%에 육박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당시 외환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1998년 말부터 외

환위기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도 빠르게 낮아지기 시작해 1999년 11월에는 실업자가 97만1천명으로 근 1년 10개월에 100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특히 외환위기 과정에서 청년층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계속 찾는 과정이라서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표 16-5>에서 보듯 1998년에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무려 20.9%,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14.8%나 됐다. 1999년에도 각각 19.7%와 12.8%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급속히 높아졌다가 다시 빠르게 낮아지는 것은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우리나라가 얼마

나 취약한 구조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과잉, 중복투자는 그에 따른 과잉 인력 문제도 갖고 있었는데 외환위기에 따라 과잉,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량 실업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실업사태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출구를 찾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와 인터넷이 새로운 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이 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흡수되었다. 그럼에도 대량 실업사태 속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급속한 고도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90년대 초반, 중반과 같은 저실업 상황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이미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빠른 경제 성장이 어렵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는 능력 또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도 육체 노동에 주로 의존하던 구조에서 지적 노동과 창조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많은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동화가 생산과정을 지배하고 사람은 주로 지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월별 통계의 경우 그 달에 포함된 계절적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효과만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졸업시즌에 높아진다. 이는 학생들은 일시에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만, 정작 기업은 일시에 사람을 뽑기보다 나누어 뽑기 때문이다. 이러한 졸업시즌과 같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 계열의 수치에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치를 원 계열 수치와 함께 발표한다. 따라서 실업률과 같이 월간 또는 분기별 통계의 경우 원 계열의 수치와 계절조정치를 같이 참고하면서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

제2절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추이

노동이동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옮겨 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통계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등 사업체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 그 사람의 잠재적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든 자신의 자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자

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근로자들과 기업 모두 어떤 일자리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보다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직장을 찾아 직장을 옮기면서 노동이동이 생기는 것이다.

또 최근과 같이 제조업보다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기업 밖으로 배출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노동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이동 현황은 노동이동률을 통해 알 수 있다.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로 구분된다. 우선 입직률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를 나타내며, 당월 입직근로자수/전월말 근로자수로 계산한다. 반대로 이직률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를 나타내며, 당월 이직자수/전월말 근로자수로 산출한다. <표 16-6>에서 입직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입직률은 1999년 현재 2.64%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산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1999년 현재 2.65%다. 입직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1980년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입직률은 4.40%, 제조업에선 4.90%의 입직률을 나타냈다. 이직률도 입직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계속 낮아져 왔다. 1999년 현재 이직률은 농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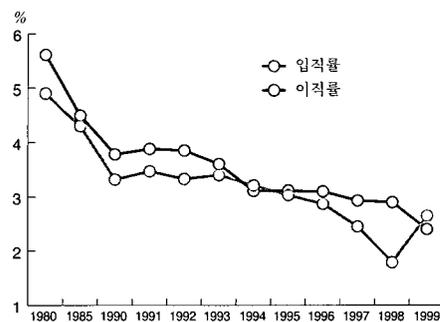
<표 16-6> 노동이동률

(단위 : %, %p)

	전산업			제조업		
	초과 입직률	입직률	이직률	초과 입직률	입직률	이직률
1980	-0.40	4.40	4.80	-0.70	4.90	5.60
1985	-0.20	3.70	3.90	-0.20	4.30	4.50
1990	-0.21	2.99	3.20	-0.46	3.32	3.78
1991	-0.16	3.09	3.25	-0.41	3.47	3.88
1992	-0.26	2.98	3.24	-0.52	3.33	3.85
1993	-0.13	3.01	3.14	-0.20	3.40	3.60
1994	0.05	2.90	2.85	0.10	3.21	3.11
1995	-0.02	2.84	2.86	-0.08	3.03	3.11
1996	-0.09	2.77	2.86	-0.23	2.87	3.10
1997	-0.33	2.32	2.65	-0.48	2.45	2.93
1998	-0.90	1.78	2.68	-1.11	1.79	2.90
1999	0.21	2.64	2.43	0.25	2.65	2.40

주 :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입직률 = 당월 입직자수/전월말 근로자수×100
 3) 이직률 = 당월 이직자수/전월말 근로자수×100
 4) 초과입직률 = 입직률 - 이직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16-5] 노동이동률(제조업)



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이 2.43%, 제조업이 2.40%이며, 이는 1980년의 이직률 4.80%, 5.60%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는 최근에 노동이동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

라의 노동이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크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와 일자리와의 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불필요한 노동이동이 발생하면서 조직이 동요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한다.

인력부족률 추이

근로자와 일자리의 불일치 현상은 인력 부족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은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기피하거나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 자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제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해 인력부족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할 사람에 대한 필요성도 줄어들어 인력부족률이 낮아진다. 1997년까지 인력부족

률은 2~4%를 유지해 왔는데,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0.65%로 낮아져 처음으로 1% 아래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과거보다 줄어든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현재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너무 나빠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부족률을 낮춰 가야 한다. 1998년이나 1999년과 같이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됨으로써 인력부족률이 낮아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 보면 현재 인력부족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6-7>에서 10인에서 30인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보다 인력부족률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표 16-7>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단위 : %)

	전규모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1985	1.75	1.50	1.97	2.40	1.60	1.30
1990	4.34	7.98	5.08	4.70	3.33	1.78
1995	3.71	5.82	3.97	4.23	2.17	1.38
1996	2.98	4.25	3.45	3.15	1.72	1.49
1997	2.44	3.67	2.91	2.66	1.41	0.83
1998	0.65	1.16	0.75	0.67	0.32	0.06
1999	0.97	1.80	1.02	0.89	0.53	0.14

주 : 1)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며, 각년도 3월말 기준.

2) 총부족률 = 총부족근로자수/현재근로자수×100
자료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각 호

있다. 즉 1990년에 10~3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이 7.98%인데 비해 30인 이상의 인력부족률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1.78%에서 5.08%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와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8년 3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16%인데 비해 5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는 0.06%에 불과했다. 이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나쁜 근로조건을 일자리를 기피함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인력 부족 현상을 일자리의 종류, 즉 직종별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론에 다다른

<표 16-8> 직종별 인력수요

(단위 : 명, %)

	1998			1999		
	현 원	부족 인원	부족 률	현 원	부족 인원	부족 률
전직종	4,892,192	32,007	0.65	4,869,762	47,461	0.97
전문·기술직	1,303,780	4,370	0.34	1,488,474	8,270	0.55
사무관련직	1,176,005	4,188	0.36	1,060,983	6,241	0.58
판매·서비스직	188,580	822	0.44	232,989	1,699	0.72
생산관련직	1,874,455	19,546	1.04	1,716,261	28,099	1.63
단순노무직	349,372	3,081	0.88	371,054	3,150	0.84

주 : 1)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각년 3월말 기준

2) 부족률 = 총부족근로자수 / 현재근로자수 × 100

3) 생산관련직은 직종대분류상의 7.8직종의 근로자를 말함.

자료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각 호

다. <표 16-8>을 통해 직종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생산관련직이다. 즉 1999년 현재 직종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생산관련직의 부족률이 1.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0.84%, 판매 서비스직 0.72%의 순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생산관련직, 단순노무직의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은 이들 분야에서는 사람이 계속 필요한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앞으로 이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해당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구인배율 추이

다음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직업안정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자. 직업안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안정 활동은 노동부의 노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의 직업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안정기관과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표 16-9>에서 직업안정 활동의 전체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구직자)보다는 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경우(구인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어 1995년의 경우 구

직자는 대략 11만6천명인데 구인자는 약 19만6천명으로 구인자 숫자를 구직자 숫자로 나눈 구인배율이 1.69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인배율은 기업이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구인배율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의 경우 구인배율은 이전보다 크게 낮은 0.19배에 불과했고, 1999년에도 0.31배에 머물렀다. 이는 1998년에는 하나의 일자리에 다섯 명 이상이, 1999년에는 하나의 일자리에 세 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원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6-9〉 직업안정 지표

(단위: 명, 배, %)

	구인자수	구직자수	취업 자수	구인 배율	취업률
1993	206,109	191,501	26,221	1.08	13.7
1994	232,337	152,261	29,068	1.53	19.1
1995	196,319	116,147	20,938	1.69	18.0
1996	215,925	150,668	20,939	1.43	13.9
1997	245,223	243,467	36,425	1.01	15.0
1998	410,005	2,130,687	157,442	0.19	7.4
1999	1,140,167	3,620,198	485,457	0.31	13.4

자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각 호

그러나 구인배율은 단순히 전체 일자리 대비 몇 명이 지원하는가를 나타낼 뿐이며, 얼마나 사람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는가를 보려면 취업률을 따져 보아야 한다. 취업률은 구직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로서 일자리와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들어맞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취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20% 미만으로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1994년의 경우에도 19.1%에 그쳤다. 특히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면서 취업률도 크게 떨어져 1998년에 7.4%를 기록했다. 1999년에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취업률도 다시 10%대(13.4%)로 회복됐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구직자의 적성이 잘 맞지 않은 점도 있지만 직업안정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노동자원의 낭비를 막고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면 이러한 직업안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3절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 추이

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은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수입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활동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된다. 근로자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다 높은 임금을 원하고 기업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낮

추려고 한다. 물론 임금이 갖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전체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 그 중의 일부를 상품을 사는데 지출하기 때문에 임금이 많아지면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의 소비 시장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다.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근로시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유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비해 기업은 근로시간을 늘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 거꾸로 지나치게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경제 전체,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기업 혹은 한 산업 차원에서는 항상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점차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도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임금의 변화는 임금상승 지표로 살펴 볼 수 있다. 임금상승률은 임금 총액의 변화 자체를 나타내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상승률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상승률은 80년대와 90년대 대부분의 시기에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왔다. 예를 들어 1989년에 명목임금상승률은 21.2%를 나타냈으며, 1996년까지도 명목임금상승률은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이처럼 명목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비교적 높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목임금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에 보조를 맞춰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7.0%로 낮아졌다가, 1998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2.5%를 나타내 명목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명목임금상승률의 하락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는 곳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상승률 보다는 실질임금상승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 즉 명목임금이 아무리 많이 인상되어도 소비자물가가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 즉 실질임금은 오히려 적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6-10>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상승률은 그 동안의 높은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8~9%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특히 1989년 14.5%, 1990년 9.5%, 1992년 8.4% 등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실질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1987년 6·29선언을 즈음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억눌려 왔던 임금인상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정체를 보이고, 노동조합 운동도 수그러들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은 6%대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은 급속하게 하락해 1997년 2.4%를 나타냈으며, 1998년에는 9.3%의 하락을 나타냈다. 실질임금상승률이 이처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제2차 오일쇼크에 따라 일어난 1980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 하락폭은 1980년 경제위기 때의 마이너스 4.2%보다 더 큰 것이었다.

최저임금도 근로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부가

<표 16-10>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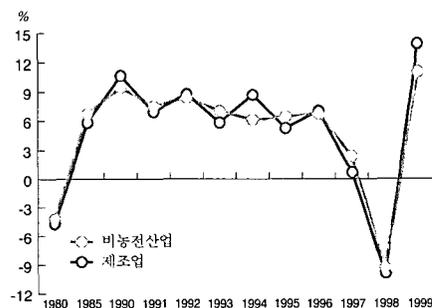
	비농전산업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1980	23.4	-4.2	22.7	-4.7
1985	9.2	6.7	9.9	5.8
1990	18.8	9.5	20.2	10.7
1991	17.5	7.5	16.9	6.9
1992	15.2	8.4	15.7	8.8
1993	12.2	7.0	10.9	5.8
1994	12.7	6.1	15.5	8.7
1995	11.2	6.4	9.9	5.2
1996	11.9	6.7	12.2	7.0
1997	7.0	2.4	5.2	0.7
1998	-2.5	-9.3	-3.1	-9.9
1999	12.1	11.1	14.9	13.9

주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1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그림 16-6] 임금상승률(실질)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나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표 16-11>에서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1988년 11만1천원~11만7천원에서 출발하여 10% 안팎의 증가율로 계속 높아져왔다. 2000년 현재는 한달 22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36만1천6백원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 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영향을 살펴보자. 영향률은 1988년 4.2%에서 출발, 한때 10% 안팎까지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2%대의 영향률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

<표 16-11> 최저임금

단위 : 시간, 원)

적용기간	기준시간	최저임금(月)
1988		111,000~117,000
1989	240	144,000
1990	240	165,000
1991	235	197,700
1992	226	209,050
1993	226	227,130
1994.1~1994.8	226	245,210
1994.9~1995.8	226	264,420
1995.9~1996.8	226	288,150
1996.9~1997.8	226	316,400
1997.9~1998.8	226	335,610
1998.9~1999.8	226	344,650
1999.9~2000.8	226	361,600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용대상 근로자 중에서 1%에 머물러 미미한 수치로 보일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근로시간 추이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는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사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월평균 노동시간이 과거 220시간을 넘을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주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1980년대말까지 50시간이 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노동시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근로시간은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 성향 때문에 다소 기복은 있지만,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1990년대 들어 월평균 노동시간은 200시간대로 줄었다. 주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989년부터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50시간 이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월간으로는 208.1시간, 주간으로는 47.9시간이다.

<표 16-12>는 근로시간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현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정상근로시간이 월간 183.3시간, 정상근로시

〈표 16-12〉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월)

	전산업 ¹⁾			제조업		
	전체	정상	초과	전체	정상	초과
1980	223.9	195.3	28.6	230.6	197.9	32.7
1985	225.5	192.7	32.8	233.5	194.9	38.5
1990	209.5	181.4	28.1	216.2	181.8	34.4
1991	208.2	181.3	26.9	214.0	180.5	33.5
1992	206.5	180.5	26.1	211.6	179.3	32.3
1993	206.4	181.3	25.1	212.2	180.8	31.4
1994	205.9	180.8	25.0	211.7	180.5	31.2
1995	207.0	181.0	26.0	213.7	180.6	33.1
1996	205.6	180.9	24.6	210.1	179.5	30.5
1997	203.0	179.6	23.4	207.6	178.3	28.8
1998	199.2	179.1	20.1	200.0	176.2	23.8
1999	208.1	183.3	24.8	217.3	182.0	35.2

주 : 1) 농림어업 제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간 이상으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초과 근로시간이 24.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1980년대 말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정상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초과근로시간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많아진 일거리를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초과근로시간이 경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두드러진다.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불황을 겪었던 1993, 1994년 31시간대를 나타내다가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돌아선 1995년에 33시간대로 많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과 1998년에 초과근로시간이

〈표 16-13〉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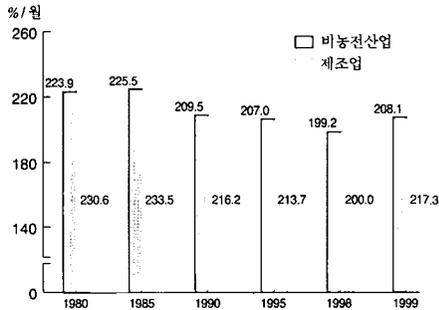
(단위 : 시간/월)

	전산업 ¹⁾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980	223.9	182.3	230.6	211.0	219.0	219.4	218.9	197.3	204.8
1985	225.5	179.7	233.5	217.2	212.6	217.0	230.9	198.7	202.5
1990	209.5	157.4	216.2	207.5	198.7	206.4	212.4	189.2	193.1
1991	208.2	171.4	214.0	210.9	198.1	207.5	211.7	191.9	193.5
1992	206.5	171.4	211.6	213.5	199.8	206.4	209.6	192.7	194.4
1993	206.4	176.8	212.2	208.6	202.2	202.1	204.9	198.0	194.2
1994	205.9	181.6	211.7	207.3	199.0	202.2	204.1	199.5	191.9
1995	207.0	190.5	213.7	212.4	198.9	201.0	207.0	198.0	192.9
1996	205.6	190.4	210.1	216.0	195.5	197.7	214.0	200.5	193.2
1997	203.0	190.8	207.6	213.5	193.4	195.0	210.0	199.5	192.2
1998	199.2	190.1	200.0	212.6	192.4	194.0	200.3	200.7	192.2
1999	208.1	192.7	217.3	211.5	195.8	198.8	217.0	197.6	196.4

주 : 1) 농림어업 제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16-7] 근로시간 추이



처음으로 30시간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1999년에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늘어나 35.2시간을 기록해 경기 변화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변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표 16-13>에서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1999년 현재 제조업의 근로시간이 217.3시간으로 가장 길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217.0시간으로 그 다음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산업은 광업과 건설업으로 192.7시간과 195.8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 근로시간은 그 산업을 둘러싼 여러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1997년 207.6시간에서 1998년 200.0시간으로 급감했다가 1999년에는 다시 217.3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제조업에서 특히 강하게 받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6-14>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그동안 많이 줄어 들긴 했지만 여전히 긴 편에 속한다.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1998년 현재 대만이 45.6시간, 일본 37.5시간, 미국 41.7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6.1시간으로 가장 길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문에 1998년에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외국보다 상당히 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많다. 앞으로 장시간의 육체 노동으로 경제성장을

<표 16-14>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제조업)

(단위 : 시간/주.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1980	53.1	50.8	41.0	39.7
1985	53.8(-1.0)	47.3(-3.0)	41.4 (1.4)	40.5(-0.5)
1990	49.8(-1.7)	46.4(-0.9)	40.7(-1.5)	40.8(-0.5)
1991	49.3(-1.0)	46.5 (0.1)	39.9(-1.9)	40.7(-0.2)
1992	48.7(-1.1)	46.5 (0.0)	38.7(-2.9)	41.0 (0.7)
1993	48.9 (0.3)	46.5 (0.2)	37.6(-2.8)	41.4 (1.0)
1994	48.7(-0.2)	46.6 (0.0)	37.6(-2.8)	42.0 (1.4)
1995	49.2(0.9)	46.4(-0.4)	37.7(-0.2)	41.6(-0.1)
1996	48.4(-1.7)	46.3(-0.2)	38.2 (1.1)	41.6 (0.0)
1997	47.8(-1.2)	46.5 (0.3)	38.1(-0.2)	42.0 (1.0)
1998	46.1(-3.7)	45.6(-1.9)	37.5(-1.8)	4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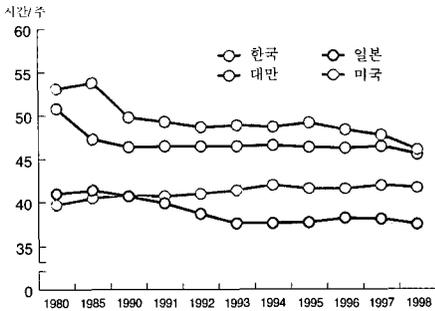
주 : 1) 미국의는 주당근로시간 = 월근로시간 × (7 ÷ 30.4)으로 계산함

2) 미국은 지불근로시간. 그외는 실근로시간임. 지불근로시간이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지불된 시간(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을 포함

3)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16-8]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제조업)



이루어내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제4절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 기계나 장비가 많이 들어 갈수록 높아진다.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통계로 ①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②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③한국생산성본부(KPC)의 노동생산성지수 등 세 가지 형태의 노동생산성 지표가 많이 쓰인다. 이 경우 각각의 노동생산성을 구분하는 것은 노동의 투입량과 산출량에 대한 정의의 차이 때문이다.

우선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전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산출한다. 부가가치는 통상 경상국내총생산(GDP)을 이

용한다. 취업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인 총 취업자수를 사용한다. 이 지표는 적정임금인상율을 산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노동생산성 지표이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이 지표는 기업체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구한다.

또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발표하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가 있다. 이 지표는 불변GDP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서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된다. 노동투입량은 전체 종사자이다.

이렇게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가지인 것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통계적인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표들 사이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지표를 이용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지수는 임금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즉 어떤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게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산업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커지게 되고, 이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지표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우선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 보자. 주의할 점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경상가격, 즉 물가의 변화가 반영된 국내총생산을 산출량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임금의 경우에도 물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임금상승율, 즉 명목임금상승률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16-15>에서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 경제의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중반까지도 두 자리수 이상이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경상GDP, 즉

<표 16-15>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국민경제노동생산성		명목임금상승율	
	비농전산업	제조업	비농전산업	제조업
1980	24.2	29.8	23.4	22.7
1985	11.7	4.6	9.2	9.9
1990	16.0	12.9	18.8	20.2
1991	16.2	19.0	17.5	16.9
1992	10.8	16.3	15.2	15.7
1993	10.8	17.6	12.2	10.9
1994	12.0	16.5	12.7	15.5
1995	12.4	16.0	11.2	9.9
1996	8.3	11.4	11.9	12.2
1997	6.9	13.5	7.0	5.2
1998	5.2	20.4	-2.5	-3.1
1999p	6.3	9.2	12.1	14.9

주 : 1)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경상GDP의 증가율로 산출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물가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인데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물가 상승률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지면서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도 10%대 안팎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명목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시기별,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임금상승률이 20.2%인데 비해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12.9%로 임금상승률이 7.3%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임금상승률은 2.8% 포인트 높은데 그쳤다.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가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비해 전체 산업의 경우에는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산업이 처한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하면서 급속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이 나타났다. 이후 제조업에서는 임금상승이 억제되고 생산성 증가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건설업, 서비스업의 활황에 따라 임금인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 17 장 에너지·자원

에너지는 국민경제와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수입 의존 품목이다. 1999년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돈은 연간 226억달러로 총수입액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 돈으로 약 26조원으로 국방예산의 두 배 규모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이미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가가 되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경제개발정책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규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와 산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여 1970년대 말부터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낮은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파동기에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1988년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집중 투자해 산업용 에너지 요구량이 대폭 늘어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근접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동안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 에너지소비 절약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최대 과제의 하나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행태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를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살펴본 후 에너지원 별로 통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수자원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에너지 수급구조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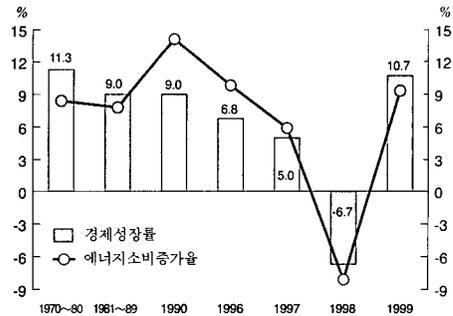
1990년 초 중동의 걸프전쟁 이후 1997년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세계경제는 유례 없이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낮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장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불가피한 일로 여겨졌던 경기순환 현상이 사실상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이러한 안정성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낮은 국제유가였다. 그러나 한동안 하강세를 지속하던 저유가는 주요 석유공급 국가들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을 불러왔다.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까지 겹쳐 2000년 들어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1998년에 8.1%가 줄었으나 1999년에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에너지 소비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소비증가율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여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에너지 탄성치는 0.7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 정책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1981~1989년 사이의 에너지 증가율은 7.8%, 1990년의 증가율은 14.1%, 1996년은 9.8%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탄성치는 각각 0.86,

1.48, 1.44를 나타냈다. 이런 증가세를 보이던 에너지소비는 경제위기 영향으로 경제가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에너지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8.1%)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소비도 크게 늘어 9.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림 17-1]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도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는 세계에너지 소비증가율 1.1% 보다 다소 낮은 0.8%이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은 1.0%, 일본 0.9%, 독일 -1.1%인데 비해 우리나라와 멕시코

<표 17-1>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

(단위 : %)

	1970~80	1981~89	1990	1996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A)	11.3	9.0	9.0	6.8	5.0	-6.7	10.7
에너지소비증가율(B)	8.4	7.8	14.1	9.8	5.9	-8.1	9.3
에너지탄성치(B/A)	0.74	0.86	1.48	1.44	1.18	1.40	0.87

주 : 1997년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에너지소비통계 개편기준에 따라 적용한 수치임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각 호

는 5.9%, 3.4%의 높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상적인 것은 독일의 경우 1995년과 1996년을 제외하고 매년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 기준으로 세계평균이 1.69 TOE인데 비해 OECD 회원국은 평균 4.66 TOE으로 약 2.8배였

〈표 17-2〉 주요 국가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단위 : %, TOE/인)

	1990	1995	1996	1997	1998
세 계	0.1 (1.68)	2.3 (1.66)	2.9 (1.68)	1.1 (1.69)	-0.4 (1.62)
OECD	-0.4 (4.33)	2.1 (4.51)	3.2 (4.62)	0.8 (4.66)	0.0 (4.63)
-미 국	-1.8 (7.71)	1.5 (7.94)	2.2 (8.06)	1.0 (8.17)	0.0 (8.11)
-일 본	5.2 (3.55)	2.9 (3.96)	2.7 (4.05)	0.9 (4.10)	-1.5 (4.03)
-멕시코	1.4 (1.50)	-2.5 (1.47)	5.7 (1.49)	3.4 (1.51)	4.4 (1.55)
-독 일	-1.4 (4.48)	0.7 (4.16)	3.1 (4.29)	-1.1 (4.23)	-0.8 (4.20)
-한 국	15.0 (2.13)	8.7 (3.29)	10.0 (3.60)	5.9 (3.83)	-7.4 (3.52)
-중 국	1.5 (0.75)	5.8 (0.88)	3.6 (0.90)	0.2 (0.90)	-5.9 (0.83)
-대 만	7.3 (2.36)	6.6 (3.02)	4.8 (3.14)	5.5 (3.03)	5.6 (3.51)
-인 도	3.7 (0.42)	5.4 (0.47)	3.1 (0.48)	2.0 (0.48)	2.3 (0.49)
-인도네시 아	9.7 (0.55)	6.5 (0.64)	6.0 (0.67)	4.4 (0.69)	-0.2 (0.60)

주 : ()내는 1인당 에너지소비량
 자료 : OECD,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0*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00

다. 특히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4.8배였다. 우리나라는 3.52 TOE로 신흥공업국인 대만·멕시코와 비교하면, 대만(3.03 TOE)과 유사하나 멕시코(1.51 TOE)보다 많다.

〈표 17-3〉 에너지 부문별 국가순위

순 위	에너지소비 (백만TOE)	석유소비 (천배럴/일)	석유정제능력 (천배럴/일)	전력소비 (TWh)
1	미국 2,205 (25.8)	미국 18,490 (25.5)	미국 16,510 (20.3)	미국 3,515 (25.1)
2	중국 753 (8.8)	일본 5,650 (7.5)	러시아 10,000 (12.3)	중국 1,127 (8.0)
3	러시아 608 (7.1)	중국 4,370 (5.8)	일본 5,110 (6.3)	일본 1,001 (7.1)
4	일본 507 (5.9)	독일 2,825 (3.8)	중국 5,020 (6.2)	러시아 814 (5.8)
5	독일 331 (3.9)	러시아 2,535 (3.6)	한국 2,315 (2.8)	독일 527 (3.8)
6	인도 276 (3.2)	한국 2,165 (2.9)		캐나다 498 (3.6)
7	프랑스 252 (3.0)			인도 465 (3.3)
8	캐나다 228 (2.7)			프랑스 410 (2.9)
9	영국 222 (2.6)			브라질 348 (2.5)
10	한국 182 (2.1)			영국 336 (2.4)
11				이탈리아 273 (1.9)
12				한국 236 (1.7)

주 : ()내는 세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IEA,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0*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00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가격의 하향 안정세 지속과 경제확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1999년 현재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에너지 부문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볼 때,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 석유소비 규모는 6위, 석유정제 능력은 세계 5위, 전력소비는 세계 12위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단위를 보면, 1997년에 전 세계 평균이 0.37, OECD 국가 0.252, 미국 0.322, 일본 0.152, 독일 0.189이며 우리나라는 0.429로 이들의 두 배 안팎이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GDP 기준 에너지원

단위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에너지원 단위가 감소할수록 에너지이용 효율성은 향상된다는 뜻이다.

<표 17-4>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대규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과 산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여 1970년대 말부터 상당 기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낮은 상태로 경제성장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대조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집중 투자해 오히려 산업용 에너지 요구량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표 17-4〉 주요 국가의 에너지원단위 비교

(단위 : TOE/US 천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세 계	0.412	0.403	0.407	0.402	0.401	0.392	0.391	0.37	0.36
OECD	0.260	0.261	0.260	0.262	0.259	0.258	0.257	0.252	0.247
- 미 국	0.347	0.353	0.349	0.349	0.343	0.339	0.332	0.322	0.310
- 일 본	0.148	0.146	0.147	0.148	0.554	0.156	0.153	0.152	0.154
- 멕 시 코	0.473	0.472	0.466	0.458	0.453	0.468	0.459	0.444	0.442
- 독 일	0.217	0.206	0.198	0.199	0.133	0.192	0.196	0.189	0.183
- 한 국	0.360	0.359	0.387	0.410	0.407	0.407	0.420	0.429	0.422
- 중 국	2.465	2.411	2.276	2.029	1.874	1.747	1.670	1.35	1.28
- 대 만	0.284	0.289	0.287	0.284	0.284	0.281	0.283	0.28	0.29
- 인 도	1.229	1.206	1.246	1.225	1.200	1.161	1.141	1.03	0.95
- 인도네시아	0.859	0.864	0.843	0.809	0.807	0.761	0.750	0.74	0.75

자료 : OECD,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0*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00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1960년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경제성장을 원활하게 하려고 '양질의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기조는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의 선택을 크게 제약해 왔다. 따라서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낮은 에너지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책 등은 아직까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휘발유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선진국의 50~80% 수준에 머문다. 특히 산업용에너지 가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문별 에너지소비

1980~1990년 및 1991~1999년의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소비는 각각 7.8%, 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표 17-5〉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단위 : 전년비, %)

	총소비(천t)		석유(천배럴)		LNG(천t)		무연탄(천t)		유연탄(천t)		수력(GWh)		원자력(GWh)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82,105				20,830		5,032		1,984		3,477	
1990	93,192		356,348		2,329		21,529		21,876		6,361		52,887	
80~90		7.8		6.9				0.3		15.8		12.4		31.3
1991	103,622	11.2	424,667	19.2	2,694	15.7	17,557	-18.4	24,835	13.5	5,051	-20.6	56,311	6.5
1992	116,011	12.0	514,224	21.1	3,524	30.8	13,597	-22.6	26,217	5.6	4,863	-3.7	56,530	0.4
1993	126,879	9.4	564,575	9.8	4,402	24.9	10,867	-20.1	31,552	20.3	6,006	23.5	58,138	2.8
1994	137,234	8.2	621,498	10.1	5,860	33.1	7,549	-30.5	35,111	11.3	4,098	-31.8	58,651	0.9
1995	150,437	9.6	677,210	9.0	7,087	20.9	6,263	-17.0	38,089	8.5	5,478	33.7	67,029	14.3
1996	165,212	9.8	721,065	6.5	9,363	32.1	5,370	-14.3	44,907	17.9	5,202	-5.0	73,925	10.3
1997	180,638	5.9	793,899	5.9	11,379	21.5	4,230	-21.2	49,712	10.7	5,404	3.9	77,086	4.3
1998	165,932	-8.1	670,278	-15.6	10,645	-6.4	4,631	9.5	51,261	3.1	6,099	12.9	89,689	16.3
1999	181,363	9.3	719,657	7.4	12,961	21.8	4,992	7.8	54,137	5.6	6,067	-0.5	103,064	14.9
91~99		7.7		8.1		21.0		-15.0		10.6		-0.5		7.7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통계』, 각 호

1998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총에너지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석유소비가 15.6%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소비감소를 주도한 반면, 무연탄과 유연탄은 경비절감 및 제철용 수요증가 등으로 오히려 9.5%, 3.1% 증가하였다. 증가세에 들어선 1999년에는 수력을 제외하면 석유 7.4%, 액화천연가스(LNG) 21.8%, 원자력 14.9%로서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석유소비는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5.6% 감소한 6억7천만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5년 수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의 석유의존도는 1997년의 60.4%보다 5.8%포인트 하락한 54.6%로 낮아졌다. 그러나 1999년 들어서는 경기회복 등으로 7.4% 증가했다. 이는 소득증가·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수요 구조의 고급화 추세와 더불어 자동차의 증가, 기초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확장 등에 기인한다.

LNG 소비량은 1998년 1,065만톤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2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무연탄 소비는 1990년대 이후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선호하는 풍토, 다른 에너지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력발전은 전반적인 전력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울진원전 3호기, 월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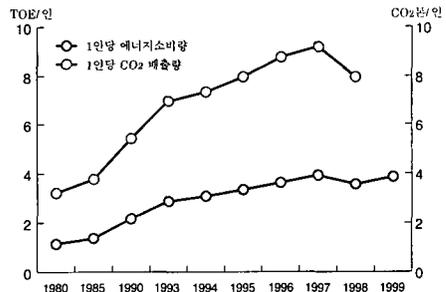
전 3호기 등을 가동하면서 1998년 16.3% 증가하였고, 1999년에도 전반적인 전력소비 증가로 14.9%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낮은 에너지가격 추세에 힘입어 석유·가스·전력 등의 고급 에너지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국내 부존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의 수요는 격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의 경질화 추세가 심화되어 휘발유·등유·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여름철 냉방용 이용기기의 보급확산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스수요도 전국의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과 환경요인 등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며 가정·상업용 연료로서의 위상도 굳혀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소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새로

[그림 17-2] 1인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 17-6〉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OECD	
	'81~'90	'91~'95	'81~'90	'91~'95	'81~'90	'91~'95	'81~'90	'91~'95
1차에너지소비	7.5	10.0	0.5	2.2	2.2	1.7	0.9	1.3
이산화탄소 배출	6.3	9.1	0.2	1.2	1.5	1.5	0.2	0.7
경제성장률	9.0	7.4	2.7	2.2	3.9	1.3	2.7	1.7

자료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98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8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사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산업구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곧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이 현실화되면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인 감축목표 합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은 남북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환경은 곧 경제라는 등식 아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의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머지 않은 장래에 산업 각 부문의 에너지사용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국제환경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의 90% 이상이 에너지소비에서 나오는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일차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화학·시멘트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소비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빠른 경제성장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표 17-6>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비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는 1990년 9천3백만TOE에서 2010년 2억8천8백만TOE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90년 6천5백만 탄소TOE에서 2010년 1억8천8백만 탄소TOE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치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를 분담하는 경우 경제활동의 절반이상을 축소해야할 형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가격 및 소비구조 조정, 산업구조조정,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투자 유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국제간 협력 등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에너지 수입과 대체에너지

에너지 수입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70년 47.5%에서 1999년 97.2%로 30년 새 약 두 배로 늘었다. 이는 석탄·나무 등에 의존하던 연료가 석유·전력 등으로 교체되고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에너지종류별로 보면 총 에너지 수입의

<표 17-7>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단위 : 백만TOE, TOE, %)

	1990	1995	2000	2010	연평균 증가율(%)		
					1991~1995	1996~2000	2001~2010
1차에너지수요	93.2	150.4	211.0	287.5	10.0	7.0	3.1
1인당 에너지소비	2.2	3.4	4.5	5.3	9.1	5.8	1.6
CO ₂ 배출량	65.2	101.1	147.8	188.1	9.1	7.9	2.4
1인당 CO ₂ 배출량	1.5	2.3	3.3	3.8	8.9	7.4	1.4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통계』, 각 호

<표 17-8> 에너지 수입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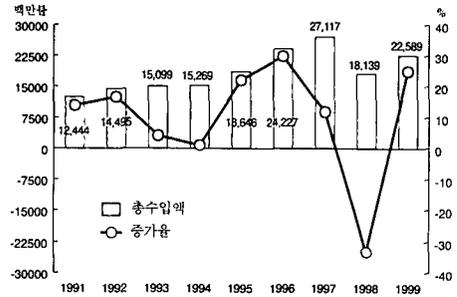
(단위 : %)

	1970	1990	1992	1994	1997	1999
에너지 수입의존도	47.5	87.9	93.6	96.4	97.6	97.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각 호

60% 이상을 원유가 차지했고, 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석탄·원전 연료 순이었다. <표 17-9>에서 보듯 에너지 수입 증가율은 1980년대(1981~1990)에는 석유제품이 32.9%로 가장 높았으나 1990년대(1991~1999)에는 LNG가 18.1%로 가장 높다. 1998년 에너지 수입액은 외환위기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와 국제유가

[그림 17-3] 에너지 수입액



하락으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81억 달러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226억달러를 기록했다.

<표 17-9> 에너지 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

	총수입액		원유		석유제품		LNG		석탄		원전연료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1	7,765	-	6,508	-	429	-	-	-	779	-	53	-
1990	10,926	-	6,462	-	5,547	-	481	-	1,269	-	167	-
81~90		3.9		-0.1		32.9		-		5.6		13.6
1991	12,444	13.9	7,836	21.3	2,336	-57.9	508	5.6	1,577	24.3	187	12.0
1992	14,495	16.6	9,449	16.6	2,655	16.6	632	16.6	1,592	16.6	167	-10.7
1993	15,099	4.2	9,298	-1.6	3,123	17.6	772	22.2	1,712	7.5	244	46.1
1994	15,269	1.1	8,919	-4.1	3,463	10.9	924	19.7	1,751	2.3	211	-13.5
1995	18,646	22.1	10,825	21.4	4,440	28.2	1,124	21.6	2,057	17.5	200	-5.2
1996	24,227	29.9	14,517	34.1	5,270	18.7	1,887	67.9	2,346	14.0	207	3.5
1997	27,117	11.9	17,768	22.4	4,437	-15.8	2,300	21.9	2,366	0.9	247	19.1
1998	18,139	-33.1	11,239	-36.7	2,924	-34.1	1,556	-32.3	2,182	-7.8	238	-3.7
1999	22,589	25.0	14,784	31.5	3,492	22.1	2,145	37.9	1,912	-12.4	256	7.7
91~99		8.4		9.6		-5.0		18.1		4.7		4.9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통계』, 각 호

대체에너지

우리나라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로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다.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1987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에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지원을 해 왔으나, 기술개발자금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연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장기적 에너지 수급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이듬해 6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각 국가별로 정한 대체에너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서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소수력·풍력·수소에너지·해양에너지·지열·연료전지·석탄이용기술 등 11개 분야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정하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1988~1991년)는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제2단계(1992~1996년)는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1997~2001년)는 실용화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 수급에 기여도가 큰 기술분야를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제4단계인 2002~2006년에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향후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한 결과 태양열 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 등은 시범보급 또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 특히 태양열 이용시설은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17만여기가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수산용·농업용·여관용 등에서 중대형 시설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1993년 충남 호도에 100kW짜리를 시범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전남 하회도에 60kW, 1996년 경남 와도에 30kW, 1997년 경남 창원시에 30kW, 1998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 30kW짜리를 설치했다. 그 외에도 태양광 가로등·고속도로 비상전화·해상부표·무인등대 등 전국적으로 약 8,800곳에 총 3,192kW 발전기기가 설치되었다.

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로는 산업폐수를 이용하여 메탄가스를 생산·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동안 주정공장·식품공장 등에 외국기술로 설치된 시설을 교체,

〈표 17-10〉 대체에너지 비중

(단위 : TOE. %)

구분	1991	1993	1995	1997	1998
총에너지	103,622	126,879	150,437	174,903	167,370
대체에너지 (구성비)	413 (0.40)	649 (0.51)	908 (0.60)	1,421 (0.81)	1,715 (1.02)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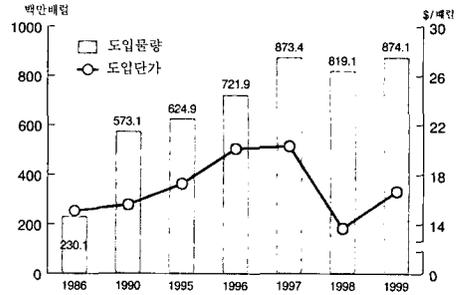
보수할 때 국내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진로발효 등 생산현장에 설치하여 실험을 겸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 1998년의 대체에너지 이용량은 1,715TOE로서 총에너지의 1.02%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연평균 신장률은 21.8%다.

제3절 원유와 천연가스

원유

1998년의 원유수입량은 국내경기 침체로 석유수요가 감소하였고, 정유사들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어 일부 정유사의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전년보다 6.2% 감소한 8억

[그림 17-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1,910만 배럴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8억7,410만 배럴을 도입하여 1997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1998년에는 세계적인 석유수요 감소와 함께 국제유가도 하락하여 원유도입 단가는 전년 대비 32.6% 내린 배럴당 13.72달러였으나, 1999년에는 21.9% 오른 16.7달러였다.

<표 17-11>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 : 백만배럴, 백만달러, 달러)

	1986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도입물량	230.1	573.1	624.9	721.9	873.4	819.1	874.1
도입금액(CIF)	3,479	8,919	10,825	14,517	17,768	11,239	14,784
단가(\$/B)	15.1	15.6	17.3	20.1	20.3	13.7	16.7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각 호

<표 17-12>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중 동	98.9	57.0	74.3	77.9	77.7	73.9	75.7	72.4
동 남아	0.4	24.2	20.3	13.1	13.7	13.9	14.1	10.7
미 주	0.7	12.8	2.3	3.0	3.5	2.8	2.6	4.5
아프리카	-	6.0	3.1	6.1	5.1	9.4	7.6	12.5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각 호

<표 17-12>에서 보듯이 1980년 98.9%에 달했던 중동 의존도는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5년 57%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중동 산유국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증산경쟁을 벌이면서 물동량이 증가해 중동의존도는 점차 높아졌고 1999년 72.4%를 기록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천연가스 공급은 1987년 수도권 을 시작으로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을 늘려온 결과 1999년에는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의 9.3%를 천연가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안정 공급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스가 지니는 편리함 · 청결함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청정연료로서의 이점 때문에 국내 에너지 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9년 천연가스 소비는 1,296만톤으로 전년보다 21.8%, 1989년에 비해서는 6.4배 늘었다. 발전용 소비는 10년 새 2.9배 늘었으나 도시가스용 소비는 22.6배 늘었다.

제4절 전력

전력 수급구조

전력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면서 용도상 다른 에너지와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력산업은 수력 · 화력(석탄 · 가스 · 석유) · 원자력 등 1차 에너지의 가공 · 전환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수송 · 판매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에너지 산업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송전과

<표 17-13> LNG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1989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수 입	2,014	2,758	4,454	7,055	11,629	10,600	12,973
소 비	2,026	2,694	4,403	7,118	11,379	10,645	12,961
발전용	1,670	1,800	2,518	3,606	5,377	4,189	4,769
도시가스	349	879	1,848	3,413	5,770	6,233	7,886
총에너지 소비중 LNG비중	3.2	3.4	4.5	6.1	8.2	8.3	9.3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각 호

배전은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을 사용하므로 자연독점의 성격을 지닌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전력산업에 일정한 규제를 가해 왔다.

양수발전이나 축전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성 있는 전력저장은 불가능하다.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력산업은 수요에 상응하면서 일정 규모의 예비전력을 감안한 발전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전설비의 건설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일단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크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경우 성장경제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왔으며 지정학적으로도 계통이 고립돼 전력의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공급부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전력난 해결이 더욱 어렵다.

최근 5년간(1995~1999년)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997년 11.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998년 8.0% 감소하여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999년에는 경기회복으로 13.0%의 증가로 돌아섰다.

〈표 17-14〉 전력 최대수요 증가율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95~'99 평균
증가율	11.9	8.0	11.1	-8.0	13.0	7.2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통계』, 각 호

전력공급예비율은 1994년 이상고온에 따른 냉방용 전력수요 급증으로 2.8%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95부터는 매년 6~16%대의 공급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여름철 휴가보수조정요금제도와 자율절전요금제도 등의 수요관리와 고효율기기 설치에 대한 장려금 지급·축냉설비·가스냉방기 등 전기대체 냉방설비 보급·촉진 등 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공급예비율 16.4%를 유지했다.

〈표 17-15〉 전력공급예비율

(단위 : 천kW, %)

	1995	1996	1997	1998	1999
설비용량	32,184	35,715	41,042	43,406	44,427
공급능력	31,968	34,295	38,452	37,928	43,418
최대수요	29,878	32,282	35,851	32,996	37,293
공급예비율	7.0	6.2	7.3	14.9	16.4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 호

발전설비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마찬가지로 전력시설도 추가로 건설하여야 한다. 기존의 발전소가 노후화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들의 용량을 대체할 발전소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선진 생활형태가

자리잡으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또 최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지역주민들과 각종 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원전 입지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확보하는데 드는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발전설비계획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기간 동안 원자력 18기 1,860만kW, 석탄화력 25기 1,450만kW, 석유화력 16기 461만kW, LNG 25기 947만kW, 양수 12기 370만kW, 수력/기타 18기 11만kW 등 총 117기 5,159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45기 1,157만kW의 발전소를 폐지해 2015년의 총 발전설비 용량을 8,083만kW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설비용량 4,104만kW의

약 2배 규모다.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우선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최대 전력 수요와 적정수준의 설비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발전원별 설비 구성은 공급신뢰도, 경제성, 입지, 환경영향과 무역수지, 연료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풍력·태양광·조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정기준의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일반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5절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지역별·계절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계절별로 전체 강우의 2/3가 6~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닥쳐 안정적 용수공급이 어렵다. 더구나 엘니뇨 등 기상이변 등에 의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해 수자원의 정상적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구나 인구의 지역적 편중으로 특정지역에 수자원 수요가 몰린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용수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최근에는 광역상수도를 도입, 수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용수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였다.

<표 17-16> 전원별 발전설비 구성

(단위 : 만kW, %)

	1998	2000	2005	2010	2015
합 계	4,377	4,987	6,314	7,454	8,083
원자력	1,202 (27.5)	1,372 (27.5)	1,772 (28.0)	2,343 (31.4)	2,765 (34.2)
석 탄	1,140 (26.0)	1,410 (28.3)	1,902 (30.1)	2,130 (28.5)	2,172 (26.8)
LNG	1,222 (27.9)	1,344 (26.9)	1,690 (26.8)	1,755 (23.6)	1,980 (24.5)
석 유	501 (11.4)	474 (9.5)	460 (7.3)	533 (7.2)	473 (5.9)
수 력	312 (7.2)	387 (7.8)	490 (7.8)	693 (9.3)	693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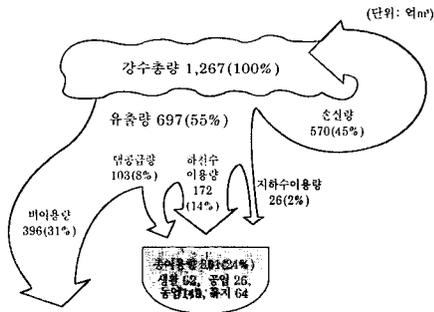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 호

수자원 총량

우리나라의 1996년 연평균 수자원 총량은 약 1,267억³m³이었지만 이 중 45%인 570억³m³은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수돼 없어지고 31%인 396억³m³은 홍수 때 단기간 내에 바다로 유실되었다. 나머지 24%인 301억³m³만 활용되었다. 이를 공급원별로 살펴보면 댐에서 103억³m³, 하천수에서 172억³m³, 지하수에서 26억³m³을 이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700~900mm의 강수량이 6~9월에 집중되어 매년 막대한 홍수 피해를 내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하천연안 저지대의 토지이용도가 고밀화되면서 홍수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

[그림 17-5] 수자원량 및 이용(1996)



수자원 이용

<표 17-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용수수요 중 생활용수는 1996년의 66억³m³에서 2001년 74억³m³, 공업용수는 공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1996년의 30억³m³

<표 17-17> 용수 수급계획

(단위 : 백만³m³)

	1996	2001	증가량
총용수수요	31,149	33,662	2,513
생활용수	6,559	7,435	876
공업용수	2,951	3,873	922
농업용수	14,920	15,027	107
유지용수	6,719	7,327	608
총용수공급	32,673	34,492	1,819
하천수	16,931	17,093	162
지하수	2,864	2,709	-155
댐공급	12,878	14,690	1,812
총과부족	1,524	830	-

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편람』, 1999

에서 2001년 39억³m³, 농업용수는 발작물 관개 용수 증가 등에 따라 1996년의 149억³m³에서 2001년 150억³m³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용수공급 가능량은 총용수 수요에 비하여 총량면에서 여유가 있으나 주요 지류인 중소 유역에는 물부족 현상이 심하다. 또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물 사용량의 증가는 그에 따른 하수량을 늘려 수역의 환경용량을 상회하는 오염 부하량을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이는 자연이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 및 공업용수의 사용 그 자체에도 지장을 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은 댐 개발을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 인공강우, 해수의 담수화, 지하수 개발과 같은 용수원의 다변화를 통하여 용수공급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물

수요 급증에 대처하려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예상되고, 환경론자와의 마찰 때문에 댐 개발 적지도 고갈될 것이며지가 상승 · 보상비 상승 등도 수자원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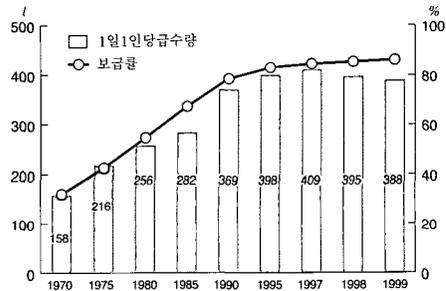
상수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나뉜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다.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상수도는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을 지탱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이다. 1999년 말의 우리나라 상수도보급률은 86.1%, 시설용량은 1일 2,659만톤으로 전국 830개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했

다. 하루 1인당 급수량은 388 l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물 아껴 쓰기 운동 전개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 중단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주요 도시의 가정용 물 값을 비교하면, 서울은 177 원/m³로 가장 저렴하다. 스위스 제네바 2,725원/m³의 1/15 수준이다. 1인당 물 급수량도 한국이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지만 가정용의 경우 일본 · 스위스보다는 낮다. 이는 각 국의 용수공급 체계 및 통계작성 방법 등이 다른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그림 17-6] 상수도 보급



<표 17-18> 주요국가의 급수량 비교(1997)

	한 국	일 본	영 국	스 위스
1인당 1일 물 급수량	409	397	393	402
가 정 용 물 급수량	206	236	132	264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1999

〈표 17-19〉 주요국가의 물 값 비교(1997)

(단위 : 원/㎥)

	한 국 (서울)	영 국 (런던)	일 본 (동경)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캐나다 (오타와)
물 값	177	952	1,411	1,129	2,725	2,118	2,056

주 : 가정용 단가임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 1999

제 18 장 연구개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나라의 전체적 생산성이 끊임 없이 향상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전체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기술수준의 진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이 30배로 늘었다고 가정할 때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이 30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면 생산성의 향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요소들의 투입량이 20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10배는 생산성 향상 즉,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은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사람의 몸과 두뇌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구분해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부른다. 기술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축적되기도 하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보통 이를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물질적 투자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확대는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활동에 변혁을 가져오므로써 생산구조와 소비패턴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기술개발 혹은 기술혁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일련의 혁신과정은 경제성장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장래의 기술혁신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연구개발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와 변화 추이, 기술도입 현황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개발관련 통계

세계 속에서 한 나라의 기술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겠지만 특히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은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식과 정보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은 숫자로 셀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국가나 산업이 보유한 과학과 기술은 수많은 개별과학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기술들도

분야에 따라 용도 및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지표나 통계로 통일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된다. 그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지표는 기술개발의 투입(input)과 성과(output)라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투자비 분류

◇ 부담 주체별

- 정부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립대학(교) 및 의료기관 등
- 민간부문 :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국내의 기업체, 사립대학(교) 및 의료기관, 개인 등
- 외국부문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 사용주체별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등
- 대학 : 대학(교) 및 대학원
- 기업체 : 민간기업

◇ 연구 성격별

- 기초연구 : 자연현상 및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연구
- 응용연구 :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 개발연구 : 연구와 실험실에서 얻은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과 공장 설비의 생산, 새로운 공정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설치, 기타 이미 생산되었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

◇ 사용 비목별

- 경상비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연구인력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원재료비, 사무실 및 실험실용 비품 구입비, 간행물 구독료, 도서비, 여비, 공공요금 등의 비용
- 자본적 지출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직 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지출

만들어진 통계들이다.

이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기술수준의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수준의 개념은 분석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기술수준의 개념을 광의로 잡아 '어떤 물질을 창출하거나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기술이 확보돼 한 산업 또는 국가가 도달했거나 또는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생산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의 세련도'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때 기술수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개발을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관련된 잠재적 기술개발력의 수준이다. 또 하나는 현 시점의 기술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자체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도입된 기술의 활용이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기능, 품질 및 생산기술의 효율면에서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는가 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기술개발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의 수 같은 연구개발의 투입지표들이 사용된다. 이것은 현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이 미래의 기술발전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성과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특허건수, 기술수출액, 첨단기술제품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흔히 사용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

하는데 좁은 의미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넓은 의미의 기술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등 기술개발의 투입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매년 위탁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82년 통계법에 의해 '일반통계'로 승인된 후 2000년 '지정통계'로 변경된 법정통계로 조사결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된다.

조사대상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1993)에 따라 자연과학, 이학, 공학, 의학, 농학 분야 등이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제외된다.

연구개발 활동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측정 분석, 기계 기구 장치의 구입 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과 연구개발 부서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무 회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통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에 관한 통계이다.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관, 사용기관, 그리고 연구의 성격 등에 대

한 통계를 작성한다.

연구개발 인력에 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 종사자를 크게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술 기능직 종사자 및 기타 연구개발 지원 업무 종사자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한다.

제2절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비 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자. <표 1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1967년 48억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는 1조2,371억원으로 1967년의 25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도 1.5%로 높아졌다. 1990년대에는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1997년 12조2천억원을 투자하였으며, GDP에 대한 비율도 2.7%까지 상승하였다. 이렇게 급격히 늘던 연구개발 투자비는 IMF 체제로 접어들면서 다소 주춤해져 1998년에는 11조3천억원으로 떨어져 GDP에 대한 비율도 2.6%로 낮아졌으나 1999년에는 다소 늘어난 11조 9천억원이었다.

한편 1967년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비중이 87%였으나 1994년 16%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정부 3조2,031억원, 민간부문 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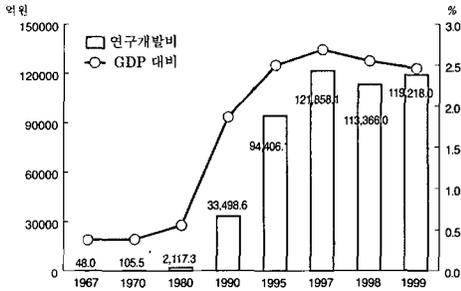
7,177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정부 대 민간의 부담비율이 27%대 73%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정부 부담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의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8-1>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투자비 (십억원)	연구개발투자비 의 부담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정부	민간	외국	
1967	4.8	87.0	13.0	0.0	0.38
1970	10.6	70.3	28.7	1.0	0.39
1975	42.7	66.7	33.3	0.0	0.42
1980	211.7	49.8	48.4	1.8	0.56
1981	368.8	53.5	44.8	1.7	0.78
1982	533.1	49.4	50.4	0.2	0.98
1983	682.2	33.7	66.1	0.2	1.07
1984	907.2	27.0	72.3	0.7	1.24
1985	1,237.1	24.6	75.2	0.2	1.52
1986	1,606.9	23.2	76.7	0.1	1.69
1987	1,985.2	24.7	75.3	0.1	1.79
1988	2,454.2	21.3	78.7	0.0	1.86
1989	2,817.3	20.4	79.6	0.0	1.90
1990	3,349.9	19.4	80.6	0.0	1.87
1991	4,158.4	19.4	80.4	0.2	1.92
1992	4,989.0	17.2	82.4	0.4	2.03
1993	6,152.3	16.7	83.1	0.2	2.22
1994	7,894.8	15.9	84.0	0.0	2.44
1995	9,440.6	18.9	81.1	0.0	2.50
1996	10,878.1	22.1	77.7	0.1	2.60
1997	12,185.8	23.5	76.4	0.1	2.69
1998	11,336.6	26.9	73.0	0.1	2.55
1999	11,921.8	26.9	73.1	0.1	2.46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활동 동향조사 보고서』, 각 호

[그림 18-1]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 <표 18-2>

이다. 이를 보면 1966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미국의 1/1987, 일본의 1/113, 독일의 1/187, 프랑스의 1/183, 영국의 1/216 등으로 격차가 매우 심했다. 지속적인 투자의 증가로 1997년에는 프랑스, 영국의 1/2, 일본의 1/10, 미국의 1/17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1997년 말부터 환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1997년을 분석함). 또한 GDP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은 1966년 일본 1.2%, 미국 2.8%, 독일 1.8%, 프랑스 2.1%, 영국 2.4%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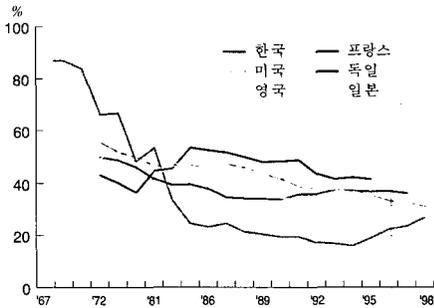
<표 18-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

(단위 : 백만달러,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 랑 스		영 국	
	지출액	GDP 대비	지출액	GDP 대비	지출액	GDP 대비	지출액	GDP 대비	지출액	GDP 대비	지출액	GDP 대비
1966	12 (1)	0.31	1,360 (113)	1.24	23,846 (1987)	2.84	2,240 (187)	1.81	2,200 (183)	2.05	2,590 (216)	2.40
1971	29 (1)	0.31	3,853 (133)	1.63	26,676 (920)	2.43	4,930 (170)	2.29	2,999 (103)	1.87	3,322 (115)	2.09
1981	526 (1)	0.81	24,322 (46)	2.06	71,869 (137)	2.37	16,937 (32)	2.49	11,495 (22)	1.97	12,007 (23)	2.32
1991	5,670 (1)	1.93	102,231 (18)	2.97	160,096 (28)	2.80	44,903 (8)	2.61	28,906 (5)	2.41	21,880 (4)	2.16
1997	12,810 (1)	2.89	122,275 (10)	2.92	211,928 (17)	2.70	48,339 (4)	2.31	31,166 (2)	2.23	24,003 (2)	1.87
1998	8,104 (1)	2.52	133,168 (16)	3.06	227,934 (28)	2.77	49,316 (6)	2.32	31,681 (4)	2.20	25,755 (3)	1.83
1999	10,023 (1)	2.46	-	-	247,227 (25)	2.84	-	-	-	-	-	-

주 : 1) () 내는 한국을 1로 보았을 때의 수준임
 2) 한국 및 1990년 이전 일본은 자연과학분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및 1991년 이후 일본은 인문사회과학이 포함됨
 3) 한국의 GDP 대비율중 1987년 이전 수치는 GNP 대비율임
 자료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18-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의 정부부담률



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993년에는 영국의 비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그리고 1997년에는 미국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비 중 정부의 부담률을 보면 1967년부터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여 당시 정부의 부담률이 87%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4년에는 15.9%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26.9%까지 올랐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부담률이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투자의 유형

연구개발비 지출의 구성비를 사용주체별로 보면 1970년에는 연구기관 83.9%,

대학 3.5%, 기업체 12.6%로 연구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구성비는 1980년 49.3%, 1999년 16.6%까지 낮아졌다.

반면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과 반대로 1970년대 이후 현저히 늘어 1996년에는 그 구성비가 73.2%까지 상승하였으나 1999년에는 다소 낮아진 71.4%였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주체는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1998년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주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업체 등 민간기업의 구성비가 높고, 대학이나 정부의 구성비가 낮다. 그러나 선진국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구성비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민간기업이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대학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아 대학의 연구기능이 미국·일본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연구성격별 지출현황을 보자. 기초연구비의 비중은 1970년 22.9%에서 1999년 13.6%로 낮아졌고, 응용연구비의 비중도 같은 기간 31.3%에서 25.7%로 감소한 반면 개발연구비의 비중은 45.8%에서 60.7%까지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전반적으로 기초연구보다는 생산라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상품개발에

〈표 18-3〉 유형별 연구개발 투자비

(단위 : 십억원, %)

	연구개발 투자비 (십억원)	연구비 사용 주체			연구 성격			연구비 용도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기초	응용	개발	경상비	자본적 지출
1970	10.6	83.9	3.5	12.6	22.9	31.3	45.8	-	-
1975	42.7	66.0	5.1	28.9	-	-	-	-	-
1980	211.7	49.3	12.2	38.4	-	-	-	76.8	23.2
1985	1,237.1	24.3	10.3	65.0	16.9	29.2	54.0	51.9	41.5
1990	3,349.9	21.8	7.3	70.9	16.1	24.5	59.5	66.5	33.5
1995	9,440.6	18.7	8.2	73.1	12.5	25.0	62.5	75.9	24.1
1996	10,878.1	17.4	9.4	73.2	13.2	26.9	59.9	75.7	24.3
1997	12,185.8	17.0	10.4	72.6	13.3	28.5	58.3	77.4	22.6
1998	11,336.6	18.5	11.2	70.3	14.0	25.1	60.9	77.4	22.6
1999	11,921.8	16.6	12.0	71.4	13.6	25.7	60.7	76.9	23.1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활동중조사보고서』, 각 호

역점을 두어 왔으며, 그 경향은 최근에 올수록 더욱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하다.

연구개발비의 지출 내용을 보면 1980년에 인건비 · 재료비 등 경상적 지출이 76.8%나 됐으나 1985년 51.9%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 등에 사용된 자본적 지출은 1980년 23.2%에서 1985년 41.5%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1990년대 들어 추진해 온 연구소 건립이나 주요 장치 등의 기반구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표 18-4〉 주요국의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구성

(단위 : %)

	한국 (’99)	미국 (’99)	일본 (’98)	독일 (’98)	프랑스 (’98)	영국 (’98)
연구기관	16.6	10.0	13.9	14.6	20.9	14.6
대 학	12.0	13.9	14.8	17.6	17.1	19.6
기업체	71.4	76.1	71.2	67.8	62.0	65.8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2000. 12

〈표 18-5〉 주요국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

(단위 : %)

	한국 (’99)	미국 (’98)	일본 (’98)	독일 (’98)	프랑스 (’96)
기초연구	13.6	15.6	13.9	21.2	22.0
응용연구	25.7	22.6	24.6	78.8	28.5
개발연구	60.7	61.8	61.4		49.5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2000. 12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인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개발 정책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의 두뇌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1971년에 1만2,541명으로 조사된 총 연구종사자 수는 이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여 1999년에는 무려 17배에 달하는 21만2,510명에

이르렀다. 연구종사자 중에서 연구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1971년 5,320명에서 1999년에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13만4,568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총 연구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71년 42.4%에서 1999년 63.3%로 크게 상승하였다. 연구보조원 및 기술 기능직 등 기타 지원인력은 1971~1999년 기간동안 7,221명에서 7만7,942명으로 11배로 증가하였으나, 총 연구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중 57.6%에서 36.7%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는 1971년 1.6명에서 1999년 28.7명으로 18배 증가하였고, 1인당 연구개발비도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8,859만원으로 무려 44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에서는 아직도 적지만 빠른

연구개발인력 분류

◇ 연구원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연구보조원

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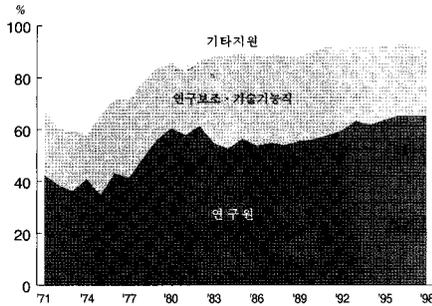
◇ 기술 및 기능직 종사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지휘 감독 하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기타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기타 기술 및 기능직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경리·회계·행정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림 18-3] 연구개발인력의 구성



증가세에 힘입어 그 격차가 줄고 있다.

우선 연구원 수의 절대 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1966년 미국의 1/176, 일본의 1/44, 독일의 1/20, 프랑스의 1/16, 영국의 1/17이던 것이 1998년에는 일본의 1/5, 독일의 1/2 그리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

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의 경우도 아직 미국과 일본의 198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프랑스·영국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우리의 연구인력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은 선진국과 비교해 각 부문별로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경쟁하기에는 벅하다. 하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전반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한정된 자원을 기술혁신 분야에 더 많은 비율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투입해 나가는 역동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

〈표 18-6〉 연구개발인력

	총연구종사자(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명)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만원)
	총연구종사자수	연구원	기타지원인력		
1967	-	4,061	-	1.4	118.2
1971	12,541	5,320	7,221	1.6	200.5
1975	29,578	10,275	19,303	2.9	415.2
1980	30,473	18,434	12,039	4.8	1,148.6
1985	73,516	41,473	32,043	10.2	2,982.8
1990	125,512	70,503	55,009	16.5	4,751.4
1995	201,661	128,315	73,346	28.5	7,357.4
1996	202,347	132,023	70,324	29.0	8,239.5
1997	212,117	138,438	73,679	30.1	8,802.4
1998	199,191	129,767	69,424	27.9	8,736.1
1999	212,510	134,568	77,942	28.7	8,859.3
1999/71	17배	25배	11배	18배	44배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활동동향조사보고서』, 각 호

〈표 18-7〉 연구원수의 국제비교

(단위 : 명)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1966	2,962	1.0	128,928	13.0	521,100	26.5	60,000	10.4	47,900	9.7	49,900	9.2
1971	5,320	1.7	242,155	18.5	523,500	25.2	90,206	14.7	60,100	11.7	77,385 (65)	13.8
1981	20,718	5.4	379,045	26.9	683,200	29.7	124,678	20.8	85,500	15.8	95,400	16.9
1991	76,252	17.6	491,102	39.6	960,500	38.0	241,869	30.1	129,780	22.8	131,000	21.9
1997	138,438	30.1	625,442	49.8	964,800 ^{a)} (7.43)	36.8 ^{b)}	235,792	28.7	155,302 (1.20)	26.6	146,546	25.1
1998	129,767 (1)	27.9	652,845 (5.03)	51.7	-	-	237,937 (1.83)	29.0	-	-	158,394 (1.22)	27.0

주 : · 한국은 자연과학 분야. 다른 국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함
· ()내는 한국의 1998년 연구원 수를 1로 볼 때의 각국 수준임
1) 1993년 수치임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0

력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가까운 장래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연구개발 성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의 성과에 관련된 통계로는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특허권등록과 논문발표를 대표적 지표로 꼽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활동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높은 생산요소로

서 거래될 수 있으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장시간 투자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모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므로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재산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허권(patents)· 실

용신안권(utility models) · 의장권(industrial design) · 상표권(trade marks) 등이 있다.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나 모양을 새로 바꾼 실용적 고안을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이 고안 역시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발명과의 차이점은 기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뿐이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발명과 실용신안을 구별하지 않는다.

의장권은 물품의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고안으로서 창의적이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고안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상표권은 상품출처 표지와 품질보증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 상표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권리이다. 보통 상표는 문자 · 기호 · 그림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며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권리자의 희망에 따라 10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수 있으므로 거의 영구적 권리이다.

도를 통하여 연구개발투자 비용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과 직접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이전과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1960년 3,400여건을 출원하여 1,500여건이 등록되는 정도였으나 1980년에는 출원 3만7,300여건에 등록 1만5,300여건으로 1960년에 비해 각각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26만3천여건 출원에 등록 14만8천여건으로 1960년에 비해 출원은 77배, 등록은 99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별로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특허권은 1960년에 219건으로 전체 산업재산권의 약 15%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 6만3천여건으로 313배라는 놀라운 증가를 보였고 전체 산업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로 커졌다. 실용신안권은 같은 기간 285건에서 3만3천여건으로 110

[그림 18-4] 산업재산권별 비중(등록기준)



배의 증가를 보였고, 그 비중도 19%에서 22%로 커졌다. 의장권의 등록은 같은 기간 174건에서 2만여건으로 98배로 늘었고 그 비중도 12%에서 13%로 커졌다. 상표권 등록의 경우는 같은 기간 815건에서 3만3천여건으로 41배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55%에서 22%로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은 1970년대까지는 상표권 등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의장권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특허권의 등록이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해 그 비중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과 같이 특허등록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 비교는 나라마다 평가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증가하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건수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었으나 최근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1976년에 7만건을 등록한 미국의 1/147, 4만건을 등록한 일본의 1/84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각각 1/44과 1/62로 선진국에 훨씬 뒤졌으나 1997년에는 미국의 1/5, 일본의

〈표 18-8〉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별 출원과 등록

(단위 : 천건)

	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960	3.4	1.5	0.6	0.2	1.2	0.3	0.3	0.2	1.2	0.8
1965	6.7	2.6	1.0	0.3	2.8	0.6	0.8	0.3	2.1	1.5
1970	17.7	5.4	1.8	0.3	6.2	0.9	4.5	1.7	5.1	2.6
1975	26.4	6.0	2.9	0.4	7.3	1.0	6.7	1.6	9.5	3.0
1980	37.3	15.3	5.1	1.6	8.6	1.8	10.1	4.1	13.6	7.8
1985	74.2	27.3	10.6	2.3	18.5	2.3	18.9	8.2	26.1	14.5
1990	114.1	54.3	25.8	7.8	22.7	8.8	18.8	13.9	46.8	23.8
1995	240.2	67.4	78.5	12.5	59.9	8.1	30.0	17.0	71.9	29.8
1996	274.1	72.4	90.3	16.5	68.8	9.2	29.9	20.2	85.1	26.5
1997	254.1	105.4	92.7	24.6	45.8	13.7	28.5	24.6	87.1	42.5
1998	203.5	163.2	75.2	52.9	28.9	25.7	25.2	24.9	74.2	59.6
1999	263.2	148.1	80.6	62.6	30.7	32.9	34.6	19.6	117.3	33.0
1980/60	11배	10배	8배	7배	7배	6배	31배	23배	11배	10배
1999/80	7배	10배	16배	39배	4배	18배	3배	5배	9배	4배
1999/60	77배	99배	134배	313배	26배	110배	115배	98배	98배	41배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호

〈표 18-9〉 주요국의 특허등록건수

(단위 : 천건)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1976	0.5	70.2	40.3	21.0	29.8
1980	1.6	61.8	40.1	20.2	28.1
1985	2.3	71.7	50.1	33.4	37.5
1990	7.8	90.4	59.4	42.9	35.1
1997	24.6	112.0	147.7	55.0	50.4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호

1/6, 독일의 1/2, 프랑스의 1/2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논문 발표

논문발표의 경우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편수가 사용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통계로는 미국의 민간 학술정보 전문기관인 과학정보연구원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의 과학인용지수(Science Citation Index, SCI)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의 수를 들 수 있다.

연구논문은 새로운 연구자료에 인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우수한 논문일수록 많이 인용되게 마련이다.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ISI사는 매년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 SC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여

〈표 18-10〉 주요국의 SCI 논문수

	1991		1995		1999	
	논문수 (천건)	순위	논문수 (천건)	순위	논문수 (천건)	순위
미 국	225	1	258	1	253	1
영 국	54	2	64	2	69	2
일 본	45	3	59	3	68	3
독 일	40	4	54	4	64	4
프랑스	30	5	42	5	47	5
캐나다	27	6	35	6	34	6
이탈리아	18	8	25	8	30	7
러시아	33	7	25	7	25	8
호 주	13	9	18	9	21	10
네덜란드	13	10	17	10	18	12
스페인	6	12	16	11	21	11
인 도	10	11	15	12	16	13
스웨덴	10	13	13	13	15	14
중 국	7	15	11	15	23	9
스위스	9	14	12	14	4	15
이스라엘	6	17	9	16	9	20
벨기에	5	16	8	17	10	17
대 만	3	24	7	19	9	19
한 국	2	30	5	24	11	16

주 : SCI에 수록된 논문수

자료 :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

기에 수록된 논문편수의 순위는 거의 국가별 기초과학의 순위로 인정받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논문수는 1999년 11,010편으로 1991년 2천여건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순위로는 1991년 30위에서 1999년에는 16위로 여러 단계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인구규모가 훨씬 적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4절 기술교류

기술도입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총 7,997건이다. 1980년대 초에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89년 이후 기술도입이 급속하게 줄어 1998년에는 92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기술도입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 지불은 오히려 점증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선진국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술도입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및 컴퓨터 분야의 특허분쟁이 심화돼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도입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주요 기술수출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심해져 우리기업들의 기술도입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국가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기술도입이 시작된 1967년부터 1998년까지의 누적통계를 보면 대가 지불액을 기준으로 미국에 87억4,670만달러를 쥐 전체 기술도입액의 52.3%를 차지했고 일본에는 49억270만달러를 지불해 전체의 46.1%다. 이들 두 나라의 점유율이 98.4%에 달한다.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이란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술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나아가서 그 지식을 성공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국내적 기술이전(domestic technology transfer)과 국제적 기술이전(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으로 구분된다.

기술이전은 또한 이전되는 경로에 따라서 수직적 기술이전(vertical technology transfer)과 수평적 기술이전(horizontal technology transfer)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기술이전은 기초과학연구(basic research)에서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로, 다시 제품개발연구(production and development)로 이행되는 흐름을 뜻한다. 그리고 수평적 기술이전은 지식이나 공정이 하나의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평적 기술이전의 현상은 큰 조직의 내부, 산업내부, 산업간, 정부간, 산업-정부간, 그리고 학문영역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수평적 기술이전과 수직적 기술이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순수한 물리학적 이론인 빛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국방연구의 일환으로 레이저 병기가 개발되고 차후에 이러한 기술이 의

료기술의 연구에 이용되어 레이저 의료기구가 개발되었다면 이 과정은 국방산업에서 의료산업으로 수평적인 기술이전과 순수물리이론에서 제품개발로 수직적인 기술이전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국제적 기술이전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기술이전과 비상업적 기술이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업적 기술이전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계류 수출 등과 같이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의 수출이 있고, 또 하나는 특허사용권·노하우·기술 및 자문 서비스 공급계약 등과 같은 비체화된 기술이전이 있다. 비상업적 기술이전으로는 정부 관련 기관, 비정부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자금이 충당되는 기술협력과, 전문서적과 저널 등 출판물에 포함되는 정보를 통한 기술이전이 있다. 기술이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각 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종합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통계자료를 이용한 기술이전의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의 기술이전의 분류 중 비교적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비체화된 기술의 상업적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도입과 기술수출로 내용을 파악한다. 기술도입 및 수출 등에 관한 통계는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작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두나라의 기술능력이 우수하여 우리나라가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많은 것은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우리산업의 주된 관심이 노하우와 같은 운전지식의 획득에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이후 업종별 기술도입 지급액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가 84억3,230만달러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계분야가 37억4,500만달러로 20.5%, 정유 및 화학분야가 21억7,080만달러로 11.9%였다. 1962년부터 1976년까지는 정유화학이 28.7%, 금속이 21%, 기계가 12.9%, 전기전자가 11.3%의 순으로 정유화학·금속의 비율이 높았으나 1998년에는 정유화학의 비율이 6.3%에 불과한 반면 전기전자의 비율은 50.9%로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정유화학공업 육성,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이후 전자산업육성 등 중점산업 개발정책을 편 데 따른 기술수요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수출

기술수출은 우리나라민이 외국인에게 영업소유권·기술용역·기술비법 등을 양도, 제공하거나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데 따른 권리를 허여(許與)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 기술수출의 대가가 미화 3만달

러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우리나라 기술수출의 실적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신고가 시작된 1978년 이래 1998년까지 총 858건에 8억9,550만달러 규모로 수출건수나 수취금액의 규모로 볼 때 아직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수출의 규모와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술수출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수출 대가취득액(로얄티 수취액)의 경우 1970년대 말 100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는 1천만달러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1천만달러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다가 1994년 1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1997년에는 1억6천만달러를 올렸으나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1억4천

만달러로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기술의존에서 벗어나 기술교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에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기술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이전의 대가가 비싼 서구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기피하고 오히려 가격 및 기술지원 측면에서 유리한 한국을 선호하고 있어 기술수출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수출액의 급속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액 대 기술수출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도입액이 기술수출액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기술 무역이 매우 큰 적자를 보이고 있다. 1989년에는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의 약 1% 수준으로 적자액은 8억7천8백만달러에 달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이 비율은 2.0%로 높

〈표 18-11〉 기술도입

(단위 : 백만달러, 건)

	합 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기 타	
	지금액	건수	지금액	건수	지금액	건수	지금액	건수	지금액	건수	지금액	건수
합계	16,712.1	7,997	8,746.7	2,381	4,902.7	3,686	756.1	449	552.7	279	1,753.9	1,202
1967-72	26.5	326	11.0	68	10.4	232	3.1	9		1	2.0	16
1973	11.4	67	3.6	17	5.8	46	1.1	2		1	0.9	1
1975	26.7	99	4.0	23	16.7	58	1.8	1	0.9	2	3.3	15
1985	295.5	454	154.8	114	74.6	228	11.6	29	7.6	14	46.9	69
1990	1,086.7	738	514.1	221	341.4	333	59.3	55	29.9	25	142.0	104
1995	1,947.0	236	962.0	95	694.8	69	78.8	18	30.5	11	180.9	43
1996	2,297.2	189	1,160.0	98	723.9	41	94.7	13	48.4	5	270.2	32
1997	2,413.6	173	1,468.9	91	505.2	31	105.5	7	69.8	3	264.2	41
1998	2,386.5	92	1,330.7	39	509.4	15	121.6	6	127.9	2	296.9	30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표 18-12〉 업종별 기술도입액

(단위 : 백만달러)

	1962-76	1977-81	1982-88	198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농업축산	2.0	4.6	4.5	10.2	2.0	1.8	3.4	3.3	3.4	35.2
식품	2.0	3.3	25.9	50.0	14.0	23.3	40.0	43.5	26.4	228.4
펄프·제지	0.1	7.4	1.4	8.2	1.6	2.7	1.4	2.7	1.7	27.2
방직·직물	0.7	4.9	9.2	6.6	0.6	1.1	0.9	0.2	0.0	24.2
화학섬유	8.7	13.3	29.4	96.5	28.2	48.1	49.9	35.8	18.7	328.6
요업·시멘트	1.1	10.5	42.0	94.9	9.4	24.0	12.5	15.4	9.8	219.6
정유·화학	32.6	147.3	316.8	752.3	104.7	191.2	275.2	200.1	150.6	2,170.8
제약	1.2	0.7	24.5	33.3	4.2	6.7	7.0	18.4	12.6	108.6
금속	23.9	32.0	54.9	53.4	10.8	7.7	10.8	25.1	56.6	275.2
전기 전자	12.8	47.5	765.1	2,245.2	765.5	1,038.4	1,091.8	1,250.9	1,216.1	8,432.3
기계	14.6	89.3	478.8	1,007.6	235.0	398.2	525.6	531.4	464.5	3,745.0
조선	5.1	11.2	109.8	90.0	40.5	23.4	10.4	21.3	1.4	313.1
통신	5.0	18.7	54.8	47.8	19.5	29.2	43.5	19.0	61.5	299.0
전력	2.8	25.4	362.5	312.4	6.1	38.4	19.9	25.4	22.4	815.4
건설	0.3	17.7	17.8	30.3	15.7	59.3	86.7	68.8	127.7	424.3
기타	0.7	17.6	87.4	117.8	18.7	53.4	119.2	153.3	213.1	781.2
계	113.6	451.4	2,384.9	4,956.5	1,276.5	1,946.9	2,297.2	2,414.6	2,386.5	18,228.1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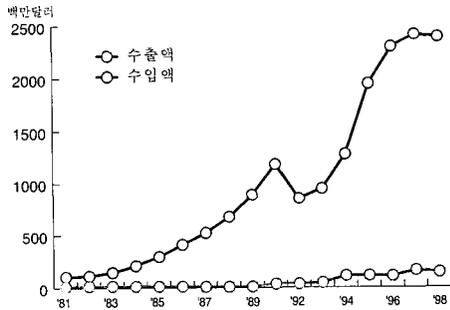
〈표 18-13〉 한·미·일의 기술 무역액

(단위 : 백만달러)

	한 국			미 국			일 본		
	수 입	수 출	수지비	수 입	수 출	수지비	수 입	수 출	수지비
1970	5.1	-	-	224	2,130	9.51	411	55	0.13
1975	26.5	-	-	473	4,300	9.09	697	142	0.20
1980	107.2	6	0.06	725	7,084	9.77	1,439	378	0.26
1985	295.5	11.3	0.04	1,170	6,678	5.71	2,522	746	0.30
1990	1087.6	21.8	0.02	3,135	16,634	5.31	6,044	2,582	0.43
1995	1947.0	112	0.06	6,919	30,289	4.38	9,438	6,023	0.64
1996	2297.2	108.5	0.05	7,854	33,823	4.31	9,820	6,670	0.68
1997	2414.7	162.9	0.07	9,411	33,676	3.58	9,615	7,305	0.76
1998	2386.5	140.9	0.06	-	-	-	-	-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호

[그림 18-5] 기술 수출입 추이



아지기 시작하여 1992년 4.0%, 1994년에는 가장 높은 8.7%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에 다시 4.7%로 낮아졌고 1998년에는 5.9%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술 도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 산업계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술도입에 대한 기술수출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제5절 과학기술의 장기전망

과학기술부에서는 향후 21세기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재도약과 미래사회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민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 12월 3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장기비전을

정부의 과학기술발전 장기 청사진으로 확정하였다.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선진경제를 실현하고, 주요 기반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선진사회형 국민 복지를 실현하며, 국가 안위의 보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비전의 내용을 과학기술을 위한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입지표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비는 1997년 128억달러 수준에서 2015년에는 470억달러로 18년동안 약 3배로 증대시키고, 2025년에는 800억달러로 28년 동안 6배 이상으로 늘리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율도 1997년에 2.7%에서 2025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예산 중 과학기술예산은 1997년 3.9%에서 2000년대에 5.0%를 유지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부담비율을 1997년에 23%대, 77%에서 2015년부터 30%대, 70%로 정부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연구인력의 경우는 1997년에 13만8천여명인 연구원수를 2025년에는 약 2.3배 정도로 증가한 31만4천명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가 1997년 30명에서 2025년에는 그 두배인 60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과학기술의 산출지표를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내국인을 기준으로 1998년 3

〈표 18-14〉 과학기술의 전망

(단위 : 천건)

			1997	2005	2015	2025
투입	투 자 (불변가격)	R&D 투자	128억 달러	200억 달러	470억 달러	800억 달러
		GDP 대비	2.69%	3.00%	3.50%	4.00%
		정부예산 대비	3.90%	5.00%	5.00%	5.00%
		정부 : 민간	23:77	27:73	30:70	30:70
	인 력	연구원 수 인구 만명당	138,438명 30.1명	196,000명 40명	258,000명 50명	314,000명 60명
산출	특 허 (등록)	국내특허 (내국인)	35,900('98)	128,600	333,600	543,500
		해외 특허	3,391('96)	17,500	45,400	74,000
	논 문	SCI 편수 순 위	11,514('98) 16위	41,000 12위	107,000 8위	174,000 5위
		기술수출/도입	0.07	0.3	0.7	1

자료 : 과학기술부,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비전』, 1999

만6천건 정도에서 2025년에는 54만4천여 건으로 27년동안 15배 이상으로 늘리며, 해외 특허의 경우도 1996년 3,391건에서 2025년 7만4천건으로 28년동안 약 22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SCI의 논문 편수도 1998년 1만편을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2025년에는 17만4천여편으로 27년간 약 15배가 증가하여 16위였던 현재의 순위를

5위로 올라서게 한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투입과 산출이 실현될 경우 투입에 비해 산출의 증가속도가 월등히 빨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9 장 산업재해 · 분쟁

산업재해와 산업분쟁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불가피한 일로 노동력 손실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중 입게 되는 재해로 근로자의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일단 발생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 금전적 고통은 매우 크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육체적,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위험하거나 힘든 작업을 기피하고, 이는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종료 직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산업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에는 근로조건 · 임금 · 산재예방제도 등을 다뤄 산업재해 예방을 법제화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61년과 1962년 각각 근로보건 · 안전 관리규칙,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구축됐다. 1966년 노동청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산재예방제도 또한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체제를 최초로 만들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담당관이 별도로 배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1984년 진폐법 등 독립된 전담 법령이 제정됐다.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과가 설치되었다. 1989년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이 신설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는 4차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법령을 정비했고 5~6년에 걸친 산재예방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선진화를 시도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신들의 지위를 집단적으로 보완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갈등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쟁의와 같은 집단행위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노동쟁의의 발생 정도는 국가의 노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노동조합의 결성과 근로자의 쟁의

활동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노동조합의 결성과 쟁의활동은 위축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가 감소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쟁의활동은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크게 3기(期)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해방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노동관계법은 정비되었지만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의 조직화도 두드러지지 않아 국가가 근로자의 조직화와 쟁의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제2기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산업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조직적 저항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억제하였던 1970년대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이다. 정부는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별조치법'과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이는 다시 1972년 '유신헌법'에서 명문화됐다. 1973년에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체제를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조직으로 제한하였다. 제3기는 1987년 이후로 노동관계법을 다시 개정해 기업내 노동조합의 결성 제한 조건을 상당부분 폐지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을 줄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추이와 노동조합 조직률 및 산업분쟁의 추이를 살펴본 뒤, 재해 근로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추이를 알아본다.

제1절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측정

우리나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재가 일어난 빈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재해율·(재해)천인율·도수율이 있다. 재해율은 당해연도 재해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구한다. 근로자 100명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를 나타낸다. 천인율은 1,000명의 근로자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시간수로 나누고 여기에 100만을 곱해서 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수를 모집단으로 재해율을 구하고 있다.

둘째는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를 이용하여 산업재해의 정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에 사망자의 손실일수와 부상자·업무상 질병자의 요양일수를 더하여 구한다. 이를 이용해서 재해의 정도를 측정한 지표는 (재해)강도

율이다. 강도율은 총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여기에 1,000을 곱해 얻는다. 재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으로 나뉜다. 직접손실액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금지급액이, 간접손실액은 하인리히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손실액의 네 배로 계산한다.

셋째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아무리 경미한 재해라 하더라도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기업·사회가 입은 육체적·경제적·심리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망사고의 경우 재해 근로자가 입은 손실은 인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끊겨 회복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 국에서는 이를 중대재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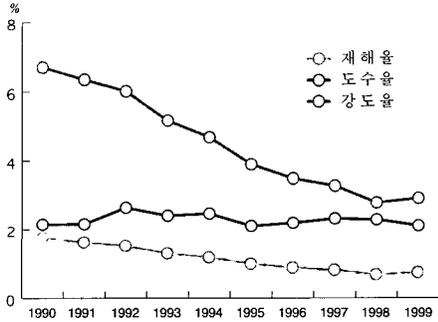
하여 각별히 관리한다. 중대재해 발생률은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근로자는 나라마다 다소 개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률을 구하는 방식은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전체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것에 1,000을 곱하는 천인율이다. 이는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1천명 중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나타낸다.

산업재해 발생추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가 작성된 것은 산재보험이 시작된 1964년부터다. 1964년 통계작성 이후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재근로자는 총 317만4천여명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과 재해 근로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재해 발생률은 4%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작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근로자가 100명 중 4명이 넘는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해자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재해자수는 근로자가 16만여명이던 1965년 9천5백여명이던 것이 근로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1972년에는 4만7천여명에 달했다. 근로자수가 3백만명을 처음 넘은 1978년의 재해자수는 13만9천여명이나 되었다. 재해 도수율 통계는 1972년부터 작성되었는데 이 또한 1978년까지 15가 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begin{aligned} \cdot \text{재 해 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 \cdot \text{천 인 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 \cdot \text{도 수 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 \cdot \text{강 도 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 \cdot \text{직접손실액} &= \text{산재보상금 지급액} \\ \cdot \text{간접손실액} &= \text{직접손실액} \times 4 \\ \cdot \text{중대재해발생률} &= \frac{\text{재해사망자수}}{\text{산재보험대상 근로자수}} \times 1,000 \end{aligned}$$

[그림 19-1]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재해율이 높은 것은 급속한 산업화 정책으로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의 노동강도가 높는데 비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제정은 뒷전에 밀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50년대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없이 근로기준법 제6장 10개 조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전부였고 이를 다루는 전담부서도 없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사후관리체계의 기본 틀은 갖추게 되지만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한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1960년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다. 이때 빈발한 산업재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표 19-1> 산업재해발생 추이

	근로자 (명)	재해자 (명)	재 해 율			경제적손실 추정액(백만원)			근로손실 일수(일)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계	직 접 손실액	간 접 손실액	
1965	160,150	9,470	5.91	-	-	1,015	203	812	-
1970	779,053	37,752	4.85	-	-	9,220	1,844	7,376	-
1975	1,836,209	80,570	4.39	-	16.76	51,900	10,380	41,520	-
1980	3,752,975	113,375	3.02	-	11.12	312,520	62,504	250,016	26,008,232
1985	4,495,185	141,809	3.15	-	11.57	929,995	185,999	743,996	36,584,109
1990	7,542,752	132,893	1.76	2.15	6.70	2,696,755	539,351	2,157,404	43,587,829
1995	7,893,727	78,034	0.99	2.10	3.90	5,667,885	1,133,577	4,534,308	55,332,356
1996	8,156,894	71,548	0.88	2.19	3.49	6,776,685	1,355,337	5,421,348	44,082,155
1997	8,236,641	66,770	0.81	2.32	3.28	7,780,210	1,556,042	6,224,168	46,634,262
1998	7,582,479	51,514	0.68	2.29	2.79	7,255,330	1,451,066	5,804,264	41,511,240
1999	7,441,160	55,405	0.74	2.11	2.92	6,371,130	1,274,226	5,096,904	39,397,899
· 99/70	9.6배	1.5배	-4.11	-	-	691.0배			-
· 99/80	2.0배	-51.1%	-2.28	-	-8.2	20.4배			1.5배
· 99/90	-1.3%	-53.3%	-1.02	-0.04	-3.78	2.4배			-9.6%
· 99/98	-1.9%	7.6%	0.06	-0.18	0.13	-12.2%			-5.1%

주 : 재해율의 99/70, 99/80, 99/90, 99/98은 각 실수치의 차(差)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 호

보상이 산업화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한 정부는 1961년 근로보건관리 규칙과 1962년 근로안전관리 규칙을 제정했다. 이어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시킨 뒤, 1966년 노동청 내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또한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고 건강진단체도 시행됐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도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했고 그 속에서 강도 높은 재해와 각종 직업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8년까지 4%가 넘는 높은 재해율이 나타났다.

이후 재해율은 다소 감소하여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3%대,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2%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늘면서 재해자수는 1972년 이후 1992년까지 매년 10만명을 넘었다. 1990년대부터 재해율은 1%대에 진입했고 1995년부터는 1% 미만의 재해율을 보임으로써 비로소 선진국의 재해율에 근접하게 되었다. 재해자수도 1984년 15만8천여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서 1998년부터는 5만명대에 진입했다. 재해 도수율은 1979년부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2년 14.49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하여 1998년 2.79로 저점을 보인 후 1999년 2.92를 기록했다. 높은 재해율

이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율의 감소 또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후반 이후 체계적인 산업안전관리와 이를 통한 산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1977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개발과 훈련 등을 위해서 노동청 산하에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1979년부터는 노동청 근로기준국 및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담당관을 두고 산업재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율하기 위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1987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과를 설치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했다. 1989년에는 노동부 본부에 산업안전국을 신설했다. 또한 1991년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 19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1999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1990년 이후는 중장기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재해의 종류를 살펴 본다. 재해 근로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여기서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만을 입은 경우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경우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 19-2〉 재해자의 분류와 중대 재해율

(단위 : 명, %)

	적용근로자수	재해자	부상자	사망자	직업병	중대재해율
1965	160,150	9,470	9,326	144	-	0.90
1970	779,053	37,752	37,113	639	-	0.82
1975	1,836,209	80,570	78,982	1,006	582	0.55
1980	3,752,975	113,375	110,919	1,273	1,183	0.34
1985	4,495,185	141,809	138,533	1,718	1,558	0.38
1990	7,542,752	132,893	129,019	2,236	1,638	0.30
1995	7,893,727	78,034	74,252	2,662	1,120	0.34
1996	8,156,894	71,548	67,349	2,670	1,529	0.33
1997	8,236,641	66,770	62,604	2,742	1,424	0.33
1998	7,582,479	51,514	48,014	2,212	1,288	0.29
1999	7,441,160	55,405	51,593	2,291	1,521	0.31
· 99/70	9.6배	1.5배	1.4배	3.6배	-	-5.51%p
· 99/80	2.0배	-51.1%	-53.5%	80.0%	28.6%	-0.03%p
· 99/90	-1.3%	-58.3%	-60.0%	25.0%	-7.1%	0.01%p
· 99/98	-1.9%	7.6%	7.5%	3.6%	18.1%	0.02%p

주 : 중대재해율 99/70, 99/80, 99/90, 99/98은 각 재해율 실수치의 차(差)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 호

우선 사망재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재해는 중대재해라 하여 따로 통계를 내 관리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후 1999년까지 산재 사망자의 수는 5만1천495명으로 이 기간 총 재해자 317만4,060명의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2〉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률은 1966년의 1.33%를 정점으로 낮아져서 1980년에는 0.3%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후는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0.3%대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근로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산재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 1970년대 후반 1천명대에 진입한 후 1990년 이후 현재까지 2천명대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의 감소로 재해자 절대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체 재해 중 사망 재해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병 통계는 1972년부터 작성되었다. 1999년 현재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직업병 판정 근로자수는 총 3천7백여명이다. 1972년 195명이던 직업병 환자는 급속

히 증가하여 1978년에는 1천여명이 되었다. 3년 후인 1981년에는 2천명을 넘었고 1983년에는 3천여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1984년 이후 직업병 발병자의 수는 다시 감소하여 1천명대의 수준이지만 재해자수가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1991년 이후에도 직업병 판정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1천명대에 머물러 전체 재해자 중 직업병 발병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초반 직업병 환자의 수가 급증한 것은 중화학공업 등의 발달로 작업장에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횟수가 늘어난 반면 이에 상응한 산업안전 의식과 행정 지도가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재해자수와 재해율은 감소했지만 사망재해자의 수와 직업병 발병자의 수는 줄지 않아 전체 재해 중 이들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산업안전관리의 강화로 재해 자체는 감소했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직업병 유발요인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또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재해 등 그 영향이 치명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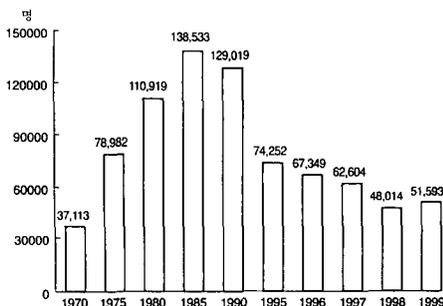
제2절 산업분쟁

노동조합 조직

단위 노조를 기준으로 1963년 1천8백여개였던 노동조합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5년 2천3백여개, 1970년 3천1백여개, 1975년 3천6백여개, 1979년 4천4백여개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수는 1980년 2천6백여개로 급감한데 이어 1981년 2천1백여개까지 줄었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7년 노동운동이 폭발한 뒤 노동조합의 수는 급증하여 1989년에는 7천8백여개로 1986년의 세배에 달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수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여 1995년 6천6백여개, 1999년 5천6백여개가 됐다.

한편 노동조합 조합원수를 살펴보면 1963년에 22만4천여명이던 것이 이후 조직 대상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1970년 47만3천여명, 1975년 75만여명이었고 1978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초반 잠시 100만명 아래로 감소하였으나 1983년 다시 101만여명이 된 뒤 1987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88년 170만여명이 됐다. 1989년 193만여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

[그림 19-2] 연도별 부상자 수



〈표 19-3〉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수

(단위 : 천명, %, 개)

	조직대 상자수	조합 원수	조직율	노동조합등록수		
				본조 합수	지부 수	분회수 (단위 노조)
1963	2,393	224	20.3	16	313	1,820
1965	2,764	302	22.4	16	362	2,255
1970	4,119	473	20.0	17	419	3,063
1975	5,480	750	23.0	17	448	3,585
1980	7,854	948	20.1	16	-	2,618
1985	11,165	1,004	16.7	16	-	2,534
1990	14,629	1,887	18.4	22	-	7,698
1995	17,652	1,615	13.8	27	-	6,606
1996	18,133	1,599	13.3	27	-	6,424
1997	18,479	1,484	12.2	41	-	5,7335
1998	17,348	1,402	12.6	43	-	5,560
1999	17,762	1,480	11.9	-	-	5,637
· 99/70	4.3배	3.1배	-8.1%p			1.8배
· 99/80	2.3배	1.6배	-18.2%p			2.2배
· 99/90	21.4%	-21.6%	-6.5%p			-26.8%
· 99/98	2.4%	5.6%	-0.7%p			1.4%

주 : 조직율의 99/70, 99/80, 99/90, 99/98은 각 조직을
실수치의 차(差)임.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호
『노동백서』, 각 호

년 현재 148만여명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조합원의 수를 조
직대상 노동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노동조
합 조직률은 1980년까지는 20% 이상이었
으나 대규모 노동운동이 일어난 1987년
이전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1981년 19.6%,
1985년 16.7%였다. 1987년을 계기로 급속
히 상승해 1989년 19.8%로 오른 뒤 장기
적인 하락세로 돌아서 1990년 18.4%, 1995

년 13.8%, 1999년 11.9%였다.

쟁의 현황

노동쟁의의 발생현황은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6년부터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966
년 104건, 1970년 88건, 1975년 133건, 1979
년 105건 등으로 1970년대 말까지 노동쟁
의는 100여건 정도였다. 1980년 ‘서울의
봄’을 거치면서 노동쟁의의 발생건수는 일
시적으로 407건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일시
적 상황이었고 다음 해인 1981년에는 186
건으로, 1982년에는 88건으로 줄었다. 그러
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87년 노
동쟁의의 폭발기를 거치면서 1987년 3천7
백여건, 1988년 1천8백여건, 1989년 1천6백
여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쟁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1990년에는 322건으로 대
폭 감소했고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 1993
년 144건, 1995년 78건으로 최저점을 보였
다. 노동쟁의는 1998년 이후 다시 늘어
1998년 129건, 1999년 198건을 기록했다.

노동쟁의 참가인원을 보면 1966년 12만
명, 1970년 18만명 등으로 1970년대 초반
까지는 10만명에서 20만명 사이였다. 1975
년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발생건수는 비슷
하지만 쟁의 참가인원의 수는 줄어 1975
년 1만명, 1980년 4만9천여명, 1985년 2만
9천여명 등이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노
동운동에 대한 통제가 극심해져 노동쟁의
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대규모

〈표 19-4〉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 건, 천명, 천일)

	노사분규 발생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 일 수	원인별 분규건수			유형별 분규건수	
				임금체불	임금인상	근로조건	작업거부	시위,농성
1966	104	121	41	-	-	-	-	-
1970	88	183	9	7	65	16	-	-
1975	133	10	14	32	42	4	49	54
1980	407	49	61	287	38	14	98	251
1985	265	29	64	61	84	47	108	157
1990	322	134	4,487	10	167	2	261	44
1995	88	49	392	0	33	-	-	-
1996	85	79	892	1	19	-	-	-
1997	78	43	444	3	18	-	-	-
1998	129	146	1,452	22	31	-	-	-
1999	198	92	1,366	22	40	-	-	-
· 99/70	2.3배	-49.7%	151.8배	3.1배	-38.5%			
· 99/80	-51.4%	87.8%	22.4배	-92.3%	5.3%			
· 99/90	-38.5%	-31.3%	-69.6%	2.2배	-76.0%			
· 99/98	53.5%	-37.0%	-5.9%	0%	29.0%			

주 : 1971.12.27 이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쟁의의 발생은 없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행정관청이 단체교섭을 조정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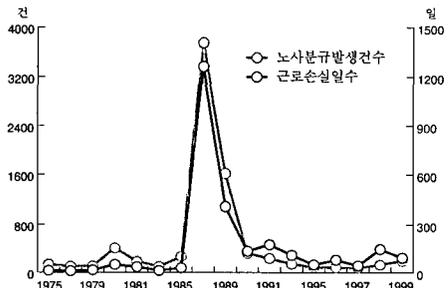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호
『노동백서』, 각 호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 1995

모의 쟁의활동보다는 소규모의 격렬한 쟁의활동이 더 많이 전개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1987년 노동운동의 대폭발 시기에는 노동쟁의 참가인원이 12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인 1988년에는 다시 29만3천여명, 1989년에는 40만9천여명 등으로 감소했다.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322건으로 감소한 1990년에는 노동쟁의 참가인원이 13만4천여명으로 역시 감소했고, 노동운동이 연간 100건 아래로 감소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노동쟁의 참가인

원은 8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1999년 현재 노동쟁의 참가인원은 9만2천명이다.

[그림 19-3]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1953년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개별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요양비·휴업보상·장해보상·장의비 등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근로관계의 종합입법으로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사용자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63년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로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제정돼 1964년부터 시행됐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개별사업주의 위험을 분산시켜 공동으로 책임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전 업종의 모든 근로자지만 제정 당시에는 극히 제한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를 적용 업종과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시행초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 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이 처음 실시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강제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했으나 이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산재보험 적용업종의 확대과정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 전기가공업과 운수보관업을, 1969년에는 건설업·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을, 1982년에는 임업 중 벌목업을, 19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다.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1991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과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하였고 1998년 7월 1일 금융보험업을 추가하였다.

산재보험 적용규모는 시행 2차년도인 1965년에는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1966년에는 150인 이상, 1967년에는 100인 이상으로 확대돼 왔다. 유기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 1968년에는 상시 근로자 50인과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 1969년에는 건설업의 적용규모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1973년에는 16인 이상, 연간 연인원 4,200인,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1982년에는 적용업종 중 10인 이상, 연간 연인원 2,700인을 사용하는 전 사업 및 건설공사 중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1991년에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중 10인 이상은 19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1992년 7월부터 적용을 확대했다. 1994년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과 해외 파견자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1998년 1월부터 시행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금융·보험업에 확대 적용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수와 적용 근로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초기인 1966년에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는 594곳,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는 22만2천여명에 불과하였다. 그 후 적용범위의 확대로 1970년에는 적용사업장수 5천6백여곳, 적용근로자수 77만9천여명, 1980년에는 6만3천여곳, 375만여명, 1990년에는 13만여곳, 754만여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적용사업장수 24만9천여곳, 적용근로자수 744만여명에 달했다. 1999년 현재의 산재보험 적

용사업장수는 1970년의 44.6배, 1980년의 4.0배, 1990년의 1.9배에 달한다. 1999년 현재의 적용 근로자수는 1970년의 9.6배, 1980년의 2.0배에 달했지만, 1990년대 이후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현재의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1990년 보다 1%, 1998년보다는 2% 감소했다.

산재보험 보상 실적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의 6가지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관장자가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어진 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지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표 19-5〉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추이

	사업장수(소)	근로자수(명)	산재보험급여 총지급건수(건)	총 급여 지급액(천원)	1건당 평균 지급액(원)
1966	594	222,456	45,153	452,762	10,027
1970	5,588	779,053	86,805	1,843,600	21,238
1975	21,369	1,836,209	163,343	10,380,391	63,550
1980	63,100	3,752,975	271,490	62,504,523	230,228
1985	66,803	4,495,185	483,336	185,998,958	384,823
1990	129,687	7,542,752	802,872	539,351,470	671,778
1995	186,021	7,893,727	826,651	1,133,577,490	1,371,289
1996	210,226	8,156,894	928,764	1,355,337,130	1,459,291
1997	227,564	8,236,641	956,763	1,566,041,968	1,636,813
1998	215,539	7,582,479	845,108	1,451,065,987	1,717,018
1999	249,405	7,441,160	781,427	1,274,225,649	1,630,639
· 99/70	44.6배	9.6배	9.0배	691.2배	76.8배
· 99/80	4.0배	2.0배	2.9배	20.4배	7.1배
· 99/90	92.3%	-1.3%	-2.7%	2.4배	2.4배
· 99/98	15.7%	-1.9%	-7.5%	-12.2%	-5.0%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호

되지 않고 그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될 때에 지급되는 것이다. 연금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 건수, 지급액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지급 건수를 보면 제도시행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1999년까지 지속됐다. 제도 시행 첫 해인 1964년 2만건이었던 산재보험 지급건수가 2년 뒤인 1966년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 4만5천여건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 1972년에는 10만건, 1977년에는 20만건, 1979년에는 30만건,

1984년에는 40만건, 1986년에는 50만건, 1988년에는 60만건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에도 1990년 80만3천여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1990년 이후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이전 시기보다 변동이 적다. 1992년 93만2천여건이었던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1993년 78만4천여건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로 돌아서서 1997년 95만6천여건으로 정점에 달한 후 1998년과 1999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1999년 78만4천여건이다. 이러한 지급건수는 1970년 대비 9.0배, 1980년 대비 2.9배 증가한 것이고 1990년 이후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건수의 증가에 따라서

급여 지급액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급여 지급액은 1964년 2천5백여만원이
었으나 1966년에는 4억5천여만원으로 급
증한 후 1970년 18억4천여만원, 1975년
103억8천여만원, 1980년 625억여원, 1985
년 1천8백여억원, 1990년 5천3백여억원,
1995년 1조1천여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

해 왔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1997년
1조5천여억원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1999년 현재 1조2천여억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의 증가정도를 비교해 보면 1970년
대비 691배, 1980년 대비 20배, 1990년 대
비 2.4배다.

제 20 장 재 정

가정주부가 집안의 살림을 가계부에 정리하듯이 국가의 살림은 재정통계에 기록된다. 국가의 살림은 집안살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재정통계 역시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 심지어 우리가 늘 접하는 재정관련 뉴스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2000년 예산안』에서는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의 비율이 3.5%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18조 3천억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11조 5천억원으로 잡고 있어 두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각각의 적자가 의미하는 재정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는 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리 기금·비금융 공기업(철도, 양곡, 통신, 조달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이고, 뒤의 경우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재정규모, 즉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적자를 말한다.

통합재정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7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통합재정 통계의 집계 기준인 『IMF 재정통계 편제요람』에 따르면 통합재정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망라한 소위 일반정부의 재정통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서는 지방정부는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몇몇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재정현황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통계는 비교적 넓은 포괄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재정활동 및 재정규모의 경제적 의미를 비교적 잘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있기까지 재정의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재정의 역할과 삶의 질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17~18세기 자연법 철학에 따르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들이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즉 제대로 된 국가의 기능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이며, 이 시스템을 유지·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입출금 내역이 곧 재정이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국가 시스템을 유지·운영하는데에 지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출측면

한 국가 시스템은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주변환경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마련이다. 6·25 사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안보를 확고히 함을 전제로 모든 정부의 기능이 수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최빈국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의 의욕과 투자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제를 탈바꿈시켜 왔다.

국방과 경제개발은 1960년대 경제개발 착수이후 지난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통계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우선 <표 20-1>은 통합재정수지 세출 및 순융자의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총세출의 규모에 있어서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힘들며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GDP에 대한 총세출의 비율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의 구성내용은 비교적 뚜렷한 패턴을 가지면서 변화를 겪어 왔다. 공공행정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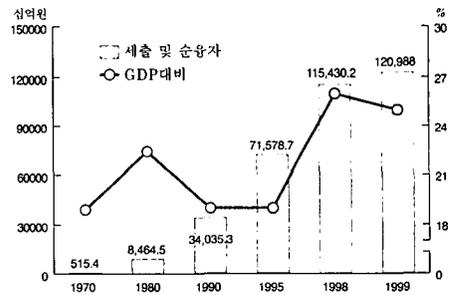
<표 20-1>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규모

(단위 : 10억원, %)

	세출 및 순융자	GDP 대비
1970	515.4	18.9
1975	2,158.6	21.1
1980	8,464.5	22.4
1985	15,218.1	18.7
1990	34,035.3	19.0
1995	71,578.7	19.0
1996	84,429.3	20.2
1997	100,327.1	22.1
1998	115,430.2	26.0
1999	120,988.0	25.0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호

[그림 20-1]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규모



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약 10년 동안 국방비와 경제개발비는 통합재정기준 총세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 이 비율은 1990년 40.4%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30%대 후반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중 국방비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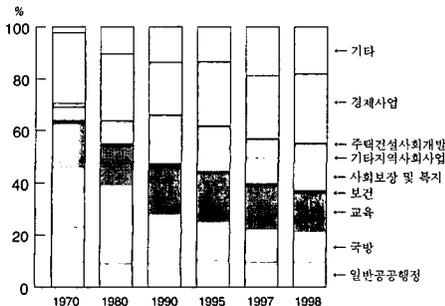
〈표 20-2〉 통합재정 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 %)

	일반공 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사회개발	기타지역 사회사업	경제사업	기타
1970	23.15	22.68	16.68	1.30	4.93	0.28	1.39	27.35	2.24
1975	13.06	26.35	12.72	0.93	4.84	1.13	0.77	31.14	9.05
1980	8.53	30.58	14.64	1.02	5.70	2.49	0.70	25.99	10.35
1985	9.42	26.62	16.56	1.29	5.24	4.83	0.99	21.87	13.17
1990	8.48	20.04	16.97	1.71	8.08	10.15	0.50	20.39	13.69
1995	9.76	15.66	17.97	0.72	8.95	8.01	0.60	24.88	13.44
1996	9.36	14.97	17.22	0.81	9.40	8.44	0.64	26.20	12.96
1997	9.12	13.27	16.39	0.78	9.71	6.73	0.68	24.54	18.76
1998	9.23	12.11	14.88	0.85	10.90	6.27	0.70	26.90	18.16

주 : 1) 1995년부터 분류가 바뀜으로 일반공공행정은 공공질서 및 안전을 포함한 수치임
 2) 1995년부터 기타 지역사회사업은 오락 종교 문화항목임
 3) 1995년부터 기타는 구분류의 지출을 의미함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호

[그림 20-2] 통합재정 세출의 기능별 분류



추세를 보였는데 비해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개발비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앙정부 세출 가운데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비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특한 교육열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데에도 원인

이 있지만, 지방정부가 교육 서비스 제공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제도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방비와 경제개발비 그리고 교육비의 세 가지 항목들은 1974~1980년의 기간에 총 재정지출의 70%를 웃돌았으며 1981~1988년에는 60%대, 1989년부터 최근까지도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등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어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총세출의 10%를 넘지 못하였다.

안보, 경제성장,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은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가 중요한 분야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복지관련 지출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과이를 키울 것이냐 나눌 것이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노령인구의 비중도 낮았으며, 특히 가족간의 부조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개인에게 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지출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더구나 복지관련 지출을 선진국처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민들처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복지지출의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의 확대보다는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게 유지하여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확립된 1980년대 후반 들어, 당시의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직접적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접적인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당면했던 위기상

황을 극복한 뒤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 복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이 복지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20-3>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15세~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에 나눈 값, 즉 노년부양비의 추이 및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 가능한 15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몇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표 20-3> 인구노령화 전망

(단위 : %)

	노령인구 비중	노년 부양비
1970	3.07	5.65
1980	3.82	6.14
1990	5.12	7.39
1995	5.89	8.33
1999	6.84	9.58
2000	7.13	10.01
2005	8.66	12.35
2010	9.94	14.17
2020	13.18	18.93
2030	19.27	29.7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996.12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노년부양비가 1970년의 5.65%에서 1999년의 9.58%로 약 4%포인트 높아지는데 29년(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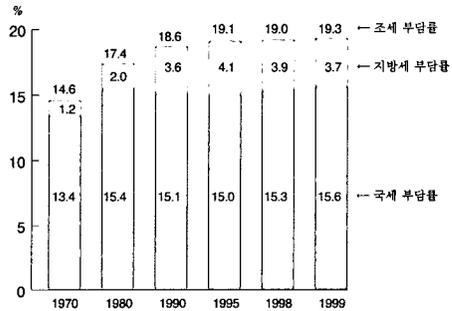
1999년)이 걸렸지만, 여기서 다시 4%포인트가 높아지는 13.6%에 도달하는데 9년(1999~2008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까지는 노령인구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복지관련 지출이 늘어날 필요성도 적었지만 앞으로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한 세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의 노년부양비는 5.65%로서 노령인구 1명을 취업가능 인구 17.7명이 부양하는 여건이었으나 2000년에는 10명, 2030년에 가면 3.5명이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 한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의 복지관련 세출은 2000년보다 약 세 배만큼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복지정책은 수혜대상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확대라는 세대내의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세대간 형평성을 서로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세입측면

정부지출의 재원은 주로 세금으로 충당한다.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국민들은 모두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그림 20-3] 조세부담률



러나 납세자들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는 세금만큼의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오직 의무만이 강조된다면, 그리고 납세자들 스스로 부당

<표 20-4>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단위 : %)

연도	조세부담률			국 민 부담률
	국 세	지방세	국 민 부담률	
1970	14.6	1.2	14.8	
1975	15.2	1.6	15.3	
1980	17.4	2.0	17.6	
1985	16.7	2.0	16.9	
1990	18.6	3.6	19.4	
1995	19.1	4.1	20.5	
1996	19.7	4.2	21.5	
1997	19.5	4.1	21.4	
1998	19.1	3.9	21.3	
1999	19.5	3.8	21.8	

주 : 조세부담률은 (국세+지방세)/GDP이며 국민부담률은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GDP임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호

하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우리는 재정지출이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걷느냐 하는 점은 경제 시스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6·25사변의 와중에서 납세 기반이 붕괴되다시피 하여 조세를 정상적

〈표 20-5〉 세목별 국세수입의 GDP에 대한 비율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세	13.39	13.60	15.37	14.61	15.02	15.05	15.52	15.43	15.26	15.64
소득세	3.10	1.94	1.75	1.82	2.64	3.61	3.53	3.28	3.87	3.28
법인세	1.55	1.28	1.28	1.39	2.12	2.30	2.24	2.08	2.43	1.94
부가가치세	-	-	3.89	3.57	3.81	3.88	4.01	4.30	3.53	4.21
특별소비세	-	-	1.54	1.21	1.04	0.69	0.75	0.67	0.50	0.56
주세	0.80	0.80	0.79	0.62	0.53	0.48	0.50	0.39	0.41	0.43
상속세	0.06	0.11	0.03	0.06	0.17	0.27	0.23	0.26	0.15	0.19
자산재평가세	0.03	0.05	0.06	0.02	0.05	0.02	0.05	0.04	0.10	0.21
증권거래세	0.00	-	0.01	0.01	0.13	0.13	0.07	0.06	0.05	0.28
인지세	0.06	0.12	0.09	0.09	0.11	0.08	0.09	0.09	0.07	0.08
전화세	-	0.10	0.13	0.20	0.15	0.14	0.16	0.17	0.21	0.25
관세	1.87	1.77	2.03	1.93	1.55	1.23	1.27	1.28	0.86	0.97
방위세	-	0.61	2.26	2.05	2.48	0.02	0.00	0.00	0.00	0.00
과년도수입	0.07	0.49	0.16	0.24	0.12	0.14	0.14	0.17	0.21	0.24
전매익금	1.10	1.32	1.35	1.02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0.09	0.02	-	-	-	-	-	-	-	-
영업세	1.14	1.94	-	-	-	-	-	-	-	-
통행세	0.49	0.16	-	-	-	-	-	-	-	-
물품세	1.16	1.15	-	-	-	-	-	-	-	-
직물류세	0.39	0.22	-	-	-	-	-	-	-	-
석유류세	0.78	1.04	-	-	-	-	-	-	-	-
전기가스세	0.26	0.05	-	-	-	-	-	-	-	-
입장세	0.17	0.10	-	-	-	-	-	-	-	-
유형음식세	-	-	-	-	-	-	-	-	-	-
부당이득세	-	0.00	0.00	0.00	-	-	-	-	-	-
등록세	0.26	0.33	-	-	-	-	-	-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으로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후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을 주로 외자(外資)에 크게 의존하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주도 경제개발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조세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총조세부담률, 즉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를 경상 GDP로 나눈 값은 1960년대 초의 10% 미만에서부터 꾸준히 늘어 1990년대 후반에는 20%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세의 규모나 부담률 못지 않게 조세의 구성도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진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20-5>는 세목별 국세수입의 경상 GDP에 대한 비율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고, <표 20-6>에서는 국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1980년대 초반 이후 점차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도, 시, 군, 구 등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뉘어 진다. 지방세의 비중은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하여 경제개발에 전력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가 발전되어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세 · 간접세

직접세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에 대해 메기는 세금이고, 간접세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마다 세율만큼 물건값에 포함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못 버는 사람에게 더 적은 세금을 깎아줄 수 있으며, 이러한 누진적(累進的)인 조세체계를 통하여 고소득층에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역진적(逆進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간접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득과약, 세액계산 등 별도의 행정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과 및 징수과정이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세출이 거의 중앙정부의 세출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곧 지방정부들이 세출 측면의 재정활동에서는 중앙정부와 거의 맞먹는 수준에 와 있는 반면 그 재원의 상당부분을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표 20-6〉 직·간접세, 국세·지방세 비율 및 재정규모

(단위 : %)

	직·간접세		국세·지방세		GDP대비	
	직접세	간접세	국세	지방세	중앙정부 세출 ¹⁾	지방정부세출 ²⁾
1970	38.5	61.5	91.7	8.3	22.0	3.5
1975	33.9	66.1	89.8	10.2	20.8	3.5
1980	28.7	71.3	88.3	11.7	22.9	5.3
1985	31.8	68.2	87.8	12.2	18.4	5.9
1990	43.7	56.3	80.8	19.2	18.2	6.8
1995	46.8	53.2	78.8	21.2	17.0	7.3
1999	40.5	59.5	80.3	19.7	24.8	7.2

자료 : 1) 세출순계 규모임

2) 세출에서 중앙재정 및 타지방재정에서의 의존수입을 제외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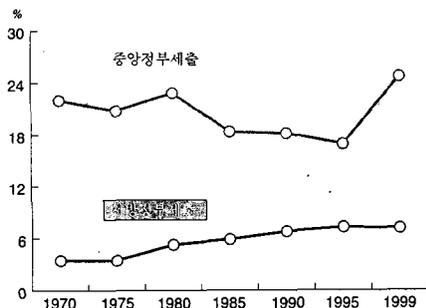
자료 :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때어서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각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경제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여건 또한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조정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 아직도 지방정부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지방에서 거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정부간 경제력의 격차를 형평화 시킴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두 가지 상충된 과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20-4] GDP대비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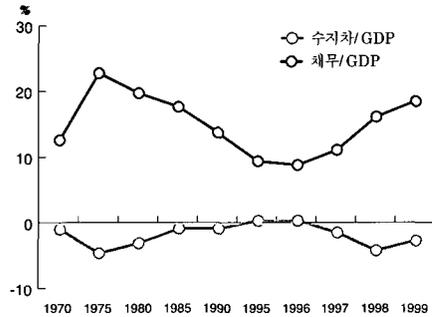
재정수지

우리 개개인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매일 매일 꼼꼼히 선택하면서 산다. 이것은 바로 예산 제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정은 국가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으로 확보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그보다 씹씹이가 커지면 국가도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나라 빚이 바로 재정적자이며 재정적자가 누적된 잔액이 국가채무이다. 나라 빚이 늘어나면 그 상황은 언젠가는 조세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재정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자를 경험한 바 있다.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에도 내수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중화학 공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공격적인 팽창

[그림 20-5]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차 및 국가채무



정책을 폈다. 그리고 1979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증세 기반을 확충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1980년에는 제2차 오일쇼크와 그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세입 기반이 손상을 입어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제2차 오일쇼크는 경제위축은 물론 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여 경제회복보다는 물가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 긴축정책을 펴나갔으며 재정긴축은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1983년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재정규율(財政規律)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정부의 세출억제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된 3저(三低)호황, 즉 국제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세입도 크게 늘어 198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

<표 20-7>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십억원, %)

	수지차	국가채무	수지차/GDP	채무/GDP
1970	-28	343	-1.0	12.6
1975	-466	2,345	-4.6	22.8
1980	-1,174	7,453	-3.1	19.7
1985	-713	14,276	-0.9	17.6
1990	-1,578	24,545	-0.9	13.7
1995	1,242	35,626	0.3	9.4
1996	1,099	36,828	0.3	8.8
1997	-6,959	50,454	-1.5	11.1
1998	-18,757	71,437	-4.2	16.1
1999	-13,065	89,715	-2.7	18.5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호

〈표 20-8〉 국가채무

(단위 : 십억원)

	총 계 (A + B)	정부채무 (A)	국 내				정부보증 채 무(B)
			차 입 금	국 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해 외 차 입 금	
1970	506	343	60	37	41	205	163
1975	2,721	2,345	714	200	267	1,164	376
1980	9,834	7,453	1,374	1,595	644	3,839	2,382
1985	21,523	14,276	2,649	3,250	1,049	7,328	7,247
1990	31,733	24,545	2,753	13,742	2,490	5,559	7,188
1995	50,655	35,626	3,001	23,295	4,089	5,242	15,029
1996	44,440	36,828	2,979	25,657	3,141	5,051	7,612
1997	63,493	50,454	3,170	28,554	3,408	15,322	13,039
1998	143,390	71,437	2,975	46,648	3,029	18,785	71,953
1999	171,220	89,715	2,443	65,806	2,523	18,943	81,505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호

었다.

3저호황이 끝나 1989년의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재정은 팽창기조로 선회하였다. 이를 계기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출을 늘리는 등 세출억제 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재정수지는 다시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1994년부터 해외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정을 통해 흡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바뀌어지면 이는 곧 해외부문의 통화량 증대를 의미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을 통해 정부부문의 통화를 줄임으로써 통

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때문에 1994~1996년에는 세출억제가 다시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은 다시 건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제2차 오일쇼크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제성장률은 급강하했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수많은 기업 부도와 대량의 실업을 겪고 있던 기업과 가계부문에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해외신인도가 급락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경제 구

조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부문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 아래 금융 구조조정의 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지급을 보증해 준 뒤 여기에 대한 이자만을 재정에서 빌려주었다. 통합재정수지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중앙정부가 아니므로 이들이 발행한 채권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재정에서 빌려주는 이자만이 재정적자에 반영된다.

아울러 그 동안 소홀히 하여 온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경기가 급강하하자 세수도 따라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외환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세수는 감소돼 1998년의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다행히 경제위기는 빠른 시일 안에 극복되었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높은 성장이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세수 역시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에 우려하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 직후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원

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우리 재정이 건전하였기 때문이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 재정이 건전하였으므로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금융 구조조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염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정의 역할은 곧 국가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정은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에 따라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2절 재정정책 방향

최근 들어 재정수지는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건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정부보증채의 원금상환 만기가 대규모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 때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완결해 투입한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만큼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 구조조정에 지원한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복지관련 지출요인은 앞으로 커다란 제도개선이 없는 한, 몇 년 동안 만이 아닌 길게는 수십년에 걸

쳐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장기적으로 시각을 넓혔을 때 지금까지의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이다. <표 20-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세는 앞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인구에 접어드는 2017년 경부터는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총인구 자체가 아닌 생산가능 인구이다. 그러므로 2017년 경부터 예상되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는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 생애주기 이론(life-cycle theory)에 따르면 노령인구는 소비의 주체이지 저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그 경제의 저축률이 높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2020년경부터는 국내저축 규모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저축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투자재원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둔화됨을 의미하므로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을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재정수지는 순조롭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정산문제 및 복지관련 정책,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성장 잠재력의 둔화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여건을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 재정계획

외환위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확대된 자금의 시점에서는 재정을 다시 건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 1999년 초부터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이 계획도 수정을 거듭하여 가장 최근의 계획은 통합재정수지의 균형목표를 당초보다 앞당긴 2003년으로 정하고 2004년부터는 나라 빚을 갚아 나가며 2014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건전한 재정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정책수단은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세출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그리고 이 계획이 약속하고 있는 세출억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면 2003년의 균형재정 달성목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원금 만기가 대규모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2003년부터인 까닭에 그 때까지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바로 중기 재정계획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간소화에 주력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마치 빨간 불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멈추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전진할 수 있듯이, 낼 세금은 내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도록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조세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여건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증세를 하되 세율을 높이는 데 의존하지 말고 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소득 및 부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구조조정의 비용을 과중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정책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절 공공행정과 정부부문 생산성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1954년)의 최빈국에서 1995년 1인당 소득 10,850달러, 일약 세계 11대 교역국으

로, 또한 1996년에 OECD 회원국으로 지난 배경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 및 지방재정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GDP 가운데 정부부문이 기여하는 정부소비 및 공공투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이 비중이 말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공공부문은 그 동안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한강의 기적으로 나타났을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이러한 선도적 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그리고 일본의 기술과 중국, 인도, 동남아, 동유럽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국산품이 활로를 잃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 공공부문이 과거와 같은

〈표 20-9〉 정부 소비 및 공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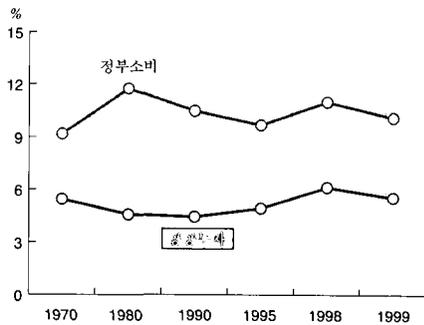
(단위 : %)

	정부소비	공공투자	소비·투자
1970	9.15	5.41	14.55
1975	10.90	3.50	14.39
1980	11.72	4.54	16.26
1985	10.31	4.50	14.81
1990	10.46	4.40	14.85
1995	9.66	4.89	14.55
1996	10.15	5.37	15.52
1997	10.07	5.72	15.79
1998	10.98	6.10	17.08
1999	10.09	5.51	15.60

주 :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소비 및 공공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림 20-6] 정부소비 및 공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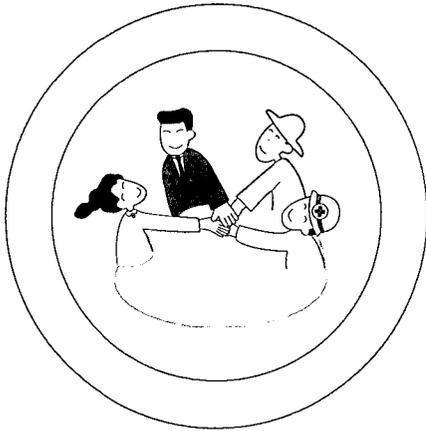
리더쉽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국가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부문이 비효율적이라면 경제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할 적당한 기준이 없다. 이를테면 민간부문에서는 원활한 가격 시그널의 작동 결과 임금이 결정되지만, 공공부문의 임금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기보다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수치분석에 의한 판단과 아울러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공부문 성과의 평가를 민간기업의 경우처럼 수익성과 같은 계량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곧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

다. 단순히 공무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정부부처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세목이 얼마나 많으나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이거나 잘못된 평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지식화·정보화 되어가는 세계시장을 헤쳐 나가며 있어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립된 역할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며 권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V. 산업 및 기업활동

제21장 산업활동 개관

제22장 농림어업

제23장 광공업

제24장 건설업

제25장 운수업

제26장 정보통신업

제27장 금융·보험업

여 백

제 21 장 산업활동 개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은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나라 전체의 총생산액이 얼마인지 또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며, 소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알아 봄으로써 나라 전체의 경제수준이나 발전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경제상황을 가장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산업활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크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면, 생산을 통해 얻어진 소득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측면, 그리고 이렇게 분배된 소득이 지출되는 측면에서 각각 관찰될 수 있다. 산업활동이란 이러한 경제활동의 3가지 측면 중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산업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즉, 산업이란 비슷한 내용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개인서비스업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사, 세탁, 이발 등)를 제공하는 생산자들의 집합을 말한다.

산업은 넓게 또는 좁게 나눌 수도 있다. 전체 산업활동을 넓게는 1차산업(자연으로부터 생산물을 채취하는 산업), 2차산업(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 3차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산

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을 넓은 단계의 분류로부터 점차 세부적인 단계로 분류해 나가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1963년 4월 제정되었다. 이후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 반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는 제8차 개정(통계청 2000.1.7 고시)으로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1절 경제발전과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나 자연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산업이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사람을 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이 치중하게 된다. 또 경제수준이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산업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후진국들은 생산물의 가치는 낮지만 별다른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을 위주로 하게 된다.

국가마다 다른 자연적 조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산업활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라의 산업활동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는 발전한다. 거꾸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낮은 수준의 산업활동은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어 점차 높은 수준의 산업활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이 높아지는데,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낮은 수준의 산업활동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이러한 산업활동은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업활동의 수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산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높은 가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사람)과 자본(돈)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데, 산업활동의 수준을 높이려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기술이 고급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생산을 수행할수록, 그리고 좋은 기계를 갖추는 것과 같이 생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또한 더 뛰어난 기술을 채택할수

록 산업은 발전하고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가운데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 나라 전체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후자는 쇠퇴하게 된다. 또 하나의 산업발전 방향은 동일산업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같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사람의 손이나 원료의 투입을 낮추는 방향,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더 좋고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활동의 중심이 낮은 수준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동일 산업내에서도 생산활동 방식이 진보되는 현상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섬유 등 경공업에 중점을 두다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으로 산업활동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 그리고 저급품을 생산하던 섬유산업이 점차 고급품을 생산하게 된 것 등이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산업활동의 중심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으로 이동하든, 혹은 기존 산업이 고도화되든 관계없이 이러한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좀 더 우수한 투입물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가발제조업」에 비해 최근의 「반도체산업」이 뛰어난 연구인력, 우수한 기술자, 대규모의 자본, 최첨단 설비 등 고도의 투입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산업이 어떻게 고도화되어 가는지 의류산업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질기고 따뜻한 옷만 만들면 충분하였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규격화된 옷감과 재봉기술이 좋은 숙련기능공들만 있으면 옷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옷을 선택하는 기준도 까다롭게 되어, 좀 더 좋은 옷을 만들지 않고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감과 기술자 뿐만 아니라 색상을 고르는 안목, 패션 감각을 가진 디자인 능력,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마케팅 능력 등과 같은 고도의 투입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른 투입물 구성의 변화에 따라 산업 생산의 핵심축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의류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생산의 핵심이 숙련기능공에 의한 재봉기술에 있었으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 생산의 핵심축이 디자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제2절 산업발전 과정

산업발전의 특징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 위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던 경제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계기로 점차 자립의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개발의 방향을 공업화로 정하였다. 그러나 공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또 공장을 건설한 후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야 할 시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국내에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자본도 기술도 모두 부족하였으며, 국민들의 소득도 크게 낮았으므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이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저임의 풍부한 국내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을 통해 이것을 외국에 판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위해 정부는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은 이후 점차 강도

는 약화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그 기조는 유지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은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산업구조도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정보산업을 비롯한 신산업을 각광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신산업과 기존의 산업군이 다양한 형태로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발전형태는 우리 경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져왔다. 부족한 국내의 생산자원을 정부가 한 곳에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산업발전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때 경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였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IMF 사태라 불리는 1997년말의 경제위기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주도 산업발전의 좋지 못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변화의 패턴

산업구조란 나라의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는 전체 경제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비중은 줄어들고 2차산업(공업)의 비중이 커진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이르면 2차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표 21-1>에는 세계 주요국가의 산업구조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1차 및 2차산업(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 국가이면서 과거 세계의 공업을 선도하였던 미국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이 72%를 차지하여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이러한 낮은 농림어업 비중, 높은 서비스업 비중의 산업구조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예를 보듯이 광공업의 비중도 높지만 1차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1998년간 주요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1980년에 이미 1차산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에 주로 제조업을 중

〈표 21-1〉 주요국가의 산업구조

(단위 : %)

	농 립 어 업		광 공 업 ¹⁾				서 비 스 업	
	1980	1998	1980	1998	제 조 업		1980	1998
					1980	1998		
한국	15	5 ²⁾	40	44 ²⁾	28	32 ²⁾	45	51 ²⁾
미국	3	2	33	26	22	18	64	72
일본	4	2	42	37	29	24	54	61
프랑스	4	2	34	26	24	19	62	72
영국	2	2	43	31	27	21	55	67
덴마크	5	4	29	29	20	21	66	67
중국	30	18	49	49	41	37	21	33
인도네시아	24	20	41	45	14	25	34	35
인도	38	29	24	25	16	16	38	46
태국	23	11	29	41	22	32	48	48

주 : 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구성비임

1)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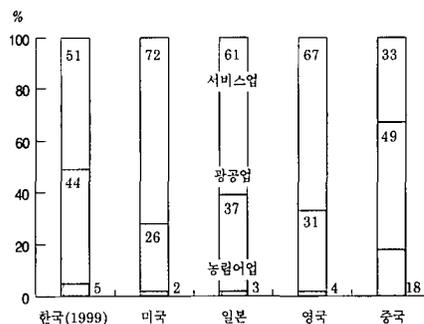
2) 한국은 1999년 통계치임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심으로 한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그 감소분 만큼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는 농림어업비중의 감소가 광공업 비중의 증가로 연결되었지만, 중국, 인도 등은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지난 19년간 10% 포인트나 줄어든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추세상으로도 비중

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주요국가의 산업구조(1998)



산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상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2>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는 1970년의 각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액(불변가격)을 100이라 하였을 때 1981년, 1990년 및 1999년의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액이 지수로서 표시되어 있다. 국내총생산은 1999년 777로서 지난 29년간 약 7.8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농업·임업·어업」과 「광업」은 각각 1.9배 및 1.6배로 확대된 반면에 여타 산업은 평균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제조업」은 23.7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50.2배나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구조는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표 21-3>에서 보듯이 1970년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이 27.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이 산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 1999년에는 불과 5.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광업」 또한 1970년의 1.5%에서 1999년에는 0.4%로 줄어들었으며, 이외에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16.8%에서 10.9%로 낮아졌다. 이들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대되었다. 현대 공업사회에서 생산부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이 1970년의 21.2%에서 1999년 31.8%로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7.0%에서 19.7%로 증대되는 등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21-2>와 <표 21-3>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70~1999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부문은 약 1.5배(21.2→31.8%), 「운수·창고·통신업」은 별다른 변화(6.8→7.0%)를 보이지 않았는데 비하여,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3배(7.0→19.7%) 가까이 증대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중 이들 산업의 국내총생산액(실질GDP) 증가율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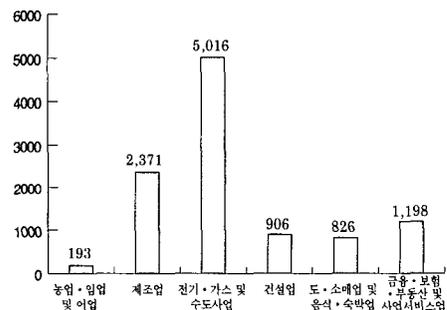
<표 21-2> 산업별성장추이(1995년 불변 가격 기준, 1970 = 100)

	1981	1990	1999 ¹⁾
국내총생산	218	469	777
농업·임업 및 어업	134	159	193
광업	176	184	157
제조업	465	1,234	2,37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18	2,251	5,016
건설업	251	721	906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217	524	826
운수·창고 및 통신업	359	759	1,63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34	611	1,198

주 : 1)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림 21-2] 1970년대비 1999년 국내 총생산



〈표 21-3〉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 구성비 %)

	1970	1981 ¹⁾	1990	1999 ²⁾
산업	90.0	88.6	90.3	91.0
농림어업	27.1	15.5	8.5	5.0
광업	1.5	1.7	0.8	0.4
제조업	21.2	28.3	28.8	31.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	2.3	2.1	2.6
건설업	5.1	7.0	11.4	8.8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6.8	13.4	13.4	10.9
운수·창고 및 통신업	6.8	8.1	6.7	7.0
금융·보험업	7.0	9.6	14.7	19.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	2.7	3.9	4.9
정부서비스	7.7	7.7	7.4	7.4
기타	2.3	3.7	2.3	1.6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주 : 경상가격 기준 구성비임

- 1) 1980년은 냉해로 인한 농산물 흉작, 제2차 석유 파동 영향 등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던 해 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는 부적절하여 1981년 통계를 이용하였음
- 2)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교해 보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2배)에 비해 「제조업」(24배)과 「운수·창고·통신업」(50배)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통계의 잘못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순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경상가격, 산업성장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의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낮아져 왔다는데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제조업」 및 「운수·창

고·통신업」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이들 부문의 생산물의 가격이 여타부문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산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경상가격, 불변가격, 상대가격

경상가격이란 명목가격이라고도 하는데 화폐가치로 표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1985년의 운동화 한 켤레가 5,000원이고 1995년은 20,000원이라면 이 가격이 바로 1995년과 10년 전의 운동화에 대한 경상가격이다. 불변가격이란 품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 역시 동일하다고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예를 든 운동화의 경우 품질이 같다면 경상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4배로 올랐지만 불변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양년도의 가격은 같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가격이란 두 물건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소형TV의 가격이 1985년, 1995년 모두 10만원이라 한다면 운동화와 TV의 교환비율은 20:1에서 5:1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TV에 대한 운동화의 상대가격은 4배로 높아졌으며, 거꾸로 운동화에 대한 TV의 상대가격은 1/4로 낮아진 것이 된다.

제3절 산업의 모습

산업의 전반적 모습

통계청이 실시한 『1999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결과를 보면, 1999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92만7천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수는 1,292만명에 이른다. 1993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27.0%, 종사자수는 5.5% 늘어난 수

〈표 21-4〉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1993	1996	1999	1993	1996	1999
전산업	2,304,250	2,807,802	2,927,330	12,245	14,007	12,920
농업, 임업	717	2,095	2,164	7	25	23
어업	443	852	865	18	38	38
광업	2,779	2,587	2,115	57	36	22
제조업	282,565	313,656	297,416	3,936	3,754	3,170
전기, 가스, 수도	1,295	1,321	1,392	39	53	57
건설업	51,799	69,417	64,777	595	1,061	652
도매 및 소매업	897,754	999,421	909,205	2,396	2,623	2,346
숙박, 음식점업	408,512	554,121	601,117	1,037	1,377	1,453
운수업 ¹⁾	128,743	206,808	238,963	591	750	737
통신업 ²⁾	3,727	4,784	6,687	83	119	126
금융 및 보험업	28,328	37,465	35,888	731	784	618
부동산 및 임대업 ³⁾	75,807	91,318	97,206	196	295	315
사업서비스업 ⁴⁾	43,248	53,307	61,657	316	515	537
공공, 사회보장	15,841	17,324	12,290	548	613	553
교육서비스	84,897	102,266	102,333	658	819	866
보건, 사회, 복지	31,738	45,117	59,144	258	354	431
오락, 운동관련사업 ⁵⁾	68,579	89,584	115,374	189	250	285
기타 개인서비스업 ⁶⁾	177,478	216,359	318,737	539	541	690

주 : 1) 1993 및 1996년 통계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가운데서 「통신업」을 제외한 것임

2) 1999년 통계에는 별도로 분류된 「통신업」에 해당하며, 1993 및 1996년 통계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가운데서 포함된 「통신업」을 분리한 숫자임

3)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가운데 「부동산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을 합한 숫자임

4)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가운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및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을 합한 숫자임

5)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운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숫자임

6)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운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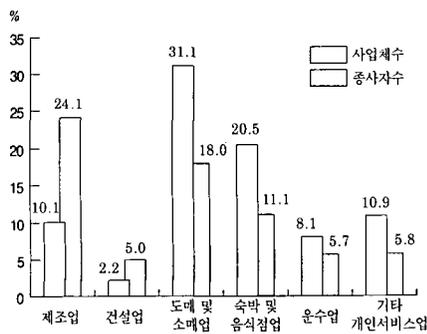
〈표 21-5〉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1999)

(단위 : %)

산 업 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 업 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10.2	24.5	부동산 및 임대업	3.3	2.4
건설업	2.2	5.0	사업서비스업	2.1	4.2
도매 및 소매업	31.1	18.2	공공, 사회보장	0.4	4.3
숙박, 음식점업	20.5	11.2	교육서비스업	3.5	6.7
운수업	8.2	5.7	보건, 사회, 복지	2.0	3.3
통신업	0.2	1.0	오락, 운동관련사업	3.9	2.2
금융 및 보험업	1.2	4.8	기타 개인서비스업	10.9	5.3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

[그림 21-3] 주요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1999)



현재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전체 사업체수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0.9%, 「제조업」이 1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의 주요 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4.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각 18.2%와 11.2%로 뒤를 잇고 있다. 사업체수는 「도·소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산업에 크게 편중되었으나 종사자수는 제조업을 제외한다면 산업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대체로 영세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체

치이다. 1993~1996년간에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가 크게 늘어났으나, 1996~1999년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체수는 근소하게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종사자수는 오히려 약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현황을 주요 산업별로 알아보기로 하자. 「농업·임업 및 어업」 부문은 총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여기서는 일단 설명을 제외하기로 한다. 1999년

당 종사자수가 적은 반면,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기업화가 진전된 산업으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체 규모별 현황

<표 21-6>에서 사업체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종사자 1~4인의 영세규모 사업체가 약 254만개로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00~299인과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각각 0.3% 및 0.1%에 머물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6%가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 1~4인의 영세사업체에서 일하

는 종사자수는 약 34.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종사자 5~99인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40.9%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 및 대규모 사업체에도 9.7%와 14.4%가 각각 종사하고 있어, 이들 사업체는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1999년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면 흥미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 기간중 사업체수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영세사업체수의 비중이 6년간 1.1%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중견 및 대규모 사업체수의 비중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1~4

<표 21-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1993	1996	1999	1993	1996	1999
합 계	2,304,250 (100.0)	2,807,802 (100.0)	2,927,330 (100.0)	12,245 (100.0)	14,007 (100.0)	12,920 (100.0)
1-4인	1,972,055 (85.6)	2,400,242 (85.5)	2,538,389 (86.7)	3,460 (28.5)	4,265 (30.4)	4,509 (34.9)
5-99인	321,467 (14.0)	395,626 (14.1)	378,784 (12.9)	4,728 (38.6)	5,604 (40.0)	5,289 (40.9)
100-299인	7,922 (0.3)	8,864 (0.3)	7,767 (0.3)	1,288 (10.5)	1,440 (10.3)	1,257 (9.7)
300인 이상	2,806 (0.1)	3,070 (0.1)	2,390 (0.1)	2,769 (22.6)	2,698 (19.3)	1,865 (14.4)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

〈표 21-7〉 산업별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1999)

(단위 : 명)

산 업 명	평균종사자수	산 업 명	평균종사자수
전산업	4.4	통신업	18.8
제조업	10.7	금융 및 보험업	17.2
전기, 가스, 수도사업	41.1	부동산 및 임대업	3.2
건설업	10.1	사업서비스업	8.7
도매 및 소매업	2.6	공공, 사회보장	45.0
숙박 및 음식점업	2.4	교육서비스	8.5
운수업	3.1	보건, 사회, 복지	7.3
오락, 운동관련	2.5	기타 개인서비스업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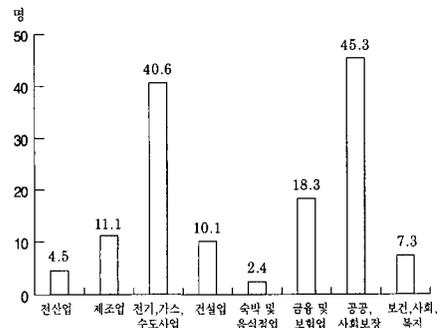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

인의 영세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1993년의 28.5%에서 1999년에는 34.9%로 무려 6.4%포인트나 늘어났다. 반면 종사자수 300인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 점유율은 1993년의 22.6%에서 1999년에는 14.4%로 무려 8.2%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는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퇴조, 인력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개인 사업의 확대, 산업의 서비스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6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러한 사업체 규모양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놀랄 만하다.

산업별 사업체의 평균규모를 보면 <표 21-7>에서 보듯이 1999년의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통계의 의미가 없는 「농업 및 임업」, 「어업」을 제외할 경우

[그림 21-4] 주요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1999)



종사자기준으로 사업체의 평균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공공, 사회보장」부문으로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45.0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로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10.7인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평균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평균규모가 2~3인의 영세한 산

업으로서는 「도매 및 소매업」, 「오락, 운동 관련 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다. 사업체규모가 영세한 이들 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히 고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 변화 모습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계자료의 제약상 1993~1999년의 6년간 통계를 통하여 산업이 유형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경제발전 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쇠퇴하는 산업도 등장한다. 앞으로 비중이 더욱 낮아질 1차산업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이 정체 혹은 쇠퇴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기준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 성장둔화 산업

■ 제조업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종사자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사업체수의 경우 199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6년은 111로 늘어났으나, 1999년은 105로 줄어들고 있다. 이 기간중 전산업의 사업체수 변화와 비교해 보면 제조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의 위축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93년의 종사자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96년에는 95, 1999년에는 81로 6년간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수는 8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국민경제 상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근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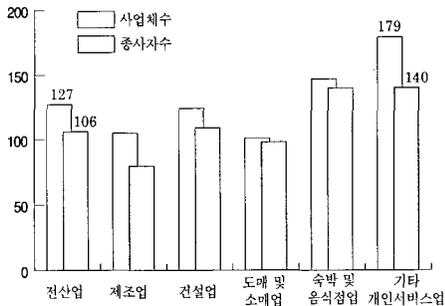
〈표 21-8〉 주요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지수(1993=100)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1999	1996	1999
전산업	122	127	114	106
제조업	111	105	95	81
건설업	134	125	178	110
도매 및 소매업	111	101	109	98
숙박 및 음식점업	136	147	133	140
통신업	128	179	144	152
사업서비스업	123	143	163	170
오락, 운동관련사업	131	168	132	151
기타개인서비스업	122	180	100	128

주 : 각 산업별로 199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100으로 보고 환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

[그림 21-5] 1999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993 = 100)



나마 상승되어온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국내총생산 측면에서도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강점은 제조업에 있었으며, 국제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향후 추이는 중요하다 하겠다.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감소와 관련하여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빠른 성장이다. 이들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제조업은 이러한 산업과 연계를 통해 더욱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제조업은 재화의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화·고도화함으로써 효율이 높아지고, 제조업에 부수되는 여타 기능은 기업서비스업으로 이전되어 산업 상호간의 협조·보완관

계를 통해 관련 산업이 동시에 고도화되어 가는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은 ‘유통혁명’ 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1990년대 들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유통업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 및 물류기술의 발달 등 공급측면의 요인과 소비행동의 변화 등 수요측면의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결과이다.

유통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상당한 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된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제외할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는 역설적으로 유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결과이다. 「도매 및 소매업」이 중심이 되는 유통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가운데 가장 낙후된 부문의 하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유통혁명 과정에서 사업체의 대형화, 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계적 영세사업체의 퇴출과 동시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통업의 기본적 기능은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하는데 있다. 유통이 효율화된다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춘다는 것, 즉 유통마진의 축소, 물건의 거래에 따르는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전체적인 양이 증가하지 않는 한, 유통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화될수록 유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유통업의 발전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업

제조업과 함께 실물생산부문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인 건설업은 1993~1996년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그 이후로 사업체 및 종사자 양측면에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건설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국내 주요건설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서면서 건설시장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보다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상당기간은 건설수요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점차 정비된

이후에는 공공건설수요가 낮아지고, 주택 보급률의 확대와 산업부문의 성장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설수요가 상당히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저가격에 바탕을 둔 시공중심의 건설사업은 점차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건설수요는 점차 축소되어 우리나라 건설업도 선진국과 같이 설계, 감리, 공정관리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산업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고성장 산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은 사업체나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업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가스·수도사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첨단산업 분야로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소비활동의 다양화와 풍요로운 생활 추구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산업분야로서 「숙박, 음식점업」, 「오락,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확대 분야로서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 복지사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규모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가운데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산업분야와 「숙박,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저생산성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첨단산업분야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산업분야는 경제전체의 기업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분야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부문과 여타 산업의 투입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독자적 시장의 형성이 기대되는 산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분야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등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고, 향후 무선화상전화 등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산업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고속정보통신망 등 새로운 사업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의 특징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향후 몇 년간의 단기예측조차 어렵다는데 있다.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과 이

를 둘러싼 기존기업 및 신규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들 산업은 상승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여타 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으로는 「사업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기업활동이 거대화, 복잡화되고 활동영역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법률, 광고, 컨설팅, 정보시스템 개발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이들 산업의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산업은 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파생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이므로 그 자체가 거대산업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우며, 그 대신 이들 산업의 성과는 타산업의 성과로서 간접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분야는 이와 같이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중심산업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들 산업분야는 발전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통신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흡수력이 크지 않으며, 아직은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또 수요가 여타 산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는 2차 수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는 그 자체의 성장보다는 제조업, 유통업 등 기존의 산업분야와 연계됨으로써 여타산업의 효율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게 되는 산업발전 촉매제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컴퓨터 관련산업의 경우 컴퓨터제조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은 그 자체의 시장규모로 볼 때 현재로서는 대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관련사업은 기업의 생산관리, 사무자동화,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등에 기여함으로써 여타 기업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해 주고 있다. 즉, 컴퓨터 관련산업의 성과는 컴퓨터관련 산업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활동은 더욱 전문화, 고도화 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능별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기업간 협조·보완관계의 강화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은 앞으로 더욱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 전통적 노동집약형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우리 경제의 저생산성·전근대적 산업 부문의 중심을 이루는 산업분야로서 종사자수 기준으로 17%에 육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 산업의 경제적 기능은 거의 무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소비지향적 업종 등과 같은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국민들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 소비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 혹은 경제발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였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에서 이탈되는 고용과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고용을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유망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산업분야는 비록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산업규모 자체가 작고, 또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흡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고용측면에서 지금보다는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생활도 점차 고도화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보람있게 하는 소비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외식, 여행, 건강, 스포츠, 레저 활동 등에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는 소비생활의 고도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에 투입되는 시간을 절약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정내에서 해결하였던 가사일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는 좀 더 고도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간접적 수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산업의 등장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혁명, 생명공학 등 첨단 신산업의 확산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경

제의 서비스화’, ‘경제의 소프트화’ 혹은 ‘탈공업화 사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변화에 따라 산업의 중심으로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산업을 일반적으로 ‘신산업’, 또한 신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경제를 ‘신경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신경제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어렵지만, 대체로 새로운 금융기법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부문, 컴퓨터 및 정보관련 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 고도 사업서비스업 등의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벤처기업 등 역동성을 갖춘 새로운 기업군이 경제활동의 주역을 이루게 되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정보산업’, ‘생명공학’, ‘지식산업’, ‘문화산업’, ‘벤처산업’ 등의 개념이 산업분류상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분류는 특정의 기술이나 기업의 활동형태의 특징에 따라 부여된 정의로서, 이들 산업은 새로운 사업의 등장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의 혁신·변화에 의해 초래되기도 한다. 정보산업의 예를 들자면 정보산업에는 인터넷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지만, 출판업 혹은 컴퓨터제조업(제조업), 인텔리전시 빌딩 건설(건설업), 새로운 물류시스템의 개발(도매 및 소매업), 전자금융거래(금융업) 등과 같은 많은 기존 산업들도 정보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신산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의 발전이 기존산업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신산업 혹은 신경제는 기존 산업분야에서 신기술의 접목과 이를 통한 혁신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의 산업변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경제적 변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래 우리 산업의 모습을 예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먼저 수요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신산업부문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 게임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신산업 상품에 대한 수요는 비록 그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 주소비품 혹은 기초소비품이 아니며, 따라서 전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대상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산업부문은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부문의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이다.

기존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까다롭게 변모하고 있다. 기존의 제품에 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 좀 더 개성적인 제품 등 소비가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은 디자인, 성능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 정보기술, 감성 등 새로운 투입요소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투입요소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의 전문기업과 상호 협조·보완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즉, 생산요소로서의 정보, 서비스, 지식 등의 투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간 거래(B2B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앞에서 지적한 신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수요의 증가는 기존 산업분야에 있어서 투입물 구성의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원재료, 에너지비용 등 실물 투입물의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디자인, 색상, 광고, 개성 등과 같은 무형의 투입물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에 의해 기업활동의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협조·보완 관계의 증대는 기존 산업의 질과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기존의 중심산업들은 끊임없는 효율화와 함께 산업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의 실질적 생산은 향상되고 고도화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 22 장 농림어업

농림어업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국가 경제의 중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뒤 광공업으로, 최근에는 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 왔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위상이나 내부 구조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당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에서 27.1%를 차지했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9년에는 5.0%로 축소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농어가 인구도 도시로의 이주와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른 산업으로 전업 등에 따라 줄었다. 1965년

에는 100명 중 60명이 농어가 인구였으나 1999년에는 100명 중 10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용지가 공공용지, 공장부지 및 주택용지로 점차 바뀌면서 1965년 전 국토의 22.9%에서 1999년에는 19.1%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농업국가들의 공업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농어가수, 농림어업 취업자수 및 농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표 22-1〉 농림어업의 위상

(단위 : %)

	국내총생산 비중			총인구중 농어가 인구비중	취업자 중 농림어업 비중			국 토 중 경지면적 비 중	국가예산중 농림어업 예산비중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¹⁾		한 국	일 본	대 만 ²⁾		
1965	-	-	-	59.5	58.5	23.5	46.5	22.9	-
1970	27.1	22.7	40.6	48.3	50.4	17.4	36.7	23.9	-
1975	25.0	27.5	39.2	40.0	45.7	12.7	30.4	22.7	5.9
1980	14.8	29.7	46.0	30.6	34.0	10.4	19.5	22.2	6.0
1985	12.6	30.5	47.7	22.6	24.9	7.7	17.5	21.6	9.3
1990	8.5	29.6	52.5	16.7	17.9	7.2	12.8	21.2	9.6
1995	6.2	29.8	54.4	11.6	12.4	5.7	10.5	20.0	15.9
1999	5.0	32.2	53.0	9.7	11.6	5.3 ³⁾	8.9 ³⁾	19.1	9.6

주 : 1) 서비스업에는 건설업, 전기가수도업, 서비스업을 포함

2) 대만은 농업취업자 비중임

3) 일본과 대만의 1999년 수치는 1998년 자료임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계조사보고서』,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에서는 농림어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농림어업은 의식주의 3대 요소 중에서도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식량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제1,2차 오일쇼크보다 더욱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다른 산업보다 성장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특성과 과잉 인력의 해소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통계자료를 통하여 농림어업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한다.

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노년층 위주로 인구가 재편됐다. 1970년에는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9%이었으나, 1999년에는 32.2%로 증가했다. 또 19세미만의 농가인구는 1970년 53.9%에서 1999년 19.5%로 축소되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영농대행회사의 출현을 가져왔다. 농업생산 및 경영 방식은 물론 전

제1절 농업

농업구조의 변화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체 산업구조에서의 위치가 바뀌었음은 물론 농업 내부 구조도 수천 년 역사 이래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인구의 연령층, 작물별 경지면적,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 비중, 농가의 경지면적 규모의 변화 및 농업법인의 탄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농업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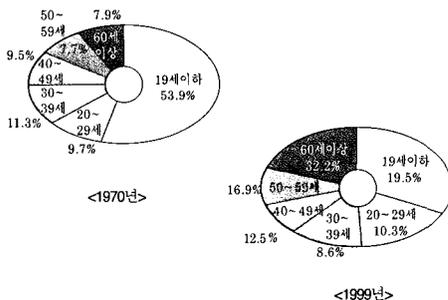
<표 22-2>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구성비

(단위 : %)

	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70	100.0	53.9	9.7	11.3	9.5	7.7	7.9
1980	100.0	45.4	12.7	8.8	12.7	9.9	10.5
1990	100.0	31.6	12.2	9.9	11.8	16.7	17.8
1995	100.0	22.7	11.8	9.6	12.1	17.9	25.9
1999	100.0	19.5	10.3	8.6	12.5	16.9	32.2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2-1]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구성비



〈표 22-3〉 작물별 경지이용면적

(단위 : 천ha, %)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특작	채소	과실	뿌발	기타
1965	1,228	932	365	213	215	61	151	43	50	61
1970	1,203	834	365	181	123	89	254	60	85	70
1980	1,233	360	244	92	53	118	359	99	27	180
1990	1,244	160	188	40	37	130	277	132	8	195
1995	1,056	90	132	40	28	122	322	172	2	233
1999	1,066	77	108	46	29	104	289	171	1	226
99/65 (%)	-13.2	-91.7	-91.7	-78.4	-86.5	70.5	91.4	297.7	-98.0	270.5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농업구조의 변화는 작물별 경지이용면적의 변화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농작물 생산의 수익성 변화와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농가에서는 일부 작물의 생산을 기피하고 고수익 작물 위주로 전환하면서

작물별 경지 이용면적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우리의 주식인 미곡 생산면적은 공공시설용지, 주택용지, 공장부지, 도로 또는 다른 작물 생산지로 전용됨으로써 1999년에는 1965년에 비하여 13.2% 줄어들었다. 맥류(보리쌀),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표 22-4〉 전업 및 겸업 농가구성비

(단위 : %)

	한 국				일 본			
	전업 농가	겸업 농가	겸업		전업 농가	겸업 농가	겸업	
			1종 겸업	2종 겸업			1종 겸업	2종 겸업
1970	67.7	32.3	19.7	12.6	15.6	84.4	33.6	50.8
1975	80.6	19.4	12.5	6.9	12.4	87.6	25.4	62.1
1980	76.2	23.8	13.7	10.1	13.4	86.6	21.5	65.1
1985	78.8	21.2	8.7	12.5	14.3	85.7	17.7	68.0
1990	59.6	40.4	22.0	18.4	15.9	84.1	17.5	66.5
1995	56.6	43.4	18.5	25.0	16.1	83.9	18.8	65.1
1997	58.7	41.3	14.2	27.1	18.2	81.8	17.2	64.6
1998	63.2	36.8	12.6	24.2	17.2	82.8	15.1	67.6
1999	63.6	36.4	12.5	23.9	17.5	82.5	14.5	68.0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일본 총무청 통계국, 『일본통계연감』, 각 호

와 잡곡 생산면적은 수입농산물로 인한 생산 기피의 영향으로 70.4~91.7%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965년 당시만 해도 과수 재배면적보다 넓은 5만ha에 달했던 병밭은 값싼 중국산 견직물의 영향으로 현재는 1천ha로 줄어든 가운데 의약품 등 특수목적용 재배용지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반면 특용작물, 채소, 과실 및 시설작물 등의 생산은 수익성 향상과 휴경지의 대체 작물로서 인기를 끌며 재배면적이 1965년보다 70~298% 증가하였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서면서 중국산을 위시한 농산물 수입 증가로 1996년 이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전업 농가 비중의 변동을 통해서도 농업구조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전업 농가의 비중이 계속 감소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전업 농가의 비중은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10%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농촌의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타 산업에 대한 취업여력이 적고, 고용 흡인력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의 도시 편중 등으로 취업 기회도 줄어들어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소득 증대를 위해 타 산업으로 전업하거나 겸업을 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업농의 비중은 보다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종 겸업 농가(농업수입보다 농업외 수입이 더 많은 농가)가 1종 겸업 농가(농업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더 많은 농가)보다 더 많아졌다. 농업구조가 고도화된 일본과 같은 형태로 겸업 농가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겸업 농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 타 산업으로 진출한 것과 농공단지 또는 마을 공동의 가공생산시설이 많이 생겨난 것, 그리고 도시주민들의 관광 증가에 맞춰 민박·음식점 수요가 늘어난 것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넷째, 농가 경지규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1970년 92.5a에서 1999년 137.4a로 늘어났다. 농가당 경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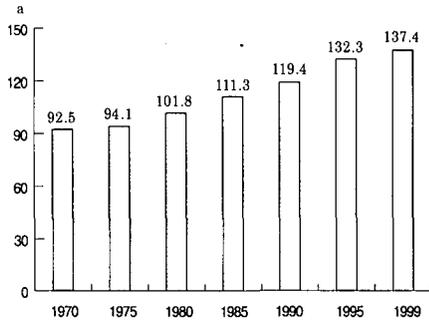
<표 22-5> 농가당 경지면적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단위 : a. %)

	농가 당 경지 면적	경지규모별 농가수 비중					
		0.5ha 미만	0.5~ 1.0ha 미만	1.0~ 1.5ha 미만	1.5~ 2.0ha 미만	2.0~ 3.0ha 미만	3.0ha 이상
1970	92.5	31.2	34.4	18.0	7.8	5.0	1.5
1975	94.1	29.0	36.2	18.1	7.9	4.7	1.5
1980	101.8	28.4	35.1	20.3	8.9	5.0	1.4
1985	111.3	27.7	36.5	20.3	8.3	4.5	1.2
1990	119.4	27.3	31.2	19.9	10.8	7.3	2.5
1995	132.3	28.8	29.3	17.7	10.2	8.2	4.7
1999	137.4	35.2	28.5	15.7	8.4	6.5	4.6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그림 22-2] 농가당 경지면적



적이 늘어난 것은 농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보다 농가수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가당 경지면적의 분포를 보면 2ha 이상 경작하는 농가의 비중은 1970년 6.5%에서 1999년에는 11.1%로 증가한 반면, 소규모 경작 농가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0.5ha 미만의 농토를 경작하는 농가의 비중이 외환 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특용작물 및 시설농업 등 고소득작물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1990년대 중반이후 농업법인이 급속히 늘어난 점도 농업구조의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과거엔 정부가 소농 보호 위주의 농업정책을 펴면서 법인의 농경지 소유를 금지해 농업법인 설립이 거의 불가능했었으나, 1991년 이후 기업농을 육성하려는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1990년에 5개 밖에 없던 농업회사법인은 1998년 말까지 1,670개로 늘어났으

〈표 22-6〉 농업법인 설립

(단위 : 개)

	1990	1992	1994	1996	1998	계
합계	5	228	1,356	1,440	383	6,381
영농조합법인	-	64	1,015	1,143	338	4,711
농업회사법인	5	164	341	297	45	1,670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며, 영농조합법인은 1991년에 처음 설립된 뒤 1998년 말까지 4,711개로 급증했다. 농업회사법인이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전 단계 중 일부 또는 전체 작업을 위탁받아 영농하는 형태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농업 생산

(1) 농산물 생산

농가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경지면적의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식량 작물을 제외한 채소·과실 및 화훼의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식량작물 생산이 1965~1999년 사이에 8.0% 감소한 것은 미국 생산량이 같은 기간 5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의 생산이 같은 기간 30~85%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1999년의 쌀 재배면적이 1965년에 비해 13.2% 줄었는데도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50% 정도 증가한 것은 품

〈표 22-7〉 농산물 생산

	식량작물 (천t)	미 곡 (천t)	채소류 (천t)	과실류 (천t)	화 躑 (백만원)	10a당 수량	
						미곡(논벼) (kg)	두류(콩) (kg)
1965	6,524	3,501	-	-	-	289	57
1970	6,937	3,939	2,653	423	-	330	79
1975	7,654	4,669	4,767	543	6,716	386	113
1980	5,324	3,550	7,676	833	21,351	289	115
1985	6,990	5,626	7,763	1,464	74,599	456	150
1990	6,635	5,606	8,677	1,766	239,348	451	153
1995	5,476	4,695	10,586	2,300	508,970	445	152
1999	6,000	5,263	9,984	2,358	596,594	495	133
99/65 ¹⁾ (%)	-8.0	50.3	276.3	457.4	8,783.2	71.3	133.3

주 : 1) 채소류와 과실류는 99/70, 화躑는 99/75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躑계』, 각 호

중개량, 농업기계화, 적절한 비료 및 농약 사용 등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10a당 미곡생산량이 이 기간에 71.3%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농업 생산성은 미곡이외의 다른 농산물도 모두 향상되었으나, 맥류·두류·서류와 잡곡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농업생산성 증가보다 경지면적의 감소폭이 더 큰 데 그 원인이 있다. 채소, 과실 및 화躑 생산이 급신장한 것은 농업생산성 증가이외에 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 생산 농가의 증가, 기존 생산농가의 경지 면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식량 자급

우리나라에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작물

중 쌀과 서류를 제외한 보리쌀·밀·옥수수 및 두류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료 및 사료로 주로 사용하는

〈표 22-8〉 식량자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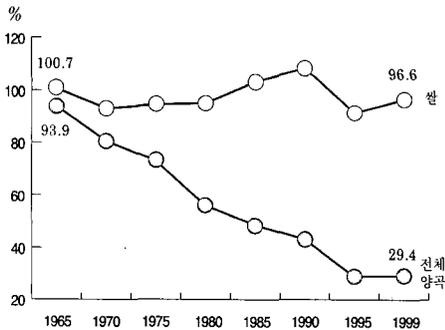
(단위 : %)

	전 체 양 곡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1965	93.9	100.7	-	27.0	36.1	100.0	100.0	100.0
19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1975	73.1	94.6	92.0	5.7	8.3	85.8	100.0	100.0
19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1985	48.4	103.3	63.7	0.4	4.1	22.5	100.0	11.6
19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19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1999	29.4	96.6	66.6	0.1	1.0	9.1	98.8	11.0

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躑계』, 각 호

[그림 22-3] 식량자급도



밀과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농산물에 의존함에 따라 식량 자급도가 1965년 93.9%에서 1999년 29.4%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지자 국내 농가들이 생산을 기피한데 그 원인이 있다. 최근에는 신도불이(身土不二) 운동에 따라 밀·보리 등의 자급도가 일시적으로 약간 높아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WTO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식량 자급도는 매년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쌀 자급률은 96.6%였는데 1998년산 작황 부진 및 WTO 가입에 따른 MMA(minimum market access) 수입분을 제외하면 거의 자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농기계 보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촌의 젊은 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정부는 인력난 및 농촌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고,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운기·이앙기·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로서 1970년에 11,884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9년에는 953,749대를 보유하여 8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기능이 유사하고, 가격도 저렴한 관리기의 등장으로 1990년 이후에는 경운기 수요 중 일부가 관리기로 대체

<표 22-9>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 및 자금지원액

(단위 : 대, 백만원)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보유 농기계	경운기	11,884	85,722	289,799	588,962	756,489	50,699	953,749
	트랙터	61	564	2,664	12,389	41,203	868,870	176,146
	이앙기	-	16	11,061	42,138	138,405	100,412	335,818
	바인더	-	-	13,652	25,538	55,575	248,009	73,256
	콤바인	-	56	1,211	11,667	43,594	66,960	84,002
	관리기	-	-	-	-	72,268	239,496	369,150
자금 지원액		2,859	15,490	88,215	143,352	450,471	681,255	634,406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됨에 따라 경운기의 증가율이 둔화했다. 경운기와 관리기 보유대수를 합하면 1999년 현재 100농가 중 96농가가 이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외 트랙터·이앙기 및 콤바인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논농사 작업 중 정지·경운작업에서 수확까지의 작업이 대부분 기계화 하면서 1960~1970년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를 이용한 정지·경운작업 등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농기계 가격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전체 지원금 규모가 1970년 28억원에서 1999년에는 6,344억원으로 늘어났다.

(4)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농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1990년까지는 계속 늘어났었다. 그러나 토질의 산성화 및 환경문제로 인하여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으로 영농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화학비료의 효능이 개선되면서 다시 줄어들고 있다. ha당 화학비료 소비량은 1970년 162kg에서 1990년에는 458kg으로 183%가 늘었으나 1999년에는 398kg으로 1990년보다 13% 줄었다. 그러나 일본 및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9년의 농약사용량은 1980년에 비해 110.3% 증가했으며, 논벼에 대한 농약 사용량도 30.8% 증가해 농약 남용 우려를

〈표 22-10〉 ha당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단위 : kg)

	화학비료				농 약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전체	논벼
1970	162.0	372.6	5.9	80.9
1975	282.0	319.3	10.9	90.0
1980	285.0	372.1	16.2	110.6	5.8	5.2
1985	311.0	430.4	21.0	93.7	7.0	5.7
1990	458.0	320.2	48.8	97.0	10.4	6.8
1995	434.0	11.8	4.6
1999	398.0	12.2	6.8

주 : 1990년 미국, 태국 화학비료 소비량은 1991년 수치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낳고 있다. 환경문제·농약 잔유량 시비 등으로 논벼에 대한 농약 사용량은 1991년(7.7kg)을 정점으로 1995년(4.6kg)까지는 줄어들었다가 1996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5) 육류 수급

1970~1999년 사이에 육류 생산은 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1970년대 중반까지 100%를 유지하던 육류 자급률은 오히려 떨어져 1999년 현재 76.7%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육류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한 것은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식품 소비형태가 양곡중심에서 육류 등으로 대체됨으로써 양곡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육류 소비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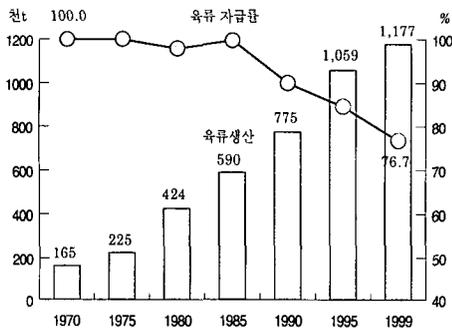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체의 50~60%를 차지해 육류 생산을 주도해 왔는데 1970년에 비해 1999년에는 7배 이상 증가했다. 쇠고기와 닭고기는 비슷한 비중을 점하며

〈표 22-11〉 축산물 생산

	축산물				유류		
	육류 (천톤)	쇠고기 (기)	돼지고기 (기)	닭고기 (기)	자급률(%)	계란 (백만개)	우유 (천톤)
1970	165	37	83	45	100.0	2,456	48
1975	225	70	99	56	100.0	2,896	160
1980	424	93	239	92	97.8	4,543	452
1985	590	118	346	126	99.7	5,390	1,006
1990	775	95	508	172	90.0	7,151	1,752
1995	1,059	155	639	265	84.6	8,261	2,014
1999	1,177	240	701	236	76.7	8,395	2,244
99/70 (배)	7.1	6.5	8.4	5.2	-	3.4	46.8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그림 22-4] 육류 생산



같은 기간 중 각각 5배, 4배 이상씩 증가했다. 우유와 달걀 생산량도 같은 기간에 각각 45배, 2배 가량 늘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이 기간 중 1.6kg에서 58.6kg으로, 계란 소비량은 77개에서 180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젓소·돼지 및 닭 사육두수도 각각 22배·7배·4배씩 증가했다. 그러나 한우는 수입 쇠고기의 영향으로 199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1.5배 증가에 그쳤다.

농가 경영

농가소득은 1998년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965년 이후 계속 늘어났다. 1965~1999년 기간 중 198배 가량 높아져 연평균 16%이상의 급성장을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260배 증가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4~5배 증가한 수준이다. 농가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보면 1994년까지는 농업소득 비중이 더 높았으나 1995년부터는 농외소득 및 이전수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농업소득의 비중이 14.5%에 그쳤던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비중은 아직도 높다.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 것은 농사를 짓는 것 외에 소매업·음식점 및 민박 등을 경영하며 얻은 겸업소득과 가구원 중 일부가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여 얻은 임금 소득이 늘어났거나 외지에 나가 일하는 자녀들의 송금액 및 국가의 공공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토지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예·저금 등 유통 자산의 증가로 농가 자산은 1965~1999년 기간 중 330배 이상 증가했다. 농가자산은 전 자산의 85~90%인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10% 정도인 유통자산(예·저금 등) 및 2% 수준인 유동자산(재고농산물 등)으로 구

〈표 22-12〉 농가경제

(단위 : 천원, 배)

	농가소득				농가자산	가계비	농가부채	일본농업 소득비중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1965	112	89	23	-	463	100	11	43.7
1970	256	194	62	-	915	208	16	31.9
1975	873	715	158	-	4,588	616	33	28.9
1980	2,693	1,755	938	-	13,384	2,138	339	20.7
1985	5,736	3,699	1,060	977	28,378	4,691	2,024	15.4
1990	11,026	6,264	2,841	1,921	79,352	8,227	4,734	13.8
1995	21,803	10,469	6,931	4,403	158,171	14,782	9,163	16.7
1999	22,323	10,566	7,034	4,723	154,226	17,123	18,535	14.4
99/65 (배)	199.3	118.7	305.8	-	333.1	171.2	1,685.0	-

주 : 1) 1980년까지는 농외소득에 이전수입을 포함한 것임

2) 농가자산 중 토지가격 평가기준을 1999년부터 인근 거래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였음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연보』, 각 호

성태 있다. 이들 자산 중 유동자산이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2,686배)했으며, 그 다음이 고정자산(310배)·유동자산(81배)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비지출(가계비)은 소비용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과 소비생활 개선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1965~1999년 기간 중 170배 정도 증가했다. 가계비 지출 중 음식물 비용보다 보건의료비·교육비·잡비 등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가계비 가운데 음식물 비용의 비중인 엔겔계수는 1970년대 40%대에서 1980년대 초반 30% 수준으로 감소했고, 다시 1980년대 중반에는 20%대로 낮아졌으며, 1999년에는 21.2%였다.

국가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농가부채는 수차례에 걸친 상환 유예 및 대

출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1965~1999년 기간 중 1,685배 증가해 농가소득의 증가율 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995년 이후 농가부채는 크게 늘어난 반면 소득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소득이 감소해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됐다. 1999년 현재 농가부채는 자산의 12% 수준으로서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에 대한 부채 비중이 1995년 42%에서 1999년에는 83%로 확대되는 등 농가부채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부채 용도는 연령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산·화훼 및 특수작물 등을 경영하거나 1.5ha 이상 경지를 전업으로 경작하는 젊은 계층의 농가에는 영농자금 마련을 위한 생산성 부채

가 많으나, 노령 계층의 농가는 자녀 교육비 등 소비성 부채가 많다. 농가부채는 상환 유예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임업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전 국토의 2/3정도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 전쟁 기간 중의 폭격 피해와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연료 및 목재로 사용하기 위한 대규모 벌채로 많은 산림이 벌거숭이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정책과 민간의 산림보호노력 및 연료대체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산림이 숲으로 다시

변했다. 1960년대 이후 전체 산림의 8%에 달하는 산지사방사업, 11%에 달하는 식재조림사업,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활동, 목재에서 연탄 또는 가스로의 가정용 연료 대체 등에 따라 1999년의 임목축적은 1965년에 비해 550% 증가했다. 그러나 ha당 임목축적은 60.4 m³로 미국의 112 m³ (1995년)와 일본의 138.5 m³ (1995년)에 비해 아직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1960년대 이후 심은 나무들이 왕성한 수령에 도달하고, 산림녹화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임목축적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산림 일부가 도로·공업용지 및 전답 등으로 바뀌면서 1965~1999년의 30년 동안 제주도 면적에 해당하는 18만4천ha의 산림이 줄어들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5년 67.2%에서 1999년에는 3.5%포인트가 줄어든 64.7%

〈표 22-13〉 산림면적, 임목축적

	국토면적 (천ha)	산림면적 (천ha)	구성비 (%)	임목축적		식재조림 실적 (ha)	산지사방 사업실적 (ha)
				(천 m ³)	ha당 축적 (m ³)		
1965	9,843	6,614	67.2	59,715	9.03	130,542	27,265
1970	9,848	6,611	67.1	68,772	10.40	125,438	4,778
1975	9,881	6,635	67.1	105,352	15.88	173,650	9,033
1980	9,899	6,568	66.3	145,694	22.18	165,583	5,855
1985	9,914	6,531	65.9	179,380	27.47	52,327	3,203
1990	9,927	6,476	65.3	248,426	38.36	37,350	926
1995	9,927	6,452	65.0	308,825	47.87	24,938	291
1999	9,943	6,430	64.7	388,588	60.43	21,232	120
99/65 (%)	1.0	-2.8	-	550.7	56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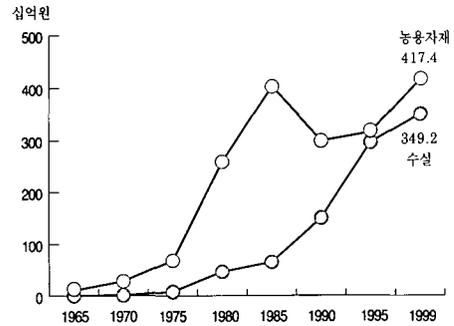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로 나타났다.

임산물 생산과 수입

임산물 생산액은 1965~1999년 기간 중 100배 이상 증가했으나 1999년 현재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전 국토의 3/2가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액이 미미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조립된 산림이 많아 임목축적량이 적고, 산림녹화를 위하여 벌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임산물 생산액은 1조7천억원에 불과하나 대기정화기능·산림휴양·맑은 물 공급·동식물 서식 보호 등 공익적 기능까지 기회비용 개념으로 평가하면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회비용평가액은 산림휴가인구의 증가와 임목축적량 증대에 따른 대기정화 및 맑은 물 공급기능

[그림 22-5] 주요 임산물 생산



의 확대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임업의 가치를 단순히 직접 생산액으로만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1999년 임업 생산액 중 목재 생산액은 전체의 6.3%인 1,092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생산액은 버섯·산나물·수실(樹實) 등 부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산물 생산액은 1965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연료 생산액은 난방 및 취사연료를 목재에서

<표 22-14> 주요임산물 생산액

(단위 : 백만원, 배)

	총생산액	용재	산나물	연료	농용자재	수실	버섯
1965	16,588	1,498	42	4,235	10,083	178	62
1970	45,455	3,845	268	11,378	27,618	971	413
1975	128,010	17,940	366	27,493	67,855	7,426	4,087
1980	410,367	35,042	918	48,402	258,721	45,925	16,401
1985	706,179	46,015	5,238	97,381	402,814	64,521	38,237
1990	731,433	63,092	25,252	61,197	298,715	150,358	64,419
1995	979,775	67,636	68,948	22,982	314,736	295,658	91,424
1999	1,726,822	109,198	123,473	14,284	417,449	349,248	182,239
99/65 (배)	104.1	72.9	2,939.8	3.4	41.4	1,962.1	2,939.3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연탄, 유류 및 LPG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1985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1999년에는 1985년의 1/6 정도에 불과했다.

원목의 국내 수요는 1980년대까지 주요 용도였던 갭목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펄프 및 일반재는 1975~1999년 기간 중 17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의 가공 수출 증대로 우리나라의 합판 수출이 급감해 수출용 수요가 1975년에 비하여 86.4%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내공급은 임목축적량 증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89.1% 증가했고, 해외수입도 같은 기간 중 23.4% 증가했다. 목재 자급률은 11~16% 수준을 보였으나 1999년에는 국내수요 둔화와 국내산 공급 증가로 다소 높아져 20% 수준을 보였다.

〈표 22-15〉 원목수급

(단위 : 천㎥, %)

	수요			공급			자급률
	계	내수	수출	계	내재	외재	
1975	6,465	2,889	3,576	6,015	896	5,119	15
1980	7,750	5,784	1,965	7,149	1,008	6,141	13
1985	7,321	6,792	529	6,766	1,188	5,578	16
1990	9,423	9,121	302	9,423	1,138	8,285	12
1995	9,284	8,939	345	9,284	1,055	8,229	11
1999	8,317	7,836	481	8,317	1,694	6,623	20
99/65 (%)	28.6	171.2	-86.4	38.3	89.1	23.4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호

제3절 어업

어업구조

어업도 지난 수십 년간 한일, 한중어업 협정 등에 따라 수천 년 역사이래 가장 급격한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어업구조의 변화는 어업인구의 연령계층,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 비중, 어업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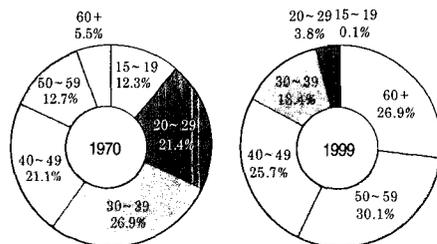
〈표 22-16〉 연령별 어업종사자 구성비

(단위 : 천명, %)

어업종사자수	계	연령별 구성비						
		15~19	20~29	30~39	40~49	50~59	60~	
1970	308	100.0	12.3	21.4	26.9	21.1	12.7	5.5
1975	283	100.0	11.7	19.1	21.9	22.6	16.3	8.5
1980	295	100.0	7.5	18.6	22.0	26.4	16.9	9.5
1985	236	100.0	1.7	16.1	22.0	29.2	21.2	9.7
1990	212	100.0	0.9	9.9	22.2	27.4	26.9	12.7
1995	176	100.0	0.0	4.5	17.0	26.7	30.1	21.6
1999	171	100.0	0.1	3.8	13.4	25.7	30.1	26.9
99/70 (%)	44.5	-	-100.0	-80.9	-50.1	-21.9	135.5	387.4

주 : 1) 99/70은 종사자수의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2-6] 연령별 어업종사자 구성비



〈표 22-1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계	어 선 비 사용	어 선 사 용	양 식 업	구 성 비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1980	134,109	46,363	31,844	55,902
1985	126,800	33,835	34,653	58,312	...	10,902	47,141	269
1990	121,525	32,628	39,170	49,727	366	18,238	28,393	2,730
1995	104,480	33,362	37,109	34,009	2,467	16,042	14,465	1,035
1999	97,754	27,178	38,216	32,360	1,703	16,631	13,695	331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가구 및 어선 세력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어업종사자 연령 구조의 변화가 눈에 띈다. 전체 어업종사자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30만8천명에서 1999년 17만1천명으로 30년 동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어업종사자는 타 산업으로의 전업 등에 따라 1970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타 산업으로 이직이 곤란한 50대 이상의 어업종사자는 같은 기간 중 증가해 50대 이상 비중이 1970년에 18.2%에서 1999년에는 57.0%로 확대됐다. 농업과 같이 어업에도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업형태의 변화이다. 1980~1999년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산 해조류 또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남의 어선에

〈표 22-18〉 전업 및 겸업어가

(단위 : 호, %)

	어 가 수					구 성 비			
	합 계	전 업	겸 업	겸 업		전 업	겸 업	겸 업	
				제1종겸업	제2종겸업			제1종겸업	제2종겸업
1975	127,885	16,944	110,941	49,642	61,299	13.6	86.4	39.6	46.8
1980	134,109	20,813	113,296	67,901	45,395	15.5	84.5	50.6	33.9
1985	126,800	22,112	104,688	70,149	34,539	17.4	82.6	55.3	27.3
1990	121,525	28,051	93,474	55,510	37,964	23.1	76.9	45.7	31.2
1995	104,480	26,016	78,464	48,455	30,009	24.9	75.1	46.4	28.7
1999	97,754	23,569	74,185	44,844	29,341	24.1	75.9	45.9	30.0
99/75 (%)	-23.6	39.1	-33.1	-9.7	-52.1	-	-	-	-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승선하여 공동 조업 후 수입을 배분하는 형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와 양식업어가는 각각 41.4%, 42.1% 감소한 반면, 어선을 사용하는 어가는 같은 기간 중 20.0%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어선 비사용 어가의 비중이 27.8%나 돼 어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해조류 양식어가는 1985년에 비해 1999년 70.9% 감소한 반면 어류 양식어가는 1995년을 정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1998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됐다.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조업지역이 제한됨에 따라 양식어업을 육성하려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셋째, 어업을 전업 또는 겸업으로 경영하는 어가의 비중 변화이다. 농업과는 달리 전업어가는 증가한 반면 겸업어가는 감소했다. 즉 전업어가는 1975~1999년

<표 22-19> 어선세력

(단위 : 척, %)

	계	추진기관 유부		선 절 별				
		동력선	무동력선	목조	강조	FRP	기타	
1975	67,655	19,697	47,958	65,778	1,748	124	5	
1980	77,574	51,113	26,461	74,315	3,031	228	-	
1985	90,970	71,836	19,134	85,816	3,844	1,310	-	
1990	99,658	79,365	20,293	88,927	4,084	6,647	-	
1995	76,801	71,041	5,760	51,839	4,094	20,868	-	
1999	94,852	87,502	7,350	44,570	3,869	46,413	-	
99/75 (%)	40.2	344.2	-84.7	-32.2	121.3	37329.8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호

<표 22-20> 어선 톤급별 구성비

(단위 : %)

	계	1t 미만	1~5t 미만	5~10t 미만	10~50t 미만	50~100t 미만	100~200t 미만	200t 이상
1970	100.0	68.8	16.7	5.2	7.8	0.8	0.3	0.3
1975	100.0	69.4	16.1	4.9	7.1	1.2	0.4	1.0
1980	100.0	30.1	55.2	24.5	6.5	2.3	0.6	0.8
1985	100.0	34.5	53.0	4.5	4.6	1.9	0.6	0.8
1990	100.0	34.4	47.9	8.1	5.3	2.5	0.9	0.9
1995	100.0	40.1	45.2	7.4	3.9	2.0	0.6	0.7
1999	100.0	40.1	45.2	7.4	3.9	2.0	0.6	0.7
99/70 (%)	38.8	-19.1	275.2	97.0	-30.6	230.2	166.8	305.8

주 : 99/70은 선박척수의 증감률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호

기간 중 39.1% 증가했으나 겸업어가는 같은 기간 33.1% 감소함으로써 전업어가의 비중이 13.6%에서 24.1%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산업과 어업을 겸업하던 어가의 가구원이 고령화하면서 다른 산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가구원의 진출 또는 자연산 해조류를 채취하던 소규모 어가의 어업 포기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제2종 겸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선세력의 변화 측면에서도 구조 변화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선은 양적인 측면에서 1975~1999년 기간 중 40.2%(67,655→94,852척) 증가하였고 무동력선은 줄고 동력선은 늘어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했다. 어선의 크기를 보아도 1970년 68.8%를 차지했던 1톤 미만의

어선은 1999년에 40.1% 수준까지 감소했다.

또 1~5톤 미만의 선박은 같은 기간 중 16.7%에서 45.2%로 비중이 높아졌고, 100톤 이상 선박의 비중도 확대되는 등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목조어선이 47.0%이고 규모면에서도 5톤 미만의 소형선박 비중이 85% 정도인 것은 우리나라의 어업이 주로 연안에서 이뤄지고, 양식장에서 관리용으로 이용하는 소형선박의 비중도 23%나 되기 때문이다.

어업생산

1970년 이후 계속 늘었던 수산물 생산은 199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남획으로 인해 연근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다 한일, 한중어업협정 외에도 미국, 러시아 등의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어장을 상실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표 22-21〉 수산물 수입

(단위 : 천톤)

	공 급			계	수 요		
	생산	수입	재고		국내 소비	수출	이월
1970	935	-	-	935	810	125	-
1975	2,135	-	-	2,135	1,562	573	-
1980	2,410	41	68	2,519	1,746	696	77
1985	3,103	91	85	3,279	2,318	867	110
1990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1995	3,348	948	460	4,756	3,215	1,170	371
1999	2,909	1,332	319	4,560	2,746	1,232	582

자료 : 해양수산부, 『1999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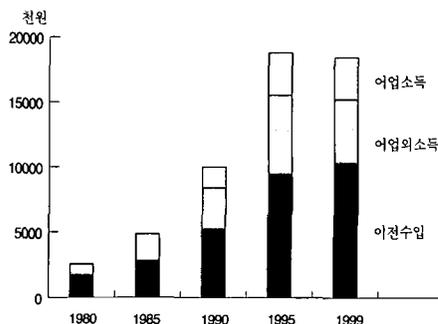
앞으로도 자연산 수산물 생산은 연근해 어자원 고갈, 어장 상실 및 조업비용 증가에 따른 조업 기피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양식 수산물은 국가의 장려 아래 어로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업 등에 따라 어류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산물 수입은 중국·러시아·미국 등에서 냉동 어류를 중심으로 1990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업 경영

어가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0년 이후 20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1980년에 비해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어업소득 증가율보다 어업외소득과 이전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 어가의 어업의존도는 1980년 67.5%에서 1995년에는 50.3%로 낮아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겸업소득이 어업소득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999년의 어업

[그림 22-7] 어가소득 구성



〈표 22-22〉 어가경제

(단위 : 천원, 배)

	어 가 소 득				어 가 자 산	가계비	어 가 부 채	어 업 의존도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수입				
1980	2,596	1,752	844	...	3,178	1,998	564	67.5
1985	4,869	2,815	2,054	...	18,956	3,607	3,378	57.8
1990	10,023	5,217	3,192	1,614	61,273	7,072	5,925	52.1
1995	18,780	9,437	6,075	3,268	97,125	13,139	11,033	50.3
1999	18,428	10,323	4,882	3,223	116,995	13,639	11,555	56.0
80/99 (배)	7.1	5.9	5.8	-	36.8	6.8	20.5	-

주 : 1) 1987년까지 이전수입은 어업외소득에 포함

2) 1999년부터 어가자산 중 토지가격 평가기준을 1999년부터 인근 거래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했음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연보』, 각 호

의존도는 56.0%로 다시 높아졌다.

어가자산은 소득 증대에 따른 예·저금 등 유통자산의 증가와 토지·선박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980~1999년 기간 중 36배 정도 증가했다. 어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계비 지출은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소비생활의 질 개선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6배 정도 증가했다. 어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가 부채는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채 상환

유예 및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가소득 증가보다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99년의 어가소득은 1980년에 비하여 6배 정도 증가한 반면 어가 부채는 20배 정도 증가했다. 어가자산에 대한 어가부채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부채상환 능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어가소득에 대한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데 어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 23 장 광공업

광공업은 광업과 공업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광업은 천연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그 범위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으나, 공업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좁은 의미의 공업은 제조업을 가리킨다. 그러나 공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힐 경우 식물 재화를 생산하는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더욱 넓게는 이상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산업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공업발전법’에서는 제조업 및 제조업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전기·가스·증기업, 수도사업, 도·소매업, 공업기반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서비스업(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업 등) 까지도 포괄적으로 공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여기서는 광공업을 광업과 제조업만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광공업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현재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통계상의 제약으로 제조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공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제1절 광공업 현황

세계적으로 지난 20세기는 공업화의 시대였다. 근래 정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 금융업·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신장과 제조업의 상대적 위축에 따라 탈공업화 사회, 혹은 신경제(new economy)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세기 동안 선진국들의 경제적 번영은 산업화를 통해 달성되었으며, 산업화란 바로 공업화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공업(제조업)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았다.

20세기 초엽까지 영국이 세계에 군림한 것이나, 20세기 세계경제를 미국이 주도한 것, 20세기 후반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근접하게 된 것 등 모두가 제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에 의해 정보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팽창해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도 제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23-1>을 보면 1970년 이후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속도로 성장해 왔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15.6%의 성장률을 나타내 전체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앞질러 왔다.

<표 23-1> 제조업 성장률

(단위 : 연평균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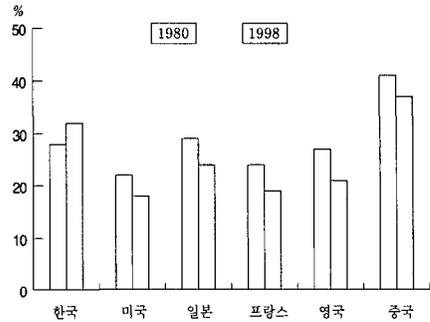
	1970~80	1980~90	1990~99
국내총생산	7.4	8.6	5.8
제조업	15.6	11.2	7.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DB』

<표 23-2>를 보면 1999년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3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은 18~2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1980년에 비해 대체로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이다. 반면 중국·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다. 태국처럼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도 산업사회(혹은 탈공업화 사회)에서 제조업은 더 이상 중심산업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인가. 선진국형 경

[그림 23-1] 주요국가의 제조업비중



제구조로 진입하려는 단계에 이른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산업에서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하며, 제조업에 대한 의존은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몇 십 년간은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여전히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드는 제조업이나 농업과 같이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는 사업을 실업(實業 : 진실된 사업)이라 하여 생산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였으며, 서비스업종은 실업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허업(虛業 : 거짓 사업)이라고 하여 천시하였다. 이와 같은 아담 스미드의 생각이 200여년이 지난 현대 경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실물

<표 23-2> 주요 국가의 제조업비중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태국
1980	28	22	29	24	27	41	22
1998	32 ¹⁾	18	24	19	21	37	32

주 : 해당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구성비임

1) 1999년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날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제조업은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매우 빠른 산업이다. 이 결과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서 명목상(금액상)으로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 생산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많은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연계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은 국가 산업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30년 전과 비교할 때 이발소 서비스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발요금은 수십 배나 상승하였다. 반면 TV는 품질이 매우 좋아졌지만 값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TV의 경우 가격에 비해 품질이 급상승하였다는 것은 이 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발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의 변화 없이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고 이발사의 수입이 늘어났을까. 그것은 TV의 생산성 향상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은 <표 2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는 1990년대 세계 주요 국가의 제조업부문 생산지수가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경제적 활력을 보이는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 생산지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제조업 생산의 증가속도도 매우 둔화되었다. 이 표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최근의 신경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1990년대에 지속되었던 미국경제의 호조도 정보기술 관련산업 및 금융 등 신경제 부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991년을 100으로 할 때, 1995년에는 120.4, 1999년에는 147.9로 선진국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조업 생산이 늘고 있다. 미국이 신경제로 이전되었다고

<표 23-3> 주요 국가의 제조업 생산지수¹⁾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991	100.0	100.0	100.0	100.0	100.0 ²⁾	100.0	100.0	100.0
1995	137.4	120.4	93.5	97.8	98.2	107.8	161.4	163.7
1999	181.5	147.9	92.4	107.3 ³⁾	109.3	109.8	168.7	208.8 ³⁾

주 : 1) 국별 기준연도(생산지수=100인 연도)가 다르므로, 비교를 위하여 1991년을 100.0으로 하여 지수치를 환산하였음

2) 1992년 수치임

3) 1998년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하지만 제조업이 여전히 산업의 중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4>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1985년 및 1990년에는 1990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게 나타났으나 1995년부터는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경우 1995년 기준의 제조업 비중이 1990년 기준의 비중보다 무려 4.1%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통계의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기존 산업 중 일부가 빠르게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속속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기준연도의 차이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이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23-4> 기준 연도에 따른 제조업 비중(GDP대비)

	(단위 :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1990년 기준	29.3	29.2	26.8	25.9	25.7	-	-
1995년 기준	24.8	28.1	29.4	29.4	29.8	29.6	32.6
	(29.2)	(28.8)	(29.4)	(28.9)	(28.9)	(30.9)	(31.8)

주 : ()내는 당해년 가격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호

<표 23-5>에는 산업별 취업자의 장기적 비중변화가 나타나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은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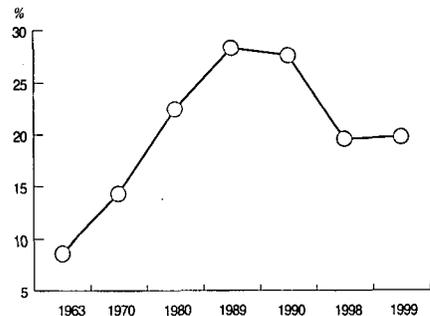
에 7.9%였으나, 1970년 13.2%, 1980년 21.6%로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그렇지만 1989년의 27.8%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9.5%, 1999년 19.8%까지 낮아졌다.

<표 23-5> 취업자의 광공업 비중

	(단위 : %)						
	1963	1970	1980	1989	1990	1998	1999
광공업	8.7	14.3	22.5	28.3	27.6	19.6	19.9
제조업	7.9	13.2	21.6	27.8	27.2	19.5	19.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그림 23-2] 취업자의 광공업 비중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은 생산측면에서 여전히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위상도 흔들리고 있지 않지만, 고용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급속히 작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돼 경제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고용측면의 기여도는 크게 낮아질 것이므로 제조업을 대신할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이 국가경제의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제2절 광공업의 구조적 특징

국민경제상 광공업의 비중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정착에 따른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란 보기는 어렵다. 제21장의 <표 21-1>에 서처럼 동남아·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1차 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농업국가로 알려진 덴마크·프랑스 등조차 1차 산업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1차 산업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3차 산업의 비중 증대는 2차 산업(광공업)의 비중 저하와 연계되어 있다. 즉 2차 산업의 비중이 저하되는 만큼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그것이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차 산업의 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1차 산업과 공공부문 비중의 하락만큼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

라의 3차 산업 비중 증대는 2차 산업의 비중하락을 동반하는 선진국의 일반적 패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제조업의 규모 확대

<표 2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수는 15,200개였으며, 27만5천여명을 고용했었다. 이후 제조업체 수는 매년 늘어나 1970년에는 2만4천개, 1980년에는 3만1천개, 1990년에는 6만9천개였고 1999년에는 9만1천여개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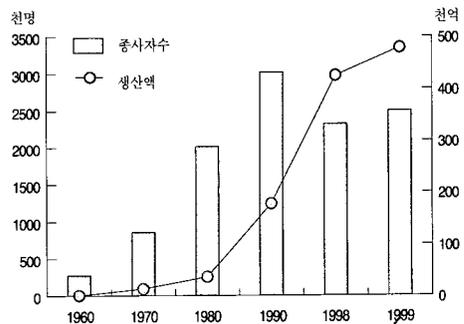
<표 23-6> 제조업 규모 변화

(단위 : 천개, 천명, 십억원)

	1960	1970	1980	1990	1998	1999
사업체수	15.2	24.1	30.8	68.9	79.5	91.2
종사자수	275.3	861.0	2,015.2	3,019.8	2,323.9	2,507.7
생산액	60	1,335	36,279	177,309	425,008	479,733
부가가치 ¹⁾	22	550	11,857	70,925	176,730	200,935

주 : 1) 생산액에서 주요 생산비(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위탁생산비·수선비)를 뺀 것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3-3] 제조업 규모변화



르렀다. 종사자 수는 1960년 28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0년에는 302만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1998년에는 1984년 수준인 232만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250만8천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명목가격(경상가격)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연도별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1970년대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아 실질적인 생산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인플레이에 의한 명목가격 상승의 효과가 크다. 여하튼 생산액은 1960~1999년 사이 명목가격 기준으로 8천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990년대 이전까지 30년 이상 성장해 왔던 제조업은 1990대에 들어서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였다. 실질 생산의 증가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종사자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1997년에는 사업체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종사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1980년을 제외하면 198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88년 312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연도별로 다소간의 증감은 있었고 또 감소폭은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사자 수의 감소는 1997, 1998년 2년간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1999년에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수가 1998년에 비해 18만4천명 증가한 250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데 비하여 사업체 수는 계속 늘어났다. 사업체 수 역시 1980년 한 번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났는데, 1997년 약 5,000개의 사업체가 감소한 이후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전년보다 무려 약 12,000개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1만2천개 증가한 9만1천여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역동적일수록 신규 기업의 진입이 활발하다. 지난 20~30년 동안의 제조업 발전형태를 보더라도 기존 사업체의 성장과 함께 사업체 수의 증가, 즉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체수의 감소가 앞으로 제조업부문의 활력저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새로운 산업발전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주목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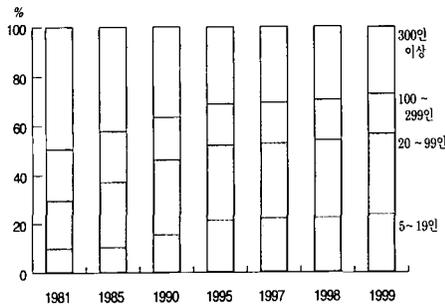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특징

광공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구조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위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995년의 사업체수가 1991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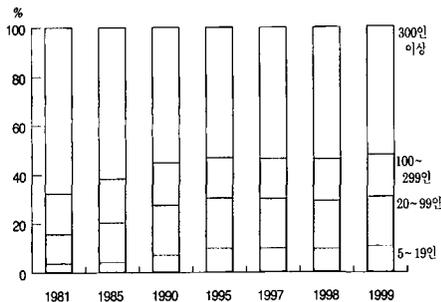
나타났으며 500인 이상의 큰 사업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체의 퇴조와 영세 중소기업체의 비중 증대는 종사자수 및 출하액 측면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 23-4]에서 종업원수 기준의 영세 사업체로 간주되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981년은 광공업 전체 종업원의 1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2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반면 중견 및 대규모 사업체는 1981년에 50% 가까운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1999년에는 이 비중

[그림 23-4] 광공업 종사자수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그림 23-5] 광공업 출하액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이 27% 정도로 낮아졌다.

출하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규모 사업체의 광공업 부문 출하액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만큼 영세 또는 중소기업체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중견규모 사업체의 출하액 비중은 지난 16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변화 추세가 특이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종사자수 5~9인의 영세업체 수는 광공업 전체의 사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늘어나 그 비중이 45.8%로 전년대비 7.1%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5~9인 계층과 아울러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0.1%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타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모두 낮아졌다. 종사자 5~9인의 영세 사업체수 증가는 신규진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다른 계층 사업체 규모가 축소되어 계층간 이동이 나타난 때문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전체의 사업체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산업별 구조변화

한 나라의 경제가 저개발 단계에 있을 때에는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 비중이 크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차 제조업의

중심이 중화학공업으로 이전하게 된다. 경공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도 용이하게 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화학공업은 생산시설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공업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중화학공업은 여전히 선진국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표 23-7> 제조업의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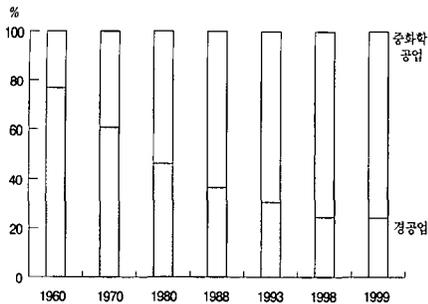
(단위 : %)

	1960	1970	1980	1988	1993	1998	1999
경공업	76.6	60.8	46.4	36.5	30.5	24.6	24.2
중화학 공업	23.4	39.2	53.6	63.5	69.5	75.4	75.8

주 : 1960~1980년은 부가가치 비중이며, 1988~1998년은 생산액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3-6] 제조업의 구조



우리나라 제조업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 <표 23-7>에서 보듯이 1960년에는 경공업이 76.6%를 차지한 반면 중화학공업은

23.4%에 불과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점차 커져 1999에는 75.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구분은 공업 구조분석을 위한 특수분류의 하나로 소분류 수준에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 나눈 것이다. 경공업에는 음식료품, 섬유, 의복, 목제품,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등이 포함된다. 중화학공업에는 화학·석유·금속·기계·전자·수송용 기계 등이 포함된다.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경공업에 비해 중화학공업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다.

산업구조의 변화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표 23-8>과 <표 23-9>를 보면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23-8>에는 생산액 기준의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이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나타난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률의 절대적 크기나 시대별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같은 기간 내에 산업별 비교는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 표를 보면, 경공업에 해당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

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포함)」, 「펄프·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등의 산업은 시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조업 평균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반면 중화학공업은 산업마다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항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60년, 1970년대에는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전자·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대부분 포함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

중화학공업 가운데서도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비슷한 발전

형태를 보였다. 이들 두 산업은 1970, 1980년대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80,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이며,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철강이 중심인 산업으로 대표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이다. 이들은 자본집약적이며 중화학공업화 초기단계의 주도적 산업으로 산업화 초기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그 지위를 물려주었다.

경공업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구체적 특성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은 산업화 초기단계의 주력산업이었으나, 그 성장률은 제조업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표 23-8〉 제조업의 산업별 성장률(명목 생산액 기준)

(단위 : 연평균성장률 %)

	1960~70	1970~80	1980~90	1990~99
제조업	36.4	39.1	17.2	11.7
음식료품 및 담배	36.9	32.7	13.3	9.5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0.0	38.5	12.9	6.4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포함)	32.6	28.5	13.7	8.5
펄프·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33.4	35.7	18.1	11.7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0.7	42.9	13.1	12.1
비금속 광물제품	34.1	37.2	16.1	8.8
제1차 금속제품	45.8	45.8	16.5	10.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43.1	43.3	25.5	14.0
기타 제조업	43.3	31.6	18.2	6.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각 호

이 비록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한다고 하지만 1970년대까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 1990년대 성장률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역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경공업 가운데서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과 「펄프·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은 이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두 산업은 대표적 내수형 산업으로서 전반적인 성장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용품 수요가 늘고 고급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별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지난 40년동안 산업구조도 크게 변모하였다.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이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1960년 제조업의 8.9%, 1970년 1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90년에는 그 비중이 38.1%로 커졌다. 1999년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중심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1960년에는 15.5%였으나, 1970년에는 21.3%, 1980년에는 27.8%까지 늘어난 후 비중이 빠른 속도로 낮아져 1999년에는 20.1%에 그쳤다.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은 196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쇠퇴하였다. 「섬유, 의복 및 가죽제

품 제조업」의 경우 1960년에는 30.2%, 1970년에는 18.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8.0%로 낮아졌다.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역시 1960년 21.2%, 1970년 22.1%에서 1999년에는 8.2%로 비중이 하락하였다.

〈표 23-9〉 제조업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1960	1970	1980	1990	1999
제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료품 및 담배	21.3	22.1	13.7	9.8	8.2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30.3	18.7	17.9	12.3	8.0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포함)	7.2	5.4	2.4	1.8	1.4
펄프·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6.2	4.9	3.9	4.2	4.2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5.6	21.3	27.8	19.4	20.1
비금속광물제품	6.0	5.1	4.4	4.1	3.2
제1차금속제품	3.0	5.8	9.3	8.8	8.2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8.9	14.3	19.2	38.1	45.8
기타 제조업	1.5	2.4	1.4	1.5	1.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각 호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변화하였다. 1960년대에는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의복 등 경공업이 제조업을 선도하다가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철강 등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 선도하였고, 1980년대부

터는 전자·자동차·기계·반도체 등 기술집약 산업이 중심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주력산업의 변화

세계 어느 나라나 산업을 이끌어 가는 중추산업이 있다. 이들 산업은 산업의 업종수로 볼 때는 소수이지만,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약 400개 산업 가운데 6개 주요 산업(자동차, 화학, 석유, 전기제품 및 장비, 항공우주선, 철강)이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약 30%를 창출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소수의 선도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선도산업의 구성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광공업 부문에서 상위 5대 산업은 1998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출하액의 23.5%를 차지했다. 반면 100위 미만 산업은 전체 산업수의 83.3%에 해당하나 출하액은 불과 23.1%에 그쳤다. 상위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1981~1991년에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가 1991~1998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1981~1991년 상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광공업 부문에서 선도산업의 실질 비중이 축소되었다기보다 산업분류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선도산업 부문이 더욱 자세히 분

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선도산업에 대한 의존은 커지는 추세라 해석할 수 있다.

〈표 23-10〉 출하액 점유율

(단위 : %)

	1981	1991	1997	1998
상위 5대 산업	26.3	21.9	23.0	23.5
상위 10대 산업	10.3	8.2	11.4	11.4
상위 20대 산업	13.0	9.9	10.5	11.1
상위 50대 산업	20.4	16.8	16.8	16.4
상위 100대 산업	15.3	15.8	14.2	14.4
100위 미만 산업	16.4	27.3	24.2	23.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결과

1981~1998년 17년간 주력산업의 구성은 큰 변화를 보였다. 1981년 9위였던 자동차제조업이 1998년 2위로 올라섰다. 1981년에는 10위 이내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1998년에는 7위를 기록했다. 정유업·철강업(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등 전통 기간산업이 1998년에도 여전히 선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1981년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음향장치 제조업」만 4위에 기록되었으나, 1998년에는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4개 산업이 10위 이내에 포함되고 있어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공업은 주력산업에서 빠르게 퇴조했다. 1981년에는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인조섬유 방적업」, 「담배제조업」, 「남

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 제조업」 등 4개 산업이 10위 이내였으나, 1991년에는 「견 및 인조섬유 제조업」,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2개로 줄어들었다. 1998년에는 10대 산업에 경공업 부문이 하나도 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모습은 품목기

〈표 23-11〉 상위 10대 산업과 출하액 점유율

(단위 : %)

순위	1981		1991		1998	
	산업명	출하 비중	산업명	출하 비중	산업명	출하 비중
1	연료유 제조업	11.58	일반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5.31	원유정제 처리업	6.92
2	철강압연업	5.85	방송수신 기및기타 영상, 음향 기기제조업	5.10	일반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4.91
3	인조섬유 직물 제조업	3.19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4.45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4.42
4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음향장치 제조업	2.98	원유 정제 처리업	4.44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	3.77
5	강선건조 및 수선업	2.68	자동차 부품 제조업	2.61	강선건조 및 수선업	3.52
6	인조섬유 방적업	2.66	강선 건조 및 수리업	2.08	무선통신 방송응용 장치제조업	2.84
7	담배제품 제조업	2.32	견및인조 섬유직물 직조업	1.70	자동차 부품 제조업	2.53

순위	1981		1991		1998	
	산업명	출하 비중	산업명	출하 비중	산업명	출하 비중
8	남자용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 제조업	2.02	합성수지 제조업	1.56	합성수지 제조업	2.38
9	자동차 제조업 부품제외	1.78	레미콘 제조업	1.51	컴퓨터 제조업	2.14
10	시멘트 제조업	1.54	가죽갑 피신발 제조업	1.39	방송수신 기및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1.5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준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1981, 1991, 1998년의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1981년에는 병커씨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섬유 직물제품·연탄 등이 광공업 부문의 주력품목이었으나 1991년에는 섬유 직물제품이 10대 품목에서 대거 제외되고 소형 및 중형자동차, 자동차부품, 레미콘, 배합사료 등이 주력으로 부상하였다. 1998년에는 중형자동차, 소형자동차, 기타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상위였으며, 1980년대의 주력제품이었던 정유제품(경유 및 중질중유)이 여전히 10위 이내였다. 그리고 음극선관 모니터가 전자제품으로서는 처음 상위 6위 품목에 진입하였다.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액 기준 상위품목군에 전자산업 제품이 적

은 것은 품목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여 산업전체의 규모에 비해 개개 품목의 생산(혹은 출하)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산업집중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는 경쟁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개인 및 기업)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제의 동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향상된다. 따라서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체제는 생각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인가는 그 나라 경제에서 경쟁이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쟁이란 예를 들면 비슷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가격·품질 등 여러 면에서 더 낫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쟁에 반대되는 상태가 독점이다. 이것은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기업이 하나 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제품이 비싸고 품질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경쟁은 사회전체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져온다. 각 기업들이 서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므로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진다. 가격이 낮으므로 소비자들 물건을 더 많이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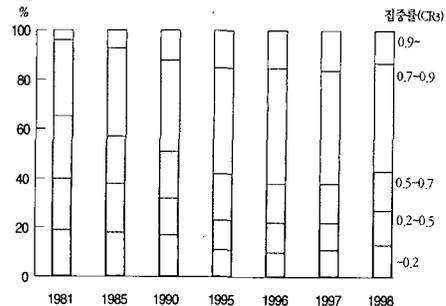
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등의 자원도 더 많이 소요되므로 나라 전체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경쟁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도(산업집중도 혹은 시장집중도)이다.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소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정 시장 혹은 산업 내에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 많을수록 집중도는 낮아지며, 이는 그만큼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널리 사용되는 것이 '상위 3사 집중도'(CR3)다. 이것은 특정 산업(혹은 시장)내에서 점유율이 큰 3개사의 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1981년 이후 1997년까지 광공업 부문의 산업집중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CR3가 90%이상인 산업, 70~90%, 50~70%인 산업 등 고위 혹은 중위집중형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CR3가 20% 미만인 산업 및 20~50%인

[그림 23-7] 집중률 계층별 산업수 비중



산업 등 저위집중형 혹은 경쟁형 산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CR3가 90% 이상인 산업은 1981년에는 전체산업의 19.2%를 차지했으나, 1997년에는 10.7%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CR3가 20% 이하의 극히 경쟁적 구조를 가진 산업은 1981년 3.6%에서 1997년 15.9%로 대폭 늘어났다.

경제위기로 광공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던 1998년에는 산업집중률의 변화가 지금까지의 추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1981년 이후 광공업 부문 산업집중도는 일관되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1998년에는 갑자기 악화되었다. 1998년에는 저위집중형 산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위집중형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3사 집중률이 20% 미만인 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산업수로는 2.7%포인트 줄어든 반면 상위 3사 집중률이 90% 이상 산업은 3.5%포인트 늘어났다.

제조업 전체의 평균집중률을 보면 이러한 산업집중도의 변화는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광공업 부문의 세세분류 산업별 상위 3사 집중률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한 수치(평균집중률)는 1981년에는 58.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에는 47.7%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6.6%포인트 상승하여 54.3%에 이르렀다. 이는 1986년의 평균집중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체의 조직형태

기업은 그 법적 형태에 따라 개인이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기업과 복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분배하는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따라서 기업가는 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경영상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이익과 손해가 기업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 가능하며, 대리인 비용(agent cost)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개인이 해결하여야 하므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 및 노동력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주요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기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대리인 비용

회사의 경우는 자본을 대는 사람이 기업경영을 전문경영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문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손해를 보

더라도 그것이 경영자 자신의 손해로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주주)과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전문경영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최근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 비용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회사제도는 복수인의 자본 및 노동력을 하나의 기업에 결합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또 규모의 경제에 의해 효율이 상승한다. 회사제도는 또한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복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경감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회사제도는 기업활동에 따르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자본모집을 통해 대규모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개인기업보다는 회사가 기업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회사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라 할 수 있다.

<표 23-12>에는 1970년과 1999년 두 해의 조직형태별 제조업체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회사가 대표적 기업조직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사업체의 조직형태가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여 왔다.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볼 때 1970년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전체의 9.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그 비중이 35.7%로 늘어났다. 종사자수 및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훨씬 더 분명하다.

<표 23-12> 조직형태별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

	1970			1999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합계	24,114	861	1,307	91,956	3,508	477,987
회사	2,226	486	970	32,522	1,827	433,558
법인	(9.2)	(56.4)	(74.2)	(35.7)	(72.9)	(90.7)
기타	316	32	94	737	22	8,667
법인	(1.3)	(3.7)	(7.2)	(0.8)	(0.9)	(1.8)
개인	21,572	343	243	57,897	658	35,762
	(89.5)	(39.8)	(18.6)	(63.5)	(26.2)	(7.5)

주 :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70 광공업통계조사』, 1971

『1999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2000

이 표에서 또 한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특히 주식회사) 사업체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1999년의 경우를 보면 주식회사의 비중은 사업체수로는 35.7%이지만 종사자의 72.9%, 출하액의 90.7%에 달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사업체는 숫자상으로는 63.5%로 큰 부분이지만 종사자수 비중은 26.2%, 출하액 비중은 7.5%에 그쳤다.

제3절 광공업의 실질 성장

산업생산지수

제2절에서는 광공업,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조변화의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별로 어떠한 발전 경로를 밟아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구조의 변화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별 성장률을 비교해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광공업 통계조사는 경상가격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악하는 통계에는 가격상승분이 포함돼 기간별 혹은 산업별 비교가 무의미하다. 산업성장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목가격(경상가격)이 아닌 생산의 실질적인 변동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산업생산지수의 의의가 있다.

산업의 실질 성장률을 파악하는데 명목가격에 의한 통계와 생산량에 의한 통계는 각각 장점과 함께 한계도 갖고 있으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통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목통계가 갖는 한계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가격상승에 의해 생산이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명목가격기준으로 산업성장을 측정할 경우 실질 생산의 증가가 동일하다고 하더

라도 가격상승률이 높은 산업의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산업 분야에 있어서 생산활동의 변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생산지수에서 '생산'이라는 개념은 국내총생산(GDP)에 있어서 생산(부가가치 개념)이라는 개념과 같다. 지수작성 품목은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1995년 광공업 부문 총생산액의 1/5,000이상 되는 품목으로 생산동향을 대표할 수 있고 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665개 품목이다.

산업생산지수는 업종별 분류지수와 특수 분류지수로 구분된다. 업종별 분류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3개 대분류와 26개 중분류 및 64개 소분류 지수로 구분된다. 또한 소분류 내의 중요한 업종은 세분류(또는 세세분류) 지수로 작성된다. 특수분류지수는 제조업 생산제품을 자본재·중간재·소비재로 구분한 재별분류지수와 공업구조에 따라 중화학공업·경공업으로 구분한 공업구조별지수, 지수품목 중 기계설비품목 117개만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추이를 보기 위한 설비용기계류지수, 산업형태에 따라 기초소재형·조립가공형·생활관련

형으로 구분한 산업형태별 지수, 기업의 상시종업원수에 따라 중소기업지수·대기업지수로 구분한 기업규모별 지수 등으로 나눠 작성된다.

지수 계산방법은 기준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작성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준시점과 멀어질수록 조사품목이나 가중치의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바꾸어 주는 것을 지수개편이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한다.

생산량 기준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고, 기존 제품도 그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데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고려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10년 전의 제품에 비해 지금 제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수량 조사에서는 이러한 질적 개선을 반영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할 때 생산수량과 함께 생산금액도 함께 반영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에 의한 생산증가효과를 고려한다. 그렇지만 그 조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생산

지수에서는 품질향상에 따른 생산증대효과가 과소평가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가 빠른 산업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시멘트·설탕·석유류제품·철강 등의 산업은 10~20년 전이나 지금의 제품이나 질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생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자제품·자동차·컴퓨터·반도체 등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다. 이러한 산업에서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생산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와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이들 통계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현실적 방법은 찾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들 통계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경제현실을 이해하려는 안목을 갖는 것이다.

산업특성별 성장

제조업 부문의 공업구조별 변화는 <표 23-13>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는 1995년의 생산수준을 100이라 하였을 때 1987~1999년의 생산지수가 나타나 있다. 1987년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52.1이었으나, 1999년에는 132.1로 12년간 제조업 부문

생산은 약 2.5배로 늘어났다. 1987년 이후 제조업 부문은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의 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생산지수가 6.6% 하락했다.

공업특성별로 생산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7~1999년 중화학공업의 생

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경공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제2절에서 살펴본 중화학공업 비중이 늘어난 것이 산업생산지수에 의해서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중화학공업의 생산지수는 1987년의 40.4에서 1999년 150.6으로 되어 생산이 약 3.7배로 늘어났다. 전반적 추세로도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생산지수가 3.8% 정도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지수가 커졌다. 특히 경제위기가 수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무려 29.3%나 상승하였다.

경공업은 전체적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연도별로 일정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1987년 경공업부문 생산지수는 93.7이며 이후 근소하나마 생산이 늘어나 1991년에는 102.7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경공업생산지수는 하락·상승 등 일정치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5년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6%나 하락하였다. 1999년에는 다소 상승하여 86.8을 기록하였으나, 12년 전인 1987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경공업 부문의 타격이 컸고 또 그 후유증이 계속된 것은 이 부문이 주로 내수산업, 특히 소비재 산업으로 구성된 때문으로 보인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수출위주의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경제위기 회복기에서는 환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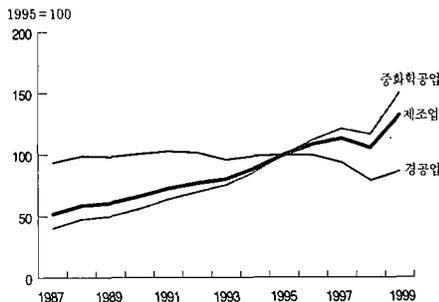
〈표 23-13〉 제조업 특성별 생산지수의 변화

(1995=100)

	제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1987	52.1	40.4	93.7
1988	59.1	47.8	99.0
1989	61.0	50.2	98.4
1990	66.4	56.3	100.7
1991	72.8	64.1	102.7
1992	77.2	70.0	101.8
1993	80.4	75.8	96.0
1994	89.3	86.4	99.1
1995	100.0	100.0	100.0
1996	108.3	111.8	99.7
1997	113.2	121.1	93.8
1998	105.7	116.5	79.2
1999	132.1	150.6	86.8

자료 : 통계청, 『1999 산업생산연보』, 2000

[그림 23-8] 제조업 특성별 생산지수의 변화



락 효과로 인해 수출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중심의 산업인 중화학공업은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회복 효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할 수 있었다.

주요 산업별 성장

앞에서 제조업 생산변화의 추세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주요 산업별로 생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산업별 산업생산지수는 <표 23-14>에 정리되어 있다. 첫 눈에 개발연대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의복 산업의 급격한 쇠퇴와 전자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특징으로 부각된다.

섬유산업은 산업생산지수가 1987년 120.1에서 1999년 82.9로 계속 하락하였다. 1999년의 생산은 1987년의 69.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의복 및 모피산업의 경우 그 쇠퇴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의복 및 모피산업의 생산지수는 1987년 139.3에서 1999년 62.6으로 생산규모가 12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1998년의 경제위기 때는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28.9%나 하락하여 산업규모가 1년만에 2/3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경제회복이 본격화한 1999년에도 생산지수는 1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생산증가가 가장 극적으로 진행된 산업 분야는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

<표 23-14> 제조업 주요 산업별 생산지수

(1995 = 100.0)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	의복 및 모피	제1차 금속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87	52.1	64.0	120.1	139.3	49.4	23.4	34.0	26.0
1988	59.1	71.8	123.9	137.7	53.4	28.5	42.0	33.1
1989	61.0	76.9	120.3	130.6	58.1	33.8	42.2	37.7
1990	66.4	81.5	119.5	126.2	65.1	37.8	45.8	46.6
1991	72.8	88.5	117.2	120.2	72.1	39.6	52.8	53.8
1992	77.2	90.5	113.0	109.1	75.4	42.4	57.4	61.3
1993	80.4	91.9	103.3	92.5	83.9	52.9	62.4	71.4
1994	89.3	99.6	102.9	96.9	91.1	71.7	76.7	85.5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08.3	104.8	93.1	100.8	106.1	126.3	123.4	112.6
1997	113.2	103.6	86.3	79.7	112.2	150.7	150.8	111.9
1998	105.7	93.8	77.9	56.7	98.7	153.7	205.0	73.9
1999	132.1	102.6	82.9	62.6	112.7	317.0	300.9	113.3

자료 : 통계청, 『1999 산업생산연보』, 2000

업」과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다. 이들 산업은 1987~1999년 전 기간을 통해 생산이 급속히 늘어났다.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은 같은 기간 생산이 13.5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8.9배로 늘어났다. 이들 산업은 경제위기 때도 성장속도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증가가 계속되었으며, 위기가 수습된 1999년에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의 경우 1999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생산이 늘었다.

「음식료품」과 「제1차 금속제조업」, 「자

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성장패턴을 보였다. 이들 산업은 1995년을 경계로 그 이전에는 생산이 빠르게 늘어났으나, 이후 크게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1987년 64.0에서 1994년 99.6, 1995년 100.0으로 비교적 빠르게 커졌다. 그렇지만 1994년을 분기점으로 생산증가가 급속히 둔화되었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성장 추세가 이렇게 변화한 것이 일시적 소비위축에 따른 것인지, 혹은 국민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해 기초소비품 성격을 가진 음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한계에 다다른 결과인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판단이 어렵다.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역시 1987~1995년 약 두 배의 생산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생산증가가 급격히 둔화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명확히 나타났다. 이 산업은 1987~1995년 약 4배나 생산이 늘어나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 추세가 1995년을 고비로 급속히 둔화됐다. 1997년 근소하나마 전년 대비 생산이 줄어들었고, 1998년 생산이 전년에 비해 2/3 수준으로 하락하여 전체 제조업 가운데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때 소비의 급속한 위축에 따라 특히 자동차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는 이러한 일시적 쇼크를 극복하고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제품의 용도별 생산변화

제조업의 생산 재화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크게 생산재·소비재로 구분된다. 생산된 재화가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면 생산재,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면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 집에서 끓여 먹으면 소비재로 간주되지만, 식당에서 끓여 팔면 생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재와 소비재로의 구분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렸다.

재화를 생산재와 소비재로 구분하는데 현실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화장품의 예를 들면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당연히 소비재가 된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화장을 할 경우 그 화장품을 생산재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공장에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빵은 생산재인가 소비재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는 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화만을 생산재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산재와 소비재는 재화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생산재는 크게 자본재와 중간재로 나눈다. 자본재는 기계처럼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다. 중간재는 원재료·연료·부품 등과 같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소비재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구분한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과 같이 소비행위가 단기간에 종료되는 제품을 말하며, 내구재는 가전제품·자동차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소비하는 제품을 말한다.

국가의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생산재화의 내용이 변화한다. 산업발전 정도가 낮은 단계에서는 음식료품·의복 등과 같이 비내구 소비재의 생산 비중이 높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내구소비재, 이어서 생산재의 비중이 커진다. 비내구 소비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경공업 제품이 많다. 내구소비재는 가전제품 등과 같이 대형 조립생산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기능인력의 중요성이 커진다. 자본재·중간재 등 생산재 분야는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이 중심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이 발전할 수록 특히 중간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아프리카·남미 등 저개발국의 경우 제조업의 주류는 식료품·담배·술 등 비내구 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태국·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대형 조립생산산업이 제조업의 중심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부품·기

계·정밀화학 등 중간재·자본재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의 중심이 대형 조립생산형에서 자본재 및 부품산업 중심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표 23-15>에는 제품의 용도별 생산지수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생산증가가 비내구 소비재→내구 소비재→자본재→중간재 순으로 나타난다.

비내구 소비재의 경우 1987년 이후 생산이 그다지 늘지 않았으며, 특히 1995년 이후는 정체 혹은 퇴조단계에 들어섰다. 1998년에는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 1999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위기 이전상태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구 소비재는

<표 23-15> 제조업제품 용도별 생산지수

(1995=100.0)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내구재	비내구재	
1987	39.3	47.1	69.7	54.6	80.5
1988	44.2	54.4	77.8	63.6	87.7
1989	47.4	56.1	78.9	63.1	90.1
1990	57.9	61.3	81.9	64.1	94.6
1991	63.6	69.0	86.2	71.7	96.6
1992	66.0	75.4	87.7	74.0	97.4
1993	68.3	80.6	87.7	78.7	94.2
1994	82.6	88.8	94.3	89.6	97.6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11.1	110.5	103.1	104.1	102.5
1997	114.4	120.3	99.7	102.4	98.3
1998	96.8	120.8	82.7	79.1	84.5
1999	133.4	149.5	100	114.2	92.7

자료 : 통계청, 『1999 산업생산연보』, 2000

1995년까지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1995년 이후 정체상태다. 경제위기 때 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1999년에는 경제위기 이전상태를 상회했다.

생산재 가운데 자본재는 지속적으로 생산이 늘었다. 1987~1995년 자본재의 생산증가가 중간재를 상회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설비투자 둔화로 자본재 생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1999년에는 빠른 회복을 보여 경제위기 이전을 훨씬 상회하는 생산증가를 기록하였다. 중간재의 경우는 1995년 이전에는 자본재의 생산증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중간재는 경제위기시에도 생산증가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꾸준히 성장했으며 1999년에는 급격히 신장됐다.

수출 및 내수용 출하

산업생산지수를 수출품과 내수용품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패턴이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패턴을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초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이후 수출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산업성장은 수출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여년에 걸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민주화운동 등 사회전반의 분위기도 변해 그때까지 근검 절약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사회일반의 인식이 소비의 중요성에도 눈뜨기 시작하였다. 즉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국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생산 못지않게 소비도 중요하며, 수출수요 뿐만 아니라 내수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내수의 빠른 신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경제위기로 급격히 위축된 반면, 환율절하 효과로 수출이 급신장하여 최근에는 다시 수출이 산업생산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표 23-16>에 잘 나타나 있다. 생산자 출하지수를 내수와 수출로

<표 23-16> 수요 구분별 생산자출하지수

(1995 = 100.0)

	출 하		
	내 수	수 출	
1987	56.2	51.7	71.9
1988	59.2	56.0	70.7
1989	62.0	62.3	62.0
1990	70.3	71.8	66.5
1991	76.8	76.9	72.7
1992	78.0	80.8	70.3
1993	88.2	90.8	81.2
1994	99.5	100.8	95.7
1995	106.9	107.1	106.5
1996	116.1	112.8	125.5
1997	118.3	105.9	156.4
1998	119.7	94.0	193.4
1999	151.3	114.7	256.2

주 : 지수치는 각 년도 12월의 수치임

자료 : 통계청, 『1999 산업생산연보』, 2000

구분하여 보면 1987~1995년 내수가 수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내수용 출하지수는 약 2.1배로 늘어난 데 비하여 수출용 출하지수는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95년을 경계로 확연히 달라졌다. 1995~1999년 4년간 내수는 1.07배로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수출용 출하는 2.4배나 늘어났다.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국내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다음달인 1998년 1월의 경우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출하지수가 5.9%, 그리고 1998년 연간으로는 전년에 비해 8.6%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용 제품의 생산지수는 1997년 12월에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4.6%, 1998년 1월에는 28.2%나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내수 및 수출용 생산지수 모두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내수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그쳤지만, 수출의 경우는 전년 대비 32.5%나 상승하였다.

제4절 광공업의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광공업 구조변화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나라 광공업 부문의 국민

경제적 위치와 특징을 여러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광공업 부문의 발전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됐다. 다만 그동안 가장 많은 고용을 흡수하였던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걸쳐 종사자수가 줄었으며, 1995년 이후부터 사업체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액의 신장은 여전히 높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의 높은 신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사업체가 쇠퇴한 반면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종사자수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그리고 생산액 비중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사업체에까지 파급됐다. 그 대신 종사원수 20인 이하 혹은 50인 이하의 영세 혹은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등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의 활발한 활동은 대형 제조업의 퇴조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넷째,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자동차·전자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두드러졌다. 섬유·의복 등 경공업은 이미 197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추세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등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중화학공업은 1970~1980년대에 걸쳐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체현상을 보였다.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도 1990년대 중반 들어 성장이 둔화됐다. 이에 비하여 전기·전자·반도체 등의 산업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성장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산업은 향후 상당기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서 성장할 전망이다.

다섯째, 지난 20년동안 광공업 부문의 산업집중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이는 시장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활발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개선은 소비자 이익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물론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최근 시장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경제의 회복에 따라 다시 개선될지, 아니면 이러한 상태가 고착될 것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조업 부문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자본재의 생산이 소비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었다. 소비재 가운데 비내구 소비재 생산이 정체상태를 보인데 비해 내구 소비재의 생산은 늘었다. 생산재는 자본재와 중간재 모두 생산이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중간재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제조업 용도별 재화 생산량의 변화는 우리 산업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1995년 무렵까지는 내수용 생산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 이후 침체됐다. 1995년까지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내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증가가 적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수출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수출증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수출생산이 활발하게 늘지는 주목할 과제이다.

광공업의 미래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산업·금융산업·사업서비스업 등이 경제의 전면에서 등장하고 제조업 퇴조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 혹은 신산업(new industry)의 시대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산업의 중심이 완전히 신경제 분야로 이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걸쳐 선진국 가운데 가장 현저한 발전상을 보였다. 이 결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반면 제조업에서의 뛰어난 경쟁력을 배경으로 1980년대 세계경제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였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의 하나가 신경제 부문의 부진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경제의 파도가 밀어닥쳐 산업전체적인 틀이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산업을 지향하는 수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였고, 이들 기업은 정보 관련 기술, 인터넷 사업, 사업서비스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존의 제조업 부문은 소위 ‘굴뚝산업’이라고 하여 천시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공개적 평가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을 보더라도 신산업부문 기업이 중심이 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광공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또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이 경제 혹은 산업에서 지닌 중심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중심이 신산업부문에 이동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장래의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또 그럴 필요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내용과 중심 기술은 과거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이 상당기간 중심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리라 예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신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금융산업 등은 어차피 미국 등 세계의 소수 국제금융 거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사업서비스 등은 국제적 이동이 곤란하므로 시장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 관련 산업에서는 대규모 시장을 이미 미국이 선점한 상태에 있으며, 여타 신흥시장을 두고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기술 관련 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노하우의 축적도 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산업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중국 등 양질의 정보기술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술 및 노하우 그리고 자본스톡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제조업에서는 후발개도국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지향적 특징이 있다. 국내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원의 수입, 또 산업용 자본재 및 원료의 수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신경제 분야에 속한 산업은 비교역재(非交易財)가 대부분이다. 즉, 신경제 분야를 통해서는 외화를 벌

어들이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외화는 대부분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상당기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산업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또 그럴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조업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갖겠지만 제조업의 내용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제조업에서는 제조기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내 제조업 제품이 점차 가격경쟁력을 잃어 가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앞으로 직면할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고급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제조기술이란 최소한의 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경쟁력을 가지려면 디자인, 기능, 제품의 발굴 등 다양한 요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제조기술을 초월한 기술로서, 예술적 감각, 소비심리, 상상력 등 다양한 재주를 필요로 한다. 또 이를 토대로 현실시장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마케팅 능력, 금융조달체계 등도 필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이러한 요소를 하나의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모두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그러려는 것 자체가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협조하여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제품을 만들고 다른 산업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체의 시장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제조업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능력의 집합체로서, 다시 말하면 국가산업의 대표선수로서의 제조업 기능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가수들에게 노래는 물론 무용·무대장치·의상·매너·몸매·용모·개성 등 다양한 것들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로 최근에는 가수들도 화장·안무·의상·무대장치 등에 전문 인력들의 다양한 협조를 받고 있다. 가수들의 인기란 결국 이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노력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바로 가수에 비유된다. 제조업은 국가의 모든 산업기술을 종합하는 결집체라 할 수 있다.

제 24 장 건설업

건설업이란 지반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와 건물을 짓거나 교량, 댐 등의 구축물을 세우는 것 외에도 이들에 대한 증·개축, 수리, 보수, 해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사업의 주역으로서,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도시에서의 주택건설 등 생활기반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이렇듯 건설업은 우리의 경제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전후방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전방효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등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다른 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후방효과로는 건설산업이 산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철근, 시멘트, 목재, 유리, 골재 등의 건설 자재는 물론 건설장비의 수요자이므로 이를 공급하는 제조업 등에 영향을 준다. 이 밖에도 건설업은 부동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0년 당시만 해도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5% 정도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10%를 넘어설 만큼 성장한 이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1절 건설업 현황

국민경제상 건설업의 비중

건설업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1970년대 초반, 1980년 전후, 외환위기의 영향이 나타난 1998~1999년 등의 몇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한 만큼 성장률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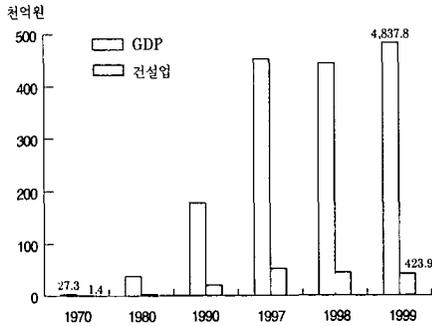
〈표 24-1〉 건설업 규모

(당해년 가격, 십억원, %)

	GDP	건설업	구성비
			(%)
1970	2,725.2	139.8	5.1
1975	10,228.1	478.6	4.7
1980	37,788.5	3,040.6	8.0
1985	81,312.3	6,125.5	7.5
1990	178,796.8	20,333.5	11.4
1995	377,349.8	42,564.1	11.3
1996	418,479.0	48,554.8	11.6
1997	453,276.4	52,795.5	11.6
1998	444,366.5	44,992.6	10.1
1999p	483,777.8	42,392.9	8.8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림 24-1] 건설업 규모



화폭도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따져보자. 이는 산업간 구조의 한 부분을 의미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간의 가격변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년 가격으로 살펴보았다.

1970년 건설업 생산액은 1,398억원으로 GDP의 5.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1990년에는 20조3,335억원으로 11.4%를 차지하여 10%를 넘어섰다. 1991년의 12.6%를 정점으로 10~12% 수준을 유지했는데,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1999년에는 42조3,929억원으로 8.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건설업은 정치, 경제 등 여건과 해외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도별로 성장의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동 건설붐이 일었던 1977년에는 1년만에 30.2%, 신도시 건설 등의 요인으로 1990년에도 25.5%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1997년 말부터 시

작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된 1998~1999년에는 연속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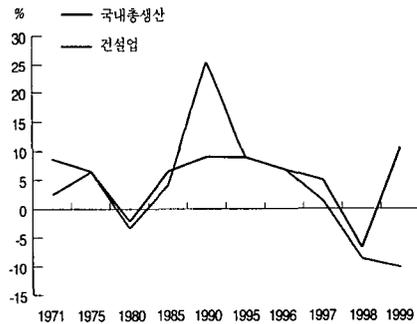
〈표 24-2〉 건설업 성장률(1995년 가격 기준)

(단위 : %)

	GDP	산업	건설업
1971	8.6	9.4	2.5
1975	6.5	7.6	6.4
1980	-2.1	-3.1	-3.3
1985	6.5	7.4	4.2
1990	9.0	9.7	25.5
1995	8.9	9.9	8.8
1996	6.8	7.0	6.9
1997	5.0	5.8	1.4
1998	-6.7	-6.1	-8.6
1999	10.7	11.0	-10.1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림 24-2] 건설업 성장률



사업체수

1999년 말 현재 각종 건설관련 면허를 갖고 건설활동을 영위한 사업체수는 4만 7,400여개로 1973년(2,054개)보다 23배

정도 증가하였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3차례에 걸친 면허발급 확대와 1990년대 초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체수는 199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24-3〉 건설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계	조직 형태별	
		법 인	개 인
1985	11,936 (100)	4,484 (37.6)	7,452 (62.4)
1990	18,073	6,443	11,630
1995	39,533	20,840	18,692
1996	43,421	23,790	19,631
1997	45,304	25,562	19,741
1998	46,498	26,763	19,734
1999	47,428 (100)	28,273 (59.6)	19,155 (40.4)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1985년과 1999년의 사업체수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법인기업체 비중이 높아진

대신 개인기업체 비중이 낮아졌다. 기업조직상 법인기업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체제로 빠르게 움직여 왔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영세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고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여기서 건설업의 규모를 볼 때 다른 산업과는 달리 상용 종사자 외에 임시근로자도 포함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규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대규모 사업체수는 1994년을 정점으로 사업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특수를 누렸던 주택건설 활동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요약하면 건설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여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존 사업체의 변신이 아니라 신규진입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점과 아울러 건설활

〈표 24-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사업체 수						구성비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계	11,936	18,073	39,533	45,304	46,498	47,4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4,477	7,437	16,508	20,257	21,015	22,215	37.5	41.1	41.8	44.7	45.2	46.8
5~19인	3,514	5,414	11,160	2,527	12,967	13,646	29.5	30.	28.2	27.7	27.9	28.8
20~99인	2,771	3,625	8,819	9,439	9,681	9,225	23.2	20.1	22.3	20.8	20.8	19.5
100~299인	658	998	2,207	2,317	2,224	1,824	5.5	5.5	5.6	5.1	4.8	3.8
300인 이상	516	598	837	762	610	516	4.3	3.3	2.1	1.7	1.3	1.1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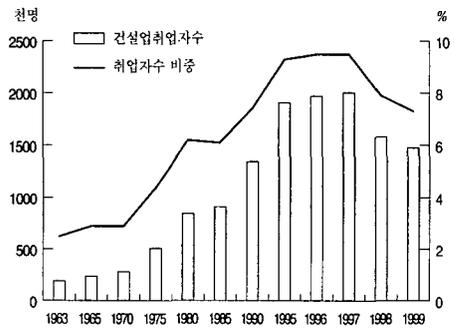
동의 여건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빠르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수

건설업 취업자수는 1960년대 중반에 20만명을 넘어섰으며 1975년에는 50만명, 1988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1997년에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외환위기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업의 고용창출 비중은 1975년 이전에는 전체 취업자의 2~4%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해외건설 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6%를 넘어섰다. 그 뒤 1989년까지는 소폭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90년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

라가 1996~1997년에는 1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건설은 물론 해외건설 분야가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7.3%까지 내려감으로써 199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림 24-3] 건설업 취업자수



<표 24-5> 건설업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연도	전산업	건설업	비중
			(%)
1963	7,563	192	2.5
1965	8,109	236	2.9
1970	9,618	281	2.9
1975	11,691	509	4.4
1980	13,683	843	6.2
1985	14,970	911	6.1
1990	18,085	1,346	7.4
1995	20,432	1,905	9.3
1996	20,817	1,971	9.5
1997	21,106	2,004	9.5
1998	19,994	1,578	7.9
1999	20,281	1,476	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제2절 건설업 구조 변화

조직형태

건설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회사법인, 개인, 기타(회사 이외의 법인)로 나눌 때 1999년 말 현재 4만7,428개의 건설업체 가운데 회사법인 형태가 59.4%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체는 열 개중 4개꼴(42.4%)이다. 업종별로는 대형 공사가 많은 지반조성 공사업의 경우 99.6%가 회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설비 공사업은 오히려 개인사업체가 전체의 75.4%로 더 많다.

한편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1~5억원

규모의 사업체가 45.7%로 가장 많으며, 5천만원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도 21.7%

〈표 24-6〉 조직형태별 건설업체 수(1999)

(단위 : 개, %)

	계	회사 법인	개인	기타
건설업	47,428 (100.0)	28,169 (59.4)	19,155 (40.4)	104 (0.2)
지반공사업	223 (100.0)	222 (99.6)	1 (0.4)	- (-)
건축물축조· 토목공사업	25,093 (100.0)	19,364 (77.2)	3,639 (14.5)	90 (0.3)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17,399 (100.0)	4,273 (24.6)	13,122 (75.4)	4 (0.0)
건축사무 공사업	4,713 (100.0)	4,310 (91.5)	393 (8.3)	10 (0.2)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9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표 24-7〉 자본금 규모별 건설업체 수(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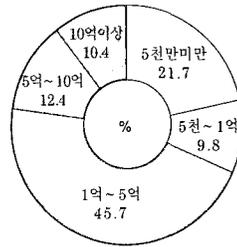
(단위 : 개, %)

	계	5천만 미만	5천~ 1억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건설업	47,428 (100.0)	10,300 (21.7)	4,663 (9.8)	21,678 (45.7)	5,868 (12.4)	4,918 (10.4)
지반 공사업	223 (100.0)	-	-	-	81 (36.3)	142 (63.7)
건축물축 조·토 목공사업	25,093 (100.0)	5 (0.0)	2,807 (11.2)	13,330 (53.1)	4,668 (18.6)	4,283 (17.1)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17,399 (100.0)	10,295 (59.2)	1,856 (10.7)	4,431 (25.5)	545 (3.1)	271 (1.5)
건축사무 리공사업	4,713 (100.0)	-	-	3,917 (83.1)	574 (12.2)	222 (4.7)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9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에 이른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는 건설업체는 전체의 10.4%에 불과하다. 대형 공사가 많은 지반공사업체는 자본금이 10

[그림 24-4] 자본금 규모별 건설업체 구성(1999)



억원 이상 되는 업체가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반공사업체보다 평균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업체는 35.7% 이상의 업체가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되는 업체는 17.1%이다. 건축사무리공사 업체는 자본금 1~5억원 사이에 83.1%의 업체가 몰려있다. 건설업체가 가장 영세한 것은 건물설비설치공사업체들로서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 59.2%에 달하며, 85%에 가까운 이 업종의 건설업체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이다.

종사자 규모별 공사액

구체적인 건설산업의 변화 즉, 구조변화는 종사자 규모와 세부적인 건설산업 분류에 따른 변화추세를 보면 이해 할 수 있

〈표 24-8〉 종사자 규모별 총공사액

(단위 : 십억원, %)

	총 공사액						구성비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계	16,876	27,592	83,644	119,719	104,329	92,7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70	300	1,116	1,761	1,447	1,986	0.4	1.1	1.3	1.5	1.4	2.1
5~19인	328	1,225	4,649	7,354	6,251	8,313	1.9	4.4	5.6	6.2	6.0	9.0
20~99인	1,364	4,681	17,774	24,705	21,037	21,816	8.1	17.0	21.2	20.6	20.2	23.5
100~299인	1,305	4,714	16,899	22,517	21,719	15,760	7.8	17.1	20.2	18.8	20.8	17.0
300인이상	13,808	16,673	43,207	63,382	53,875	44,864	81.8	60.4	51.7	52.9	51.6	48.4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다. 우선 1985년 이후에 나타난 종사자 규모별 변화의 특징을 보자. 사업체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수의 비중만 늘어났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다. 총 공사액으로 본 비중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집단의 비중만 낮아졌고 나머지는 모두 높아졌다. <표 24-4>를 통해서 우리는 1990년을 전후한 시점에 건설산업에 대한 시장진입 조건의 완화로 신규 진입 사업체가 많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997년 이후 건설업 전체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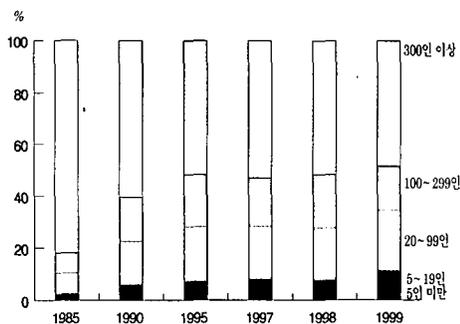
이 낮아졌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대기업의 일부가 해체되거나 몸집을 줄이면서 발생한 잉여인력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은 전체적으로 개별 규모가 줄어들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건축허가면적

건축허가면적은 1991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말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 건축허가면적이 급증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건설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일부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1992년을 제외하고 건축허가면적은 1억㎡ 이상을 유지했는데 1998년 이후부터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건축허가면적이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1960년

[그림 24-5] 종사자 규모별 총 공사액 비중



〈표 24-9〉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 %)

	계	주거	상업	공업	기타
1970	10,787 (100.0)	4,692 (43.5)	2,323 (21.5)	1,529 (14.2)	2,243 (20.8)
1975	19,420 (100.0)	11,623 (63.1)	2,650 (14.4)	2,641 (14.3)	1,506 (8.2)
1980	25,727 (100.0)	14,740 (57.3)	5,653 (22.0)	2,222 (8.6)	3,112 (12.1)
1985	38,217 (100.0)	20,606 (53.9)	9,497 (24.9)	4,140 (10.8)	3,974 (10.4)
1990	116,419 (100.0)	70,927 (60.9)	26,409 (22.7)	10,570 (9.1)	8,513 (7.3)
1995	117,327 (100.0)	62,614 (53.4)	28,549 (24.3)	13,727 (11.7)	12,437 (10.6)
1998	50,965 (100.0)	31,156 (61.1)	8,753 (17.2)	2,796 (5.5)	8,260 (16.2)
1999	72,534 (100.0)	44,606 (61.5)	11,746 (16.2)	7,824 (10.8)	8,358 (11.5)

주 : ()내는 용도별 구성비임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대이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라 1990년에는 그 비중이 60.9%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부터 낮아져 1995년에 53.4%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높아져 1999년 61.5%이다.

제3절 건설투자

건설활동 결과인 건축물과 도로, 항만 등 구축물은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생산물인 재화 또는 용역과는 달리 오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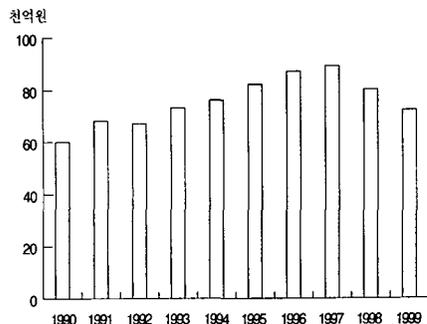
존속되는 내구성이 있어 국민계정상 유형 고정자산의 형성으로 계상한다. 국내총생산은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와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인 투자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구분한다. 건설투자는 일정기간 형성된 구축물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건설 활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도별 동향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10% 미만에 머물렀다. 1970년대에 10%를 넘어섰으며 1980년대에 15% 이상, 1990년대에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200만호 주택 건설 등 주거용 건설경기가 건설업의 성장을 크게 주도하였다.

최근의 우리나라 건설투자 현황을 보면 1998년 한 해동안 약 80조원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 이후 연평균

[그림 24-6] 건설투자액



3.9%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1990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1993년에 70조원을, 1995년에 80조원을 돌파했다. 1996년과 1997년에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89조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림 24-6]에서 보듯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냉각하면서 1998년에는 건설투자도 크게 감소하여 1995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8년에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가계와 기업이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징수가 줄어들어 사회간접투자를 중지하거나 연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주택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투자의 감소 폭은 줄어들 것이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건축수요의 증가와 1998년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반등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건설투자는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동향

건설활동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 및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건축 등 비주거용 건축과 도로, 교량, 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 치산치수, 농지정리, 상하수도, 택지조성 등을 포괄하는 토목건설로 구분된다.

건설투자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토목부문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퇴조와 함께 건축부문이 침체하였던 1980년대 중반에는 총 건설투자의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돼 주거용 부문이 건설경기를 주도하였다. 1993년 이후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거용·비주거용 건설투자율은 소폭 상승에 머물고,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토목 부문이 건설경기를 주도하였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앞으로도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토목건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전까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와 함께 주택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주거용 건설투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89년 4월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하면서 주거용 건설투자가 급증하여 1990년 38.4%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택공급이 원활해진 1994년 이후로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설의 건설투자 비중은 30%

〈표 24-10〉 부문별 건설투자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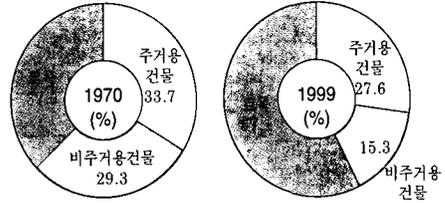
	계	주 거 용 건 물	비 주 거 용 건 물	토목(구축 물건축 및 토지개발)
1970	7,078 (100.0)	2,382 (33.7)	2,073 (29.3)	2,623 (37.0)
1975	10,654 (100.0)	4,246 (39.9)	2,732 (25.6)	3,676 (34.5)
1980	19,243 (100.0)	6,268 (32.6)	5,391 (28.0)	7,583 (39.4)
1985	28,770 (100.0)	7,718 (26.8)	7,790 (27.1)	13,262 (46.1)
1990	60,036 (100.0)	23,076 (38.4)	18,376 (30.6)	18,584 (31.0)
1995	82,198 (100.0)	28,027 (34.1)	23,263 (28.3)	30,908 (37.6)
1997	89,285 (100.0)	26,668 (29.9)	22,545 (25.3)	40,073 (44.8)
1998	80,149 (100.0)	24,630 (30.7)	17,762 (22.2)	37,757 (47.1)
1999	71,988 (100.0)	19,861 (27.6)	11,008 (15.3)	41,119 (57.1)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미만을 유지해 왔는데 1980년대 후반 토지초과이익세 등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따른 건축 붐으로 1990년의 경우 30.6%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하나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다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1999년 건설투자 총계는 71조9,88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2% 감소하였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건설경기가 극도로

[그림 24-7] 부문별 건설투자 비중



악화되면서 건설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이러한 투자감소가 비주거용 건설투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1997년 0.5%의 증가세에서 1998년(-21.2%)에 이어 1999년은 38.0%의 큰 감소를 보였다. 토지개발 역시 1997년에는 9.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8년에는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용 건설투자는 이미 1997년에 6.3%, 1998년에 7.6% 감소에 이어 1999년에는 그 폭이 더욱 커져 19.4% 감소했다. 반면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건축물 건축 및 토지개발에 대한 투자는 1998년 5.8%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8.9%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여건, 특히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건축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 부문별 건설투자에 있어 향후 건축물 투자가 건설경기

를 주도하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해외건설

해외건설은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해외건설공사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1965년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효시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로공사 수주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중동을 비롯한 해외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대량의 해외수주 및 건설기자재 수출에 따른 외화 획득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1953년 휴전 이후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시설과 관련된 군납공사를 맡으면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였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차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를 하면서 국제공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해외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무렵이다. 특히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첫 해인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고 이로 인한 제1차 석유파동은 외화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중동산유국의 개발정책이 연결돼 해외건

설 진출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75년부터는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외건설 진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3년과 1978년의 석유파동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수주하면서 근로자가 대거 해외건설 현장에 취업해 고용증대와 더불어 외화송금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애 직 간접적으로 공헌을 하였다.

〈표 24-11〉 해외공사 수주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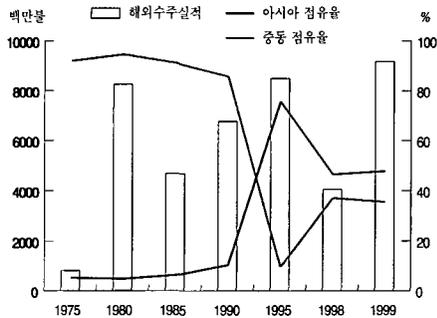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계	중 동	아시아	기 타
1965	5 (100)	-	5 (100)	-
1970	47 (100)	-	31 (65.9)	16 (34.1)
1975	815 (100)	751 (92.1)	43 (5.3)	21 (2.6)
1980	8,258 (100)	7,819 (94.7)	409 (4.9)	30 (0.4)
1985	4,691 (100)	4,285 (91.3)	300 (6.4)	104 (2.2)
1990	6,769 (100)	5,812 (85.9)	712 (10.5)	245 (3.6)
1995	8,508 (100)	820 (9.6)	6,440 (75.7)	1,248 (14.7)
1998	4060 (100)	1510 (37.2)	1890 (46.6)	660 (16.3)
1999	9,189 (100)	3270 (35.6)	4,400 (47.9)	1,519 (16.5)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과

[그림 24-8] 해외공사 수주실적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해외건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중동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수주가 줄어들어 국민소득과 국제수지에 대한 해외건설의 기여도가 떨어졌고, 고용측면에서도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표 24-11>에서 보듯 1990년대 초반까지 지나치게 중동시장에 의존하는 수주 패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공사의 발주량이 급감하자 업체간 덤핑수주와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해외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업체의 자금부담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크게 부실해져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건설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기업체질 개선과 지원제도의 정비,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한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재도

약의 기틀을 다졌다. IMF 관리체제에서 크게 위축되었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999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에 동아건설·현대건설사태와 해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주실적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제4절 건설업 전망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급속한 약화는 1998년 우리나라 건설업에 유례없는 불황을 가져왔다. 정부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양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부양이 공공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건설공사 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향후 건설시장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증가하여 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수주액의 감소폭이 줄어들든 하더라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건설시장의 규모가 적을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자재산업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이며, 건설산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도성장기를 지

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과거와 같이 팽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 역시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건설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의 회복과 건설업의 성장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정부 차원

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건설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산업 기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건설 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현재 건설업 종사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새로운 건설인력의 수요에 대비한 건설인력의 육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 25 장 운수업

운수업이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활동과 운송관련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사람과 재화를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운수업은 생명체의 정상적인 활동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의 국가활동 역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도시화, 광역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도시 안은 물론 도시간 운송수요를 증가시켰다.

산업의 지방 분산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철도망으로서는 수송능력과 기동성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고속도로망의 구축은 지역간 접근성을 높였고 특히 경인선과 경부선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운수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측면도 있다. 교통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의 지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통의 발달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을 일으켜 거리에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한다. 교통사고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운수업 현황을 살펴본 다음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아본다.

제1절 운수업 현황

운수업 규모

운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표 25-1〉 운수업의 규모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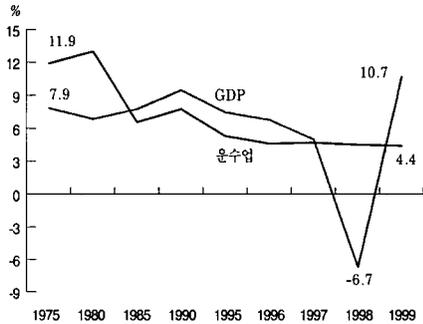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GDP	운수업	구성비	성장률	
				GDP	운수업
1970	2,725.2	162.3	6.0	-	-
1975	10,228.1	499.0	4.9	7.9*	11.9*
1980	37,788.5	12,347.1	6.2	6.9*	13.0*
1985	81,312.3	4,226.8	5.2	7.8*	6.6*
1990	178,796.8	8,347.0	4.7	9.5*	7.8*
1995	377,349.8	17,432.4	4.6	7.5*	5.3*
1996	418,479.0	18,631.6	4.5	6.8	4.6
1997	453,276.4	19,924.1	4.4	-5.0	4.7
1998	444,366.5	20,683.2	4.7	-6.7	4.5
1999	483,777.8	21,368.3	4.4	10.7	4.4

주 : *는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림 25-1] 운수업의 성장률



여기서 운수업의 비중은 산업간의 차등적인 가격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가격으로 계산하고, 성장률은 운수업 자체의 생산활동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운수업 비중은 1970~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5~6%를 차지하였다. 1981년의 6.6%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 현재 4.4%였다. 1970년대에는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전 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운수산업은 1998~1999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성장해 외환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경제의 총량 규모가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망이 확충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업지역 분산화 정책 등이 주효해 운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보인다.

사업체 수

1999년 말 운수업 사업체 수는 21만8천여개로 1998년 19만4천여개보다 12.4%, 1980년에 비해서는 약 4배로 증가했다. 1999년에 사업체 수가 두 자리수 비율로 증가한 요인은 운수업 사업체의 32.2%를 차지하는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화물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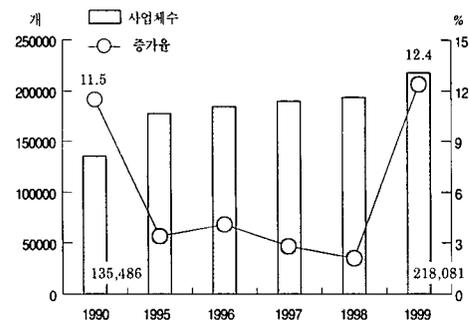
〈표 25-2〉 운수업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1990	1995	1997	1998	1999
운수업	135,486	177,540	189,910	193,949	218,081
(증가율)	(11.5)	(3.4)	(2.8)	(2.1)	(12.4)
육상운송업	132,364	173,226	184,930	189,032	212,234
(구성비)	(97.7)	(97.6)	(97.4)	(97.5)	(97.3)
· 개인택시	81,432	127,369	129,211	132,152	135,550
수상운송업	484	394	390	374	381
항공운송업	7	7	9	9	9
운수관련					
서비스업	2,631	3,913	4,531	4,534	5,457
· 여행업	1,011	1,790	2,488	2,428	2,936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5-2] 운수업 사업체수



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8년보다 신규 사업체가 크게 늘었고, 또한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자의 증가로 여행관련 사업체도 크게 늘었다.

사업체 수를 업종별로 보면 육상운수업체가 전체의 97%이상을 점했고, 특히 개인택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가 전체의 96%, 법인이 4% 정도이다.

〈표 25-3〉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구성비

(단위 :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법 인	3.8	3.7	3.9	4.1	4.1	4.2
개 인	96.1	96.3	96.1	95.9	95.9	95.8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종사자 수

1999년말 운수업 종사자 수는 79만1천

여명으로 1998년 74만여명보다 6.9%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 운송사업과 여행사업 부문의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운수업 종사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1999년 육상운송업이 전체의 84.0%였고 특히 개인택시가 17.2%였다.

운수업의 종사자수를 연도별로 보면 미약하나마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였다. 다만 1999년에는 시장 진입 조건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체수의 증가율(12.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6.9%)을 보였다. 반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부진과 자동화 설비 확충에 의한 노동력 감축 등의 요인으로 종사자수가 처음으로 2.2% 감소하였다. 특히 항공운수업과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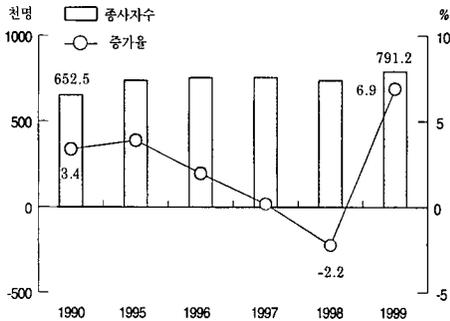
〈표 25-4〉 운수업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 명,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운수업 (증가율)	652,486 (3.4)	739,887 (3.9)	754,897 (2.0)	756,140 (0.2)	739,823 (-2.2)	791,221 (6.9)
육상운송업	544,915	604,101	615,342	622,326	623,794	664,609
· 개인택시	81,432	127,369	124,822	129,211	132,152	135,550
수상운송업	53,846	24,340	24,709	24,172	22,336	22,135
항공운송업	20,746	20,392	21,912	21,407	16,997	17,558
운송관련서비스업	32,979	91,055	92,934	88,235	76,696	86,919
· 여행사업	12,851	15,667	16,060	15,409	12,539	16,533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그림 25-3] 운수업 종사자수



제2절 운수업의 구조 변화

업종별 운수수입

외적으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내적으로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항공산업이 발달하면서 운수업의 내부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변화된 모습을 산업별 수입 측면과 수송수단별 분담률 측면에서 살펴본다.

운수수입 측면에서 지난 9년간의 변화를 보면 육상운송업은 운수수입 구성비가 1990년 61.1%에서 1999년 44.7%로 16.4%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수상운송은 9.8%포인트, 운수 관련 서비스업은 6.5%포인트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이 큰 폭으로 오름으로써 원화환산 수입액이 늘어난 점도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용 보유대수가 증가한 것도 육상운송업의 비중을 낮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표 25-5〉 업종별 운수수입

(단위 : 억원, %)

	1990	1995	1997	1998	1999	
운수업 (증가율)	156,235 (15.5)	342,793 (17.5)	435,254 (15.4)	473,228 (8.7)	496,465 (4.9)	
구 성 비	육상운송	61.1	50.1	45.8	41.9	44.7
	수상운송	22.6	25.6	30.0	35.9	32.4
	항공운송	12.5	12.8	12.6	12.2	12.6
	운수관련 서비스업	3.8	11.5	11.6	9.9	10.3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수송수단별 분담률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운송산업은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여 왔다. 개방화·국제화 사회의 도래, 남북한 교류의 확대 등 급격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대는 교통에 대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의 대동맥으로서 여객과 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발전에 기여해 온 교통부문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수송실적을 보면 1966년부터 1999년까지 33년 동안 국내외 여객인원 및 화물의 물동량은 각각 약 8.0배 및 10.7배로 증가

하였다.

수송수단별 분담률은 경제개발 초창기의 철도중심 체계에서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망의 확충으로 도로부문의 수송분담 비중이 커졌다. 최근에는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의 선호 추세와 장거리 이동이 유리한 점 등으로 항공 및 고급철도 수송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와 비교하면, 도로 분담률이 낮아진 반면에 철도, 항공, 지하철의 분담률이 높아졌다. 특히 항공의 경우는 10년 전에 비하여 분담률이 월등히 높아져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객부문에 대한 수송분담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수송분담률은 수송거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몇 명을 수송했는가란 측면의 지표와 수송인원 각각의 수송거리를 누적한 지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66년 이후의 변화 모습을 여객수로 살펴보면 도로의 분담률은 1999년 현재까지 수위를 달리고 있으나 1966년의 91.3%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초반 95%를 상회한 뒤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80%를 밑돌고 있다. 철도의 분담률은 1966년 8.4%에서 한때 4%대까지 낮아졌으나 교통체증에 따른 철도선로도 증가와 다양한 상품개발 등으로 분담률이 6%까지 반등하였다. 한편 지하철은 지하철망의 확충에 따라 편리성이 높아지고 교통체증 요인

까지 가세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높아져 1999년에는 15.1%를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부문은 거리를 무시하는 경우 0.1~0.2% 수준이지만 해외부문은 물론 국내 수송에서도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송 누적거리를 따지면 내용은 많이 다르다. 1999년을 기준으로 도로부문의 분담률은 수위를 달렸지만 58.1%에 그침으로써 수송거리를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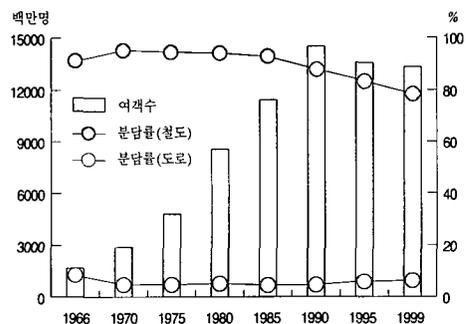
〈표 25-6〉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

(단위 : 백만명. %)

	여객수	분담률				
		철도	지하철	도로	해운	항공
1966	1,656	8.4	0.0	91.3	0.4	0.0
1970	2,882	4.6	0.0	95.2	0.2	0.0
1975	4,805	4.6	0.7	94.5	0.1	0.0
1980	8,545	5.0	0.8	94.1	0.1	0.0
1985	11,441	4.4	2.8	92.7	0.1	0.0
1990	14,488	4.5	7.6	87.8	0.1	0.1
1995	13,559	5.8	10.7	83.3	0.1	0.2
1999	13,320	6.2	15.1	78.5	0.1	0.2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그림 25-4] 국내수송 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시한 경우와 비교하여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밖의 순위를 보면 철도·지하철·항공·해운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부문이 6% 수준까지 올라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1999년 화물수송의 분담률은 도로·해운·철도·항공의 순이었다. 1966년 이후

<표 25-7>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인-거리)
(단위 : 백만명-km, %)

	여객수	분담률				
		철도	지하철	도로	해운	항공
1966	20,380	42.5	0.0	56.3	1.0	0.3
1970	30,362	32.3	0.0	66.0	0.8	0.8
1975	52,686	24.5	0.7	73.8	0.5	0.6
1980	87,626	24.7	1.1	73.2	0.5	0.6
1985	106,849	21.1	4.2	73.0	0.5	1.1
1990	135,336	22.1	8.3	66.3	0.4	3.0
1995	123,572	23.7	11.4	58.5	0.4	6.0
1999	131,131	21.8	13.9	58.1	0.4	5.7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표 25-8>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분담률
(단위 : 백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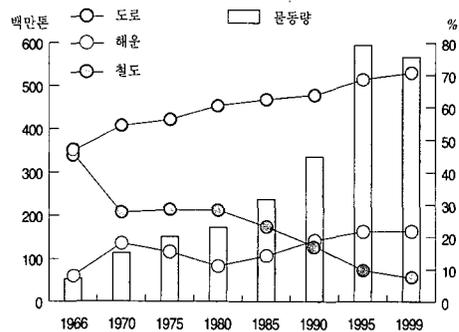
	물동량	분담률			
		철도	도로	해운	항공
1966	53	45.6	46.5	8.0	0.0
1970	114	27.7	54.2	18.1	0.0
1975	151	28.4	56.1	15.5	0.0
1980	173	28.4	60.5	11.1	0.0
1985	238	23.2	62.4	14.3	0.0
1990	337	17.2	63.8	19.0	0.1
1995	595	9.7	68.6	21.7	0.1
1999	567	7.4	70.7	21.8	0.1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에 철도의 분담률이 38.2%포인트 감소(45.6→7.4%)하였고, 도로와 해운은 각각 24.2%포인트, 13.8%포인트씩 높아졌다.

화물수송을 수송량의 누적거리로 살펴보면 해운·철도·도로의 순으로 순위가 달라진다. 이는 국제간 거래인 수출입 물량의 영향 때문이다. 1966년만해도 철도가 국내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해 수송물동량의 75%를 분담했으나 1999년엔 19.0%에 그쳤다. 여객 및 화물수송의 구조변화 요

[그림 25-5]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수송톤수)



<표 25-9>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분담률
(단위 : 백만톤-km, %)

	물동량	분담률			
		철도	도로	해운	항공
1966	7,263	75.0	7.7	9.3	-
1970	13,382	57.6	10.8	31.6	0.0
1975	17,873	52.0	21.5	26.5	0.0
1980	23,186	46.6	21.2	32.2	0.0
1985	31,029	39.6	22.8	37.5	0.1
1990	44,187	30.9	21.1	47.8	0.2
1995	76,110	18.2	23.9	57.7	0.2
1999	53,149	19.0	17.4	63.4	0.3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송수단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다.

제3절 부문별 변화

도로

육상운송업을 도로와 철도 부문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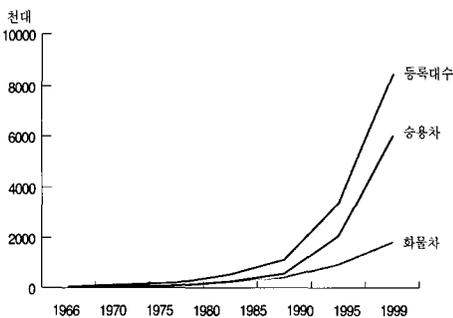
<표 25-10>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천대, 배)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승용차	자가용			
1966	49	18	7	11	19	.1
1970	127	61	29	16	49	1
1975	194	84	50	22	83	5
1980	528	249	179	42	227	9
1985	1,113	557	449	128	413	16
1990	3,395	2,075	1,902	384	925	11
1995	8,469	6,006	5,778	613	1,817	33
1999	11,164	7,837	7,567	993	2,298	35
99/66	227.8	435.4	1,081.0	90.3	120.9	35.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그림 25-6] 자동차 등록대수



누어 살펴본다. 도로부문은 수송수단과 도로망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변화를 알 수 있다. 국민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자동차공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1999년 말 등록대수는 1,116만4천대로서 1966년의 4만9천여대의 230여배로 증가했다. 특히 자가용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에 1,000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로 사정과 함께 육상운송업의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망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교통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총연장은 8만7,534km에 달했다. 그 구성은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 또는 군도로 되어 있다. 이중 포장 도로는 6만5,356km로 전체 도로의 3/4이 포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양적·질적 성장을 해 왔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즉, 주요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1999년 현재 각각 2,041km와 12,418km로 도로 총연장의 16.6% 불과하다. 또 고속도로의 약 25%, 국도의 약 75%가 2차선으로 특히 고속도로는 아직도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5-12]는 1970년 이후 도로와 자동차 보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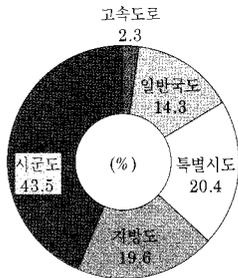
〈표 25-11〉 도로현황(1999)

(단위 : km. %)

	계	구성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87,534	100.0	65,356	15,706	6,472
(구성비)	(100.0)	-	(74.7)	(17.9)	(7.4)
고속도로	2,041	2.3	2,041	-	-
일반국도	12,418	14.3	12,188	23.3	207
특별시도	17,892	20.4	15,454	1,056	1,382
지방도	17,145	19.6	13,215	2,658	1,272
시군도	38,039	43.5	22,459	11,969	3,611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그림 25-7] 도로현황(1999)



연장은 1970년 40,244km에서 1999년 87,534km로 증가하여 29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2.7%인데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6.7%씩 증가하였다. 특히 1981~1990년에 도로가 연평균 1.9% 늘어난 반면 자동차는 무려 20.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비하여 그 공급은 현저하게 부족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표 25-12〉 도로연장 및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km, 천대, %)

	1970	1980	1990	1999	연평균증가율 (1999/1970)
도로총연장	40,244	46,951	56,715	87,534	2.7
		(1.6)	(1.9)	(4.9)	
자동차 등록대수	127	528	3,395	11,164	16.7
		(15.3)	(20.5)	(14.1)	

주 : ()내는 전기대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철도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노량진-제물포) 33km가 최초로 개통된 이래, 1905년 1월 1일 경부선, 1906년 4월 3일 경의선, 1914년 1월 11일 호남선(대전-목포), 같은 해 8월 16일 경원선(용산-원산), 1936년 12월 16일 전라선(이리-여수), 1942년 4월 1일 중앙선(청량리-경주) 등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었다.

정부는 철도를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건설해 온 결과 1999년말 현재 총 거리는 3,119km이고, 역수 632개, 객차 1,697대, 화차 13,122대에 달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6년 여객 및 화물수송의 철도 분담률은 각각 42.5%와 75.0%에서 1999년 21.8%, 19.0%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건설 등 도로의 발달로 수송패턴이 접근성과 편리성 위주로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표 25-13>에서 보듯이 1965년 이후에는 노선의 신설보다는 노선개량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 등 시설개량에 주로 투자하여 철도연장은 정체상태인데 비하여 수요는 약 7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도로의 정체로 도로부문의 교통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하고 있으나 철도시설의 부족으로 전환 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시설 면에서 과거보다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수송서비스 또한 향상되었다. 1967년 전 노선의 증기기

했고, 철도의 선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선화·전철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어 1999년 현재 복선화율은 29.9%, 전철화율은 21.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개통 이후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점차 그 역할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규제 등의 영향과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도로수송의 정체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철도는 시설의 현대화, 고속전철의 추진 등 운송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표 25-13> 철도영업キロ 및 여객수

(단위 : km, 천명, %)

	철도		여객수	
	영업 km	증가율		증가율
1965	2,980	-	107,177	-
1970	3,193	1.4	131,251	4.1
1975	3,144	-0.3	220,952	11.0
1980	3,135	-0.1	430,773	14.3
1985	3,121	-0.1	503,122	3.2
1990	3,091	-0.2	644,814	5.1
1995	3,101	0.1	790,381	4.2
1999	3,119	-0.4	823,563	1.0
1999/1965(배)	-	1.05	-	7.7

주 : 증가율은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단, 1999년은 1995~1999년까지 4년간 임.)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관차가 디젤기관차로 대체되었고, 1969년 경부선에 새마을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에는 전기기관차도 도입되었다. 또한 중앙선에 열차 집중제어장치를, 경부선에 열차 자동정지장치를 각각 설치

<표 25-14> 철도시설의 현대화 추이

(단위 : km, %)

	1961	1971	1981	1997	1999
궤도연장	4,630	5,582	6,045	6,580	6,667
복선화율	15.1	16.8	22.9	29	29.9
전철화율	-	-	13.7	21.2	21.3

자료 : 철도청 영업본부

해운·항만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은 수출입 물동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부문도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즉, 산업의 국제화에 의한 수출입 화물의 증대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커지면서 화물의 적기 수송과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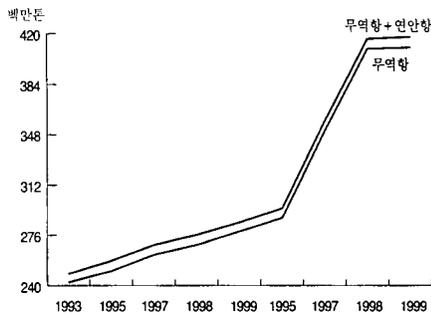
〈표 25-15〉 항만 하역능력

(단위 : 천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248,365	257,650	268,938	276,198	285,200	295,257	357,481	416,254	417,561
무역항	242,319	250,337	261,884	268,879	278,675	288,441	350,341	409,205	410,135
연안항	6,046	7,313	7,054	7,319	6,525	6,816	7,140	7,049	7,426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0

[그림 25-8] 항만하역능력



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수송력의 확대는 불가피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단절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이므로 해외교역은 해운 및 항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입물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이용하고 있어 해운·항만의 역할은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항만하역능력은 1999년 현재 무역항과 연안항을 합하여 4억1,756만톤으로 1991년의 1.7배에 달한다. 주로 무역항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항공

항공수송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대형 제트기의 취항이 본격화하면서 고속·장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항공수송이 수송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세계 항공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업은 1948년 10월에 설립된 대한국민항공사(KNA)가 효시이다. 미국으로부터 단발기 3대를 도입하여 서울~부산, 서울~광주~제주, 서울~강릉 간 국내선을 개설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소득증가로

〈표 25-16〉 항공기보유대수 및 운수수입

(단위 : 대, 십억원)

	1990	1995	1998	1999
항공기 보유대수	179	243	257	259
운수수입	1,940.1	4,385.6	5,745.5	6,694.3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우리나라 항공수요는 꾸준히 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국제 교역량의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항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내·국제간 신속하고 고급스런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259대다. 항공사의 수입은 1990년 1조9,401억원에서 1999년 6조6,943억원으로 9년 동안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운수업의 발전방향

21세기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조변혁이 요구되는 시대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국내적으로는 남북통합을 이루려는 다양한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

다. 이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 정보통신의 고도화, 수요의 다변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도 예상된다.

향후 교통정책을 비롯한 우리의 운수정책은 이러한 시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화에 부응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철도·항공·항만·도로 등의 공공 운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지역간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 정보통신 사회의 교통 수요 다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철도의 전철화, 고속철도의 신설 등을 통한 다양한 교통운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교통운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26 장 정보통신업

최근 들어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사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 소통은 언어와 문자로 해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보통신은 크게 새롭을 것이 없는 산업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정보통신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정보의 소통 방식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면서 정보의 유통속도나 유통량이 대폭 늘어났고 나아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야말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저물고 정보와 지식이 부(富)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들 말한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은 크게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그러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기기를 생산하는 산업이 정보통신기기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

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통계는 주로 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해 왔으며 통계청에서도 최근 정보통신산업 통계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은 너무 빠르게 발전해 통계가 그 발전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로 구분되는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분야만을 따로 분류, 집계한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정보통신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의 판단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분류에 특수분류라는 항목을 신설해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나라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비교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정보 유통, 나아가 삶의 양식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관련 통계로써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제1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표 26-1〉 정보통신 사업체수

사업체수

정보통신산업은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체 수가 1993년 5,478개에서 1999년 12,382개로 6년 동안 2.3배 증가하였다. 이들 사업체의 업종구성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5,069개(40.9%), 정보통신기기산업이 5,066개(40.9%), 소프트웨어 부문이 2,247개(18.1%)이다. 1993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이 1,401개로 전체 사업체의 25.6%, 정보통신기기 산업이 3,402개로 62.1%, 소프트웨어 부문이 675개로 12.3%였다. 1993년과 비교하면 정보통신기기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의 비중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1993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체는 1997~1999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늘었다. 그 이유로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신규사업자 진출, 등록제였던 부가통신서비스의 신고제 전환, 그리고 별정통신서비스분야 신규사업자의 등장, 방송서비스의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단위 :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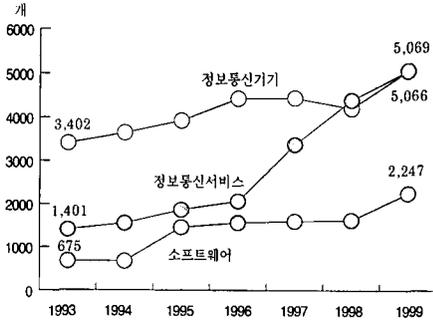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5,478	7,226	8,037	9,398	10,219	12,382
정보통신 서비스	1,401	1,858	2,057	3,367	4,393	5,069
기간통신 서비스	14	14	15	23	30	32
별정통신 서비스	-	-	-	-	13	58
부가통신 서비스	444	875	1,076	2,364	3,362	3,960
방송 서비스	943	969	966	980	988	1,019
정보통신 기기	3,402	3,917	4,424	4,438	4,205	5,066
통신기기	544	632	750	1,079	1,024	1,264
정보기기	372	413	656	508	487	628
방송기기	316	367	372	192	164	248
부품	2,170	2,505	2,646	2,659	2,530	2,926
소프트웨어	675	1,451	1,556	1,593	1,621	2,247
패키지 소프트웨어	527	943	958	774	716	897
컴퓨팅 서비스	148	508	544	712	796	1,200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서비스	-	-	-	-	61	99
데이터베이스제작	-	-	54	107	48	51

주 : 1) 1993~1995년 S/W 중 컴퓨팅 서비스는 이전 분류의 오프라인 정보처리자료이며, DB제작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포함됨

2) 1997~1998년 정보통신기기 사업체 수는 4인 이하 사업체는 제외됨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그림 26-1〉 정보통신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9년 말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상시종사자 수는 약 41만3천명이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22.60, 정보통신기기 부문이 64.6%, 소프트웨어 부문이 13.4%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기 산업이 일자리 측면에서는 가장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9년 정보통신산업의 상시 종사자 수는 1993년에 비해 약 12만3천명 늘었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는 정보통신 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늘어난 사업체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가 많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체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대폭적인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직접 정보통신산업 분야

〈표 26-2〉 정보통신 사업체의 상시 종사자수

(단위 : 천명)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290.3	395.5	515.9	401.8	387.1	412.9
정보통신 서비스	94.8	107.8	123.0	105.0	99.3	90.8
기간통신 서비스	63.9	66.9	70.7	70.1	65.8	54.4
별정통신 서비스	-	-	-	-	0.4	1.4
부가통신 서비스	17.9	21.8	30.4	11.6	10.0	12.5
방송서비스	13.0	19.1	21.9	23.3	23.1	22.5
정보통신기기	176.9	256.1	354.6	252.7	241.6	266.8
통신기기	...	61.0	99.0	45.9	44.4	49.6
정보기기	...	41.3	99.1	38.3	32.3	38.5
방송기기	...	29.2	25.2	6.2	5.7	7.0
부 품	...	124.6	131.3	162.4	159.2	171.7
소프트웨어	18.5	31.6	38.3	44.0	46.2	55.3
패키지 소프트웨어	7.2	16.5	16.1	10.4	14.0	13.6
컴퓨팅 서비스	11.3	15.0	21.2	32.8	30.7	39.4
멀티미디어 콘텐츠	-	-	-	-	0.7	1.6
개발서비스	-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	-	-	1.1	0.9	0.8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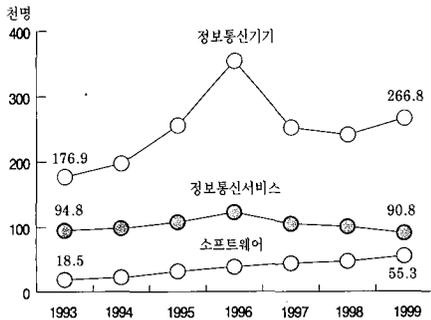
주 : 1) 1993~1995년 S/W 중 컴퓨팅 서비스는 이전 분류의 오프라인 정보처리자료이며, DB제작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포함됨

2) 종사자수는 연말 기준 자료이며, 1997~1999년은 사업체 총종사자수가 아닌 정보통신부문 해당 종사자수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에서 일하지는 않더라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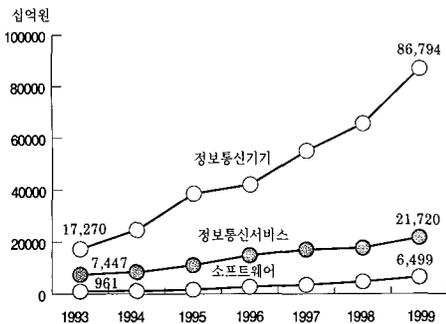
[그림 26-2] 정보통신사업체의 상시 종사자수



생산액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은 1999년의 경우 약 115조원에 달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21조7천억원으로 약 18.9%, 정보통신기기 부문이 86조 8천억원으로 약 75.5%, 소프트웨어 부문이 6조5천억원으로 5.7%를 차지한다. 이러한 생산액은

[그림 26-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표 26-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단위 : 십억원)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25,678	51,445	59,441	75,531	87,971	150,12
정보통신 서비스	7,447	11,145	14,808	17,048	17,719	21,720
기간통신 서비스	5,885	8,028	11,315	12,913	13,782	16,117
별정통신 서비스	-	-	-	-	55	266
부가통신 서비스	1,955	361	507	992	1,092	1,834
방송 서비스	1,367	2,756	2,986	3,144	2,790	3,053
정보통신 기기	17,270	38,626	41,964	54,979	65,569	86,794
통신기기	2,634	4,627	8,919	13,754	14,235	19,998
정보기기	2,987	6,334	6,389	9,781	10,682	15,667
방송기기	3,336	1,381	1,579	584	744	866
부품	11,316	26,284	25,076	30,861	39,908	50,263
소프트웨어	961	1,675	2,670	3,503	4,683	6,499
패키지 소프트웨어	468	728	988	1,261	1,259	1,320
컴퓨팅 서비스	448	918	1,609	2,146	3,336	5,017
멀티미디어 콘텐츠	-	-	33	36	45	124
개발서비스	-	-	-	-	-	-
데이터베이스 제작	46	29	40	61	43	38

주 : 1) 1993~1994년 S/W 중 컴퓨팅 서비스는 H/W 부문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1994~1999년 사이에 약 3.3배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체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5.5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1.5배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대단히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란 전신·전보·유무선 전화·PC통신·방송 등과 같이 음성·화상·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신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정보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별정통신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와

기간·별정·부가통신서비스

기간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별정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구역내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서비스 외의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송서비스로 구분된다. 기간·별정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규모

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규모는 1995년 약 11조원에서 1999년 약 22조원으로 연평균 17.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중 기간통신서비스는 1995년 약 8조원에서 연평균 19.0% 성장해 1999년 약 16조원으로 전체 정보통신서비스의 74.2%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간통신서비스가 크게 성장한 것은 무선호출·개인휴대통신 등 다양한 기간통신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통신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993년에는 무선호출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1997년부터 개인휴대통신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부가통신서비스도 1995년 3천6백억원 매출에서 연평균 50.0% 가량의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가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3.2%에서 1999년 8.5%로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하였다. 부가통신서비스의 발전은 정부가 적극적인 부가통신 활성화 정책을 펼 데다 역시 최근 들어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1995년 2조8천억원에서 1997년 3조2천억원으로 매출액이

〈표 26-4〉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증가 률 ¹⁾
계	11,233.2	14,807.6	17,062.3	18,096.1	21,714.0	17.9
기간통신 서비스	8,028.0 (71.5)	11,315.4 (76.4)	12,912.5 (75.7)	14,148.3 (78.2)	16,116.7 (74.2)	(19.0)
별정통신 서비스	- (-)	- (-)	- (-)	54.8 (0.3)	266.0 (1.2)	(385.4)
부가통신 서비스	361.0 (3.2)	506.7 (3.4)	992.0 (5.8)	1,092.0 (6.1)	1,834.3 (8.5)	(50.1)
방 송 서비스	2,755.5 (25.3)	2,985.6 (20.2)	3,157.9 (18.5)	2,800.9 (15.5)	3,497.0 (16.1)	(6.1)

주 : 1) 1995~1999년 기간중 연평균 증가률(%)임

2)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증가하였지만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방송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2조8천억원까지 매출액이 줄었다가 1999년에는 다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방송서비스의 이러한 매출액 변화는 케이블 방송의 개시 등으로 방송서비스 시장은 커졌지만 광고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방송의 특성상 경제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송서비스가 전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요인과 함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의 비약적인 성장의 영향도 받아 1995년 25.3%이던 것이 1999년 16.1%로 떨어졌다. 별정통신은 1998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1999년 2천660억원의 매출로 점유율 1.2%에 그쳐 아직은 미미

한 수준이다.

기간통신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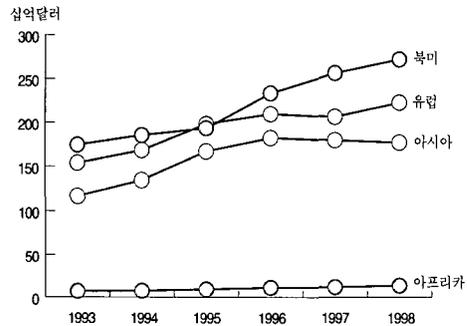
기간통신서비스는 크게 유선통신망을 이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유선통신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유선통신서비스에는 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공중전화·전용회선·기업통신 등이 포함된다. 무선통신서비스는 셀룰러 폰·PCS·무선호출 서비스 등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간통신서비스에서 유선통신서비스는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크게 늘지 않는 반면에, 무선통신서비스는 휴대폰(셀룰러 폰과 PCS)의 급격한 확산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다. PC통신과 인터넷의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시시각각 커지는 상황에서 PC 통신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긴밀히 연관된 기간통신서비스는 앞으로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세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을 국제통신연합(ITU)의 자료로 보면 매출액은 1998년 현재 약 7,241억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은 1994년까지는 10% 이내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1995년 14.9%, 1996년 12.4%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1997년 이후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다소 증가율이 떨어졌으나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미권의 지배력 역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94년 15.5%, 1995년 24.2%의 빠른 성장을 보인 이후 1996년 9.2%로 크게 둔화돼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1.5%와 1.4%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여 1995년 이후 연평균 20.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1998년에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각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규가입자 감소, 해지율 증가 등 통신시장이 위축된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용료를 인하한 점도 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유선통신서비스

[그림 26-4] 세계의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의 경우 특히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액은 1995년 6조4,829억원에서 1996년 7조8,770억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1997년에는 7조9,828억원에 머물렀으며 1999년은 1998년에 이어 오히려 줄어들어 6조8,93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기간통신서비스 중 무선통신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분야의 매출액은 1995년 1조7,101억원에서 1996년 3조4,384억원, 1997년 4조9,297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1999년에는 9조2,228억원에 달해 무선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유선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 같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급성장은 무엇보다 1990년대 초반 무선호출 사업의 성장,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 이동전화 사업의 성장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의 시장규모가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30%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57.2%를 점하게 되었다. 유·

<표 26-5> 세계의 기간통신 서비스 매출액

(단위 : 백만달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470,675 (5.3)	516,469 (9.7)	593,671 (14.9)	667,583 (12.4)	691,309 (3.6)	724,130 (4.7)
아프리카	6,966 (-2.1)	7,460 (7.1)	9,209 (23.4)	11,179 (21.4)	11,753 (5.1)	13,617 (15.9)
북미	174,422 (5.4)	185,493 (6.3)	193,536 (4.3)	233,731 (20.8)	256,593 (9.8)	272,423 (6.2)
중남미	18,865 (19.3)	20,569 (9.0)	25,301 (23.0)	30,063 (18.8)	36,360 (20.9)	37,682 (3.6)
아시아	116,536 (17.2)	134,541 (15.5)	167,136 (24.2)	182,565 (9.2)	179,864 (-1.5)	177,303 (-1.4)
유럽	153,886 (-3.4)	168,405 (9.4)	198,489 (17.9)	210,044 (5.8)	206,738 (-1.6)	223,106 (7.9)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ITU, World Telecom Indicators, 1999.11

〈표 26-6〉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단위 : 억원)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80,280	113,154	129,125	141,483	161,167
유선통신 서비스	64,829	78,770	79,828	75,714	68,939
시내전화	26,944	29,840	30,497	30,723	26,183
시외전화	19,447	21,756	18,648	15,732	13,592
국제전화	6,423	7,530	6,581	5,899	5,737
기업통신	46	50	65	75	70
공중전화	5,323	6,125	5,828	5,022	3,335
전용회선	4,615	6,215	8,277	8,736	10,554
기타	381	7,254	9,932	9,527	9,468
무선통신 서비스	17,101	34,384	49,297	65,769	92,228
셀룰러	8,477	22,538	32,722	37,430	52,774
PCS	-	-	901	15,792	33,819
TRS	12	34	74	71	121
CT-2	-	-	603	425	139
무선호출	8,608	11,633	14,672	11,675	4,770
무선데이터	-	-	1	7	136
기타	4	179	324	369	469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무선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내전화의 경우 1995년 2조6,944 억원에서 1999년 2조6,183 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시외전화는 1996년 2조 1,756 억원을 정점으로 1997년 1조8,648 억 원, 1999년 1조3,592 억원까지 감소했다. 국제전화의 경우도 비슷하여 1996년 7,530 억원에서 1999년 5,737 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용회선 매출액은 1995년 4,615 억원에서 1999년 1조5,554 억원으로 약 2.3 배의 성장률을 보여 유선통신서비스 중

두드러졌다.

이처럼 유선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시외·국제전화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것은 별정통신서비스 등 기존의 시외·국제전화를 대신할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했고 무선통신서비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용회선 매출액의 증가는 최근 정보통신이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 위주로 바뀌고 인터넷 등의 이용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전용회선 부문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서비스에서 셀룰러 방식의 이동전화는 약 5조3천억원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 가운데 1997년부터 본격화된 개인휴대통신(PCS) 방식의 이동전화도 사업개시 3년여만에 3조4천억원 가까이 성장했다.

한편 무선호출의 경우 1997년에는 1조 5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1999년에는 오히려 4,770 억원 대로 감소했다. 이러한 무선호출의 퇴조는 음성통화나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무선호출 가입자 중 상당수가 개인휴대통신(PCS)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PCS 단말기 등이 정보단말기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무선호출의 퇴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중 유선통신서비스는 1995년 약 1,900만명에서 1999년 2,400만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해 이미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포화상

태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선통신서비스는 1995년 약 1,100만명에서 1996년 1,600만명으로 증가했고 1997년에는 유선통신가입자를 추월하여 2,300만명에 이른다. 더욱이 유선통신가입자가 1997년에서 1998년에 소폭 감소한데 비해 무선통신가입자는 1999년 2,670만명까지 증가했다. 무선통신서비스가 유선통신서비스를 대신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 준다.

유선통신서비스의 시설수와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유선통신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회선수는 가입자와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유선통신서비스의 이용건수가 매출액이나 가입자보다 큰 폭으로 1997~1999년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선통신시설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 반면 무선통신서비스는 시설수와 이용건수 모두 폭발적으로 늘

었다. 시설수의 경우 1995년의 약 2천만 회선에서 1999년 5천2백만 회선으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1996년 약 103억건에서 1999년 약 362억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무선통신서비스의 증가는 무선통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보급이 급속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의 정보이용 패턴이 유선통신 위주에서 무선통신 위주로 바뀌는 현상을 반영한다.

부가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발린 통신시설이나 자체 보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부가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음성전화정보, 고도 팩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정보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시켜 정보의 축적·전송·변환·계산·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을 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나 정보처리·멀티미디어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1993년 1천9백억원에서 1997년 9천9백억원으로 급증했고 1998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으며, 1999년에는 약 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1996

〈표 26-7〉 기간통신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천회선, 천명, 백만건)

		1995	1997	1998	1999
무선통신 서비스	시설수	23,672	27,455	28,410	28,699
	가입자수	19,197	21,513	21,240	23,974
	이용건수	95,109	83,700	67,853	52,835
유선통신 서비스	시설수	19,661	40,304	48,505	51,952
	가입자수	11,276	22,777	23,680	26,720
	이용건수	...	19,542	26,645	36,237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각 호

년 40.3%, 1997년 95.8%, 1999년 36.5% 등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전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부가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3.2%에서 1999년 8.5%까지 높아졌다. 1999년 부가통신사업자 업체 수는 3,960개로 1995년에 비해 4.5배로 늘어났다. 이들 사업자 중 대부분은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겸업하고 있는 종합부가통신서비스 형태를 이룬다.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간통신서비스업

체가 주도하며,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ISP 업체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부가통신서비스는 다시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 부가통신망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음성전화정보, 고도 팩스와 기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999년 1조4,887억원이고 이중 부가통신망서비스가 9,539억원으로 절반 이상(64.1%)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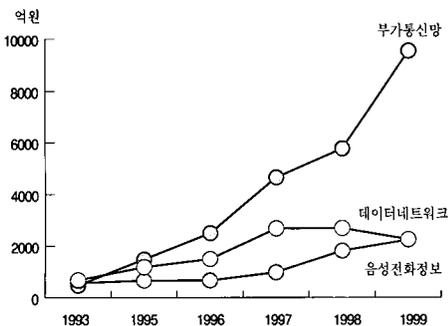
<표 26-8>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억원)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944	3,610	5,067	9,920	10,908	14,887
데이터네트워크	675	1,175	1,493	2,687	2,699	2,267
부가통신망	466	1,477	2,504	4,656	5,766	9,539
온라인정보처리	...	262	284	315	319	364
음성전화정보	562	657	660	976	1,818	2,246
고도팩스	24	40	125	218	124	132
기타	217	-	-	1,067	182	339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각 호

[그림 26-5]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를 살펴보면 음성통화 정보 이외의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패킷교환·회선교환·화상회의·프레임 릴레이·데이터 단순전송 등으로 구분된다. 패킷교환서비스는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이 제공하는 HiNET-P, DNS등과 같은 서비스로 국내 공중데이터통신망의 주종이다.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회선교환서비스는 한국통신의 공중기업통신망(CO-LAN)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일반 전화회선에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산망형 데이터공중망서비스로서 회선교환과 패킷교환이 혼용된 고속패킷망이다. 가상사설망 서비스(VPN: Virtual Private Network)는 이용자가 자사의 전용선을 사용하여 구축한 내선 전화망과 같이 공중망에서도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Internet, Frame-Relay Network, ATM Network, X.25 등처럼 공중망을 이

용하여 사설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회의서비스는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지에 있는 다자간에 동화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네트워크시장은 데이터 단순전송과 팩킷교환이 1999년 현재 1,579억원 가량으로 이 두 서비스가 전체

국가망사업을 중심으로 2000년 7월부터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가통신망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통신망서비스(온라인 정보서비스)로 1995년 1,477억원에서

〈표 26-10〉 부가통신망 서비스

(단위 : 억원, 천명, 천건)

〈표 26-9〉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액

(단위 : 백만원)

	1993	1995	1997	1998	1999
계	67,478	117,452	268,664	269,924	226,702
팩킷교환	16,586	33,949	60,544	53,985	81,272
회선교환	452	3,504	8,944	23,273	13,428
가상사설망	-	-	1,678	2,904	16,050
화상회의	-	25	314	314	280
프레임릴레이	-	28	33,438	71,425	39,083
데이터단순전송	50,440	79,946	163,746	118,023	76,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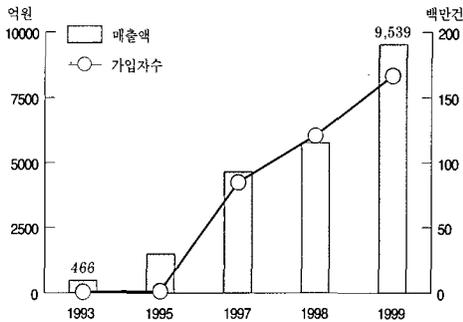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의 69.6%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는 1997년 1,637여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프레임릴레이 서비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로 1995년 개시 후 1997년 334억원, 1998년 714억원 등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999년 391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ATM(비동기전달방식) 서비스는 시험망에서 시범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초고속

	1993	1995	1997	1998	1999	
계	매출액	466	1,477	4,656	5,766	9,539
	가입자수	581	1,313	84,921	120,856	166,845
	이용건수	-	5,883	23,423	58,412	75,256
온라인	매출액	-	856	3,668	4,590	8,206
	가입자수	200	809	7,801	11,168	15,739
	이용건수	-	588	1,748	4,553	6,405
전자우편	매출액	130	72	-	-	-
	가입자수	83	48	-	-	-
	이용건수	-	-	-	-	-
신용카드	매출액	166	288	352	264	451
	가입자수	290	442	659	701	701
	이용건수	-	-	251	243	242
컴퓨터예약	매출액	112	170	280	320	191
	가입자수	4	5	4	137	138
	이용건수	-	143	233	233	184
전자문서교환	매출액	59	90	342	359	634
	가입자수	4	9	22	62	87
	이용건수	-	-	111	812	695
기타	매출액	-	-	13	233	57
	가입자수	-	-	58	177	204
	이용건수	-	-	-	-	-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그림 26-6] 부가통신망 서비스



1999년에는 약 6.5배인 9,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도 1995년 131만명에서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1999년 가입자수는 1억6,685만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PC통신·정보제공·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된다.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중 온라인 정보처리서비스는 온라인수탁계산(자료처리)서비스와 컴퓨터파워제공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1995년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중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1999년도에는 364억원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음성전화정보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의 하나다. 이는 정보제공자가 700서비스 교환설비에 전화정보장치(audiotex system)를 설치하여 음성 등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자가 전화기·PC·팩스 등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이용번호 '700-XXXX'를 호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종 생활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700서비스와 전화사서함서비스로 구분된다. 음성전화정보서비스는 199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999년 연간 2,246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음성전화정보 서비스는 일부에서 음란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부가통신서비스의 틈새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팩스서비스는 팩스전용망을 이용하여 여러 수신자에게 동시에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많은 팩스를 보낼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전화선을 통해 직접 보낼 때와는 달리 전송결과를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 알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 전송이 늘어나고 있어 1999년 전년 대비 약 6.5% 증가한 132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산업에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등이 포함된다. 지상파 TV 및 라디오와 위성방송은 공중으로 방송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수상기가 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KBS·MBC·SBS 등이 포함되며 위성방송은 KBS와 EBS가

운영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케이블을 통해 방송내용을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 1995년부터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다. 그 외에 지상파 TV가 잘 수신되지 않는 난시청 지역에서 유선통신망을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중계유선 서비스와 전광판 방송 등 기타 방송 서비스가 활동하고 있다. 중계유선 방송의 경우 사업체 수는 약 900여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들로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주류다.

방송서비스별로 1999년 매출액구성비를 살펴보면 지상파 TV가 46.9%, 종합유선방송이 33.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상파 라디오가 10.0%, 중계유선방송 7.8%, 전송·분배가 1.6%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에 거의 의존하여 운영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방송서비스의 총매출은 2조8천억원으로 1997년의 3조2,568억원보다 4,559억원(14.0%) 감소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매출은 1997년 2조4,284억원에서 1998년 1조7,295억원으로 28.8%나 줄었다.

유선방송의 경우 1995년 사업을 개시한 종합유선방송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1999년에도 전년 대비 30.6% 늘어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초기 투자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매출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서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선방송은 활성화 정도를 가입자수로 살펴볼 수 있다. 1999년 현재 가입자는

〈표 26-11〉 방송서비스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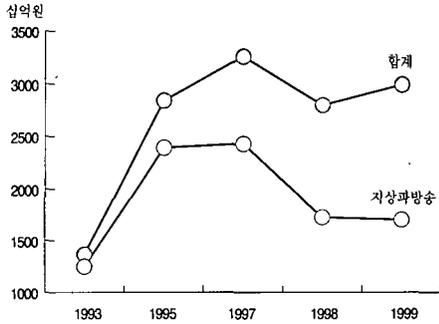
	1993	1995	1997	1998	1999
계	1,366.9	2,844.2 (108.1)	3,256.8 (14.5)	2,800.9 (-14.0)	2,992.4 (6.8)
지상파방송	1,247.5	2,391.1 (91.7)	2,428.4 (1.6)	1,729.5 (-28.8)	1,704.7 (-1.4)
라디오	137.2	562.8 (310.2)	254.0 (-49.5)	163.4 (-42.5)	300.7 (84.0)
TV	1,110.3	1,828.2 (64.7)	2,144.4 (17.3)	1,566.1 (-27.0)	1,404.0 (-10.4)
유선방송	119.4	453.2 (279.6)	827.8 (82.6)	1,071.4 (29.5)	1,284.8 (19.9)
종합유선	-	88.7 (-)	556.4 (527.3)	767.9 (38.0)	1,003.0 (30.6)
중계유선	119.4	364.4 (205.2)	238.3 (-34.6)	265.4 (11.4)	233.9 (-11.9)
전송, 분배	-	- (-)	33.2 (-)	38.1 (14.8)	47.9 (25.7)
기타방송	-	- (-)	0.6 (-)	- (-)	2.9 (-)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각 호

136만가구, 중계유선방송의 가입자는 약 652만가구로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1997년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소 성장이 둔화됐고 중계유선방송의 경우는 1996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그림 26-7] 방송서비스 매출액



난시청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종합유선방송이 사실상 중계유선방송의 서비스 내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앞으로 당분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서비스 산업은 1997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TV 수상의 보급,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비교적 안정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초기의 큰 기대와는 달리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시청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어려움이 더 커졌다.

방송서비스 산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디지털 방송과 위성방송의 도입이다. 이들 새로운 방송기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서비스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고화질·다채널 시대의 본격적인 등장과 쌍방향 TV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채널 시대에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표 26-12> 방송서비스 가입자

(단위 : 천가구, %)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종합유선	-	359	499	825	850	1,359
방송	(-)	(-)	(38.8)	(65.2)	(3.0)	(37.5)
중계유선	4,509	6,693	6,024	5,854	7,005	6,523
방송	(-)	(25.8)	(-10.0)	(-2.8)	(19.7)	(-7.4)

주 : •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은 유료가입자 수준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각 호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방송서비스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제3절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 정보의 전송·저장·가공·처리에 관련된 기기다. 여기에는 유·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와 같은 정보기기, 지상파·유선·위성방송국의 송수신 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정보통신기기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의 비중 또한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기기 사업체는 1999년 5,066개 업체로 1998년의 4,205개에 비하여 861개(20.5%) 증가했다. 종사자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이들 산업이 외환위기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던 제조업체였기 때문에 1998년은 줄었으나 1999년은 다소 회복된 26만7천명이다.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사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매출은 꾸준하게 늘었다. 특히 활발한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서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보통신

〈표 26-13〉 정보통신기기 내수액

(단위 :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81,430	267,683	336,676	457,397	480,058	704,896
통신기기	27,516	42,789	88,767	132,852	113,298	158,998
정보기기	30,593	49,488	46,298	69,028	62,060	107,368
방송기기	1,126	12,162	15,377	5,416	6,962	5,479
부품	122,195	163,244	186,234	250,102	297,738	433,051

자료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기기 산업의 매출액은 1999년 약 64조3천 억원으로 1998년보다 33.9% 증가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CDMA 단말기, 그리고 반도체의 생산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한편 1999년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입 규모는 661억달러(수출 399억, 수입 262억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규모(2,620억 달러)의 25.2%를 차지하였다. 우선 1999년 정보통신기기 총 수출액은 398억9,700만달러로 1998년보다 94억2,500만달러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기기에서 7억3천만달러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정보기기, 부품 등 모두 증가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표 26-14〉 정보통신기기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20,210	31,721	29,563	31,198	30,472	39,897
통신기기	1,790	2,202	2,411	2,854	3,405	6,046
정보기기	2,777	3,933	4,707	5,320	4,669	7,267
방송기기	308	359	160	193	178	343
부품	15,335	25,227	22,285	22,832	22,219	26,241

자료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큰 부품은 40억달러 가량이 늘었으며 262억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의 증가 속에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즉 1999년의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261억9천만달러로 1998년보다 8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부품은 약 54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수출입차는 1998년의 124억달러에서 1999년 137억달러로 13억달러 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외환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특정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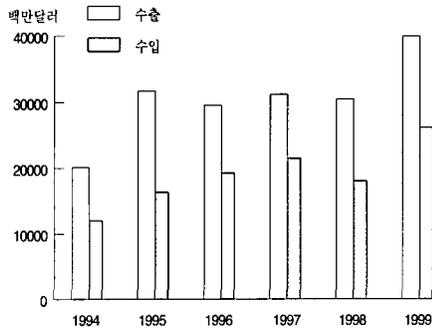
〈표 26-15〉 정보통신기기 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2,017	16,344	19,244	21,484	18,023	26,190
통신기기	1,409	1,751	2,358	2,362	1,431	2,601
정보기기	1,572	2,137	2,520	2,294	1,470	3,122
방송기기	97	145	103	148	148	76
부품	8,938	12,311	14,263	16,681	14,975	20,391

자료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그림 26-8]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대한 편중이다. 매출액 비중이나 수출액 비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품, 특히 반도체 분야에 생산·수출이 집중됐다.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세계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편중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기기

통신기기는 크게 유선통신기기와 무선통신기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유선통신기기는 유선전화기·교환기·전송기기·유선전신기기·전선 및 광섬유케이블·구내정보통신기기(LAN기기)·기타 유선통신기기·유선통신기기 부분품 등이다. 이들 유선통신기기의 총 생산액은 1994년 1조 8,175억 원에서 1998년 5조 40억 원으로 175% 증가하였다. 유선통신기기 생산액에서 이들 부문별 비중은 지난 5년 동

안 크게 변화하였다.

1994년 전체 생산액 중 교환기(4,598억 원, 25.3%)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유선전화기(4,464억 원, 24.6%)이다. 그러나 1998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1조 4,825억 원, 29.6%)이다.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앞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선전화 서비스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유선전화 서비스와 관계가 깊은 교환기나 유선전화의 생산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초고속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기기에는 무선통신단말기·무선통신시스템·무선전신기기·무선통신송수신기·위성통신기기·기타 무선통신기기·무선통신기기 부분품이 포함된다. 무선통신기기의 생산액은 1994년 1조 2,405억 원에서 1998년 9조 2,310억 원으로 644% 증가했다. 유선통신기기에 비교해 무선통신기기의 생산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무선통신기기 생산액의 68.7%는 무선통신단말기였다. 이는 1997년부터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CDMA 단말기의 수출시장도 넓어지면서 무선통신 단말기 생산이 늘기 때문이다.

정보기기

정보기기는 소형(퍼스널) 컴퓨터·워크스테이션·중대형 컴퓨터·기타 컴퓨터·보조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입출력 겸용장치·주기억장치·기타 주변기기 등을 말한다. 정보기기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출력에 이용되며 정보화와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이들 산업에서는 최첨단 정보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생산량의 2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니터가 세계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TV 생산을 통해 성장한 것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정보기기 산업은 미국·일본에 비해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기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자. 1998년 정보기기의 총 생산액은 10조6,817억원으로, 1994년의 4조275억원보다 약 2.7배로 증가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1998년 정보기기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력장치다. 정보기기 총 생산액의 33.9%인 3조6,164억원이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모니터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모니터시장은 한국·대만·일본 등 3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극선관(CRT)모니터 생산은 1998년 약 2,500만대로 세계 총생산량의 26%였다. 액정(LCD)모니터 생산도 1998년 약 35만대로 세계시장의 27.2%를 점유했다.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들 분야가 전체 정보기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기 수출입을 교역상대국별로 살펴보면, 1999년의 수출 약 72억7천만달러 중 미국이 32억달러, EU가 18억달러로 각각 약 44%와 25%를 차지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약 8억달러(11.4%)를 차지했고 일본은 전체의 13.1%인 약 9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총 31억2천만달러의 수입 중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일본 제외)로부터 전체의 60.9%인 19억달러를 사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전체의 19.1%인 6억달러를 수입했다.

정보기기 수출은 전체의 70% 정도를 미국 및 EU 시장에 하고 수입은 90% 이상을 아시아·미국·일본 등에서 하는 셈이다. 이처럼 수출 시장과 수입 시장이 다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보기기의 수출품목이 편중된 것에 큰 원인이 있다. 즉 모니터나 하드디스크 등 일부 품목에만 집중적으로 생산,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유럽과 미국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정보기기는 아시아 각 국과 일본·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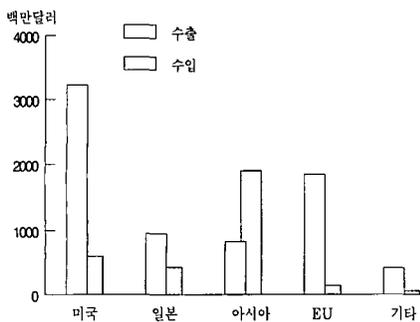
〈표 26-17〉 주요대상국별 정보기기 수출입(1999)

(단위 :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수 지	경쟁력 계 수
계	7,267	3,122	4,145	0.40
미 국	3,229 (44.4)	597 (19.1)	2,632	0.69
일 본	951 (13.1)	423 (13.5)	528	0.38
아시아 (일본 제외)	828 (11.4)	1,901 (60.9)	-1,073	-0.39
E U	1,845 (25.4)	142 (4.5)	1,703	0.86
기 타	414 (5.7)	59 (1.9)	355	0.75

주 : ()는 전체대비 비중임
 자료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그림 26-9] 주요 대상국별 정보기기 수출입(1999)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에 따라 정보기기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보기기의 생산 및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대상 지역도 다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방송기기

방송기기란 모든 종류의 방송 송수신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기와 그 부분품을 말한다. 지상파 방송 송수신기기, 유선방송 송수신기기, 위성방송 송수신기기, 방송국용 기기, 방송기기 부분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송기기는 방송서비스의 필수적 장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방송 서비스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1998년 현재 전체 방송기기 생산액은 7,400억원이며 이 중 위성방송 송수신기기는 64%, 방송국용 기기는 약 17%를 차지했다. 1994년에서 1996년까지는 방송국용 기기의 생산액이 가장 많았으나 1997, 1998년에는 위성방송송수신기가 가장 많이 생산됐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위성 방송 수신기다.

1990년대 중반에 방송국용 기기가 많이 생산되었던 것은 이 당시 종합유선방송이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위성방송 장비의 수요 증가도 위성방송의 본격 실시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방송사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방송기기의 생산, 내수도 다소 침체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하면 이들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

정보통신기기 중 부품은 크게 능동부품·수동부품·기구부품·기타부품으로 나눈다. 반도체·전자관 및 그 부분품이 능동부품에 해당하고 저항기·변성기·축전기 및 그 부분품은 수동부품이다. 기구부품에는 전기회로접속기기·인쇄회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부분품 생산액은 1998년 34조8천억원이었다. 이는 1994년 17조4천억원의 두 배다.

이러한 규모는 199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40%에 이른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약 7.8% 수준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매출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세계시장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생산규모는 세계 주요 51개국 총 생산액 약 2,913억달러의 25.2%에 달한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은 이처럼 세계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품 산업은 편중이 심하다. 반도체 분야,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편중이 그것이다. 반도체는 크게 저장장치로 이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중앙연산장치(CPU)로 이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1998년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능동부품의 연간 생산액은 약 31조9천억원, 수출액은 약 206억달러, 수입은 132억달러다. 이는 전체 생산·수출·수입액의 79.8%,

92.7%, 88.3%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RAM은 생산이 8조6천억원으로 능동부품 전체 생산액의 27.1%를 차지한다. 메모리 반도체도 고부가가치 제품이지만 이러한 편중성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화에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편중성은 수출입 교역 대상국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1998년 정보통신기기의 5대 교역국을 보면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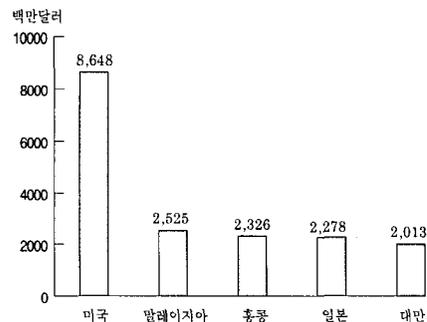
〈표 26-19〉 정보통신기기 5대 교역국(1998)

(단위 : 천달러)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미 국	8,647,637	미 국	6,932,723
2	말레이시아	2,524,887	일 본	4,355,330
3	홍 콩	2,325,829	대 만	998,533
4	일 본	2,278,119	중 국	849,886
5	대 만	2,013,023	싱가포르	834,545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정보통신기기 및 연구개발 통계』

[그림 26-10] 정보통신기기 5대 수출(1998)



는 미국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의 경우 일본·대만, 수출은 말레이시아·홍콩 등이다.

제4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실행제로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컴퓨터가 갈수록 일상 생활에 많이 쓰이면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창조적 사고와 고도의 지적 노동이 결합된 첨단 지식 산업으로 그 부가가치 창출 능력 또한 대단히 크다. 이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소프트웨어가 국내 컴퓨터 대부분에 쓰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정보통신산업보다 내수시장이나 수출시장의 규모가 작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워드프로세서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 제품을 앞서는 경우가 있다. 또 최근에는 응용소프트웨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창조적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기술이나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도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패키지 소프트웨어·컴퓨팅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서비스·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으로 구분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응용소프트웨어가 표준화돼 완성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개발도구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컴퓨팅 서비스는 완성품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이 주종이다. 일괄시스템 통합서비스, 단위별 시스템서비스,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자료처리 및 입력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서비스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다. 교육·문화·출판·영상물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시청각 데이터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은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정한 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컴퓨터에서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제작 사업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대행 사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사업체는 정보화의 확산을 반영하여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93년 668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 2,247개로 약 3.4배로 증가했다. 이들 사업체들을 위에서 언급한 분야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자. 1999년 현재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897개 업체로 전체의 39.9%, 컴퓨팅서비스가 1,200개로 53.4%,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이 각각 99개, 51개 업체로 4.4%, 2.3%를 차지했다.

1999년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1998년의 4만6천여명보다 9천명 가량 증가한 5만5천여명이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시종사자를 다시 세부 산업별로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가 1만4천명, 컴퓨팅서비스가 3만9천명,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이 2,300명 수준이었다.

한편 1999년 소프트웨어 생산 규모는 총 6조5천억원으로 1998년의 4조7천억원보다 38.8% 가량 성장했다. 부문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가 1조3천억원, 컴퓨팅서비스가 5조원이었으며,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이 각각 1,240억원, 380억원으로 각각 20.3%, 77.2%, 1.9%, 0.6%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액과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극심한 불황으로 생산액과 인력이 줄어들던 상황이었는데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오히려 38% 이상 생산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체제나 기반기술에서 미국 등에 비해 상당히 기술적 열세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수출입 통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1999년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총 6,083만 달러였다. 부문별 비중을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가 2,362만달러, 컴퓨팅서비스가 3,691만달러,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 서비스가 28만달러로 각각 38.8%, 60.7%, 0.5%였다.

한편 1999년 소프트웨어 수입액은 총 3억4,965만달러였다. 이 중 패키지소프트웨어가 3억2,105만달러, 컴퓨팅 서비스가

〈표 26-21〉 소프트웨어 수출액

(단위 : 천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6,391	16,717	21,500	51,497	52,812	60,834
패키지소프트웨어	16,391	15,179	9,529	9,661	8,488	23,621
컴퓨팅서비스	-	1,499	11,971	41,812	41,360	36,905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	-	39	-	24	2,964	284
데이터베이스제작	-	-	-	-	-	24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각 호

2,831만달러,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가 27만달러, 데이터베이스제작이 3만달러로 각각 91.8%, 8.1%, 0.1%, 0%였다.

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수입을 비교하면 1999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의 1/5에 못 미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출액이 수입액의 7.4%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컴퓨터에 쓰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앞으로 정보화의 진전이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절실하다.

〈표 26-22〉 소프트웨어 수입액

(단위 : 천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39,683	323,235	349,909	408,196	215,358	349,647
패키지소프트웨어	39,683	317,377	341,496	404,488	199,852	321,045
컴퓨팅서비스	-	5,430	6,764	3,846	15,232	28,309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서비스	-	428	-	-	263	267
데이터베이스제작	-	-	1,649	162	11	27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각 호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유틸리티, 통신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엑세스도구나 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 등 응용개발도구,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응용소프트웨어,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패키지소프트웨어 생산액은 1994년 5,310억원, 1995년 7,280억원, 1996년 9,880억원, 1997년 1조2,610억원 등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증가해 오다가 1998년 1조2,59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1999년에는 1조3,200억원으로 회복됐다.

1999년의 전체 소프트웨어 생산액 중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20.3%로 컴퓨팅 서비스가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빠르게 성장한 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이다. 1994년 45.3%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로 전체 생산액의 58.6%였다. 한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최근 리눅스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도 이같은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출입통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우선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1994년부터

감소 추세였다. 1996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면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1994년 1,639만달러에서 1999년 849만달러로 4년 동안 48.2% 감소했다. 그러나 1999년 응용 소프트웨어부문의 큰 폭 증가(73.7%)에 힘입어 2,362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은 응용 소프트웨어로 50.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9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입액은 총 3억2,105만 달러다. 이 중에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은 1억1,951만달러로 37.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1억1,664만달러로 36.3%였다. 결국 우리나라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액이 수입액의 1/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무역불균형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운영체제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그러한 불균형이 극심하다. 물론 세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장을 몇몇 미국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유지가 외국 기업의 손에 사실상 맡겨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돼야 한다.

컴퓨팅서비스

컴퓨팅서비스에는 컨설팅 및 기획, 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시스템통합 서비스(SI), 프로그램 개발서비스,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자료처리, 기타 컴퓨팅 서비스가 포함된다. 1999년 한 해 동안 컴퓨팅서비스의 생산액은 약 5조억원이었다. 이 중 일괄시스템통합서비스, 특히 하드웨어 개발 부문의 생산액이 가장 많았다. 일괄시스템통합서비스의 1999년 총생산액은 3조742억원이며 그 중 하드웨어개발이 5,241억원에 달한다. 이 부문 내수 규모는 총 5조원이며 이 중 약 61.4%는 일괄시스템통합서비스다.

일괄시스템통합서비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게 할 때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의 개발 업무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일괄시스템통합서비스는 컴퓨터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될수록 수요가 더 많아진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스템 관리 및 유지 보수 부문도 1995년 681억원에서 1998년 9,416억원으로 3년만에 12.8배나 증가하여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외부 컴퓨터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의 확대가 유지 보수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컴퓨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도 다소 경쟁력을 갖추었다. 1999년 컴퓨팅서비스

의 총 수출액은 3,691만달러로, 소프트웨어 총 수출액 6,083만달러의 60.7%를 차지한다. 컴퓨팅 서비스가 유형의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정확히 수출입을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할 때 유형의 재화를 다루는 경우와 달리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서비스가 90년대 말에 많이 수출된 것은 우리나라가 시스템 통합 분야 등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제 막 정보화에 착수하는 여러 나라들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서비스

멀티미디어콘텐츠에는 교육용·생활문화정보용·오락게임용·디지털출판물·디지털영상물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포함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서비스이다. 최근 정보전달 측면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송이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심에 비해 실제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서비스가 1999년 한 해 동안 이 분야에서 올린 생산액은 총 1,229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1999년,

2000년 들어 게임이나 전자출판물 등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다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적다.

한편 이들 분야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불법복제의 문제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한번 완성되면 복제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불법복제의 성행은 무엇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나아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을 어렵게 한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상황에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

데이터베이스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일정한 틀로 정렬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 서비스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검색대행이 이 부문에 속한다. 이 분야도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적은 편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 분야 전체의 1999년 생산액은 375억원이며 이는 1998년보다 12.8%준 것이다. 그러나 1995년 293억원보다 28% 늘었다.

제 27 장 금융·보험업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 시행에 맞춰 금융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7%에서 1999년 19.7%로 높아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1954년 은행법 시행과 1956년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5개의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이 설립돼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의 기능이 강화됐다. 1970년대 들어서는, 사금융 양성화에 따라 투자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또 증권감독원이 설치되고 직접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시스템도 다원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시중은행 민영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취급업무 다양화를 통해 금융자율화의 싹이 텄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 시작되었다. 1997년 말에는 금융기관의 부실 누증,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금융시스템이 혼란을 겪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금융시장, 지불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금융시스템

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시스템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통화당국과 신용을 창출하고 자금을 증개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과 이 시장의 참여자(가계·정부·기업 등)가 있어야 하고, 셋째 지불수단(현금·수표·어음 등)과 지불시스템을 보장하는 은행 제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각 구성부분이 발전해온 모습을 설명할 것이다. 이 글에서 이용한 금융통계자료는 통계개념적으로 분류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 한정하였다. 제1절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보험회사·증권회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기초인 지불수단 및 지불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제1절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란 여러 경제주체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증개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보험회사·증

권회사·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기구·우체국 등이 있으며,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있다. 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투자회사·선물회사·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회사·신용평가회사·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금융결제원·한국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가 있다.

1999년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567조원으로 198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은행의 자산은 930조원으로 1985년에 비해 8배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에서 59.4%로 줄어들었다. 반면 1985년 22조원이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산은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을 타고 금융회사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1999년 말에는 432조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기관 총자산에 대한 비중도 15.1%에서 27.6%로 커졌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자산은 1985년에 비해 각각 17.5, 45.5배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 총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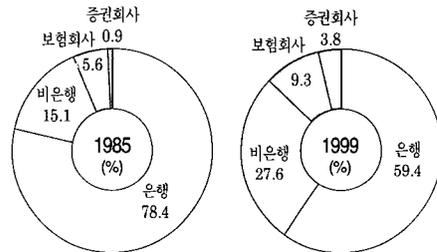
〈표 27-1〉 금융기관별 총자산규모

(기말 기준, 단위 : 조원, %)

	1985		1999		B/A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합계	148.5	100.0	1,566.9	100.0	10.6
은행	116.4	78.4	930.1	59.4	8.0
비은행	22.5	15.1	432.1	27.6	19.2
종합금융	6.8	4.6	38.2	2.4	5.6
투자신탁	6.0	4.0	212.8	13.6	35.5
상호신용	3.4	2.3	28.5	1.8	8.4
신용협동	5.1	3.4	135.9	8.7	26.6
우체국	1.2	0.8	16.7	1.1	13.9
보험회사	8.3	5.6	145.5	9.3	17.5
증권회사	1.3	0.9	59.2	3.8	45.5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1] 금융기관별 총자산 구성비



은행

보통 '은행(bank)' 이라 함은 예금은행을 가리킨다. 예금은행은 총부채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신용)의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일컬으며,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1)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단기의 예금 수신·대출 및 지급결제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으로 1970년대까지는 5개뿐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11개 은행이 신설 또는 업종전환해 1997년 말에는 16개로 늘어났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967년에서 1971년 사이에 10개가 설립되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하여 1997년 말 26개이던 은행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5개 은행이 퇴출되

고 4건의 은행합병이 이뤄져 2000년 말에는 17개로 줄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튼은행이 서울지점을 처음 설립한 이래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다가 대형은행간 합병에 따른 중복 점포의 폐쇄와 금융·외환위기 이후의 철수 등으로 1996년부터 감소하였다. 2000년 말 현재 영업중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총 43개이다.

일반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의 예금은 1985년 31조원에서 1999년 323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저축성예금이 요구불예금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저축성예금 증가는 정기예금과 저축

〈표 27-2〉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금

(기말 기준, 단위 : 조원, %)

	1985(A)	1999(B)	B/A
예금총계	31.0	323.4	10.4
요구불예금	10.8	42.1	3.9
저축성예금	20.2	281.3	13.9
(정기예금)	(-)	(147.1)	
(저축예금)	(-)	(54.5)	
대출금총계	33.8	250.2	7.4
재정자금	-	20.4	-
금융자금	-	229.8	-
(시설자금)	(-)	(21.5)	
(운전자금)	(-)	(208.2)	

주 : 예금은행 = 일반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수·축협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예금유형과 대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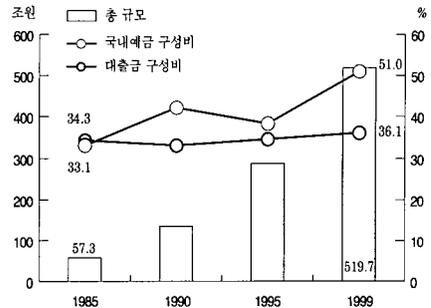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은 지급결제 편의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에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보통예금·별단예금 등이 있으며, 저축성예금에는 정기예금·정기적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상호부금 등이 있다.

은행의 주된 신용공여수단인 대출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용도로 민간부문에 대출하는 금융자금대출과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자금대출이 있다.

예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반은행의 대출금은 1985년 34조원에서 1999년 250조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운전자금 대출금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은행은 국내외로부터 예금과 같은 금융 상품 유치를 통해 여유자금을 모은 후 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는다. 일반은행이 조달하여 운용한 총액은 1985년 57조원에서 1999년 말에는 약 520조원에 이르렀다. 우선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원화예금 및 국내 외화예금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은 높아지고 한국은행 차입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원화예금 비중은 1985년 말 33.1%에서 1999년 말 51%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은행 차입금 비

[그림 27-2]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중은 같은 기간 중 12.8%에서 1.4%로 감소하였다. 한편 은행의 자금운용은 아직도 전통적인 자금운용수단인 대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유가증권투자도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원화대출금 비중은 1985년 말 34.3%, 1999년 말에는 36.1%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유가증권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26.3%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7-3>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57.3	135.5	288.7	519.7
자금조달 (%)	국내부채 (국내예금)	53.8 (33.1)	66.9 (42.1)	68.1 (38.3)	83.0 (51.0)
	(한은차입금)	12.8	6.8	3.0	1.4
	해외부채	14.5	5.4	8.3	5.9
	지급보증	28.4	18.6	16.2	6.1
자금운용 (%)	자기자본	3.3	9.1	7.4	5.1
	국내자산 (유가증권)	65.1 (4.5)	76.6 (8.4)	76.7 (12.4)	86.7 (26.3)
	(대출금)	34.3 (34.3)	33.1 (33.1)	34.6 (34.6)	36.1 (36.1)
	해외자산	6.5	4.8	7.1	7.3
지급보증대출		28.4	18.6	16.2	6.1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2)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2000년 말 현재 영업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 및 수협중앙회 등 5개다. 이들 특수은행은 그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조합형태인 농·수·축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은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금운용 면에서의 보완성과 전문성에 부응하여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간으로부터의 예금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자금조달·운용 추이는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은 높아지고 차입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예금 비중은 1985년 말 17.9%에서 1999년 말 24.7%로 증가하였으나 차입금 비중은 같은 기간 39.1%에서 19.2%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자금운용수단인 대출금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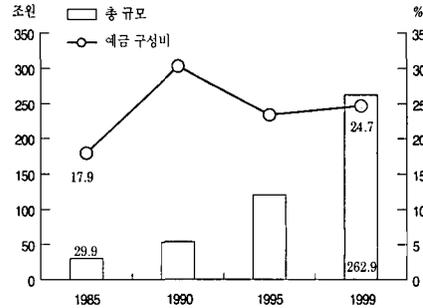
〈표 27-4〉 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29.9	53.9	120.6	262.9
조달 (%)	예금	17.9	30.3	23.4	24.7
	차입금	39.1	22.5	19.8	19.2
	기타	43.1	47.3	56.8	56.1
운용 (%)	현금·예치금	11.9	7.1	6.1	4.1
	유가증권	55.1	58.9	55.1	41.9
	대출금	4.2	7.1	10.2	18.0
	기타	28.8	26.9	28.6	36.0

주 : 각 은행계정을 단순 통합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3] 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유가증권 비중은 1985년 말 55.1%에서 1999년 말 41.9%로 감소하였으나 대출금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18.0%로 증가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1)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기관이며, 1975년 12월에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이 중장기 설비금융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전문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까지 5개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면서 회사수가 늘어나 1997년 말에는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17개 부실회사 퇴출과 3건의 합병이 이뤄져 1999년 말 10개로 줄었으며 2000년 말 현재 5개회사가

영업정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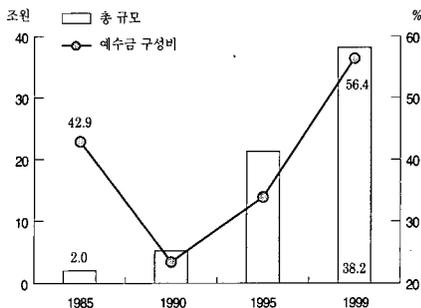
종합금융회사는 기업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발행어음·차입금·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대출금·리스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운용

〈표 27-5〉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2.0	5.2	21.3	38.2
조달 (%)	예수금 (발행어음)	42.9 (8.1)	23.4 (1.8)	33.9 (1.3)	56.4 (39.6)
	차입금	27.4	40.9	25.9	6.4
	채권발행	14.4	13.2	21.7	3.0
	기타부채	3.3	10.0	8.3	28.5
	자본계정	12.1	12.5	10.3	5.6
운용 (%)	현금·예치금	3.4	2.8	5.2	5.7
	유가증권	32.1	27.8	19.6	24.3
	대출금	21.1	10.5	35.3	27.6
	외화대출금	20.5	8.7	2.8	0.7
	리스자산	-	43.1	31.5	13.1
기타자산	22.8	7.2	5.7	28.6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4]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는 차입금 및 채권발행 비중이 컸으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발행어음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자금 운용에서는 어음할인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한 1995년에 대출금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리스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유가증권투자는 시기별로 다소 회복은 있으나 계속하여 주된 자금운용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수익의 일부를 금융서비스료 형태로 취득하는 회사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근거로 1974년 9월 한국투자신탁이 최초의 투자신탁회사로 설립되었고 1977년 2월 대한투자신탁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분리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민투자신탁과 5개 지방투자신탁회사가 신설되었다. 1996~1997년에는 23개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문회사에서 전환 또는 신설돼 1997년 말에는 31개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2개 부실회사가 퇴출되었고 5개 회사가 인가 취소되거나 정리되었으며 1건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2000년 말 현재 투자신탁운용회사를 포함하여 27개 투자신탁회사가 영업 중이다.

투자신탁회사는 주로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조달한 자금을 주로 유가증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약 213조원의 자금조달액 가운데 91.3%를 수익증권으로 조달하였다. 1995년 무렵에는 자본금이 적자의 누적으로 잠식돼 자금조달에 마이너스 기여를 하기도 했다. 조달한 자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1999

년 말에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67.7%로 줄어든 것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업어음(CP) 매입과 콜론(call loan) 비중을 크게 늘린 데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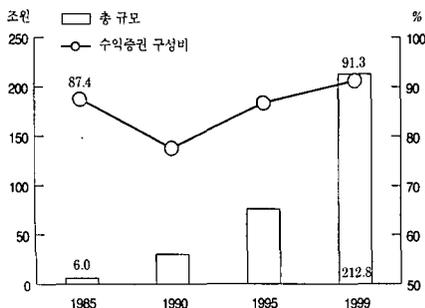
〈표 27-6〉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6.0	30.6	76.0	212.8	
조달 (%)	수익증권	87.4	77.6	86.7	91.3
	증권저축	3.2	1.3	0.3	2.3
	차입금	0.7	10.0	7.5	1.7
	기타부채	6.4	10.0	5.6	4.1
	자본계정	2.2	1.1	-0.1	0.6
운용 (%)	현금예치금	3.0	1.6	2.7	2.9
	유가증권 (주식)	(7.6)	(31.7)	(17.7)	(13.9)
	(채권)	(76.4)	(53.6)	(63.6)	(53.8)
	기타자산	13.0	13.1	16.1	29.4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5〕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3)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는 일정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1972년에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1970년대 초 사금융기관이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하여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가 문란해지자 정부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여 사금융기관을 전문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하면서 등장하였다. 상호신용금고의 수는 설립 초기인 1972년 말 350개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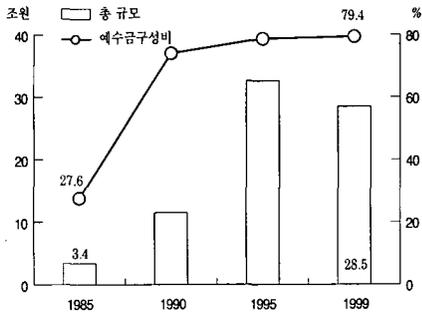
〈표 27-7〉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3.4	11.5	32.6	28.5	
조달 (%)	예수금	27.6	74.1	78.7	79.4
	기타부채	12.2	10.3	12.7	9.7
	자본계정	7.1	11.8	8.6	10.8
운용 (%)	현금·예치금	6.9	7.3	9.3	11.3
	유가증권	2.0	2.5	3.0	9.2
	대출금 (계약금액내)	(37.8)	(48.1)	(51.3)	(31.8)
	고정자산	5.1	4.8	5.3	6.5
	기타자산	1.6	1.9	3.5	7.6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6]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부실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신규설립 억제조치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다가 1982~1983년에는 다시 58개 금고가 신설되었다.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이 진전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많은 금고가 부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과 1999년 43개사가 퇴출되고 12개사가 합병되었으며 2000년 말 현재 147개사가 영업 중에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주로 정기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계약금액내 대출과 어음할인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자금조달 금액은 약 29조원이었으며 이중 예금형태의 예수금이 총자금조달액의 79.4%를 차지하였다. 자금운영면에서 대출금이 65.4% 차지하였으나 예전보다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유가증권 투자액은 꾸준히 늘어나 1999년 말 기준 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들에게 저축할 기회를 주고 대출도 해주는 등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1972년 8월에 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을 적용받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총자산규모는 농·수·축협 상호금융이 80조원으로 가장 크며, 새마을금고가 35조원이고, 신용협동조합이 20조원이다.

신용협동기구의 주요 운용자금 원천은 예수금과 조합원의 출자금이다. 1999년 말 현재 총자금조달금액은 약 136조원으로 이중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1%이고, 출자금이 3.1%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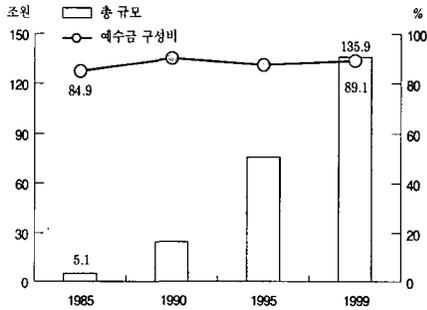
<표 27-8> 신용협동기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5.1	24.6	75.9	135.9
조달 (%)	예수금	84.9	90.0	87.4	89.1
	차입금	1.2	0.9	1.5	0.6
	기타부채	1.1	1.3	3.6	5.7
	출자금	9.7	5.5	4.9	3.1
운용 (%)	잉여금	3.1	2.3	2.6	1.5
	현금·예치금	19.0	13.7	14.4	15.2
	유가증권	3.3	10.5	9.0	24.3
	대출금	74.6	72.4	67.1	53.4
기타자산		3.1	3.4	9.5	7.2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7] 신용협동기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조달한 자금은 주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사용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자금운용수단인 대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5) 우체국

우체국 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 금융으로서 농어촌 및 도시의 소액가계저축 예금·지급을 주업무로 한다. 우체국 예금업무는 1961년 12월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었다. 1977년 3월 관련법의 폐지로 신규 취급이 한 때 중지되었으나 1982년 12월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83년 7월부터 우체국 예금업무가 재개되었다. 1990년 6월에는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구축되었고, 1995년에는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전산망이 연결되어 우체국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다. 1999년 말 현재 우체국 예금의 총자

산은 17조원 규모이다.

우체국은 주로 예금과 환매국공채 매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예치금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환매국공채 매도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저축성예금 비중이 높아졌다. 1999년 말 현재 저축성예금이 총자금조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3%이다. 자금운용에서는 1990년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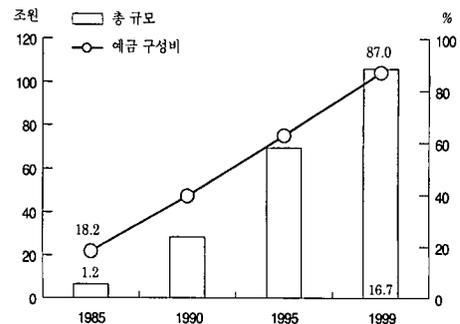
<표 27-9> 우체국 예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1.2	3.4	7.0	16.7	
조달 (%)	예금 (저축성)	18.2 (17.8)	39.6 (37.5)	62.7 (60.0)	87.0 (84.3)
	환매채	57.6	42.3	23.7	10.2
	기타부채	24.2	18.0	13.6	2.9
	현금	16.1	10.5	4.9	3.5
운용 (%)	예치금	11.7	41.0	39.7	62.2
	유가증권	72.2	46.2	54.7	33.7
	기타자산	0.0	2.3	0.7	0.6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8] 우체국 예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



반까지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예치금 비중이 더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말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포함한 예치금이 62.2%를 차지하여 우체국 예금의 가장 큰 자금운용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1)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는 사망·질병·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생명보험업은 1962년 보험업법·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련 3대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1977년 보험관계 법률들이 보험업법으로 통합·정비되었고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보험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8~1994년 중 서울에 본점을 둔 6개 회사와 지방에 본점을 둔 9개 회사가 신설되었다. 1997년 말 33개에 이르렀던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외환위기 이후 4개의 부실 회사가 다른 우량회사로 통합되어 2000년 말 현재 23개가 영업중이다.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보험계약준비금이 총자금조달금액의 90%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는 운용자금을 보험료 수입의 적립금인 보험계약준비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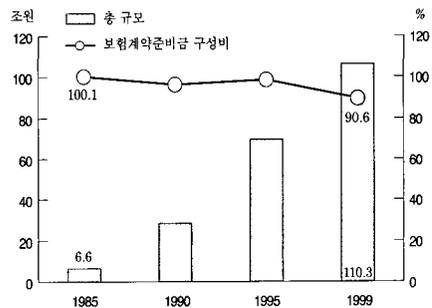
이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잉여금의 자금조달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자금운용 면에서는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출금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말 현재 총자금운용액 중 유가증권투자 및 대출금이 각각 40.8% 및 32.0%를 차지하였다.

<표 27-10>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6.6	28.4	69.7	110.3
조달 (%)	보험계약준비금	100.1	96.3	98.5	90.6
	기타부채	1.9	1.3	1.9	9.6
	자본금	0.2	1.5	1.1	5.0
	잉여금	-2.2	1.0	-1.6	-5.2
운용 (%)	현금·예금	6.7	10.0	13.8	4.7
	유가증권	18.3	25.6	27.6	40.8
	대출금	60.7	53.2	45.3	32.0
	부동산 기타자산	10.8 3.5	7.3 4.0	7.3 6.0	8.7 13.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9]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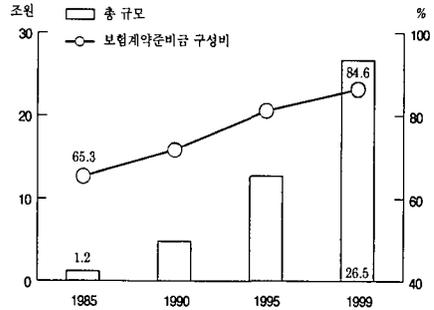


(2)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는 화재·자동차사고·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1940년대 까지 6개 회사, 1950년대 4개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4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신설되었고 2개 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1개의 손해보험회사만 설립되었으며, 금융·외환위기 이후 부실이 심한 2개의 보험회사가 합병되었다. 1999년에는 1개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17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중이다.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손해보험회사도 생명보험회사처럼 보험계약준비금이 주된 자금조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말 현재 보험계약준비금은 총자금조달금액 중 84.6%를 차지하였다. 자금운용

[그림 27-10]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면에서는 유가증권투자와 대출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총자금운용액 중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45.0%로 가장 높고 이어 대출금이 13.7%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증권회사의 설립이 잇따라 같은 해 8월 증권회사수가 6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설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 증권업의 대외개방과 합

<표 27-11>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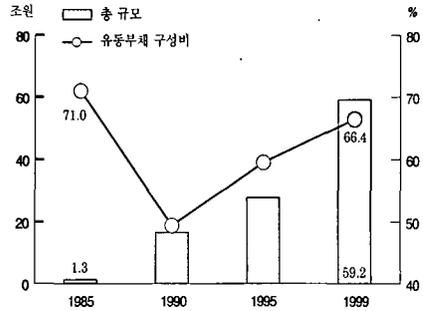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1.2	4.8	12.7	26.5
조달 (%)	보험계약준비금	65.3	71.7	81.1	84.6
	기타부채	35.7	17.0	13.6	14.6
	자본금	3.5	4.9	3.3	9.2
	잉여금	4.4	6.5	2.1	-8.4
운용 (%)	현금·예금	25.8	17.4	18.8	11.0
	유가증권	21.3	39.4	32.7	45.0
	대출금	6.8	18.1	21.9	13.7
	부동산	11.2	6.2	8.8	9.7
	기타자산	35.0	18.9	17.8	20.6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계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이 허용되면서 투자금융회사의 업종 전환으로 5개회사가 설립되었으며 3개 합작회사가 신설되었다.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6개 증권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퇴출되었으며, 2000년 말 현재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을 포함하여 64개 증권회사가 영업중이다.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중개기능을 고유업무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면에서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권회사의 자금조달은 주로 단기차입금·콜머니·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1999년 말 총자금 조달액 59조원 중 이들

[그림 27-11]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2%, 15.9%, 21.9%이었다. 자금운용 면에서는 현금·예금과 상품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으므로 나타났다.

[표 27-12]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총 규모 (조원)	1.3	16.6	27.8	59.2	
조달 (%)	유동부채	71.0	49.4	59.5	66.4
	(단기차입금)	(17.3)	(19.2)	(25.4)	(17.2)
	(콜머니 ¹⁾)	(-)	(-)	(9.7)	(15.9)
	(예수금)	(6.0)	(7.5)	(7.9)	(21.9)
	고정부채	6.1	1.9	6.3	6.3
	자본금	18.9	17.2	12.7	10.2
	잉여금 ²⁾	4.0	31.5	21.5	17.2
운용 (%)	유동자산	82.8	75.0	72.5	74.3
	(현금·예금)	(11.2)	(9.7)	(5.0)	(33.7)
	(신용융자금)	(15.7)	(7.6)	(7.8)	(1.2)
	(상품유가증권)	(24.8)	(39.2)	(38.6)	(32.1)
기타 자산	17.2	25.0	27.5	25.7	

주 : 1) 1990년까지 콜머니는 단기차입계정에 포함
 2) 1995년까지 잉여금 중 증권거래준비금은 고정부채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제2절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단기자금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요 단기금융시장으로 콜시장·기업어음시장·양도성예금증서시장·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통화안정증권시장·표지어음시장 등이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채권 및 주식을 거래하는 자본시장과 구별하기 위해 화폐시장(money market)으로 불리기도 한다.

(1) 콜시장

콜시장은 금융기관간의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려는 목적아래 익일물의 초 단기자금 대차(貸借)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콜시장은 1960년 7월 제도적으로 형성된 이래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거래방식도 개선되어 왔다. 참가기관은 처음에는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79년 8월 서울 소재 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까지 확대되었다. 1982년 6월에는 지방 소재 투자금융회사·보험회사·한국증권금융 및 상호신용금고 연합회가 추가로 참가했다. 그 이후에도 한국산업은행·증권회사·리스회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콜거래가 허용되어 콜시장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조절시장으로 발전했다. 2000년 말 현재 콜시장에는 은행·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콜거래의 만기는 최장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익일물 거래가 대부분이고 거래 단위는 억원이다. 콜거래는 무담보의 신용거래가 대부분이다. 콜거래 방식은 직거래와 중개거래가 있다. 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거래조건에 합의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대부분 은행간 거래에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한국자금중개가 거래조건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콜거래 현황을 보면 콜자금을 공급하는 콜론(call

loan)기관은 주로 투자신탁회사 신탁계정, 은행신탁 및 보험회사이며 콜자금을 차입하는 콜머니(call money)기관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이다. 은행의 경우에는 자금사정에 따라 콜론기관 또는 콜머니기관이 되고 있다. 콜시장의 월평균 거래액은 1991년 1,053조원, 1995년 1,210조원 규모였으나 1997말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신용경색의 영향으로 금융기관간 자금편재현상이 심화되면서 1999년에는 월평균 5,382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1995년과 비교할 때 종합금융회사의 콜론 및 콜머니 규

〈표 27-13〉 콜거래 규모

		1991	1995	1999
월평균 거래액 (조원)		1,053.2	1,209.9	5,382.1
콜 머 니 (%)	시 중 은 행	9.6	0.7	17.5
	지 방 은 행	1.2	0.1	1.8
	외은 국내지점	3.1	1.1	8.7
	종합금융회사	44.9	42.0	6.3
	투자신탁회사	19.4	20.1	17.7
	증 권 회 사	10.8	13.0	20.9
	기 타	10.9	23.0	27.0
콜 론 (%)	시 중 은 행	4.1	0.8	1.5
	지 방 은 행	1.6	0.1	0.2
	특 수 은 행	6.4	2.1	1.3
	외은 국내지점	3.4	1.1	1.5
	은 행 신탁	6.8	13.2	5.1
	종합금융회사	39.8	41.8	1.3
	투자신탁회사	18.4	12.6	65.3
	증 권 회 사	3.2	0.5	4.2
보 험 회 사	3.1	3.7	1.5	
기 타	13.1	24.2	18.2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모가 줄어든 반면 투자신탁회사의 콜머니는 전체 콜머니거래 중 65.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시장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유통어음이 할인·매매되는 시장이다. 기업어음시장은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을 제공한다. 기업어음시장은 1972년 8월 단기금융업법 제정으로 형성되었다. 기업어음 할인 및 매출업무는 처음에는 투자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76년 종합금융회사, 1997년 8월 증권회사에 각각 허용했으며, 1997년 12월 이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은행·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로 확대했다. 2000년 말 현재 할인·매출기관 또는 할인기관으로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은행·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기업어음의 거래는 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거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기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은행·투자신탁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인업무는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어음 발행단위가 거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기반도 그리 크지 않다. 기업어음시장은 그동안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1985년 말 3조원 수준에 불과하던 발행잔액이 1997년에는 69조원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금융·외환위기 발생 이후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주된 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가 상당수 퇴출됨에 따라 1999년 말에는 41조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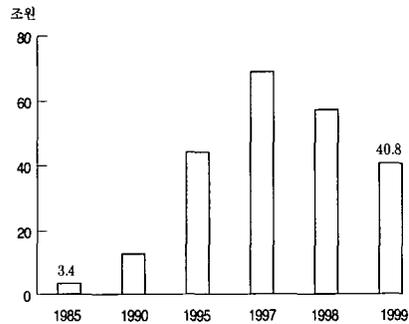
〈표 27-14〉 기업어음 발행 규모

(기말 발행잔액 기준, 단위 : 조원)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3.4	12.7	44.2	69.0	57.3	40.8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각 호

[그림 27-12] 기업어음 발행액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 CD)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이다. 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은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형성에는 실패하였다. 양도성예금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은행의 수신경쟁력 제고와 시중의 유희자금

흡수를 목적으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허용한 1984년 6월부터이다. 이 때부터 종합금융회사·투자금융회사·증권회사에 양도성예금증서 중개업무를 허용했으며, 그 후 발행기관도 특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한국산업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2000년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또는 다른 은행에게 발행한다. 대고객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 개인·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식이며,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고객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30일 이상이며,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발행규모는 1990년 약 7조원에서 1995년에는 약 28조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은행이 취급하는 여타 단기금융시장상품인 표지어음이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와 달리 양도성예금증서에는 지급준비의무가 부과된 데다 금융·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자금운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1998~1999년에는 약 15조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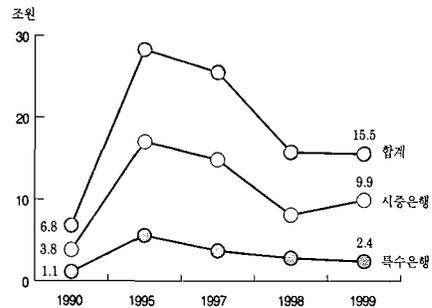
〈표 27-15〉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규모

(기말 발행잔액 기준, 단위: 조원)

	1990	1995	1997	1998	1999
합 계	6.8	28.3	25.5	15.7	15.5
시중은행	3.8	17.0	14.8	8.1	9.9
지방은행	1.3	4.6	5.3	2.8	1.5
특수은행	1.1	5.6	3.7	2.8	2.4
외은지점	0.6	1.2	1.7	2.1	1.7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그림 27-13]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액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RP)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환매채(RP) 시장이라 한다. 환매채거래는 콜거래·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동 채권이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단기금융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환매채거래는 1977년 2월 한국증권

금융(주)이 증권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업무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1982년 9월에는 은행에 대해 국공채의 조 건부매도에 한해 허용되었고, 그 이후 우 체국과 종합금융회사에도 환매채 매도업 무가 허용되었다. 1994년 11월에는 금융 기관간 환매채 취급기관의 범위가 콜시장 참가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1997년 5 월에는 콜거래 전문중개기관인 한국자금 중개가 환매채거래의 중개업무를 취급하 기 시작하였다.

환매채거래는 대고객 환매채와 금융기 관간 환매채로 구분된다. 대고객 환매채는 은행 ·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 · 한국증 권금융 및 우체국이 취급한다. 금융기관간 환매채 거래에는 콜시장 참가기관이 매매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매채거래 중 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환매채거래는 만기 제한이 없으며, 거래단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고 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매도잔액 기준 환매채 거래실적을 보면 1990년 약 3조원에서 1995년에는 거의 두 배인 약 6조원으로 늘어났다. 1997년에는 약 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 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준비의무 부과, 7월 은행의 환매채매도 대상채권 확 대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수요가 환매채매도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환매채가 예금

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환매채거래를 통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들 면서 거래잔액은 1999년 말 약 16조원으로 다시 줄었다.

〈표 27-16〉 환매조건부채권 규모

(기말 발행잔액 기준, 단위 : 조원)

	1990	1995	1997	1998	1999
합 계	3.4	6.2	23.7	17.5	16.2
예금은행	1.4	3.6	18.3	12.7	13.2
증권회사	0.5	0.9	3.4	2.7	1.3
우체국예금	1.5	1.7	2.0	2.1	1.7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5)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시장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 · 유통되는 시장이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도입되었 으며, 발행한도는 처음에는 통화량(M1)의 10% 이내이었으나 1977년 12월 총통 화(M2)의 50% 이내로 확대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최단 14일에서 최장 2년까지 11종이며, 액면금액은 100만 원 · 5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1 억원의 5종류이다.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거쳐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증대되었던 1986~1989년과 1991~1992 년 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약 25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금융 ·

외환위기 이후에도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였다. 1999년 말 현재 발행잔액은 1995년 말의 두 배를 웃도는 약 52조원에 달한다.

〈표 27-17〉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기말 발행잔액 기준, 단위 : 조원)

	1985	1990	1995	1999
잔액	0.5	15.2	25.8	51.5
발행	2.1	20.3	39.5	70.2
상환	2.2	22.3	31.5	64.4
순발행	-0.1	-2.1	-0.8	5.8

자료 :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각 호

(6)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cover bill)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한다.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은 원어음과 관계없이 표지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표지어음시장은 이와 같은 표지어음이 발행·유통되는 금융시장이다.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9월 투자금융회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4년 7월에는 은행에 대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이, 1995년 5월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상업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되었다.

표지어음은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로 발행되며, 최저발행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매수자가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10억원 이상, 일반법인인 경우 5,000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표지어음거래는 1995년 약 11조원 규모에서 1997년 말에는 약 1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일부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가 퇴출된 데다 금융기관이 부실여신 발생을 우려하여 어음할인에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원어음이 감소하여 1999년 말에는 표지어음 발행잔액이 4조원대로 축소되었다.

〈표 27-18〉 표지어음 규모

(기말 발행잔액 기준, 단위 : 조원)

	1990	1995	1997	1998	1999
합계	0.3	10.7	12.4	4.1	4.7
예금은행	-	3.4	9.5	2.3	3.7
종합금융회사	0.3	6.8	0.6	0.1	0.0
상호신용금고	-	0.5	2.3	1.7	1.1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 및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통상적인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을 가리킨다.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조직화된 시장의 모습

을 갖추게 되었다. 1984년 7월에는 채권 장외시장이 제도화되었으며, 1987년 4월 주식 장외시장이 개설되었다. 주식장외시장은 1997년 1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법제화되었다.

자본시장 개방은 198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 컨트리펀드(country fund)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만 허용되었다. 1992년 1월에는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었으며, 그 이후 한도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5월에는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한도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1) 주식발행시장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진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 이외에 금전의 출자를 받지 않고 행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이 포함된다. 주식의 발행시장은 신규발행 주식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출되는 시장인데, 통상 유상증자나 신규공개 기업의 주식매각 등을 대상으로 조직된 시장을 말한다.

유상증자와 기업공개 형태로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1990년에 약 3조원에 달하였다. 1995년에는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 완

화로 약 6조원으로 확대되어 1990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자기자본 확충과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빈번히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식발행액은 1998년 중 약 13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1999년 중에는 약 35조원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표 27-19〉 주식발행 규모

(기간 중, 단위 : 조원)

	1985	1990	1995	1998	1999
합 계	0.3	2.9	6.2	13.5	35.1
유상증자 ¹⁾	0.3	2.6	5.6	13.5	33.4
(건수)	(60)	(169)	(163)	(122)	(250)
기업공개	0.0	0.3	0.6	0.0	1.7
(건수)	(11)	(36)	(36)	(3)	15

주 : 1) 상장기업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2) 주식유통시장

주식유통시장은 이미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적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발행시장과 상호 깊은 의존관계에 있다. 유통시장에는 증권거래소시장(on-board market),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이 있다. 장외시장은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증권을 고객상호간, 고객과 증권회사간 또는 증권회사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인 시장이다.

주식거래액은 주식시장의 호황/불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상장 주식의 확대에 맞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간 거래액은 1985년 약 4조원 규모에서 1990년에는 약 53조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약 143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1999년 말 현재 상장주식수는 173억주, 시가총액은 약 35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금액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1999년 중 무려 867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등록기업수가 1990년 말 66개에서 1997년 말 35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업정리·거래실적 부진 등으로 등록취소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1998년 331개로 줄어들었으며 1999년 중에는 주식시장호황으로 453개로 증가하였다. 등록주식의 시가총액은 1990년 말의 4천억원에서 1995년 말 약 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 들어서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99조원에 달하였다. 거래대금은 1995년 중 4천억원 규모이던 것이 1999년에는 무려 107조원 규

〈표 27-20〉 주식유통시장 현황

	(기말 기준)			
	1985	1990	1995	1999
상장회사수(개)	342	669	721	725
상장주식수(억주)	79.6	48.0	76.1	173.3
시가총액(조원)	6.6	79.0	141.2	349.5
거래대금(조원) ¹⁾	3.6	53.5	142.9	8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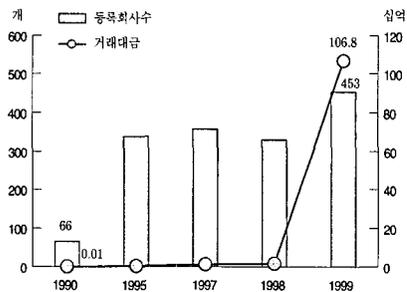
주 : 1) 증권거래소 기준이며 기간 중 거래액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 호

〈표 27-21〉 코스닥시장 현황

	(기말 기준)				
	1990	1995	1997	1998	1999
등록회사수(개)	66	340	359	331	453
주식수(억주)	0.04	0.8	0.7	1.2	4.1
시가총액(조원)	0.43	7.4	7.1	7.9	98.7
거래대금(조원)	0.01	0.4	1.2	1.6	106.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그림 27-14〕 코스닥시장 현황



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벤처·증시 침체와 맞물려 코스닥시장도 부진했다.

(3) 채권발행시장

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기업 등이 자금조달이나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 채무증서를 지칭한다. 채권의 발행시장에도 발행주체 및 투자자 외에 시장중개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채권 투자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다. 시장중개기관은 회사채의 경우 통상 증권회사가 담당하며 국채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도 간사회사 또는 인

수회사로 참여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 추이를 보면 1990년 중 약 4조원에 머물렀던 국공채 및 금융채 순발행규모가 1995년에는 약 8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재정적자 보전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나 그 규모가 각각 22조원, 47조원에 달하였다. 1999년 말 현재 주요 국공채 및 금융채 발행

〈표 27-23〉 회사채 발행 규모

(기간 중, 단위 : 조원, %)

	1985	1990	1995	1998	1999
잔액	7.4	24.1	61.3	122.7	119.7
발행	3.2	11.1	23.6	56.0	30.7
(보증사채비중)	(91.5)	(83.0)	(69.8)	(31.2)	(4.2)
(무보증사채비중)	(7.1)	(16.9)	(30.2)	(68.6)	(95.7)
상환	1.3	3.3	10.2	23.4	33.7
순발행	1.9	7.7	13.4	32.6	-3.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표 27-22〉 국공채 및 금융채 발행 규모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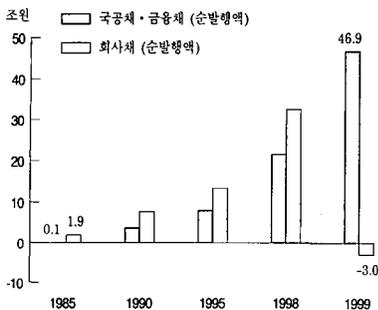
	순발행액					발행잔액	
	1985	1990	1995	1998	1999	1999	구성비
합계	0.1	3.7	8.0	21.6	46.9	231.9	100.0
국채	-0.4	3.1	1.3	10.9	19.6	61.2	26.4
(국고채권)	(-0.6)	(-0.4)	(1.8)	(9.6)	(15.5)	(34.2)	(14.8)
특수채	0.0	0.3	1.7	9.4	25.5	82.2	35.5
(예금보험기금)	(-)	(-)	(-)	(5.6)	(22.5)	(43.5)	(18.8)
(부실채권정리기금)	(-)	(-)	(-)	(1.1)	(1.3)	(19.9)	(8.6)
금융채	0.5	0.3	5.0	1.3	1.8	88.5	38.1
(통화안정증권)	(-)	(-2.1)	(0.5)	(6.3)	(5.8)	(51.5)	(22.2)

주 : 순발행액은 기간 중 발행액-상환액임.

발행잔액은 기말 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호

〔그림 27-15〕 채권 순발행액



채권의 유형

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공채 및 금융채와 회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채는 통상 국채·지방채 및 특수채를 포괄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요 국채는 국고채권·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양곡기금증권 등이며, 지방채는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 등이다. 특수채에는 한국전력채권·토지개발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이 있다. 금융채는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회사채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보증 및 담보유무를 기준으로는 보증사채·담보부사채·무보증사채로 구분되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는 일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잔액은 232조원인데, 이중 통화안정증권이 52조원으로 전체의 22.2%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국고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1990년대 들어 회사채 발행물량 규제 완화 등으로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연간 순발행 규모가 13~15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순발행 규모가 약 33조원에 달하였다. 종류별로 보면 1997년까지 보증사채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금융·외환위기 이후는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로 보증사채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보증사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채권유통시장

채권의 유통시장은 상장채권만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시장과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채권거래는 대부분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의 거래액은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1985년 16조원 규모에서 1995년 223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회사채의 주요 매수기관인 투자신탁회사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843조원에 달하였으며, 1999년에도 국공채 거래규모가 대폭 늘어나 2,107조원이 거래되었다.

〈표 27-24〉 채권거래 규모

(기간 중, 단위 : 조원)

	1985	1990	1995	1998	1999 ¹⁾
합 계	16.1	38.4	223.1	842.6	2,106.9
장내 거래	3.6	3.3	1.4	15.5	293.6
장외 거래	12.5	35.1	221.6	828.1	1,813.3
국 공 채	...	27.7	100.6	383.2	1,579.1
회 사 채	...	10.7	122.4	460.4	527.8

주 : 1) 국제달러간 거래 278.2조원 포함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 호

파생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란 그 가치가 통화·채권·주식 등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nan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키며,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한다. 이 시장에서 위험을 꺼리는 사람은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기자는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를 표준화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며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가 있으며,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과 미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표준화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간에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며, 선물환 · 스왑 · 옵션 · 선도금리계약 등을 거래하고 있다.

주가지수 선물은 1996년 1,600억원에 불과하였던 일평균 약정금액이 1998년에는 1조 4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999년에는 약 3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주가지수 옵션은 1999년 일평균 약정금액이 347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환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액은 1995년 2,885억달러 규모이었으며, 1997에는 거래규모가 5,565억달러로 크게 확

〈표 27-25〉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규모

(기간 중, 일평균약정금액, 단위 :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선 물	157.4	354.8	1,390.1	3,298.8
옵 션	-	2.2	7.6	34.7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 호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은 주가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이다. 상장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주가지수옵션 등이 대표적이다.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

통화관련상품은 기초금융자산이 통화인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특정 통화의 거래규모와 환율을 정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약정한 조건에 의해 수도결제하는 선물환(forward exchange), 환리스크를 헤지하거나 환차익을 얻기 위하여 특정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에 특정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통화옵션(currency option),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를 대가로 보유 외화자산을 매매하고 만기에 계약당시 약정한 환율로 당초거래의 역(逆)으로 매매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금리관련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채권의 보유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미래의 일정시점으로부터 약정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적용될 금리를 거래당사자간에 미리 확정하고 계약기간 시작일에 약정금리와 시장금리에 의한 이차차액을 정산하는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거

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을 시장참가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는 수익률 또는 할인율로 거래하되 일정기간 후 해당 금융자산을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후 일정수익률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금리선물 옵션(interest rate futures option), 거래당사자가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을 일정기간 바꾸어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차입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등이 있다.

대되었다. 그러나 1998년 중에는 금융·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거래규모가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다. 1999년에는 선

〈표 27-26〉 외국환은행의 파생외환상품 규모

(기간 중, 단위 : 10억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합 계	288.5	347.7	556.5	299.0	641.5
선 물 환	240.2	255.1	428.7	257.1	565.3
통화선물	0.6	0.1	0.1	0.2	9.5
통화옵션	6.5	9.5	17.1	1.9	6.9
통화스왑	4.4	18.8	17.5	4.3	13.0
금리선물	26.9	40.0	55.1	25.5	32.4
금리선물옵션	1.7	1.0	3.0	5.3	0.0
금리스왑	4.7	15.7	29.7	3.3	10.0

자료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의 파생외환상품 거래동향」, 2000

물환거래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6,41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상품별로는 선물환 거래와 금리선물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절 지급시스템

지급결제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급(payment)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수표 등을 제시하거나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결제수단이 금융기관간 교환과정을 거쳐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차액이 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하부구조이며, 참가기관과 지급수단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기관에는 은행·우체국·신용카드회사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채권·채무를 집계하여 금융기관간 대차차액을 산출하는 금융결제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차액을 이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제를 완료시키는 한국은행이 있다.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이 있다. 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내의 본·지점간 결제시스템(온라인망)과 참가기관간 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어음·수표 등의 장표지급수단과 타행환·자동계좌이체·카드 등의 전자지급수단이 있다. 전통적으로 장표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의 전산화가 확대되고 공동금융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 현금

현금에는 지폐와 주화가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발행된 원표시 화폐이다. 그 당시에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 10전권의 지폐 8종과 10원, 5원, 1원화의 주화 3종이 발행되었다. 그 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단위가 커짐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의 지폐와 100원화, 500원화의 주화가 새로 발행되었다. 500원권 이하의 지폐는 주화로 대체되어 발행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3종의 지폐(1,000, 5,000, 10,000원권)와 6종의 주화(1, 5, 10, 50, 100, 500원화)가 발행되고 있다. 현금은 소액거래에서의 편리성과 국민의 높은 현금 선호성향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카드·계좌이체 등 새로운 비현금 지급수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이용 비중

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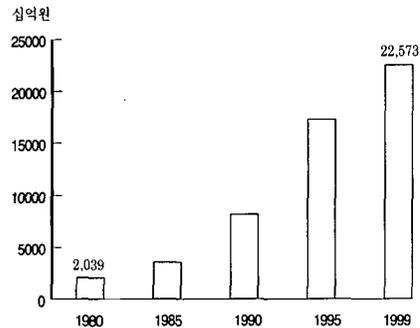
〈표 27-27〉 화폐발행 규모

(기말 기준, 단위 : 10억원)

	1980	1985	1990	1995	1999
합 계	2,039	3,570	8,228	17,324	22,573
주 화	61	172	435	801	1,003
500원권이하	72	14	14	14	14
1,000원권	683	418	470	715	817
5,000원권	520	661	304	470	575
10,000원권	702	2,306	7,006	15,325	20,164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7-16] 화폐발행액



(2) 장표지급수단

장표지급수단으로는 어음과 수표가 있다. 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으로 구분된다. 약속어음중 대부분은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하는 상업어음이다. 어음의 결제는 주로 어음교환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어음의 규격·지질 및 색채 등은 어음교환소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원격지간 지급의 편의를 위해 도

입한 지급수단인 환어음은 주로 국제간 상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지급인(은행 또는 우체국)에게 위탁하는 증권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표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발행대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후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기업이 발행인이 되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위탁하는 형식의 당좌수표,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발행하는 가계수표가 있다. 자기앞수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현금대용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및 100만원권의 정액 자기앞수표와 비정액 자기앞수표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10만원권 정액수표는 대부분의 은행이 현금자동인출기(CD)를 통해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당좌수표는 발행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2000년 말 현재 개인의 경우 1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3) 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수단으로는 타행환 및 계좌이체와 각종 카드가 있다. 타행환은 다른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지급인이 의뢰하면 즉시 송금이 이루어진다. 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것으로 일반계좌이체·자동계좌이체·납부자 자동계좌이체·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ARS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이 있다.

카드는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현금카드로 구분된다. 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신용상태나 미래 소득을 근거로 발급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주로 이용한다. 선불카드는 일정한 금액이 저장되어 있어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카드의 잔액범위 내에서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카드발급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카드이다. 한편 현금카드는 이용자가 CD/ATM기를 통해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접속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입금·잔액조회 또는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다. 현금카드는 CD/ATM의 수가 늘어나고 이용시간이 연장되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4) 기타 지급수단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펌뱅킹(firm-banking)이나 홈뱅킹(home-banking)

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펌뱅킹 또는 홈뱅킹은 개별 은행이 부가가치통신(VAN) 사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대량 입금 및 지급·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전화기 또는 각종 단말기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에는 거래의 거래를 건별로 즉시 결제하는 총액결제와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가 있다.

총액결제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이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거래자금을 건별로 즉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1994년 12월에 가동되었다. 2000년 말 현재 22개 국내은행, 4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52개 증권회사, 9개 종합금융회사, 6개 기타기관 등 총 132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는 어음교환·CD/ATM 공동이용망·타행환공동망·직불카드 공동망·CMS 공동망·지방은행 공동망 등이 있다. 어음교환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어음교환소에 모여 자기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상대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기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

을 서로 교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어음교환소는 2000년 말 현재 전국에 5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참가은행·특별참가은행 및 대리교환위탁은행을 포함하여 2000년 말 현재 1,51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CD/ATM 공동이용망과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은행간 소액송금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1998년 7월과 1989년 12월에 가동되었다. CD/ATM 공동이용망은 고객이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있는 시스템이다. 타행환공동망은 자금이체 결제의 신속성으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음교환과 더불어 주요 결제시스템의 하나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2000년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22개 국내의 은행, 우체국, 농·수협과 외국의 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이 참가하고 있다. 직불카드 공동망은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CMS 공동망은 이용기관이 단일은행에 접속하여 대량자금을 이체하거나 다수 은행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RS 공동망은 고객이 전화·PC 등을 통해 조회·안내·통지·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직불카드 공동망과 CMS 공동망은 1996년에, ARS 공동망은 1989년에 구축되었다.

〈표 27-28〉 은행간 결제규모

(단위 : 백만건, 조원)

		1985	1990	1995	1999
결제 건수	어음교환	271	779	1,010	1,027
	은행지로	-	829	509	636
	타행환	-	6	138	321
	CD/ATM	-	12	105	324
결제 금액	어음교환	1,304.4	4,227.1	6,416.3	9,677.3
	은행지로	-	17.7	47.7	55.2
	타행환	-	5.3	348.1	1,589.2
	CD/ATM	-	1.9	32.0	11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2000년 말 현재 직불카드 공동망과 ARS 공동망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21개 국내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CMS 공동망에는 22개 국내은행과 시티은행 등이 참가하고 있다.

어음교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2억 7천만장에 1,304조원이 결제되었으며 1999년에는 10억 3천만장에 9,677조원이 결제되었다. 은행지로 방법으로는 1990년 8억 3천만건에 약 18조원이 결제되었으며 1999년에는 6억 4천만여건에 55조원 규모가 결제되었다. 타행환 방법으로는 1990년 6백만건에 5조원 규모가 결제되었으나 1999년에는 무려 3억 2천만건에 1,589조원 규모가 결제되었다. 그리고 현금자동인출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결제는 1990년 1,200만건에 약 2조원 규모 이었는데 1999년에는 3억 2천만건에 110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부 록

색인

정부승인 통계간행물 안내

여 백

색 인

1인당 국내총생산	247	거택보호 대상자.....	158
1인당 국민총소득	247	건강진단제도	340
【 ㄱ 】		건설업사업체수	429
가계소득	77	건설업성장률	428
가계자산	93	건축허가면적	432
가계저축	93	검거건수	230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	100	경공업	408
가공생산시설	387	경공업생산지수	418
가구규모	62	경상가격	371
가구당 PC보유율	211	경상계정	260
가구분포	63	경상비	318
가구소비실태조사	77	경상수지	260
가구수	62	경상이전수지	260
가구주소득	83	경제개발비	351
가구주율	73	경제개발협력기구	40, 51
가상사설망서비스	459	경제규모	246
가임기간	46	경제성장률	246, 254, 301
가족계획사업	27, 31	경제협력개발기구	155, 163, 176
가출아동	159	경제활동인구	280
간암	53	경제활동참가율	280
간암사망률	149	경지이용면적	386
간접세	355	계절풍	10
간접손실액	338	고등교육기관	138
간질환	52, 148	고등학생	127
강도율	338	고정자본감소	253
강력범죄	231	고정자산	392
강수량	3, 12	고정환율제도	270
개발도상국	402	공공부조	144, 154, 157
개발연구비	322	공공서비스	116
개방경제	259	공공연금	156
개인서비스요금	104	공공체육시설	199
거대도시	41	공교육비	135
		공동주택	111
		공무원범죄	233

공업발전법	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4
공업용수	3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52
공연시설	182	국민소득	245
공영방송	193	국민소득통계	245
공장도가격	99	국민연금	156
공정환율	270	국민총소득	245
공중기업통신망	459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57
고객접유율	190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46
관광산업	198	국외투자	257
관광수입	198	국제결혼	28
관광수지	198	국제노동기구	155, 286
관광여행	195	국제무역	259
관광여행 경험률	196	국제상품무역통계	262
관광지출	198	국제수지표	259
관세선(關稅線)	263	국제유동성	272
광고영화	189	국제통화기금	155, 349
광케이블	206	국토개발정책	110
교사1인당 학생수	131	국토면적	4
교원수	132	국토이용계획	7
교육수준별 인구	39	국토이용관리법	7
교육정보화	134	국토종합개발계획	61
교정활동	234	군립공원	175, 195
교통사고	236	굴뚝산업	425
교통사고 사망률	150, 240	극영화	189
교통사고 사망자	237	근로소득	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31	근로손실일수	337
교통통신비	86	근로의 권리	279
구인배율	292	근로자가구	78
구입빈도별 지수	97, 105	근린공원	122, 199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307	근원적 인플레이션	107
국가지정문화재	180	금리선물	496
국가채무	357	금리스왑	496
국가환경정책법	178	금융 구조조정	359
국내총생산	245, 349, 370, 384	금융결제망	499
국립공원	175	금융시스템	474
국민건강보험법	144	급성전염병	144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299	기간통신서비스	454
국민계정체계	246	기상재해	13

기술도입	330
기술무역	332
기술수출	331
기술이전	330
기술집약적 산업	424
기업어음시장	487
기초연구	318
기후변화협약	305

【ㄴ】

남강댐	6
남동계절풍	10
남아선호도	48
내수용출하지수	423
노년부양비	32, 44, 352
노동생산성지수	298
노동이동률	289
노동쟁의 발생건수	343
노동조합	342
노령급여	156
노령부양자	162
노령인구	33, 146, 352
노령인구비율	34
노령화	29, 33, 54
노령화사회	34
노령화지수	33
노인가구주	72
노인복지서비스	161
노인인구	29
농가구입가격	109
농가구입가격지수	97
농가당 경지면적	388
농가부채	393
농가소득	392
농가자산	392
농가판매가격	108
농가판매가격지수	97

농림지역	8
농어민연금	156
농어민의료보험	157
농업구조	385
농업노동임금	109
농업소득	392
농촌인구	385
농촌임료금	109
뇌혈관질환	52, 148

【ㄷ】

다목적댐	6
단기금융시장	485
단독가구	119
단일변동환율제도	270
당뇨병	52
당일관광여행 경험률	196
대기오염	164
대기온도	11
대기환경보전법	164
대리인비용	414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	367
대청댐	6
대체에너지	309
대출유형	476
대학	140
대학생	127
대한출판문화협회	187
대한해협	3
대홍수	5
데이터공중망서비스	459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459
데이터통신망	206
도농복합	6
도로분담률	443
도로총연장	445
도로포장률	4

도립공원	175, 195	묘지공원	199
도메인	208	무료양노시설	161
도수율	337	무료요양시설	161
도시계획	110	무선통신서비스	457
도시계획법	199	무역규모	263
도시공원	199	무역수지	260, 266
도시공원면적	121	무역통계	262
도시공원법	199	무역풍	16
도시자연공원	199	무형문화재	182
도시집중	29	문화복지시설	182
도시화	28, 40	문화산업	187
도시화율	28	문화예술시설	181
독서인구비율	185	문화유산	180
디지털 위성방송	193	문화유적	175
디지털 케이블방송	193	문화재보호법	9, 180
디지털기술	204	물가지수	97
디지털화	193	물가통계분과위원회	105
디프테리아	145	물리적 자본	256
		물적자본	317
		미곡생산량	389
		미니텔	213
		미혼가구주	71
		미혼모	159
		미혼인구	37
		민속자료	182
【ㄹ】			
라니아	11, 14		
라스파레이스산식	99, 103		
로열티지급액	192		
【ㄴ】			
마이크로소프트	469		
만성질환	147		
만성질환자율	146		
매월노동통계조사	288		
명목임금상승률	293		
모니터시장	466		
모라토리엄	359		
모자보호 수용시설	162		
모자보호 일시 시설	162		
목재생산액	395		
목재자급률	396		
		【ㄷ】	
		박사학위 취득자수	139
		반응지표	163
		발전설비	312
		발전설비계획	313
		방송산업	193
		방송서비스	454
		백내장	21
		백일해	145
		범죄발생지수	234
		범죄유형	230

범죄통계	227	사이버몰	223
법원조직법	229	사회간접자본	434
법정근로시간	296	사회계열	130
베이비붐	72	사회보장비	154
별정통신서비스	454	사회보장제도	35
병상수	152	사회보험	144,154
병상이용률	153	사회복지서비스	158
보건사회연구원	144	사회체육	199
보건의료인력	150	사회통계조사	55, 116, 227
보건의식행태	147	산성비	167
보건지표	50	산업구조 고도화	366
복선화율	447	산업생산지수	416
복수통화바스켓방식	270	산업안전보건법	340
복수환율제도	27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0
본선인도가격	263	산업재산권	326
부가통신서비스	217, 458	산업재해	337
부부가족	69	산업재해발생률	338
부안담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0
부채잔액	94	산업정보화	222
복서계절풍	10	산업집중도	413
북태평양 고기압	10	산업화	401
분배구조	253	산지사방사업	394
분배국민소득	250	삼면등가의 원칙	250
불변가격	371	상대가격	371
비교역재	425	상해보상연금	346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	206	상부맨틀	17
비디오생산량	192	상수도보급률	315
		상층바람	19
【스】		상태지표	163
사경제	77	상표권	328
사라호	15	상품권	327
사망력	31	상호신용금고	480
사망률	27, 49, 148	생명보험회사	483
사망원인	52, 144, 148	생물다양성협약	171
사별인구	37	생산가능연령인구	36
사업체수	373	생산가능인구	280
사이버 쇼핑몰	223	생산구조	250
		생산국민소득	250

생산연령인구	36	수자원	313
생산연령층	32	수질개선비용	176
생산요소	249	수질오염	169
생산자물가	102	수질환경정책	169
생산자물가지수	97, 99	수출물가지수	97, 106
생산자출하지수	422	수출입구조	264
생애주기이론	360	수평분포	20
생활물가지수	97, 104	숙박관광여행 경험률	196
생활보호 대상자	158	순간접세	253
생활시간활용조사	202	순수과학	188
생활쓰레기	170	순외채	273
생활정보화	211, 219	순환기계질환	52, 146
생활폐기물	171	스콜	16
서비스	245	습지	173
서비스수지	260	시베리아 고기압	10
석유과동	98	시설보호 대상자	158
선도산업	411	시설입소율	161
선물환	495	시장경제체제	368, 413
섬진강댐	6	시장점유율	413
성별사망률	51	시장집중도	413
성층권	21	시장평균환율제도	271
세계무역기구	387	시장환율	249
세계보건기구	164	식도암	52
세대구성	64	식량자급도	29, 389
소가축화	64	신경제	424
소년범죄	233	신문구독인구	186
소년소녀가장	160	신산업	424
소득구조	79	신선식품지수	97, 105
소득수지	260	신용협동기구	481
소비자물가	102	실업급여	156
소비자물가지수	97, 103, 256	실업률	286
소비재	269	실업자	286
소송사건	229	실용신안권	327
소양강댐	6	실질국내총생산	254
소화기계질환	52	실질소득	80
손해보험회사	484	실질소비지출액	84
수산자원보전	8	실질소비지출액 변동지수	85
수입물가지수	97, 106	실질임금상승률	293

심장질환 52,148

【O】

아동보육시설 159	연령계급 38
아동복지서비스 158	연령구조 31, 43
안동댐 6	연령별성비 30
안전의식 228	영아사망률 50
알콜중독 52	영유아보육법 159
암사망률 149	영화관 183
압력지표 163	영화산업 189
액화천연가스 311	예금유형 476
양도성예금증서시장 487	예체능계 130
양쯔강 14	오염물질배출량 166
어가부채 400	오존 167
어가소득 399	오존경보제 167
어린이공원 199	오존예보제 167
어선세력 398	오존오염 167
어업경영 399	오존층 20
어업생산 399	오프라인 224
어업소득 399	온대성 기후 10
어업외소득 399	온대저기압 15
어업의존도 399	온라인 224
어업인구 396	외국인가구 62
어업종사자수 397	외국인투자촉진법 274
에너지소비증가율 300	외래관광객 197
엘리노 14	외환보유액 272
엔젤지수 87	요구불예금 475
여가활용방법 201	요보호아동 159
여성 선도시설 162	요소소득 245
여성가구주 69	요양급여 346
여성범죄 232	용도지역 7
여성복지서비스 162	용수공급 3
연강수량 13	용수공급 가능량 314
연구개발비 320	우유소비량 392
연구개발인력 324	우체국 482
연구개발투자 322	운수사고 53, 148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 319	운수업성장률 440
	운전면허 236
	원재료지수 101
	월평균소득 82
	위성방송 193

위암사망률	149	이혼인구	37
위탁보호	160	인공유산	27
유년부양비	32	인구구성	25
유년부양비	43	인구구조	33
유동자산	392	인구규모	25
유리공	20	인구동태통계	25
유방암	149	인구동태통계	45
유배우울	54	인구밀도	29
유배우인구	39	인구변동	45
유선통신서비스	457	인구변천	2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81	인구분포	25
유족급여	346	인구성장	25
유치원생	127	인구성장률	26, 29
유통업	377	인구이동	42, 59
유통자산	392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61
유행성출혈열	145	인구정책	29
유형고정자산	433	인구증가율	63
유형문화재	182	인구집중	42
육류자급률	391	인구총조사	25
육상운수업	441	인구피라미드	31
음반판매량	192	인력부족률	290
음주율	148	인적자본	317
응용소프트웨어	469	인터넷 역기능	221
응용연구비	322	인터넷방송	193
의료보험	156	인터넷이용률	218
의료보험제도	28	인플레이션	98, 256, 357
의료보호	157	일반가구수	63
의료부조 대상자	158	일반은행	477
의료시설	151	일반환율	270
의료이용률	152	일본뇌염	145
의무교육	125	일조시간	20
의장권	327	임금근로자	285
이동률	58, 289	임목축적	394
이동전화	214	임산물생산액	395
이전소득	77	임차주택	112
이혼가구주	71	임하담	6
이혼건수	56	입장률	183
이혼율	62	입직률	289

【즈】

자궁암	149	전기전자산업	411
자동차등록대수	445	전력공급예비율	312
자본계정	260	전문대학	140
자본수지	260	전문택배	224
자본시장	490	전방효과	427
자본재	421	전세가격지수	115
자본적지출	318	전시시설	182
자살률	150	전업농가	387
자연계열	130	전용회선매출액	457
자연공원	122, 175, 195	전입신고	58
자연공원법	199	전입초과	59
자연유산	180	전자상거래	210, 222
자연인구증가율	26	전자지급수단	498
자연재해	235	전출초과	59
자연환경보전지역	8	정보부자	218
자영자가구	89	정보빈자	218
자외선	20	정보통신산업	451
자외선지수	21	정보화	204
자유변동환율제도	271	정보화 촉진기금	207
자정능력	174	제1종 전염병	144
자활보호 대상자	158	제2종 전염병	144
장의비	347	제조업규모	405
장티푸스	145	조사망률	28, 49
장표지급수단	497	조산사	151
장해급여	346	조산원	152
재난	235	조세부담률	353
재정규율	357	조이혼율	56
재정긴축	358	조출생률	27, 46
재정수지	356	조혼인율	53
재해율	337	종량제	170
재해자수	338	종합금융회사	478
재혼연령	56	종합병원	152
재화	245, 365	종합부가통신서비스	459
저축률	256, 360	종합유선방송	193, 462
적도전선	16	종합정보통신망	206
적설량	12	주가지수선물	495
		주거공간	118
		주거면적	118

주거비용	115
주거환경	117
주식발생시장	491
주식유통시장	491
주암댐	6
주택공급	110
주택만족도	120
주택보급률	110,113,123,436
준농림지역	8
준도시지역	8
준법의식	227
중대재해발생률	338
중앙방송	193
중앙연산장치	46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8
중학생	127
중화학공업	408
중화학공업생산지수	418
증권거래법	474
증권회사	484
지구온난화	11
지급결제	496
지급수단	497
지니계수	81
지반공사업체	431
지상파방송사	194
지역방송	193
지진	16
지출구조	251
지출국민소득	250
지하자원	5
직계주의	48
직업별 취업자	284
직업병	341
직접세	355
직접손실액	338
진폐법	336
진학률	129

집단가구	62
집중기준율	270
집중홍우	15

【ㄷ】

채권발행시장	492
천인율	337
첨단산업	379
체육공원	199
초거대도시	41
초고속공중망	205
초고속국가망	204
초고속인터넷	206
초과근로시간	296
초등교육	125
초등학생	127
초혼연령	55
총고정자본형성	251
총부양비	32
총외채	272
총이동인구	57
총저축률	257
총조세부담률	355
최대적설량	13
최저임금	294
출국자수	197
출산력	47
출산율	37
출산율감소	45
출생률	26
출생성비	30, 47
출판산업	187
충주댐	6
취업률	139
취업자	282
취학률	128
치과병원	152

친족가구	62, 69
친환경 농업	391
침강지역	17
침상와병일	146

【ㄱ】

컴퓨팅서비스	470
코스닥시장	492
콜레라	145
콜머니	486
콜시장	486
큐슈지방	19

【ㄷ】

태아성감별	48
태양천정각	21
태풍	15, 235
통관기준	263
통관통계	262
통합제정	349
통화안전증권시장	489
투자수지	260
투자신탁회사	479
투자율	256
특별법법	231
특별인출권	270
특수은행	477
특허권	327
특허분쟁	330
특허소송	229

【표】

파라티푸스	145
파생금융시장	494
패키지소프트웨어	470

편뱅킹	498
평가절상	269
평가절하	269
평균 최대 전력수요	312
평균가구원수	64
평균교육연수	39
평균근로시간	295
평균소득	365
평균소비성향	84, 92
평균수명	32, 50
평균연령	32, 43
평균이혼연령	57
평균입원일수	153
평균저축보유액	94
평균저축액	95
평균집중률	414
평균출생아수	28
폐기물	169
폐쇄경제	259
폐쇄인구	26
폐수배출업소	169
폐암	53
포로토콜	209
폭풍	235
표지어음시장	490
프로스포츠	200
프로야구	201
프로축구	201
피부암	21

【ㅎ】

하천개수	5
학교수	125
학급당 학생수	128
학령인구	35
학생1인당 건물면적	134
학생1인당 공교육비	136

학생수	126	환경분쟁	177
한국개발연구원	248	환경산업	1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	환경영향평가	178
한국산업안전공단	336	환경오염	20, 164
한국생산성본부	298	환매조건부채권매매	488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6	환율	269
한국표준산업분류	365	황사	17
한국형 블록버스터	190	황사발원지	20
한방병원	152	황하강	14
합계출산율	27, 46	회사채발행	494
합천댐	6	후두암	52
항공운수업	441	후방효과	427
항만하역능력	448	후천성면역결핍증	145
해면면적	176	휴양자원	175
해발고도	4	휴업급여	346
해상국립공원	9	흑폭풍	18
해수표면 온도	11	흡연율	147
해외건설	436	EDI	226
해외유학	27	GDP 디플레이터	255
핵가족	67		
핵가족화	35		
행정개편	7		
행정구역	6		
행정소송	229		
허혈성 심장질환	148		
형법범	230		
호스트	208		
호흡기계질환	52		
혼인상태별 인구	36		
혼인신고율	54		
혼인연령	55		
혼인형태	53		
홈뱅킹	498		
홍수조절	6		
홍역	145		
화이트컬러	217		
화재	240		
화폐가치	98		

정부승인 통계간행물 안내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가.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공무원 통계 지방세외 수입연감 한국도시연감 지방재정연감 지방세정연감 지적통계연보 화재통계연보 재해연보	5년 연 연 연 연 연 연 연	98.12 00.12 00.12 00.11 00.7 00.7 00.3 00.9	공무원 총조사 지방세·세외수입징수실적 한국도시연감자료조사 예산 및 결산자료 지방세표작성보고 지적통계 화재발생총괄표 풍수해 상황보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연	00.12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연	00.5	출입국자통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연	00.10	학생신체검사통계보고
문화관광부	관광호텔운영실적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연 3년 3년 3년 3년	00.8 98.10 98.12 98.1 98.1	호텔이용객동태보고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작물통계 가축통계조사결과 농업기계보유현황 농림통계연보 과실 및 채소류가공현황 과수실태조사 농기계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임대차조사결과 특용작물생산실적 화훼재배현황 경지면적통계 축산물생산비조사결과	연 연 분기 연 연 연 5년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00.7 00.5 00.12 00.12 00.9 00.8 97.12 00.3 00.3 00.3 00.3 00.4 00.2 00.7	사육두수, 원유생산량등 작물통계조사 가축통계조사 농기구보유상황보고 농림업 생산지수 원예작물가공현황조사보고 과수실태조사 농업기계화물조사 농지임대차조사 양송이생산보고 등 화훼류 재배현황보고 경지면적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연 연	00.8 00.6	화물수송실적등 해수수질실태보고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산업자원부	광산재해통계연보	연	00.3	광산재해통계
	에너지통계연보	연	00.9	광산물 생산량조사 등
	에너지총조사결과보고서	3년	99.12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사용실적 분석결과	연	00.12	에너지사용량통계
	광산물수급현황	연	00.5	광산물생산량조사
	농공단지 경영동향	분기	00.12	농공단지경영현황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연	00.12	우편물통계 등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연	00.12	수질오염실태보고 등
	대기환경월보	월		대기오염도측정
	환경보전에 관한국민의식조사	5년	96.1	환경보전에 관한국민의식조사
	전국폐기물통계	5년	98.9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국립공원기본통계자료	분기	00.12	국립공원관리현황
	상수도통계	연	00.12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연	00.11	하수도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연	00.12	의료기관실태보고 등
	국민건강영양조사보고서	연	00.8	국민건강영양조사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연	00.12	생활보호대상자조사
	환자조사보고서	3년	00.12	환자조사
	전국기생충감염실태조사보고서	5년	98.12	전국기생충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5년	96.12	활동제약자실태조사
	특수환자 조사보고서	3년	00.12	특수환자조사
	영아사망조사보고서	3년	00.12	영아사망조사
	한국 암 등록사업연례보고서	연	00.4	한국인 암 등록조사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월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보험통계월보	월		고용보험통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	00.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연	00.10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통계연감	연	00.12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근로자생계비조사결과보고서	연	99.10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연	00.12	기업체노동비용실태조사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분석	연	00.10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산재보험사업연보	연	00.6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등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보고서	분기	00.4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연	00.10	건축허가, 수송실적통계등 자동차면허상황등
	도로현황조사	연	00.3	도로 및 교량현황
	아파트주거환경조사	3년	99.11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한국수문조사연보	연	00.12	수문조사
	토지거래통계	분기	00.12	토지거래현황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연	00.4	도로교통량통계
	전국물류현황통계	5년	97.12	전국물류현황조사
	지하수조사연보	연	00.11	지하수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연	00.12	세입징수등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연	00.3	무역통계
	무역통계월보	월		무역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년	97.4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속보	5년	96.7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잠정보고서	5년	96.4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통계연보	연	00.5	전출입신고
	인구동태통계연보	연	00.8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사망원인통계연보	연	00.10	사망신고
	생명표	부정기	99.7	사망신고
	인구이동특별조사	부정기	98.5	인구이동특별조사
	장래인구추계	부정기	96.12	추계인구
	시도별추계인구	부정기	99.7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연	00.4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보고서	5년	98.11	고용구조조사
	농가경제통계연보	연	00.6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통계	연	00.4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	00.3	농업기본통계조사
	양곡소비조사보고서	연	00.3	양곡소비량조사
	농업총조사	5년	96.12	농업총조사
	어가경제통계	연	00.6	어가경제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	00.3	어업기본통계조사
	어업생산통계	월		어업생산고조사
	어업총조사보고서	5년	97.1	어업총조사
	어업총조사속보	5년	96.7	어업총조사
	경기종합지수	월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 초 자 료
통 계 청	산업생산통계	월		광공업동태조사
	산업생산연보	연	00.6	광공업동태조사
	건설수주통계	월		건설수주통계조사
	건설수주통계연보	연	00.6	건설수주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12	건설업통계조사
	기계수주통계	월		기계수주통계조사
	기계수주통계연보	연	00.6	기계수주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2	광공업통계조사
	기업체통계조사보고서	연	00.12	광공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보고서	5년	99.12	산업총조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10	운수업통계조사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	연	00.12	정보통신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월		도소매업동태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12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12	서비스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연	0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	연	00.3	지역소득통계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0년	99.11	국부통계조사
	소비자물가	월		소비자물가조사
	물가연보	연	00.3	소비자물가조사
	도시가계연보	연	00.6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5년	98.8	가구소비실태조사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연	00.6	사회통계조사
	1999생활시간조사보고서	5년	00.12	국민생활시간활용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정기	99.12	
	한국표준직업분류	부정기	99.12	
	한국표준무역분류	부정기	96.1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정기	93.12	
	한국행정구역분류	부정기	97.12	
	통계이용실태조사결과	3년	00.11	통계이용실태및수요조사
	한국통계조사현황	2년	00.12	통계활동현황조사
	통계목록	연	00.2	
	한국통계월보	월		
	주요경제통계속보	월		
	한국주요경제지표	반기	00.9	
	한국통계연감	연	00.12	
지역통계연보	연	00.12		
간추린통계로본우리나라	연	00.6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통 계 청	한국의사회지표	연	00.12	1개APEC회원국가의 주요경제지표
	Statistical Handbook of Korea	연	00.12	
	도표로보는통계	연	00.10	
	주요통계지표해설	부정기	98.4	
	재미있고 신기한통계	부정기	98.7	
	통계로본대한민국50년의경제사회상변화	부정기	98.8	
	통계정보소재안내	부정기	98.12	
	국제통계월보	월		
	국제통계연감	연	00.7	
	APEC 국가의주요통계지표	연	00.10	
	ASEM 국가의주요통계지표	부정기	00.10	
	OECD 국가의주요통계지표	연	00.12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연	00.12	
2000한국의통계	부정기	00.12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연	00.12	중소기업실태조사
경 찰 청	교통사고분석	연	00.4	월중교통사고발생등
대 검 찰 청	범죄분석	연	00.9	범죄분석통계
산 립 청	임업통계연보	연	00.9	산림기본통계등
	산림자원조사보고서	10년	93.9	전국산림실태조사
	조림사업실적보고서	연	00.9	민유림실적보고
특 허 청	산업재산권통계	월		산업재산권통계
	지식재산통계연보	연	00.6	산업재산권통계
철 도 청	철도통계연보	연	00.6	운수성적일보등
병 무 청	병무연감	연	00.4	징병신체검사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연	00.9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보고	연	00.12	식품제조,가공업체생산실적보고
국 립 보 건 원	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보고	5년	98.12	전국결핵실태조사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 초 자 료
나. 지방자치단체				
각시·도(공통)	통계연보	연	00.12	각시·도 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연	00.2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연	0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연	00.5	광공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보고서	5년	99.12	산업총조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실태및육구조사보고서	5년	97.8	서울시사회복지실태및육구조사
	시민보건지표조사보고서	4년	98.4	시민보건지표조사
부산광역시	송파지역사회지표	5년	00.2	송파지역사회통계조사
	부산의사회지표	연	00.4	부산사회통계조사
인천광역시	차량교통량조사	연	00.1	부산시차량교통량조사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보고서	연	00.12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연	00.11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울산광역시	울산의 사회지표	연	00.10	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연	00.1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경기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연	00.1	경기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강원도	강원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연	00.11	강원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경상북도	경북의 사회지표	연	00.1	경북인의생활의식조사
	경북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연	00.12	경북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경상남도	경남의사회지표	연	00.12	경남도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진주시 사회지표	3년	00.3	진주시사회지표조사
각구·시·군(공통)	통계연보	연	00.12	
각시·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16개시·도교육청)	연	00.10	각급학교 및 학교수, 학생수 등
다. 통계지정기관				
< 금융 기관 >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	연	00.3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5년	98.8	산업연관표
	통화금융	월		통화금융통계
	자금순환	분기	00.11	자금순환표
	국제수지	월		국제수지통계
	외환통계연보	연	00.11	외환수급통계
	기업경영분석	연	00.8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조사	분기	00.12	기업경기조사
	경제통계연보	연	00.2	화폐발행 등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월간물가 소비자동향조사	월 월 분기	00.11	재정통계, 화폐발행, 외환수급통계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산은조사월보 재무분석	반기 분기 연	00.11 00.12 00.8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KDB산업경기전망조사 재무분석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기은조사계간	월 분기	00.10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등
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연	00.11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월 연	00.12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농업협동중앙회	농협조사월보 농촌물가총람	월 연	00.1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분기	00.10	어업경영조사
〈공공법인체〉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 제조업근로자모델별임금조사 보고서 서울지역임대료동향조사 소매업경영동태조사	분기 연 연 연	00.10 00.3 00.9 00.6	기업경기전망조사 표준자모델 임금조사 서울지역임대료동향조사 소매업경영동태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및동향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소기업동향 중소제조업기술개발동태조사 국내·외경쟁환경및중소기업경기전망 중소·벤처기업창업실태조사	분기 연 월 2년 연 연	00.11 00.1 월 99.12 00.12 00.12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중소제조업가동상황조사 중소제조업기술개발동태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벤처기업창업실태조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월		보험, 증권시장통계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증권예탁원	증권예탁	분기	00.12	증권예탁통계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연	00.12	의료보험통계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월보 증권통계연보	월 연	00.5	증권통계 증권통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통계연보	연	00.10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통계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분기 연	00.10 00.9	노동생산성지수등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정부투자기관〉 농어촌진흥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연	00.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입주자주거만족도 조사보고서	연	00.12	주공아파트입주주거만족도조사
한국토지공사	지가동향	분기	00.10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연 연 2년	00.12 00.12 99.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량통계	연	00.3	고속도로교통량조사
한국가스공사	경영통계	연	00.5	천연가스통계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연보	연	00.3	다목적댐관리통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자가발전현황조사분석 가전기기보급률조사연구	연 연 3년	00.4 00.4 99.12	한국전력통계 자가발전시설보유기업체조사 가전기기보급률조사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주간석유뉴스	월 주간		석유수급통계 국내석유제품가격조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전기통신통계연보	연	00.12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 초 자 료
<정부출연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연	00.9	교육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3년	98.12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밀측정표준실태조사보고서	2년	00.12	정밀계량계측표준실태조사
	국가표준의 기여도분석에 관한 연구	2년	00.12	국가표준의 기여도조사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5년	97.12	국민인체측정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소비행태및의식구조조사	3년	99.1	국민소비행태및의식구조조사
	한국의소비생활지표	5년	98.1	소비생활지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연	00.12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종단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연	00.5	SKTC에 의한 무역통계
	수출산업실태조사	연	00.6	수출산업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경기동향	월		기업경기동향조사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	연	00.4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실태조사	연	00.11	임금조정실태조사
	신규인력채용동태및전망조사	연	00.4	신규인력채용동태및전망조사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월		철강통계조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진흥	월		전자전기제조업실태조사
대한방직협회	면방직통계표	월		면방직통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연	00.11	종합건설업통계조사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반기	00.9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연	00.11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건설업경영분석	연	00.9	건설업경영분석
	월간건설경제동향	월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발간기관	간행물명	발간주기	최근발간시기	기초자료
대한설비공사협회	설비공사업통계연보	연	00.12	설비공사업통계조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자료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연 연	00.12 00.9	전기공사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경영분석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보고서	연	00.12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	연	00.12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3년	98.4	생명보험성향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월보	연 월	00.12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	연	00.11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원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연	00.12	감리원임금실태조사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월보	월		선물시장통계

책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소속
집 필	제 1 장 국토·기후	최정수	통계청 통계분석과
	제 2 장 인구규모·구조	박경애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제 3 장 인구변동	"	"
	제 4 장 가구·가족	"	"
	제 5 장 가계	양세정	상명대학교
	제 6 장 물가	정규남	통계청 물가통계과
	제 7 장 주거	손애리	통계청 기획과
	제 8 장 교육	김정겸	한국교육개발원
	제 9 장 보건복지	박경애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제10장 환경	최정수	통계청 통계분석과
	제11장 문화·예술	최영섭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12장 정보화	"	"
	제13장 범죄·재해	손애리	통계청 기획과
	제14장 국민소득	이진면	한국개발연구원
	제15장 대외경제	"	"
	제16장 고용·임금	최영섭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17장 에너지·자원	최정수	통계청 통계분석과
	제18장 연구개발	이진면	한국개발연구원
	제19장 산업재해·분쟁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제20장 재정	박종규	한국조세연구원
	제21장 산업활동개관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제22장 농림어업	장경세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제23장 광공업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제24장 건설업	강원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5장 운수업	"	"
	제26장 정보통신업	최영섭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27장 금융·보험업	민경삼	통계청 산업동향과
감 수		양재찬	중앙일보 경제부장
편 집		김민경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신승우	통계청 자료관리과
		이내성	"
		유영호	"
		김광렬	"
		김선녀	"
	최윤정	"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발행일 : 2000년 12월

발행인 : 윤영대

편집인 : 김민경

발행처 : 통계청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인쇄 : 현대문화사

- ▶ 이 책자는 서점의 정부간행물코너에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 구독 신청은 대한통계협회 (02-3443-79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무단복제 행위는 법률로 금하고 있습니다.
-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